

<연구보고서 2000-4>

한국 편수사 연구(I)

Study on the History of Korean School
Curriculum and Textbook(I)

2000. 12

재단
법인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연구보고서 2000-4>

한국 편수사 연구(I)

Study on the History of Korean School Curriculum and Textbook(I)

연구 책임자: 허 강(한국교육과정 · 교과서 연구회 사무국장)

공동 연구자: 곽상만(한국교육개발원 자문교수)

김용만(동경한국학교 교장)

정태범(한국교원대학교 교수)

함수곤(한국교원대학교 교수)

한명희(전 영등포 고등학교 교장)

이경환(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장)

이종국(대전 혜천대학 교수)

연구 보조자: 박소희(한국교육과정 · 교과서연구회 사무원)

유장상(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

재단법인 한국교과서연구재단

< 연구자문 >

강기주(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영택(전 문교부)
강환동(한국2종교과서협회)	이유집(전 인쇄계사)
김기숙(전 문교부)	이정실(전 한양대학교)
김만곤(교육부)	이한국(전 문교부)
김오수(성균관대학교)	이현목(전 교육부)
김재운(한국출판연구소)	전영표(전 신구전문대학)
김종빈(전 진명여고)	정영선(울산광역시교육청)
김종성(전 문교부)	정완호(한국교원대학교)
박용진(전 문교부)	정진권(한국체육대학교)
안귀덕(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정태수(전 대진대학교)
양철우((주) 교학사)	정형진(한국2종교과서협회)
유봉호(전 이화여자대학교)	최영복(전 경북고등학교)
은용기(전 덕성여자고등학교)	최해홍(한국교과서연구재단)
이경화(전 문교부)	최홍준(전 문교부)
이경훈(전 대한출판문화협회)	함종규(전 숙명여자대학교)
이달훈(전 국정교과서(주))	홍우동(동국전산(주))
이대의(장왕사)	황오성(전 안양고교)
이보령(전 문교부)	황태량(대한교과서(주))
이승구(대한교과서(주))	

이 연구는 2000년도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연구비지원으로 수행된 것입니다.

머 리 말

학교 교육의 내용이나 방법이 교육과정에 있으며, 이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하여 교과용 도서가 편찬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또, 역대 정권 하에서 교육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교육과정 개혁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또 중요과제로 선정한 데는 교육의 핵심인 교육내용의 중요성과 교육내용이 국가 발전에 기능함을 인식하기 때문이었다.

다시 말해, 한 나라의 교육의 질은 교육과정의 질에 좌우되며, 교육과정의 정신을 구현한 교과서는 국민교육의 기본서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다. 이렇듯 중요한 교육과정이 우리 나라는 광복 이후 반세기 동안 7차에 걸쳐 개정되었고, 이 때마다 교과서를 편찬하여 우리 교육에 많은 발전을 가져오게 하였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한국에서 발간된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대한 편수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 분석, 정리해 봄으로써 한 나라의 교육을 통한 인간형성, 학문의 발달과정 및 국가 발전의 과제, 국민의식의 변화 등을 좀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우리는 교육과정 개발과 교과서 편찬·발행의 과거를 살펴봄으로써 현재 우리의 모습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동시에 장차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시사 받고자 하는데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할 것이다.

또, 본 연구를 통해 첫째, 우리 나라 편수 업무의 관(觀)이 정립되고, 둘째, 한 차례 연구·개발하여 적용한 후 사장되고 소멸되기 쉬운 편수와 관련된 방대한 자료를 수집·분석·정리해 놓음으로써 편수업무의 일관성과 체계성을 살리고, 연구·개발 실적을 정리·보관해 두는 데도 큰 의미를 지니게 하며, 셋째, 교육과정기별로 체계화하는 최초의 연구서로서, 이것이 기반이 되어 앞으로의 연구가 더욱 심화·보완되는 계기가 마련되고, 주제별 또는 내용별로 전문화(상세화) 연구가 이루어지는 기본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이 연구 내용이 그 동안에는 교육과정 개발이나 교과서 편찬에 관한 내용이 대체로 문서적 나열이나 이론적 측면에 치우쳤던 점에 비추어, 역사적 사실을 서술하고 극명하게 분석·정리함으로써 정평의 밑거름이 되게 한 것과 또 교육과정기별로 편년식으로 정리하는 개념이 있게 한 것은 새로운 영역에 해당되며 새롭게 정리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번 ‘한국편수사 연구(Ⅰ)’은 군정기 및 교수요목기를 포함해서 제 1차부터 제 3차 교육과정기까지를 정리한 것으로 앞으로 이번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제 4차부터 제 7차 교육과정기까지 연구가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끝으로, 이 연구에 참여하여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연구책임자를 비롯하여 공동연구자, 그리고 여러 분야에서 연구자문을 하여주신 여러분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2000년 12월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이사장 김 호 수

차 례

제 1 부 서 론(연구의 개요)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
2. 연구 내용	4
3. 연구 방법	5
4. 연구의 제한점 및 연구의 기대효과	6
5. 연구 보고서의 구조	7
제 2 부 교육과정과 교과서 변천 개요	9
I. 교육과정에 반영된 교육이념의 변화 추이	11
1. 군정기 및 교수요목기	12
2. 제 1차 교육과정기	14
3. 제 2차 교육과정기	15
4. 제 3차 교육과정기	16
5. 제 4차 교육과정기	18
6. 제 5차 교육과정기	19
7. 제 6차 교육과정기	20
8. 제 7차 교육과정기	21
II. 교육과정의 변천과 과제	24
1.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개념	24
2.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성격	26
3.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변천	28
4.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전망	33
III. 교육용도서의 변천 과정	42
1. 서 론	42
2. 교과용도서 제도의 변천	43
3. 교과용도서 체제 변천	47
4. 교과서의 단위 전개 과정	49
5. 결 론	50

제 3 부 한국편수사 연구(Ⅰ) 53

I. 미군정기 및 교수 요목기의 교과 과정과 교과용 도서 편찬	55
1. 서 론	55
2. 미군정 교육의 전개와 교과용 도서 편찬	66
3. 신생정부의 교육과정 · 교과용도서와 전시교육	105
4. 결론적 논의	140
II. 제1차 교육과정 개발과 교과용 도서 편찬	153
1. 서 론	153
2. 초 · 중등학교 교육과정 개발	156
3. 초 · 중등학교 교과용 도서 편찬	188
4. 요약 및 제언	260
III. 제2차 교육과정 개발과 교과용 도서 편찬	265
1. 서 론	265
2. 초 · 중등학교 교육 과정 개발론	266
3. 초 · 중등학교 교과용 도서 편찬	300
4. 결 론	345
IV. 제3차 교육과정 개발 및 교과용 도서 편찬	355
1. 서 론	355
2. 초 · 중등학교 교육과정 개발	358
3. 초 · 중등학교 교과용 도서 편찬	417
4. 결 론	469

부 록 479

표 차 례

<표 I - 1> 학무국 기구(1945. 10. 6)	70
<표 I - 2> 학무국 기구(1946. 1. 21)	71
<표 I - 3> 문교부 기구 중 보통교육국, 편수국의 편제	72
<표 I - 4> 과도 정부 문교부 요직자(편수국, 학무국 요원)	73
<표 I - 5> 국민 학교 매주 교수 시간표	76
<표 I - 6> 중학교 매주 교수 시간표	77
<표 I - 7> 국민 학교 교과 과정표	82
<표 I - 8> 중학교 1, 2, 3학년(초급 중학교) 교과 과정표	83
<표 I - 9> 중학교 4, 5, 6학년(고급 중학교) 교과 과정표	84
<표 I -10> 문자 보급 상황	92
<표 I -11> 미군정 초기의 교과용 도서 발행 실태	100
<표 I -12> 광복 직후의 국정 교과용 도서 현황	101
<표 I -13> 광복 직후 민간에 의한 교과용 도서 발행 현황	102
<표 I -14> 국정 교과서 발행 상황	113
<표 I -15> 김인정 교과용 도서 발행 상황	116
<표 I -16> 농업계 교과서 편찬·발행 상황	122
<표 I -17> 공업계 교과서 편찬·발행 상황	123
<표 I -18> 공업계 전문 교과서 중 발행처 미정 도서	123
<표 I -19> 전시하 최초의 교과목 및 시간 배당표	127
<표 I -20> 초·중등 학교용 전시 교재	129
<표 I -21> 전시하의 국정 교과서 발행 실태	131
<표 II - 1> 국민학교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표	167
<표 II - 2> 중학교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표	169
<표 II - 3> 고등학교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표	171
<표 II - 4> 제1차 교육과정의 제정 당시부터 시행기의 교육부 직제	181
<표 II - 5> 각 분과 심의회의 구성과 임무	194
<표 II - 6> 사무분장표	202
<표 II - 7> 편수국 주요 업무	203
<표 II - 8> 60년대의 발행사별 요서별 구성비	210
<표 II - 9> 제1차 교육과정에 의한 초·중등학교 국정교과용 도서 개편	213

<표 II-10> 국민학교 검인정교과용 도서	214
<표 II-11> 중학교 검인정교과용 도서	214
<표 II-12> 고등학교 검인정교과용 도서	215
<표 II-13> 학교별 검인정별 현황	215
<표 II-14> 조사물의 부문별 비율	219
<표 II-15> 조사된 어휘 수와 그 빈도	220
<표 II-16> 중·고등학교 학교용 교과서 발행 실태	224
<표 II-17> 신·구 교과서 비교표	227
<표 II-18> 제1차 교육과정에 의한 검·인정 교과용 도서의 신편 범위	231
<표 II-19> 검인정 도서 종별 권수	252
<표 II-20> 검인정 교과서 발행소	253
<표 III- 1> 운영 위원회 위원	268
<표 III- 2> 교육과정 개정의 필요 여부	268
<표 III- 3> 개정해야 할 이유	269
<표 III- 4> 제2차 교육과정기의 각급 학교 교육과정 변천	273
<표 III- 5> 국민학교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	276
<표 III- 6> 중학교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	277
<표 III- 7> 고등학교 교과 과목 단위 시간 배당 기준표	278
<표 III- 8> 실업 고등학교의 교과 편제 및 단위 배당 기준표	279
<표 III- 9> 1968년 각급 학교 국정·검인정 교과서 수	300
<표 III-10> 국정 교과서의 종류	302
<표 III-11> 검인정 교과서의 종류	310
<표 III-12> 중학교 검인정 교과서 추가 합격 책수	311
<표 III-13> 제2차 교육과정기 교과용 도서 심의 위원 구성 비율	316
<표 III-14> 교과서 정가 사정 관련 자료	317
<표 III-15> 제2차 교육과정기 국정 교과서 제조비 계산서	318
<표 III-16> 정가 억제 대비표	319
<표 III-17> 1963년도 국정 교과서 발행 실적	326
<표 III-18> 제2차 교육과정기의 중등학교 교과서	331
<표 III-19> 검인정 교과서의 채택 기준	339
<표 IV- 1> 제3차 교육과정기의 각급학교 교육과정 개정(제정) 상황	359
<표 IV- 2> 주요 지표의 성장률	364
<표 IV- 3> 국민학교와 기타학교 교육과정 개정 시안의 작성 과정	370

<표 IV- 4> 교과별 발표자명	372
<표 IV- 5> 발표자 및 주제명 등	373
<표 IV- 6> 국민학교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	382
<표 IV- 7> 중학교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	384
<표 IV- 8> 인문계 고등학교 교과 단위 배당 기준	387
<표 IV- 9> 실업계 고교 교육과정 교과 편제 및 단위 배당 기준	388
<표 IV-10> 제3차 교육과정기 편수국 등 인원 현황	397
<표 IV-11> 문교부 편수국 직제 변천과정	400
<표 IV-12> 제3차 교육과정기 국정(1종) 교과서 편찬심의회 분과 및 인원 현황	404
<표 IV-13> 교육과정 심의회 위원 현황	404
<표 IV-14> ‘교육 과정에 관한 연구’ 영역별 집계표	407
<표 IV-15> 각급학교 교과별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 논문수 집계표	408
<표 IV-16> 문교부 지정 연구학교 연구 지정 개황	409
<표 IV-17> 교과용 도서 개발 일정	410
<표 IV-18> 조직 현황(편수관실)	423
<표 IV-19> 1973년도에 편찬된 국민학교 교과서(예시)	425
<표 IV-20> 1973년도에 편찬된 중학교 교과서(예시)	426
<표 IV-21> 제3차 교육과정기 국정(1종) 교과서 편찬심의회 및 인원 현황	428
<표 IV-22> 단위 가격의 원가 구성과 변천	431
<표 IV-23> 편찬비 소요 예산(책당)	436
<표 VI-24> 연구 개발비 산출 기준	437
<표 IV-25> 연도별 교과용 도서 개편 소요 예산	438
<표 IV-26> 1982년도 교과용 도서 편찬 소요 비용 산출	439
<표 IV-27> 교과용 도서 발행권 현황	441
<표 IV-28> 교과서 무상 지급 현황	442
<표 IV-29> 교과용 도서(국민학교) 생산 실적	444
<표 IV-30> 1종 교과서 연구 개발 단체	445
<표 IV-31> 편찬 과정 업무 분담	446
<표 IV-32> 제 3차 교육과정기의 중·고 교과서 편찬 체제(검정)	449
<표 IV-33> 제 3차 교육과정기의 교과서 제도 개요	449
<표 IV-34> 교과서 발행 회사	450
<표 IV-35> 단일화 전후의 검정교과서 현황	454

<표 IV-36> 교과서 분석 기준	455
<표 IV-37> ‘교과서에 관한 연구’ 연구 영역별 집계표(일반)	461
<표 IV-38> 초, 중등학교 교과별 ‘교과서에 관한 연구’논문수 집계표	462
<표 IV-39> 교과용 도서(국정 및 1종)의 개발 절차와 기능 분담	465

그림 차례

<그림 II-1> 최초의 문교부 직제표	180
<그림 II-2> 묘심사 편수국의 좌석 배치도	186
<그림 II-3> 편수관의 좌석도	206
<그림 II-4> 국정교과서의 편찬·발행·공급 과정	225
<그림 II-5> 국정교과서 공급과정	229
<그림 II-6> 검인정 교과용 도서의 공급체계	259
<그림 III-1> 제2차 교육과정기의 국정 교과서 발행 과정	301
<그림 III-3> 제2차 교육과정기 교육과정 심의회의 조직	313
<그림 III-4> 교육용 도서 심의 위원회	315
<그림 III-5> 국정 교과서의 공급 체계	327
<그림 III-6> 제2차 교육과정기의 검인정 교과서 편찬·발행 과정	332
<그림 III-7> 중등학교 교과서의 출판 조직	337
<그림 III-8> 제2차 교육과정기 검인정 교과서 회사의 조직	338
<그림 III-9> 제2차 중등학교 교과서의 공급 체제	341
<그림 IV-1> 제3차 교육과정 개정(국민학교) 추진 절차	369
<그림 IV-2> 문교부 편수국 기구 및 분장 사무	396
<그림 IV-3> 교과용 도서 개발 절차	447

제 1 부 서 론〔연구의 개요〕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3. 연구의 방법
4. 연구의 제한점 및 연구의 기대 효과
5. 연구 보고서의 구조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편수 업무는 장학업무와 더불어 학교교육의 양대 지주이며, 장학이 편수의 현장적용을 점검하는 기능을 한다고 볼 때 학교교육의 핵심은 편수기능이라고 볼 수 있다. 편수의 주업무는 교육과정 개발과 교과용 도서의 편수·발행·공급인 바, 한 나라의 교육의 질은 교육과정의 질에 좌우되며 교육과정의 정신을 구현한 교과서는 국민교육의 기본서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광복 이후 반세기 동안 7차에 걸친 교육과정의 개정과 수많은 교과용도서의 개발을 통하여 우리 교육에 많은 발전을 가져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 편수 업무는 제도상 그리고 운영상 그 중요성에 비추어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 그리고 현재로 한국 편수와 관련된 사적연구를 살펴보면, 교육과정 개발이나 교과서 편찬 등 부문별로는 약간의 단편적인 연구가 있을 뿐이며, 이들을 사실(史實)에 입각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게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나라 교육에 중심을 이루는 교육내용이나 교과서에 대해 그 개발사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금까지 한국에서 발간된 교육과정과 교과용 도서에 대한 편수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 분석, 정리해 봄으로써 한 나라의 교육을 통한 인간형성, 학문의 발달과정 및 국가 발전의 과제, 국민의식의 변화 등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즉, 우리는 교육과정개발과 교과서 편찬·발행의 과거를 살펴봄으로써 현재의 우리의 모습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동시에 장차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시사받고자 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 상황에서 추진될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교육의 민족적 편수를 위한 관(觀)과 한국의 교육 이념을 확립하는 데 있다.

우리는 그 동안 외국의 교육이론을 추구해 온 결과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하였다. 일본의 군국주의의 잔재는 오늘날까지도 완전히 불식하지 못하였고, 미국 등 외국의 교육이론을 직수입해와 많은 부작용이 일어난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편수사 속에서 우리의 문화, 사회, 경제적 조건에 부합되는 이론을 발전시켜 한국 고유의 민족적 편수를 위한 관(觀)을 정립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둘째, 편수업무와 관련된 제도상의 문제, 교육과정과 교과용 도서의 연구·개발, 현장 적용 및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한다.

효과적인 편수업무의 수행을 위한 제도상의 문제와 지금까지의 편수 업무의 정책 결정의 변천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교육과정과 교과서 행정의 효율을 기하고자 한다. 또, 교육과정과 교과용 도서의 연구와 개발과정이 어떻게 변천하여 왔으며,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현장 적용(편성·운영 등)과 평가는 어떤 과정을 거쳐 변천해 왔는지도 알아본다.

셋째, 한국 편수사는 단순한 사실들의 나열이 아니라 일관된 인식과 철학이 뒷받침되도록 한다.

하나의 교육과정과 교과서는 그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만들어진 시대의 성향을 대변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한국 편수사는 시대적 의지가 살아 있도록 하여야 한다. 즉, 한국 편수사는 연구자가 역사인식과 교육 철학이나 역사 철학적인 배경에 뒷받침을 받아서 지주가 확고한 것이어야 한다.

넷째, 본 연구를 통하여 앞으로의 편수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한국 편수사 연구는 단순한 과거 사실을 나열하고 수집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의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여 체계화함으로써 앞날의 발전을 위한 근거로 삼을 수 있다. 즉, 본 연구의 중요한 목적은 앞으로의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주는데 있다 하겠다.

2. 연구 내용

본 연구의 내용은 앞의 연구의 목적에서 밝힌 것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정한다.

- ① 우리 나라의 교육 이념과 교육과정 제정 과정과의 관련
- ② 교육과정 개발과 교과서 편찬과정의 전체 구조의 변화 측면
- ③ 교육과정 개발 및 교과서 편찬에 관한 연구·평가의 변화 측면
- ④ 교육과정 개발 및 교과서의 편찬·발행·공급 방식의 변화 측면
- ⑤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현장 적용과의 관련
- ⑥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미래상

그리고, 본 편수사 연구는 편수업무가 갖는 특수성에 맞게 시간의 원근, 사회발전 및

민족의 성장, 역사서술의 주제, 지배 세력의 변화 등을 다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8단계로 구분하여 2개년에 걸쳐 연구한다.

○ 제 1차 연도

- 미군정기와 교수요목기(1945. 8 ~ 1954. 4)
- 제 1차 교육과정기(1954. 4 ~ 1963. 2)
- 제 2차 교육과정기(1963. 2 ~ 1973. 2)
- 제 3차 교육과정기(1973. 2 ~ 1981. 12)

○ 제 2차 연도

- 제 4차 교육과정기(1981. 12 ~ 1987. 3)
- 제 5차 교육과정기(1987. 3 ~ 1992. 6)
- 제 6차 교육과정기(1992. 6 ~ 1997. 12)
- 제 7차 교육과정기(1997. 12 ~ 현재)

3. 연구방법

① 문헌, 자료 수집·분석

각 기관 소장 편수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정리한다.

(예) 교육부, 국립중앙도서관, 한국교육개발원, 국사편찬위원회, 대한교과서(주), 한국2
종교개혁회, 한글학회, 삼성출판박물관, 각 교과서 출판사 등)

② 면접 조사

원로 교과서 출판인, 교과서 저자, 편수행정가 등을 방문하여 역사적 상황을 면접 조사한다.

③ 비망·증언 자료 수집·위촉

교육과정기별 교육과정 및 교과서 전문가 및 편수진에게 비망·증언 등의 자료수집 또는 원고를 위촉한다.

④ 연구협의(회) 운영

연구 추진 과정에서 본 연구진을 중심으로, 또 연구 전문가와의 협의(회)를 통해 편수사 연구에 관한 문제점을 연구·협의·조정한다.

4. 연구의 제한점 및 연구의 기대효과

(1)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한국 편수사를 다루는 첫 번째의 본격적인 연구로서 연구내용에서 밝힌 바와 같이 주로 교육과정 개발과 교과용 도서 편찬·발행 등을 주 내용으로 삼고 있는데, 이에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초·중고 기간학교 이외에 전문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 기술학교와 특수학교 따위와 문교부 편수국에서 관장하던 교육대학 및 전문대학 등의 교육과정 행정은 다루지 않는다.

둘째, 각급학교(초·중·고) 교과목별 목표, 내용, 방법 및 유의점(평가) 등의 변화 측면은 특수한 경우 이외는 다루지 않는다.

셋째, 공통적으로 합의한 제목 이외에 교육과정기별로 특성있는 제목 설정이 요구되는 가급적 제한을 두지 않는다.

넷째, 본 연구 주제는 ‘한국 편수사 연구’ 이므로 교육과정 개발 집필(연구) 분량에 비해 교과용 도서 편찬 분야에 그 비중을 강화·할애하기로 한다. 이것은 교육과정기별로 교육과정 개발 분야의 집필(연구) 분야에 제한을 두고 있음을 뜻한다.

다섯째, 교육과정기별로 비망·증언의 게재 빈도에 차이가 나며, 특히 교수요목기, 제1차 및 제2차의 경우가 낮은 경향인데, 이것은 당시 관계했던 사람들의 사망·노령화 등 때문에 불가피한 현상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편수와 관련된 특징이나 문제점을 강조하려면 여러 근거가 있어야 하나 이것들의 자료가 흔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정기별 특수영역 연구에 제한을 받게 되는데, 이런 분야는 앞으로 심도있는 자료 개발로써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일곱째, 교육과정기별로 전·후기(前後期)의 내용이 중복되어 게재되는 게 있는데, 이 경우 불필요한 중복은 제한하되, 그렇지 않은 것은 그냥 놔두도록 하였다. 이것은 중복된 것이라 해도 각 교육과정기별로 보면 그 내용이 독립적인 성격으로 부각되기 때문이다.

여덟째, 사진·삽화 등 일러스트에 관한 영역은 이번 기회에 다루지 않는다.

(2) 연구의 기대 효과

본 연구를 통하여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편수사 연구 및 집필 과정에서 우리 나라의 문화, 사회 경제적 조건에 부합되는 한국의 주체성에 입각한 편수업무의 관(觀)을 정립하고 나아가 한국 교육이념에도 기여할 수 있다.

둘째, 교육과정의 개발, 교과서의 편찬·발행·공급 등 편수업무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지금까지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차기에 발전적인 편수업무를 수행하는데 좋은 자료로 삼을 수 있다.

셋째, 한 번 연구·개발하여 적용한 후 사장되고 소멸되기 쉬운 편수와 관련된 방대한 자료를 수집 분석 정리해 높음으로써 편수업무의 일관성과 체계성을 살리고, 연구 개발 실적을 정리, 보관해 두는 데도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넷째, 한국 편수사는 광복 후 우리 나라 교육과정의 개발과 교과서 편찬 등을 교육과정기별로 체계화하는 최초의 연구서(I, II)로서, 이것이 기반이 되어 앞으로의 연구는 더욱 심화 보완되는 계기가 마련되고, 또 주제별로 또는 하위 내용별로 전문화 연구가 이루어지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5. 연구 보고서의 구조

본 연구보고서는 <제 1부>의 서론, <제 2부>의 교육과정과 교과서 변천 개요, 그리고 <제 3부>의 한국편수사 연구(I)로 구분된다. 이 중 <제 1부>에서는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 내용’, ‘연구 방법’ 그리고 ‘연구의 제한점 및 기대효과’ 등이 포함되며, <제 2부>에는 공동연구진 3명이 집필한 우리 나라의 교육과정과 교과서 변천 등이 개요적으로 소개된다.

<제 2부> 집필진을 살펴보면, ‘교육과정에 반영된 교육 이념의 추이’는 한명희 교장이 ‘교육과정의 변천과 과제’는 함수곤 교수가, ‘교과용 도서의 변천과정’은 정태범 교수가 각각 집필하였음을 밝혀둔다. 이들이 집필한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변천은 교수 요목기로부터 제 7차 교육과정기까지의 교육과정의 개발과 교과용 도서의 편찬 등에 관해 개관하고 있다.

<제 3부>는 본 연구 보고서의 핵심 내용으로서 ‘한국 편수사 연구(I)’에 해당된다. 먼저 ‘군정기 및 교수 요목기의 교육과정과 교과용 도서 편찬’은 이종국 교수가 군정기 때와 신생정부 전후의 교육과정 개발과 교과용 도서 편찬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제 1차 교육과정 개발과 교과용 도서 편찬’은 김용만 교장이, ‘제 2차 교육과정 개발과 교과용

도서 편찬'은 박상만 교수가, 그리고 '제 3차 교육과정 개발과 교과용 도서 편찬'은 허강국장이 각기 초·중등 교육과정 개발을 비롯하여 초·중등 교과용 도서 편찬에 대해 그 사실(史實)을 서술하고 분석·정리하였다.

그리고 <제 3부>의 집필자는 그들의 주제하에 하위 소제목은 나름대로 특색있게 꾸미게 개방하였으며, 각기 서론과 결론의 형식을 갖추게 하여 각 교육과정기별로 교육과정의 개발과 교과용 도서 편찬·발행에 대해 의미있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또, 제 4차 교육과정 개발과 교과용 도서 편찬은 정태범 교수가, 제 5차의 것은 한명희 교장이, 제 6차는 함수곤 교수가, 제 7차는 이경환 교육부 장학관이 각기 연구 집필이 예정되어 있다.

끝으로, 본 연구 보고서는 한국 편수사 연구(Ⅰ), (Ⅱ)가 연계되는 성격이 있어, '제 7차 교육과정 개발과 교과용 도서 편찬' 연구가 끝나는 때에 연구 요약이나 결론적 논의 등을 한 꺼번에 제시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집필자 협의회에서 얻었다.

또, 부록에 게재하는 자료는 '집대성의 개념'에서 많은 양을 수집·정리하는 것으로 하였다.

제 2 부 교육과정과 교과서 변천 개요

I. 교육과정에 반영된 교육이념의 변화 추이

II. 교육과정의 변천과 과제

III. 교과용 도서의 변천 과정

I. 교육과정에 반영된 교육이념의 변화 추이

한명희*

교육이념은 교육적 행위를 지휘하는 근본 원리로서 교육과정에 의해 현장에서 구현되고 있다. 그리고 교육과정에 의해 구체화된 교육활동들은 교육이념이라는 큰 틀에 의해 해석되고 의미를 부여받게 된다. 즉 한시대의 교육이념은 교육과정에 반영됨으로써 학교현장에서 구체적인 교육활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한시대의 교육이념을 살펴보면 그 당시 교육과정의 기본 틀을 이해할 수 있고, 반대로 교육과정에 반영된 교육원리들을 살펴보면 그 당시 교육이념을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라 편수사를 개관하기 위하여는 교육이념의 변화 추이와 교육과정을 연관하여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교육이념이라는 것이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 주기마다 그 이념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나 같은 교육이념이라 하더라도 교육과정기에 따라 강조의 정도는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면 민족교육과 국민교육은 둘 다 틀림없는 우리의 교육이념이다. 그런데 4차 교육과정기까지는 민족교육이 국민교육 보다 강조된 경향이 있고, 5차 이후에는 민족교육과 국민교육이 함께 강조되고 있다. 국제화 개방화의 추세에서는 배타적 속성을 지닌 민족교육 보다는 국민교육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기 때문인 것 같다.

고대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느 사회,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그것이 문서로 되었던 구전으로 이루어졌던 간에 교육이념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에 의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 교육의 이념은 헌법과 교육법(교육 기본법)을 비롯한 관계 법령, 국민교육헌장을 비롯한 교육관계 선언문, 교육정책의 수립과 교육행정 및 교육활동 실천에 있어서 지도적 역할을 담당한 인사들의 논설과 진술, 교육실천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교육사상가나 학자들의 학설 등 여러 가지 형태 속에서 다양하게 표현되어 왔다. 그러므로 이들 모두를 분석하여 교육이념의 변화추이를 알아보고, 이들이 교육과정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를 고찰해보는 것이 타당한 일이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아, 본고에서는 편의상 문서화된 자료를 중심으로 교육이념이 교육과정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 그 추이를 개략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 전 영등포고등학교 교장

우리 나라 헌법에서는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함으로써 교육의 기본이 되는 국가이념을 명시하였고, 교육법(교육 기본법)에서는 홍익인간의 이념아래 교육에 관한 기본 방침과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국민교육헌장에서는 홍익인간의 이념이 갖고 있는 추상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학교교육의 이념을 구체화하고 집약하였다.

교육법, 국민교육헌장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민주주의, 민족주의, 세계주의, 자유주의, 합리주의, 실용주의, 인본주의 이념 등은 광복 후부터 오늘까지 우리교육의 기본이념으로 그 맥을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이념들은 각 교육과정기마다 어느 것보다 더 강조되고, 어느 것은 상대적으로 덜 강조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어떤 교육이념(창의성 신장, 정보화 능력 등)은 새롭게 강조되기도 하고, 어떤 교육이념(반공 정신 함양 등)은 소멸되어 그 기능을 할 수 없도록 되기도 했다.

본 고에서는 교육과정에 반영된 교육이념의 변화추이를 교육과정 적용시기가 아닌 개정 시점에 맞추어 군정기 및 교수요목기('45. 8 ~ '54. 4), 제 1차 교육과정기('54. 4 ~ '63. 2), 제 2차 교육과정기('63. 2 ~ '73. 2), 제 3차 교육과정기('73. 2 ~ '81. 12), 제 4차 교육과정기('81. 12 ~ '87. 3), 제 5차 교육과정기('87. 3 ~ '92. 6), 제 6차 교육과정기('92. 6 ~ '97. 12), 제 7차 교육과정기('97. 12 ~)로 나누어 당시의 교육이념이 교육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받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군정기 및 교수요목기

군정기 및 교수요목기는 일제로부터 우리 나라가 광복을 찾은 1945. 8월부터 6. 25 한국전쟁을 치르고 제 1차 교육과정이 고시된 1954. 4월까지 10여 년간으로, 편의상 미 군정기, 건국기, 한국전쟁기 등으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1) 미 군정기

1945. 8. 15일, 일제 식민지 통치로부터의 광복은 우리 교육에 있어 중대한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광복이 되자 미 군정이 실시되었는데 미 군정 당국은 한국교육의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선교육심의회(위원 100여명)를 설치하고 그중 제1분과위원에서 교육이념 문제를 다루도록 하였다. 이 제1분과에서 우리 나라의 교육이념으로 제창한 것이 홍익인간의 이념이었다. 이 홍익인간의 이념은 우리 정부 수립 후에도 한국교육의 기본이념으로 교육법(교육 기본법)에 명시하고 있으나 미 군정 시대에도 기본 교육이념

으로 민족, 민주주의 교육이념의 모태가 되었다. 미 군정 당시 우리의 교육지도자들은 민주주의에 기초를 두어 교육함으로써 민주국가의 공민을 양성하고, 민족주의에 입각한 주체성을 함양함으로써 애국정신이 투철한 국민을 길러내어 민족의 이상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교육이념은 교육현장에서는 일제 잔재의 청산, 평화와 질서 유지, 새나라 민주 시민 육성으로 구체화되어 교과편제 및 시간배당과 교수 요목에, 국어·국사교육의 강화, 사회생활과(공민, 지리, 역사)신설, 과학시간과 체육시간의 증대로 나타났다. 그리고 미 군정청은 문맹퇴치교육과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하여 교과서 편찬을 서두르는 등 민족교육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다.

(2) 건국기

건국기의 교육이념 역시 미 군정기와 같이 ‘홍익인간’의 이념이 기본이 되었다. 1949년 12월 제정 공포된 교육법 제1조에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 하게 하여 민주국가 발전에 봉사하며 인류공영의 이상 실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오늘날까지 우리 나라 기본 교육이념으로 자리 매김 하여 오고 있다.

건국초기, 초대 문교부장관 안호상은 민주주의 민족교육을 강력히 주장하고 국민사상을 귀일시켜 반공정신을 확립하기 위하여 일민주의를 제창하였다. 이 일민주의는 건국초기는 교육이념의 핵심이 되었으나 지나치게 민족을 강조함으로써 학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아 지속적으로 우리교육에 영향을 주지는 못하였다. 이때 반공정신과 함께 강조된 것이 방일정신이었으며, 교육현장에서는 미 군정기와 같이 국어교육과 국사 교육이 강조되었다.

(3) 한국 전쟁기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한국 전쟁 중에, 정부는 전시교육의 중점을 ‘멸공 필승의 신념을 배양하고 전국과 국제 집단안전보장의 인식을 명확히 하여 전시생활을 지도하는데 둔다’고 하면서 ●도의교육(민주시민교육, 반공사상의 함양), ●과학기술교육(1인 1기 교육), ●국방교육(군사훈련과 학도호국단 운영)을 강조하였으며,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자활인, 자유인, 평화인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한국전쟁 당시는 학생들의 전시생활을 지도하기 위하여 국민학교용과 중등학교용 전

시교재를 발간하고, 도의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의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행정적 지원체제를 강화하였다. 그리고 도의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개정을 서둘러, 제1차 교육과정에서는 도의교육을 초, 중, 고교에서 각각 주당 1시간씩 지도하도록 된다. 아울러 과학기술 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과학교육위원회를 두는 한편 ‘1인 1기 교육 실시 요향’을 발표하여 중학교 이상의 학생들에게 기술을 연마토록 하였다. 또 공산군의 침략을 막고 국토를 수복하기 위하여 중등학교 이상에서는 학도호국단을 계속 유지하면서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등 국방교육에 힘썼다. 전쟁당시의 기본 교육이념은 멸공교육과 전쟁복구를 위한 과학교육 진흥으로 집약할 수 있을 것이다.

2. 제 1차 교육과정기

제1차 교육과정은 1954. 4. 20. 공포된 ‘각급 학교 교육과정 시간배당 기준령’과 1955. 8. 1. 공포된 ‘각급 학교 교과 과정’을 지칭하는 것으로, 우리 정부에 의해 만들어진 최초의 교육과정이다.

제1차 교육과정 개정작업은 문교부가 부산으로 이전해 있던 1952년부터 시작되었다. 따라서 제1차 교육과정에 실제로 영향을 미친 교육이념은 한국전쟁을 치르면서 배태된 민주시민의 자질함양, 인격준중, 민족정신의 재발견 등의 도덕교육, 6.25전쟁으로 황폐화된 경계를 부흥하고 생산을 증대하기 위한 1인 1기 교육, 생산교육의 장려, 근로역행 정신의 함양 등의 실업교육, 반공 및 국방교육이 핵심이 되었다. 이러한 교육이념 중에서도 가장 강조된 것이 도의교육이었다.

국민도의 퇴폐현상을 막고 민주주의 시민으로 갖추어야할 자질을 함양하고, 인격을 완성하고, 민족정신에 기초한 자립적인 세계관과 인생관을 확립하기 위하여는 체계적인 도의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문교부는 부령 제 35호로 공포한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에 국민학교의 도의교육은 전 교과 및 기타 교육 전반에 궁하여 행하되, 각 학년 총 수업 시간수의 범위 내에서 년 35시간 이상을 이에 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중 고등학교는 사회생활과에 배당된 시간 중 최저 35시간은 도의교육을 위한 시간에 충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때부터 미국의 진보주의교육의 영향을 받아 새교육 이라는 이름아래 전인교육, 특기 적성교육을 위한 특별활동 시간을 배정하고, 편제표에 정식으로 포함시켜 오늘에 이르고 있다. 당시 특별활동의 내용으로 제시한 것은 민주적 학생활동, 학생의 개별 성장, 직업준비 및 이용 후생, 학생의 취미에 관한 것이었다.

3. 제 2차 교육과정기

제 2차 교육과정은 1963년 2월에 공포되어 학교 급별로 연차적으로 시행되었는데, 1968년 국민교육헌장 선포 등 여건의 변화로 1969년 9월 큰 폭의 부분 수정을 하게 된다.

제 2차 교육과정에 영향을 준 대표적인 사건은 4. 19혁명에 의한 자유당 정부의 붕괴와 민주당 정부의 출범, 5. 16 군사정변에 의한 민주당 정부의 붕괴와 군사정부의 출범이다.

4월 혁명으로 출범한 민주당 정부는 민주교육 이념의 확산과 국민도의 확립, 고유문화의 창달과 국민문화의 진흥을, 5월 군사정변으로 출범한 군사정부는 문화혁신을 통한 인간개조, 민족문화 애호사상 고취를 통한 민족주체성의 확립, 빈곤 타파를 위하여 국민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기술교육의 추진, 간접침략 분쇄를 위한 반공교육에 주력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은 교육과정에 자주성, 생산성, 유용성의 강조로 집약되었는데, 이는 광복 후 도입된 생활중심, 경험중심의 진보주의 교육사조를 교육과정에서 수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 민주신념이 확고하고 반공정신이 투철한 사람을 기르기 위한 반공교육 쇄신 방안으로 ‘반공 . 도덕’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국민학교와 중학교에 설치하여 주당 1시간씩 지도하도록 하였다. 이 반공 도덕 시간은 ‘69년 교육과정 부분 개정 시, 주당 2시간으로 늘어났다. 이 반공 도덕생활 영역의 설치는 제 2차 교육과정의 따른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학교와 중학교 교육과정은 교과활동, 반공 도덕생활, 특별활동의 3영역으로 늘어났다.

1963년 공포된 교육과정은 국민교육헌장 선포,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 대학입학 예비고사 실시 등 교육여건의 변화로 전면개정 작업을 필요로 하였으나, 2차 교육과정이 연차적으로 시행 중이어서, 우선 긴급을 요하는 사안을 반영하기 위하여 ‘69년 부분 개정을 하게 된다. 이 부분 개정으로 앞에서 밝힌 대로 반공 도덕 시간이 늘어나고, 특별활동이 강화되고, 국어과에서 완전한 한글 전용을 실시하게 된다. 그리고 제 1차 교육과정에서 남학생에게 필수로 부과하였던 교련이 제 2차 교육과정 공포 시는 편제에서 빠져 있었으나, 부분 개정 교육과정에서 다시 12단위가 추가되어 남녀학생이 모두 교련과목을 이수하도록 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국가안보와 반공교육 강화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치이다.

또 가난을 극복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산성을 강조하고, 학생들로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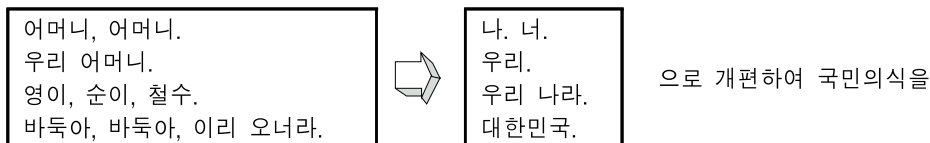
여금 만들고, 먹고, 입고 사는데 필요한 방법을 습득시켜 생활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도록 실업 및 과학 기술교육을 강화하였다. 경제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생산력과 기술을 갖춘 기술인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또 교육내용과 방법은 일상생활과 직결되도록 하고, 학습지도는 지식습득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기능)의 습득과 인격(태도)의 배양에 중점을 두고, 학생 생활에 필요 불가결한 과제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생활경험을 통하여 교육함으로써 쓸모 있는 사회인이 되게 하고, 또한 자활할 수 있는 실천인의 육성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2차 교육과정의 기본정신이 되고 있는 생활중심, 경험중심, 실용중심의 교육과정에 충실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때, 미국 등 선진국가는 1957년 10월 최초로 발사된 러시아 인공위성 스푸트닉(sputnik) 충격에 대비하기 위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구체화하기에 이른다. 이들 나라에서는 스푸트닉 충격은 교육과정의 개정 압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우리 나라에서도 기초학력의 충실을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이에 대응한 것은 2차 교육과정 공포 후이다. 스푸트닉 발사 후 미국등 선진국이 수학과 과학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그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자, 우리 나라도 이를 받아들이기 위해 과학과 수학 교사의 재교육, 새로운 교육과정 프로젝트의 교재 번역 및 출판 등을 통해 과학과 수학의 새로운 교육과정을 서두르게 된다.

4. 제 3차 교육과정기

1973년 문교부가 대통령에게 보고 한 연초 업무계획에 의하면 주요사업 맨 처음에 교육과정을 개편하겠다고 하고, 그 기본방향으로 국민교육헌장의 이념구현(국적 있는 교육), 한국적 가치관 교육의 강화(10월유신 정신의 고취, 한국적 민주주의의 확립), 과학기술 교육 내용의 쇄신(발전하는 새 시대에 적응, 미래사회의 개척)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새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내용 개편의 예로 국민학교 1학년 국어교과서 첫 페이지를 고취하겠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1973년 공포된 제3차 교육과정은 국민교육헌장 이념의 구현을 기본 목표로 하여 국민적 자질의 함양, 인간교육의 강화, 지식 기술교육의 쇄신에 초점을 맞추어 개정되었는데, 이들은 ‘국적 있는 교육’으로 집약되었다. 이와 같이 제3차 교육과정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은 민족 주체성에 기초한 국민교육헌장의 이념구현이었다.

다음은 유신교육과 새마을 교육이다.

유신교육은 격변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남북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력을 조직화하며, 능률을 극대화하여 안정과 번영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는 국가체제를 정비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또한 한국적 민주주의의 정립을 통해 우리 민족의 생존과 발전을 기약하기 위해, 민족 주체성의 확립을 그 기본이념으로 하는 것이었다. 정치와 교육과의 깊은 연계성을 특징으로 해온 한국 교육은 10월 유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 유신교육을 전개하기에 이른다. 이에 문교부는 한국적 민주주의의 토착화와 국력의 조직화, 안정과 번영의 기초 확립, 사회부조리의 시정과 평화적인 남북통일의 기반 구축을 위하여 민족 정통성을 강조하였다. 이때 교과서에 반영된 유신교육 관련 내용은 우리교육이 정치에 오염된 좋지 못한 사례로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다.

새마을 교육은 국가적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새마을 운동을 지원한 하나의 교육 운동이라 할 수 있다. 새마을 교육은 국민교육헌장의 이념 아래 학교교육을 통하여 학생과 향토민에게 새마을 정신(自助, 自立, 協同)을 함양시킴으로써 향토개발과 국가발전에 공헌하는 실천적인 인간을 육성하는 것에 강조 점을 두었다.

제3차 교육과정 개정에 많은 영향을 끼친 주요 현안들을 살펴보면, 자조, 자립, 협동의 새마을 정신, 조국근대화와 민족중흥의 정신적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제2 경제’, 민족주체 의식 고양을 위한 민족사관, 자주국방과 안보를 위한 반공 민주정신, 산학협동과 전국민의 과학화 운동 등을 대표적으로 열거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 상황은 초, 중, 고교에서 도덕과 국민윤리가 교과로 독립되고, 중, 고등학교에서 국사가 사회과에서 분리 독립되고, 국민학교에서도 국사교과서를 별도로 편찬하여 지도하는 등 도덕(반공 포함) 교육과 국사 교육을 크게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외에 제3차 교육과정 개정에 영향을 준 것이 러시아의 인공위성 스푸트닉 발사와 이에 충격을 받은 미국 등 선진국의 교육과정 개정이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이 교육과정의 기본 틀을 경험중심 교육과정에서 학문중심 교육과정으로 선회한 이유로는 스푸트닉 충격이외에도 지식 및 정보의 폭발적인 팽창에 대비하기 위하여는 어차피 교육

내용을 학문의 체계에 따라 체계적으로 선정 조직하여 학생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학자들의 주장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교육사조는 우리 나라 제 3차 교육과정을 학문중심 교육과정으로 특징짓는 결과를 가져왔다.

5. 제 4차 교육과정기

1980년 7월 30일 교육개혁안이 발표되었는데 그 주요내용 중에 ‘초, 중,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축소 조정’이라는 항목이 있었다. 그것은 당시 적용하고 있던 3차 교육과정이 교과목 수가 많고, 교과마다 지도할 내용이 너무 많으며 그 수준도 높아 가르치는 교사나 배우는 학생 모두에게 지나친 부담이 되고 있어 이를 축소 조정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새로 출범한 제5공화국 정부는 민주주의 토착화, 정의사회 구현, 복지사회 건설을 국정지표로 표방하고, ‘민주, 정의, 복지사회 건설을 위한 주체적인 유능한 한국인 육성’을 교육지표로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전인교육을 강조하면서, 그 동안 지식과 기능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전인교육에 미흡한 면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1981년 10월, 문교부는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보고 시에 고급인력양성을 극대화하여 고도산업사회를 성취하고, 교육의 기회 균등을 이루어 복지사회를 구현하며, 국민정신 교육을 강화하여 민주정의 사회를 건설하고, 전 사회의 학습장화를 통하여 평생교육을 실현하는 것이 교육이 그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급 학교 교육과정을 개정하도록 하였는데, 그 기본목표로는 교육과정에 국민정신교육 이념 반영, 기초이론 충실과 교과목의 축소, 교육내용의 질과 수준의 적정화를 이루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한바 있다.

따라서 제 4차 교육과정에서는 건강한 사람, 심미적인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도덕적인 사람, 자주적인 사람을 길러내기 위해, 국민정신교육의 체계화, 전인교육의 강화, 과학 기술교육의 심화, 교육내용의 양과 수준의 적정화를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건전한 심신의 육성, 지력과 기술의 배양, 도덕적인 인격의 형성, 민족 공동체 의식의 고양을 강조하였다.

제 4차 교육과정에서 국민정신교육이 특히 강조된 것은, 그 동안 반공교육이 6. 25 남침의 역사적 교훈을 토대로 경험적, 감성적 차원에서도 잘 이루어져 왔으나, 80년대 초에 와서는 많은 수의 교사와 학생들이 6. 25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이어서, 반공이 생존을 위해 얼마나 절실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극히 일부에

서는 반공교육을 반 통일교육으로 그릇 이해하는 경향마저 있었는데 다가 1970년대 후반부터 좌경화된 급진 이론들이 대학가를 중심으로 번지면서 고등학교에까지 파급되는 양상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다.

다음, '80년 10월에 정부는 헌법을 개정하여 제 29조 5항에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평생학습사회의 기초를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는 사회교육법에 구체화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때부터 사회교육은 학교교육에 영향을 주면서, 한편으로는 학교교육과 더불어 국민교육의 양측 역할을 하면서 발전해 오고 있다.

한 마디로, 제 4차 교육과정 개정의 핵심은 학생부담 경감을 위한 교육내용의 양과 수준의 적정화, 주체적 한국인 육성을 위한 국민정신교육 내용의 체계화로 집약할 수 있을 것이다.

6. 제 5차 교육과정기

제 5차 교육과정 개정 작업은 학문적 필요나 사회적 요구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다는 교과서 개편 주기를 지키기 위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제 5차 교육과정에 영향을 준 학문적 사회적 필요와 요구는 제 4차 교육과정 개정 시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1985년 3월 발족한 교육개혁심의회가 '21세기를 주도할 주체적이고 창의적이며 도덕적인 한국인상을 창조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한국인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자주성과 민족주체성을 함양시키고, 창조와 개혁의 정신을 길러주며, 도덕적인 판단력과 윤리성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교육은 개인의 타고난 발전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시켜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개인의 자아를 실현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제시한 교육개혁의 기본 방향으로부터 직간접으로 영향을 받았다. 따라서 제 5차 교육과정은, 21세기를 주도할 자주적이고 창조적이며 도덕적인 한국인을 기르는데 목표를 두고 개정작업이 이루어 졌다.

당시 우리사회는 아시안 게임과 88서울 올림픽대회 유치, 해외여행 자유화조치, 무역에 있어서 교역량 확대 등으로 국제화, 다양화되어 가는 양상을 보이고, 교육은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한국인의 긍지, 주인정신을 내용으로 하는 주체성을 강조하게 된다.

또, 산업사회에서 주로 활용되던 새로운 정보수단이 개인의 일상생활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정보화사회의 도래를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게 된다. 이에 따라 학교교육 특히 교육과정에서는 정보화사회에 대응하는 교육을 준비하지 않을 수 없게되었다. 그리

하여 국민학교는 실과에서 ‘컴퓨터의 기초’를, 중학교는 기술 가정에서 ‘컴퓨터의 원리와 이용’을 가르치도록 하였고, 고등학교에서는 ‘정보 산업’ 과목을 새로이 설치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정보화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창조성을 강조하게 된다.

다음, 21세기 새 시대를 이끌어갈 한국인의 인간상으로, 국민으로서의 기본 자질과 공동체의식을 지닌 협동적이고 개방적인 도덕적 인간을 설정하고, 이를 위해 한국인의 자긍심을 키우는 교육, 자율성과 다양성을 신장하는 교육, 전인을 지향하는 인간화 교육이 강조되었다.

그리고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북한을 대화의 상대, 같이 살아 가야할 민족공동체로 규정하고 관계 개선에 노력하여 대결 구조가 화해구조로 전환되자, 제 5차 교육과정에서는 반공교육이라는 호칭이 통일안보교육으로 바뀌게 된다.

7. 제 6차 교육과정기

제 6차 교육과정은 교육계 내부의 요구와 외부의 요구를 함께 수용하는 과정에서 변화의 폭이 매우 컸다. 내부적 요구로는 교육과정의 분권화와 자율화로, 교육과정의 중앙집권화와 획일성에서 벗어나야 했다. 그 동안 우리 나라 교육과정은 거의 100%가 국가 교육과정으로 교육부에서 모든 수준의 교육내용을 결정하였다. 교육과정의 중앙집권화는 사회의 다양화, 다변화, 지방화에 따르는 다양한 교육적 필요를 교육내용에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교육내용의 적절성, 타당성, 효율성이 낮아지고,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와 특수성을 무시한 교육내용의 획일적 적용으로 학생들을 교육적으로 방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지적도 없지 않았다.

다음 외부적 요구의 수용이다. 2000년대 한국사회는 정치적으로 민주화되고, 경제적으로는 고도산업화 되어 국민의 문화 및 복지 수준이 높고, 국제적으로는 개방화되고, 남북통일의 여건도 성숙될 것으로 전망되어,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필요로 하였다.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제 6차 교육과정은, 민주주의와 공동체의식에 역점을 두는 교육, 변화에 대하여 창조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 보편성과 특수성의 조화를 추구하는 교육, 학습자의 경험세계가 중시되는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개정작업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제 6차 교육과정은 통일교육, 양성(兩性)평등교육, 정보화교육, 환경교육, 세계화교육이 강조되고, 교육과정이 교육 주체에 따라 분권화 되

었다.

제 6차 교육과정 개정작업에 영향을 미친 사안들을 살펴보면, 우선 통일 안보교육에 대한 관점의 변화이다.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의 체제 붕괴와 독일의 통일로, 통일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남북회담이 가시화 되는 등 남북한은 대결구도에서 화해의 구도로 전환을 모색하게 되고, 통일안보교육도 발전적으로 검토하여 통일교육으로 개칭하게 된다. 물론 이 통일교육의 범주 안에서 안보교육도 이루어지도록 조치되었다. 이와 같이 통일교육이 발전 지향적으로 그 틀을 바꾸어나가는 과정에서, 그 동안 고등학교에서 필수로 12단위를 교육해온 ‘교련’이 6단위로 감축되고 그것도 선택과목으로 바뀌었다.

다음 남녀 성차별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학교교육에서 차별 없는 양성 평등교육이 이루어 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초, 중, 고교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양성평등정신을 반영하였다. 특히 중학교 남학생에게 가정을 필수로 이수토록 하고, 여학생에게도 기술을 필수로 이수토록 한 것은 양성평등교육상 획기적인 변화이다.

그리고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선진국보다 빨리 이루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 되고, 실제 생활에 정보화의 물결이 빠르게 유입됨으로, 정보화교육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고등학교의 정보산업(5차)에 이어 중학교에서도 컴퓨터가 선택과목으로 신설되었다.

또, 산업화과정에서 환경이 파괴되고 공해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대학에 환경관련학과가 개설되고, 초, 중, 고교에서는 체계적인 환경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중학교의 경우는 ‘환경’을, 고등학교는 ‘환경과학’을 선택과목으로 신설하게 된다..

그 동안 무한경쟁의 국제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실시 해온 국제화교육이 세계화교육으로 지칭되는 등 국가간 무한 경쟁에 대비하고, 세계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살아가기 위한 교육적 조치가 이루어져, 97학년도부터 초등학교에 영어과가 신설되어 3학년부터 연차적으로 영어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8. 제 7차 교육과정기

그 동안 교육과정은 교육부가 주체가 되어 개정작업이 시작되었는데, 제 7차 교육과정은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가 주동이 되어 개정작업이 시작되었다. '92년에 개정 고시한 제 6차 교육과정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95학년도부터 연차적으로, 고등학교는 9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토록 되어 있었는데, 이 제 6차 교육과정이 적용되기도

전인 '94년부터 일부 교육개혁위원이 6차 교육과정에 대한 재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더니 '95년에 들어서서는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때는 제5차 교육과정이 적용되던 시기이고 제6차 교육과정이 시행되기 이전이어서 제7차 교육과정이라는 명칭도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라, 그냥 '새 교육과정' '2000년대 교육과정'이라는 잠정 명칭을 사용하면서 교육과정 개정작업을 진행하여 오다가 1995년 3월, 제6차 교육과정이 시행된 후에야 제7차 교육과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밝히는 이유는 교육과정은 교육이념이나 교육적 필요에 의해 개정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그 외의 요소도 작용한다는 사실을 밝혀두기 위함이다.

제1차 교육개혁방안('95, 5, 31)에는 인성 및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과정 운영이라는 주제아래 필수과목 축소 및 선택과목 확대, 세계화, 정보화교육 강화로 되어 있었는데, 제2차 교육개혁방안('96, 2, 9)에는 대 주제로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 개혁이 포함되고, 그 후 제7차 교육과정 개정 작업은 교육개혁위원회 교육과정 특별위원회 주관으로 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교육부도 그 작업에 참여하게 된다.

제7차 교육과정의 배경으로 교육개혁위원회 교육과정특별위원회는 '한국이 당면하게 될 21세기 미래사회는 정보화, 세계화사회이다. 정보화사회는 정보를 주된 자원으로 하여 이의 전달과 처리를 통한 지적가치의 생산을 중심으로 사회나 경제가 발전하여 가는 사회이다. 따라서, 정보화시대에 한 사회의 흥망성쇠는 그 사회가 얼마나 새로운 과학기술과 지식, 그리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 또 하나 미래사회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주요 흐름은 세계화이다. 정보통신과 교통의 첨단기술은 국경을 넘어 지구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지구촌 시대를 도래시켰다. 그 결과 세계시민으로서 협동하고 경쟁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인간의 육성이 교육이 해결해야 할 또 하나의 커다란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고 그 배경을 설명하고, 이를 위해 도덕적이고 공동체의식이 강한 더불어 사는 인간,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창조할 줄 아는 슬기로운 인간, 한국인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세계인과 협동하고 경쟁해 나갈 열린 인간, 일에 대해 자율적이고 생산적인 열린 인간을 지향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교육과정 개혁의 방향으로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지식 기술중심에서 인간존중 중심으로, 교수중심에서 학습중심으로, 관료중심 결정에서 공동체적 결정으로, 외적 양적 평가에서 내적 질적 평가로, 지식정보 중심에서 문제해결 중심으로, 영역주의에서 통합(전체)주의로의 전환이라고 요약하고 있다.

제7차 교육과정의 가장 핵심적 과제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학생이 자신의

흥미, 요구, 적성에 따라 교과목의 선택기회를 확대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정신에 따라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10년간을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으로 설정하여, 공통되고 일관된 교육과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기간 중에도 재량시간이 대폭 신설, 또는 확충되어 학생의 선택 폭이 넓어지고, 고등학교 2, 3학년에 해당되는 11, 12학년은 모두 선택과목으로 편성되었다. 그리고 수준별 교육과정(단계형, 심화 보충형, 과목 선택형)을 도입하여 학생이 자기 수준에 맞는 학습을 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그리고 제 7차 교육과정은 21세기의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 육성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 개정작업이 추진되었다. 그리고 21세기는 정치적 국경은 있지만 경제적 국경은 있을 수 없음으로, 학교에서는 세계화에 부응하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논리에 따라 중학교에서도 제 2외국어 교육이 가능하도록 되었고, 고등학교에서는 제 2외국어로 아랍어가 추가되는 등 외형상 변화를 가져왔다. 내부적으로는 외국어 교육방법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질 향상을 위한 여러 조치가 강구되었다. 그리고 세계화교육에서 간과하기 쉬운 민족 주체성 및 고유문화 가치교육을 강조하였다.

또, 정보화사회에 대비하여 컴퓨터 교육내용을 모든 교육활동에서 강화하여 학교를 작은 정보화 사회로 바꾸어 나가야, 급변하는 21세기를 살아갈 수 있다는 판단아래 컴퓨터 교육을 초등학교부터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요약하면 제 7차 교육과정은 제 6차 교육과정과 유사한 교육이념과 시대적 요구를 수용하고, 교수자 중심이 아닌 학습자 중심의 교육으로 대전환을 시도한 것이다. 그러나 제 7차 교육과정은 현재 우리 나라 교육여건으로는 본래의 취지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적지 않은 것이 염려되는 점이다.

Ⅱ. 교육과정의 변천과 과제

함수곤*

1.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개념

교육과정은 여러 가지 정의와 의미로 통용되고 있으나 여기서 논의하고자 하는 교육과정은 교육부 장관이 법률에 의거하여 고시한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관한 것이다.

국가가 방대한 조직과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여 성장기의 학생에게 의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보통교육(초·중등 교육)은 전국 각 학교의 임의적인 시행에 맡기지 않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책임져야 할 교육목표와 내용, 방법, 평가 등에 관한 일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실천하도록 국가가 관여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세계 각국의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의 관여는 물론 법령에 의한 ‘권력적인 관여’를 말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도 ‘초·중등 교육법’ 제 23조 제 2항에 「교육부 장관은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라는 조항을 두어 국가가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에 권력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교육부 장관은 이 조항에 근거하여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결정해서 고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 고시는 법적 구속력을 지니고 있는 학교 교육과정의 기준인 것이다. 이러한 국가수준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측면에서 그 의의와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다.

(1) 교육의 기준 설정

학교교육은 사회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교육은 개인적 요구와 필요에 의한 것이면서 동시에 국가·사회의 공동 이익에 직결된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전문적인 고등교육이 아닌 보통교육에서는 국가로서나 국민으로서 필요한 공통적, 일반적, 표준적인 교육내용의 기준이 필요하게 된다. 학교교육이 자유 방임적이고 무 꾀도적인 운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국가의 관여가 필요하게 된다. 즉 국가의 교육권적 측면에서 교육의 기준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학교교육에 일정한 표준을 설정해야 하는 국가의 기준 설정 권적 책임이 따르게 된다.

*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2) 교육의 기회 균등 확보

교육의 질적 기회균등의 확보를 위하여 국가수준의 교육내용 기준이 필요하다. 교육의 기회균등은 입학의 기회균등(同等 學習機會, Equality of Accessibility) 만으로는 부족한 것이다. 모든 국민이 전국의 어느 지역, 어느 학교, 어느 교원에 의해서도, 동일한 질과 수준(同等 學習成果, Equality of Success)의 보통교육을 보장받을 때 진정한 교육의 기회 균등은 실현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적합하고 타당한 교육내용의 전국적인 공통 기준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3) 학교 급별 일관성 유지

어느 나라든지 일정한 학제를 가지고 있으며 교육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단계별 교육은 교육내용의 영역·범위·수준·학습량 등의 계통성·일관성을 필요로 한다. 학제의 전체적 구조 속에서 교육내용의 학교 급별 체계 및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는 역시 일정한 교육내용의 전국적인 공통 기준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에 대한 혼란이 생기면 각 단계별 교육간의 연계와 교육 이수 및 학습에 장애가 생기고 계통적인 교육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각 학교 급별로 적절하고 의미 있는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없게 될 것이다.

(4) 교육의 일정 수준 유지

한 나라의 교육 수준은 그 나라의 발전과 국력 수준의 중요한 조건이고 지표가 된다. 따라서 모든 국가는 각기 자국의 일정한 교육 수준 유지·향상을 위하여 교원, 교육내용, 교육시설, 교육재정 등의 여러 부문에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관리·운영하고 있다.

한 나라가 국가·사회적으로나, 학문적·개인적으로 적합한 교육내용 기준을 정하고 유지하는 일은 각 학교나 교원 개인에게만 의존할 수 없는 일이며, 국가적인 규모로 조사·연구·개발하여 타당한 수준의 교육내용 기준을 적합하게 결정하고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5) 교육의 중립성 확보

공교육이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육 외적 체제로부터의 부당한 간섭, 압력, 편향된 교화·선전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과제로서의 기준이 필요하게 된다. 또한 교육 내적 체제 내에서의 학교나 교원의 자의적 독단과 전횡, 편향된 선동 등을 막기 위한 기준의 필요성도 학생의 학습권 보호 측면에서 점차 강조되고 있다.

특히 보통교육 단계의 학생들은 미성숙자로서 판단력, 비판력, 사고력 등이 성숙되지 못하고 교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항할 수 없는 연소자로서 성장 단계에 있으므로 교원의 자의(恣意)와 편향된 지도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서도 교육과정의 국가기준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6) 교육목표의 책임 달성

각국은 대개 교육 관계법령에 초·중등 교육을 통해 어떠한 인간을 기르려고 하는가 하는 교육목적과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교육부 장관이 고시한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각급 학교의 교육 목표를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 목적과 목표를 달성, 실현하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교육 제도와 조직·운영을 위임받은 국가의 중요한 책임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교육내용 기준의 제시가 당연히 필요하게 되며 이러한 기준의 제정과 운영은 국가의 교육행정 기능 중 핵심이 되는 본질적인 기능에 속하는 것이다.

2.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성격

국가수준 교육과정은 한마디로 표현하여 그 나라 초·중등 교육의 기본 설계도라고 말할 수 있다. 또 그 나라 국민성 형성의 기본 지침서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국가수준 교육과정에는 기초·공통교육을 통하여 추구하고자 하는 인간상이 제시되어 있고, 이러한 인간상의 형성을 위하여 학교교육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다루어야 할 교육목표, 내용, 방법, 평가 등에 관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가수준 교육과정은 보통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실제 교육운행을 관리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준이고 지침이라고 할 수 있다.

(1) 교육내용의 공통적 · 일반적 · 요강적 기준

교육내용이 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중요하다고 해서 국가가 전국의 모든 유치원과 학교에 필요한 구체적 교육과정을 모두 편성해 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국가는 어디까지나 지역차, 학교차(설립자, 규모, 시설, 환경 등), 교원차, 학생차 등을 초월하여 전국적으로 공통적, 일반적, 표준적으로 다루어야 할 최소 한도의 교육내용 기준으로서의 성격을 지닌 『국가수준 교육과정 기준』을 제정하여 제시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교육부 장관이 고시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은 실제로 각 유치원과 학교에서 전개될 교육과정의 기준이 되는 문서 계획이다. 이는 교과용도서 편찬자에게는 각 교과
의 교과용도서 편찬의 기본 설계도이고, 각 시·도교육청의 교육행정가에게는 교육내용
행정의 기본지침이며, 각 유치원과 학교의 교원에게는 구체적 실행 교육과정 편성의 기
준으로서의 성격과 기능을 가진다.

또 모든 국민에게는 각자의 자녀에게 초·중등 교육을 통해서 최소 한도 이러한 지
식·기능·태도·능력을 길러주겠다고 국가가 보장하는 교육 공약 문서로서의 성격도
가진다. 그러므로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구체적인 학교 교육과정 그 자체로 보아서는 아
니 되며 각 학교가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기준
으로 삼아야 할 공통적, 일반적, 요강적인 교육내용 기준과 지침으로 해석하고 활용해야
할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2) 법적 구속성을 지닌 고시 문서 기준

우리 나라의 교육과정 문서는 1979년 2월 28일까지는 문교부령으로서 법령 문서였으
나 1979년 3월1일부터 「고시 문서」로 변경되었다.

고시 문서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알리는 문서로서 개정, 폐지되
지 않는 한 그 효력이 계속되는 문서를 말하는 것으로서 아무런 법령 근거 없이 시행되
는 일반 「공고문서」와는 구별되는 법적 효력을 지닌 문서를 말한다.

초·중등 교육법 제23조 제1항은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교육과정」이란 초·중등 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고시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근거를 두고 편성된 각 학교의 「구체적 실행 교육과정」을 말하는
것으로서 교육과정 이수의 법적 구속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폭과 탄력성이 인정되는 표준적 기준

국가가 가지고 있는 기준 설정권에 의해 제정된 건축기준, 계량형기 기준, 품질기준,
식품검사 기준 등과 같은 것들은 상당히 엄밀한 절대 기준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
나 교육과정 기준은 교육의 본질과 특성에 비추어 볼 때, 그리고 교원, 학생, 시설, 지역
등의 특성과 실정 등을 감안할 때 앞에서 열거한 타 기준들과 같이 엄격하고 경직되게
적용하기 어려운 성격을 지닌 교육적 기준이다.

따라서 교육과정 기준은 교육목표의 달성과 교육방법의 효율화를 위해서 교육대상,

교육여건 등에 따라 융통성 있고 탄력성 있게 적용될 것이 요구되는 「폭과 탄력성이 인정되는 표준적 기준」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융통성과 탄력성의 허용 범위는 교육 실천가가 교육계획의 수립과 실천과정에서 적합하고 타당하게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이 경우 교육과정 기준에 명시된 교과, 시간 배당 기준, 편성·운영의 기본지침 등은 법적 구속성이 강한 「강행규정」(強行規程)에 해당된다는 것과 각 교과의 교육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비교적 「예시적·표준적 규정」(例示的·標準的 規程)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재구성의 여지와 폭을 가지고 있다는 두 가지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교육과정 기준은 법적 효력을 지니고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권력적인 관여」(權力的 關與)를 하고 있으나, 융통성 있고 탄력적인 적용과 전문적 조언지도 등의 「비권력적인 관여」(非權力的 關與)가 조화롭게 병행되어 교육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교육적인 기준으로서 운영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우리 나라에 있어서 이상과 같은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성격은 제 5차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제 6차 교육과정에서 처음으로 그 성격이 뚜렷하게 제시되었다.

제 6차 교육과정은 고시 문서의 서두에 ‘교육과정의 성격’란을 최초로 신설하여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성격을 명시하였다. 즉 국가수준 교육과정은 각 학교에서 직접 실천할 교육과정 그 자체가 아니고 각 학교가 실천할 구체적인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 근거로 삼아야 할 교육과정의 공통적, 일반적 기준이라는 것과 이 국가수준 기준 이외에 더 필요한 구체적인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은 각 시·도 교육감이 지역의 특수성과 관내 학교의 실정에 알맞게 정해야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혔던 것이다.

제 6차 교육과정은 처음으로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성격을 명확하게 선언함으로써 지금까지 국가수준 교육과정이 지녀온 애매 모호한 성격에서 벗어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있어서 국가, 지역, 학교의 역할 분담 체제를 확립하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3.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변천

우리 나라의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 결정 방식은 제 5차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중앙 집권형으로 일관되어 왔다. 즉 초·중등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관한 교육과정 기준은 정부(교육부)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거의 독

점적으로 결정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중앙 집권형 교육과정의 획일성, 경직성, 폐쇄성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된 것이 바로 제 6차 교육과정이었다. 제 6차 교육과정은 중앙 집권형 교육과정의 단점으로 지적되어온 국가 수준에서의 과도한 규제와 세밀한 관여를 가능한 한 완화하고 분권화 하는데 개정의 중점을 두었던 것이다.

(1) 제 1차~5차 교육과정기

우리 나라는 정부 수립 후 크게 구분하여 일곱 차례의 국가수준 교육과정 작성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 중 제 1차에서 제 5차 교육과정까지는 한마디로 표현하여 ‘국가수준 교육과정 유일 체제’ 시대였다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초·중등 교육에 관여하고 참여하는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단위학교 등 세 곳의 당사자 중에서 오직 교육부에서만 유일하게 ‘교육과정’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로서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고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제 1차에서 제 5차 교육과정까지는 계속 중앙 집권형 교육과정 체제를 유지하여 왔던 것이다.

학습자를 직접 대면하여 매일 구체적인 교육을 실천하는 학교 현장은 말할 것도 없고, 그 학교와 가까운 위치에서 교원과 시설, 재정, 환경, 자료 등의 정비와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도 교육청에서도 ‘교육과정’에 관한 선택과 결정에는 거의 관여하지 않고 있었던 점이 제 1차 교과과정기부터 제 5차 교육과정기까지 우리 교육의 현실이었던 것이다.

제 1차에서 제 5차 교육과정기까지 우리 나라는 이처럼 교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설계도를 소홀히 다루어 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시대에 우리의 학교에서는 설계도가 없이 무엇에 의거하여 어떻게 교육을 하였는가?

유감스럽게도 그 시대에 우리 학교 교육에서 설계도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은 다른 아닌 ‘교과서’였던 것이다. 즉 완벽한 ‘교과서 중심 학교 교육 체제’가 유지되어 왔던 것이다. 한 마디로 표현하여 교과서(로) 교육한 것이 아니라 교과서(를) 교육한 것이다. 즉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 것이 아니고 ‘교과서’를 사용·전달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교과서는 도저히 교육의 설계도가 될 수 없는 인쇄된 교육자료에 불과한 것이다. 교과서는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교육을 실천할 때 도구로 활용되는 하나의 교육자료인 것이다. 그러한 인쇄물 교육자료가 그 동안 각 학교에서 어처구니없게도 그 학교의 교육

과정 노릇을 대신해 왔던 것이다. 그 결과 우리의 학교 교육이 어떠하였으며, 수업이 어떠했을까 하는 것은 대개 짐작이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나라에서는 그 동안 교육과정=교과서의 등식이 아무 의심 없이 유지되어 왔던 것이다. 교육과정=교과서 등식의 통용은 ‘설계도가 없는 학교 교육’을 만들어 버린 것이다.

이와 같은 교과서 중심 학교 교육 체제 속에서의 ‘수업’이란 ‘교과서의 지식을 학습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 주입하여 학습자의 두뇌에 차곡차곡 잘 저장하도록 했다가 필요한 때에 그것을 잘 재생할 수 있게 하는 작업’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체제 속에서는 교육의 주체인 교육자가 어이없게도 교육의 자료인 교과서의 전도사(deliverer)가 되어 버린다. 교과서 중심 교육체제는 교사가 교육의 설계와 운영에서 교육 전문가로서 마땅히 담당하여야 할 전문적인 역할과 기능을 전혀 수행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렸던 것이다.

교과서 중심체제에서는 학생에게 교과서를 읽히고, 설명해 주고, 요점을 판서하고, 그것을 필기하게 하고, 교과서와 글자 한자도 틀리지 않게 만든 4지 선다형 시험 문제를 풀게 하는 것이 곧 수업이 되고, 학교 교육의 전부가 되어 버린다. 그러나 ‘교과서 지식의 암기 훈련’과 ‘시험 문제 풀기 연습’을 아무도 학교 교육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단순 기능공과 흡사한 ‘교과서 지식의 전달부’를 교육의 전문가로 인정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1차에서 제5차 교육과정기까지의 학교 교육은 완벽하게 교과서의 지배 아래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교과서가 각 학교에 군림하여 막강한 위력을 발휘하면서 절대적인 지배자 노릇을 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교과서 중심체제 시대에 국가 수준 교육과정은 다섯 번이나 큰 개정이 있었지만 일선 교육 현장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고, 소수 교과서 집필자의 주의를 끄는데 그쳤을 뿐이다.

현장 교원들은 국가 수준 교육과정이 어떻게 개정되든지 거의 관심이 없었다. 또 자신의 교육 실천과 역할 기능이 달라지는 것도 없었다. 그래서 국가수준 교육과정은 형식적이고 선언적인 문서로서 교육 현장과 유리되어 공중에서 떠돌았고, 지상에서는 교과서가 학교 교육의 절대적인 성전으로서 강력한 지배력을 계속 행사하고 있었던 것이다.

(2) 제 6차 교육과정 이후

제1차부터 제5차 교육과정 시대에는 국가 수준 교육과정은 형식적으로 존립하고,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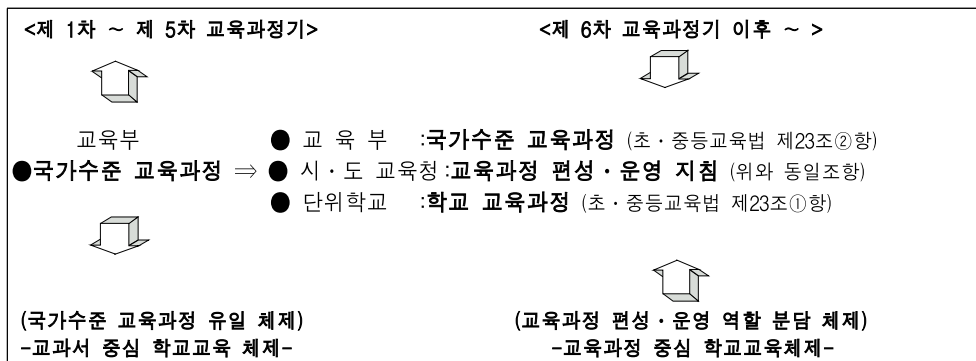
역과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없이 교과서 중심 교육 체제를 유지해왔다는 것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그러나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났다.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국가 주도의 중앙 집권적 교육과정 결정 구조에서 벗어나 분권적 교육과정 체제로 진입하였기 때문이다.

교육에 관여하고 참여하는 교육부, 시·도 교육청, 단위학교 등 세 당사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역할 분담 체제가 교육과정 사상 처음으로 정립되었던 것이다.

이제까지의 국가수준 교육과정 유일 체제가 교육부(국가수준 교육과정) - 시·도 교육청(교육과정편성·운영지침) - 단위학교(학교 교육과정)의 역할 분담체제로 전환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교육과정 체제에 있어서 하나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일대 지각 변동이었던 것이다.

제6차부터 비로소 교육과정의 선택과 결정에 ①교육부 ②시·도 교육청 ③단위학교가 각각의 역할과 기능에 알맞게 관여하고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학생교육의 실행 주체인 일선 학교가 직접 편성·운영하는 ‘학교 교육과정’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분권형 교육과정 체제에 의거하여 '95학년도부터는 각 학교마다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이 의무화되었던 것이다. <그림 II-1 참조>

<그림 II-1>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변천



교과서는 이제 더 이상 학교 교육을 완벽하게 지배할 수 없게 되었다. 즉 교과서가 학교 교육의 기본 설계도 역할을 수행하며 완전히 교육을 지배하였던 시대가 종언을 고하게 되었다. 그리고 새로이 ‘학교 교육과정’이 그 학교의 교육 기본 설계도로서 제자리를 잡고 학교 교육을 지배하는 시대를 열게되었다. 이제부터는 교과서(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학교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교과서(로) 교육하는 이른바 ‘교육과정 중심 학교

교육 체제'가 열리게 된 것이다.

제 6차 교육과정에 의하여 처음으로 탄생한 '학교 교육과정'은 국가수준 교육과정과 시·도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 그리고 교과서, 교사용 지도서, 교육과정 해설서, 각종 교과용 전문도서, 당해 학교의 실태조사 자료와 시설설비, 지역의 자원과 조사자료 등을 근거로 하여 자기 학교의 실정과 자기 학교 학습자의 실태 및 능력에 가장 적합하게 각 학교에서 선택·결정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실행 교육과정을 말한다.

그러므로 학교 교육과정은 곧 그 학교의 교장과 교사가 합의하여 선택·결정한 그 학교 교육의 실질적인 기본 설계도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제부터는 똑같은 교과서가 어느 학교에서나 똑같이 그 학교의 교육과정 노릇을 대신하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각 학교마다 개성 있고 다양성 있는 교육을 특색 있게 실천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는 '학교 교육과정'이 출현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십인 일색(十人 一色)교육을 십인 십색(十人 十色)교육으로 바뀌나갈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었다. 이와 같은 '학교 교육과정 중심 체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첫째, 교과서 대신에 학교 교육과정이 그 학교의 교육을 지배한다는 것은 바로 그 학교의 교장과 교감, 교사가 그 학교 교육의 주체가 되고 전문가가 된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학교 교육과정은 그 학교의 전 교원이 자율적으로 조사, 연구, 개발, 숙의, 합의하여 그 학교의 교육 조건에 가장 적합하게 구성하고, 선택·결정한 그 학교만의 독특한 교육과정이기 때문이다.

둘째, 학교 교육과정은 그 학교에서 학습하게 될 학생의 능력, 개성, 흥미, 경험, 진로, 요구 등을 보다 존중하고 고려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실천할 수 있다는 데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 이유는 학교 교육과정은 그 학교에 적용하기 위해서 그 학교의 학습자 실태와 학습 조건에 가장 알맞게 그 학교에서 선택·결정한 그 학교 학생을 위한 교육 설계도이기 때문이다.

셋째, 학교 교육과정은 그 학교의 전통과 특색, 교장의 교육철학과 신념, 교사의 창의성과 경험, 학부모의 기대와 요구, 지역의 특수성과 학교의 실정 등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교과서 중심 교육체제 아래서는 그러한 것들이 반영될 여지가 거의 봉쇄되어 있었고, 일사불란하게 교과서에다가 학습자를 맞추는 교과서 지식 주입, 전달 위주의 수업이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학교 교육과정은 지금까지 자기 학교에서 실천할 교육에 대한 설계와 기획에 참여해 본 경험이 부족하고,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외면하고도 아무런 불편과 고민이 없는 학교 문화에 익숙해진 현장 교사들에게 매우 생소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교장은 조금하게 서두르지 말고 차분히 단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을 관리해야 할 것이다.

그 동안 모든 학교에서 오로지 교과서에 의존하여 마치 봉어빵을 구워 내듯 획일적으로 교과서의 내용을 전달하는 일에 전념하였던 현장 교원들이 타율적으로 부여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권을 바르게 인식하여 전문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구나 임시위주의 교육 현실, 학교의 불비한 교육 여건, 교원의 정원과 전문적 자질, 사무 관리 위주의 학교 문화, 학부모의 왜곡된 교육관 등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으로 장기간의 세월과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은 곧 적용하게 될 제 7차 교육과정에서 더욱 박차를 가하여 각 학교의 교육 실천자의 손으로 넘어가야 할 것은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각 학교가 맡고 있는 학생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운영은 그 학생들을 직접 가르칠 교육 실천자가 책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그러한 일은 그 학교의 교원을 대신하여 아무도 맡아 줄 사람이 따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교장이 무엇보다도 학교 교육과정 관리에 최우선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다. 이제부터 교장은 외적이고 관리적인 직무 수행에만 전념하지 말고 내적이고 교육적인 직무 수행에도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교장이 학교 교육과정 관리에 역점을 두는 새로운 직무 수행 모습을 교사와 학생, 학부모에게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4.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전망

(1) 교육과정 행정 강화

초·중등학교가 교육을 실천할 때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하나는 법령에 근거하여 교육부 장관이 고시한 ‘국가수준 교육과정’이고, 또 하나는 중앙 또는 지방의 교육행정기관이 수시로 생산해내는 소위 ‘교육시책, 중점사업, 개혁방

안' 등과 같은 행정시책 또는 행정지시 같은 것들이다. 교육과정은 일정기간 효력을 유지하는 법적 구속력을 지닌 고시문서로 제시되고, 행정시책 등은 공문서, 회의, 전화, 전송 등의 수단을 통해서 수시로 학교에 전달된다.

이 두 가지 존재에 대하여 주목하지 않고는 우리의 학교교육을 개혁하기 어렵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는 사람은 극소수인 것 같다. 우리는 위의 두 가지 존재에 대하여 보다 본격적인 조사와 깊은 연구를 시작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교교육은 당연히 그 학교에 가장 적합하게 준비된 그 학교의 독특한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계획적, 조직적, 의도적으로 실천되어야 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의 학교교육은 교육과정보다는 행정기관의 교육시책, 중점사업, 공문서 등에 더 강한 규제와 영향을 받고 있는 특수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독특하고 기이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 교육과정은 학교의 자율적 선택과 결정에 의하여 자생적, 전문적으로 마련되지만 교육시책은 타율적인 지시와 압력의 성격을 띠고 상부기관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하달된다. 교육과정은 학습자의 요구와 필요에 근거를 두고 학문적, 사회·문화적, 개인적 적합성을 확보해야 하지만 교육시책은 정치, 경제, 사회의 요구·필요나 행정 책임자의 일시적인 관심, 의지, 취향 등을 더 중시한다. 교육과정은 다양성, 창의성, 자발성을 중시하지만 교육시책은 획일성, 능률성, 강제성을 더 중시한다. 교육과정은 수많은 관련 전문가의 학문적, 장기적인 합의·선택이지만 교육시책은 소수 정책 담당자의 일방적, 행정적, 유행적, 단기적인 결정이 되기 쉽다.

이처럼 너무나도 상이한 두 가지의 존재 중 지금까지 학교 교육을 강하게 지배하여 온 것은 교육과정이 아니라 교육시책이었음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우리 학교교육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마치 자동차를 만드는 기술자들이 기본 설계도보다도 사장의 지시나 관리층의 비전문적 간섭에 더 무게를 두고 눈치를 보고 있는 현상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는 성능이 좋고 품질이 높은 자동차를 만들 수 없는 것이 눈에 훤히 내다보인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학교 교육의 품질을 높이는 데 있어서 매우 결정적이고 심각한 저해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처럼 심각한 기현상에 대하여 교육 당사자나 관계자 모두가 거의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고 이를 당연시하고 있는 둔감화 현상이 일반화되어 있는 점이다. 특히 일반 교육행정가는 이 문제에 관하여 거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고 아니 할 수 없다.

학교교육의 실천이 교육과정이 아닌 행정기관의 시책이나 공문서 등에 의해 거의 규제되고 조종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핵심적인 문제점을 주목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은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려는 사람들에게 위기를 느끼게 한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는 한 교육개혁을 통해 아무리 교육에 관련된 법령, 제도, 인사, 재정, 환경 등의 여건을 개선해도 교육의 품질을 높이는 것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자동차를 만들거나 건물을 짓거나 영화를 제작하는 현장에서 기본 설계도를 외면하고 수시로 떨어지는 그 회사의 사장이나 임원의 방침 및 지시 등에 더 순종해야 하고, 시달리게 된다면 어떤 품질의 자동차, 건물, 영화가 나오게 될 것인지는 뻔한 일인 것이다.

교육도 마찬가지이다.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기본 설계도(학교 교육과정)와 목표 지향적이고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대로 개발하여 적용하지 않고, 그때그때 임기응변적이고 유행적이며 한 건 주의로 조급하게 마련된 교육시책이나 중점사업, 공문지시 등에 교육이 조종되고 흔들려서는 교육의 목표 달성과 일관성의 유지는 물론이고 우리가 애타게 갈망하는 창의적이고 인성이 좋은 한국인을 도저히 길러내기는 어려운 것이다.

교육에 있어서 지금까지 너무나 소홀히 해왔던 학교 교육과정(소프트웨어)에 주목하여 하루속히 이 부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새로운 개발과 정비에 주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우리 나라는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교육현장의 소프트웨어가 너무나 심하게 왜곡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아닌 것이 사이버 소프트웨어 노릇을 너무도 당당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동안 외면하였던 교육의 소프트웨어 부문을 다시 챙기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경험 있는 전문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 그 전문가들의 활동이 현장 교육 지원행정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 소프트웨어를 자세히 살피고, 연구하고, 그 적용을 관찰하고, 분석하고, 문제를 발견하고, 보다 효과적인 것을 개발하고 다시 재투입시키는 일 등이 소위 현장 장학인 것이다. 그 일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처럼 중요한 전문 기능이 마비되고 정지 된지 이미 오래된 것 같다. 기구, 조직 면에서 그렇고 인력, 자질 면과 근무여건, 활동체제 등에 걸쳐 지금 심각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더 큰 문제점은 이러한 현장 장학 기능과 교육 내용 행정 분야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 그 자체를 고위 교육행정 당국자들이 거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 분야는 더욱 부실과 퇴보의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으며 개선 대안도 전혀 마련되고 있지 않는 것 같

다. 교육의 소프트웨어를 제대로 챙기지 않고서는 도저히 교육을 개혁할 수 없다고 감히 단언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국가에서 공통적이고 거시적인 수준으로 제시한 소프트웨어(교육부 장관 고시 교육과정)가 문제가 아니라 이를 근거로 각 학교 수준에서 구체적이며 실행적인 수준으로 선택·결정한 소프트웨어(학교 교육과정)가 더욱 절실한 문제이다. 이 문제를 주목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다.

21세기는 양의 시대가 아니고 질의 시대이다. 21세기는 하드웨어가 문제가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더 문제가 되는 시대이다. 교육행정도, 교육현장도 이제부터는 소프트웨어를 세밀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전문적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조직과 기구, 전문가, 전문활동이 바로 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분야가 제대로 운영되도록 지원할 수 있는 편수, 장학, 평가 체제가 제대로 확립되어야 한다. 이 중요한 일을 소홀히 하고 아무리 외형적이고 가시적인 하드웨어에 주력해 보았자 교육의 질 관리는 어려울 것이다. 교육의 소프트웨어를 중시하고 먼저 그 부문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야말로 교육개혁의 가장 확실한 길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2)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대강화

우리 나라의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 결정 방식은 제5차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중앙 집권형으로 일관되어 왔다. 즉,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 기준은 정부(교육부)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거의 독점적으로 결정해왔던 것이다. 기초, 공통단계 학교의 교육과정 기준을 국가수준에서 정부가 결정하는 것은 교육의 기회균등의 실현, 교육의 일정수준 유지, 교육의 정치적, 종교적 중립성 확보 등의 측면에서 그 필요성과 당위성을 인정받고 있는 것이 일반화된 사실이라는 것은 앞에서 지적한바와 같다.

그러나 중앙 집권형으로 교육과정의 기준을 결정할 때 그 권력적인 규제의 범위와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 ① 국가수준에서 일선 교육 현장이나 시·도 교육청 수준에서는 전혀 선택·결정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미세한 수준까지 세밀하게 규제할 것인가
- ② 그렇지 않으면 국가 수준에서는 공통적이고, 대강적(大綱的)인 기준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결정은 지역과 학교 수준에서 이루어지게 할 것인가
- ③ 그리고 시·도 교육청과 일선 학교에서 지역과 학교, 학생, 교사, 학부모 등의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율 재량의 범위는 어느 정

도까지 인정할 것인가 등에 관한 권한의 적절한 배분과 조절, 조화에 관련된 예민한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이다.

국가수준 교육과정은 제 1차 교육과정에서부터 제 5차까지 비교적 ‘세밀한 규제형’을 유지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교육과정의 편제와 수업시간(단위) 배당 기준에 대한 규제는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편제와 시간배당 기준은 하나의 표준적, 탄력적인 예시규정이 아니었고 강제적, 획일적인 강행규정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동안 시·도 교육청과 학교 현장에서는 당해 지역과 학교의 독특한 교육적 요구와 필요성, 특수성 등을 살리기 위하여 특정 교과목이나 영역, 또는 교육활동의 신설과 조정, 그에 따른 수업시간의 확보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 실현은 거의 불가능하였다. 그 이유는 각 학교에서는 국가 수준 교육과정 기준에 제시된 편제 및 시간(단위) 배당 기준을 그대로 준수해서 운영해야만 되는 매우 획일적이고 경직된 중앙 집권형 교육과정 체제를 고수하여 왔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중앙 집권형 교육과정의 획일성, 경직성, 폐쇄성 등의 병폐를 치료하기 위하여 교육개혁 차원에서 단행된 것이 바로 제 6차 교육과정의 개정이었다. 제 6차 교육과정은 중앙 집권형 교육과정의 단점으로 지적되어온 국가 수준에서의 과도한 규제와 세밀한 관여를 가능한 한 완화하는데 개정의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과거(제1차~제5차)의 국가 수준에 집중되어 있던 교육과정 결정권이 교육의 실천과 관련된 각급 기관의 수준별로 상당히 분권화되는 방향으로의 진전이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교육과정 결정에 있어서 위상별(국가, 지역, 학교) 역할 분담이 처음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제 6차 교육과정에서 우리 나라 초·중등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체제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은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과거 유일하게 국가수준 교육과정만 존립했던 단일 기준 체제가 국가수준 교육과정(교육부 장관), 시·도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시·도 교육감), 학교 교육과정(학교장)의 역할 분담 체제로 분화되었었던 것이다. 이러한 새 교육과정 체제에 의거하여 국가수준, 지역수준, 학교수준에서 제각기 책임 있게 선택, 결정하여야 할 사항과 업무가 대폭 신설, 확대되었다. 제 6차 교육과정의 개정으로 국가, 지역, 학교의 각 수준에서 새롭게 조정, 선택, 결정할 수 있게된 대표적인 변동 사항은 대개 다음과 같다.

과거에 국가수준에서 제시하였던 각 교과목의 학년별 목표는 폐지되었다. 교과별 학년 목표는 각 학교가 당해 학교 교육과정 편성 시에 결정하도록 했다. 국가수준의 편제에

서는 고등학교의 공통필수 과목 (10개 과목-70단위)만 지정하고, 그 외에 추가로 이수하여야 할 과목은 시·도 교육청과 단위 학교에서 선택,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문과목은 계열간의 벽을 넘어서 선택 이수할 수 있게 되었고, 학교 단위에서 필요한 과목의 신설도 가능하게 되어 상당히 열린 교육과정 체제가 확립되었다.

수업 시간 배당기준은 과거의 ‘주당 시간 배당형’을 ‘연간 총 시간 제시형’으로 바꿨다. 그래서 주별, 월별, 학기별 수업 시간은 각 학교에서 학교 교육과정 편성 시에 당해 학교의 실정에 알맞게 배정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 국가 수준의 일방적, 획일적인 결정으로 성역화된 편제의 조정 및 결정에 시·도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처음으로 제도적인 보장을 받게 되었다. 즉 고등학교의 과정별 선택 과목을 시·도가 처음으로 선택, 결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과거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학교에서는 교육과정 사상 최초로 당해 학교 교육의 기본 설계도인 그 학교의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의무교육 단계인 초등학교에서도 지역과 학교, 학생 등의 교육적 필요나 요구를 고려하여 그 학교만의 독특한 교육활동을 설계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초등학교에 교육과정 사상 처음으로 ‘학교 재량 시간’을 창설하여 국가 공통의 편제에 제시되지 않은 교육활동도 편성·운영할 수 있는 자율 재량권을 학교에 부여하였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신입생의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으로서 부과되었던 ‘우리들은 1학년’도 그 교육과정과 교과용 도서를 각 시·도 교육청에서 당해 지역과 학교에 적합하게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변화를 가져오게 만든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전향적인 개정 목적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학교 교육의 기본 청사진이며, 인간 형성의 설계도라고도 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국가 수준에서 독점적이고 획일적으로 전부 결정하는 것을 지양하고, 교육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선 교육 현장의 조사, 검토와 연구, 참여, 관여 속에 현장에 적합한 조정, 선택, 결정이 이루어 질 수 있게 함으로써 학습자에 알맞은 개성 있고 특색 있는 교육을 실현하려는 의도라고 할 수 있다.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을 국가수준에서는 공통적, 대강적 기준만 제시하고, 가능한 교육 실천 현장에서 실정에 맞게 조정, 선택, 결정할 수 있게 분권화 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한마디로 ‘학습자를 존중하는 인간교육의 실현으로 교육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학습자 중심의 교육, 다양성 있는 교육, 개성 있는 교육을 실천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하여 학습자 개개인의 독특한 교육적 요구

와 학교와 지역의 실정 및 특수성에 적합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함으로써 지금까지 우리 교육의 고질적인 병폐인 획일성과 경직성을 탈피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지금까지 교육의 공급자 중심의 공장형과 같은 대량 획일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들을 정확히 파악하여 아틀리에형, 작품형의 인간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 학습자를 존중하는 교육목표와 내용, 방법과 평가를 통해서 그들의 개성, 자주성, 창의성, 자기 주도적 학습력 등을 육성할 수 있는 교육적인 환경으로 우리의 교육현장을 재편성하려는 시도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교육과정 개선의 흐름은 세계적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개혁 동향속에서 그 의미가 보다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세계 각국의 교육과정 개선의 흐름은 크게 두 줄기로 구분하여 정리할 수 있다.

하나는 주로 서구 선진 주요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학습자의 잠재 가능성과 능력을 중시하는 다양성과 개성이 풍부한 개방형의 교육과정 형태이다. 또 하나의 흐름은 주로 동양권과 독재 국가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국가 사회의 요구와 필요를 개인의 요구보다 우위에 두고 중시하는 획일적이고 경직된 규제형의 폐쇄적인 교육과정 형태이다.

위의 두 가지 형태의 교육과정은 모두 장, 단점을 지니고 있어 이를 운영하고 있는 당사국들에서도 근래에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선 작업을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공통적인 경향이다. 개성화, 다양화 지향의 개방적인 교육과정 쪽은 공통성과 보편성의 색채를 첨가하는 방향으로 보완하고, 획일화, 경직화된 폐쇄적인 교육과정 쪽은 개성과 다양성의 색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제각기 선회하는 움직임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 ① 학교 교육과정을 중시해온 영국은 1988년, 교육개혁법(Education Reform Act)을 공포하고 이 법에 따라 국가 공통 교육과정(National Curriculum)을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 ② 연방 정부의 교육에 대한 지나친 개입을 경계해온 미국은 1994년, 미국 교육법(The Goals 2000 : Educate America Act)을 공포하고 이 법에 의거하여 2000년까지 성취 할 국가수준의 교육목표를 제시하였다.
- ③ 중앙 집권형 교육과정 제도를 고수해온 프랑스가 교육과정 개선에 지방 자치단체, 학교, 학부모, 학생의 참여를 확대하였다.
- ④ 중앙 집권형 교육과정 체제를 오랫동안 고수해온 일본이 국가수준 교육과정은 가능한 한 간략화 하는 한편 선택과목과 단위학교의 자율 재량을 확대하여 교육의

다양화, 개성화를 강하게 추구하고 있으며, 2002년, 주 5일제 수업 실시를 전제로 개정된 신 학습지도요령에 ‘총합적 학습시간’을 신설하였다.

각 국의 이러한 개혁 동향은 모두 위에서 지적한 세계적인 교육과정 개선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교육과정 개선에 있어서 두 줄기의 큰 흐름을 배경으로 하여 표출된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나라도 이러한 세계적인 교육과정 개선 동향과 맥락을 같이 하여 그 동안 획일화, 경직화 쪽으로 기울어져있던 교육과정을 개성화, 다양화, 지역화, 특성화 쪽으로 일으켜 세우려고 노력한 것은 1992년, 제 6차 교육과정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 교육과정의 경우 이러한 개선의 흐름은 제 7차 교육과정에 와서 잠시 주춤하는 추세를 보이게 되었다. 국가수준 교육과정이 이전 보다 기술적으로 더 구체화, 복잡화, 특수화, 상세화되었기 때문이다.

우선 국가수준 교육과정 문서의 분량이 방대하게 증가되었다. 편제의 복잡화, 난해화 현상이 나타났고, 편성·운영지침의 규제가 강화되어 현장의 재량이 위축되고 획일화, 경직화의 우려가 나타났다. 제 7차 교육과정에서 나타난 재량활동(교과재량, 창의재량), 일반선택과목, 심화선택과목, 교과군설정, 학생선택, 시·도선택, 수준별 교육과정, 초등학교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의 국가기준 제시 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국가수준 교육과정은 보다 과감하게 간략화, 단순화, 대강화하여 교육현장에서 보다 자유롭고 융통성 있게 편성·운영할 수 있는 자율 재량권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학의 국가수준 교육과정 적용범위 문제를 검토하여 사립학교 교육을 보다 개성화, 특성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할 것이 앞으로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발전 과제라고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함수곤, 교육과정의 편성, 서울: 국정교과서 주식회사, 1994
- 함수곤외,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실제, 서울:동아출판사, 1994
- 함수곤, 교육과정과 교육시책, 교육행정연수원 교육연수 제7호 p127, 1998
- _____, 교육월보 (1997.7월호), 교육부
- 교육부,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기준, 2000
- _____, 제 6차 교육과정의 개요, 1992
- _____, 제 7차 교육과정 연수자료, 1998
- 서울특별시교육연구원, 교과장학의 이론과 실제,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연구원, 1996
- 柴田義松, 教育課程編成の創意と工夫, 東京: 學習研究社, 1980
- 日本教育行政學會, 教育課程行政, 東京: 教育開發研究所, 1978
- 日本教育方法學會編, 新しい學校像と 教育改革, 東京: 明治圖書出版株式會社, 1997
- 學校教育研究所編, 21世紀の學校教育の役割と課題, 東京: 學校圖書株式會社, 1998
- 熱海則夫, 教育課程の 編成, 東京:きょうせい、1994
- Allan A. Glatthorn, Developing a Quality a Curriculum, Association for Supervision and Curriculum Development Alexandria, Virginia, 1994
- Michael W. Apple, Curriculum Politics, Tokyo : Toshindo Publishing, 1994

Ⅲ. 교육용도서의 변천 과정

정태범*

1. 서론

교육에서 교과서가 차지하는 역할은 대단히 크다. 어떤 의미에서 교과서가 교육활동에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자료로서보다 더 큰 의미를 주고 있다. 따라서 교과서가 어떠한 내용을 담아 어떻게 만들어지느냐가 학생들의 성장 발달을 결정할 만큼 교육에서 교과서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히 크다. 특히 우리 나라에서는 교과서가 교육의 전부라고 일컬어질 만큼 교과서가 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히 크다.

이러한 교과서는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만들어진다. 교육과정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정신이 일차적으로 반영되어 교재화되는 곳이 바로 교과서이다. 편수 행정에서는 교육과정을 제정하고 교과용 도서를 편찬하는 정책을 다룬다. 교육부의 편수 행정에서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라 함은 교과서, 지도서 및 인정도서를 포함하여 쓰는 말이다. 여기서 교과서라 함은 학교에서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의 주된 교재를 말하며, 지도서라 함은 교과서 또는 지도서에 갈음하거나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승인 받은 도서를 말한다.¹⁾

학생들이 사용하는 주된 교재로서 교과용 도서에 관한 한, 현재 세 종류의 교과용 도서가 있다. 그 하나는 1종 도서로서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서가 있고, 둘째는 2종 도서로서 교육부 장관의 검인을 받는 교과서가 있으며, 셋째는 인정 도서로서 교과서에 갈음하거나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교육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도서가 있다.

해방 이후 여러 번의 교육과정 개정으로 교과용 도서에 관한 내용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교과용 도서의 발행제도, 외적인 체제 및 내용체제, 내용 전개 방식 등에서 학생의 성장 발달과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사실(史實)을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분석·정리하는 것은 교과용 도서의 발전을 위해 매우 소중한 작업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먼저, 교과용 도서 중 교과서를 중심으로

*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1)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 14920호(1996. 2. 22.)

교과용 도서의 제도적인 측면, 교과용 도서의 체제 및 단위 전개 과정으로 구분하여 교과용 도서의 변천 과정을 고찰한 후 교과용 도서 정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교과용도서 제도의 변천

(1) 교과용 도서 발행제도

우리 나라 교과서 정책은 개화기와 미군정기 초에 자유 발행제가 잠시 동안 실시된 적은 있으나, 그 이후는 주로 국정과 검인정제를 근간으로 하되, 시대에 따라 그 비중을 달리 하여 왔다. 특히 국정제의 강화는 정치체제의 변천에 따른 정치적 통제의 강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교과서 채택 과정에서 야기된 부작용과 입학시험제도 등도 그 한 요인이 되었다.(곽병선 외, 1988 : 50)

미군정시대 교과서는 초등학교는 국정을 원칙으로 하고, 중등학교의 교과서에 있어서는 국정교과서인 국어와 사회생활을 제외하고는 검정제도를 세워 민간인의 저서를 사용하였다.²⁾ 1949년 교육법은 초·중등학교의 교과서는 국정 또는 검인정으로 발행할 것임을 명문화하였고, 1955년의 교육과정 제정 이후 여러 가지 국정교과서가 발행되었다. 1950년대 말에는 검인정 교과서 발행을 확대하였다. 교과서의 검인정제는 1963년 교육과정 개정과 더불어 교과서 집필상의 유의점이 마련되고 검인정 교과서의 편찬과 검인정 절차가 마련되어 새로 실시하게 되었다.³⁾

1960년대 제3공화국 이후에는 1종 도서의 범위를 확대하는 쪽으로 변화였다. 특별히 1973년 교육과정 개편 이후 교과서정책에 있어서 두드러진 변화는 1977년의 「교과서 파동」을 거쳐 종전의 국정, 검인정제도가 개정되었다. 새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1977. 8. 22, 대통령령 제 8660호)이 마련되었으며, 교과서는 문교부가 저작권을 가진 제1종과 문교부장관의 인정을 받는 도서로서의 제2종으로 구분되고 국민학교·중학교·실업고등학교의 전교과와 인문 고등학교의 일부교과(국어·국민윤리·국사 등)는 1종으로 하고 기타 교과는 2종으로 편찬하였다. 그리고 교과용 도서는 교과서·지도서·검정도서를 구분하였다. 또한 이 때부터 일교과일책주의(一教科一冊主義)를 표방함으로써 교과서 편찬을 단일화하였고, 중·고등학교의 국사 교과서는 검인정에서 국정으로 전환하였다.⁴⁾ 1종 도서는 그 발행을 교육부에서 직접 담당하지 않고 소위 연구개발형이라고

2) 손인수, 미군정과 교육정책, (서울: 민영사, 1992), 304.

3) 김종철, 한국 교육 정책 연구, (서울: 교육과학사, 1989), 398.

이름 붙여 연구기관과 대학에 위촉하여 개발하는 형식을 도입하게 되었다. 2종 도서는 검정교과서와 의미가 같은 것이다. 이 1, 2종 도서의 구분은 제6차 교육과정 적용 교과용 도서 때부터 다시 국정, 검정, 인정제도로 바뀌었다. 특히 초등학교에 영어교과가 신설되어 검정교과서를 학교에서 채택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그리고 2000년부터 초등학교 1~2년, 중등 1년에 적용되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검정 교과서의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다. 초등학교에서는 재량활동 시간이 확대되어 인정도서를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중등에서는 학생들의 교과에 대한 선택폭이 넓어져 검정 및 인정도서의 수가 확대되었다.

(2) 교과용도서 발행 현황

광복 이후 여섯 차례 교육과정이 공포됨에 따라 교과용 도서도 개정된 교육과정에 따라 발행되었다. 교과용 도서에서 자치 단체의 장이 발행할 수 있는 인정 도서를 제외한 1종 및 2종 교과서의 발행 현황을 학교 급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초등학교

교수요목기에는 공민, 역사, 지리, 실업, 자연 관찰을 통합한 사회생활과를 비롯한 국어, 이과, 산수 등 8개 교과가 발행되었다. 제2차 교육과정기에는 반공·도덕 교과가 신설되어 9개 교과가 발행되었고, 제3차에는 반공·도덕생활이 도덕으로 변경되어 편찬되었다. 제4차 교육과정기에는 1-2년 통합교육과정이 적용되어 바른생활, 즐거운 생활, 즐거운 생활 교과가 발행되었다.

제5차 교육과정에서는 종전의 국어는 말하기·듣기, 읽기, 쓰기 등 세 가지 교과서로 나누어졌고, 산수는 산수와 산수 익힘 책 등 두 가지 교과서로 나누어졌고, 자연은 자연과 실험·관찰 등 두 가지 교과서로 나누어졌다. 그리고 언어, 수리 기능을 체계적으로 지도하기 위하여 국어와 산수를 통합 교과서에서 분리, 독립시키고 나머지 교과는 학생의 발달 단계와 생활 경험을 고려하여 바른생활, 즐거운 생활, 즐거운 생활, 우리들은 1학년 등의 통합 교과가 발행되었다.

제6차 교육과정기에는 1학년 신입생들이 3월 한 달 간 학습하는 “우리들은 1학년”을 지역별로 발행하도록 시·도로 이관하였으며, 산수 교과를 수학으로 변경하여 발행하였

4) 윗글, 399-400.

다. 1997년에 세계화 교육이라는 시대적 조류에 따라 영어 교과가 신설되었다.

<표 III-1> 교육과정 변천에 따른 교과용 도서 발행 현황

구 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긴급조치 (1945)	국민, 국어, 역사, 지리, 산수, 이과, 체조, 음악, 습자, 도화· 공작, 요리· 재봉, 실과	국민, 국어, 지리·역사, 수학, 물리·화학·생물, 가사재봉, 영어, 체육, 음악, 습자, 도화, 수예, 실업	국민, 국어, 지리·역사, 수학, 물리·화학·생물, 가사재봉, 영어, 체육, 음악, 습자, 도화, 수예, 실업
교수요목기 (1946-1954)	국어, 사회생활, 이과, 산수, 보건, 음악, 미술, 가사 (8개교과)	필수: 국어, 사회생활, 수학, 일반 과학, 체육·보건, 실과, 음악 선택: 수학, 외국어, 음악, 미술, 수 공, 실업	필수: 국어, 사회생활, 수학, 과 학, 체육·보건, 외국어 선택: 국어, 사회생활, 수학, 과 학, 외국어, 음악, 미술, 심 리실업
제1차교육과정 (1954-1963)	국어, 산수, 사회생활, 자연, 보건, 음악, 미술, 실과 (8개교과)	필수교과(8개교과)와 선택교과 (실업·가정, 외국어 기타교과)	필수교과(8개교과)와 선택교 과(교련, 철학, 외국어, 기타교 과)
제2차교육과정 (1963-1973)	국어, 산수, 사회, 자연, 음악, 체육, 미술, 실과, 반공·도덕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체육, 음악, 미술, 실업·가정, 외국어, 반공·도덕	공통: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체육, 음악, 미술, 실업, 가정, 외국어, 인문, 자연, 직업과정의 선택과정이 신설
제3차교육과정 (1973-1981)	반공·도덕이 도덕으로 변경 (9개교과)	도덕, 국어, 국사, 사회, 수학, 과 학, 체육, 음악, 미술, 한문, 외국 어, 실업·가정	국민윤리, 국어, 국사, 사회, 수 학, 과학, 체육, 교련, 음악, 미 술, 한문, 외국어, 실업·가정
제4차교육과정 (1981-1987)	바생, 슬생, 즐생, 도덕, 국어, 사회, 산수, 자연, 체육, 음악, 미술실과(통합교육과정 적용)	실업·가정에서 필수인 기술, 가정을 3학년에서 제외, 자유선택과목 도입	사회과의 사회, 지리, 세계사 필수, 자유선택과목 범위 확대 (논리학, 철학 등)
제5차교육과정 (1987-1992)	1-2년: 국어, 산수, 바생, 슬생, 즐생, 우리들은 1학년 3-6년: 9개 교과	12개교과, 실업·가정과 에서 남녀 공통 이수 가 능한 기술·가정이 신설	보통: 13개교과, 교양 선택 전문: 농업, 공업, 상업, 과학, 체 육, 예술 등
제6차교육과정 (1992-1997)	1-2년: 5차와 동일 3-6년: 9개 교과에 3학년부터 연차적으로 영어 과 목이 신설됨.	필수: 도덕, 국어, 수학, 사회, 과 학, 체육, 음악, 미술, 가정, 기술·산업, 영어 선택: 한문, 컴퓨터, 환경, 기타 필요로 하는 교과	보통: 윤리, 국어, 한문, 교양선 택 등 13교과 70과목 전문: 농업, 공업, 상업, 가사실 업, 과학, 체육, 예술, 외국어 9계열 378과목

자료: 교육부,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24-62;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 24~79;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26-125의 내용을 참고하여 재구성한 것임.

2) 중학교

제 2차 교육과정기에는 국어, 수학, 사회, 과학 등 10개 교과가 발행되었다. 1969년 부
분 개정되어 국어과에서는 ‘한자·한문’의 지도 내용이 삭제된 교과서가, 미술과에서는
표준색을 종래의 12색에서 10색으로 된 교과서가 발행되었다. 사회과의 2학년에서는 국
사의 체계적인 교수-학습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사 부분을 세계사와 분리하였고,

실업·가정과에서는 누구나 기초 기술을 습득하게 하여 장래의 산업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기 위한 남녀 공통 필수 기술과목이 신설되었다.

제3차 교육과정기에는 원칙적으로 12개 교과와 일부 선택과목(실업, 가정)이 발행되었는데 반공·도덕 활동이 없어지고 도덕과가 교과로 독립되었고, 실업·가정과에서 여자 기술을 가정으로, 가정을 가사로 개칭되었다. 5차 교육과정에서는 전과 다름없이 12개 교과가 발행되었는데, 실업·가정과에서 남녀가 공통으로 이수할 수 있는 기술·가정이라는 과목이 신설되었다.

3) 고등학교

인문고등학교의 교과서는 교수요목기에 초등학교의 경우와 같이 공민, 역사, 지리가 사회생활과로 통합되어 발행되었고, 체육과 보건이 합해져서 체육·보건으로 변경되어 발행되었다. 제3차 교육과정에서는 국민윤리가 신설되었고, 국어, 국사가 사회로부터 분리되었다. 제4차에서는 사회과의 유사한 교과목 또는 관련 교과목이 통·폐합되어 발행되었는데, 정치·경제, 사회·문화를 통합 조정하여 사회 1, 2로 국토 지리와 인문지리를 통합하여 지리 1, 2로 변경하였다.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산업 발전에 따라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마련인 환경 문제를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중학교의 신설 과목인 환경에 연계하여 고등학교에 “환경 과학”을 교양 선택 과목으로 신설하였고, 전문 교과로 ‘환경·보건’, ‘환경 기술’과목이 신설되었다.

실업계 고등학교는 전문 교과목의 종류에 따라 농업, 공업, 상업, 수산, 가정 등의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다.⁵⁾ 제2차 교육과정기부터 실업계 고등학교를 인문계 고등학교와는 별도의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게 하였다. 이때 발행된 교과서는 국어, 일반사회 및 국민윤리, 국사, 공통 수학, 일반 관리, 체육과목의 필수교과와 수학, 생물, 화학, 물리, 지리, 정치·경제, 세계사, 음악 또는 미술, 외국어와 같은 선택교과인데 종전보다 실업 전문 교과목의 비중을 크게 높였고, 실험·실습 과정과 이론 과정과의 통합 또는 중합·실습 등을 강조하였다.

제3차 교육과정기에는 전문 교과목을 조정하였는데, 여기에는 유사 학과를 종합하거나 산업 분화 및 학과 신설에 따라 교과목을 신설하였다. 농업계 6과목, 공업계 18과목, 상업계 2과목, 가사·실업계 2과목이 통합되고, 반면 농업계 32과목, 공업계 50과목, 상업계 9과목, 수산계 21과목, 가사·실업계 20과목이 신설되었다. 제4차 교육과정에서는

5)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은 1963년 문교부령 제122호로 제정되었다.

전문 과목에 있어서 공업 계열은 191에서 151과목, 농업 계열은 62에서 50과목, 상업 계열은 31-24과목, 수산·해운 계열은 46에서 37과목, 가사·실업 계열은 34에서 28과목으로 통합, 조정되었다. 제 5차 교육과정에서는 전문 교과 중 기타 과목의 경우 타 계열의 전문 교과도 해당 계열이나 학교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교과라면 선택하게 하였다. 제 6차 교육과정에서는 전문 교과는 계열에 관계없이 융통성 있게 선택하게 하였다. 농업(45→43), 공업(129→101), 상업(22→30), 수산·해운업(37→28), 가사·실업(37→22)에 관한 270개 과목을 대폭 통·폐합하고 미래 사회의 산업 구조와 정보화 첨단 기술의 발전에 대비한 새로운 전문 교과를 추가하여 224개 과목으로 조정하였다.

3. 교과용도서의 체제 변천

교과용 도서에는 형식 체제와 내용 체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교과서의 형식체제는 판종, 지질, 활자, 색도, 편집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그 외형을 결정하게 된다. 교과서의 내용체제는 교과내용의 배열 및 단원의 전개과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그 내용의 조직을 구성하게 된다.

(1) 교과용 도서의 형식 체제(글자, 지질, 색도, 쪽수, 판형)

교과서의 형식체제란 교과서가 갖추어 할 외형적 형식과 관련되는 요소를 말한다. 이러한 요소들을 중심으로 그 변천 과정을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교과서는 제 4차 교육과정의 개정과 더불어 크게 변화되었다. 교과서의 체제 면에서 판형은 국색 일색이었던 것이 4·6배판(국교 저학년) 또는 크라운판(중·고교의 과학)으로 확장되었으며, 지질도 신문용지에서 미색 중질지로 바뀌어졌다.

교과서 용지는 학교 급별, 교과목별로 조금씩 달라지게 되었다. 초기에는 가장 하급용지인 갱지를 사용하였지만, 지금은 대부분 미색 중질지(70 g/m²)를 사용하고 있다. 음악, 서예 교과서는 미색모조지(120 g/m²)를 사용하였다.

(2) 교과용 도서의 내용 체제

미군정 시대에는 교과서 편찬에 있어서 한글을 전용하다시피 하여 한자를 극도로 제한하였으며, 또한 형서를 단행하였다. 군정 및 과정기에는 모든 문교시책이 정부 수립까

지의 과도적 조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였던 관계로, 교과과정과 교수요목 등이 신생 한국의 민족적 민주교육이념의 구현에는 적합하지 못하였다. 교수요목기(1946-1954)에는 교육과정의 전개를 대부분의 교과에서 단원명, 제재명, 내용 요소 등 가르칠 주제만을 열거하였고, 내용 수준이 학생들의 지적 능력에 비하여 높고, 교과 상호간의 횡적인 관련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 표 III-2 > 교과서 형식 체제의 변천 내역

연대별	판형	색도	지질
50년대	-국판(5×7)원칙 -4×6, 5×6, 4×6배판 일부 사용	-본문 : 단색 -표지 : 단색, 원색	-본문: 갱지(45g/m ²) -표지: 모조지, 마분지
60년대	-국판 원칙 ※4×6, 5×6판은 폐지 -교과서에 따라 4×6배판 일부 사용	-본문 : 단색 -표지 : 단색, 원색	-본문: 미색갱지(45g/m ²) -표지: 모조지
70년대	-국판 원칙 -음악, 미술, 서예 부도는 4×6배판	-본문: 단색 ※초등1-3학년, 미술, 사회과 부도는 원색 -표지: 원색	-본문: 미색갱지(55~59g/m ²) ※미술, 사회과부도는 모조지·아트지 사용 -표지:모조지(180g/m ²)
80년대	-초등 ·1~2학년: 4×6배판 ·3~6학년: 국판 -중등: 국판 원칙	-초등: 원색 -중등: 단색 원칙 ※미술, 부도는 원색	-본문: 중질지(70g/m ²) -표지: 백상지(180g/m ²)
90년대	-초등:4×6배판과 국판 혼용 -중등:국판, 크라운판 4×6배판 혼용	-초등: 원색 -중등: 1~3도 ※미술, 부도는 원색	-본문: 중질지, 아트지 -표지: 백상지(220~260g/m ²)

자료: 이학래 외, “교과서 본문용지 개선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98-10 (한국교과서연구소: 1998. 12): 2.

학문중심 교육과정으로 편성된 1973년의 제 3차 교육과정 이후 우리 나라의 교과교육 과정은 미국의 교육과정 이론을 따라서 나선형으로 학년별 교육내용을 조직해 왔다. 과목에 따라서는 같은 지식 영역을 학교 단계별로 또는 학년별로 점차 상세하게 반복·제시하는 방식으로 나선형 교육과정을 구성하였다. 예를 들어, 한국지리와 국사의 경우 같은 시대, 같은 지역에 대한 내용이 사실적 지식 중심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단계에서 1학기~2년 과정으로 반복 제시되었다. 따라서 한 학년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 영역(주제)의 수가 더욱 늘어나므로, 교과서와 수업에서는 각 시대나 각 지역에 대한 지식들을 조금씩 나열식으로 다루게 되었다.⁶⁾

고등학교만 제외하고는 전 교과에서 학년별로 영역별 교육내용을 제시하며, 전 학년에서 거의 유사한 영역 구분을 하였다. 과목에 따라서는 같은 학교 단계 내에서도 학년별로 다루게 되어 있는 영역별 학습내용이 유사하여, 실제 수업 과정에서 같은 내용이 매년 또는 격년으로 반복해서 다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도덕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매학년, 같은 영역 4가지(개인생활, 가정·이웃·학교 생활, 사회 생활, 국가·민족 생활)를 다루게 되었다.

4. 교과서의 단원 전개 과정⁷⁾

교과서에서 단원 전개과정을 어떻게 꾸미느냐가 학교의 교수 학습형태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사실 광복이후 50년의 세월이 흘러갔지만은 교과서의 구조는 큰 변화가 없었다. 교과서는 교과의 내용에 따라 그 배열과 조직을 달리하였거나 본문의 내용에 따라 연습문제를 추가하는 형태의 변화가 있었다.

종래의 교과서 편찬에서 단원의 전개과정은 대체로 “학습 내용의 제시”와 “학습결과의 정리 확인”의 두 단계를 거친 데 비하여, 제4차 교육과정개정에 따른 교과서의 편찬에서 단원 전개과정은 교사의 수업형태와 학생의 자율학습을 고려하여 ① 학습과제의 안내, ② 학습내용의 제기, ③ 학습결과의 정리 확인, ④ 학습내용의 적용 보충과 같은 단원의 전개과정 모델을 활용하였다.⁸⁾ 그리고 이와 같은 단원 전개과정의 모델에 따라 거의 모든 교과서가 개발되었다.

예컨대, 중학교 1학년 국어의 “소설”단원의 경우, (1) 학습과제의 안내 단계에서는 “소설이란 어떤 글인가를 알아보자, 소설이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알아보자”고 하여 이 단원을 학습하는 이유를 제시하였으며, (2) 학습내용을 구성하는 작품으로 “오영수의 요람기”와 “빌라드의 이해의 선물”을 제시하였으며, (3) 학습결과를 정리 확인하는 과정으로 작품 후미에 “공부할 문제”를 수록하였으며, (4) 일단 배운 학습내용을 적용 보충하는 과정으로 “문법과 작문”을 실었다. 다른 교과에도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면서 교과의 특색을 살리게 되었다.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의 수학의 경우 학습과제별로 원리를 설명하는 부분,

6) 이용숙 외, “교과서 정책과 내용구성 방식 국제비교 연구,” 연구보고 RR 95-17 (한국교육개발원: 1995. 12): 99-100.

7) 정태범, “교과서 체제개선에 관한 고찰,” 교과서연구 제 2호 (한국2중교과서협회: 1989. 6): 26~28.

8) 문교부 교육과정담당관실, “좋은 교과서란 어떠한 교과서인가?,” (프린트물, 1987), 18

수식으로 된 기본 문제를 풀도록 한 부분, 문장제 유형의 응용 문제를 풀도록 한 부분 등으로 구성하였다. 학습 과제별 원리를 설명하는 것은, 단계별로 풀이과정을 예시하고 필요한 설명을 본문보다 약간 작은 글씨로 덧붙이는 방식을 취하고 연녹색이나 연분홍 등의 바탕색을 이용해 눈에 띄도록 하였다.

중·고등학교 수학 교과서의 경우, 초등학교와는 달리 2종 교과서이기 때문에 내용 구성 방식을 일률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5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보다 매우 발전되었다. 6차 교육과정에 따라 새롭게 개발되어 '96년부터 적용된 고등학교 교과서의 경우, 대단원별로 도입 부분에 그 단원을 배우는 목적, 학습 목표 및 방법, 그리고 단원과 관련된 수학사적 배경, 선수 학습 내용과의 관계 등을 제시하는 시도가 일반화되었다. 또한 종래 단일 면으로 구성되었던 면 구성 방식도 다양해져 필요한 경우, 비고난을 두어 문제 풀이 과정에서 주의할 점, 힌트, 강조점 등을 제시하였다.⁹⁾

5. 결 론

교과서가 어떻게 만들어지든 교육에서 교재의 기능을 교과서가 다 할 수는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과서와 아울러 학습보조 자료의 개발이 필요한 것이다. 제5차 교육과정개정 이후 교과서 편찬에서는 초등교육에 많은 학습보조자료가 개발되었다. 학교교육에서 교과서의 기능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계속적 연구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한 나라의 학교 교육에 있어서 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결정하는 학생과 교사가 사용할 교과용 도서를 만드는 일은 고도의 전문적 능력과 판단을 필요로 할뿐만 아니라 과학적 연구와 아울러 합리적인 절차와 과정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편수 행정의 중요성과 그 특수성을 감안할 때 편수 행정에서는 교육 과정의 개발과 교과용 도서의 편찬에 관한 편수 요원의 자질과 그 전문적 능력을 매우 중시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근래 교육의 사회적 요청이 다양해짐에 따라 교육활동에서 교과서의 기능도 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학교교육에서 교과서만이 중요한 교재로 작용하던 시대도 지나고 있다. 교육과정을 어떻게 구성하는가에 따라 그것을 가르치는 교재는 교과서일 수도 있고 다른 자료일 수도 있다. 교육과정의 운영에 따르는 교재관은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지침서의 역할을

9) 이용숙 외, 301~302.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 국가의 교육활동의 근간이 되는 교과서 제도를 건전하게 발전시키는 일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교육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이 글에서는 교과용 도서의 변천 과정과 여러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교과용 도서 행정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교과서가 교육 내용의 전달 매체로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교재의 발간을 전제로 교과서의 교육적 역할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교과목의 내용을 제시하는 교과서에는 학문의 기본적 구조를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맞게 조직하여 제시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교육부가 국정으로 발행하는 1종 도서의 종수는 될 수 있는 한 줄이고 교과목의 전문가가 출판사를 통하여 교과서의 집필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해 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다양한 교과서의 개발을 위하여 가능한 한 2종 교과서의 종수는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육의 지역적 특색을 살리기 위하여 중앙중심의 교과서 개발과 아울러 지방자치의 특성을 살리는 지역중심의 교과서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교과서의 외적체제 및 편집디자인이 개선되어야 한다. 교과목에 따라 판형을 달리해야 하고, 지질로 일률적으로 규제할 것이 아니라 교과목에 따라 교과특성에 맞도록 지질을 개선해야 한다.

넷째,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여 전자교과서 개발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전자교과서는 현대 멀티미디어 기술을 구현함으로써 종래의 교과서로서는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생생하고 다면적인 학습정보 환경을 조성하여 학습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결국 교과서는 그 나라의 교육의 얼굴이다. 이 말은 그 나라의 교과서를 보면 그 나라의 교육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교과서 제도 및 내용의 개선은 교육 내용을 발전시키는 관건이 되는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교육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I.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5.
- _____,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 I.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7.
- _____,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I.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7.
- 김종철. 한국 교육정책 연구. 서울: 교육과학사, 1989.
- 손인수. 미군정과 교육정책. 서울: 민영사, 1992.
- 이용숙, 김영준, 이근님, 양미경, 최성욱, 박순경. “교과서 정책과 내용구성 방식
국제비교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 95-17 (1995. 12).
- 정태범. “교과서 체제 개선에 관한 고찰.” 교과서 연구 제2호 (1989. 6): 22-29.
- _____, “교과서 행정의 발전방향.” 교과서 연구 제3호 (1989. 9): 4-14.
- 한국교과서연구소. “교과서 본문용지 개선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98-10
(1998. 12).
- 한국교과서연구소. 교과용도서관련 법규집. 서울: 한국교과서연구소, 1992.
- 한국교육개발원. “교과서 체제 개선 연구.” 연구보고 RR 85-30 (1985. 12).
- 허강, 광상만, 홍우동, 현영호. “교과서의 외적 체제 및 편집 디자인 현상 국제
비교 연구.” 연구보고서 ‘99-4 (2000. 2).
- 홍웅선. “현행 교과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교과서 연구 제7호 (1990. 9):
2-14.

제 3 부 한국 편수사 연구(I)

- I. 미군정기 및 교수 요목기의 교육과정과 교과용도서 편찬
- II. 제 1차 교육과정 개발과 교고용 도서 편찬
- III. 제2차 교육과정 개발과 교과용 도서 편찬
- IV. 제 3차 교육 개발과 교과용도서 편찬

I. 미군정기 및 교수 요목기의 교육과정과 교과용 도서 편찬

- 광복 · 교수 요목기의 교과용 도서 편찬 · 발행을 중심으로

이종국*

1. 서 론

(1) 연구 목적

이 연구는 미군정기 및 교수 요목기의 교육 과정과 교과용 도서 편찬에 대한 당시대의 모색과 실현, 그에 따른 일련의 전개 과정을 전반적인 서술 범위로 하여 논의한 것이다. 그럼에 있어, 8·15광복과 함께 우리 교육이 새롭게 열리기 시작한 때로부터 교수 요목기의 하한계인 1954년 4월까지를 이 연구의 서술 구간으로 삼았다. 따라서, 한국의 현대 교육사 중 초기 정황을 교육 과정과 교과용 도서 편찬 활동에 중심을 두어 고찰함으로써 그에 대한 변천사적 의미를 짚어 보고자 했다.

교육 과정은 가르치고 학습할 내용을 설계해 놓은 틀이라고 한다. 교육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계를 배열, 제시한 수단이 교과서이며, 이 두 가지 요건은 마치 동전의 앞뒤처럼 밀접한 관련성으로 연결되어 있다.

새삼스러운 일이지만, 광복 직후에 적용된 교육 과정이 오늘날의 그것과 어떤 연계성을 가진 것인가 하는 문제는 관점에 따라 여러 갈래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무엇보다도, 일제에 의한 식민 통치의 종언과 함께 한국 교육의 체계모니 세력이 또 다른 주체로 대체되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미국식 교육 이데올로기에 의해 한국의 교육이 통제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교육적 주조는 민족주의의 부활이라는 ‘전국민의 열망’으로 응집되어, 사회적 급변 현상에 대응할 수 있었다. 그러한 과정에서, 당시에 추진되었던 교육 재건을 위한 특성은 한국 교육의 방향과 기반을 결정해 주고 있었다는 점이다. 오늘날의 한국 교육도 그 성과에 관계 없이 미군정기 교육 상황의 성격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군정이 갖는 교육적 의미는 곧 현재의 한국 교육을 구조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한 것이기도 하다.¹⁾

* 해천대학 교수

1) 이광호, 「미군정의 교육 정책」, 『광복 전후사의 인식·2』(서울: 한길사, 1985), p. 493.

교육 활동에 포괄된 내용은 여러 가지로 다중화 요소를 이루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교육 과정과 교과서 문제야말로 교육의 직접적인 요건이라는 점에서 특별히 중요하다. 이 때문에 미군정기에 조성된 교육의 내용(교육 과정)과 교육 수단(교과서)은 오늘에 연결해 준 토대로 자리매김되고 있어, 출발선상에서의 초기적 맥락으로 이해된다. 요컨대, 미군정기의 그것은 또다른 차원에서의 체계모니 변환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한 상황은 한국의 교육 사회가 직면하고 있었던 일대 전환점이었음에 틀림없다. 다시 말해서, 단절로부터의 새로운 시작을 요구하고 있었던 까닭에, 준비되지 않은 적응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었다. 왜냐 하면, 일제식 교육 방법을 몰아 낸 상태에서 모든 교육 구조를 새로운 개혁 체제로 시급히 변환시켜야 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변환 과정은 8·15광복을 기점으로 하여 곧바로 이어진 미군정의 적용, 과도 정부 체제의 여파를 거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그에 따른 문교 행정의 개시, 또 그러한 과정 속에서 6·25전쟁을 겪고, 마침내 제1차 교과 과정령이 제정, 공포된 1954년 4월에 이르기까지 줄곧 ‘긴급 적용’, ‘시급 조립’의 구조적 특성을 보여 주고 있었다. 줄여 말하여, 교육 운영의 권력 주체가 미군정청-과도 정부,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의 발족을 거쳐 이후 1954년 4월에 이르는 8년여의 기간이 지날 때까지 ‘긴급 적용’과 ‘시급 조립’의 실험 과정이 거듭되고 있었던 것이다.

교육 과정과 교과서 문제로 말하면 미군정 초기인 1945년 9월부터 1946년 8월 말까지를 ‘긴급 조치기’라 규정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군정청에 의한 교수 요목이 사실상 적용된 1946년 9월부터 1954년 4월까지를 보통 ‘교수 요목기’라 매기고 있는바, 이들 양대 구간은 한 덩어리의 연결선상에서 긴급 복구와 구조 변혁이 병행되고 있었던 시기로서, 한국의 교육 과정·교과서사에 있어 하나의 특수 구간으로 자리해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상과 같은 관점을 기간으로 하여, 첫째로 미군정기 및 교수 요목기에 적용된 교육 과정과 그에 따른 교과용 도서 편찬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고자 한 데 포괄적인 연구 목적을 두고자 했다. 물론, 교육 과정과 교과서 편찬에 관련된 초기의 정황을 살펴봄으로써 현재와 장래를 위한 지향 과제를 시사받고자 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는 사실에 유의했다.

둘째로, 교육 과정과 교과용 도서의 제도적 운영 주체가 거듭 교체되면서 어떤 모형을 생산하고 있었는가를 알아보고자 했다. 이는 8·15광복 이후 반세기를 넘기면서 당시의 모색이 오늘의 시점에서 어떤 의미로 대하고 있는가를 구명(究明)해 보고자 한 취지이다.

셋째로, 미군정기와 한국 정부 수립 직후 그리고 6·25전쟁을 경험하면서 당시에 편찬·발행된 교과용 도서에 대한 시대사적 의미를 도출하고자 한 데 또 하나의 목적 지향점을 두었다. 이 같은 서술 목적은 교과서관이 크게 수정되고 있는 오늘의 관점에서 하나의 불변적 단서를 발견하는 일에 주안점을 두고자 한 데 있다. 여기서 불변적 단서란, 여전히 변함 없는 교과서의 역할·기능에 관한 문제로 압축된다. 특히, 우리의 처지로 보아 비록 분단된 한쪽에서의 교육 수단일 수밖에 없었지만, 이는 국가·사회의 발전 과정에 있어 교과서만큼 위력적인 매체도 찾아보기 어렵다는—특정 시대의 교과서가 보여 준 실체적 위상을 접근해 보기 위한 연구 목적으로서 중요하다고 보았다.

(2) 연구 방법

이 연구는 문헌 연구 방법을 선택했다. 지나간 사실을 반증하는 작업이야말로 기록의 증거 기능을 중시해야 한다는 보편성이 이 연구의 전개에 접근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 다룰 내용이 담긴 시대 구간이 반세기 이전에 존재한다는 점과, 따라서 당시에 이행되고 있었던 교육 과정과 교과서 편찬·발행 궤적을 알아보는 데 그 중심을 두었으므로, 하나의 역사 서술이라는 개연성을 지닌다.

역사 서술도 여러 가지 진술 형식 중의 한 방법이지만, 과거와 현재의 자료들에 담긴 사실들을 탐구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귀중한 경험을 제공하게 된다²⁾고 한다.

문헌과 함께 중요한 정보원으로는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참여자 내지는 목격자를 대상으로 한 대면적인 면접 방법(interview)이라든지, 면접을 위한 고정된 질문지(interview schedule) 또는 비대면적 설문지 등을 활용하여 연구·조사하고자 하는 내용을 충족시키는 방법도 효과적일 것이다.³⁾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에서는 인터뷰나 설문지에 의한 조사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 특히, 인터뷰의 경우는 반세기 이전의 참여자들이 거의 타계했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령이므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감안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거와 현재를 통틀어 ‘미군정기의 교육 과정과 교과용 도서 편찬’에 관한 관련 문헌들에 나타난 서술들은 그 자체가 증언으로서의 기록임을 크게 중시하고자 했다. 요컨대, 좀더 소급된 시점에서 관련자들이 증언한 내용을 객관적으로 취사하여 인용한 사례가 있음을 밝힌다.

2) Sherman Kent 저·安貞模 역, 「歷史學研究方法」(서울: 成文閣, 1988), p. 12.

3) 車培根, 「커뮤니케이션研究方法」(서울: 世英社, 1980), p. 99.

한편으로, 이 연구는 문헌을 중심으로 한 기록 자료에 의거했으나, 광복 전후의 사정으로 볼 때 혼란하기 이를 데 없었던 사회적 영향하에서 얼마만큼의 충분한 기록 자료들을 남겨 둘 수 있었는가 하는 기본적인 문제들을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왜냐하면, 3년간의 미군정이 끝나고 군정 당국자들이 문교 관련 중요 서류들을 그들의 본국으로 가져갔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국내에 남아 있던 것들도 6·25전쟁통에 인멸되었거나 분실 또는 방기되어 오늘에 전하는 것이 매우 드물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미국으로 건너간 자료들도 장기간의 비공개 과정을 거쳐야 했으므로, 우리측에서는 그 1차 자료들에 접근하여 체계적인 정리를 시도하기 어려웠던 형편이었다.⁴⁾ 이에 관한 전말은 정태수(鄭泰秀)에 의해 발표⁵⁾된 바 있다.

물론, 이후에도 미군정기에 성안된 원자료(1차 자료)에 접근하여 전문적으로 다룬—특히 미군정기 및 교수 요목기에 관련된 교육 과정과 교과서 편찬을 중심 주제로 다룬 논의들은 흔치 않는 실정인 것이다.⁶⁾

결국, 문헌 연구 방법은 자료의 취재와 그 검증 결과를 객관적으로 드러내 보이는 데 기본을 둔 개념이므로, 특히 해당 구간(미군정기 및 교수 요목기)에 대한 정보원의 탐색·개발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 연구에서는, 해당 역사 구간에서의 교육 과정과 교과용 도서 편찬에 대하여 서술하되, 그 분량 안배의 방법을 4 : 6 정도로 통제하려 노력했다. 즉, 교과용 도서 편찬·발행과 관련된 논의에 보다 많은 비중(60%)을 두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교과용 도서 편찬은 결국 편수 행정에 의한 결과물이므로, 내용 전개 방법상의 한 부분을 그쪽에도 안배했음을 밝힌다.

단원 가림의 방법은 전체 4개 대단원 중 ‘미군정기 교육의 전개와 교과용 도서 편찬’, 그리고 ‘신생 정부의 교육 과정·교과용 도서와 전시 교육’으로 중심을 두되, 교과용 도서 편찬·발행쪽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었다.

4) 과도 정부 시절에 문교부장(문교부 장관)을 역임한 吳天錫에 의해 기록된 「韓國新教育史」(서울: 光明出版社, 1975)의 경우는 저자 자신이 미군정의 문교 행정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직접적인 자료들 중 일부를 그의 저서에서 인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선행 연구이다.

5) 鄭泰秀, 「美軍政期 韓國 教育行政의 機構와 要員의 研究—美軍側史料를 中心으로」, 서울: 韓國教育學會 教育史研究會, 1989.

6) 한 예로, 일본인 학자 阿部洋이 編한 「解放後 韓國의 教育改革—美軍政期를 中心으로」(서울: 財團法人 韓國研究院, 1987)의 경우는 미군정기에 있어서의 교육 정책, 교육 재건 노력, 언어 정책의 전개, 미국의 교육 원조 등을 원자료에 접근하여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 그러나 ‘교육 정책’이라는 상위 주 제에만 비중을 둔 나머지 교육 과정이나 교과서 문제는 제외되어 있다.

(3) 시기 구분과 연구의 한계점

이 연구는, 주제의 범위에 포괄된 8·15광복을 상한으로 하여 교수 요목에 의한 교육 과정 적용기인 1954년 4월까지로 그 대상 시기를 제한했다. 그러므로 약 8년 동안의 교육 과정과 그에 따른 교과용 도서 편찬·발행에 대한 내용이 그 대상이며 또한 연구 범위가 된다. 이에 관한 이해를 위해 시기 구분과 연구의 한계점을 차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시기 구분

엄밀한 의미에서, 미군정기와 교수 요목기는 교육 정책을 주관하는 당국의 형질이 다를 뿐이지, 당초 군정청 학무국에 의해 교수 요목의 공포, 적용 내지는 주요 정책 사안들이 승계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유의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들 양대 시기는 별도로 구분되는 교육사적 구간으로 보기 어려운 특수성이 개입되고 있다. 요컨대, 미군정기에 마련된 교수 요목 적용이 겹쳐 있음으로 하여 그 군정 당국의 존립 구간이 포함되어 있고, 군정의 종식에 뒤이어 한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약 6년간을 더 지속한—제1차 교과 과정이 제정, 공포(문교부령 제 35호, 1954. 4. 20)되기 직전까지 교수 요목기가 연결되고 있다는, 특이한 교육사 구간으로 자리해 있다. 통산하여 약 8개년에 걸쳐 있으므로 광복 이후 55년사(2000년 현재) 중에서 7분의 1을 점하는 교육 과정·교과서사 구간이기도 하다.

그런데 교수 요목기의 발생 시점을 살펴보면, 1945년 9월 17일에 ‘미군정청 일반 명령’ 제 4호로 발령된 ‘신조선의 조선인을 위한 교육’에서 그 최초 근거가 비롯되고 있다. 이에서 ‘교수 용어’와 ‘교과목’에 대한 지침이 개연적으로 공표되어 있었던 것이다.⁷⁾ 그 다음으로 후속된 것이 1945년 9월 29일에 발령된 ‘미군정청 일반 명령’ 제 6호였다. 이 문서는 최초로 실현된 사실상의 ‘초·중등 학교 교과 및 시간 배당 기준’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일제의 식민지 교육을 하루 빨리 청산하여 민주적인 민족 교육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서둘러 취해진 조치였다.⁸⁾

이러한 일련의 조치를 기틀로 하여 1946년 9월에 단행된 학제의 개편과 함께 다시 수정·보완되어 ‘초·중등 학교 교수 요목’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 교수 요목을 적용한

7) 中央大學校 附設 韓國教育問題研究所, 「文教史」(서울: 中央大學校 附設韓國教育問題研究所, 1974), pp.81~82.

8) 김수진, ‘해방 후 우리 나라 교육 과정—변천·문제·개선 방향’, 「한국 교육 과정의 새로운 좌표 탐색」(서울: 교육과학사, 1996), p. 91.

시기를 교수 요목기(1945. 9~1954. 4)라 통칭하는데, 그 후로 모두 7차의 교육 과정 개편이 있었다. 그래서 이 교육 과정 적용기들은 각각의 단위 시기로 연결된 상태에서 교육 과정기의 확고한 분할을 결정짓게 했다.

그런데 미군정기 및 교수 요목 적용기는 그 원인 발생 자체가 ‘교육 과정령’ 또는 ‘교육 과정 고시’ 등의 형식과는 별개이기 때문에, 교육 과정 변천사의 출발점에 위상하더라도 특수 구간으로 보아야 할 요소가 많다. 가장 대표적인 이유를 든다면, 당시의 교수 요목을 성안, 공포한 실질적인 주체가 미군정청 당국이라는 데서 찾게 된다. 다만, 정부 수립과 함께 한국 정부가 그 업무를 승계하여, 이후 1954년 4월까지 발전적으로 수정, 적용한 사실이 연계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뿐이다.

8·15광복기의 교육 활동은 ‘한국 근대 교육사’⁹⁾의 하한계인 동시에 새출발을 연 상한계이기도 하다. 그런데 미군정기 및 교수 요목기에 걸쳐 있는 시기가 8년이 채 안 되고 있지만, 이 기간 안에서 교육 과정·교과서와 관련된 급변적 정황이 전개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유의하게 된다. 그러므로 논자에 따라 다양한 관점에서 그 시기 분할을 적용하고 있음을 본다. 이에 관한 몇 가지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신천식(申千植)은 삼국 시대 중엽부터 각 시대별로 본 교육사적 특수성에 접근시켜 해방 후~현재: 민주 교육 사조 시대¹⁰⁾라 하고, 8·15광복을 현대 교육의 출발점으로 규정했다.

유봉호(劉奉鎬)는

해방 후 과도기의 교육 과정(1945. 8. 15~1946. 9)

교수 요목기의 교육 과정(1946. 9~1954. 8)¹¹⁾

으로 구분하고, 이를 통틀어 교수 요목 강조기(1945~1954)¹²⁾라 하여 교육 과정과 교과서 편찬 상황을 논의했다.

한국교육과정·교과서연구회의 경우는 8·15광복을 기점으로 하여 이후 4개월 반(~1945.12.) 동안에 이루어진—일반 명령 제4호(1945. 9. 17)¹³⁾를 전후한 때에 조처된 행정적 정황을 중시하여

교육에 대한 긴급 조치

9) 孫仁銖, 「韓國近代教育史: 1885~1945」(5판), 서울: 延世大學校 出版部, 1992.

10) 申千植, 「韓國教育史의 時代區分 問題」, 韓國教育學會·韓國教育史研究會 編, 「韓國教育史學」 제1집(서울: 韓國教育學會·韓國教育史研究會, 1969), p.36.

11) 劉奉鎬, 「韓國教育課程史研究」(서울: 敎學研究社, 1992), pp.277~307 참조.

12) 劉奉鎬, 「現代教育課程」(서울: 敎學研究社, 1993), pp.204~209 참조.

13) 「신조선인의 조선인을 위한 교육 방침」, 1945.9.17.

교수 요목기(1946~1954)¹⁴⁾라 정리하고 있다. 이에서는 미군정기의 첫 단계를 ‘과도기’라는 개념 대신에 최대 변혁의 핵심 사안인 긴급 조치로 전제하여 부각시키고 있음이 주목된다.

이경섭은 교육 과정기를 각각의 유형별 시기로 구분하되, 1945년부터 1963년까지를 ‘교과 중심 교육 과정 유형’이라 규정한 다음

과도기 교육 과정(1945~1946)

교수 요목기 교육 과정(1946~1954)

제1차 교육 과정(1954~1963)¹⁵⁾이라 구분했다.

유봉호·김용자의 경우는 광복 후 미군정기(1945~1948)와 대한민국 이승만 정부시기(1948~1960)를 ‘민주 교육 도입기’라 전제하고, 그 변화 과정의 성격으로 보아

광복 후 과도기(1945. 8. 15~1946. 9)

교수 요목기(1946. 9 ~ 1963)¹⁶⁾라 구분했다.

김용만 등은 교육 과정의 차시별에 따른 각급 학교 교육 과정 문서를 적용기별로 구분하면서

긴급 조치기(1945. 8 ~ 1946. 9)

교수 요목기(1946. 9 ~ 1954. 4)¹⁷⁾

라 하고, 그 첫 단계의 과도기적 개념을 ‘긴급 조치기’로 규정했다. 그런가 하면, 이길상은 미군정기를 통틀어 전환기적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하면서 ‘해체’로부터의 ‘시작’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 이유로, 이 시기에 있어 일제하에서의 교육 공동체가 해체되고 새로운 형태의 교육 공동체가 형성되기 시작한 전환기였다는 것이다.¹⁸⁾

손인수는 ‘미군정과 교육 정책’을 논하면서, 당시의 교육 체제를 주요 상황 전개 과정으로 강조하여

- ① 한국교육위원회와 조선교육심의회 구성
- ② 각급 학교의 재개와 그 전개 상황
- ③ 학무국의 기구 개편과 교육법제의 수립

14) 敎育課程·敎科書研究會 編, 「韓國 敎育課程의 變遷(國民學校)」(서울: 大韓敎科書株式會社, 1993), pp.1~3.

15) 이경섭, 「한국 현대 교육 과정사 연구(상)」(서울: 교육과학사, 1997), p. 19.

16) 유봉호·김용자, 「한국 근·현대 중등 교육 100년사(한국 신교육 총서 5)」(서울: 교학연구사, 1998), p.187.

17) 김용만 외, 「한국 교육 과정 변천에 관한 연구」(서울: 한국교육과정·교과서연구회, 1998), pp. 18~19.

18) 이길상, 「미군정하에서의 진보적 민주주의 교육 운동」(서울: 교육과학사, 1999), p. 8.

④ 도미 교육 사절단과 중앙교육연구소

⑤ 교육 이념 · 교육 제도 · 교과서 편찬¹⁹⁾

등의 5개 이행 과정순으로 시기 구분의 구조적 틀을 제시했다.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8·15광복 이후 교수 요목기로 묶여지는 1954년 4월까지의 구획 정리는 양대 시기로 분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1945년 8월 15일을 시발점으로 하여 1946년 9월까지를 긴급 조치기 또는 과도기라 보고, 이를 다시 ‘전환기’라고도 하여 교육 공동체의 변환 과정에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로부터(1946.9.) 1954년까지를 ‘교수 요목기’로 굳히고 있는데, 이는 실질적인 교과 편성에 따른 교수-학습 활동이 이행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수 요목기도 교수-학습 활동에 필요로 하는 대안 마련을 위한 긴급 조치의 성격을 띤 시기여서, 1954년 4월 20일(문교부령 제35호)에 공포된 제1차 교과 과정을 성사케 한 응급적인 정지 작업기로 자리매김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의 시기 안에서 6·25전쟁을 겪게 되었으므로, 기왕의 교수 요목들은 전시 적용 개념으로 다시금 긴급 변환을 조치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 가장 두드러진 변환 현상이 전시 체제하의 ‘전시 교육’ 그 자체이며, 교과용 도서 또한 ‘전시 교과서’로 보급되었던 것이다.

이로 볼 때, 엄밀한 의미에서 8·15 이후 제1차 교과 과정이 공포되기 직전까지의 교육 과정 및 교과용 도서 편찬과 관련된 시기 구분은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정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교육 활동의 긴급 조치기(1945. 8. 15 ~ 1946. 9)

교수 요목 제정 · 적용기(1946. 9 ~ 1948. 8)

교수 요목 계승기(1948. 8 ~ 1950. 6)

전시하 교수 요목 변환 적용기(1950. 6 ~ 1954. 4)

이와 같은 시기 구분은 이 논문의 중심 내용을 형성하는 ‘미군정기 교육의 전개와 교과용 도서 편찬’(제2대단원), ‘신생 정부의 교육 과정 · 교과용 도서와 전시 교육’(제3대단원)에 포괄된다.

한편으로, 위에 가름해 보인 시기 구분은 각각 짧은 연한으로 분할되어 있다는 사실을 짚게 된다. 교육 행정을 통제하는 지배 세력이 일제 당국으로부터 미군정청으로, 그것이 다시 한국인에 의해 많은 역할을 담당케 된 과도 정부로, 또 신생 대한민국 정부로 거듭 교체되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교수 요목기의 후반에 이르러서는 6·25전쟁

19) 손인수, 「미군정과 교육 정책」(서울: 도서출판 민영사, 1992), pp.215~314 참조.

을 겪게 되는 등 시대적 변동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극심했다는 특수성을 새삼스레 확인하게 된다. 바로 그런 점이 미군정기와 교수 요목기의 교육 과정과 교과용 도서 편찬 과정을 점검하는 변인적 요소이기도 하다.

2) 연구의 한계점

반세기를 넘긴 오늘의 시점에서 미군정기 및 교수 요목기를 통할해 볼 때, 몇 가지 금기시되고 있었던 한계점이 잠재되어 왔다는 사실을 상기하게 된다. 그것은 특히 미군정기의 현대사적 접근과 관련된 부분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현대사 부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요컨대, 오늘의 현실이 현대에 너무 밀착되어 있어, 그 기록의 형태가 직접적으로 그리고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자들 스스로가 접근을 회피하거나 권력 집단에서 연구를 금기시하고 있었다는 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보았다.²⁰⁾

그런 까닭에, 미군정 시대의 교육을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교육 정책에 대한 소개나 평가에 치중해 왔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더욱이, 전통적인 시각의 연구들은 한국 교육을 민주화하기 위한 미군정의 교육적 노력에 대하여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논자에 따라서는 기능론적인 거시 이론에의 지나친 의존으로 인해 외세 결정론적 시각에 사로잡혀 있다고 비판하기도 한다.²¹⁾

한편, 일제로부터의 해방과 미군정이라는 사회·정치적 요인을 지목하여 한국의 새로운 교육 과정에 영향을 주었다고 긍정하면서도, 1945년의 교육 목적과 교과 편제의 비일관성, 1946년의 교과 편제와 교수 요목 간의 비일관성은 일제적(日帝的) 요소를 제거하지 못한 결과로서 미군정의 민주적 교육 개혁의 한계를 드러냈다.²²⁾고 비판하여, 해당 시기에 이행된 교육 과정과 그 행정 수행 체제의 모순을 지적한 바도 있다.

이 같은 일련의 문제들을 감안한 상태에서, 그 동안 교육 과정에 관한 연구는 많은 성과를 거두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것이 비록 금기시되고 있었던 일방(하나의 점령 지배 이데올로기로 본 미군정 세력과 그 교육 정책)을 탐색하는 데 소극적이었던 한계에 직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²³⁾, 이쪽(한국 정부에 의해 수행된)의 교육 과정에 대한

20) 오욱환·최정실, 「미군 점령 시대의 한국 교육—사실과 해석」(서울: 지식산업사, 1993), p. 29.

21) 이길상, 앞의 책, 「미군정하에서의 진보적 민주주의 교육 운동」, pp. 6~7 참조.

22) 정영주, ‘한국 교육 과정 변천에 대한 비판적 분석—1945년~1962년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과정의 탐색—유봉호박사 정년기념논문집」(서울: 교학연구사, 1992), p.233.

23)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지적은 시사하는 바 많다. “한국이 가지고 있는 자료의 빈약함은 같은 기간의 일본 자료들과 비교해 보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일본인들은 자료의 수집과 정리에 엄청난

분석과 평가, 또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들은 계속되어 왔던 것이다.

그런데 정작 교육 과정의 내용을 매체화하여 실현하는 교수-학습 현장에서의 직접적인 수단인 교과서에 관한 연구는 매우 저조한 실정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²⁴⁾ 교육 과정이 어떤 특정한 교육 내용을 구축한 ‘기지(基地)의 구실’을 떠맡고 있다면, 교과서의 경우는 당연히 양식(지식·학습 내용)을 실어 나르는 공급선인 동시에 특별히 중요한 임무 수행자로서의 매개체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서에 관한 관심 사안이나 적어도 연구의 틀로 묶어 낸 견해들은 으레껏 교육사(教育史) 또는 교육 과정(사) 서술에서의 단편적 논의만으로 제한되고 있었던 것이 일반적인 사례이기도 했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최초로 시도된 것이 「敎科書會誌」²⁵⁾였던 바, 결국 창간호가 종간호인 채 더 이상 지속되지 않았다. 이로부터 25년이 지난 뒤(1988)에 「교과서 연구」²⁶⁾가 창간을 보았고, 1991년 2월 11일에는 교육과정·교과서연구회(창립 회장: 洪雄善)도 발족을 보게 되었다.

「교과서회지」와 「교과서 연구」의 중간 시기인 1980년대 초반에 이르러 한국교육개발원에 의해 일련의 연구들이 생산된 바 있는데, 이 또한 중요한 성과였다.²⁷⁾ 당시 교과서에 관한 연구는 그간에 소홀했던 바를 자성한 결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문제는, 교과서 편찬과 관련된 연구—특히 미군정기 또는 교수 요목기에 대한 연구는 당시에 도 극히 제한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노력을 기울여 왔다. 국립일본연구소에서는 미군 점령기의 일본 교육 관계 자료들을 백방으로 수집하고 정리하고 있다. (중략) 연구진들은 워싱턴시에 있는 미국국립문서국에서부터 각 지역에 산재해 있는 대학 도서관과 개인 기념관, 심지어 개인 집까지 찾아다녔으며, 공문서에서부터 각종 위원회의 위원들이 작성한 메모장들 그리고 인터뷰 기록까지 모든 자료들을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수집하고 정리하고 있다. 이들이 투입하고 있는 재정, 인력, 시간 등과 한국 학자들의 투입량을 비교하는 것은 전혀 상대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무의미한 일이다.”* [* 오육환·최정실, 앞의 책, p.31.]

이 같은 실정은 달라진 게 없다. 최근 한 언론에 소개된 관련 내용은 이를 여실히 증거케 한다. “총 200만 큐빅의 미 정부 자료가 쌓여 있는 국립문서보관처엔 30년이 지나 비밀 해제된 한국 관련 자료가 상자로 쌓여 있는 방이 20여 개가 넘는다.……미 국무부 문서 중 한국 정세에 관한 각종 자료 번호는 95이다. 95a는 북한, 95b는 남한 문서이다. 하지만, 누구 하나 들춰 보는 일 없이 썩어만 가고 있다.……일본은 이미 '78년부터 10년 계획으로 미 군정 당시 자료를 마이크로필름으로 만들어 가지고 있다.……자료는 미국이 만들었는데, 이를 이용하는 사람은 일본인이다.” [* 朱庸中 기자, ‘美 기록 챙기는 일본, 소 담 보듯 한 한국’, 「朝鮮日報」, 2000.8.15.(8)]

24) 이종국, ‘한국의 교과서 변천에 대한 연구’, 「출판 연구」 제 11호(서울: 한국출판연구소, 1999), p.89. 교과서를 주제로 다룬 선행 연구에 관해서는; 위의 논문, pp.91~97을 참조할 것. 또, 이종국, 「한국의 교과서」(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2), pp.60~65 참조.

25) 韓國檢認定敎科書發行人協會에서 1963년 5월 30일에 창간. 영문 제호는 *KOREAN TEXTBOOK REVIEW*임.

26) 韓國2種敎科書協會에서 1988년 12월 28일에 창간. 1998년 12월에 한국교과서연구원(2000년 8월에 ‘교과서 연구 재단’으로 변경)으로 발행처를 이관, 2000년 6월 현재로 통권 34호에 이른다.

27) 이에 관한 주요 논저 소개는; 이종국, 앞의 논문, ‘한국의 교과서 변천에 대한 연구’, p. 89 참조.

바로 그런 점이 이 연구를 위한 자료 취재와 관련된 또 하나의 한계점인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미군정기 또는 교수 요목기의 교과용 도서에 관한 집중적인 연구²⁸⁾는 거의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한 정황이야말로 새삼스러운 지적이기조차하다. 더욱이, 보다 구체적인 접근—예컨대 ‘미군정기 및 교수 요목기의 실업과 교과서 편찬’하는 형식으로 논의한 연구는 실제로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이다. 그러므로 어떤 특정 교과 영역의 교과용 도서에 대한 편찬 시말을 알아낸다는 것은 단지 서지 사항만을 밝혀 내는 일에 다름 아니다. 이 때문에 늘 습관적으로 인용되고 있는 서목 배열 자료 중의 한 예를 들면 「문교부 사무인계서」에 수록된 ‘국정 교과서 발행 일람표’²⁹⁾로 굳혀 있음을 본다. 그것도 매우 중요한 통계 자료임에 틀림없지만, 그 이상의 어떤 단서도 시사 받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지나간 사실을 캐는 작업은 다만 한 줄의 기록이라 할지라도 중요하지 않은 게 없겠지만, 적어도 8·15광복 무렵의 그것들이 매우 드문 까닭에 그와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연구 자료를 선뜻 찾아보기 어렵다.³⁰⁾ 그러한 한계가 이 연구를 전개하는 데 있어 극복해야 할 과제인 동시에 자료 취재의 한계점인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증언 취재가 매우 중요한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한계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문제는,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당시 미군정 당국에서 교수 요목을 편성하는 업무에 참여했거나 교과서 관련 정책(실무를 포함하여)에 관여했던 인사들이 거의 타계했고, 또 생존해 있다 하더라도 극히 고령이어서 현실적으로 어렵기는 마찬가지이다. 한국교육과정·교과서연구회는 이 문제를 중시하여 교과서 편찬·발행 행정이나 또는 그 관련 업무에 참여했던 원로·전직 편수관들의 증언을 정리한 「編修의 뒀안길」 등³¹⁾을 냈는데, 이는 매우 요긴한 자료로 평가된다. 이 자료는 참여자들에 의한 수많은 경험 사례 중 일부만을 공개한 것이므로, 향후에 있어 더 이상의 증언을 기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다. 이 또한 취재의 한계를 넘을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물론, 연구자 자신이 반세기 이전의 교육 과정과 교과용 도서에 대한 여러 정황들을 선부르게 추론할 수 없음도 집필 능력의 한계점일 것이다.

28) 최근의 연구는 다음의 것을 들 수 있다.

이종국, ‘정부 수립 이후의 교과서와 그 변천’, 『教科書研究』 제23호(서울: 社團法人 韓國2種教科書協會, 1995.12.), pp.24~29.

29) 文敎部, ‘國定教科書 發行一覽表(1948년 6월 30일 현재)’, 『文敎部事務引繼書』(서울: 文敎部, 1948), pp.184~186.

30) 오옥환·최정실, 앞의 책, pp.30~31 참조.

31) 한국교육과정·교과서연구회 편, 『編修의 뒀안길』(제1집),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1., 『編修의 뒀안길』(제2집),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5, 『인물로 본 편수사—교육 과정·교과서 탐구』,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9.

2. 미군정 교육의 전개와 교과용 도서 편찬

8·15광복과 더불어 미군이 한반도에 진주한 것은 1945년 8월 23일의 일이었다. 그 날, 태평양 지역 미군 총사령부 산하 미제24군단이 인천에 상륙했던 것이다. 이로부터 10일 뒤(1945.9.2.)에는 승자와 패자 간에 전쟁 종결에 따른 문서 수교가 이루어졌다. 맥아더(MacArthur, Douglas) 사령관이 요코하마(横濱) 근해에 진입해 있는 미 해군함 미주리호(Missouri)에서 일본 정부로부터 항복 문서를 접수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 천황 및 일본 정부의 권한은 연합국 최고 사령관의 제한하’에 놓이게 되었다.

맥아더 태평양 지역 점령군 당국은 일련의 명령(CHQ, SCAP 일반 명령 1~8, 10~13호 등)을 통해 사령부의 점령 체제를 갖추었다.³²⁾ 이와 함께 최고 사령부는 경제·과학, 정보·교육, 자원, 보건·후생, 정부, 법률, 체신, 통계·보고, 첩보 등 9개 부문의 특별진용(special staff)을 구성하게 되었다. 이 중, 교과서 등 교육 전반에 걸친 업무를 맡은 부서는 정보·교육 진용이었다.³³⁾ 그러나 이 진용은 연합군 총사령부의 광공간적(廣空間的) 점령지에 적용한 조직이었으며, 이것이 남한 지역에 국지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한 것은 미군 당국이 ‘재조선 일본군’으로부터 항복 문서를 접수한(총독부 제1회의실에서 항복 문서 조인) 9월 9일부터였다.

이에 따라 맥아더 최고 사령부는 포고령 제1호를 발령하고, 미 제24군단장인 존 하지(John R. Hodge) 중장이 재조선 미 육군 사령관으로서 남한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1945년 9월 11일, 하지 사령부는 ‘재한국 미 합중국 군사 정부(United State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로 정식 명칭을 정하고, 진주군의 기능을 군정 체제로 발족시켰다. 이 날, 하지 사령관은 일본인 총독(阿部信行)을 해임함과 동시에, 미 제24군단 제7보병사단장인 아놀드(Arnold, Archibald V.) 소장을 미군정청 군정 장관에 임명했다. 군정 당국의 진용 중 로카드(Lockard, Earl N.) 대위가 학무국장에 임명되어 38선 이남에서의 교육 행정을 관장하게 된 것도 이 때부터였다.

학무를 관장하는 행정 책임자가 임명되었다는 것은 이 땅에서의 교육 정책이 새롭게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요컨대, 또 다른 점령 세력에 의한 교육적 변환을 가져온 첫문이었던 것이다.

32)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Summation of Non-Military Activities in Japan and Korea*, No.1, 1945.9., pp.3~4. 김민환, 「미군정 공보 기구의 언론 활동」(서울: 西江大言論文化研究所, 1991), p.9에서 재인용.

33) 신문, 라디오, 영화, 극장, 종교, 예술 분야의 업무를 겸함.

군정청 학무국은 비록 소수의 요원으로 조직되어 있었으나³⁴⁾, 조선교육위원회(The Korean Committee on Education) 및 조선교육심의회(The National Committee on Educational Planning) 등 한국인으로 구성된 자문 조직을 통한 ‘한국화 정책(Koreanization Policy)’에 힘입어 초창기의 정지 작업을 이행해 나갈 수 있었다.³⁵⁾

이와 관련하여, 이 단위에서는 당시 한국에서의 교육 사업을 관장한 최고 행정 당국인 미군정청 학무국 발족에 따른 편제 변천 과정을 알아보고, 교수 요목의 제정, 그리고 교과용 도서의 편찬·발행에 대한 내용을 차례로 살피고자 한다.

(1) 한국 교육의 새로운 설계

1) 학무 행정의 성립

군정 초기의 교수 요목과 교과서 편찬·발행 행정은 로카드 국장의 소관으로 집행되었는데, 그는 한국 사정에 매우 어두운 인물이었다고 한다.³⁶⁾

미군정 초기의 대 한국 교육 행정은 미육군의 직제에 편제되어 있었던 업무였으며, 그 첫 개시점이 1945년 9월 11일이었다. 이는 단지 학무국장으로 임명된 로카드 대위한 사람만으로 착수되었다고 한다.³⁷⁾ 미군정청은, 처음에는 각 부·국에 한국인 고문을 기용했고, 1945년 11월 16일부터는 실·과의 장으로 미국인을 임명하면서 그들을 보좌하기 위해 한국인 책임자를 두는 등 일종의 이원 조직(카운트 파트) 체계로 편성되어 있었다. 학무국의 경우도, 교육 행정 책임자(로카드 대위)가 한국 실정에 밝지 않다는 사실로 하여 당시의 한국 교육계에서 이름 있는 엘리트들을 그들의 파트너(한국인 책임자)로 기용함으로써 행정 수행상 능률을 꾀하고자 했다.

미군정청은 한국에서의 교육 행정을 이행함에 있어, 여러 응급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래서 발족을 본 단체가 조선교육위원회, 중앙교육계획위원회, 교육원조추진위원회, 조선교육심의회 등이었다.

이 중, 1945년 9월 16일에 발족된 조선교육위원회와 같은 해 11월 23일에 발족을 본

34) 1945년 11월 21일 현재 로카드 국장을 포함하여 22명의 미군 장교로 조직되어 있었고, 12월 19일에는 미군 장교 25명, 한국인 보좌관 27명으로 증원됨.

35) 阿部洋, ‘美軍政期에 있어서 美國의 對韓教育政策’, 『解放後 韓國의 教育改革—美軍政期를 中心으로』(서울: 財團法人 韓國研究院, 1987), pp.4~6 참조.

36) 吳天錫, 『韓國新教育史·下』(서울: 光明出版社, 1975), pp.7~8.

37) USAMGIK(U.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History of Bureau of Education*, From 11 Sep. 1945 to Feb. 1946(등사 자료), p.4 참조. 文教部, 『文教40年史』(서울: 文教部, 1988), p.69에서 재인용.

조선교육심의회의 경우는 군정 초기의 교육 관련 건의를 도맡고 있었던 특설 기구였다. 뿐만 아니라, 이들 두 단체는 당시의 교육 개혁 활동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핵심 조직으로서 많은 일을 해 냈다. 이 중 조선교육위원회는 김성달, 현상윤, 유억겸, 백낙준, 김활란, 김성수, 최규동 등 7명으로 발족하여 1946년 5월까지 약 8개월 동안만으로 그 역할(1945년 11월에 윤일선, 조백현, 정인보가 추가되어 10명으로 구성)이 주어졌으나, 미군정청의 교육 행정 자문 기관으로서 이바지한 바 크다.

그런데 조선교육위원회가 미군정기 최초의 학무국 자문 기관으로서 교육 정책과 그 운영 방침 등에 대한 조언 역할을 수행한 데 비하여, 조선교육심의회의 경우는 보다 광범한 영역에서의 전문적인 자문 조직이었다. 광복 후의 교육 개혁 전반에 걸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행사한 단체였기 때문이다.

조선교육심의회는 한·미 양측 인사 73명(한국인 63명, 미국인 10명)으로 조직되어 있었으며, 이 중 17명(한국인 9명, 미국인 8명)이 학무국의 현역 직원이었다. 이 심의회는 모두 10개의 분과 위원회로 조직되어 있었으며, 1946년 3월 7일 최종 회의를 마칠 때까지 총 105회의 분과 위원회, 20회의 전체 회의를 개최하는 등 거국적인 교육 개혁 추진 회의와 같은 기능을 수행했다. 따라서, 이 심의회가 맡고 있었던 여러 현안 중 교과서 검정, 출판·공급 등과 관련된 과제들을 연구·심의함으로써 교육 현장에서의 수업 기반을 마련하는 등 그 공헌한 바가 크다.

이러한 조직 구성은 군정 개시 직후로 로카드 학무국장이 한국 교육에 대응한 지식 부족과 준비 부족 등의 미흡한 사정을 보강하기 위해 오천석 등을 접촉했던바, 그 조언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오천석은 군정청 학무국의 한국인 책임자(유억겸) 그룹 중 차장으로 참여했는데, 조선교육위원회의 조직과 관련하여 연락 사무 및 통역을 맡는 등 실질적인 산파역이기도 했다.³⁸⁾ 그는 미군정청 내의 한국인 직원들이 정부 수립을 준비하기 위해 과도 정부(South Korea Interim Government, 1947. 6. 3~1948. 8. 14) 체제를 발족시키자, 유억겸 초대 문교부장의 급서(1947. 11. 9)에 뒤이어 2대 문교부장으로 취임하여 군정 후반기의 교육 행정을 수행해 나갔다. 당시 오천석은 우리말 교과서 중에서 특히 중등 교육 과정에 필요로 하는 실업 전문 교과서의 생산 공급이 담보되어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조선중등교과서출판주식회사’³⁹⁾를 설립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38) 關英子, ‘軍政下에 있어서 韓國人의 教育再建 努力’, 阿部洋 編, 앞의 책, pp. 62~63 참조.

39) 조선중등교과서출판주식회사의 창립(1948년 9월 24일, 大韓敎科書株式會社로 개칭, 창립) 창립 사무는 유억겸 초대 문교부장 재임시에 거론되어, 이를 오천석 문교부장이 승계, 창립 정지 작업을 도왔다.* [李鍾國, 「大韓敎科書史: 1948~1998」(서울: 大韓敎科書株式會社, 1998), pp.113~114.]

이렇듯, 미군정청 학무국은 로카드 국장과 유억겸, 오천석 등의 한·미 협력 진용으로 한국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미군정에 의한 학무 행정이 1945년 9월 11일에 사실상 착수된 이후로 3년간에 걸쳐 있으면서, 학무국 편제는 모두 6차의 개편이 있었다. 이렇게 빈번한 조직 개편이 이루어진 것은 협력진의 건의를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거듭 새롭게 대두되고 있었던 정책 과제들을 시급히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학무국의 개편 과정에 대한 개요를 알아보고자 한다. 그럼에 있어, 우선 조선총독부 최종기의 학무국 편제를 살필 필요가 있다고 본다. 미군정청 학무국은 하나의 시대·역사적 단절로부터 출발한—미군이 기존의 일제 당국을 점령한 상태에서 출발하고 있었던 까닭에, 그 전부를 검토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 실제로 학무 행정이 미군정 당국에 의해 집행되기 직전까지는 경우에 따라 총독부의 편제 기능을 묵시적으로 원용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다고 본다.

종전(終戰) 무렵에 조선총독부의 학무국 편제는 한국에서의 식민 교육을 수행하기 위해 학무과, 청년수련과, 종교과, 사회사업과, 시학과(視學課), 기상과 등 6개 과를 두고 있었는데, 이 중 학무과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8개 계로 편제되어 있었다.

학무과—서무계, 초등계, 중등계, 사범계, 전문대학계, 근로동원계, 학교체육계, 편수계⁴⁰⁾

위의 편제에서 근로동원계와 학교체육계의 경우는 이른바 ‘대동아 전쟁’ 수행에 활용할 노동력 동원과 전장(戰場)에 투입할 학병 육성을 꾀할 목적으로 설치한 전략적 기구였다. 따라서, 교과서 편찬 업무와 관련된 직접적인 실무 부서인 편수계를 말석에 편제함으로써 그들의 전쟁 수행 목적에 최우선을 두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1945년 9월 11일 하지 사령관이 일본인 총독(阿部信行)을 해임하고, 학무국을 개설한 때로부터 미군정 말까지의 기구 변천⁴¹⁾ 개요를 살펴보고자 한다.

40) 서울大行政調査研究所, 「韓國行政에 있어서의 文教行政의 位置」, 1978., p.54. 조성일·김영출, 「韓國教育行政史」(서울: 집문당, 1996), p.18에서 재인용.

41) 정태수(앞의 논문, pp. 11~27 참조)는 학무국 기구 개편 과정이 모두 6차, 그리고 학무국이 문교부로 승격(1946.3.29)된 이후의 개편 과정을 4차로 나누어 조사·정리한 바 있다. 각 차시별 연월일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군정청 학무국의 기구 개편 과정

- 제 1차 학무국 기구 개편: 1945. 10. 6
- 제 2차 학무국 기구 개편: 1945. 10. 12
- 제 3차 학무국 기구 개편: 1945. 11. 16
- 제 4차 학무국 기구 개편: 1945. 12. 19
- 제 5차 학무국 기구 개편: 1946. 1. 26
- 제 6차 학무국 기구 개편: 1946. 3. 1

학무국 발족 당시(1945.9.11.): 1명(로카드 대위)

최초의 증원(1945.9.24.): 미군 장교 3명, 사병 3명

이렇게 출발한 학무국은 1945년 10월 6일(발족 시점으로부터 25일 뒤)에 이르러 기구로서의 틀이 마련되었는데, 이는 학무국 개설에 참여하고 있었던 글렌 키퍼(Glenn S. Kiffer) 대위의 시안을 반영한 편제였다. 이를 보면 <표 I-1>과 같다.

<표 I-1> 학무국 기구(1945. 10. 6)

과 명 칭	기 능
① 학무과(Schools)	초·중등 학교, 교사 교육, 의학, 체육, 성인 교육, 음악, 과학
② 편수과(Text Books)	교재 편찬
③ 검정과(Standards)	검정, 면허, 대학 졸업 자격
④ 기획과(Planning)	기획, 교육 심의회 사무
⑤ 문화복지과(Culture & Welfare)	문화제, 종교, 예술, 사회 복지
⑥ 기상과(Meteorology)	관상대
⑦ 총무실(Business Managements)	예산, 회계

자료: USAMGIK, History of Bureau of Education, 1946.3., p.11.

정태수, 앞의 논문, 「美軍政期 韓國 教育行政의 機構와 要員의 研究—美軍側 史料를 中心으로」, pp.11~12에서 재인용.

<표 I-1>의 과 명칭 중 기획과, 문화복지과의 경우는 각각, 문화과, 복지과로 기록된 것도 있어 차이가 있고, 검정과는 1945년 11월 24일자로 학무과에 통폐합되었다는 것이다.⁴²⁾ 또, 이 시기부터 조선교육심의회가 가동되기 시작했다.

1945년 11월 16일에는 미국인과 한국인의 이중 조직이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한국인 보좌 제도’라 할 수 있다.⁴³⁾

1946년 1월 21일, 미군정청 학무국은 부국장(차장) 및 3실 7과로 개편함으로써 처음의 1실 6과(<표 I-1>참조)가 확대 개편되었다. 이 단계는 학무국의 조직이 일단 완성 단계였다고 볼 수 있다. 당시의 개편 내용을 보면 <표 III-3>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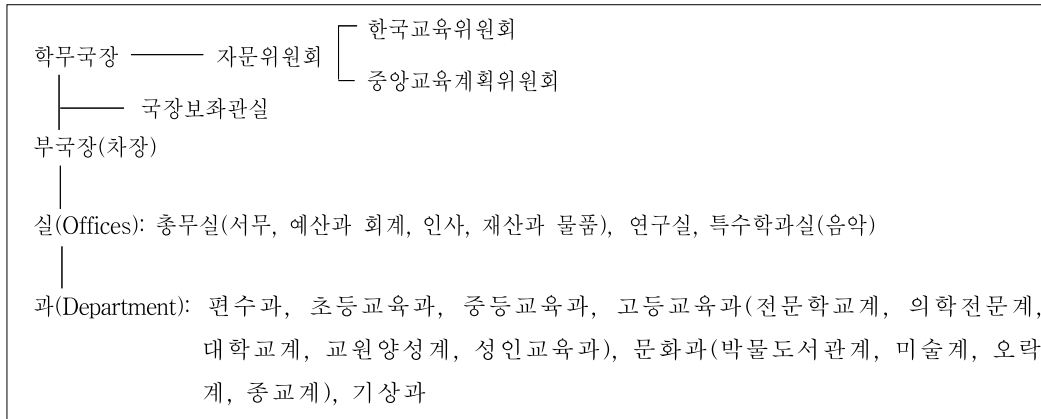
군정청 문교부의 기구 개편 과정

- 제 1차 기구 개편: 1946. 6. 현재
- 제 2차 기구 개편: 1946. 7. 10 시행
- 제 3차 기구 개편: 1948. 4. 1 현재
- 제 4차 기구 개편: 1948. 7. 1 현재

42) USAMGIK, *History of Bureau of Education*, 1946. 3 p. 11. 정태수, 앞의 논문, p. 12에서 재인용.

43) 정태수, 앞의 논문, p. 13.

<표 I -2> 학무국 기구(1946. 1. 21)



자료: 康吉秀, 鄭泰秀, 조성일·김영출 등의 연구를 참고하여 필자가 제작성한 것임.

그러다가 1946년 3월 1일자로 ‘미군정청 학무국 체제하’의 최종 개편(국장 밑에 8개 과만으로 단순 구조화 개편)을 본 다음, 1946년 3월 29일에 이르러 종래의 학무국이 문교부(Department of Education)으로 개칭(군정법령 제64호), 승격되었다. 이에 따라 국(局)을 부(部)로, 과(課)를 처(處)로 그 각각의 부서 명칭을 개칭하게 되는 등 그 편제 승격이 단행된 바 있다.

1946년 7월 10일에는 문교부의 조직이 종래의 3실 7과에서 7국 1관(館) 21과 20계로 개편되었다. 이 조직의 특징은 보통 교육 영역과 고등 교육 및 교과서 행정(편수 행정) 등 3대 영역이 뚜렷하게 설정되었다는 점이다. 개편된 문교부의 조직 중 ‘1관’의 경우는 국사관(國史館)을 말하는 것으로서 “국사의 편찬과 사료의 수집 및 출판을 관장”⁴⁴⁾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편수국에서의 국사 교과서 편찬 활동과는 그 성격이 다른 구조였다.

과거의 편수과에서 ‘국’으로 승격한 편수국의 경우는 예산 집행을 직할할 수 있도록 국 내에 경리과를 두고, 편수 업무의 직접 부서인 편찬과와 번역과를 두었다. 교육 과정에 관련된 업무는 <표 I -3>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학교급별 관장 부서인 보통교육국, 고등교육국에서 담당케 했으므로, 그에 따른 교과서 편찬·발행 업무는 편수국 소관으로 더욱 보장되었다.

7월 10일자로 개편된 문교부의 기구 중 보통교육국, 고등교육국, 편수국의 편제를 보면 <표 I -3>과 같다.

44) 文教部調査企劃課, 「文教行政概況」(서울: 文教部調査企劃課, 1947.1.), p. 57.

<표 I-3> 문교부 기구 중 보통교육국, 편수국의 편제(1946. 7. 10)

국	과 / 계	분 장 사 무
· 보통교육국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 중학교계, 실업중학교계	초·중등 교육에 관한 입학 등 행정 지 도, 통계, 설립과 폐지, 인가, 법인, 의무 교육, 장학 위원회에 관한 사항
· 고등교육국	사범교육과 — 사범학교계, 사범대학계 대학교육과 특종교육과	사범 학교·전문 대학에 관한 입학 등 행정 지도, 설립과 폐지, 교과, 법인, 검정 고 시, 자격, 재교육에 관한 사항
· 편수국	편찬과 — 초등 교과서계, 중등 교과서계 번역과 정리과	교수 요목, 교과용 도서, 참고 도서, 번 역, 발행, 검정

자료: <표 2> 와 같음.

<표 I-3>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과도 정부 시기의 문교부 편제는 학교급별 분장 사무가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편수국의 직제를 보면 교과용 도서와 관련된 부서로 편찬과와 번역과를 두었는데, 이는 1946년 3월 1일자의 학무국 기구 개편 중 편수과 조직에 출판계, 편수계, 번역계를 두었던바, 이로부터 4개월 10일이 지난 뒤(1946. 7. 10)에 보다 확고한 사무 분장이 갖추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위의 3개국 직제는 정부 수립 때까지 유지된 상태에서 과학기술교육국(1948. 7. 1 신설)이 신규 편제되었다.

특히, 과학기술교육국의 신규 편제는 주목되는 진전이였다. 이 기구는, 농업·공업·상업·가정교육과를 두어 관련 분야의 전문 교육을 관장케 함으로써 국가 기간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취지에서 발족되었다. 이는 미군정기(과도 정부기를 포함하여) 전반에 걸쳐 일제 식민지 시대에 사용하던 실업 교과의 교수-학습 잔재(교과서의 경우도 일제 때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었음)를 불식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에서 새 기구로 편제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미군정기의 학무 행정은 그 행정 당국의 조직이 빈번하게 개편되는 등 시행 착오적인 실험과 모색이 거듭된 바 있다. 그런 가운데 핵심 진용인 편수·학무 관련 요원들이 교육 과정과 교과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고, 이 때의 한·미 협력 진용은 많은 일을 해 냈다. 그러한 과정에서 이들은 상호간에 직무 공조 이상의 어떤 특별한 관계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다. 예컨대, “군정은 군정이다. 미국 사람들이 한

국 사람한테 다 넘겨 주는 이원제가 어디 있었던가?”⁴⁵⁾라 비판한 의견도 있어, 이원 조직을 운영하는 데 따른 배타적 갈등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다고 본다.

어쨌든, 여러 연구들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당시의 요원들이 다져 놓은 기반은 정부 수립 이후의 문교 행정에 큰 영향을 끼친 것이 사실이다. 특히, 한국인 요원들은 뒷날에도 직접적인 당국자로 참여했거나 협력자로 조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과도 정부 시기에 문교부 요직자로 직무한 인사들 중 편수국, 학무국 요원들을 보면 <표 I-4>와 같다.

<표 I-4> 과도 정부 문교부 요직자(편수국, 학무국 요원, 1947.6.현재)

요 직	한국인 직원	미국인 고문
편수국	최현배(崔鉉培)	Paul S. Anderson
경리	이승우	
편집	이병기(李秉岐)	Warren W. Smith
번역	장지영(張志暎)	
시각 교제		George Henerson
학무국	오천석(吳天錫)	
고등 교육	정준모(鄭準模)	Dr. Edwin L. Miller
중등 교육	배희성(裴熙星)	P.N. Fugina, Paul Goodman
초등 교육	이호성(李浩盛)	Granville L. Leavitt 대위
사범 교육	사공환(司空桓)	Richard Werth
사범 교육	김석수	
교원 강습소	한세희(韓世熙)	
의학 교육	김명선(金明善)	Chang Kim 대위

자료: P.W.Shay to M.T. Orr, Report of Activities in Korea, June, 20. 1947, pp.5~6 (‘Traninor Papers’ Box NO., 34.). 關英子, 앞의 논문, ‘美軍政下 韓國人의 教育再建 努力’에서 재인용.
인명은 정태수(앞의 논문, ‘美軍政期 韓國 教育行政의 機構와 要員의 研究’, pp.23~24)가 바로 잡은 것을 따랐음.

<표 I-4>에 제시되어 있듯이, 학무국 요직자는 한국인 직원 8명에 미국인 고문 5명이고, 편수국 요원은 한국인 4명에 미국인 고문 3명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한국인 직원 수에 비해 미국인 고문관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1 대 1의 고문관 배치 기능을 지양하여 관련 업무 간에 유기적인 체제를 수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된 데는 미국인 스태프측에서 조언자로 후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45) 김용만 외, 「한국 교육과정 변천에 관한 연구」(서울: 한국 교육과정·교과서연구회, 1998), pp. 35~36(심태진 씨의 구술 기록 인용 중에서)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미군정청 학무국에 의한 교육 행정의 성립은 한국에서의 미국식 교육을 끌어들이게 한 새로운 교육 지배 권력으로 자리잡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여기에 상호 작용을 수월하도록 역할한 것이 일련의 지미파(知美派) 인사들이었다. 미군 측에서는 그들과 공조 관계를 굳혀 가면서 밀접한 협력 체제를 구축할 수 있었다.⁴⁶⁾

미군정기의 미군정청 학무국·문교부에 의해 추진된 한국 교육을 말하여 ‘문화적 제국주의와의 상관성’으로 보는 시각⁴⁷⁾과 ‘민족·민주 교육의 내세움’⁴⁸⁾ 등 여러 관점으로 이해되고 있다. 요컨대, 미국이 미군을 통해 실행한 교육 통치는 기존의 지배 세력이 또 하나의 지배 세력으로 교체된 시대사적 징험이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여러 제도를 정비하는 등 정부 수립에 대비한 전열 정비에 막중한 영향을 끼쳤다. 이 같은 사실은 우리의 현대 교육사에 여전히 굵은 선으로 남아 있다.

2) 교수 요목의 제정과 그 적용

① 교수 요목의 제정

교수 요목이란, 교수-학습 활동이 이루어지는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칠 내용을 교과 편제에 따라 교수할 목적으로 작성한 일련의 수업(授業) 요목을 말한다.

‘교수 요목’이란 말은 일제 때부터 쓰던 것으로 ‘교육 과정’과 같은 뜻을 가진다. 일정(日政)이 사라졌는데도 오랫동안의 용어 관행을 바꾸기 어려웠던 모양이다. 일본이 맥아더 사령부의 점령하에 있었으면서도 과거의 ‘교수 요목’을 ‘교과 과정’이라는 말로 바꾸었음에 비추어, 우리의 그것은 달라진 게 없었으니 언뜻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기도 하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미군정 당국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교육에 관한 방침을 최초로 발표한 것은 1945년 9월 17일 일반 명령 제4호(신조선의 조선인을 위한 교육)였다. 교수 요목기의 첫 출발이 이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각 도에 포고한 이 행정 명령은 전국의 공립 소학교를 9월 24일에, 또 중등 학교의 경우는 10월 1일부터 개학할 것을 지시하고, 개학 이후에 적용할 ‘교훈(敎訓) 용어’와 ‘과정(課程)’에 대한 원칙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 명령(일반 명령 제4호)은 약간의 수정을 거쳐 9월 29일에 법령 제

46) 이광호, 앞의 논문, ‘미군정기의 교육 정책’, pp. 520~521 참조.

47) 한준상, ‘미국의 문화 침투와 한국 교육—미군정기 교육적 모순 해체를 위한 연구 과제’, 『解放前後史의 認識·3』(서울: 한길사, 1989), pp.541~543 등 참조.

48) 홍웅선, 『광복 후의 신교육 운동—조선교육연구회를 중심으로』(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1), pp. 215~227 등 참조.

· 연구자 간의 견해 차이에 관한 내용은; 위의 책, pp. 23~44 참조.

6호 공포로 이어졌다. 이에 나타난 관련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 4조 교훈의 용어

조선 학교에서의 교훈 용어는 조선어로 함. 조선어로 상당한 교훈 재료를 활용할 때까지 외국어를 사용함도 무방함.

제 5조 과정

조선의 이익에 반하는 과목은 교수하거나 실습하지 아니할 사.

위의 내용은, 교수 요목(교과서 사용을 포함하여)과 관련된 포괄적인 지시로 되어 있지만, 한국에서의 교육 활동이 열리게 된 매우 중요한 정책적 단서를 제공했다.

군정법령 제 4호 및 제 6호는 학교(공립 소학교 및 사립 학교) 개학에 따른 수업 재개, 학령 아동의 등록, 인종 및 종교적 차별 철폐, 교훈 용어(교수 용어) 및 교과서 사용 문제, 그리고 국익(國益)에 반하는 수업의 금지 등에 관한 응급 조치를 골자로 하고 있었다.

군정청 학무국은 10월 21일 학무통첩 제352호로 ‘학교의 설명과 지시’를 공포했는데, 이에서도 앞서 지시(군정법령 제6호)한 응급 조치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보완, 설명했다. 따라서, 이 통첩을 통해 교수 용어와 교과 과정에 대한 지침을 수정 형식으로 지시한 바 있다.

이 중, 제도에 관한 전면적인 개편은 후일로 미룰 것임을 밝히고 당분간 기존 제도에 따른다고 하여, 임시 변통으로서의 상황적 적용이 요청된다는 취지를 밝혔다. 그런 가운데 교과목 및 그 내용도 「일본어」를 「한국어」로 고치고, 역사 교과의 경우 일본사 중심에서 한국사 중심으로 고치는 등 최소한의 수정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다.⁴⁹⁾ 따라서, 교과서 편찬·인쇄의 경우는 보다 시간을 요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선 “어떤 교과는 교과서 없이, 그리고 다른 교과는 일본어로 된 교과서를 교사용으로 사용할 것”⁵⁰⁾ 등에 관해서도 지시되어 있다.

이와 같이, 군정 초기의 교수 요목—1946년 9월 신학기가 시작되기 직전까지는 그 교과 편제에 있어, 경우에 따라 일제 시대에 사용하던 것을 답습 내지는 묵인되고 있었던 것이다. 예컨대, ‘수신’이 ‘국민’으로, ‘일본어’가 ‘한국어’로, ‘도화’를 ‘도화 공작’으로, ‘직업’ 교과가 ‘실과’로 대체되는 등 명칭 전환이 있었을 뿐이다.

미군정기 및 교수 요목기에 적용된 교육 과정 편제를 조사한 대부분의 연구들을 보면, 위와 같은 편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다른 것도 있다. 예컨대, 아베(阿部洋)의 연구가 그런 경우인데, 그는 학무통첩 제 352호에 나타난 초·중등 학교의 교과 과정을

49) 阿部洋, 앞의 논문, p. 9.

50) 阿部洋, 앞의 논문, 같은 면.

<표 I -5>, <표 I -6>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표 I -5>, <표 I -6>에 나타나 있듯이, 1945년 10월 21일 현재로 ‘수신’, ‘조선어’ 등의 교과명이 수정되지 않고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단지 ‘일본사’만이 ‘역사’로 개칭되어 있을 뿐이다. 나머지 교과목들도 일제 식민지 시대 말기의 그것과 같은 유형임을 알 수 있다.

한편, 교과 과정 편제와 관련하여 최초로 기사화된 「매일신보」(1945년 9월 22일자)에 의하면, 그 편제 중국어, 공민, 역사, 지리를 넣은 것⁵¹⁾이 보인다. 이는 향후로 해당 교과목의 교과 명칭(교과서 명칭을 포함하여)이 그렇게 개칭될 것(1946년 9월 신학기에 현실화됨.)이라는 사실을 당국으로부터 취재 보도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왜냐 하면, 일반 명령 제4호(1945.9.17.) 및 군정법령 제6호(1945.9.29.), 그리고 학무통첩 제352호(1945.10.21.)가 모두 일괄된(응급 조치 차원에서 당분간 기존의 것을 사용함도 무방) 지시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로 미루어, 과거 일제 식민지 시대에 사용하고 있었던 교과 명칭이 확고하게 개칭된 것은 1946년 9월 1일부터 시작된 신학기 때였다고 볼 수 있다.

<표 I -5> 국민 학교 매주 교수 시간표(1부제의 경우, 1945.10.21. 현재)

과 정 \ 학 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교 과 서
수 신	2	2	2	2	2	2	준 비 중
조 선 어	8	8	8	7	6	6	준 비 중
역 사	—	—	—	—	2	2	준 비 중
지 리	—	—	—	1	2	2	없 음.
산 술	6	6	7	5	5	5	구(4~6 교사용)
이 과	—	—	—	3	3	3	구(4~6 교사용)
체 조	4	4	5	3	3	3	없 음.
음 악	—	—	—	2	2	2	없 음.
습 자	—	—	1	1	1	1	없 음.
가 사	—	—	—	3(여)	3(여)	3	없 음.
재 봉	—	—	—	3(여)	3(여)	3	없 음.
도 화	2	2	2	3(남)	4(남)	4(남)	없 음.
수 예	—	—	—	3(여)	3(여)	3(여)	없 음.
직 업	—	—	—	3(남)	3(남)	3(남)	없 음.
				1(여)	1(여)	1(여)	없 음.
계	22	22	25	30	33	33	

자료: 미육군사령부 군정청, 학무통첩 제352호 ‘학교의 설명과 지시’, 1945.10.21. [GHQ/SCAP 문서, CHS (A) 02263(CHS는 Civil Historical Section, 민간자료국의 약칭. (A) 및 02263은 Micro fiche 번호임.)] 阿部洋, 앞의 논문, p.9에서 재인용.

51) 「매일신보」, 1945.9.22. 국사편찬위원회, 「자료 대한민국사·I」(서울: 탐구당, 1968), pp.136~137에서 재인용. 「文教史」, pp.84~86 등 참조.

<표 I -6> 중학교 매주 교수 시간표(남자의 경우, 1945.10.21. 현재)

과 정 \ 학 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교 과 서
수 신	2	2	2	2	준 비 중
조 선 어	7	7	5	5	준 비 중
역 사	3	3	4	4	준 비 중
지 리	4	4	4	4	구(교사용)
수 학	4	4	5	5	구(교사용)
과 학	5	5	5	5	구(교사용)
박 물 학	3	3	3	3	없 음.
영 어	1	1	2	2	없 음.
체 조	1	1	—	—	없 음.
음 악	1	1	1	1	없 음.
습 자	1	1	2	3	없 음.
도 화	32	32	34	34	
직 업					
계					

자료: 阿部洋, 앞의 논문, p. 10.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미군정청에 학무국이 개설(1945. 9. 11)되고 나서 조선교육위원회(1945. 9. 16)와 조선교육심의회(1945. 11. 23)의 발족이 이어졌던바, 이 단체들은 초기의 교육 관련 명령 또는 법령 공포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왜냐 하면, 두 단체⁵²⁾의 발족이 위의 명·법령 및 학무통첩 공포 시점과 각각 1개월 전후로 근접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히 조선교육심의회의 경우는 응급 조치식의 교수 요목 및 교과 편제를 시급히 개혁해 마땅하다는 의견이 전체 위원들 간에 일치하고 있었으므로 서둘러 연구·심의 작업에 착수한 바 있다.

그 결과로 매듭을 본 것이 응급 조치식 교과 편제가 적용된 지 1년 뒤인 1946년 9월 1일자로 개정 시행된 초·중등 학교의 교과 과정 편제였다. 이에 관해서는 뒤의 제재 [2-(1)-2-② 교수 요목의 적용] 에서 서술하기로 한다.

미군정 초기에 있어, 교과 편제와 교수 요목을 정하는 일은 학무국의 초등교육과와 중등교육과⁵³⁾에서 관장했다. 그런 가운데 학무국의 자문 조직인 조선교육심의회에서 시

52) 광복 직후의 교육 관련 단체로는, 최초로 발족을 본 조선교육위원회와 조선교육심의회를 비롯하여 모두 23개에 이르는 ‘각종 교육 위원회’가 존재했으며, 그 총 회원 수만도 1,469명이었다(1946년 12월 말 현재). 이에 관해서는; 文教部調査企劃課, 「文教行政概況」(서울: 文教部調査企劃課, 1947.1.), p.60 참조.

53) 1945년 12월 19일 초등교육계에서 초등교육과로, 중등교육계에서 중등교육과로 승격 개편됨.

안을 만든 다음 이를 당국에 제출하는 체제였는데, 이 심의회의 10개 분과 위원회 중 제 4, 5분과위원회가 교과 편제 및 교수 요목 초안을 연구·심의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다. 이들 두 위원회의 위원 조직과 심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제 4분과위원회

위 원: 이호성, 이규백, 이강원, 이극로, 이승재, 정석윤, F. M. Milan 중위

심의 내용: 초등 교육의 목표, 학과목·교과 과정, 교수법, 수업 편성—개인차의 적용, 의무 교육, 수업일수·학사 일정

· 제 5분과위원회

위 원: 조동식, 고헌경, 이병규, 송석하, 서원출, 이홍중, W.S.Biscoe 중위

심의 내용: 중등 교육의 목표, 학과목·교과 과정, 교수법, 수업 편성⁵⁴⁾

위의 위원들 중 이승재, 이홍중, 정석윤, 밀란 중위, 비스코 중위는 학무국 직원이었고, 나머지는 재경 교육계 인사들이었다. 특히, 한국인 위원들은 현직 교육계 인사이거나 그 경력자들이어서 소관 업무에 대한 문제 접근과 소재 파악에 전문적인 식견을 발휘했다. 이들은 미군정청 학무국과 직접적인 업무 연계를 유지함으로써 교과 과정 편성 및 교수 요목 관련 현안을 신속히 처리해 나갔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1946년 7월 10일에 ‘문교부사무분장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편수과가 편수국으로 승격되었고, 분과 위원회 활동도 더욱 격상된 상태에서 활력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당시 편수국의 분장 사무를 보면 다음과 같다.

제 9조 편수국에서는 다음의 사무를 장리(掌理)함.⁵⁵⁾

- ① 교수 요목 결정에 관한 사항
- ② 교과용 및 일반 도서 편찬에 관한 사항
- ③ 교과용 참고 도서 편찬에 관한 사항
- ④ 도서 재료 수집 및 편찬에 관한 사항
- ⑤ 교과서 및 도서 고급 문헌의 번역에 관한 사항
- ⑥ 교과서 발행 및 공급에 관한 사항
- ⑦ 교과서 발행소 및 판매소 지정에 관한 사항
- ⑧ 교과서 교구 및 학용품 검정 및 인가에 관한 사항

이로 볼 때, 교수 요목 결정에 관한 사항은 교과서 관련 사무와 더불어 편수국의 소관 업무 중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분장 규정에 의하면 종래의 초등교육국과 중등교육국을 통합하여 ‘보통교육국’으로 편제하고(그 예하

54) 정태수, 「미군정기 한국교육사 자료집(상)」(서울: 홍지원, 1992), pp. 300~306 참조.

55) 文敎部調査企劃課, 「文敎行政概況」(서울: 文敎部調査企劃課, 1947.1.), p. 5.

에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를 둠.), ‘학교 교과 내용에 관한 사항’⁵⁶⁾을 소관케 함으로써 교수 요목 사무를 협력 직무로 분리시켰다. 그러므로, 학급·학교의 교수 요목 결정에 관한 사무는 편수국이 전담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 교수 요목의 제정 결과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었는지, 그 실태를 다음의 제재에서 알아보고자 한다.

② 교수 요목의 적용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교수 요목의 제정은 일반 명령 제4호 및 군정법령 제6호에서 그 첫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이것이 보다 구체적인 ‘설명과 지시’(학교의 설명과 지시) 형식으로 공포된 것이 학무통첩 제352호(1945. 10. 21)였다.

그런 가운데, 초·중등 학교의 ‘매주 교수 시간표’가 마련된 바 있다. 이 무렵, 약 1개월을 전후하여 조선교육위원회와 조선교육심의회가 발족되어, 교수 요목(교과 편제에 따른 교수 요향)에 관한 연구·심의 활동이 이루어졌고, 그에 따른 결과가 문교 행정에 반영되는 등 현안 과제가 실현된 바 있다. 특히, 1946년 9월 1일에 개정, 공포된 초·중등 학교 교과 과정은 특별히 중요한 성과였다. 이는 그 동안에 임시 조치로 적용되어 왔던 교과 편제와 시간 배당표를 전면 개정한 것이다. 이것이 이룩된 동인은 1946년 2월 21일 문교부 편수과(1946년 7월 10일자로 편수국으로 승격 개편됨.)에서 조선교육심의회에 의뢰, 교수요목제정위원회를 별도로 조직하여 연구, 성안한 요목집(각과 「교수요목집」을 말함.)에 기초하고 있었다. 이 요목집은 1947년 1월 10일에 일단 완성〔국어, 산수(수학), 사회 생활, 이과 등 4개 보통 교과목 교수에 관한 교수요목집〕을 보게 되는데, 1946년 9월 1일부터 적용된 초·중학교의 교과 과정에 따라 교수할 내용을 제시한 것으로 되어 있다.

참고로, ‘국민 학교 산수와 교수 요목’(제1학년)에 제시된 첫째 번 요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20 이하의 정수(28시)⁵⁷⁾

(1) 10까지의 세기

1. 하나, 둘, 셋...으로 세기
2. 방향, 위치
3. 일, 이, 삼으로 세기
4. 명수(장, 자루, 권, 사람, 마리)

56) ‘文教部事務分掌規程’(1947.7.10.), 제5조 1항의 (6).

57) 軍政廳文教部, 「초·중등학교 각과 교수 요목집」(서울: 朝鮮敎學圖書株式會社, 1946.11.), p. 1.

5. 순서 수
6. 숫자쓰기
7. 수의 대소, 계열
8. 공간 관념의 초보(동그라미, 네모, 세모)
9. 2, 4, 6, 8, 10의 계열
10. 도표 작성 초보
11. 통계 사상(統計思想)의 초보

위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습 내용에 대한 유도 기능에 비중을 두었다기보다는 교수 기능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학습 요목’이 아닌 ‘교수 요목’으로서의 교과 과정이 지닌 기본적 특질 때문일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교수 요목의 교육 과정이 ‘지식 중심’에 그 지향점을 두었으므로, 그와 같은 열개로 구조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시대·사회적으로 워낙 시급한 성취 목표가 교육 현안이었던 때문에, 피교육 세대로 하여금 많은 것을 기대하고자 한 건인 심리가 밑자락되고 있었던 것이다. 예컨대, 초등 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계 사상’ [위의 요목 1-(1)-11] 과 같은 고급 수준의 지식 내용을 교수하도록 요구한 것도 그러한 사실을 반증해 주고 있다.

이 같은 문제 인식은, 한편으로 ‘생활·경험 중심’의 교수 요목을 피하는 전향적인 체계로 시도된 바 있는데, 그것이 곧 ‘사회 생활(social studies)’ 교과⁵⁸⁾였다. 「사회 생활과 교수 요목집」에 의하면 ①교수 요목, ②교수 방침, ③교수 요목의 운용법, ④교수에 관한 주의, ⑤사회 생활과의 교육 내용 구조 등이 제시되어 있다. 이 중, ⑤ 항은 학년별 교과목을 설정한 것인데, 1학년은 ‘가정과 학교 생활’, 2학년은 ‘고장 생활’, 3학년은 ‘여러 곳의 사회 생활’, 4학년은 ‘우리 나라의 생활’, 5학년은 ‘다른 나라의 생활’, 6학년은 ‘우리 나라의 발달’로 되어 있다.

여기서, ‘우리 나라의 발달’의 경우는 그 명칭 사례로 볼 때 최초의 교과명이었다. 요컨대, 우리 나라의 역사 전개를 보통 명사인 ‘국사(national history)’가 아닌 ‘우리 나라의 발달’로 보고자 했던 것이다.⁵⁹⁾ 이 교과는 6학년 과정에 과하는 것으로서 “총괄적이며 결속(結束)적이며 발전적으로 우리 나라의 발달을 지향하기 위해”⁶⁰⁾ 설정되었다.

이상과 같은 일련의 교과별 교수 요목 적용에 관한 사무는 1946년 2월 21일에 발족된

58) 이에 관해서는; 洪雄善, ‘美軍政下 社會生活科 出現의 經緯’, 「教育學研究」 제30권 제1호(서울: 韓國教育學會, 1992.6.), pp.111~128 참조.

59) 李鍾國, ‘우리 나라의 발달 1 編纂發行에 대한 考察—國史教科書 發行史를 통해 본 本書의 位相을 中心으로’, 韓國出版學會 編, 「'85出版學研究」(서울: 汎友社, 1985), p. 81.

60) 문교부 편수국, 「편수시보」 제1호(서울: 조선서적인쇄주식회사, 1950.2.), p. 44.

조선교육심의회의 교수요목제정위원회(학교급별, 교과별 분장)에 의해 진행되었다. 그러나 초·중등 학교의 보통 교과(국어, 수학, 사회 생활, 이과 등)에 관한 교수 요목은 짧은 기간 안에 끝마칠 수 있었지만, 실업 전문 교과에 관한 것은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이에 대하여 군정청 학무국의 중등 교육 담당 직원이었던 배희성(裴熙晟)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실업 학과의 교과에 대한 것은 교과목 수가 대단히 많을 뿐만 아니라, 과거 왜정 시대의 실업 교육에 있어서 우리 나라 사람들에게 진학의 자유가 없었던만큼 전공한 사람이 극히 적었으므로, 이 일을 완수하기에는 힘도 많이 들었다. 그리하여 이 요목은 단기 4281년(1948) 10월에 겨우 완성을 보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되고 보니 교과용 도서도 따라서 늦어질 밖에 도리가 없었다.⁶¹⁾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교수 요목을 제정하는 한편으로 이미 완성된 것은 교수-학습 활동에 적용하도록 조처하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당시 교육 행정 전반에 걸쳐 두루 그러했지만, 한·미 양측 스태프 간에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했던 것이다. 예컨대, ‘우리 나라의 발달’에 대한 교수 요목을 교과서 편찬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다음과 같은 증언이 주의를 끌게 한다.

(전략) 당시 국가 사정으로 말하면 우리의 독립이 아직 달성치 못한 미국 군정하였으므로, 그 내용 취재에 대하여 미인(美人)들로부터 여러 가지 말썽이 있었던 관계로 집필자로서는 한 때 껴고단한 처지에 있기도 하였다. (중략) 모국인(某國人)으로부터 너무나 민족혼을 고취시켰다는 비난을 들어, 이로 말미암아 다소 교과서가 늦게 세상에 나온 것만은 집필자로서는 불쾌한 생각을 가지지 아니할 수 없었다.⁶²⁾

이로 미루어 볼 때, 미군정기에서의 교수 요목 적용은 학무국에 배치된 미국인 관리들로부터 노골적인 간섭을 받았음이 드러나고 있다. 그들은 결정권자인 동시에 일종의 검열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예컨대, 국민 학교 교과 과정 등 각급 학교의 교과 편제도, 실질적인 작업을 맡고 있었던 조선교육심의회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미군정청에 제출하여 검토·심사 과정을 거친 다음 확정 발표하는 순서였다.

이렇듯, 여러 어려움 속에서 1946년 9월 각급 학교 교과 과정이 이룩될 수 있었다. 당시 발표된 국민 학교 및 중학교 교과 과정표를 보면 <표 I-7>, <표 I-8>, <표 I-9>와 같다.

61) 배희성, ‘국정 및 김인정 도서에 대하여’, 위의 책, 「편수시보」 제 1호, pp. 3~4.

62) 문교부 편수국, 위의 책, 「편수시보」 제1호, p.43.

<표 I -7> 국민 학교 교과 과정표(1949. 9. 현재)

교과목	제 1학년		제 2학년		제 3학년		제 4학년		제 5학년		제 6학년	
	시간	내용	시간	내용	시간	내용	시간	내용	시간	내용	시간	내용
국어	360	독·서·화·작	360	같음	360	같음	360	같음.	320	독·화·작·서(철필)	320	같음
사회 생활	160	공민·지리·역사·직업	160	같음	200	같음	200	같음.	남240 여200	같음	남240 여200	같음
이과		자연 관찰		같음		같음	100	이과 일반	160	같음	160	같음
산수	160	산수 일반	160	같음	200	같음	200	같음.	200	같음	200	같음
보건	200	체육·위생·휴양	200	같음	200	같음	200	같음.	200	같음	200	같음
음악	80	창가·감상·기초연습	80	같음	80	같음	80	같음.	80	같음	80	같음
미술	160	도화·공작	160	같음	160	같음	160	도화·공작·습자(모필)	남160 여120	같음	남160 여120	같음
가사									여 80	재봉 초보 가사 초보	여 80	같음
계	1,120 (28)		1,120 (28)		1,200 (30)		1,360 (34)		1,360 (34)		1,360 (34)	

<참고> 40분 내지 45분 수업에 10분 내지 15분 휴식으로 하는 획일적 방식을 피하기 위하여 본 표 <표 I -7>에서는 1주간의 총 시간 수만을 표시함. 단, 참고상 40분 단위로 본 시간 수를 괄호에 표시함.

자료: 文敎部調査企劃課, 앞의 자료, 「文敎行政概況」, p.12.

<표 I -7>에서 보면 ‘국어’ 교과를 크게 강화한 것과 새로운 교과로 ‘사회 생활과’의 등장이 주목된다. 따라서, 과거의 가사, 재봉, 수예 등을 ‘가사’로 통합했으며, ‘도화’의 경우는 ‘미술’로, ‘체조’가 ‘보건’으로 교과 명칭이 각각 바뀌었는데, 이는 가장 뚜렷한 변화라 할 것이다.

수업 시간의 경우는 종래에 22~33시간이던 것이 28~34시간으로 늘어 최소 시간수에서 5시간, 최대 시간수에서 1시간을 증가 배당함으로써 수업 효율을 상승시키고자 했다.

<표 I -8> 및 <표 I -9>에 정리된 중학교 교과 과정표를 보면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이렇게 양분 체계로 그 편제를 확정된 상태에서 ‘공민’, ‘역사·지리’를 ‘사회 생활과’로 묶고, 종래의 ‘체조’를 ‘체육 보건’으로 개편했다. 또, 초급 중학교 과정에서 선택 교과목 중 ‘국어’와 ‘과학’을 ‘특수 과목’이라 하여 1시간씩 배당함으로써 선택의 여지를 보완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이와 같은 교과 및 시간 배당 형식은 광복 후의 교육 과정 편성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그런데 고급 중학교 과정(당시 중학교 4, 5, 6학년 과정)에 선택 교과목으로 중어,

<표 I -8> 중학교 1, 2, 3학년(초급 중학교) 교과 과정표(1946. 9. 20)

교과목 \ 학년		제1학년	제2학년	제3학년
필수 과목	국 어	5	5	5
	사회 생활	5	5	5
	수 학	5	5	0
	일반 과학	5	5	5
	체육 보건	5	5	5
	실 과	2	2	2
	음 악	2	2	2
계		29	29	24
선택 과목	수 학	0	0	5
	외 국 어	5	5	5
	음 악	1—2	1—2	1—2
	미 술	1—2	1—2	1—2
	수 공	1—2	1—2	1—2
	실 업	0—10	0—10	0—15
특수 과목	국 어	1	1	1
	과 학	1	1	1
계(선택+특수)		10	10	15
합 계		39	39	39

- <참고> 1. 선택 과목 중 수학, 외국어는 3년 수료 후 상급 학교에 진학하려는 생도에게 필수과로 함.
 2. 외국어는 영어로 함.
 3. 실업은 농업, 상업, 공업, 가정, 자동 기관, 인쇄 및 기타 실업에 관한 학과로 함.
 4. 선택 과목은 문교부장의 허가를 요하며, 그에 대한 설비 및 교수 내용은 국정 표준에 의할 것.
 자료: 文敎部調査企劃課, 앞의 자료, p.14.

불어, 노어, 독어가 포함되어 있으나, 사실상 불어와 독어 정도만 교수되고 있었을 뿐이다. 이것이 에스파나어, 일본어로 확대하여 선택의 폭을 넓히게 된 것은 제3차 교육과정기(1973. 2~1981. 12) 후반부터 실현되었다.

미군정기에 있어, 특히 조선교육심의회를 중심으로 한 연구·심의 결과가 교과 편성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면서, 일제 식민지 시대의 잔재는 눈에 띄게 제거되었다. 요컨대, ‘가르치는 현장’에서의 개혁된 대안이 뒷받침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교수요목의 제정과 그 적용에 따른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제 식민지 시대의 교육 관행을 폐지하고, 체계적인 교수 계획인 교수요목을 제정, 적용함으로써 지식 내용을 주입하는 데 따른 방향을 유도하고자 했다.

둘째, 초·중등 교과 편성에 공통으로 중시한 것이 국어 교과였다. 한글 학습을 통한

민족 교육 실현에 주안점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셋째, 사회 생활과를 신규 교과목으로 도입함으로써 교수-학습 내용의 시야를 넓히고, 국제 사회 속에서 한국과 한국인의 위상을 생각해 보도록 유도했다. 이 교과는 미국의 영향을 받아 새롭게 편제한 것으로 한국의 교육 과정사에 있어 중요한 획을 그었다.

<표 I -9> 중학교 4, 5, 6학년 (고급 중학교) 교과 과정표(1946. 9. 20)

교과목 \ 학년		제 4학년	제 5학년	제 6학년
필수 과목	국 어	3	3	3
	사회 생활	5	6	5
	수 학	5	0	0
	과 학	5	5	0
	체육 보건	3—5	3—5	3—5
	외 국 어	0—3	0—3	0—3
	계	21—26	16—21	11—16
선택 과목	국 어	2	2	2
	사회 생활	(5)	(5)	(5)
	수 학	0	5	5
	과 학	0	0	5
	외 국 어	5	5	5
	음 악	1—3	1—3	1—3
	미 술	1—3	1—3	1—3
	심 리	0	0	5
	실 업	5—18	5—20	5—25
합 계		39	39	39

- <참고> 1. 필수 과목 중 외국어는 영어로 하며, 선택 과목 중 외국어는 중어, 불어, 노어, 독어로 함.
 2. 선택 과목 중 사회 생활은 특수 경제 지리를 과하되, 매주 5시간씩 1년간 4, 5, 6 어느 학년에서든지 할 수 있으며, 또 어느 생도나 이를 선택할 수 있음.
 3. 실업은 농업, 상업, 공업, 가정, 경제, 기타 지방의 실정에 적합한 학과로 함.
 4. 선택 과목은 문교부장의 허가를 요하며, 그에 대한 설비 및 교수 내용은 국정 표준에 의할 것.
 5. 1주 15시간 이상의 실업을 선택하는 자에 한하여 체육 보건을 3시간으로 감소할 수 있으며, 외국어를 필수로 아니할 수 있음.

자료: 文敎部調査企劃課, 앞의 자료, p. 15.

넷째, 교과 간의 분리와 통폐합, 교과목의 명칭을 새롭게 고치는 등 면모 일신을 꾀하고자 했다.

다섯째, 교수 요목의 제정 및 적용 과정에서 다수의 한국인이 실무 요원으로 참여한 바, 이는 민족주의 교육을 지향한다는 거시적 목표가 함의된 것이었다.

여섯째, 미국인 당국자들과 한국인 스태프 간에 갈등이 적지 않았으나, 한국인 실무

진용(조선교육심의회 등)의 상황적 대응으로 하여 조직 편제를 승격(학무국에서 문교부로)케 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일곱째, 편수과(국)의 노력은 매우 주효했으며, 그 직무자들에 의한 소관 업무(교수요목의 시행 등)는 한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로도 많은 선례를 남겼다.

여덟째, 교수 요목의 정립 활동은 이후 각과 교과 과정에 의한 지도 내용, 지도 계획을 성안, 적용하는 데 매우 중요한 준거 사례로 기여했다.

(2) 교과용 도서의 편찬·발행

1945년 9월 24일자로 공립 소학교의 개교와 더불어, 10월 1일부터는 중학교가 속속 개교를 보게 되자, 그 교육 운영에 마땅히 뒷받침되어야 할 매우 중대한 현안을 서둘러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교과서 없는 개교’라는 현실을 극복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로 하여, 군정청 당국은 ‘교훈 용어’와 ‘과정(課程)’에 관한 방침을 일반명령 제4호에 포함시켜 포고(1945.9.17.)하게 되었다. 즉, “조선어로 상당한 교훈 재료를 활용할 때까지 외국어를 사용함도 무방함.”이라 포고한 시의적 내용이 그것이다.

여기서, ‘교훈 재료’란 교과서(독본)를 중심으로 한 교수-학습 자료들을 지칭한 것이고, ‘외국어’ 사용을 허용한다고 밝힌 것도 ‘일본어로 표기된 교과용 도서’를 사실상 묵인한 것과 다름없었다.

실제로, 그와 같은 임시 변통은 곧바로 학교 현장에 나타났다. 적어도 새 교과서가 보급되기 시작한 1945년 11월 하순에 이르기까지 교과서 부재에 따른 여러 형태의 교수-학습 활동이 이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예컨대, 구교과서(일제 시대의 교과서들)를 교사용 지도서로 삼아 가르친다든지, 이를 참고하여 교사가 프린트 교안을 작성, 대체 교본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그런 사례였다. 그런가 하면, 가르칠 내용을 칠판에 적어 학생들에게 옮겨 적게 한 다음, 그 자체를 교과서로 삼도록 유도한 사례 또한 흔히 볼 수 있었던 교실 풍경이었다.

이 같은 교수-학습 사례들은 주로 ‘한글 철자법’이나 ‘우리 나라의 역사’ 등 빼앗겼던 학습 내용을 회복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었다. 따라서, 음악(창가) 시간에는 우리의 ‘애국가’를 거듭 부르게 하고 ‘봉선화’, ‘푸른 하늘 은하수’ 등 숨어 있었던 노래들을 연습케 함으로써 민족혼을 배양하려 애썼다.

그러한 흥분과 감격이 이어짐 속에서 각급 학교의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들은 우리말로 된 새 교과서가 보급되기를 열망하고 있었다. 이는 단지 학교 현장이나 학부

모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한국인들이 공감하고 있었던 소망이기도 했다. 이렇듯, 광복 직후의 교육 정황은 거대한 계몽적 분위기로 휩싸여 있었다.

그러한 특수 시기에 있어 교과서 편찬에 따른 당무로서의 인식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었는가, 또 국어 회복을 교과서 편찬으로 실현하기 위한 노력은 어떻게 전개되었는가—이 문제는 본 제제에서 다룰 핵심적인 내용이다. 따라서, 그러한 일련의 노력으로 얻게 된 교과용 도서의 편찬·발행 실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편찬 형식(출판 형식) 또한 어떤 것이었는가를 차례로 알아보고자 한다.

1) 교과서 편찬에 따른 당무적 인식

광복과 더불어 여러 교육 관련 현안 중 교과서 편찬 문제는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실현 목표의 하나로 꼽혔다. 학교는 열었으나, 교육 수단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교과 학습을 사실상 이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는 매우 불행한 공복(空腹) 현상이었으며, 교육적 담보 상태랄 밖에 없었다.

1945년 10월 21일, 군정청 학무국은 학무통첩(제352호)을 각 도에 보내어 교과 과정 편성을 제시하고 현장 적응을 유도하고 있었지만, 이는 하나의 행정적인 통첩에 지나지 않을 뿐이었다. 더 말하지 않더라도, 교과 이수에 필요로 하는 교과서가 갖추어져 있지 않았으므로 제대로의 수업을 실현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교과서 편찬은 여러 당무 중에서도 시급 사안일 수밖에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장에 해결될 수 있는 일도 아니었다. 요컨대, 새 교과서를 집필·편찬하는 데 따른 절대 시간이 요구된다는 것과, 또 인쇄·제작 과정에서의 소요 시간이 뒷받침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미군정청에 학무국이 개설되고 초·중등 학교의 교과 편제가 마련되는 가운데, 부분적이거나 각과 교수 요목들이 제정되고 있었으나, 여전히 문제시되고 있었던 것은 우리 말 교과서의 편찬이었다. 또, 교과서가 있다 하더라도 교사만 사용하도록 허용된 구교과서(일제 시대의 교과서들)가 존재했을 뿐이었다.⁶³⁾

이 같은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마련된 교과서가 「한글 첫걸음」(1945. 11. 6) 등 일련의 임시 교재들이었다. 이 임시 교재들은 우리의 교과서 변천사 중에서 특유한 모형이었으며, 그 적용 형식 또한 특별한 데가 있었다. 임시 교재들은 정식 교재를 편찬하기 전에 말 그대로 임시(일시적) 사용을 위한 교과서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과서들은 전국 일원에 걸쳐 전면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이 때문에 단지 임시 적용만이 아

63) 吳天錫, 앞의 책, 「韓國新教育史·下」, p. 14 참조.

닌 ‘특별 교재’로서의 성격도 겸하고 있었던 것이다.

광복 직후에 있어, 교과서 개발의 완급 순위는 무엇보다도 ‘국어과’에 우선을 두어야 한다는 인식이 일치된 공감대였다. 요컨대, 우리말의 교수-학습은 일제 잔재를 씻어 내는 그 자체였고, 이를 통한 우리말의 부활이야말로 가장 중차대한 당무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말 교재의 편찬은 가장 시급한 교육 당무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순수 민간 연구 단체인 조선어학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다. 또, 역사 연구 단체인 진단학회(震檀學會)도 가담하여 「국사 교본」을 편찬하는 등, 미군정 초기의 교과서 개발은 국어와 국사를 연구하는 학회에 의해 처음으로 실현될 수 있었다. 군정청 학무국이 위의 두 학회에 교과서 편찬을 요청하고, 그 집필을 의뢰했던 것이다. 특히, 조선어학회의 경우는 당시 학무국의 한국인 편수과장으로 직무하고 있었던 최현배(崔鉉培)가 이 문제에 대한 시급성을 절감한 나머지 당국(학무국 편수과)의 편수 업무로 끌어들임으로써 전문가 집단에 의한 편찬 및 행정 업무가 원만하고도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었다.

한편, 1945년 11월 25일에 조선교육심의회 조직 중 교과서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제9분과위원회(위원장 최현배)도 발족되어, ‘교과서 편찬에 따른 시급 사안’을 논의하게 되었다. 이를 통하여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관련 현안들이 급속도로 진전되어 나갔다. 그런데 조선교육심의회의 제9분과위원회 발족에 앞서 교과서 편찬을 시급 사안으로 규정하고 있었던 단체가 조선어학회였으며, 이 학회는 1945년 8월 25일에 임시 긴급 총회를 소집하고 ‘국어 교과서 편찬’을 결의했던 것이다.

조선어학회가 국어 교과서를 하루 빨리 펴내야 한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야말로 하나의 학회 차원에서 볼 때 버거운 결심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학회의 설립 취지가 “조선어의 정확한 법리를 연구함을 목적으로 한다.”⁶⁴⁾라 했듯이, 바로 그러한 연구 목적을 해방된 나라에서 실현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는 조선어학회의 고유 연구 분야에 큰 줄기로 연결된 함의 이상의 의의를 가진 것이기도 했다. 한 나라의 언어는 곧 주권의 표상인 동시에 이를 증거케 하는 물증이 교과서인 까닭이다.

2) 교과서 편찬을 통한 국어 회복

8·15광복 직후 당면한 문교 현안 중에서 교과서 편찬이 시급 사안이었다는 사실은,

64) 조선어학회 창립 규약 1(1921.12.3).

새 교육 수단의 절대적인 필요성에 더하여 국어의 소생과 민족 교육의 부활로 직결되는 막중한 의의와 연결되고 있었다. 이 같은 의의 발견은, 어두운 시절에 경험했던 교과서 수난사를 짚어 봄으로써 더욱 자명해진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학습 현장에서 자행되고 있었던 일제 식민지 시대의 ‘국어 시련’이 어떠했는가를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 문제를 개관해 보자.

① ‘조선적인 것’의 수난

일제 식민 세력은 그들이 한반도에서의 지배권을 장악한, 이른바 한·일합방 당년인 1910년부터 ‘조선에 관한 내용’을 다룬 모든 서적에 대하여 압수·폐기 또는 불인가(발매·반포 금지를 포함하여) 조치로 징벌하는 등 온갖 만행을 저지른 바 있다.

교과용 도서의 경우, 1910년 현재로 총 검정 출원본이 117종이었으나, 이 중에서 55종만 인가되었다. 그 나머지 18종은 불인가 조치되었으며, 44종은 조사중이라는 명목으로 폐기당하고 말았다. 그러므로 사실상 총 검정 출원 도서의 52%인 62책이 불인가됨으로써 폐기 처분된 것이다.⁶⁵⁾ 물론, 폐기 사유는 출판법 저촉을 구실로 삼아 내용이 불건전하다는 것이 그 주된 이유였다. 또, 이른바, ‘안녕 질서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인정 도서의 경우를 보면 총 출원 도서 수가 448종이었으나, 이 중 68종 역시 내용이 불건전하다는 이유로 인정 심사에서 탈락되었다.⁶⁶⁾

이와 같이, 교과서 출판을 겨냥한 탄압 정책은 가혹하게 집행되었으며, 점차 ‘한국인 저작 발행’의 모든 출판물로 탄압 범위를 광범화시켰다. 예컨대, 초대 총독으로 부임한 테라우치(寺內正毅)는 1910년 11월부터 일본 헌병, 경찰, 조선인 보조원 등을 동원하여 종로 일대의 서점과 전국 각지의 서사(書肆), 향교, 서원, 구가(舊家), 양반 세가(兩班勢家) 등을 급습, 민족 출판물들을 모두 압수하라고 명령했다. 그 결과로 「대한신지지(大韓新志誌)」(張志淵), 「애국정신(愛國精神)」(李採雨), 「을지문덕(乙支文德)」(申采浩) 등 무려 20여 만 권을 색출하여 불태워 버렸다.⁶⁷⁾

한편으로, 일제 당국은 한국인 저작의 모든 교과용 도서를 몰수하면서, 그 내용 여하를 막론하고 책 이름에 국권을 상징하는 ‘大韓’이라 표기된 도서를 주된 대상으로 하여 모두 금서 조치하는 등 탄압을 가중시켰다.⁶⁸⁾

국권 강점과 함께 더욱 극렬해진 교과용 도서 등에 대한 탄압 양상은, 한국인이 한국

65) 조선어학회 창립 규약 1(1921.12.3.)

66) 學部 編, 「朝鮮教育の現狀」(京城: 學部, 明治 43), p. 13.

67) 文定昌, 「軍國日本朝鮮占領三十六年史」(서울: 柏文堂, 1965), p. 80.

68) 安春根, 「韓國出版文化論」(서울: 汎友社, 1981), p.203.

을 대상으로 저술한 한국 역사, 한국 지리, 그리고 한국의 역사 인물이나 당시대의 학습 자상(이를테면, 광복 후의 ‘철수와 영이’ 같은)⁶⁹⁾이 비교적 많이 노출되고 있었던 국어과, 수신과의 교과서들, 또 애국 정신을 고취시킨다고 보여지는 국내외 저자의 모든 서적이 압수 대상 도서이거나 발매 금지 도서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인이 저술한 일체의 교과용 도서야말로 압수 또는 발매·반포 금지 대상이 아닌 게 없을 정도였다. 좀 뒤의 일이긴 하나, 일제는 과거 대한제국 정부가 출판했던 교과용 도서에 대하여 얼마만큼 의도적으로 배척했던가는, 조선총독부 발행의 「교과용도서일람」(1915)에서도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⁷⁰⁾ 예컨대, 국어과 교과서인 「국민소학독본(國民小學讀本)」과 역사·지리과 교과서였던 「조선사(朝鮮史)」, 「대한역사(大韓歷史)」, 「조선지지(朝鮮地誌)」 등이 초창기의 민족 교육 매체였다는 사실을 들추어, 이를 불온 도서로 지목했던 것이다. 따라서, 위의 일람에 문제의 도서들을 소개(서목의 배열)하면서 발행처, 발행 연월일을 ‘未詳’이라 표기하는 등 서슴없이 은폐, 위조 만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례는 위의 「교과용도서일람」 중 도처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렇듯, 일제 식민 당국에 의한 교과서 정책은 ‘조선적인 것’을 최소화하거나 아예 없애는 방향으로 몰아갔다. 그들은 마침내 ‘조선어’를 폐기한다는 방침을 굳히게 되었다. 요컨대, 교육 현장에서의 국어(조선어) 추방을 실현한 다음, 이를 사회 전반에 걸쳐 모든 언어·문자 생활에 전면화시킨다는 전략이었던 것이다.

역사적 경험으로 보아, 그 어느 나라나 민족이든지 간에 침략 세력은 피식민 국가나 그 민족을 대상으로 하여 가장 중요한 무기로 삼는 것이 교육이요 그 교육 수단이다. 교육 수단 중에서도 그 나라의 언어·문자로 민족 교육 내용을 담은 교과서들이 가장 극심한 수난을 당하곤 한다. 일제 식민지 시대에서의 교육 침탈 과정은, 그런 점에서 극명한 징험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들은 특히 ‘조선적인 것’의 전면적인 추방에 목표를 둔 나머지 ‘조선어’ 교과와 그 교과서를 없애는 일에 구체적인 수순을 밟기 시작했다. 이에 대한 현실화는 1938년 3월 3일 제3차 조선교육령에 의해서였다. 이 교육령은 그 해 4월부터 시행되었는데, 이 중 소학교 및 중학교 규정에

국어(‘일본어’를 말함. 필자 주)를 습득케 하여 그 사용을 정확히 하고, 응용을 자재(自在)케 하며, 국어 교육의 철저를 기함으로써 황국신민(皇國臣民)된 성격을 함양하도록 힘쓸 것이다.⁷¹⁾

69) 李鍾國, ‘개화기 교과서에 나타난 한국인 상’, 「廣場」 통권 153호(서울: 평화교수아카데미, 1986), pp.163~178 참조.

70) 朝鮮總督府, 「教科用圖書一覽」(京城: 朝鮮總督府, 1915), pp.9~65 참조.

라 했다. 이 같은 교육 목표에 총체적인 지향점을 두고, 그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침을 밝히면서 “조선어는 수의과(隨意科)로 한다.”고 제한시켰다. 여기서, 수의과란 선택 교과를 말함인데, 실제로는 조선어를 소멸케 한다는 책략에 지나지 않았다. 이 무렵, 조선총독부 학무국에서는 전국의 사립 학교에 ‘조선어’를 과(課)하지 말도록 강요하고 있던 터였다. 사실, 이 문제는 뿌리 깊은 내력이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들이 이 땅에서 식민 지배를 시작할 때부터 조선어 교과서를 건조한 내용으로 꾸밈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전임 교원을 확보하려 하지 않았으며, 입시 과목에서 제외하는 등 노골적인 천대를 자행해 왔기 때문이다.⁷¹⁾

이와 같은 일관된 식민 획책은 1940년 2월에 이르러 창씨 개명을 단행함으로써 자신의 이름마저 제 나라말로 쓰고 부르지 못하도록 원초적 권리를 차단시켜 버렸다. 그러던 끝에, 진주만을 기습 공격(1941.12.8.)하여 전장(戰場)을 확대했고, 식민 제국주의자들은 이를 ‘시대의 진운(進運)’이라는 조작적 사관으로 호도하려 획책했다. 사정이 이렇게 급전되는 가운데, 식민 세력들은 이른바 ‘내선 일체(內鮮一體)’, ‘인고 단련(忍苦鍛鍊)’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식민 전략을 더욱 옥죄는 한편, 우리의 청년 학생들을 화염에 휩싸인 태평양 곳곳의 전장으로 끌어갔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1943년 3월 제4차 조선교육령의 공포(시행 4월 1일)를 보게 되었다. 이 교육령은 1943년 10월 13일 조선총독부 학무국에 의해 ‘교육에 관한 전시 비상조치령’으로 다시금 긴급 적용케 했던바, 이 때부터 ‘조선어’의 경우는 사실상 폐기 상태나 다름없었다. 당시 초·중등 교육 과정은 ‘지도상의 유의점’으로 통제했는데, 이에서 “교수 용어는 국어(‘일본어’를 말함. 필자 주)를 사용할 것.”이라 고정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각 교과목의 교수는 그 목적 및 방법을 오인(誤認)치 않도록 할 것이며, 서로 연관시켜 보익(補益)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주지시켰다. 이로 보아, 당시의 교육 내용은 이른바 ‘교육칙어(教育勅語)’의 정신에 따라, 무엇보다도 일어 교육에 치중하여 한국인을 일본인화로 변개시키려 획책하고 있었음이 드러나고 있다.⁷²⁾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일제 식민지 시대에 있어서의 교과서 형편은 그 처음과 끝이 ‘조선적인 것’의 폐기에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 있었다. 그 결과, ‘일본어’ 교과 및 교과서의 전면적인 실현을 가속화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8·15광복과 더불어 한국어 교과서의 소생은, 국어 부활이라는 교육적 당무 외에 이를 통한 민족 교육의 재생을 가져

71) 朝鮮語教育令 중 ‘小學校規程’, 제16조 8항(1938. 3. 3.).

72) 金敏洙, 「國語政策論」(서울: 高麗大學校 出版部, 1973), p. 382.

73) 咸宗圭, 「教育課程沿革調查(前篇)」(서울: 淑明女子大學校 教育問題研究所, 1974), p. 162.

을 수 있었다. 즉, 8·15광복은 민족 교육의 선언 그 자체였으며, 그 매개체 역할을 수행하게 된 것이 일련의 한국어 교과서였던 것이다.

② 한국어 교과서의 실현

8·15광복과 더불어 가장 먼저 편찬·발행된 국어과 교과서는 「한글 첫 걸음」(1945.1 1. 6)이었다. 이보다 약 2개월이 채 안 되어 「초등 국어 교본(상)」(1945. 12. 30)이 나왔고, 또 중권(1946. 4. 15) 및 하권(1945. 5. 5)이 나왔으며, 「중등 국어 교본」 상·하권(1946. 9. 1)과 같은 책 중권(1947. 1. 10)으로 이어졌다. 그런 가운데, 광복 이후 최초의 국사 교과서도 이룩되었는데, 이것이 진단학회가 편찬한 「국사 교본」(1945. 5. 26)이었다. 이 책들은 모두 임시 교재로 편찬·발행되었다. 이후 1948년 6월 현재로 초·중등학교용 교과서는 임시 교재 15책을 포함하여 모두 26종 56책이 발행된 바 있다.

국어과 관련 교과서들은 조선어학회에 의해 편찬 작업이 추진되었는데, 이는 1942년 10월 이 학회가 일제 당국으로부터 사실상 파멸당한⁷⁴⁾ 이후로 첫 과업이어서 그 의의가 사뭇 컸다. 이 학회는 한국어(이하 ‘우리말’로 표기함.)의 부활을 교과서로써 실현한다는 막중한 임무를 떠맡고 있었다. 당시 미군정청에서는 조선어학회의 활동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었던 것이다.⁷⁵⁾

조선어학회가 국어 교과서를 편찬하기로 결의한 것은 1945년 8월 25일 임시 총회에 의해서였다. 이 회의에서 미군정청으로부터 국어 교과서 편찬을 위촉받은 데 따른 사후 추진 과제를 협의한 결과, 국어교과서편찬위원회⁷⁶⁾를 발족시켜 그 임무를 전담하도록 결의했던 것이다. 이에 대한 경위는 다음의 글에서 나타나고 있다.

(전략) 새로운 우리 정부가 수립되어 정식으로 교과서가 나올 때까지, 임시 조치로 우리 조선어학회와 경성초등교육건설회가 협동하여, 우선 1·2학년용 「초등 국어 교본」과 3학년 이상에 쓰일 「한글 첫 걸음」을 시급히 만들어, 9월에 학교가 개학되면 곧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오던바, 이것을 들은 군정 학무 당국에서는 우리의 원고를 갖다가 직접 발행하여, 이것을 전국에 사용시키기로 되었다.⁷⁷⁾

위의 내용으로 보아, 조선어학회측에서 군정청 학무국에 교과서 편찬에 따른 협조를 요청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로써 그 편찬 업무를 정식으로 위촉받게 되었으며, 조

74) 1942년 10월 1일, 최현배 등 회원 11명이 “민족주의자의 단체로서 독립 운동을 비밀히 한다.”는 등의 죄목으로 구속당함.

75) 金敏洙, 앞의 책, p. 384.

76) 집필: 이회승 등 9인, 심사: 방중현 등 5인, 위원: 이극로 등 7인 하여 총 21인으로 조직함.

77) 朝鮮語學會, 「초등 국어 교본 한글 教授指針」(漢城: 軍政廳學務局, 1945. 12. 30), pp.1~2.

선어학회는 이 일을 당연한 사명으로 받아들였다.⁷⁸⁾

당시 조선어학회는 우리말 교재를 편찬함에 있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그 완급 순위로 볼 때 어떤 형식의 교재를 먼저 펴내야 할 것인가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요컨대, 과거 일제 식민지 시대에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 실태가 워낙 열악했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일본어 중심의 교수-학습으로 치중되어 정작 우리글에 대한 문맹률이 높았던 까닭이다. 예컨대, 8·15광복 직후의 13세 이상 문맹률 통계를 보면 그 점유율이 무려 78%에 달하고 있을 정도였던 것이다. 이에 관한 통계를 보면<표 III-10>과 같다.

<표 I -10> 문자 보급 상황(1945~1949)

구분 연도	13세 이상 국민총수	국문 미해득 자 수	해득시킨 자 수	잔존 미해득 자 수	미해득률
1945	10,253,138	7,980,902	2,272,236	7,980,902	77.8
1946	13,055,969	9,885,178	2,569,797	7,315,381	56.0
1947	13,087,905	7,315,381	1,488,799	5,826,582	44.5
1948	13,320,913	5,826,582	522,931	5,303,651	40.0
1949	13,568,761	5,303,651	427,563	4,876,088	35.9

자료: 韓國敎育十年史刊行會, 『韓國敎育十年史』(서울: 豐文社, 1960), p.110 및 「文教概況」 p.42 등의 자료를 필자가 취합하여 재작성함.

결국, 그러한 정황은 한글을 처음부터 터득케 해야 할 필요성으로 받아들여졌다. 말 그대로 첫 걸음부터 한글을 습득하도록 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보았던 것이다. 이 때문에, 처음으로 편찬된 교과서가 「한글 첫 걸음」이었다. 이 교재의 앞머리에 그러한 취지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다. 즉,

1. 이 책은 ‘초등 국어 중·하’ 또는 ‘중등 국어 상·하’를 가르치기 전에 먼저 국어 공부의 터전을 닦아주도록 가르치기 위하여 지은 것임.⁷⁹⁾

이라 했고, 그 교사에게 안내하기를

2. 이 책을 가르치는 교사는 ‘초등 국어 한글 교수 지침’을 참고 이용하는 것으로 함.⁸⁰⁾

78) 이응호, ‘光復直後の 한글 講習과 국어 敎材 編纂’, 蘭臺李應百博士古稀紀念論文集刊行委員會 編, 『光復後の 國語敎育』(서울: 한샘出版社, 1992), p.33.

79) 「한글 첫 걸음」의 책머리 ‘주의’.

80) 위의 책, 같은 면.

이라 밝혔다. 이렇게 하여 자모식(字母式) 한글 교육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한글 첫 걸음」에 뒤이어 다른 교본들도 후속 편찬이 이루어졌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초등 국어 교본」 상·중·하 및 「중등 국어 교본」 상·하의 개발이 그것이다. 이 교과서들의 편찬에 참여한 기초 위원(집필 위원), 심사 위원, 그리고 삽화 집필 및 제공자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기초 위원

한글 첫 걸음: 장지영(조선어학회), 정인승(책임: 조선어학회), 윤재천(청량리국민학교)

초등 국어 교본: 윤복영(협성학교), 윤성용(수송국민학교), 이호성(책임: 서강국민학교)

중등 국어 교본: 이승녕(평양사범학교), 이태준(조선문화건설중앙협의회), 이희승(책임: 조선어학회)

초등 국어 교본(상) 삽화 집필·제공

이희복(경성사범학교 부속국민학교), 이봉상(경성여자사범학교 부속국민학교)심사 위원

방중현(조선어학회), 조병희(경성서부남자국민학교), 주재중(매동국민학교), 양주동(진단학회),

이세정(진명고등여학교)⁸¹⁾

이와 같이, 「한글 첫 걸음」을 비롯한 초기의 우리말 교재는 조선어학회를 대표 개발 기관으로 하여 위의 위원들에 의해 그 편찬 작업이 이루어졌다. 기초 위원들 중 이태준(李泰俊)의 경우는 월북 인사라 하여 오랜 기간 동안 은폐되어 있었다. 기피 인물이라는 이유로 누락시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모파상’이라 일컬어지기도 하는 그는 1987년 6·29선언과 함께 해금된 바 있다. 과거와 현재를 통해 마찬가지로이지만, 교과서 편찬에 참여한 인사들은 자신이 추구하는 분야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전문가들이라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확인할 수 있다.

8·15광복 직후로 소생되기 시작한 우리말 교재는 국어과 뿐만 아니라 전 교과와 교과서로 거듭 확대, 증폭되어 나갔다. 이러한 현상은 6·25전쟁바람에 중단될 수밖에 없었지만, 휴전 이후 제1차 교육 과정기(1954.4.~1963.2.)의 교과서 편성을 성안케 한 기본 구조로 기여하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여러 교과와 교과서들이 본격 교재가 아닌 ‘임시 교재’라는 특유의 모형으로 편찬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이 교재들이 교육 복권을 실현케 했다는 사실이다. 교과서 확보가 워낙 시급한 현안이었던 까닭에, 교육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도 일련의 임시 교재들이었다. 물론, 이 교과서들을 통해 우리말과 글이 교육 현장에서 부활했다는 점에서 매우 특별한 의미와 대하고 있다. 그러한 의미 부여는 ‘우리말 도로찾기’⁸²⁾로 표방되고 있었던 당시대의 언어·사회적 정서에서 극명하게 증거할 수 있는 일이다.

81) 朝鮮語學會, 앞의 책, 「초등 국어 교본 한글 敎授指針」(漢城: 軍政廳學務局, 1945.12.30.), p. 3.

82) 문교부, 「우리말 도로찾기」, 서울: 조선교학도서주식회사, 1948. 6

3) 교과용 도서의 편찬·발행 실태

미군정기에 있어 교과용 도서 편찬을 담당한 주관 부처는 학무국이었으며, 이 조직 내에 편제된 편수과가 그 실무 부서였다. 특히, 편수과로 말하면 미군정이 시작된 당초부터 학무국의 직제 중 수석과였으며, 이 기구에서 교과용 도서 편찬·발행에 관한 제반 정책 및 실무 행정이 관장, 처리되었다.

광복 직후의 사정이 두루 그러했지만, 어떤 법률적 장치나 규범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교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교과용 도서와 관련된 업무도 주로 당국의 방침(훈령, 통첩 등)에 의거하여 이행되고 있었다. 바꾸어 말해서, 당시의 정황이 새로운 출판선상에 놓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과도기적 상황이란 밖에 없었다. 어떤 면에서는 ‘교과서 자유 발행’이 가장 활발하게 실현된 때가 미군정기 초반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수지 타산이 맞는 보통 교과용 교과서 출판을 둘러싼 업계 내 다툼이 가속되었고, 사정이 그렇다보니 정책적인 시행 착오 또한 적지 않았다.

이 제제에서 서술하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그러한 문제들을 파악하기 위해 제시한 것이다. 이 문제를 먼저 알아본 다음에 제도적 기틀이 겨우 터잡기 시작한—국민학교규정(1946.11.) 및 중등학교규정(1947.4.) 공포 이후 정부 수립 직전까지의 교과용 도서 편찬·발행 실태를 살피고자 한다.

① 광복 직후의 교과서 출판계

여기서, ‘광복 직후의 교과서 출판계’란 미군정기 초반에 있어 교과서 출판과 관련된 일련의 업계 내 상황을 말한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우선 전제해야 할 문제는 미군정 당국의 언론·출판에 관한 정책적 기초를 살필 필요가 있다.

1945년 9월 20일, 아놀드 군정장관은 지령 제5호로 일제하의 악법이었던 출판법, 치안유지법, 보안법 등 12건을 폐지시켰다. 이 같은 악법의 철폐는 미군정 당국이 표명한 언론·출판의 자유를 현실화한 것과 다름없었다. 이로 하여, 교과서를 비롯한 각 분야의 출판 활동은, 특히 우리말로 표현 수단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감격 속에서, 제반 인쇄·출판 사업이 마치 붓물을 터놓은 것처럼 자유롭게, 그리고 폭발적으로 열려 나갈 수 있었다.⁸³⁾

그러나 광복의 감격이 계속되는 가운데 남북 분단이 기정 사실화되고, 이로 인한 사상적인 분열 양상이 가속화되는 등 사회 혼란이 거듭되었다. 이 때문에, 출판 활동도 우

83) 李鍾國, ‘1945年の 出版實態에 대한 考察’, 『88出版學研究』(서울: 汎友社, 1988), p. 135.

익과 좌익이 각자의 편에서 공격적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선동·선전 매체 유형이 대부분일 수밖에 없었다. 이는 언론·출판의 자유에 편승한 혼재(混在) 현상이었다. 당시 북한이 모든 언론·출판 활동에 대한 통제를 실시하고 있었음에 비해, 남한에서는 이른바 무산층(prolétariat)을 선동하는 흑색 출판물까지도 묵인되고 있었을 정도였다. 이러한 현상은 팜플릿이나 전단(비라) 등이 주된 선동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이 같은 사정과 관련하여, 출판인 최영해(崔映海)는 1945년 8월부터 1946년 9월까지 ‘정치 사상 팜플릿 시절’이었다고 회고한 바 있다.⁸⁴⁾

그 무렵, 남한 내의 교과서 출판사들은 일제 때부터 존재하고 있었으나, 일시 중단한(일제 말기의 탄압으로) 업체와, 광복과 더불어 새로 창립된 출판사들로 그 판도가 형성되어 있었다. 가장 오랜 교과서 전문 출판 업체 중 하나인 대한교과서주식회사의 전신이었던 문화당(文化堂)도 전자의 경우에 해당된다. 일제 때 설립되어 광복과 함께 출판 활동을 재개한 주요 교과서 출판사를 들면 다음과 같다.

정음사(최영해), 문화당(김기오), 영창서관(유장열), 한성도서주식회사(이창익), 박문서관(노영석), 삼중당(서재수), 명문당(김혁제), 동명사(최남선), 계몽동지사(황준성), 덕흥서림(김기방) 등

위의 출판사들은 초창기 출판 활동을 주도한 업체들이었으며, 특히 문화당과 한성도서주식회사의 경우는 출판과 인쇄 사업을 겸하는 등 자체 시설을 확보하고 있었다. 따라서, 문화당과 정음사는 교과서를 포함한 교육 관련 도서 출판에 비중을 둔 업소였다.

한편, 보진재(김기환)의 경우는 선구적인 인쇄업체(1912년 8월 설립)로서 많은 업적을 쌓은 바 있다. 이 회사는 인쇄사업만을 전업하다가 1961년부터 출판 사업도 겸하고 있다. 1979년부터 2종 교과서 개발에 참여해 왔는데, 꾸준한 합격 실적을 냈다.

광복 직후로부터 출판사의 설립이 계속되었는데, 주요 출판사를 들면 다음과 같다.

고려문화사(유명한), 을유문화사(민병도·정진숙·윤석중·조풍연), 동지사(이대의·백남홍), 백양당(배정국), 국제문화협회출판부(김을한), 서울출판사(권혁창), 민중서관(이병준), 탐구당(홍석우), 금릉도서주식회사(김시필), 대양출판사(김익달) 등

위의 회사들은 발족 당시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과용 도서 생산(검인정 도서) 등 팔목할 만한 출판 업적을 쌓았으며, 이 중 몇 회사들은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왕성한 출판 활동을 계속하고 있음을 본다. 위의 회사들을 비롯하여 1945년 9월부터 12월까지 45개사가 탄생한 바 있다.

84) 崔映海, ‘出版界의 回顧와 展望’, 普成社 影印 「出版大鑑」(서울: 普成社, 1985), p. 6.

이후로 1946년에는 150개사, 1947년에 581개사, 1948년에는 792개사로 대폭 늘어났다. 출판 실적도 점증하여 1947년에 950종, 1948년에는 1,200여 종에 이르렀다. 이 중, 교과서의 경우는 1947년에 150종, 1948년에 131종이 출판된 바 있다.

이와 같이, 광복 직후의 출판계는 나날이 발전을 거듭했으나, 몇 가지 피할 수 없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었다. 즉, 일제 때 폐기당한 한글 활자를 빠른 시간 내에 회복하기 어려웠고, 자재 조달과 설비의 면에서도 그런 점에서는 마찬가지였다. 요컨대, 상당 부분에 걸쳐 ‘등사판 교과서’로 대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활자 구득난이 주된 원인이었다. 이 같은 일련의 문제들은 아래의 내용을 통해 짚어 볼 수 있다.

첫째로, 활자 부족의 문제는 모든 인쇄·출판물을 생산하는 데 있어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지만, 특히 우리말 교과서 출판에 큰 장애 요인이 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에 얽힌 사정은, 「한글 첫 걸음」 등 초기 교과용 도서를 번각 발행했던 한 출판인의 증언을 통해 실감할 수 있다.

먼저 생각나는 것이 한글 활자를 만들던 일입니다. 일제 조선총독부의 우리말 말살 정책으로 우리말 활자가 없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 일정(日政)이 활자는 없었으나, 주조기나 자모를 없애라고는 안 했어요. 그래서 그 한글 자모를 꺼내다가 장작불을 피워 주자(鑄字)를 했습니다. 당시 다 만들어 내는 데 한 달이 걸리더군요. 여기 저기서 활자를 달라고 와서, 값은 얼마를 받았는지 무조건 다 주었습니다. 그 활자로 내가 처음 찍은 것이 「한글 첫 걸음」이었습니다. 이 책은 해방 후 최초로 발간된 교과서로서……120만부를 찍어서 다 팔았습니다.⁸⁵⁾

둘째로, 용지란 또한 절대 부족 상태에 있었다. 이에 대하여 당시의 한 출판인은, “용지 문제는 출판의 생명과 같은 일인데,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기획도 없다.”⁸⁶⁾고 하면서, 광복 직후의 절망적인 용지 수급 사정을 개탄했다.

당시의 용지 사정이 얼마나 열악했던가는 다음의 보고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용지 사정이라는 것은 실로 빈약한 것으로 해방 후의 인쇄 갱지는 경일(京城日報)을 말함. 이하 팔호 내 필자 주), 매신(每日新聞) 재고가 불과 수천 원, 교학(朝鮮敎學圖書株式會社, 이하 교과서주중 생산사임.), 서적인쇄(朝鮮書籍印刷株式會社), 조선인쇄(朝鮮印刷株式會社), 근택(近擇印刷所), 기타 대소 인쇄소에 재고가 불과 수천 원, 도합 수만여 원이 있어서 갱지 1원에 불과 육칠십 원 하던 것이 시장에 돌아다니었을 뿐 그 외는 부산, 안양 등지에서 생산하는 선화지(仙花紙)밖에는 없었다. 이 재고 용지도 1946년 중에는 전부 소비되어 없어지자, 수입도 여의치 못하여 선화지 1원에 만여 원, 갱지 1원에 오만여 원까지 갔으며, 이것이 소위 최고 가격 시기였을 것이다.⁸⁷⁾

85) 朝鮮敎學圖書株式會社 崔相潤 사장의 증언. 大韓出版文化協會 編, 「大韓出版文化協會40年史」(서울: 大韓出版文化協會, 1987), p.43.

86) 金昌集, 「出版界의 四年」, 普成社 影印 「出版大鑑」(서울: 普成社, 1985), p. 4.

87) 崔映海, 「出版界의 回顧와 展望」, 앞의 책, p. 6.

한편, 업소에 따라 용지 재고가 다소 넉넉했다 할지라도, 당국의 강권에 의해 자재를 소모해야만 했던 일도 있었다. 요컨대, 당국의 압력으로 교과서를 찍어 낸 경우를 말한다. 이런 경우는 결과적으로 우리 교과서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성과를 거두게 했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일이다. 이에 대한 증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 책(「한글 첫 걸음」을 말함. 필자 주)을 출판한 에피소드가 있어요. 나는 그 때 종이 4만 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9월 16일 김성수(金性洙, 미군정장관 고문 위원장), 유억겸(兪億兼, 군정청 문교부장), 오천석(吳天錫, 문교부 학무국장)이 나를 찾아왔어요. MP(헌병) 셋을 데리고요. 그리고는 교과서를 만들라는 거예요. 교과서는 안 한다고 고집했지만 강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작했는데, 당시 학무국과 공장(조선교학도서주식회사) 간에 직통 전화까지 가설해 주었어요. 그래서 낸 책이 「한글 첫 걸음」, 「역사 교본」(「국사교본」을 말함.), 「표준말 모음」 등이었습니다.⁸⁸⁾

셋째로, 경제계의 혼란으로 말미암아 인쇄 시설을 확충하기 어려웠고, 또 그 운영을 원활히 수행할 수 없었다. 이 문제는, 광복 이전에 일본인 기술자로 주력을 삼고 있던 터에, 그들이 철수하면서 한국인에 의한 대체 인력이 부족했던 데도 원인이 있었다. 다시 말해서, 일제는 핵심적인 기술(자모 제작 및 주조, 사진 제판, 오프셋 인쇄 등의 고급 기술)을 장악하고 있었던 까닭에, 상대적으로 한국인의 기술 수준이 낙후되어 있었던 것이다.⁸⁹⁾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1948년 말 현재 서울에서 영업 활동을 하고 있었던 출판사 수만도 112개소로 늘어났다. 이 중에서 자가 시설을 확보한—설비와 기술면에서 뛰어난 곳으로는 조선서적인쇄주식회사, 조선인쇄주식회사, 조선교학도서주식회사, 고려문화인쇄부, 협진인쇄소, 대동인쇄주식회사, 문화당 등이었다.

위의 회사들 중에서 조선서적인쇄주식회사와 조선교학도서주식회사의 경우는 미군정청 학무국 의뢰로 국정 교과서를 가장 많이 발행한 대표적인 업체였다. 또 정음사, 금룡도서주식회사, 을유문화사 등도 여러 종류의 검정 도서를 발행하는 등 많은 실적을 낸 바 있다.

② 교과용 도서 편찬에 따른 기본 방침

미군정기에 있어서의 교과용 도서 편찬은 의욕이 앞섰던 것만큼 시행 착오 또한 적지 않았다. 시간을 다투어 우리말 교재를 편찬·발행해야 한다는 교육적 당무로 하여 과정 보다는 실현에 전력 투구했던 까닭이다.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처리해야 할 책임 당사

88) 崔相潤 사장의 증언, 앞의 책, p. 43.

89) 李鍾國, 앞의 책, 「大韓教科書史: 1948~1998」, p. 102.

국이 편수국이었다. 당시의 편수국에서는 “교과서 편찬을 통하여 건국에 이바지할 것”⁹⁰⁾이라는 자세로 이 사업을 추진했다.

교과용 도서 편찬 방침이 정책적으로 제시된 것은 미군정청에 의한 학무 행정이 1년을 넘긴 뒤였다. 주요 교과별 교과서 편찬에 따른 기본 방침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국어과: 가장 정확한 국어로서, 고유 문화를 이어받아 창조·발전하고……국어과 편찬위원회를 열어 교과서 편찬의 규범을 정하고, 아동에 대한 국가 관념, 국민 도덕, 가정 책임, 학교 교육, 인륜 도덕, 정서 교육, 체육 보건, 과학 상식, 상업 경제 등을 주체로 교재를 선택하여 편찬의 방침을 세웠다.

사회 생활과: 사람 자연 환경 및 사회 환경과의 관계를 밝게 인식시켜, 사회인으로서 생활함에 성실 유능한 국민이 되도록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학과: 실천적 성격, 영민한 이해를 아동들에게 고취하고……사물 현상의 수리적 처리에 의하여 과학의 수준을 향상시키며……아동의 능력을 고려하여 계단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연습 문제를 자주적으로 연구하며……교재 전체에 대하여 산 고찰을 할 수 있으며, 관계 관념을 기를 수 있도록 편찬하는 것이 셈 교육의 근본 목적이다.⁹¹⁾

이와 함께 미술, 실업, 가사 등 각 과목은 위와 같은 취지에 부응하여 교과용 도서를 편찬 중임을 밝혔다. 따라서, 중등 학교용 교과서의 경우는, 국어과 교과서를 제외하고 민간측에서 출원하는 검·인정 도서를 권장, 사용할 것임도 강조했다.

이와 같은 편수 방침은 학교급별, 교과별 교과용 도서들에 두루 적용하고자 한 기본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 방침은 당시대가 극도의 혼란 상황에 직면해 있었으므로 그에 따른 충분한 대응책이 뒷받침되지 않았던 게 문제였다. 요컨대, 미군정기에 마련된 교수 요목들이 행방 직후로 물밀듯이 흘러들어 온 ‘그릇된 해외 사상’이 범람하던 시절에 씌어진 것이기 때문에, 교과목에 따라서는 그 내용이 반민주적, 반국가적인 방향으로 유도할 우려가 있는 교재를 생성케 했다는 것이다.⁹²⁾ 그런 경우는 특히 「중등 국어」 및 「사회 생활」에 내재되어 학생들에게 그릇된 영향을 끼쳤다고 보았다.

한편으로, 실업계 전문 교과와 교과서들이 개발되지 않아 보통 교과와 교과서들에 비추어 불균형 현상이 심각한 실정이었다. 왜냐 하면, 실업과 교과서는 소요 부수가 적은 관계로 수지가 맞지 않아 민간측에서 발행할 수 없었던 까닭이다.⁹³⁾ 그렇다고 해서, 교육 재정이 턱없이 모자란 상태에서 교재 출판비 조달을 기대할 수도 없는 형편이었다. 이 때문에, 모든 교과와 교과서들을 우리말 교재로 일신한다는 방침이 추진되고 있었으

90) 文教部調査企劃課, 앞의 자료, 「文教行政概況」, p. 39.

91) 위의 자료, pp. 39~41 참조.

92) 문교부 편수국, 앞의 책, 「편수시보」 제1집, p. 6.

93) 위의 책, p. 5.

나, 일부 이과 및 실업 전문 교과와 교과서들이 과거의 것(일제 때의 교과서)으로 묵인되는 등, 매우 곤란한 상황이 한 동안 계속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일련의 정황은 과거 35년간의 식민 잔재를 일시에 불식하려는 교육적 욕구와, 또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새로운 모형을 서둘러 확보하려는 사회·교육적 욕구가 분출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현상이었다고 할 것이다.

③ 교과용 도서 편찬 성과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미군정기 및 교수 요목기의 국정 교과서들은 「한글 첫 걸음」(1945. 11. 6)이 맨 먼저 편찬·발행되었고, 이에 뒤이어 ‘임시 교재’들이 나왔으며, 그 다음에 정식 교재의 순으로 그 출판 공급 과정이 이어졌다. 특히, 임시 교재의 경우는 8·15 직후의 교육 공백을 메우기 위해 긴급 처방식으로 편찬·발행된 도서들이었으나, 그것이 교육 현장에서 정식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특별한 가치와 의미를 지닌다. 다만, 교수 요목에 지배당하지 않은 것이 차별적일 뿐이다.

1946년 말 현재로 초·중등 학교용 교과용 도서의 발행 실태를 보면 <표 I-11>과 같다.

<표 I-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총 출판량은 순수 교과서가 8종 18책, 교사용 지도서(교수 요목 1종 포함) 2종 2책, 이렇게 하여 총 10종 20책에 6,208,990부를 발행했고, 공급 부수(펴낸 수)의 경우는 4,078,415부로 집계되어 있다. 총 발행량에 비해 공급 부수(66%)가 미달되고 있는 것은 1947학년도에 대비하여 ‘공급중’임을 알 수 있다.

「한글 첫 걸음」의 경우는 그 초판(1945.11.6.)이 1백만 부를 넘긴 바 있고, 또 1년 만에 다시금 1백만 부를 상회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이런 수준의 보급 실적은 정부 수립 때까지 계속되었는데, 말하자면 교과서인 동시에 베스트셀러였던 셈이다.⁹⁴⁾ <표 I-11>에 보인 교과용 도서들이 1단계로 펴낸 교재라 한다면, 이를 포함하여 1947년 말 현재의 국정 교과서 발행 실태를 보면 <표 I-12>와 같다.

<표 I-12>에 정리된 바와 같이, 미군정청에 의한 국정 교과서 편찬 실태를 보면 모두 10종 33책에 이른다. 이 중, 조선어학회에 의뢰하여 편찬한 도서가 6종 13책인데, 이 학회는 오늘에 말하는 교과서 개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 낸 셈이다.

한편, 민간에 의한 검인정 도서들도 상당수 개발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표 I-11>과 같다.

<표 I-11>에 제시되어 있듯이, 민간에 의한 검인정 교과서들은 주로 역사·지리, 수

94) 이종국, 앞의 논문, ‘한국의 교과서 변천에 대한 연구’, p. 114.

학, 과학, 그리고 음악, 습자 등이 다종권을 형성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I -11> 미군정 초기의 교과용 도서 발행 실태(1946. 12 현재)

책 이 름	사용 학년	초판 발행	출판 부수	퍼낸 수(부)*	비 고
한글첫걸음	각급 학교·일반 공용	1945. 11. 6	1,073,326	1,072,360	
중등 공민(상)	1, 2학년 공용	1946	76,600	73,903	임시 교재
중등 공민(하)	3, 4학년 공용	1946	50,000	40,871	임시 교재
국사 교본	각급 학교 공용	1946. 5. 26	77,143	67,379	임시 교재
초등 국어 교본(상)	1, 2학년 공용	1945. 12. 30	850,000	87,349	임시 교재
초등 국어 교본(중)	3, 4학년 공용	1946. 4. 15	679,500	427,304	임시 교재
초등 국어 교본(하)	5, 6학년 공용	1946. 5. 5	268,000	229,873	임시 교재
중등 국어 교본(상)	1, 2학년 공용	1946. 9. 1	51,080	9,875	임시 교재
초등 공민(상)	1, 2학년 공용	1946	415,000	401,660	임시 교재
초등 공민(중)	3, 4학년 공용	1946. 5. 5	382,000	340,224	임시 교재
초등 공민(하)	5, 6학년 공용	1946. 5. 5	464,000	268,848	임시 교재
한글 교수 지침	교사용	1945. 12. 30	50,000	44,000	
노래책(상)	1, 2학년 공용	1946	204,941	205,238	임시 교재
노래책(중)	3, 4학년 공용	1946	285,500	187,384	
노래책(하)	5, 6학년 공용	1946	297,000	144,732	
셈 본	3—1	1946	119,900	98,201	
셈 본	4—1	1946	102,000	91,214	
셈 본	4—1	1946	103,000	101,000	
셈 본	6—1	1946	600,000	127,000	
잇과 교수 요목	교사용	1946. 11. 17	60,000	60,000	
계	(10종 20책)		6,208,990	4,078,415	

* ‘퍼낸 수’란 공급 부수를 말함. 필자 주.

자료: 文敎部調査企劃課, 앞의 자료, 「文敎概況」에 기초하여 필자가 재조사, 제작성한 것임.

이는 안정된 수요량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교과서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업계 전문 교과와 교과서들은 상대적인 빈곤 현상을 면하지 못했다. 수요 부수가 극히 적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 심각한 필자난(집필자를 구하기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던 것이 주된 원인이었다.⁹⁵⁾

95) 李鍾國, 앞의 책, 「大韓敎科書史: 1948~1998」, p.205.

<표 I -12> 광복 직후의 국정 교과용 도서 현황(1945. 9~1947)

발행연도	책 이 름	학년·학기	저 자	출 판 사	비 고
1945	한글 첫 걸음		조선어학회	조선교학도서주식회사	각급 학교·일반 공용
1945	초등 국어 교본(상)	1, 2	조선어학회	조선서적인쇄주식회사	
1946	초등 국어 교본(중)	3, 4	조선어학회	조선서적인쇄주식회사	
1946	초등 국어 교본(하)	5, 6	조선어학회	조선서적인쇄주식회사	
1945	한글 교수 지침		조선어학회	조선교학도서주식회사	교사용
1946	중등 국어 교본(상)	1, 2	조선어학회	조선교학도서주식회사	
1947	중등 국어 교본(중)	3, 4	조선어학회	조선교학도서주식회사	
1946	중등 국어 교본(하)	5, 6	조선어학회	조선교학도서주식회사	
1946	초등 공민	1, 2	조선어학회	조선서적인쇄주식회사	
1946	초등 공민	3, 4	조선어학회	조선서적인쇄주식회사	
1946	초등 공민	5, 6	조선어학회	조선서적인쇄주식회사	
1946	중등 공민	1, 2	조선어학회	조선서적인쇄주식회사	
1946	중등 공민	3, 4	조선어학회	조선서적인쇄주식회사	
1946	국사 교본		진단학회	조선교학도서주식회사	
1946	초등 셈본	1—1	군정청 문교부	조선서적인쇄주식회사	
1946	초등 셈본	1—2	군정청 문교부	조선서적인쇄주식회사	각급 학교 공용
1946	초등 셈본	2—1	군정청 문교부	조선서적인쇄주식회사	
1946	초등 셈본	2—2	군정청 문교부	조선서적인쇄주식회사	
1946	초등 셈본	3—1	군정청 문교부	조선서적인쇄주식회사	
1947	초등 셈본	3—2	군정청 문교부	조선서적인쇄주식회사	
1946	초등 셈본	4—1	군정청 문교부	조선서적인쇄주식회사	
1947	초등 셈본	4—2	군정청 문교부	조선서적인쇄주식회사	
1946	초등 셈본	5—1	군정청 문교부	조선서적인쇄주식회사	
1947	초등 셈본	5—2	군정청 문교부	조선서적인쇄주식회사	
1946	초등 셈본	6—1	군정청 문교부	조선서적인쇄주식회사	
1947	초등 셈본	6—2	군정청 문교부	조선서적인쇄주식회사	
1947	초등 잇과	4—1	군정청 문교부	조선교학도서주식회사	
1947	초등 잇과	5—1	군정청 문교부	조선교학도서주식회사	
1947	초등 잇과	6—1	군정청 문교부	조선교학도서주식회사	
1946	초등 노래책	1	군정청 문교부	조선서적인쇄주식회사	
1946	초등 노래책	2	군정청 문교부	조선서적인쇄주식회사	
1946	초등 노래책	5	군정청 문교부	조선서적인쇄주식회사	
1946	초등 노래책	6	군정청 문교부	조선서적인쇄주식회사	

자료: 李鍾國, 앞의 책, 「大韓教科書史: 1948~1998」, p.123.

<표 I -13> 광복 직후 민간에 의한 교과용 도서 발행 현황(1945.9.~1947)

발행 연도	책 이 름	학년·학기	저 자	출 판 사	비 고
1945	중등 조선 말본		최현배	정음사	
1946	조선어 표준말 모음		조선어학회	조선교학도서주식회사	각급 학교,
1946	한글 문예 독본		정열모	신흥국어연구회	일반 공용
1947	글자의 혁명		최현배	조선교학도서주식회사	각급 학교,
1946	신수 한문 독본		박병연	문화당	일반 공용
1947	신편 고등 한문		김용배	금융도서주식회사	
1947	정선 고등 한문 독본		김춘동	삼성사	
1947	New Method English Grammar Composition		안호삼	교육연구사	
1947	중등 사회 생활		이준하, 이원학	창인사	
1947	중등 사회 생활과 이웃 나라		오준영	동방문화사	
1947	중등 국사		최남선	동명사	
1947	중등 서양사		중등교재연구회	세문사	
1947	동양사		이동윤	동지사	
1947	동양 역사		김성철	정음사	
1947	서양사		김홍주, 임병립	동지사	
1947	중등 서양사		노도양	동아문화사	
1946	중등 조선 지리		정홍헌	정음사	
1946	중등 신수학		조선수물연구회	조선공업문화사	
1947	신중등 수학	1(상·하)	박경찬	한성출판사	
1947	중등 수학 교과서	4(하)	오용진	조선출판사	
1947	중등 수학	1	이준찬	국제출판사	
1947	중등 수학	2—1	이준찬	국제출판사	
1947	중등 수학	1	이윤식	정음사	
1947	중등 수학	2	이윤식	정음사	
1947	중등 수학	3	이윤식	정음사	
1947	중등 수학	4	이윤식	정음사	
1947	중등 최신 수학		이준찬	제일출판사	
1946	중등 동물학 교과서	1, 2	중등교재편찬위원회	제일출판사	
1947	일반 과학	3	맹원영	조선교학도서주식회사	
1947	일반 과학	초급용	이덕봉, 이덕상	을유문화사	
1947	일반 과학(물상 1)	3	박철재	대성인쇄소	
1947	일반 과학(물상)	1	신효선, 이종제	을유문화사	
1947	일반 과학(물상)	2	신효선, 이종제	을유문화사	
1947	일반 과학(물상)	3	신효선, 이종제	을유문화사	
1947	일반 과학(식물계)		신효선, 이종제	을유문화사	
1947	중등 과학 생물	4, 5	이덕봉, 이덕상	을유문화사	
1947	중등 과학 생물	4, 5	이덕봉, 이덕상	을유문화사	
1947	중등 교육 일반 과학		조병옥	조선교학도서주식회사	
1947	중등 동물		석주명	교육연구사	
1947	중등 물리		김봉수	정음사	
1947	중등 인류 교과서(인체 생리)		윤익병	수문관	
1947	고급 중학 물리		문화당편집위원회	문화당	
1947	최신 과학	1	조병옥	민중서관	
1946	중등 노래 교본		계정식	교회음악연구회	
1947	중등 악전 교과서		김순룡	연진사	

1947	중등 음악		오창진	
1947	여자 중등 음악 교본(상)	1	김신태	금융도서주식회사
1947	여자 중등 음악 교본(중)	2	김신태	금융도서주식회사
1947	여자 중등 음악 교본(하)	3	김신태	금융도서주식회사
1946	중등 습자첩	1	김대석	금융도서주식회사
1946	중등 습자첩	2	김대석	금융도서주식회사
1946	중등 습자첩	3	김대석	금융도서주식회사
1946	중등 글씨본	1	이철향	조선교학도서주식회사
1946	중등 글씨본	2	이철향	조선교학도서주식회사
1946	중등 글씨본	3	이철향	조선교학도서주식회사
1947	생물학 교본		백대현	세문사
1947	토양 비료		김희태, 홍기창	정음사
1947	중등 작물학		이창구	동아문화사
1947	중등 작물학		중등교재연구회	세문사
1947	중등 가사 교본		김정희	문화당

자료: 李鍾國, 앞의 책, 「大韓教科書史: 1948~1998」, pp.103~104

그 후, 미군정 말기인 1948년 6월 현재의 교과용 도서 편찬·발행 실태⁹⁶⁾를 보면 「한글 첫 걸음」 등 초기의 것을 포함하여 16종 54책으로 증대되었다. 당시 총 발행 부수는 13,455,114부에 이르렀다. 이는 1946년 실적(20책)에 비해 책수면에서 34책이 늘어나 2.7배, 또 발행 부수의 경우는 1946년 대비 54%가 증가(7,246,124)된 실적인 것이다.

한편, 교과용 도서의 편찬 체제를 보면 그 사용 대상의 표시를 대체로 학년·학기별로 구분한 것도 있지만, 상·중·하 형식으로 분책한 형식 또한 적지 않았다. 판형은 5·7판(국판)이 주종이었고, 더러 4·6판도 혼용되었다. 용지의 경우는 지질이 좋지 않은 마분지를 주로 사용했고, 군정청 학무국 발행의 교과서 중 일부만 미군 당국에서 조달한 모조지 또는 갱지류를 썼다. 따라서 수업 시수, 진도 등 교과 학습에 따른 충분한 지도 방침이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쪽수 안배도 매우 불규칙한 체제였다. 예컨대, 국어과 교과서의 경우를 보면 최소 49쪽(「한글 첫 걸음」의 예)에서 최대 199쪽(「중등 국어 교본」 중권의 예)에 이르기까지 그 분량 차이가 컸다. 또, 검정 도서였던 「신편 고등 국문법」⁹⁷⁾은 당시로 볼 때 최대 분량 수준인 229쪽에 이르러 교과서에 따라 격차가 심했다.

활자의 경우는 자형(字形)이 다른 활자체를 동일 교과서의 교과서에 적용하기도 했는데, 예컨대 「초등 국어」 상·중권이 같은 것으로 되어 있고, 그 하권은 다른 것으로 되어

96) 이에 관해서는; 吳天錫, 앞의 책, 「韓國新教育史·下」, p. 18 참조.

97) 정열모 지음, 한글문화사, 1946.10.20.

고 있었던 까닭이다.

열한째, 교과서는 왜 중차대한 교육 수단인가—이 문제는 뜻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당시대 편수사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다.

3. 신생 정부의 교육 과정 · 교과용 도서와 전시 교육

3년간에 걸친 미군정에 의한 교육 행정은 1947년 6월부터 새 정부를 발족시키기 위한 과도 정부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그 전반적인 질서를 승계하게 되었다. 국채와 주권을 정한 헌법이 1948년 7월 17일에 제정 · 공포되었고, 그에 뒤이어 교육법이 제정 · 공포(법률 제86호)된 것은 정부 수립 이듬해인 1949년 12월 31일이었다. 따라서, 이의 시행에 필요한 각종 법령들의 제정 · 공포도 후속되었다.⁹⁸⁾ 특히, 교수요목 제정 심의회 규정을 공포(1950. 6. 2)하여 각급 학교 각 교과별 교육 과정을 마련하기 위해 모든 준비를 서둘렀는데, 이는 과거 미군정기 때 경험했던 모순점을 바로잡아 새롭게 정비한다는 취지에서였다. 그러나 6·25전쟁이 일어나는 바람에 모든 교육 행정은 전시 체제로 급전되고 말았다.

이 단원에서는 정부 수립 직후의 교육 과정 · 교과용 도서 편찬과 전시 체제하에서의 전시 교육—전시 교재 편찬 · 발행에 따른 내용이 그 전반적인 범위가 된다. 그럼에 있어, 정부 수립과 함께 새롭게 표방된 교육 이념의 형성과 그 당시 및 6·25전쟁기에 적용된 교과용 도서에 관한 상황을 알아보고자 한다.

(1) 교육 이념—‘홍익 인간’의 구현

우리 교육법의 이념적 기반(基幹)이 되고 있는 ‘홍익 인간(弘益人間)’은 바람직한 한국인 육성을 지향하기 위한 정신적 지표로서 민족사관에 뿌리를 둔 원론인 동시에 그 공식적인 표현이기도 하다.

홍익 인간이라는 말은 ‘세상에 널리 이로움을 가져다 주는 인간’ 혹은 ‘널리 인간 세계를 이롭게 한다’는 뜻을 지닌다. 일연(一然)의 「삼국유사(三國遺事)」와 이승휴(李承休)의 「제왕운기(帝王韻紀)」 등에 제시되어 있는 명제(命題)로, 단군왕검에 의한 고조선

98) 국정교과용도서편찬규정(대통령령 제337호, 1949.4.29.), 교과용도서검인정규정(대통령령 제336호, 1950.4.29.), 국정교과용도서편찬심의회규정(문교부령 제8호, 1950.6.2.), 교수요목제정심의회규정(문교부령 제9호, 1950.6.2.) 등.

의 건국 신화로부터 유래된 말이다. 이 말을 교육 이념의 공식적인 표현으로 사용하게 된 것은 과거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건국강령(建國綱領)」(1935) 속에 담은 이후의 일이었다.⁹⁹⁾

홍익 인간의 의의가 교육 이념으로 굳혀지게 된 것은 조선교육심의회에 의해서였다. 이 심의회의 제1분과위원회¹⁰⁰⁾에 교육 이념 제정 임무가 주어졌던 것이다. 이에 따라, 식민지 잔재를 없애고 한국의 교육 이념을 설정하기 위하여 이를 함축할 만한 어구를 모색하게 되었다.

홍익 인간의 이념을 최초로 제안한 것은 조선교육심의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 중의 한 사람이었던 백낙준에 의해서였다. 그는, 홍익 인간의 이념을 “인간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사회를 위하여 유익한 일을 할 수 있게” 또는 “세계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등의 의미로 해석했다.¹⁰¹⁾

한편, 홍익 인간의 이념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에 선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예컨대, 오천석은 “홍익 인간은 추상적이며 신화적인 어구이기 때문에 보다 현실적이며 구체적인 어구로 표현해야 한다.”¹⁰²⁾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홍익 인간’이라는 말은 마침내 교육법 제1조 중 목적을 규정한 내용에 반영되었는데, 그 불변성(여러 차례의 개정이 있었으나 그대로 존속됨.)을 놓고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즉, 교육법 제1조를 보면

교육은 홍익 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케 하여 민주 국가 발전에 봉사하며 인류 공영의 이상 실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 되어 있다. 여기에 반영된 ‘홍익 인간’이라는 말은 한국의 교육 이념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이돈희 교수는 이에 대하여 더러 부정적인 견해가 있었음을 지적하고,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들었다.

하나, 그 말이 제도적 교육의 이념을 표현하는 데 충분한 개념적 포괄성을 지니기는 하지만, 교육의 제도와 활동을 명시적으로 주도할 만큼의 명확한 방향과 의미를 시사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반응은 홍익 인간의 이념 그 자체가 제도적 체제나 구체적 활동의 ‘교육적임’을 분

99) 이남영, ‘사상사에서 본 단군 신화’, 「한국 사상의 심층 연구」(서울: 도서출판 우석, 1982), p. 62.

100) 위원: 안재홍, 하경덕, 백낙준, 김활란, 홍정석.

101) 白樂濬, 「韓國教育과 民族精神」(서울: 韓國教育文化協會, 1953), p.76, p.78. 鄭永壽 외, 「韓國 教育政策의 理念」(서울: 韓國教育開發院, 1985), p.86에서 재인용.

102) 吳天錫, 「새 教育法을 批判함」, 「새 교육」제3권 1,2호, 1950.1., p.47. 鄭永壽 외, 앞의 책, p.87에서 재인용.

별하고 평가하는 기준으로 작용하기에는 모호하며, 또한 그 이념이 교육에 관한 가치론적 논의나 실천적 지침을 전개하는 데 체계적인 문제 의식과 분석적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그 말은 하나의 신화에서 나온 고사적(故事的) 표현으로서 현대적 사고와 상황에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¹⁰³⁾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군 신화는 한민족이 외세의 작용으로 수난을 당하고 위기에 처할 때마다 요구하는 구심체로 역할하였고, 민족의 근원에 대한 공동의 의식을 소유하게 하는 근거를 제공했으며, 민족 공동체의 정조(情操)를 형성하는 정신적 배경으로 작용한 만큼의 의미와 가치를 지닌 것이 사실이다.¹⁰⁴⁾

이렇듯, 교육법 중 교육 목적을 규정한 머리 조문에 반영된 ‘홍익 인간’이 한국민의 거시적 교육 목표로 채택된 것은 조선교육심의회가 제4차 전체 회의를 열었을 때였다. 이 회의에서 홍익 인간 이념을 관철하기 위하여 교육 방침을 세웠는데, 그 중심에 두고 있었던 것은 민주주의 실현과 민족주의를 표방한다는 데 있었다.

(2) 교육 과정 · 교과용 도서의 운영

1) 교육 과정의 운영

홍익 인간 이념 구현을 교육법에 명시하고, 주권 교육을 실현하는 문교 사업이 점차로 궤도 진입이 추진되고 있을 무렵에 6·25전쟁을 겪게 되었다. 그러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정부 수립으로부터 1954년 4월에 제1차 교과 과정이 제정·공포되기까지 신생 정부에 의한 교육 과정이 적용되기 어려운 공백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새 교육 과정을 제정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교수요목제정심의회규정’을 1950년 6월 2일에 제정·공포(문교부령 제9호)했으나, 이로부터 한 달도 채 안 된 상태에서 6·25전쟁을 겪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일단 준비는 되어 있었지만, 실현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비록 각급 학교 및 각과 교육 과정을 새롭게 제정할 단계에서 좌초당하고 만 셈이지만, 위의 심의회 규정에서는 미군정기 때 경험한 교수 요목상의 문제점들을 진단하여 여러 전향적(前向的)인 사안을 반영하려 노력했다. 그러한 노력은 문교부가 밝힌 다음의 글에서도 엿볼 수 있다.

103) 이돈희, ‘韓國 敎育理念의 어제와 오늘’, 『敎育學研究』제 32권 제 2호(서울: 한국교육학회, 1995.5.) p. 4.

104) 이돈희, 위의 논문, p. 5.

이 때의 교수 요목의 특색으로는, 첫째로 교과와 지도 내용을 상세히 표시하고, 기초 능력을 배양하는 데 주력을 두었으나, 그 반면에 내용, 정도가 대체적으로 학생 능력보다 지나친 점이 있다는 평을 면치 못하였다. 이렇게 된 이유의 하나는……일제 식민지 정책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일반 교육 정도가 저락된 것을 급속히 회복해 보겠다는 열정과……둘째로 지적인 면에서의 지식은 상당히 고답적이었다.¹⁰⁵⁾

그러면서 6·25전쟁 직전까지의 준비 상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새교육 실천 운동이 국내에서 활발하게 전개됨에 따라 교육 과정 개혁의 기운은 우리 정부가 선 지 얼마 후부터 더욱 현저해졌다.……이 일련의 과정을 밟아오기까지 군정 시대와 과정 시대에 완비하지 못한 각과 교수 요목을 전부 정비하였다. 동시에, 교육상 무리가 있는 부분의 교과에 대해서는 그 과목의 교수 요목을 수정하고, 이것에 맞는 교과서의 검토, 국정 교과서의 발행 등 부단히 적절한 교육, 시대에 적응된 교육을 실시해 가는 데 진지한 연구와 시책을 겸행해 왔던 것이다.……4283년 6월에 교수요목제정심의회규정을 공포하여 전면적으로 각급 학교 각과 교육 과정을 제정할 단계에 이르러 모든 준비와 사업을 개시하려는 순간에 뜻하지 않던 6·25사변이 일어나 이 일은 일시 중단되지 않을 수 없었다.¹⁰⁶⁾

위의 글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정부 수립과 함께 각급 학교 각 교과와 교육 과정을 전면 개정하려던 계획은 전쟁 발발로 하여 순식간에 무산되고 말았다. 이 때문에 전시하의 전시 문교 체제로 후속되었으며, 그에 대한 회복도 휴전 후로 밀려 나가게 되었다. 그것은 제1차 교육 과정 제정이 적어도 1950학년도 후반기에 완료되었을 터인데, 이로 부터 4년 뒤인 1954년 4월에 이르러 그 성립이 가능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큰 영역으로 본다면 8·15광복 직후부터 적용되어 왔던 교수 요목이 여전히 준거되고 있었으며, 거기에서 6·25 직후 전시 체제하의 교과 운영을 임시 변통으로 적용한 이원적 기능이 유지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교육에 관한 기본법인 교육법이 이미 공포(1949. 12. 31)되어 모든 교육 운영의 모근(母根據)로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이에서 규정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교육과정의 운영도 그 이념에 따랐다. 이것이 비록 시행 첫 단계에서 무위화된 것이나 다름 없지만, 건국 교육을 운영하기 위한 정지 작업이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이와 관련하여, 초·중등 학교의 교육 과정 운영 원칙을 차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초등 교육의 운영

국민 학교의 교육 목적은 교육법 제93조에 “국민 학교는 학교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

105) 문교부, 「문교개관」(서울: 문교부, 1959), p. 126.

106) 문교부, 위의 책, pp. 127~128.

인 초등 보통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 규정하여 그 교육 운영 목적을 명시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 동법 제94조에는 다음과 같은 7개 항이 설정되어 있다.

- ㉡ 일상 생활에 필요한 국어를 정확하게 이해하며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 ㉢ 개인과 사회와 국가와의 관계를 이해시켜 도의심과 책임감,公德심과 협동 정신을 기른다. 특히, 향토와 민족의 전통과 현상을 정확하게 이해시켜 민족 의식을 양양하며, 독립 자존의 기풍을 기르는 동시에 국제 협조의 정신을 기른다.
- ㉣ 일상 생활에 나타나는 자연 사물과 현상을 과학적으로 고찰하며 처리하는 능력을 기른다.
- ㉤ 일상 생활에 필요한 수량적인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여 처리하는 능력을 기른다.
- ㉥ 일상 생활에 필요한 의식주와 직업 등에 대하여 기초적인 이해와 기능을 기르며 근로 역행, 자립 자활의 능력을 기른다.
- ㉦ 인간 생활을 명랑하고 화락(和樂)하게 하는 음악, 미술, 문예 등에 대하여 기초적인 이해와 기능을 기른다.
- ㉧ 보건 생활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며 이에 필요한 습관을 길러 심신이 조화적으로 발 달하도록 한다.

이로써 국어, 사회 생활, 자연, 산수, 실과, 음악, 미술, 보건의 8개 교과에 대한 지도 영역과 지도 방침을 규정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 규정은 교육 과정의 편제에 제대로 반영을 보지 못한 채 전쟁의 와중으로 휩쓸리게 되었다. 또, 교육법 제155조에 “대학 및 사범 대학, 각종 학교를 제외한 각 학교의 학과, 교과는 대통령령으로, 각 교과의 교수 요지 및 수업 시간 수를 문교부령으로써 정한다.”라 규정하고 있었으나, 결국 그 실현이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② 중등 교육의 운영

중학교의 교육 목적은 교육법 제 100조에 “중학교는 국민 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 보통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 규정하여 그 교육 운영 목적을 명시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 동법 제 101조에 다음과 같은 4개 항이 설정되어 있다.

- ㉡ 국민 학교 교육의 성과를 더욱 발전 확충시켜 중견 국민으로서 필요한 품성과 자질을 기른다.
- ㉢ 사회에서 필요한 직업에 관한 지식과 기능, 근로를 존중하는 정신과 행동 또는 개성에 맞는 장래의 진로를 결정하는 능력을 기른다.
- ㉣ 학교 내외에 있어서의 자율적 활동을 조장하며 감정을 바르게 하고 공정한 판단력을 기른다.
- ㉤ 신체를 양호(養護) 단련하여 체력을 증진시키며 건전한 정신을 기른다.

중학교 교육 목적의 실현은 거의 성인에 가까운 인성 개발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등 학교의 교육 목적은 교육법 제 104조에 “고등 학교는 중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고등 보통 교육과 전문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 규정하여 그 교육 운영 목적을 명시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 동법 제 105조에 다음과 같은 3개 항이 설정되어 있다.

- ㉠ 중학교 교육의 성과를 더욱 발전 확충시켜 중견 국민으로서 필요한 품성과 기능을 기른다.
- ㉡ 국가 사회에 대한 이해와 건전한 비판력을 기른다.
- ㉢ 민족의 사명을 자각하고 체위의 향상을 도모하며, 개성에 맞는 장래 진로를 결정케 하며, 일반적 교양을 높이고 전문적 기능을 기른다.

이와 같이, 중학교는 국민 학교 교육의 성과 위에서, 또 고등 학교의 경우는 중학교 교육을 더욱 발전 확충시켜 중견 국민으로서의 자질을 기를 수 있도록 그 교육 운영 과정이 제시되어 있었다.

그런데 당시 중학교 및 고등 학교의 학제 운영은 짧은 기간 동안에 거듭된 변경으로 인하여 많은 혼선을 빚었다. 예컨대, 중학교의 수업 연한이 원래 4년이었으나 고등 학교에 진학할 경우 3년으로 했고, 또 고등 학교의 경우는 2년 내지 4년이던 것을 3년으로 개정(1950.3.)한 바 있다. 여기서, 종래의 중학교 체제는 정부 수립과 함께 ‘중등 교육’으로 제도화하여 초급 중학교 3년, 고급 중학교 3년으로 편제되어 있었다. 중학교의 수업 연한은 초급 중학이라 하여 3년을 4년으로, 고급 중학의 경우는 2년 내지 4년제(중학교 3년 수료 후 입학) 고등 학교로 변경, 개칭하는 등 그 기본적인 제도 개정이 거듭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시행도 보지 못한 채 다시금 중학교 4년, 고등 학교 3년(고교 입학 자격은 중학교 3년 수료자)으로 변경을 보았다. 이 같은 수업 연한 적용이 중학교 3년의 원칙으로 사실상 확립된 것은 수복 이후의 일이었다.

요컨대, 이 시기의 교육 내용은 중등 교육 제도의 빈번한 변경으로 그 궤를 찾지 못한 채 일제 시대의 교육을 답습해 오던 중 6·25전쟁을 겪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¹⁰⁷⁾ 다만, 교육 내용에서 초급·고급 중학교가 함께 국어, 사회 생활, 수학, 과학, 체육, 교련, 실업, 가정, 음악, 미술 및 외국어를 필수와 선택으로 나누어 운영한 것이 공통점이다. 또, 중학교의 경우는 전교과의 15%, 고등 학교는 전교과의 10% 이상 실과를 포함으로써 1인 1기를 갖추게 한다는 교육 방침을 실현하고자 했다.

107) 咸宗圭, 앞의 책, 「教育課程沿革調査·前篇」, p. 205.

2) 교과용 도서의 운영

정부 수립 후 교과용 도서에 관한 첫 근거 규정은 교육 관련 모법인 교육법에 제시되어 있다. 즉, 교육법 제157조에

사범대학, 대학을 제외한 각 학교의 교과용 도서는 문교부가 저작권을 가졌거나 검정 또는 인정한 것에 한한다. 교과용 도서의 저작 검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라 규정한 것이 그것이다. 이 조문은 정부 통제형 교과서 제도를 굳히게 한 상위 근거가 되었으며, 이후로 많은 논의를 불러 일으킨 바 있다. 특히, 6·29선언과 함께 붙여 닦친 '80년대 후반의 '민주화 물결'은 교육 현장에도 밀려들어 '우리 교사의 손으로 교과서를'이라는 구호가 등장하기도 했다. 당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의 상당수 교사들은 교육법 제 157조가 헌법 제 31조 제 4항(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중립성), 헌법 제 21조 제 1항(출판의 자유), 헌법 제 22조 제 1항(학문의 자유)에 위배된다고 하면서 기존의 교과서 제도를 부정하려 했고, 교과서의 자유 발행권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같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교육법이 적용된 지 반세기를 넘기고 있지만, 이 법률 중 제 157조는 여전히 논의거리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많은 제도적 보완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예컨대, 검정 도서의 종수 제한 철폐를 실현한 것이라든지 견본을 검토하여 학교 재량으로 도서를 선택하게 한 것 등은 주목되는 진전 현상이라 할 것이다.

다시 앞의 내용으로 환원하여, 교육법이 제정·공포되자 그 시행에 필요한 각종 법령들의 후속 또한 시급히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에 따라 1950년 4월 29일 '교과용 도서검인정규정'(대통령령 제 336호) 및 '국정교과용도서편찬규정'(대통령령 제 337호)이 같은 날짜로 공포를 보았다. 뒤이어, 같은 해 6월 2일에는 '국정교과용도서편찬심의회규정'(문교부령 제8호)과 교육 과정 제정을 전제로 한 '교수요목제정심의회규정'(문교부령 제9호)이 공포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관련법들이 공포된 것은 교육법에 반영된 교육 이념에 터하여 교육 과정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교과용 도서를 갖추기 위한 데 목적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 수립 직후의 교과용 도서 편찬·발행 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그럼에 있어, 당시의 국·검정 도서 형편과 실업계 전문 교과와 교과서 편찬 사정도 함께 알아볼 것이다. 특히, 실업계 교과서는 교육 과정·교과서사 서술에서 소홀히 취급

되어 왔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 분야의 교과서들은 정부 수립과 더불어 매우 중요한 교육 수단으로 역할해 왔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의 산업 발전이 실업 교육으로부터 근원한다고 볼 때, 그 의의는 특별히 중요한 데가 있다.

① 국·검인정 교과서의 발행 실태

1949년 7월 11일, 안호상 문교부장관은 ‘교과서 사용에 관한 정부 통첩’을 서울시장, 각 도지사, 각 대학장 앞으로 발송한 바 있다. 이에서, ‘1949년도 사용 교과서에 대한 일’을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밝혔는데, 그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과도 정부시에 허가된 도서 및 4282년(1949년) 8월 말까지 유효 기한인 검인정 도서는 전부 무효로 함.
2. 4282년도용으로 신규로 사정 허가된 도서에 한하여 쓰기로 되었음.
3. 국민 학교 교과서는 국정 교과서를 쓸 것.¹⁰⁸⁾

이와 같이, 국·검인정 교과서에 대한 사용 기한과 그 적용 범위를 통첩 형식으로 규제했다. 또, 중등 학교 교과서의 경우 국정 교과서를 쓸 수 있는 교과목이라면 반드시 ‘국정’을 사용해야 하며, ‘국정’이 없는 교과목에 대해서만 검정 교과서를 사용해야 한다는 방침도 아울러 통첩했다. 따라서, 검정 도서가 없는 교과이거나 필요에 의한 교과목은 인정 도서를 선택하여 사용하되, 학교장에게 일임(문교부 편수국장의 허가를 얻는 선에서)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통첩은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천명된 교과서 사용에 관한 주무 당국의 공식 문건이었다.

당시에 있어 교과서 형편을 보면, 1949년 8월 현재로 국민 학교 교과서의 경우는 제반 관련 법령(‘교과용도서검인정규정’ 등)이 공포되기 이전에 이미 전학년·전교과에 걸쳐 그 전량이 발행된 상태였다. 이에 따라 “국민 학교 교과서는 국정 교과서를 쓸 것.”이라 통첩했던 것이다. 그러나 중등 교육 과정에 필요로 하는 신규 교과서들은 편찬 중이거나 또 편찬이 완료되었다 할지라도 극소수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일제 식민지 시대에 쓰던 교과서를 번역 또는 모작(模作)한 것을 교재로 사용하고 있었던 실정이었다. 이 때문에, 교육 내용이 일제식 그대로의 답습으로 그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¹⁰⁹⁾

그래서 당시의 교과서 발행 정책은 그 관련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첩’ 형식으로 각종 교과용 도서의 사용 시한과 범위를 통제했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관련법을 제정·공포(앞의 ‘교과용도서검인정규정’ 및 ‘국정교과용도서편찬규정’ 등)하게 된 것

108) 문교부 편수국, 앞의 책, 「편수시보」 제1호, p. 132.

109) 咸宗圭, 앞의 책, 「教育課程沿革調査」, p.210.

은 1950년 6월에 이르러서였다.

요컨대, 제도적 실현이 시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과도기적 여건으로 볼 때 쉽지 않았던 까닭이다. 더구나, 미군정기 때부터 교과서 제도에 대한 어떤 확고한 정책이 굳혀 있었다기보다는, 당국의 허가를 얻는 선에서 ‘적절한 교재를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응급 처방식 관행이 이어져 왔다는 사실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정부 수립 당시만 해도 일부 보통 교과와 교과서들이 한꺼번에 다발될 조짐을 보였고, 거기에다 문맹 퇴치 운동에 편승한 수많은 보조 교재류가 이곳 저곳에서 성행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당국에서는 이 문제를 중시한 나머지 비록 제도적 장치(관련법)를 마련하기 이전일지라도, 국민 학교용 전량과 일부 중등 교과서를 국정 교과서로 발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그렇게 하여 출판된 도서를 정책적으로(통첩을 통하여) 전용(專用)하도록 조치했던 것이다. 1949학년도 현재 국정 교과서 발행 상황을 보면 <표 I -14>와 같다.

<표 I -14> 국정 교과서 발행 상황(1949학년도)

책 이 름	학년 · 학기용	발행 부수	비 고*
초 등 국 어	1—1	597,300	
	1—2	400,000	
	2—1	302,100	
	2—2	71,120	
	3—1	317,600	
	3—2	350,000	
	4—1	260,100	
	4—2	180,800	
	5—1	379,400	
	5—2	260,400	
	6—1	298,600	
	6—2	231,550	
초 등 셈 본	1—1	180,000	
	1—2	471,263	
	2—1	220,000	
	2—2	597,700	
	3—1	180,700	
	3—2	96,500	
	4—1	260,000	
	4—2	270,000	
	5—1	270,000	
	5—2	220,300	
	6—1	211,550	
	6—2	199,000	
과 학 공 부	4—1	352,000	

	5—1	381,000	
	6—1	299,500	
	6—2	316,700	
사 회 생 활	3—1	660,200	
	3—2	143,000	
	4—1	340,200	
	4—2	100,000	
	5—1	450,100	
	5—2	163,500	
	6—1	285,211	
	6—2	185,025	
	6—3	40,000	6—2의 것을 분책함.
초 등 노 래 책	1	230,764	
	2	199,960	
	3	161,481	
	4	195,247	
	5	175,104	
	6	110,000	
초 등 공 작	1	100,000	
	2	100,000	
	3	100,000	
초 등 그 림 책	1	99,149	
	2	69,125	
	3	60,026	
	4	51,500	
	5	60,350	
	6	56,296	
초 등 글 씨 본	4	70,000	
	5	69,600	
	6	68,800	
초 등 가 사	5	57,179	
	6	30,071	
농 사 짓 기	5	380,000	
	6	300,000	
다른 나라의 생활 지도와 공부	5—1	15,000	교사용 지도서임.
중 등 국 어	1	87,018	이하 초급 중학교용임.
	2	65,494	
	3	56,842	
	4	31,000	이하 고급 중학교용임.
	5	20,000	
	(중)	2,019	
	(하)	22	
문 화 론	6	6,000	
누 에 치 기	초 급	4,915	
뽕나무 가꾸기	고 급	5,000	
합 계	(70책)	13,561,181	

* ‘비교’는 필자가 해 놓음.

자료: 文敎部, 「大韓民國敎育概況」(서울: 文敎部, 1950), pp. 32~36.

<표 I -14>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49학년도 현재로 국정 교과서의 발행 규모는 모두 70책 13,561,181부에 이른다. 이로써 국민 학교의 것은 일단 국정 교과서 체제로 완료된 셈이다. 그러나 이 도서들은 단지 1949학년도용만으로 공급되었을 뿐이며, 6·25전쟁 중에는 전시 체제하의 교과 교육으로 급전되는 등 그 적용과 생산 활동이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또, 극도의 용지난이 겹쳐 교과서 제작에 근본적인 차질을 빚게 되었는데, 이는 건국 문교 행정을 이행하는 데 있어 심각한 걸림돌로 드러나 있었다. 용지난 문제는, 일제 때에도 그들의 전쟁 수행에 따른 군납으로 징발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부 수립 직후에도 곤란을 겪기는 마찬가지였다. 당시의 형편으로 볼 때 국내 제조업 전반이 몹시 열악했고, 우리의 기술과 산업 기반이 워낙 취약했기 때문이다.

1949년 현재로 교과용 도서 인쇄에 소요되는 용지는 갱지 7,600톤에 모조지(백상지) 1,500톤을 확보해야만 가능한 실정이었다. 이 중에서, 갱지의 경우는 무려 4,600톤이나 부족한 형편이었고, 모조지의 경우는 그나마 전무한 실정이었다.¹¹⁰⁾

이로 하여 교과용 도서는 물론, 신문 및 일반 도서를 출판하는 데 있어 막대한 지장과 애로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제로 요약된다.

첫째, 소비량의 증대에 비하여 국내 생산이 부족하고,
둘째, 수입량의 부족과 그에 따른 지가(紙價)의 양등이 심하며,
셋째, 외환 부족으로 하여 대량 수입이 곤란한 형편이다.¹¹¹⁾

이렇듯, 당시의 어려운 용지 사정은 교과용 도서 생산에 직격적인 영향을 받고 있었다. 이 문제는 ‘건국 문교’가 겨우 문을 열어 갈 즈음 6·25전쟁을 겪게 되면서 거의 전량을 운크라(국제연합 한국재건위원회)와 자유아시아위원회의 원조에 의지하는 등 더욱 극심한 용지난을 경험한 바 있다.

한편, 김인정 도서도 다종권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표 I -15>는 1949학년도의 통계를 보인 것이다.

110) 文敎部, 「大韓民國敎育概況」(서울: 文敎部, 1950), p.40.

111) 文敎部, 위의 자료, 같은 면.

<표 I -15> 검인정 교과용 도서 발행 상황(1949)

교 과 목	책 이 름	중 등 학 교		국 민 학 교		비 고*
		종 수	책 수	종 수	책 수	
국 어	중등 국어(부독본)	6	18			(인정)
	작 문	3	5			(인정)
	문 법	7	8			(인정)
	고 문	1	1			(인정)
	문 학 독 본	1	1			(인정)
	한 문	4	16			(검정)
	국 어 준 비 책			1	1	(인정) 자모 교육 자료임.
과 학	물 상	6	13			(검정)
	식 물	8	8			(검정)
	동 물	7	7			(검정)
	인 류	8	8			(검정)
	물 리	3	6			(검정)
	화 학	4	8			(검정)
	생 물	2	4			(인정)
수 학	수 학	10	37			(검정)
사 생 회 활	우리 나라의 생활	7	7			(검정) 한국사 교과서임.
	이웃 나 라 생활	5	5			(인정) 동양사 교과서임.
	먼 나 라 생 활	5	5			(검정) 세계사 교과서임.
	먼 나 라 생활 부도	1	1			(검정)
	인류 문화의 발달	1	1			(검정)
	우리 나라의 생활	4	4			(검정) 한국 지리 교과서임.
	이웃 나라의 생활	6	6			(인정) 동양 지리 교과서임.
	먼 나 라 생 활	8	8			(검정) 세계 지리 교과서임.
	지 리 통 론	4	4			(검정)
	지 도	4	4			(인정) 중등 지리 부도임.
	초 등 지 도			8	8	(인정)
	초등 사회 생활 공부			4	9	(인정)
	공 민	4	13			(검정)
외 국 어	ENGLISH READERS	12	49			(검정)
	ENGLISH GRAMMAR	2	2			(인정)
	ENGLISH COMPOSITION	3	7			(인정)
	영어 부독본	1	3			(인정)
	DEUTSCHE	3	5			(검정)
	GRAMMATIKE	2	2			(인정)
	중 국 어	2	4			(검정)
	PENMANSHIP	2	6			(인정)
미 술	중 등 미 술	3	9			(검정)
	초 등 미 술			5	30	(검정)
	중 등 글 씨 체	4	12			(인정) 서예 교과서임.
	초 등 글 씨 체			2	6	(검정) 서예 교과서임.
	중등 첼필 습자집	1	3			(인정)
	초 등 공 작			2	12	(인정)
	용 기 화	2	3			(검정)

실업	상업관계	7	11			(검정) 상업 교과의 교과서임.
	농업관계	9	9			(검정) 농업 교과의 교과서임.
	임업관계	1	1			(검정) 임업 교과의 교과서임.
	가사재봉	5	12			(검정)
음악	음악교본	4	11			(검정)
	울갠교본	1	1			(검정)
	악전	1	1			(검정)
	음악통론	1	1			(검정)
	코-르 위본겐	1	1			(인정)
	초등음악			1	6	(인정)
체육	체육보건	1	1			(인정)
	대한수기신호법	1	1			(인정)
	학교교련교본	1	1			(인정)
	보건공부			1	6	(인정)
기타	심리학개론	1	1			(검정)
	교육학	2	2			(검정)
	방학과제장	6	25			(인정)
	초등방학과제장			2	1	(인정)
계		199	383	26	89	(총 종수 225종, 총 책수 472책)

* ‘비교’는 필자가 조사한 것임.

자료: 文教部, 앞의 자료, 「大韓民國文教概況」, pp. 36~39.

<표 I-15>에 정리되어 있듯이, 1949학년도용으로 편찬·발행된 검인정 교과서는 국민 학교용 26종 89책, 중등 학교용 199종 383책, 이렇게 하여 총 225종 472책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에서 국민 학교 교과서 중 일부도 검인정 도서(26종 89책)로 개발, 공급되었는데, 이는 제1차 교과 과정이 적용된 때(1954. 4)부터 소멸되었다. 왜냐 하면, 국민 학교 교과서는 그 전량이 국정 교과서로 대체되었기 때문이다.

1949학년도의 검인정 교과서 실태를 보면, 인정 도서의 경우도 총 종수(225종) 중 36%(81종)를 점유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그 이유는 인정 도서의 사용 폭을 크게 확대해 놓고 있었던 까닭이다. 이에 관해서는 ‘교과서 사용에 관한 문교부 통첩’(1949. 7. 10)에서도

- 부독본 또는 참고서로 인정받은 것의 수용
- 검정 교과서 이외에 보충을 필요로 하는 것
- 검정 도서가 없는 교과목의 경우 인정 도서에로의 대체
- 교과서를 반드시 쓰지 않아도 무방한 교과의 교과서
- 실업계 전문 교과서의 인정 폭 확대¹¹²⁾

등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실업계 전문 교과서에 대한 인정

112) 문교부, ‘교과서 사용에 관한 문교부 통첩’(1949.7.10) 중 4~11항 참조.

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방침은, 이 분야의 교과서 개발이 거의 답보 상태에 있었다는 현실을 중시하여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였다.

정부 수립 직후에 있어, 검정 도서의 검정 절차는 우선 단위 출원본을 대상으로 하여 3~5인의 교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 위원에게 사열을 위촉하는 일로 첫 순서를 밟았다. 이들 심사 위원은 출원본에 대한 사열 보고서(가부를 결정한 내용)를 작성하여 당국이 조직한 검인정위원회에 제출하면 상부의 결재를 통해 최종 결정하는 과정으로 되어 있다. 요컨대, 집필→출원→심사→발행으로 이어지는 단순 수순이었던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더러는 국가 이익에 반하는 내용이 심사에 통과된다는지, 더구나 반국가적인 인물(일제 때 협력 인사 등)이 저자로 드러나게 되는 등으로 하여, 이른바 ‘불순 교재’가 검인정되는 사례들이 있었다는 것이다.¹¹³⁾ 이런 일은 교과서 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던 과도기적 현상이었다.

광복 직후에 있어 정부가 저작권을 가진 국정 교과서를 번각 발행한 곳은 조선서적인 채주식회사가 주로 초등 학교용을, 조선교학도서주식회사의 경우는 초등 학교용 「음악」, 「가사」, 그리고 「중등 국어」를, 그리고 대한교과서주식회사는 「우리 나라의 발달」, 「초등 그림책」 등과 일부 실업계 전문 교과와 교과서를, 대한인쇄공사는 「초등 공작」을 각각 생산 공급한 바 있다. 이 중, 대한교과서주식회사의 경우는 수복 이후로 많은 실업계 전문 교과서를 생산 공급하는 등 교과서 전업 기업으로 이바지함이 컸다.

② 실업계 전문 교과서의 발행과 그 실태¹¹⁴⁾

신생 정부는 향후 국가 건설의 지주를 실업 진흥에 두고자 했다. 그래서 농업, 공업, 상업, 그리고 수산·해운 등 기간 산업이 부흥해야만 국기(國基)를 터잡을 수 있다고 보았다. 요컨대, 이에 대한 근본적인 활로 개발이야말로 교육에서 찾아야 된다는 사실을 당위성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한 기본 인식은 교육법에서도 제시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근검 노작(勤儉勞作)하고 무실 역행(務實力行)하며, 유능한 생산자요 현명한 소비자기 되어 건실한 경제 생활을 하게 한다.”¹¹⁵⁾라고 명시했던 것이다. 교육법에서의 이 같은 실정화는 정부 수립 이후로 실과 교육이 계속 중요시되고 있었음을 말해 주고 있다.¹¹⁶⁾

초등 학교에서는 “일상 생활에 필요한 의식주와 직업 등에 대하여 기초적인 이해와

113) 문교부 편수국, 앞의 책, 「편수시보」 제1호, pp.6~7 참조.

114) 李鍾國, 앞의 책, 「大韓教科書史: 1948~1988」, pp. 202~210에서 발췌, 개고함.

115) 「교육법」 제1장 총칙 제2조 7항.

116) 李茂根, 「實業·技術教育」(서울: 培英社, 1992), pp. 32~33.

기능을 기르며 근로 역행, 자립 자활의 능력을 기른다.¹¹⁷⁾”라 하여, 그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실과를 과(課)하도록 했다.

중학교에 관한 내용도 “사회에서 필요한 직업에 관한 지식과 기능, 근로를 존중하는 정신과 행동 또는 개성에 맞는 장래의 진로를 결정하는 능력을 기른다.¹¹⁸⁾라 규정되어 있었다.

고등 학교에서는 “민족의 사명을 자각하고 체위의 향상을 도모하여 개성에 맞는 장래의 진로를 결정케 하며, 일반적 교양을 높이고 전문적 기능을 기른다.”¹¹⁹⁾고 하였다. 이에 따른 방침으로 전교과의 10% 이상 실과 교육을 과함으로써 1인 1기 교육을 강조하고자 했다.

교육법의 공포와 함께 초·중·고등 학교 교육이 기초를 다져 나갈 무렵, 6·25전쟁이 일어나 교육 붕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러나 전시하에서도 실업 교육의 중요성은 여전히 강조되어, 국민 학교 5~6학년에서 ‘실과’를 이수케 했고, 중·고등 학교에서는 1인 1기 교육을 더욱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실업계 전문 교과와 교과서 발행이 착수되었는데, 여기서는 실업 교과서의 국정화 동기, 원고 위축, 편찬·발행 상황의 순으로 그 전말을 알아보려고 한다.

(가) 실업 교과서의 국정화 동기

앞에서 살폈듯이, 미군정 시대에 교수 요목이 제정, 발표되자, 이 요목에 맞추어 각종 교과서들이 수없이 출판된 바 있다. 그러나 이 책들은 인문 교과와 교과서들이 대부분이었고, 실업 전문 교과와 전문 교과서는 단지 몇 종에 지나지 않았다. 그것도 광복 직후부터 1946년까지의 전문 교과서들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었고, 1947년에 들어와 「토양 비료」(정음사), 「중등 작물학」(동아문화사), 「중등 작물학」(세문사), 「중등 가사 교본」(문화당) 등이 겨우 출판되었을 뿐이다.

전문 교과서의 발행·보급 형편이 이렇다 보니, 전반적인 교육 계획에 커다란 타격 요인으로 작용될 것임은 불을 보듯 확연했다. 그 원인은 어디에서 비롯되고 있었는가? 이 문제와 관련하여 「편수시보」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말할 것도 없이 실업 학교(농, 공, 수산)는 인문 중학에 견주어 생도 수가 적으므로 자연 사용하는 책의 수도 적은 까닭에, 개인 출판사로서는 이와 같은 책을 출판하여서는 이익을 보는 것보다

117) ‘교육법’ 제1장 총칙 제2조 7항

118) ‘교육법’ 제94조 5항.

119) ‘교육법’ 제105조 3항.

도리어 손을 보게 되므로, 이 종류의 교과서를 출판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므로 문교부 당국은 실업 교육에 큰 지장이 있을까 우려하여 개인의 실업 교과서(검정 교과서를 말함. 필자 주)가 출판되어 나올 때까지의 임시 조치로 국비를 보조받아 발행하려는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¹²⁰⁾

위의 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실업계 전문 교과서 발행은 희망자가 없던 터여서 국비 보조로 그 출판을 계획했다는 것으로 요약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당국의 방침은 단지 계획이었을 뿐이며, 뜻한 바대로 실현되지 않았다. 6·25전쟁에 휘말려 그 계획이 무산되었기 때문이다.

(나) 실업 교과서의 원고 위촉

정부 수립 직후에 있어, 실업계 전문 교과서의 편찬·발행이 담보 상태에 있었다는 것은 앞에서 말한 출판 희망자가 전무하다시피했던 것 외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로 하여 그 어려움이 더해졌던 것이다.

첫째, 실업 전문 교과는 그 교과서 수가 많은 데 비해 집필진의 확보가 어려웠고, 둘째, 집필을 위촉받은 저자라 할지라도 장기간의 집필 기간이 필요했으며, 셋째, 저작자로부터 접수한 원고의 검열, 수정 등 제반 편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담당 인원의 부족으로 많은 시일을 요하게 되었기 때문이다.¹²¹⁾

이에 대하여, 당시 편수국 당국자는 “실업 교과서에 대하여는 문교부에서 등한히 하고 있는 듯이, 비난하고 있다.”¹²²⁾고 불편한 심기를 털어 놓기도 했다. 또, 당국자는 교과서가 없는 까닭에 많은 수업 지장 사태를 감수하고 있는 일선 교사들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해명한 바 있다.

(전략) 국토를 통일하고 민족 자주의 독립 국가로서 우리 나라의 발전을 꾀하려면 민족 사상을 확립하여야 하며, 이 사상을 확립함에는 학도의 사상을 바르게 지도하는 것이 첩경(捷徑)일지니, 다소의 희생은 인내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국가의 대방침에 종사하시는 교사 제위는 이 일에 대하여 양해하여 주심을 바란다.¹²³⁾

이로 보아, 당시의 교과서 편찬 사정이 매우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정부 수립과 함께 국민 교육 사업의 기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일선 교사들이 가르치는 데 불편이 있더라도 인내로 호응해 주어야 할 것임을 설득하고 있었던

120) 문교부 편수국, 앞의 책, 「편수시보」 제1호, p. 126.

121) 위의 책, pp.5~6 참조.

122) 위의 책, p. 5.

123) 위의 책, pp. 7~8.

것이다.

원래 실업계 교과서들에 대한 편찬 준비는 과정(過政) 문교부에 의해 착수된 바 있다. 과정 문교부는 우선 농업 및 공업계 교과서들을 서둘러 편찬할 계획을 세우고, 1947년 4월에 그 원고 위촉 업무를 이행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농업계는 수원농과대학에, 공업계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 각각 원고 집필을 위촉하게 되었다.

1947년 4월, 문교부장(오천석)이 위촉한 원고는 농업계 54종, 공업계 116종이었다. 원고를 위촉받은 수원농과대학과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서는 각각 실업 교과서 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전공별로 교과서 집필을 의뢰했다. 양 대학의 집필진 중 농업계 교과서 집필진을 보면 다음과 같다.

농업계 교과서 집필진(수원농과대학)¹²⁴⁾

탁운한, 천종규, 김문협, 심종섭, 박병희, 정병재, 봉준열, 김윤식, 현신규, 조재영, 윤대병, 박찬세, 민승복, 맹문재, 정병재, 이창복, 김영준, 강면희, 이근대, 김용필, 박성우, 신원철, 조영식, 조광희, 한을출, 최재갑, 이상현(참고: 나머지 필자는 미상임. 필자 주)

(다) 실업계 교과서의 편찬·발행 상황

1949년 3월 말 현재로, 문교부 편수국에 접수된 각 계열별 교과서 원고는 농업계의 경우 54종 중 22종(40.7%), 공업계는 116종 중 40종(34.5%)이었다. 이렇게 보면, 원고 집필을 위촉한 지(1947.4.) 2년간에 걸쳐 총 170종 중 62종이 완료되어 36.4%를 달성한 셈이 된다. 이 같은 저조한 성과는 그 해 3월까지 완료된 원고라 할지라도, 사열(査閱)과 제작에 소요되는 절대 시간이 뒷받침되어야만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적기 공급을 이탈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하여 당시의 상황을 말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문교부에서는 이 제출된(농업계 22종, 공업계 40종을 말함. 필자 주) 여러 가지 종류의 원고에 대하여 안전을 기하기 위하여 4282년(1949) 4월 10일부로 안(安) 문교부 장관의 위촉으로 실업 교과서심사위원회를 만들고, 다시 원고를 심사시켜 심사 보고한 데 따라 담당 편수관이 일일이 지은이와 연락하여 수정, 정리한 뒤에 문교부 장관의 결재를 받아 인쇄에 회부토록 하였다.¹²⁵⁾

이러한 과정 끝에 한편으로 집필을 독려하는 가운데, 1949년 말에 이르러 당국이 교과서 번각 발행사(대한교과서주식회사)에 회부한 농업계 교과서 중 2책(「누에치기」 및 「뽕나무 가꾸기」)만 겨우 출판이 완료되었을 뿐이다. 나머지는 결국 1950년도 작업으로 넘겨질 수밖에 없었다.

1949년 말 현재 실업계 전문 교과서의 교과서 중 농업계 교과서 발행 상황을 보면<표 I-16>

124) 위의 책, pp.127~128 참조.

125) 위의 책, pp.126~127.

과 같다. 이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49년 12월 현재 실업계 전문 교과서 중 농업계의 경우는 출판이 완료된 도서가 2책뿐이다. 그리고 인쇄 중인 것 1책, 교정 중인 것 2책, 조판 중인 것 4책, 사열 중인 것 4책, 수정 중인 것 5책, 집필 중인 것 12책, 이렇게 30책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교과서들은 1950학년도 사용 도서로 그 편찬 작업이 추진되고 있었던 것들이다.

<표 I -16> 농업계 교과서 편찬·발행 상황(1949. 12. 현재)

책 이 름	지 은 이	원고 내용	인 쇄 소
작물 육종(育種)	탁 문 한	인 쇄 중	이하 '대한교과서주식회사'
누에치기	천종규·김문협	출 판	
뽕나무 가꾸기	김 문 협	출 판	이하 인쇄소 '미정'
수풀 이용학(森林利用學)	심 중 섭	교 정 중	
누에 병리	박 병 회	조 판 중	
수풀 측량(森林測量)	정 병 재	교 정 중	
제사(製絲)	봉 준 열	조 판 중	
누에 위생, 생리	김 윤 식	조 판 중	
수풀만들기	현 신 규	조 판 중	
작물 두루풀이	조 재 영	사 열 중	
작물 따로풀이	윤 태 병	사 열 중	
공예 농작물	박 찬 세	사 열 중	
임 업	민 회 복	수 정 중	
나무재기(測量)	맹 문 재	사 열 중	
수풀 공학	정 병 재	수 정 중	
수풀 화학	심 중 섭	수 정 중	
수풀 생물	이 창 복	수 정 중	
임업 정책	김 영 준	수 정 중	
집짐승 기르기	강 면 회	집 필 중	
집짐승 으뜸풀이	이 근 대	집 필 중	
가축 생리 위생학	이 용 필	집 필 중	
사방 공학(砂防工學)	맹 문 재	집 필 중	
측량학	박 성 우	집 필 중	
농업 수리학	신 원 철	집 필 중	
응용 역학	조 영 식	집 필 중	
동물 육종	탁 운 한	집 필 중	
농토 정리	조 광 회	집 필 중	
쇠심 콩크릴	한 을 출	집 필 중	
농사 연장	최 재 갑	집 필 중	
개뽕막이	이 상 현	집 필 중	

자료: 문교부 편수국, 앞의 책, 「편수시보」 제1호, pp. 127~128.

한편, 공업계 전문 교과서들 중 원고가 접수된 29책에 대한 편찬·발행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 책들은 대한교과서주식회사와 조선교학도서주식회사, 대한서적공사에

각각 번각 발행권이 부여되었다. 이 중, 대한교과서주식회사의 경우는 29책 중 23책 (79.3%)을 맡고 있었으므로 실업계 전문 교과서 전업사였던 셈이다. 1949년 12월 현재, 공업계 교과서 편찬·발행 상황을 보면 <표 I-17>과 같다.

공업계 전문 교과서 중에서 원고 교정이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교정 미완료) 또는 ‘사열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번각 발행처가 미정 상태로 있는 교과서도 38종 42책에 이르러, 이 분야의 교과서 수급 사정에 근본적인 문제를 떠앉고 있었다.

<표 I-17> 공업계 교과서 편찬·발행 상황(1949.12. 현재)

구분	책 이 름	번각 발행사
교정 완료 도서	수력학과 수력 기계, 금속 재료학 * 이상 2책	대한교과서주식회사
조판 및 교정 진행 중의 도서	화학 공업 기계, 섬유소 공업, 수리학, 전기 공학 대의, 산 알칼리, 일반 화학, 광물학, 철근 콘크리트, 전분 사탕 및 발효 공업, 고급 기계 공작법, 송전 및 배전, 폭발물, 초급 기계 공작법, 방적법(상), 방적법(하), 전기 응용(1), 선광학, 지질학, 열화학, 전기 자기 측정, 발전 송전 및 배전 * 이상 21책	대한교과서주식회사
	철도 차량, 고급 기계 공학 대의, 초급 기계 공학 대의, 교수 요목 * 이상 4책	조선교학도서주식회사
	광산 측량학, 기계 설계 * 이상 2책	대한인쇄공사

자료: 「편수시보」 제1호, pp. 128~130의 자료를 재구성함.

이미 조판 및 교정 작업이 진행중인 교과서들과 마찬가지로 실수요 부수가 극히 적어 출판사 선정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었던 것이다. 발행처 미정의 공업계 전문 교과서 실태를 보면 <표 I-18>과 같다.

<표 I-18> 공업계 전문 교과서 중 발행처 미정 도서(1949. 12. 현재)

구 분	책 이 름 및 지 은 이
교정 완료 도서	전기 일반(김계신), 전기 통신 대의(황갑성), 염색학 1,2,3(김계건), 인조 비료(김동일), 구조물(양순길), 방적 시험물(윤청일), 철강 야금(윤동석), 전기 응용 2(정성계), 특수 야금(오항기), 시금학(최재열), 염직 일반 화학(전풍진), 유기 화학 공업(성좌경), 전기 통신 1,2(이재건), 수력 발전 화력 발전(김영달), 직물 조직 및 의장(우범식), 전기 화학 공업(이재성), 발동기(이승원), 직물 원료(김상길), 발전 수력(양순길), 전기 공학 대의 1,2(최형관), 재료 역학(이량), 시공법(권영진), 재료학(권영진) * 이상 27책
교정 미완료 도서	기계 제도(조용달), 광상학(손치무), 기계 역학(박성룡), 하천학(곽용회), 굴착법(신병우), 기계 설계(홍광표), 전기와 자기(이희장), 채광학(김정식), 향만(곽용회), 자동차 공학(이혁), 기계 역학(박성룡), 상수도(원태상)*이상 12책
사열 중인 도서	구조 역학(김창집), 실내 장식(이희상), 전기 실습(유봉성) * 이상 3책

자료: 「편수시보」 제1호, pp.130~131의 자료를 재구성함.

<표 I-18>에 정리되어 있듯이, 교정 미완료 도서가 12책, 사열 중인 도서 3책 하여 15책이 기초 작업 단계에 머물러, 실업계 교과서의 출판 과정이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있다. 그런데 비록 발행처가 확정되지 않은 도서들이었지만, 각각의 전문 분야를 거의 망라한 교수-학습 대상으로 그 출판이 추진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향후의 전문 교과서 개발에 중요한 단서로 제공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들 교과용 도서의 명칭들은 전문 교과 교육을 겨냥한 아이디어 그 자체였다 할 것이다.

이 책들은 1950년 5월까지 일면 생산 또 일면으로는 공급을 병행하게 되었지만, 그 절반 이상의 편찬 작업이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6·25전쟁은, 실업계 전문 교과서의 교과서 편찬·발행을 적어도 5년 뒤로 밀어 놓게 했던 것이다.

(3) 전시하의 교육 과정과 교과용 도서 편찬·발행

8·15광복 이후로 한국의 교육 과정과 교과서사를 살펴보면 몇 가지 특이한 경험과 맞물려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 첫째는, 일제 식민지 시대가 역사의 뒤안으로 물러난 상태에서 미군정이라는 또 다른 지배 세력에 의해 한국의 교육 문화가 통제되었다는 사실이다. 미국 정부는 한반도 진주군으로 하여금 한국민의 교육적, 문화적 개조(educational and cultural reconstruction)를 겨냥한 청사진을 각종 행정 명령을 통해 통제하고 있었던 것이다.¹²⁶⁾ 그런 이후로 어느덧 반세기를 넘기게 되었다. 둘째는, 그 반세기의 초입에 3년간의 동족 상잔을 겪음으로 하여 정상적인 발전을 꾀하기 어려웠다는 사실을 짚게 된다. 이 때문에, 교육 과정·교과서의 변천 과정도 그러한 급변적 정황 속에 들어 앉은 격변을 경험하게 되었다. 요컨대, 미군정—정부 수립—6·25전쟁기로 연결된 거대한 변혁들은 불과 4년 남짓한 공간 속에서 우리의 역사를 거둬 바꾸게 했던 것이다.

신생 정부는, 그 출범 자체가 국가 사회를 새롭게 열어 갈 기회의 장을 의미했다. 그러나 그러한 포부는 겨우 들머리 단계에서 국난 속에 휘말리게 되었다. 이 때문에, 신생 정부에 의해 개혁 구도가 잡혀 있었던 교육 과정·교과서 관련 현안들도 전면적으로 무질러져, 그 궤도 지향 자체에 크나큰 훼손을 입었다. 전쟁의 발발로 하여 ‘전시 교육’이라는 특별한 시대적 주제로 전시 대응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126) ‘Statement of Policy on Participation of the United States in Emergency Educational and Cultural Rebuilding of the War-torn United Nations’, RG 59, RWHB, Box 10. 김균, ‘미국의 대외 문화 정책을 통해 본 미군정 문화 정책’, 社團法人 韓國言論學會 編, 「韓國言論學報」 제 44-3호·2000년 여름호(서울: 社團法人 韓國言論學會, 2000.7.), p.53에서 재인용.

이 제제는, 이 ‘특별한 보통 명사’인 ‘전시 교육’ 체제하에서의 교육 과정과 교과용 도서 편찬·발행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물론, 미군정기 및 교수 요목 시기의 연결선상에서 그 변천 과정을 점검하기 위한 데 서술의 목적을 두고자 했다. 그럼에 있어, 전시하의 교육 과정 운영과 교과용 도서 편찬·발행에 대하여 논의한 다음, 당시에 보여 주었던 편수 활동 중 몇 가지를 뽑아 비망적(備忘的) 논의로 정리하고자 한다.

1) 전시하의 교육 과정 운영

엄밀한 의미에서 6·25전쟁이 일어난 시점으로부터 1951년 1·4후퇴 때까지는 남한에서의 교육 과정 운영이 전폐 상태였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모든 학교의 수업이 중단되었고, 정부 또한 피난 수도 부산으로 소개(疏開)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1951년 2월 25일 문교부(장관 백낙준)에서는 ‘전시하교육특별조치요강’을 제정·공포했는데, 이로 하여 피난 학생들이 피난지에 개설된 원주 학교(原住學校)에 등록하여 수업을 받을 수 있었다. 위의 ‘특별 조치 요강’은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교육 방침인 동시에 일련의 교육 시혜 내용을 담은 것이었고, 한편으로는 교육 과정·교과서 문제를 제시한 비상 계획안이기도 했다.

① ‘전시하교육특별조치요강’의 의의

‘전시하교육특별조치요강’(이하 ‘특별 조치 요강’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8개 요강으로 되어 있었다.¹²⁷⁾

- ㉠ 피난 학생의 취학 독려: 피난지(부산) 소재 학교에 등록하여 학업을 계속케 한다.
- ㉡ 가교실, 피난 특설 학교 설치: 교실난 해결을 위해 교과별 이수 시간제를 실시한다.
- ㉢ 북한 피난 학생 수용: 거제도 일원의 피난 학생을 특설 학급에 수용하고, 중등 학교 학생은 거제와 하청(河淸), 통영중학교에 분교장(分敎場)을 설치, 수용한다.
- ㉣ 도시 피난 학교 설치: 서울 소재 중등 학교의 피난 학교 설치, 피난 국민 학교의 원 주지 분교장을 설치, 운영한다.
- ㉤ 전시 연합 대학 설치: 부산에서 발족(1951.2.)하여 점차 광주, 전주, 대전으로 확대, 각 대학 간 공동으로 학사를 운영한다.
- ㉥ 생벽돌 교사 건축: 생벽돌건축위원회를 조직(1951.6.)하고, 전쟁으로 소실된 교실을 신축한다(1951년 말까지 경남에 288, 경북 94, 충남 16, 충북에 12개 교실을 신축함).
- ㉦ 임시 교사 1천 교실 건축 계획: 전쟁으로 노천 수업을 하고 있는 학교에 가교실을 제공한다(미 8군으로부터 건축 자재를 원조 받음).¹²⁸⁾

127) 吳天錫, 앞의 책, 「韓國新教育史·下」, pp.71~73 참조.

128) 吳天錫, 앞의 책, 같은 면 참조.

이렇듯, 위의 ‘특별 조치 요강’은 전시 체제하에서의 전시 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비상 교육 방침으로 일선 학교·학생들에게 적용되었다.

1953년, 백낙준 문교부 장관은 이 교육 방침을 확대하여 자활인의 양성(개인), 자유인의 양성(국민), 평화인의 양성(국제인)을 전시하 3대 교육 목표로 내세웠다. 따라서, 이 교육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지식 교육, 기술 교육, 도의 교육, 국제 교육의 4대 중점 교육 방침을 강조함으로써 전시하의 문교 현안을 이끌었다.

무엇보다도, ‘특별 조치 요강’은 전쟁 수행에 따른 비상 교육 대책으로 마련된 긴급 장치였다는 사실이다. 이를 기반으로 한 관련 시책들도 잇따라 발표된 바 있는데, 그 대개는 반공 이데올로기의 구축에 주된 목표를 두고 있었다. 한국의 교육 과정·교과서사에 있어, 반공·승공 이데올로기를 전면·전폭적으로 강조하고 있었던 것도 이 무렵이었다. 그러한 교육·사회적 기류는 제5공화국 시기까지 계속되었다. 또, 미국을 비롯한 국제 연합군에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고 있었던 것도 전쟁 상황을 경험하고 있었던 한국인의 특별한 시대적 정서이기도 했다.

② 교육 과정의 운영

전시하 3년간에 있어, 교육 현장에서의 적용을 전제로 한 교육 과정이 존재하고 있었는가 하는 문제는 적절한 해답을 얻기 어렵다. 국가 사회가 전시 상황에 놓여 있었으므로 모든 교수-학습 활동이 임시 방편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또 경우에 따라 가변적인 일이 많았던 까닭이다. 예컨대, 교과에 관한 문제만 해도 피난 수도 부산에서 일단 기본적인 틀을 마련해 놓고 있긴 했으나, 초·중등 학교에 전시 교재를 사용하는 등으로 하여 그 궤를 맞추어 나가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즉, 교실도 없는 노천 학습 사례가 수없이 많았고, 더구나 교과는 설정되어 있으나 교과서가 없는 형편이었을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학용품마저 구할 수 없었던 정황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상태에서, 국민 학교의 경우 <표 I-19>와 같은 교과목 및 시간 배당 기준이 마련되어 있었다.

전시 상황임에도 각 교과별 시간 배당도 <표 I-19>와 같이 주어졌는데 그 실상은 단지 ‘기준’으로서의 명분에 그치고 있었을 뿐이지, 제대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더구나, 상급 학년일수록 전시하의 근로 작업에 동원되는 등으로 하여 교육 과정 기준에 맞추기 어려웠다. 또, 교사가 군에 입대한다든지 교과서를 구할 수 없는 등 제반 여건이 두루 문제시되고 있었던 것이다.

<표 I-19> 전시하 최초의 교과목 및 시간 배당표

학 년 교과목	1	2	3	4	5	6
국 어	245	245	245	245	245	245
사 회	140	140	175	175	210	210
이 과	—	—	—	140	140	140
산 수	140	140	175	175	175	175
보 건	35	35	35	35	35	35
음 악	35	35	35	35	35	35
미 술	35	35	35	35	남 105 여 70	남 105 여 70
가 사	—	—	—	—	70	70
계	630	630	700	840	남 945 여 980	남 945 여 980

〈참고〉 단위 시간은 40~50분임.

자료: 威宗主: 앞의 책, 「教育課程沿革調査・前篇」, p.220.

그런 경우는 중등 학교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었다. 교과 내용에 대한 수업은 단순히 학습의 명맥을 유지한다는 것 이상의 다른 무엇도 기대할 수 없었던 형편이었다. 특히, 중등 학교 교사와 일부 학생 중에는 다수의 피난자와 군 입대 대상자들이 포함되어 있는 등 이런 저런 이유로 교수-학습 정원이 크게 유동적이었으며, 그 유지 상태 또한 매우 가변적이었다.

그러나 전쟁중의 학습이었음에도 ‘영어’와 ‘수학’은 주요 교과목으로 다루어지고 있었다. 상급 학교 입시 과목으로서 주된 학습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교에 따라서는 대학 입시 문제집만으로 수업이 진행된 곳이 있었으니, 그 어느 때보다도 영수학관식 교육은 이 시기에 가장 성행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¹²⁹⁾

한편, 문교부는 1951년 3월 30일 ‘교육과정연구위원회직제’(문교부령 제96호)를 공포하여 초·중등 학교 교육 과정을 새롭게 마련하기 위한 일종의 전문 기구를 두기로 한 바 있다. 전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위원회 설치를 추진한 것은 교육 정상화를 회복하려는 노력에 힘입어 가능할 수 있었다. 이 위원회의 규정 중 연구 업무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제 2조: 위원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과목의 분석 및 폐합, 교재의 선정, 학습 지도 계획 및 학습 지도 요령을 연구한다.

제 5조: 위원회는 각 교과별로 분과 위원회를 둔다. 각 분과 위원회는 담당 교과목의 교재의 선정, 학습 지도의 요항(要項), 계획 및 요령을 연구한다.

129) 威宗主, 앞의 책, 「教育課程沿革調査・前篇」, p. 221.

이 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한 것은 발족 후 2년 뒤의 일이었다. 날이 갈수록 전쟁이 가열되어 문교 행정 또한 극심한 타격을 받고 있던 끝에, 1953년 3월 11일 그 첫 심의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던 것이다.¹³⁰⁾ 이로써 이듬해에 제1차 교육 과정의 공포(1954. 4. 20)를 보게 된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

2) 전시하의 교과용 도서 편찬·발행

6·25전란기 3년 동안은 정규 교과서가 존재하고 있긴 했으나, 그 사용이 정규화되고 있었다고 말하기 어렵다. 1·4후퇴 직후의 사정만 해도 260만의 국민 학교 아동, 40만의 중등 학교 학생 및 1만5천 명의 대학생들이 교사(校舍), 교과서 및 교사(教師)가 없고, 수업에 기초적으로 필요한 교재가 없을 정도였기 때문이다.¹³¹⁾

한국인의 교육열이 세계적으로도 으뜸이라는 사실은 이미 정평이 나 있거니와, 6·25 전쟁기에 보여 준 저력은 대단한 데가 있었다. 당시에 있어, 교육 여건이라고는 거의 전면적으로 붕괴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행정력이 닿는 한 학교만은 여전히 문을 열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노천에서, 가교사에서, ‘생활을 교재로 하는 수업’을 시작했는데, 이는 앞서 말한 ‘특별 조치 요강’을 시천하기 위해서였다. 이 ‘특별 조치 요강’의 취지 중 교육 과정 부문은 ‘생활 중심 교육’을 강조하고, 학습 지도의 방법으로 ‘단원 학습’을 권장하는 데 있었다. 그것은 곧 교과서 중심에서 벗어난 생활 중심의 교육을 전개하려는 의지의 발로라고 할 수 있다.¹³²⁾

그런 일환으로 편찬·발행된 교과서가 ‘전시 교재’였다. 이는 ‘특별 조치 요강’ 중에 들어 있는(8항) 전시 교육 조치의 하나로, 교과서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전시하의 교육 공백을 메우는 데 결정적인 교육 자료로 활용되었다.

전시 교재는 전시 생활을 지도하기 위한 임시 교과서로서 초등 학교용 「전시 생활」 1(1, 2학년용), 2(3, 4학년용), 3(5, 6학년용) 이렇게 3집 9책, 또 중등 학교용 전시 독본인 「침략자는 누구냐?」 등 3집 3책을 편찬하여 공급이 가능한 수복 지역 일원에 보급했다(<표 I-20>참조).

130) 제1차 회의를 부산사범학교 강당에서 개최함. 이 회의에 문교부가 제출한 의제는 1. 교육 과정 제정의 기본 방침, 2. 교수 요목 제정의 기본 태도, 3. 국민 학교 교육 과정 시간 배당 기준표, ④ 중학교 교육 과정 시간 배당 기준표, ⑤ 사범 학교, 고등 학교 교육 과정 시간 배당 기준표로 되어 있었다.

131) *New York Times*, 1951.6.22. 吳天錫, 앞의 책, p. 74에서 재인용.

132) 洪雄善, ‘6·25 동안 중 퍼낸 임시 교재—전시 독본’, 「교원복지신보」(제 657호), 1996. 9. 11(6)

<표 I -20> 초·중등 학교용 전시 교재

구 분		1 집	2 집	3 집	인 쇄 처*	초판 발행
초등 학교용	전시 생활 1	비행기	탱 크	군 합	합동도서주식회사	1951.3.25.
	전시 생활 2	싸우는 우리 나라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씩씩한 우리 겨레	합동도서주식회사	1951.3.25.
	전시 생활 3	우리 나라와 국제 연맹	국군과 유엔군은 어떻게 싸우나?	우리도 싸운다	조선교학도서주식회사	1951.3.6.
중등 학교용	전시 독본	침략자는 누구나?	자유와 투쟁	겨레를 구출하는 정신	조선교학도서주식회사	1951.3.6.

* 대한교과서주식회사의 경우는 1952년 3월 부산 수정동(水晶洞)에 피난 공장을 건설한 이후로 위의 도서들을 3회에 걸쳐 생산 납본한 바 있다.

전시 교재의 편찬은 당시 최현배 편수국장의 주관으로 최병칠, 최태호, 홍웅선, 이렇게 세 편수관이 담당했다. 새삼스러운 되살핌이지만, 교과서 이름이 ‘탱크’, ‘군함’ 등의 전쟁 수단으로 매겨진 것은 최초의 기록성을 가진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초유의 사례이기도 하다. 요컨대, 전쟁 이데올로기의 극단적인 표현이 이들 전시 교재 이름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당시 피난 수도 부산에서 발행된—전시 교재를 포함한 대부분의 교과서들은 종래의 교과서 내용을 다이제스트하여 4·6판 규격으로 축소한 모형이었다. 전쟁통에 용지난이 극심했던 까닭이다. 전시 교재는 표지를 본문지(깁지)로 씌운 상태에서 64쪽의 작은 분량으로 인쇄된 체제였다. 이는 전지 한 장을 접어서 나오는 4·6판 절수에 맞추었기 때문이다. 교과서의 판형은 과거 오랫동안 걸쳐 국판(5·7판)이 기준(1980년대까지 주종이었음)이었는데, 당시의 용지 사정은 4·6판으로 제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렇듯, 판형이 소형이었을 뿐만 아니라, 편집 또한 축약식 다이제스트 방식이었으므로, 많은 내용을 넣을 수도 없는 형편이었다.

그런가 하면, 활자 사정 또한 여간 심각한 게 아니었다. 이 때문에 전지 교재 중 1, 2학년용과 3, 4학년용은 활자체를 모사(模寫)하여 오프셋으로 인쇄했고, 5, 6학년용은 5호(10.5포인트) 활자를 끌어 모아 조판에 대는 등, 그 기본적인 제작 체제가 서로 다른 형식이었다. 제본 형식도 제대로의 ‘호부장식’을 기대할 수 없었고 단 한 번의 철침을 등 께땀으로 고정시킨, 매우 허술한 모습이었다.

이와 같이, 전시 교재는 전쟁중에 찍어 낸 척박한 모습이었지만, 정식 교과서의 공급이 단절된 상황 속에서 그 공백을 메운 교육 수단으로 기여했다. 이와 관련하여, 「문교개관」에는 전시 교재의 편찬·발행 사정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피난지 부산에서 지방에 산재한 빈약한 인쇄 시설과 파괴되고 남은 인쇄기를 뜯어 맞추고, 새로 활자를 만드는 등 민난을 무릅쓰고 빈손으로 피난 온 학생들에게 우선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교재를 새로 인쇄 배부하였으니, 그것이 임시 교재인 전시 독본으로 국민학교용 3종 3집을 발행하는 동시에, 중학교용 1종 3집을 발행하여 국정 교과서 발행의 공간을 메우는 데 이바지하였다.¹³³⁾

앞에 살핀 바와 같이, 6·25전쟁중에는 궁핍하지 않은 것이 없었지만, 그 중에서도 용지 사정이야말로 교과용 도서의 수급에 가장 심각한 타격 요인이 되고 있었다. 한동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1951년 7월 유네스코로부터 10만 달러, 또 국제연합 한국재건위원단(United Nation Korean Reconstruction Agency: 약칭 ‘운크라’)에서 13만5천 달러의 지원금을 받고, 샌프란시스코시로부터 1천 톤의 종이를 기부받은 뒤의 일이었다. 이는 백낙준 장관이 한국의 전시 교육 사정을 미국인들에게 알린 방미 외교로 거둔 성과였다. 따라서, 자유아시아위원회(Committee for a Free Asia, INC)에서도 ‘수백만 책의 교과서를 찍어 낼 종이’를 기증한 바 있다.

‘운크라’ 등에서 원조한 용지는 1951년 12월부터 종전(終戰) 이후까지 국정 교과서 발행사들에게 배당되었고, 일부 검정 도서 발행사들에게도 안배되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거의 전면적인 담보 상태랄밖에 없었던 실업계 전문 교과서쪽에도 숨통이 트이게 되었다. 전문 도서 발행을 위한 용지 지원이 가능했던 까닭이다.

이로 하여, 당시의 교과서들에 나타나고 있거니와, 한국의 교과서사에 있어 또 하나의 최초 사례인 특별한 요식이 등장한 바 있다. 즉, ‘용지 기증에 대한 감사의 글’¹³⁴⁾을 실은 사례가 그것이다. 이 글은 교과서의 앞표지와 면지 사이 또는 판권면 상단에 한글과 영문을 함께 실는 형식으로 되어 있었다.

‘용지 기증에 대한 감사의 글’은 1955학년도부터 삭제되었다. 이 같은 형식은 6·25전쟁 이후로 한 동안 ‘우리의 맹세’를 실었다든지, 훨씬 뒤의 일이지만 ‘국민 교육 현장’을 수록케 한 것¹³⁵⁾과 더불어 교과용 도서의 편차 형식으로 갖추고 있었던 기본 요건이기도 했다.

약 3년간에 걸친 6·25전쟁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수립 직후

133) 문교부, 앞의 책, 「문교개관」, pp.178~179.

134) ‘국제연합 한국재건위원단의 용지 기증에 대한 감사의 글’: 문교부 저작, 대한교과서주식회사 번각 발행, 「농작물 두루풀이」(1952.3.)의 판권면 상단.

135) ‘교과서 1020-351(1978.7.31.)’ 및 ‘교과용 도서 편찬 지침’에 의거함. 이에 따라 1979학년도부터 1종 및 2종 도서의 앞표지와 속표지 사이에 ‘국민 교육 현장’을 제재하였다. 1994년 11월 2일, 교육부(1990.12.29. 문교부를 ‘교육부’로 개칭)는 동 현장 수록을 삭제(편관 81150-1189)하기로 결정, 1995학년도 신·개편 도서부터 이를 실지 않고 있다.

부터 추진했던 교육 설계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했으나 역부족일 수 밖에 없었다. 그런 가운데 ‘전시 교재’를 발행했고, 국정 교과서를 최대한 회복하려 많은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 특히, ‘전시 교재’는 한국의 교과서사에 있어 미군정기에 발행되었던 일련의 임시 교재들과 더불어 매우 중요한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고 본다.

이 책은 국제연합 한국재건위원단(운크라)에서 기증한 종으로 박은 것이다.
 우리는 이 고마운 도움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층 더 공부를 열심히 하여, 한국을 부흥 재건하는 훌륭한 일꾼이 되자.
 대한민국의 문교부 장관
 This book was printed with paper donated by the United Nations Korean Reconstruction Agency.
 Let us be good workers for the rehabilitation of our country by studying this book carefully.
 In this way, we can show our gratitude for the kind assistance of the United Nations.
 Minister of Education
 Republic of Korea

운크라의 용지 원조에 대한 감사의 글

전시 교재 외에 1951~1953년의 국정 교과서 발행 실태를 보면<표 I -21>과 같다.

<표 I -21> 전시하의 국정 교과서 발행 실태(1951~1953)

구 분 연 도	국민 학교용		중 · 고등 학교용		계	
	종 수	부 수	종 수	부 수	종 수	부 수
1951	50	13,191,727	12	363,465	62	13,555,192
1952	49	11,045,691	31	837,079	80	11,882,770
1953	54	15,353,595	18	357,500	72	15,711,095
계	153	39,591,013	61	1,558,044	214	41,149,057

자료: 中央大學校 附設 韓國教育問題研究所, 앞의 책, 「文教史」, p.234의 자료를 재작성함. 필자 주.

<표 I -21>에 집계된 1951~1953년의 교과서 발행 실태는 전 · 후반 학기 실적을 합산한 것이다. 당시는 중 · 고등 학교 학제¹³⁶⁾를 각각 3년으로 개정하는 한편, 9월 신학기제를 폐하고 3월 신학기제로 채택하고 있던 터였다. 이 제도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136) ‘교육법’ 개정(법률 제118호, 1950.3.10.) 중·고등 학교는 2년 내지 4년을 3년으로, 동법 개정(법률 제 178호, 1950.3.20.) 중 중학교는 4년을 3년으로 변경함.

<표 I-21>에서 볼 때, 전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학교의 교과서만큼은 거의 전량이 발행되고 있었으나, 중·고등 학교의 경우는 매우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중·고등 학교의 사정을 보면 6·25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무려 215종에 이르는 실업 전문 교과서를 발행한다는 계획이었으나, 3년간의 실적이 고작 61(보통 교과서의 교과서를 포함하여)종에 그쳤다. 이 같은 답보 상태가 풀려 나가게 된 것은 1955학년도부터였으며, 전시하의 그것은 부산에 ‘피난 공장’을 개설하고 있었던 대한교과서주식회사에 의해 그 명맥(20종 정도)이 유지되고 있었다.¹³⁷⁾

한편, 검인정 교과서의 경우는 그 정도가 더욱 심각하여, 국정 교과서처럼 다이제스트 형식으로 낼 수도 없었던 형편이었다. 집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쟁을 만나 아예 원고 성안 자체가 무산되었거나, 완성된 원고가 있다 하더라도 조판에 회부할 만한 공장을 구하기 어려웠고, 전쟁 이전에 완성된 것(제본이 완료된 것) 또한 서울에 갇혀 있는 상태였다. 이 때문에 재제작의 길이 막연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더구나, 전쟁통에 출판사들이 입은 타격이 극심했을 뿐만 아니라 각사의 사원들마저 뿔뿔이 흩어져 편집·제작 사무를 수행하기 어려웠다.

당시 문교부는 이 문제를 크게 우려한 나머지, 1952년 1월 12일에 ‘검인정 교과용 도서 발행자 이동 상황 공고’라 하는 특이한 공고문을 공지한 바 있다. 즉, 교과서 출판업자들의 피난 소재를 탐문하고, 그 소재 여부를 당국에 시급히 알려 달라는 공지 사항이었다.

이렇듯, 당시의 검인정 교과서 상황은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그런 가운데 전시 교재 등 국정 교과서를 우선 공급한다는 방침으로 하여 부산 지역 일원의 인쇄 공장들이 전면적으로 동원되고 있었던 실정이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본과 시설을 확보할 수 없었던 ‘검인정 업계’로서는 그나마 틈새를 노리기도 사실상 불가능한 형편이었던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듯이, 6·25전란기는 한국의 교과서사에 있어 가장 고난에 찬 시기였다. 따라서, 원조 자재로 전시하의 교과서 수급을 유지한 특수한 내력과 함께, 여러 정황이 최악의 사태로 치달았던 어두운 시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난 문교부에 의한 교육 회생(回生) 노력과, 편수관들의 헌신적인 직무, 피난 출판업자 및 교과서 공급인들이 보여 준 노력들은 오래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이다.

137) 李鍾國, 앞의 책, 「大韓敎科書史: 1948~1998」, pp. 225~226 참조.

(4) 편수 활동과 그 주변

1) ‘편수’의 의의

지금까지 미군정기 및 교수 요목기에 이루어진 교육 과정과 교과서 편찬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런 가운데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그 당시에 이행된 편수 활동에 관한 일이다.

교육 과정이나 교과서는 한 나라의 교육 정책에 의한 산물임에 틀림없지만, 그것을 실질적으로 성립케 하려면 편수 활동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관 주도 형식이든 민간에 의한 것이든 간에 편수 활동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편수는 당연히 거쳐야 할 과정이기 때문이다.

하나의 교과서는 저자, 편수(집)자, 발행자,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교육 수단으로 성립될 수 있다. 물론, 여기에는 보다 많은 직·간접적인 요건들을 필요로 하겠지만, 적어도 내용을 저술한 사람(저자)과 그 내용을 체계적으로 수정·배열하는 전문가(편수자), 그리고 저자와 편수(집)자의 결과물(원고 또는 교정된 것)을 인쇄 또는 기계·기술적 방법으로 펴내는 자(발행자)가 필수적 요건일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그 당무자들이 합리적 관계를 유지해야만 보다 바람직한 공표 매체를 창출하게 된다. 특별히 미래 세력의 창의적인 지식 개발과 그들이 갖추어야 할 개인적, 공공적 의의와 가치 신념을 교육적 견지에서 설명해 주어야 할 교과서의 경우에 있어, 그러한 요건들은 단순히 직무나 사업으로서의 규정 논리만으로 이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교과서는 곧 모든 교육 수단 중에서 주된 것이라 일컬고 있는데, 이는 그러한 맥락과 연결되고 있다.

최근에 들어, 교과서란 여러 학습 자료 중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하여 그 우위적 위상을 비판적으로 보려는 경향이 대두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서는 교수-학습 활동의 근간적 도구로서, 또 그 주된 매체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 여전히 고유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본다. 이에서 보다 중요한 문제를 짚어 볼 필요가 있다. 요컨대, 그와 같은 우월한 자리매김이 단지 전통적인 의의만을 기득 조건으로 내세워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그래서 교과서로 말하면, 발전적 변화를 추구하기 위한 교수-학습 수단으로서, 이른바 생성 학습(generative learning)을 돕는 편수 아이디어가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이야말로 교과서 편찬자들이 중요한 전제로서 유의해야 한다¹³⁸⁾고 보는 것이다. 그러한 가치 신념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질

138) David H. Jonassen, *Generative Learning vs. Mathemagenic Control of Text Processing, The Technology of Text*(Vol.Two): Principles for Structuring, Designing and Displaying Text, New

때, 교과서는 교수-학습 행위에 없어서는 안 될 매개 수단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게 된다. 그런 점에서, 편수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관건일 수밖에 없다. ‘편수(編修)’란 여러 형식의 전달 매체, 그 중에서도 주로 책을 편집하고 수정하는 일련의 지적 활동을 말한다. 보통 명사로서의 ‘편수’는 편집(編輯·編集, editing; compilation), 편찬(編纂, compliation; editing), 수찬(修撰 또는 撰修, editing; reduction) 등과 동의어적인 뜻을 함의한다. 이 어휘들은 다 함께 ‘편집’의 뜻으로 대표되기 때문이다.¹³⁹⁾

‘편집’이라는 말이 지닌 적절한 뜻은 저작물을 간행할 목적으로 수집한 재료(내용, 콘텐츠)를 기획 의도에 따라 선택·보충하고, 수정·배열하여 효율적인 인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일정한 형식을 갖추는 지적 작업이라 풀이된다. 더 간추려 말하면 ‘어떤 내용을 모아서 배열하는 일’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특히 문자나 그림 등을 배열하여(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특정한 내용을 갖춘 서적 등의 매체 구성과 그 공포 활동에 적용하는 일련의 창의적, 기술적 방법이라 할 수 있다.¹⁴⁰⁾ 그래서 편집자로 말하면, 저자와 독자(수용자) 그리고 출판자(발행자) 사이에서 매개자로 역할할 뿐만 아니라, 소재를 발굴하고 기획·편집하여 완성품을 보급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깊이 관여하는 등 큰 영향력을 끼치는 업무를 수행한다.¹⁴¹⁾

이 때문에, 편집자의 작업은 간단한 것이 아니며, 그들의 태도와 노력 여하에 따라 각각의 품목이 지닌 동질성, 그리고 차별성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¹⁴²⁾ 바로 그러한 작업을 직능으로 선택하고 있는 전문가를 일컬어 편집자(editor)라 하며, 이는 또한 오랜 역사적 내력을 가지고 있다.

서양의 경우, 고대 라틴어인 ‘edere’(먹으로 내다, 출판하다)에서 edit(편집하다), editor(편집자)라는 말을 낳게 했고, 또 라틴어 ‘redactus’가 redaction(차례대로 정리하다, 편집하다)으로 굳혀진 것을 보면, 영어의 모어(母語)가 생성된 고대 그리스·로마 시대에 이미 편집자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동양의 경우, ‘編輯’에서의 ‘編’이 ‘書籍’이라는 말을 파생시켰을 정도로 언어·문화사적으로 오랜 역사를 보유하고 있을 정도이다.¹⁴³⁾ 그런가 하면, 중국의 고대 국가인 은(

Jersey: Educational Technology Publications, Inc., 1985., p.9.

139) Encyclopaedia Britannica, Inc., *Webster's Third International Dictionary*, Chicago: Encyclopaedia Britannica, Inc., 1981. s.v. 'editing', 'complotion', 'reduction'.

140) 李鍾國, 「出版學에 있어 編輯의 位相에 대한 研究」, 『출판문화산업의 이해』(서울: 일진사, 1999), p.58.

141) Giles N. Clark, *Inside Book Publishing*(2nd. ed.), London: Chapman & Hall, 1995. p. 66.

142) Giles N. Clark, 위의 책, 같은 면.

143) 劉光裕·王華良, 「編輯學理論研究」(濟南: 山東教育出版社, 1999), p.19.

殷)·상(商) 시대에 벌써 기록관으로서의 ‘편집’이라는 직책이 존재했다는 것이다.¹⁴⁴⁾

우리 나라에서도 고구려의 「유기(留記)」(400), 백제의 「서기(書記)」(346~375 사이), 신라의 「국사(國史)」(545) 등 많은 역사서와 종교 서적들, 문집류가 편집물이었다. 따라서, 세계에서 가장 방대한 출판물로 알려진 「고려대장경」과 「조선왕조실록」 등이 대표적인 편집 저작물이기도 하다. 오늘의 교과용 도서 역시 편집 저작물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성격을 가진다. 그런데 이러한 서적들은 모두 국가의 출판 기획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공통점이 있다. 워낙 대규모 출판 사업이므로 민간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이른바 ‘관주도의 출판’이 오랜 내력을 이어 온 셈이다.

그래서 역대 왕조들은 여러 유형의 ‘문한(文翰)’ 기관을 필요로 했는데, 예컨대 집현전(集賢殿), 홍문관(弘文館), 예문관(藝文館), 춘추관(春秋館), 교서관(校書館) 등이 그런 관청들이었다. 이 가운데, 고려조의 국립 전적 개발 기관인 집현전(조선왕조에도 이어짐.)에서 태학사(太學士)로 직무하고 있던 김부식(金富軾)은 우리 나라에서 최초로 ‘편집’이라는 말을 사용했다. 그는 「삼국사기」를 편집(1145)함에 있어 왕(仁宗)에게 표(表)하기를,

臣金富軾言, 古之列國, 亦各置史官, 以記事, ……愉此海東三國, 歷年長久, 宜其事實, 著在方策, 乃命老臣, 俾之編集, 自顧缺爾, 不知所爲.¹⁴⁵⁾ (下略)

라 했다. 즉, “신 부식은 아뢰오니, 고대(중국)의 여러 나라에서도 각기 사관(史官)을 두어 시사(時事)를 기록한 일이 있으므로……우리 동방 삼국에서도 역년이 오래 되어 마땅히 그 사실을 서책에 기록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노신에게 명하여 ‘편집’케 하셨는데, 스스로 돌아보건대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라 보고하고 있다.

이로 보아, 김부식은 「삼국사기」라는 국가 기획 출판물을 성편함에 있어, 그 편찬 업무를 책임진 편집자인 동시에 국가 공무원으로서의 편수관이었던 셈이다. 그의 글에 적혀 있는 ‘編集’(集은 輯과 같은 뜻으로 쓰임.)¹⁴⁶⁾이란 말이 우리 문헌에 보이고 있는 것은 「삼국사기」가 처음의 사례일 것이다.

편수관의 직제는, 원래 역사를 편술하는 관청인 사관(史館)에 편제되어 있었으며(1308, 고려 충렬왕 34), 이후로 소속 관청과 그 직제가 여러 차례의 개칭을 거쳐, 편수 업무를 관장하는 곳이 춘추관으로 굳혀진 것은 1362년(공민왕 11)부터였다.¹⁴⁷⁾

144) 戴文葆, ‘編輯(editor)’,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編輯部 編, 「中國大百科全書: 新聞·出版」(北京·上海: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1990), p. 36.

145) 金富軾, ‘進三國史記表’, 「東文粹」卷一·「東文選」卷四十四 所收.

146)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編輯委員會 編, 앞의 책, 「中國大百科全書: 新聞·出版」, p. 36.

147) 오희복, 「우리 나라 역대 국가들의 관료 기구 및 관직명 편람」(서울: 여강출판사, 1999), p. 440 참조.

편수관은 수찬관(修撰官)과 더불어, 그들이 춘추관에서 직무(정3품에서 종4품의 품계)하고 있는 현재로 여러 정사에 관한 기록·편집 업무를 맡고 있었으며, 그 최고 지휘 책임자는 영사(領事, 정1품이며 영의정이 겸직)였다.¹⁴⁸⁾

이렇게 볼 때, 보통 한 나라의 교과서는 곧 그 시대 사회의 역사적 실상을 표상한다고 일컫는 것도, 옛적의 편수 직무를 통하여 간취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폈듯이, ‘편집’이라는 말 자체가 오랜 역사를 누려온만큼, 이를 직무로 하는 관리나 전문가의 존재 또한 장구한 내력을 함께 해 왔다는 사실을 미루어 알게 한다. 이것이 국가의 교육 수단 편찬을 목적으로 한 편수 직제로 볼 때는 ‘편수관’으로 대표되었고, 일반의 출판 산업 분야쪽에서는 그 전문가(전문 직업인)를 ‘편집자’ 또는 ‘편집인’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편, 미군정기에는 편수관이 아닌 ‘편수사(編修士)’라 했고, 정부 수립 이후로 편수국의 직제 중 편집과(編輯課)를 두어, 교과서 편수 담당관을 ‘편집관’이라 부른 때도 있었다.¹⁴⁹⁾

이상의 살핌을 토대로 하여, ‘편수’와 이를 직무로 하는 ‘편수관’에 대하여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편수’란, 공표할 만한 가치가 있는 여러 정보를 모아 배열하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수정한 결과를 서적 등의 공포 수단으로 이룩하여 독자(교수-학습자를 포함하여)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이행하는 일련의 지적·기술적인 작업이다. 이러한 작업은, 제도적으로 정부의 직제·직무 규정에 기본을 둘 경우, 그 직무자 중의 한 위계를 ‘편수관’이라 하며, 이는 주로 교과용 도서 등 교수-학습 활동에 필요로 하는 여러 유형의 교육 수단을 편찬·발행할 목적으로 정부에 의해 임명된 전문직자로서, 국가 공무원 중의 한 직위이다.

이제, 8·15광복 이후로 한국의 교육 과정과 교과서가 변천되어 온 이력이 반세기를 훌쩍 넘겼다. 그런 시점에서 여전히 전열(前列)에 서 있었던 실체가 편수 활동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교육 과정의 편성과 교과용 도서 편찬에 관한 한, 이 문제를 과업으로 삼은 공직자가 편수관들이었음을 새삼스레 짚게 된다. 그들은 과거 오랜 기간 동안(1945. 9~1996. 6) 이른바 ‘정부 주도형 교과서’ 편찬을 맡고 있었던 당무자들이라 하여 그에 따른 여러 애환도 함께 경험했다. ‘문한직(文翰職)’으로서의 그들은 한국의 교육 과정·교과서 변천사 속에 깊이 개입하고 있었던 주역 세력으로서 큰

148)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國譯大典會通」(서울: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1975), p. 54.

149) 홍웅선, ‘미군정기와 교수 요목기’, 한국교육과정·교과서연구회 편, 「인물로 본 편수사」(서울: 대한 교과서주식회사, 1999), p.6 참조.

영향을 끼쳤던 것이다.

2) 편수 활동의 주변

8·15광복 직후에 있어, 처음으로 편수 활동에 실직적으로 참여했던 인사들은 조선어 학회 회원들이라 할 수 있다. 그들은 민간인 신분이었지만 저자인 동시에 당국의 교과용 도서 편찬 업무에 참여한 실질적인 실무자들이기도 했다.

미군정에 의한 학무 행정이 개시되면서 초대 편수과장을 지낸 이가 외솔 최현배였다. 그는 우리말 교재의 편찬이 가장 시급한 당무임을 절감하고, 이 일을 총괄한 한국인측 편수 책임자(6·25전쟁기에도 편수과장으로 복귀)로 직무했다. 당시 편수과에는 당대 최고 수준의 지식인·전문가들이 교과별 편수관으로 참여하여 초창기의 교육 과정·교과서 업무를 맡고 있었다.

이후로도 편수국은 기라성 같은 지식인 집합소로서¹⁵⁰⁾, 그들에 의해 교육 과정을 체계화시키는 작업이 이루어졌고, 각종 교과용 도서를 집필, 심고(審稿)하여 그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등 학자 공무원 집단으로서의 전문 기능을 발휘했다.

이렇듯, 8·15광복 직후로부터 많은 편수 당국자들이 교수 요목의 제정, 교육 과정의 조직, 교과용 도서 편찬 업무를 주도했다. 이에 관해서는 그 동안에 여러 편의 보고¹⁵¹⁾가 있으므로, 여기서는 구체적인 서술을 생략한다.

미군정기 및 교수 요목기에 이행된 편수 활동은 다음과 같은 4개 시기의 환경적 변인과 관련되어 있다. 즉, ① 교육 활동의 긴급 조치기(1945.8.15.~1946.9.), ② 교수 요목 제정·적용기(1946.9.~1948.8.), ③ 교수 요목 계승기(1948.8.~1950.6.), ④ 전시하 교수 요목 변환 적용기(1950.6.~1954.4.)가 그것이다.

이 같은 분할은 한국의 교육 과정과 교과용 도서 편찬 궤적이 걸어 온 초창기적 환경으로 자리매김된다. 여기에서도 차별화된 특징을 부여할 수 있는데, ①, ②의 기간은 미국인과 한국인 편수진용이 공동 스태프를 이루어 교수 요목의 제정과 교과용 도서 편찬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이다. 이에 뒤이은 시기(③의 시기)부터는 종래의 관행이나 제도를 연결하는 선에서 변환적 적용을 꾀했다.

150) 崔秉七, ‘人生과 教育’, 앞의 책, 「編修의 뒤안길」, p. 1.

151) 이에 관해서는; 「編修의 뒤안길」 제1집(1991) 중 최병철, 최태호, 심의섭, 홍웅선 등의 논문 참조. 동 제2집(1995) 중 홍웅선, 최태호, 최영복 등의 논문 참조. 「인물로 본 편수사(編修史)」중 홍웅선의 논문 등 참조. 또, 홍웅선, ‘편수국의 위상(1945~1955)’, 「교과서연구」 제26호(서울: 한국2종교과서협회, 1996.11.), pp.36~38 참조. 한국교육과정·교과서연구회, 「한국 교육과정 변천에 관한 연구」(1998.12.), pp.54~57 참조.

무엇보다도, ‘건국 문교’ 행정이 정지 작업을 다지기 시작할 때 6·25전쟁을 겪어 이후 3년여에 걸친 담보 상태를 경험한, 수난의 편수사로 점철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한 정황은 모든 분야에 관련되고 있던 문제였으나, 특히 교육 사회의 담보 상태야말로 겨우 정지 기반을 마련해 나가던 과정에서 엄청난 위기 상황으로 급전된 것을 의미한다.

편수 활동으로 말하면, 우리말 교재의 편찬(임시 적용)→교수 요목·교육 과정의 정비(상당 부분 중단)→전쟁 발발과 전시 교재 편찬(정식 교재 편찬 중단) 등, 그 진전 과정이 미완의 내력으로 채워져 있음을 본다. 이 때문에, 본격적인 교육 과정 마련도 광복 후 8년 7개월이 지난 뒤인 1954년 4월에 이르러 제정, 공포를 볼 수 있었다.

그러한 변혁 과정 속에서도 우리의 교육 과정과 교과용 도서를 새롭게 갖추어야 한다는 현안이 거듭 중요시되었고, 그 명맥을 잇게 한 것은 편수 활동이었다. 편수 활동은 모든 교육 행위의 원인적 동인으로 작용했으며, 그 저변인 동시에 교수-학습 활동의 현장을 연결케 한 견인차였음에 틀림없다. 요컨대, 편수 활동의 중심이 교과서 편찬 업무였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과거 편수 당국자들은 여러 유형의 관련 현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목되는 업적을 쌓았다. 예컨대, 전선(戰線)이 극심하게 위협받고 있던 상황에서도, 피난 수도 부산(토성동 묘심사 한켠에서 편수국이 집무함.)에서 ‘우리말 어휘 사용 빈도 조사’(1951.2.~1953.11.)를 수행¹⁵²⁾했던 것이다. 이 조사 사업은 광복 후 최대의 문교 프로젝트로서, 우리의 국어 연구사뿐만 아니라 교과용 도서에서의 바람직한 어휘 적용을 위한 기념비적 업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 이런 일—오늘의 태극기 형식이 한 ‘공민’ 담당 편수관에 의해 정립되었다¹⁵³⁾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드물 것이다. 정부 수립 직후까지만 해도, 태극기는 그 형식에 통일성을 갖추지 않아 적지 않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었는데, 이를 역사적, 이치적으로 재구안(再究案)하여 문교부 고시(1949.10.15.)로 공포한 바 있다.

그들은 또한 ‘한글 간소화 파동’을 정면으로 맞서 역사상 가장 ‘기이한 교과서’ 편찬이 현실화될 수 있었던 사건을 사전에 방어한 일도 있다. 이는 최현배 편수국장의 소신으로 가능할 수 있었다. ‘한글 간소화 파동’은, 1954년 3월 27일 이승만 대통령이 성명한

152) 문교부, 「우리말에 쓰인 글자의 찾기 조사」, 서울: 문교부, 1955.

洪雄善, ‘編修局에서 만난 분들’, 앞의 책, 「編修의 뒤안길」 제2집, pp.41~45 참조.

李鍾國, 앞의 책, 「大韓教科書史: 1948~1998」, pp.317~324 참조.

153) 申義燮, ‘文教部時節’, 앞의 책, 「編修의 뒤안길」 제1집, pp.24~25 참조.

‘한글에 관한 담화’로부터 야기된 광복 후 최대의 어문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한 나라의 언어·문자 정책이 통치권자나 권력 집단의 힘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역사적 교훈을 남겼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례에서 시사받을 수 있듯이, 편수 활동의 주변에서 일어난 사건과 그 비망적(備忘的) 건건들은 여러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

편수 활동이 왜 중요한 것인가를 일깨운 교훈적 사건도 있었다. 1977년 3월에 발생된 이른바 ‘검인정 교과서 회사 사건’¹⁵⁴⁾이 그것이다. 이 사건은 발생한 때로부터 무려 13년 5개월이라는 긴 법정 심리(1977.2.~1990.7.) 끝에 마침내 명예 회복이 되었지만, 그것이 국민 교육 수단인 교과서 편찬·발행을 둘러싼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와 같이, 편수 활동은 많은 업적을 생성시켰지만, 굴곡 또한 함께 하고 있었다. 문제는, 편수 활동이 어떤 포지셔닝이어야 하는가에 따라 파급 효과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도, 편수 당무자의 역할이 막중하다는 사실은 거듭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문한직 관료 사회를 이루고 있었던 그들은, 지난 반세기에 걸쳐 우리 교육 현장을 주도해 나간 실질적인 ‘컨트롤 스테프’로 역할했다는 사실을 주의 깊게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교과서에 관한 한 ‘편수사(編修史)’가 차지하는 몫이 그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제 편수국과 그 안에서 직무하는 편수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제6공화국의 이른바 ‘스몰 가버먼트’ 정책으로 하여 폐기(1996.7.)된 것이다. 문민 정부를 표방했는데도 ‘문한직’을 거두었으니, 남득하기 곤란한 일이랄밖에 없다. 이러한 사정과 관련하여, 한 기자는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교육부는 편수가 주된 농사다. 농사가 잘 되면 그것으로 풍년을 구가하게 마련이다. 그래야 통치가 쉽다. 편수를 제쳐 놓고 대학 입시에만 매달리고 평가 기구만 두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모양새가 한 예이다.¹⁵⁵⁾

위의 지적은 오늘의 현실에 비추어 시사하는 바가 많다. 그런 점에서도, ‘편수’의 과거와 현재를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학문적 진단이 더욱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편수 활동의 변천은 ‘한국의 편수사’라는 주제로 충분히 논의할 이유와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편수 업무를 독립적으로 관장할 전문 기구를 설치해야 마땅하다고 본다. ‘편수원(編修院)’, ‘편수 아카데미’ 등으로 이름 붙여 편수 활동만을 전담

154) 이대익, ‘검인정 교과서 회사 사건’, 『教科書研究』 제14호(서울: 사단법인 한국2종교과서협회, 1992. 12.), pp.104~115 참조.

155) 김병옥, ‘기자가 본 편수 행정’, 『교과서 연구』 제26호(서울: 한국2종교과서협회, 1996.11.), p. 46.

하는 전문 기구를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문제를 민·관 간에, 그리고 교과서 출판업계가 공동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4. 결론적 논의

지금까지 미군정기 및 교수 요목기의 교육 과정과 교과용 도서 편찬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본문에서 다루었듯이, 미군정기 및 교수 요목기는 정치·사회적 변동 구간으로 본다면, 통치 권력 주체가 미군정 당국으로부터 한국 정부로 이어진 차별적 특수성이 있다. 그러한 상태에서 교수 요목의 제정과 그 적용면에서 볼 때, 적어도 1954년 4월까지 교수 요목기로 관류되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 과정·교과서사를 하나의 연계적 단위 구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이 구간은 넓은 의미로 보아, 첫 교육 과정(제1차 교과 과정)이 적용되기 이전 과정으로서의 여러 관련 행정이 긴급 조치식 명·법령에 따라 운행된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끊임없는 실험과 모색의 연속 과정이었던 것이다.

한국의 교육 과정과 교과서 변천 과정은 1954년 이래 7차에 걸친 전면 개편과, 또 그때 그때의 필요성 진단에 따라 부분 개편이 계속되었다. 이 문제는 국가 사회의 변혁 과정에 승차한 상태에서 이른바 ‘한국적인 교육 토양’을 이어 오게 했던 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원인적 기반이 미군정기 및 교수 요목기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이 연구는 모두 4개 대단원으로 조직되어 있는데, 그 중심을 이루고 있는 서술이 제2, 제3대단원이다. 먼저 제2대단원에서는 미군정 교육의 전개와 교과용 도서 편찬 실태를, 제3대단원에서는 신생 정부의 교육 과정·교과용 도서와 전시 교육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려 노력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의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미군정 교육의 전개와 교과용 도서 편찬

미군정이 한반도에서 이행되었다는 사실은 또 다른 점령 세력에 의한 사회적 변환을 가져온 것을 의미한다. 교육 활동이 미군정청 학무국에 의해 집행되었으며, 그 기구 안에서의 편수과(국)는 한·미 양측 스태프로 조직되어 교육 과정·교과서 행정을 추진했다. 이와 같은 이원 조직은 갈등과 공조의 이율적 모순이 야기되어 여러 어려움을 겪은

것도 사실이다.

미군정 초기의 경우이긴 하지만, 미군측 학무 당국자들은 한국 사정이 밝지 않아 조선교육회, 조선교육심의회 등 자문 조직을 설치함으로써 행정 수행의 편의성을 꾀하고자 했다.

그러한 편의성은, 위의 자문 조직에 참여하고 있었던 한국측 인사들에 의해 민족주의 교육을 목표로 한 여러 아이디어가 제공되었다. 또, 이를 기반으로 하여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는 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그들은 또한 한국 정부의 출범을 고려하여 교육 과정·교과서 문제와 관련된 여러 현안을 준비해 나간 전문가 집단으로서 많은 일을 감당했던 것이다.

당시에 있어, 모든 행정 영역이 두루 그러했지만, 교육 분야 역시 ‘긴급 조치’로 일관되고 있었다는 특징이 있다. ‘교수 요목’의 제정도, 따지고 보면 긴급 조치에 의한 산물이었다.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에 대한 시급한 물음을 교수 요목 마련으로 풀어 나가고자 했던 것이다. 이 교수 요목은 원칙적으로 교과서 편찬에 전제된 것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교과서 개발이 선행되는 역순 사례가 흔했다. 그래서 임시 교재는 물론이려니와, 초기에 개발된 교과서들이 그런 경우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우리말 회복이 시급했으므로 우선 교재부터 만들어 보급해야 한다는 명분을 최우선적인 당무로 삼고 있었기 때문이다.

미군정기의 교육 과정과 교과용 도서 편찬 과정은 미국 정부의 극동 정책에 포함된 대 한국인 교육 사업의 일환이었다는 점에서 시대사적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미국식 커리큘럼이나 교과서 제작 방식이 도입되고 있었음에도, 미국 정부의 대 한국 전략이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예컨대, 교과서의 경우 ‘Come Come Spot’를 번안한 「바둑이와 철수」(1948.10.) 같은 story method식 교재가 실현된 바도 있으나, 그것은 짧은 기간만의 적용에 지나지 않았다. 또, ‘사회 생활’ 등 전에 없던 교과를 도입한 것도 학문적 발달에 따른 능동적인 수용이었으며, 이것이 전적으로 미국의 영향에 의해 결과된 것이라고는 말하기 어렵다. 따라서, 당시의 교육 과정이나 교과서 속에 그들의 정책과 이념을 반영하는 등 이데올로기적 도구로 삼지 않았다는 사실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는, 이른바 국책 이념을 역대 교육 과정 속에 끊임없이 반영해 온 그간의 내력을 되짚게 하는 역설적 대목이기도 하다.

그러한 파악은 최현배 등 민족주의자들이 교육 과정과 교과서 편수 활동의 중심에서 직접적인 당무자로 참여했다는 사실로 미루어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군정기의

교육 과정과 교과서가 지닌 특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식민 잔재를 불식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당무로 선택한 과제가 교육이었으며, 그 실질적인 대안은 새로운 교수 요목을 갖추는 일이었고, 교과용 도서를 시급히 편찬·발행하는 일이었다.

둘째, 임시 교재의 편찬은 정식 교재를 마련하기 앞서 사전 학습 자료로 제공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교재들은 실질적인 본격성을 지닌 동시에, 오히려 ‘특별 교재’로서의 의의가 강하다.

셋째, 교육 과정 및 교과서 편찬과 관련된 각종 자문 단체의 참여로 광복 후 최대의 ‘자문 교육 행정’이 이루어졌으며, 그 단체들에 의해 교수-학습 활동의 첫 토대가 구축되었다.

넷째, 편수과(국)를 학무 행정 체계의 수석 기구로 편제함으로써 교과서 편찬 등의 당무 해결에 최우선을 두었다.

다섯째, 한국어 교재를 통한 국어 회복 노력은 우리의 교육 과정·교과서사뿐만 아니라, 주권 교육의 현실화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2) 신생 정부의 교육 과정·교과용 도서와 전시 교육

정부 수립과 더불어 교육 과정·교과용 도서 현안은, 우선 그 제도 운영면에서 미군정기에 적용하던 것을 승계하고 있었던 실정이었다고, 그러한 기반 위에서 새 방향을 모색하고자 했다. 이 무렵에는, 과거 일제 식민 잔재가 거의 일소된 형편이었으나, 교육 과정과 교과서 현안에 관한 한 면모 일신을 달성했다고 보기 어렵다.

왜냐 하면, 교육법이 정부 수립 후 1년 4개월을 넘긴 시점(1949. 12. 31)에 제정을 보았고, 그에 따른 일련의 후속 사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실업계 전문 교과서들에 대한 대책이 막혀 있었던 것도 그런 사례 중의 하나였다. 이 때문에, 식민지 시대의 교재들이 교육 현장 주변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더구나, 그 편찬·발행 범위도 일부 보통 교과와 교과서쪽에만 몰려 있을 뿐이어서, 교재 수급에 심각한 차질을 빚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9학년도 현재로 초등 교과서를 전면 국정화했으며, 초·중등용 검인정 도서도 225종 472책을 발행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각 학교급·교과별 교육 과정을 제정한다는 문교 방침을 추진하던 중 6·25전쟁이 일어났다. 물론, 모든 교과용 도서도 전면 신·개편한다는 계획이 마련된 상태에서 그에 따른 작업이 추진되고 있던 터였다. 이로 하여, ‘건국 문교’는 그 들

머리 단계에서 봉쇄 상태에 직면했고, 정책적 진로도 ‘전시 문교’로 급선회하게 되었다.

그런 와중에서 탄생된 교과서가 ‘전시 교재’들이었으며, 이는 과거 미군정기에 펴냈던 ‘임시 교재’와 더불어 시의적 대응을 위한 특별 교재로서의 위상을 지닌다.

함축해 말하여, 신생 정부의 교육 과정과 교과서 편찬 활동이 지닌 특징을 들면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정부 수립기의 교육 과정과 교과서 문제는 그 첫 궤도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일시에 정지당했으므로, 이후의 진로 개설에 큰 타격을 입었다. 이는 적어도 5년간의 후퇴를 의미하며, 그 여파로 말하면 10년을 상회하는 뒤처짐을 결과케 했다. 왜냐 하면, 교과서 편찬의 경우 1958년에 이르러 전면적인 신·개편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둘째, 광복 이후의 교육 과정·교과서사에 있어 극심한 가변적 상황이 거듭된 때 정부 수립으로부터 6·25전란기로 이어졌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그 관련 분야의 추진 사업 또한 가변적이었으며, 임시 방편적인 수습책으로 일관되고 있었던 것이다. 요컨대, 각급 학교 교육 과정을 새롭게 편성하려던 당초의 계획이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교과서 편찬 또한 전쟁 이전의 과업을 승계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전시학교육특별조치요강’이라는 전시 교육 방침을 시행했는데, 이는 당시의 사정을 증거해 주는 가장 뚜렷한 징험이라 할 것이다.

셋째, 전면적 전시하였음에도 학교를 열어 수업을 계속함으로써 높은 교육열을 유지했다. 그러한 교육 열기로 하여,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드문 ‘전시 교재’가 보급되었고, 가교사·가교실, 그리고 여러 형태의 노천 학습을 가능케 했던 것이다. 당시의 놀라운 교육열은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라는 특별한 슬로건을 낳게 했다.

넷째, 실업 전문 교육과 그에 따른 교과용 도서 편찬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이는 오늘의 실정에 비추어 매우 중요한 동인을 제공한 것이었다.

다섯째, 정부 수립을 거쳐 6·25전란기에 이행된 편수 활동은 주목되는 선례를 남겼다. 당시의 편수 책임자들은 행정적 직능자를 지양하여 연구·개발에 최선을 다했다. 예컨대, ‘우리말 어휘 사용 빈도 조사’와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사례인 것이다.

한편으로, 정부 수립 이후 교수 요목기 후반에 걸쳐 국가 사회적 환경이 전쟁에 휩싸여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통제의 벽 또한 완강했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다. 이로 하여, 국가 주도형 교육 과정 또는 정부 주도형 교과서 체제로 더욱 두껍게 굳혀 갔고, 그러한 권위주의적 모형은 뿌리 깊은 쟁점을 파생시켰다. 바꾸어 말해서, 6·25전쟁으로 고착화된 남북 분단으로 인하여 이데올로기 문제가 교육 과정과 교과서 속에 가장 중요

한 핵심 사안으로 불박혀지게 된 것을 의미한다.

이제 8·15광복 이후 반세기를 넘긴 오늘에 이르러 남북 화해를 주제로 삼은 내용이 교육 과정·교과서 속에 반영된다 하니 격세의 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상과 같이, 이 연구의 결론에 부치면서 앞으로의 연구를 위해 몇 가지 제언을 덧붙이고자 한다.

첫째, 미군정기에 이행된 교육 관련 자료들을 거듭 발굴하여 그에 대한 집중적인 해독과 분석적인 연구가 요청된다. 이에 관하여 여러 연구자들이 우려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의 성과(연구 성과)로 말하면 병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미국 국립문서보관소(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에 소장되어 있는 문서함을 얼마만큼 열어 보았는가—또 그런 작업을 추진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어떤 뒷받침을 했던가를 반성해야 할 것이다. 그런가 하면, 미국방성에서 편찬하고 있는 「한국 전쟁사(History of Korean War: 1950~1953)」의 경우, 여전히 집필중에 있다는 사실을 경각심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둘째, 정부 수립 직후의 교육 과정과 교과서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 거의 비슷한 어설들—“6·25전쟁이 일어나 중단되고 말았다.”라 하는 식의 편의적 서술은 지양되어야 한다. 강조해 말하지 않더라도, 역사라는 주제는 공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전쟁통에 수많은 자료들이 인멸·소실된 것도 사실이지만, 당해기에 관련된 여러 증거들을 적극적으로 발굴, 구명(究明)하는 작업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취지인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 문제를 유의한 나머지 몇몇 새로운 자료를 발굴하여 논의에 이바지할 수 있었는데, 적으나마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셋째, 교과서는 교수-학습 활동에 요청되는 주된 수단이라는 점에서 특별히 중요한 가치·기능을 가진 것이며, 이에 대한 연구를 적극 열어 가야 한다. 그 중에서도 교과서 출판과 관련된 연구를 더욱 활성화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그 동안, 교육 과정 분야의 연구는 되어 있으나, 교과서 연구는 매우 인색한 실정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의 연구에 있어, 이에 관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참 고 문 헌

-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國譯 大典會通」, 서울: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1975.
- 郭相萬, 「教科書政策研究」, 一峰鄭泰秀博士回甲紀念論叢刊行委員會 編, 「轉換期的 韓國教育」, 서울: 叢智閣, 1991.
- 教育課程·教科書研究會 編, 「韓國 教科教育課程의 變遷(國民學校)」, 서울: 大韓教科書株式會社, 1993.
- 教育課程·教科書研究會 編, 「韓國 教科教育課程의 變遷(中學校)」, 서울: 大韓教科書株式會社, 1990.
- 教育課程·教科書研究會 編, 「韓國 教科教育課程의 變遷(高等學校)」, 서울: 大韓教科書株式會社, 1990.
- 教育部, 「教育法 第157條의 違憲與否에 관한 意見書」, 서울: 教育部, 1992.
- 教育·倫理研究室 編, 「韓國教育改革的 綜合的 評價」, 서울: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5.
- 국사편찬위원회, 「자료 대한민국사 I」, 서울: 탐구당, 1968.
- 軍政廳文教部, 「교수 요목집·3」, 서울: 朝鮮教學圖書株式會社, 1946.
- 軍政廳文教部, 「초중등 학교各科 교수 요목집」, 서울: 朝鮮教學圖書株式會社, 1946.
- 김균, 「미국의 대외 문화 정책을 통해 본 미군정 문화 정책」, 「韓國言論學報」(제44-3호·2000년 여름호), 서울: 社團法人 韓國言論學會, 2000.7.
- 金敏洙, 「國語政策論」, 서울: 高麗大學校 出版部, 1973.
- 김민환, 「미군정 공보 기구의 언론 활동」, 서울: 西江大言論文化研究所, 1991.
- 김병옥, 「기자가 본 편수 행정」, 「교과서연구」(제26호), 서울: 한국2종교과서협회, 1996.11.
- 金富軾, 「進三國史記表」, 「東文粹」 卷一·「東文粹」 卷四十四.
- 김수천, 「해방 후 우리 나라 교육 과정—변천·문제·개선 방향」, 「한국 교육 과정의 새로운 좌표 탐색」, 서울: 교육과학사, 1996.
- 김용만 외, 「한국 교육 과정 변천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 교육과정·교과서연구회, 1998.
- 大韓出版文化協會, 「大韓出版文化協會40年史」, 서울: 大韓出版文化協會, 1987.
- 文教部, 「國民學校·中學校·高等學校·師範學校 教育課程 時間配當 基準令」(文教部令第35號), 서울: 文教部, 1954.4.20.

文敎部, 「國定敎科書 發行一覽表」, 「文敎部事務引繼書」, 서울: 文敎部, 1948.
 문교부, 「농작물 두루풀이」, 부산: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52.
 文敎部, 「大韓民國 敎育概況」, 서울: 文敎部, 1950.
 문교부, 「문교 개관」, 서울: 문교부, 1959.
 文敎部, 「文敎40年史」, 서울: 文敎部, 1988.
 문교부, 「우리말 도로찾기」, 서울: 조선교학도서주식회사, 1948.
 문교부, 「우리말에 쓰인 글자의 찾기 조사」, 서울: 문교부, 1955.
 文敎部調査企劃課, 「文敎行政概況」, 서울: 文敎部調査企劃課, 1947.
 文定昌, 「軍國日本朝鮮占領三十六年史」, 서울: 栢文堂, 1965.
 민병덕·안상수·권낙원·홍우동, 「敎科書體裁에 관한 研究」, 서울: 社團法人 韓國2種敎科書協會, 1991.
 朴鵬培, 「韓國國語敎育全史·上」, 서울: 大韓敎科書株式會社, 1987.
 朴鵬培, 「韓國國語敎育全史·中」, 서울: 大韓敎科書株式會社, 1997.
 배희성, 「국정 및 검인정 도서에 대하여」, 「편수시보」 (제1호), 서울: 조선서적인쇄주식회사, 1950. 2.
 白樂濬, 「韓國敎育과 民族精神」, 서울: 韓國敎育文化協會, 1953.
 서울大行政調査研究所, 「韓國行政에 있어서의 文敎行政의 位置」, 서울: 서울大行政調査研究所, 1978.
 손인수, 「미군정과 敎育 정책」, 서울: 도서출판 민영사, 1992.
 孫仁銖, 「韓國近代敎育史: 1885~1945」 (5판), 서울: 延世大學校 出版部, 1992.
 孫仁銖, 「韓國敎育文化의 理解」, 서울: 培英社, 1992.
 송덕수, 「광복 敎育 50년—Ⅰ 미군정기편」, 서울: 대한교원공제회 교원복지신문사, 1996.
 申義燮, 「文敎部時節」, 한국 敎育과정·교과서 연구회 편, 「編修의 뒤안길」,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1.12.
 申千植, 「韓國敎育史의 時代區分 問題」, 韓國敎育學會·韓國敎育史研究會 編, 「韓國敎育史學」 (제1집), 서울: 韓國敎育學會·韓國敎育史研究會, 1969.
 安春根, 「한국출판문화론」, 서울: 汎友社, 1981.
 역사문제연구소, 「解放三年研究入門」, 서울: 도서출판 까치, 1989.
 오옥환·최정실, 「미군 점령 시대의 한국 敎育—사실과 해설」, 서울: 지식산업사, 1993.

- 吳天錫, 「새 教育法을 批判함」, 「새 교육」 (제3권 1·2호), 서울: 대한교육연합회, 1950.1.
- 吳天錫, 「韓國新教育史·下」, 서울: 光明出版社, 1975.
- 오희복, 「우리 나라 역대 국가들의 관료 기구 및 관직명 편람」, 서울: 여강출판사, 1999.
- 劉奉鎬, 「現代教育課程」, 서울: 敎學硏究社, 1992.
- 劉奉鎬, 「現代教育課程史硏究」, 서울: 敎學硏究社, 1992.
- 유봉호·김용자, 「한국 근·현대 중등 교육 100년사(한국 신교육 총서5)」, 서울: 교학연구사, 1998.
- 이경섭, 「한국 현대 교육 과정사 연구 (상)」, 서울: 교육과학사, 1997.
- 이광호, 「미군정의 교육 정책」, 「해방 전후사의 인식·2」, 서울: 한길사, 1985.
- 이길상, 「미군정하에서의 진보적 민주주의 교육 운동」, 서울: 교육과학사, 1999.
- 李吉相, 「해방 직후 민주화 운동과 국가 권력」, 「한국의 교육과 윤리」 (제4집), 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2.
- 이남영, 「사상사에서 본 단군 신화」, 「한국 사상의 심층 연구」, 서울: 도서출판 우석, 1982.
- 이대의, 「김인정 교과서 회사 사건」, 「敎科書硏究」 (제14호), 서울: 사단법인 한국2종교과서협회, 1992.12.
- 이돈희, 「韓國 敎育理念의 어제와 오늘」, 「敎育學硏究」 (제32권 제2호), 서울: 韓國敎育協會, 1995.5.
- 李茂根, 「實業·技術敎育」, 서울: 培英社, 1992.
- 李應百, 「續國語敎育史硏究」, 서울: 新丘文化社, 1989.
- 이응호, 「光復直後の 한글 講習과 국어 敎材 編纂」, 蘭臺李應百博士古稀紀念論文集刊行委員會 編, 「光復後の 國語敎育」, 서울: 한샘出版, 1992.
- 李鍾國, 「개화기 교과서에 나타난 한국인상」, 「廣場」 (통권 153호), 서울: 평화교수아카데미, 1986.
- 李鍾國, 「大韓敎科書史: 1948~1998」, 서울: 大韓敎科書株式會社, 1998.
- 李鍾國, 「우리 나라의 발달 1 編纂發行에 대한 考察—國史敎科書 發行史를 통해 본 本書의 位相을 중심으로」, 韓國出版學會 編, 「'85出版學硏究」, 서울: 汎友社, 1985.
- 이종국, 「정부 수립 이후의 교과서와 그 변천」, 「敎科書硏究」 (제23호), 서울: 社團法人韓國 2種敎科書協會, 1995.12.

- 李鍾國, '1945년의 出版實態에 대한 考察', 韓國出版學會 編, 「'88出版學研究」, 서울: 汎友社, 1988.
- 李鍾國, '出版學에 있어 編輯의 位相에 대한 研究', 「출판문화산업의 이해」, 서울: 일진사, 1999.
- 李鍾國, 「한국의 교과서」, 서울: 大韓教科書株式會社, 1992.
- 이종국, '한국의 교과서 변천에 대한 연구—근대 교과서 성립 이후의 출판 과정을 중심으로', 「출판연구」(제11호), 서울: (재)한국출판연구소, 1999.12.
- 李鍾國, '韓國의 教科書編纂 政策과 그 適用過程에 대한 研究—교과용 도서 편찬 형식의 기준 사례를 중심으로', 社團法人 韓國出版學會 編, 「'98出版學研究」, 서울: 汎友社, 1998.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민주적 교과서 제도를 위한 공청회」(세미나 자료), 서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1989.11.8.
- 정열모, 「신편 고등 국문법」, 서울: 한글문화사, 1946.
- 鄭永壽 외, 「韓國 教育政策의 理念」, 서울: 韓國教育開發院, 1985.
- 정영주, '한국 교육 과정 변천에 대한 비판적 분석—1945년~1962년을 중심으로', 「한국 교육 과정의 탐색—유봉호박사 정년기념논문집」, 서울: 교학연구사, 1992.
- 정준섭, 「국어과 교육 과정의 변천」,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5.
- 정태수, 「미군정기 한국교육사 자료집(상)」, 서울: 홍지원, 1992.
- 鄭泰秀, '美軍政期 韓國教育行政의 機構와 要員의 研究—美軍側史料를 中心으로', 서울: 韓國教育學會 教育研究會, 1989.
- 朝鮮教育研究會, 「조선교육」(제1권 제1호), 서울: 朝鮮教育研究會, 1947.4.
- 朝鮮語學會, 「초등 국어 교본·상」, 漢城: 軍政廳學務局, 1945.
- 朝鮮語學會, 「초등 국어 교본·중」, 漢城: 軍政廳學務局, 1946.
- 朝鮮語學會, 「초등 국어 교본·하」, 漢城: 軍政廳學務局, 1946.
- 朝鮮語學會, 「초등 국어 교본 한글 教授指針」, 漢城: 軍政廳學務局, 1945.
- 朝鮮語學會, 「한글 첫 걸음」, 京城府: 軍政廳學務局, 1945.
- 朝鮮總督府, 「教科用圖書一覽」, 京城: 朝鮮總督府, 1915.
- 조성일·김영출, 「韓國 教育行政史」, 서울: 집문당, 1996.
- 中央大學校 附設 韓國教育問題研究所, 「文教史」, 서울: 中央大學校 附設 韓國教育問題研究所, 1974.

- 車培根, 「커뮤니케이션研究方法」, 서울: 世英社, 1980.
- 千柄植, 「國語科 教育課程 및 教科書에 關한 研究」, 「국어교육」(21호), 서울: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73.6.
- 崔秉七, 「人生과 教育」, 한국 교육과정·교과서연구회 편, 「編修의 뒤안길」,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1.12.
- 崔榮福, 「編修局職制 任意變更 有感」, 한국 교육과정·교과서연구회 편, 「編修의 뒤안길」(제 2집),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5.9.
- 崔暎海, 「出版界의 回顧와 展望」, 普成社 影印「出版大鑑」, 서울: 普成社, 1985.
- 崔台鎬, 「編修秘話」, 한국 교육과정·교과서연구회 편, 「編修의 뒤안길」,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1.12.
- 崔台鎬, 「나의 編修局 시절」, 한국 교육과정·교과서연구회 편, 「編修의 뒤안길」(제2집),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5.9.
- 韓國檢認定教科書發行人協會, 「教科書會誌」(제1집), 서울: 韓國檢認定教科書發行人協會, 1963.5.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육부 직제 연혁」(정책자료제55집), 서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1995.
- 한국교육개발원, 「韓國의 教科書 變遷史」,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82.
- 한국 교육과정·교과서연구회 편, 「인물로 본 편수사—교육과정·교과서 탐구」,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9.
- 한국 교육과정·교과서연구회 편, 「편수의 뒤안길」(제1집),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1.12.
- 한국 교육과정·교과서연구회 편, 「編修의 뒤안길」(제2집),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5.9.
- 韓國教育十年史刊行會, 「韓國教育十年史」, 서울: 豐文社, 1960.
- 韓國教育學會·韓國教育史研究會, 「韓國教育史研究의 새 方向」, 서울: 集文堂, 1982.
- 한글학회50돌기념사업회, 「한글학회 50년사」, 서울: 한글학회, 1971.
- 한준상, 「미국의 문화 침투와 한국 교육—미군정기 교육적 모순 해체를 위한 연구 과제」, 「解放前後史의 認識·3」, 서울: 한길사, 1989.
- 咸宗圭, 「教育課程沿革調查(前篇)」, 서울: 淑明女子大學校 教育問題研究所, 1974.
- 咸宗圭, 「美軍政時代의 教育과 教科課程」, 서울: 韓國教育開發院, 1984.

- 허강, '우리 나라 교과서 연표', 『教科書研究』(제19호: 1994.7., 제20호: 1994.12.), 서울: 社團法人 韓國2種教科書協會
- 許江·洪佑東·張煥東, 「教科書 外的 體制改善에 관한 研究」(研究報告 97-2), 서울: 財團法人 韓國教科書研究所, 1997.
- 홍웅선, 「광복 후의 신교육 운동—조선교육연구회를 중심으로」,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1.
- 홍웅선, '교육 과정의 변천—역사·철학적 고찰', 「교육 논총: 교육 과정 및 수업에 관한 연구 방법 탐구」(제11권), 서울: 한양대학교 한국교육문제연구소, 1995.12.
- 홍웅선, 「미군정기와 교수 요목기」, 한국 교육과정·교과서연구회 편, 「인물로 본 편수사」,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9.1.
- 洪雄善, 「美軍政下 社會生活科 出現의 經緯」, 『教育學研究』(제30권 제1호), 서울: 韓國教育學會, 1992.6.
- 홍웅선, 「우리 나라의 교과서 변천사」, 「한국 교과서 목록(개화기~1963)」, 서울: 대한출판문화협회, 1990.
- 洪雄善, 「6·25동란 중 펴낸 임시 교재—전시 독본」, 「교원복지신보」(제657호), 1996. 9. 11.
- 洪雄善, 「編修局에서 만난 분들」, 한국 교육과정·교과서연구회 편, 「編修의 뒤편길」(제2집),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5.9.
- 홍웅선, 「편수국의 위상(1945~1955)」, 「교과서연구」(제26호), 서울: 한국2종교과서협회, 1996. 11.
- 洪雄善, 「학자 공무원 최현배 선생님」, 한국 교육과정·교과서연구회 편, 「編修의 뒤편길」,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1.12.
- 洪雄善, 「한글과 나의 편수관 시절」, 한국 교육과정·교과서연구회 편, 「編修의 뒤편길」,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1.12.
- 關英子, 「軍政下에 있어서 韓國人의 教育再建努力」, 「解放後 韓國의 教育改革—美軍政期를 中心으로」, 서울: 財團法人 韓國研究院, 1987.
- 阿部洋, 「美軍政期에 있어서 美國의 對韓教育政策」, 「解放後 韓國의 教育改革—美軍政期를 中心으로」, 서울: 財團法人 韓國研究院, 1987.
- 阿部洋 編, 「解放後 韓國의 教育改革—美軍政期를 中心으로」, 서울: 財團法人 韓國研究院, 1987.

- 學部,「朝鮮教育の現状」,京城:學部,1910.
- 戴文葆,「編輯(editor)」,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編輯部 編,「中國大百科全書:新聞・出版」,
北京・上海: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1990.
- 劉光裕・王華良,「編輯學理論研究」,濟南:山東教育出版社,1999.
- Sherman Kent 저・安貞模 역,「歷史學研究方法」,서울:成文閣,1988.
- Daniel Tanner・Laurel Tanner, Supervision in Education—Problems and Practices,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1987.
- Davied H. Jonassen, Generative Learning vs. Mathemagenic Control of Text
Processing, The Technology of Text(Vol. Two): New Jersey: Educational
Technology Publications, Inc., 1985.
- Encyclopaedia Britannica, Inc., Webster' s Third International Dictionary, Chicago:
Encyclopaedia Britannica, Inc., 1981.
- Giles N. Clark, Inside Book Publishing(2nd. ed.), London: Chapman & Hall, 1995.
- P. W. Shay to M.T. Orr, Report of Activities in Korea, June, 20.1947.
- Record Group 59, Lot File, Records of the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Public
Affairs and Cultural Relations(Archibald MacLeish)
-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Summation of Non-Military Activities
in Janpan and Korea, No.1, 1945.9.
- USAMGIK, History of Bureau of Education, 1946.3.
- USAMGIK, History of Bureau of Education, From 11 Sep. 1945 to Feb., 1946.

Ⅱ. 제 1차 교육과정 개발과 교과용 도서 편찬

김용만*

1. 서 론

(1) 교육과정의 제정

제 1차 교육과정기는 1945년 4월 20일 공포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사범학교의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과 이듬해(1955. 8. 1) 공포된 앞에 제시한 각급 학교의 ‘교과과정’으로부터 1963년 2월 제 2차 교육과정이 공포된 시기까지를 말한다. 이 교육과정은 대한 민국 정부 수립 이듬해인 1949년에 교육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교육법 제155조 ‘대학, 사범대학, 각종학교를 제외한 각 학교의 학과, 교과는 문교부령으로 정한다.’라는 규정에 의거, 가르칠 교과와 시간 배당, 내용 등에 국가의 기준을 정하지 않을 수 없어, 개정 작업을 서둘렀으나, 6·25 사변으로 그 개정이 늦어졌던 것이다.

제 1차 교육과정은 1954~1955년간에 공포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범학교의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과 각 교과에서 가르칠 내용인 「교과과정」이 근간을 이룬 것으로, 이것은 제 2차 교육과정기까지 큰 개정 없이 그대로 시행되었다. 개정이 있었던 것은 야간제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을 정했던 것(1956. 4. 24, 교육부령 제53호)과 처음의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1954. 4. 20, 문교부령 제35호) 제22조에 규정한 ‘실업계 고등학교 기타 전문과정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에서 전문과정 중 실업 기타 전문에 관한 교과를 선택하는 기준은 따로 문교부령으로 정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개정한 것(1958. 6. 5, 문교부령 제76호)이었다. 이 교육과정을 제정한 주체는 제 2차 교육과정 이후의 그것이 문교부 편수국이 중심이었던데 비하여 처음에 소관이 불분명했었다. 즉, 장학실에서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하다가 나중에 편수국에 배턴을 넘겨주는 형식이었다.

제 1차 교육과정의 특징을 교과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하는데, 이는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1954. 4. 20)’ 제2조에 “본령에서 교육과정이라 함은 각 학교의 교과목 및 기

* 일본 동경한국학교 교장

타 활동의 편제를 말한다.”라고 한 규정한 것이나, 문교부령(1955. 8. 1) 제44, 45, 46, 47조로 공포된 교육과정의 명칭이 ○○학교「교과과정」이라고 밝힌 것 등을 근거로 하여 교과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부른다.

(2) 교과용 도서 편찬

제1차 교육과정기의 교과용 도서 편찬은 1949년에 개정된 교육법의 교과용 도서 관련규정에 따라 1950년 4월 29일자로 각각 공포한 ‘교과용 도서 검인정 규정(대통령령 제336호)’, ‘국정 교과용 도서 편찬 규정(대통령령 제337호)’, 그리고 1952년 4월 25일에 공포된 ‘교육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제188조~제190조) 등의 법규정의 틀 아래서 이루어졌다. 1955년 각급 학교 교과 과정 공포를 전후하여 각급 학교별, 교과별로 교과서 편찬, 검정 작업이 앞에 언급한 교과용 도서 관련 법 규정에 의거하여 일제히 착수되었다. 국정 교과서는 1955년부터 연차적으로 개편 또는 신규 편찬에 힘써, 1958년 현재로 대부분의 국정 교과서가 공급되었고, 판형, 인쇄 등도 개선하여 판형을 종래의 4·6판을 5·7판(국판)으로 개선하였으며, 활자를 개량하여 인쇄가 선명하게 되도록 하였다.

검인정 교과서는 ‘교과용 도서 검인정 규정(대통령령 제336호, 1950. 4. 29)’에 의거하여 편수국에서 정한 검인정 세부 지침(1955. 10. 6)을 발표하여 그 이전까지의 수시 검정과는 달리 일괄 접수, 사열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는데, 1956학년도 신학기에는 새로운 검인정 교과서가 일괄 공급되었다. 이 시기에 교과서의 생산, 공급을 공동 생산, 공동 판매를 하는 트러스트 조직인 한국 검인정교과서(주)가 맡아 하는 제도가 생겨 제2~3차 교육과정기까지 계속 되게 된다.

(3) 교육과정 · 교과서 행정 조직

제1차 교육과정은 제2차 이후의 그것에 비하여 교육과정의 총론과 각론을 분리하여 공포하였다. 즉, 총론에 해당하는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을 1954년에, 각론에 해당하는 각과 ‘교과과정’을 1955년에 공포하였다. 처음의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에 대한 기초안은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주무 부서인 편수국에서 짠 것이 아니고 장학관실에서 관장하던 ‘교과과정연구위원회’에서 성안한 것이었다. 이것은 교육과정 · 교과서를 관장하던 행정조직으로써 편수국이 적은 인력으로 전시 교과서 편찬, 공급에 진력하는 사이에, 당시 학습지도 방법 연구에서 교육과정 연구로 전환한 새교육 운동의 바람을 타고 장학관실에서 ‘교과과정연구위원회 규정(1951. 3. 30. 문교부령 제16호)’를 만들고 교육과정 제

정을 서둘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처음에 편수국에서 교육법과 동 시행령의 교육과정 관련 규정에 의거 ‘교수요목 제정 심의회’를 조직하여 먼저 교육과정 제정 작업을 시작하려던 시기에 6·25사변이 났고, 피난 수도 부산에서 모든 것이 어수선할 때에 심태진을 중심으로 한 장학관실에서 교육과정 개정 작업을 벌였던 것이다. 그러나 기초안이 성안되고 심의의 단계로 들어갈 즈음부터는 ‘교수요목 제정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게 됨으로써 편수국이 교육과정을 완전히 주관하게 되었다. 따라서 뒤이어 나온 ‘교과과정’의 제정은 편수관 주관 하에 이루어졌다.

당시의 장학관실은 문교부 직제에는 없고 훈령인 ‘장학관 직무 규정’에 의해 구성되어 있는 조직이었으나 교육내용 개혁 추진, 교육제도 창설, 새교육지도 등으로 문교행정의 방향 결정에 큰 영향을 끼치는 조직이었고, 수석 장학관은 실국장 회의에 참석하는 위세 있는 조직이었다.

편수국은 편수과, 번역과, 발행과(1955. 2. 17 이후는 편찬과와 출판과)의 조직을 가지고 있었는데 각 교과를 맡은 편수관이 8명 정도 있었다. 당시의 편수관은 국정교과서의 편찬과 국정 이외의 교과서의 검정을 주관하는 막강한 힘을 지니고 있었고, 교과교육에 대한 소양이 높았다. 편수관들은 ‘교수요목 제정심의회 규정’에 의거하여 교육과정 제정 작업을 맡아 했고, ‘국정교과용 도서 편찬 규정’(대통령령 제 337호, 1950. 4. 29)에 의거 국정 교과서 편찬을, 그리고 ‘교과용 도서 검인정 규정’(대통령령 제 336호, 1950. 4. 29)과 편수국에서 정한 ‘검인정 세부지침’(1955. 10. 6)에 의거 검인정 교과서 업무를 관장하였다.

이상과 같이 개관할 수 있는 제1차 교육과정기의 교육과정, 교과서 그리고 관련 제도 및 행정 조직, 관련 인사 등에 관한 것을 실증적 자료와 구술 기록 등에서 찾아 정리하고자 한다. 그것은 교육과정 제정과 관련하여서는 그 배경, 경위, 특징, 후속 조치, 관련 연구 등에 관한 조사 연구가 되겠고, 교과서와 관련해서는 국정, 검인정 제도, 편수 조직 및 관련 인사, 정가 사정 및 공급에 이르기까지에 관한 것과 실제의 초, 중등 교과서의 편찬, 검정 실적 등과 관련된 조사, 연구가 되겠으며 제도, 조직, 인사에 관련되는 교육과정, 교과서와 관련하여 살펴보는 것이 되겠다.

실증적 자료를 참고로 관련 내용을 진술하는 관점은 실제 사실의 편수사적 정리인데, 특히 편수행정사적 관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2.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발

(1) 제1차 교육과정 제정 배경·경위 및 특징

1) 제1차 교육과정 제정의 배경

1949년 12월 31일 교육법이 공포되자, 문교부는 그 제 155조의 ‘대학, 사범대학, 각종 학교를 제외한 각 학교의 학과, 교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각 교과의 교수 요지, 요목 및 수업 시간 수는 문교부령으로 정한다’는 규정에 의거 교육과정을 제정하기 위해 1950년 6월 2일 문교부령 제 9호로 ‘교수요목제정심의회규정’을 공포하고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을 작성하는 일을 준비하던 중 6·25전쟁으로 중단되었다. 정부가 임시 수도 부산으로 옮긴 직후인 1951년 3월 다시 문교부령 제 16호로 ‘교과과정연구위원회규정’이 공포된 후부터는 이 ‘교과과정연구위원회’에서 본격적인 교육과정 개정 논의가 시작되었다.

‘교수요목제정심의회’를 관장하던 부서는 편수국이었는데, ‘교과과정연구위원회’를 관장하던 장학관실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편수국 입장에서 보면, 교육과정이라면 당연히 편수국 소관이라는 생각을 충분히 가지지 않았거나,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지 못하여 각 교과의 가르치고 배우는 내용 즉, 교수요목(course of study)만을 교육과정으로 보고 이것과 교과서를 관장하면 교육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데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 하나의 이유는 교육과정의 편제와 시간 배당과 이와 관련된 교육방침 즉, 요즘 교육과정 문서의 총론에 해당되는 부분은 미군정기에 학무과의 초등교육계와 중등교육계(1945년 12월 기구 개편 후에는 초등교육과와 중등교육과)가 주관했었으니까 교육법 제정 후의 교과편제나 시간 배당을 편수국 쪽에서는 으레히 보통교육국 쪽에서 할 것으로 여겼거나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렇게 소관이 불분명하던 때에 마침 교육과정 연구에 관심 있는 장학관이 서둘러 이 일을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당시 장학관실의 업무 중 중요한 것이 ‘……기타 교육 내용에 관련된 것’이었기 때문에 교육내용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소관 업무로 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된다. 교육과정 연구에 관심이 있었던 장학관은 심태진이었다. 그는 임시 수도 부산에서 당시의 새 교육 운동에 의한 각종 연구를 기반으로 새로운 교육과정을 제정하려는 교육계의 요구를 받아들이거나 스스로 분위기를 고취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것이 ‘교육과정 연구위원회 규정(1951. 3. 20, 문교부령 제 16호)’와 ‘연구학교 규정(1951. 3. 30, 문교부령 제 17호)’의 제정이었다. 그 경위를 심태진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문교부가 부산에 피난 가서 먼저 한 것이 ‘교과과정 연구위원회 규정’과 ‘연구학교 규정’을 제정한 것이었는데 일선의 새 교육운동의 방향전환을 위한 교육과정 개조운동에 발맞추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장학관실 주관으로 ‘교과과정 연구위원회’가 구성되어 우리 나라에서 그 방면의 권위자나, 전문가, 대학교수와 일선교사들이 위원에 위촉되어 진지한 토의를 시작하였습니다. 지금까지도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학교 교실을 빌려서 열리는 회의에 맨 앞줄 학생 걸상에 앉아서 국민학교 학생처럼 진지하게 남의 얘기를 듣고는 열을 올려 발언하시던 최현배 당시 편수국장 선생님의 모습입니다. 최현배 선생님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의 저명한 학자는 대부분 참석하였고 자기 전문분야의 학교 수업시간을 한 시간이라도 더 늘리려고 열띤 논쟁을 하시던 광경이 눈에 선합니다.

이런 연구위원회의 노력으로 국민학교에서 고등학교, 사범학교까지의 교육과정표가 짜여져 문교부가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할 때에 갑자기 문교부내의 편수국으로부터 이의가 들어왔습니다. 교육과정의 주무국이 편수국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 있는 ‘교수요목제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공포할 수 있으니 편수국으로 넘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장학관실과 편수국 사이에 관할권 싸움처럼 되어 버려 백낙준 장관의 조정으로 양 위원회의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마무리 짓기로 하였습니다. 결국 교과과정 연구위원회가 첫 회의를 시작한 지 2년 5개월 간, 115명의 전체위원과 638명의 분과위원들의 연구와 토의로 작성된 교육과정이 문교부령으로 공포됩니다. 한도 후인 1954년 4월 20일자로 공포된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이 그것입니다. 당시의 교육법이나 교육법시행령에는 ‘교육과정’이란 용어가 한 마디도 없습니다. 있다면 교과과정, 교수요목, 교수요지, 교수세목 등등입니다. 이렇게 법에 없는 ‘교육과정’이란 용어를 대담하게 사용했다는 점이 혁명적이고 ‘시간 배당령’이라 하지 않고 ‘시간 배당 기준령’이라고 ‘기준’을 넣은 것 역시 교육법이나 시행령 정신하고는 다른 점입니다. 교육법이나 시행령은 문교부의 요목을 전국 각 학교가 일제히 같은 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 공포된 교육과정은 문교부가 ‘기준’을 제시한 데 불과하고 실제사용 할 교육과정은 각 학교가 정하라는 취지입니다. 교육법령은 차후에 개정하기로 한 혁명적인 처사였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교육과정은 이상에 가까운 가장 진보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해 못하는 교육자나 교육행정가들 때문에 제대로 시행도 안되고 개정할 때마다 후퇴를 거듭하게 됩니다.¹⁾

1951년 당시 장학관은 曹在浩, 沈泰鎭, 吳炳玉 3분이 있었는데, 곧 曹 장학관이 부산 사범학교 교장으로, 吳 장학관이 부산 개성중학교 교장으로 진출한 뒤에는 沈 장학관 혼자 있었던 걸로 미루어, 제1차 교육과정의 제정 작업이 출발하게 된 것은 그의 주도였다고 볼 수 있다. 여기 1953년 4월에 李昌鉀, 孫永珢 장학관이 들어와 함께 이 일을 함께 추진하였다.

제1차 교육과정을 제정하게 된 동기를 필자는 대개 다음 세 기지로 설명하고 싶다.

첫째로 미군정 하에서 제정된 일련의 교과 편제와 시간 배당표들과 이어 나온 각과의 교수 요목이 당시 시급히 필요했던 교과서의 편찬·공급을 위해 서둘러 만들어 공포함으로써 종합적인 체계가 없었기 때문에, 학교 교육 내용의 총체적 플랜으로서의 체계성을 갖춘 교육과정을 새로 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1) 沈泰鎭, 申集浩, 文榮漢, 李昌鉀, 四友文選, 敎文社, 1994, pp. 34~35.

둘째로는 새 정부의 수립 후 1949년 12월에 공포되고 1951년 3월 20일자로 개정된 교육법 그리고 1952년 2월에 공포된 동법 시행령에서 제시한 교육과정 제정의 근거에 따라 하위 법에 해당하는 교육과정 기준령을 정할 필요가 있었다. 즉 초, 중등학교의 교과수와 교과명칭이 정해지고 6-3-3-4제의 학제가 확정(1950. 3. 10, 교육법 일부 개정)에 의해 개정)됨에 따라 그 기간 교육 체제에 따른 교육 내용을 정비하여 공포할 필요가 절실했던 것이다.

셋째는, 교수 방법 개선에 관한 연구 등으로 교육계에 새 바람을 불어넣어 왔던 새교육 운동의 영향도 새교육과정 제정의 동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새교육 운동은 1·4 후퇴로 정부가 부산으로 옮겨간 후부터는 그 때까지의 교수 방법의 개혁을 시도하던 흐름에서 벗어나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 활동으로 전환하였다. 제1차 교육 과정의 제정은 바로 이 새교육 운동에서 이론적 뒷받침을 얻게 되는데, 여기에는 문교부의 장학관 심태진, 편수관 홍웅선, 최병칠 등과 부산·경남의 많은 교사들의 참여가 있었다. 지금까지는 달리 교육과정 제정을 주도하던 그룹이 교수, 연구원이 아닌 교사들과 장학관, 편수관이 주도했다고 볼 수 있다. 홍웅선은 당시 새교육 운동이 교육과정 개정에 끼친 경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²⁾

1·4 후퇴로 정부가 부산으로 옮겨간 후 새 교육 운동은 그 때까지 교수 방법의 개혁을 시도하던 흐름에서 벗어나,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 활동으로 전환하였다. 그것은 전쟁을 치르는 국가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교육이 해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커리큘럼”이라는 말이 갑자기 교육계의 유행어가 되었고, 각 학교에서 각기 자기 학교의 교육과정을 꾸며보려는 생각으로 교육과정을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코어(core)니 상관(相關)이니, 광역(廣域)이니 하는 커리큘럼의 유형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그 무렵인 1952년 1월에 김성태는 문교부의 「라디오 학교」 프로그램의 “커리큘럼 강좌”에서 교육과정의 유형의 하나로 코어 커리큘럼을 설명하였고, 특히 종합 학습법을 소개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경남 도내의 교사들의 반응은 코어 커리큘럼이 아무리 새로운 이론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 학교에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것이었으며, 김성태 자신도 교과 커리큘럼과 경험커리큘럼을 양극으로 할 때 많은 학교에서 그中间的 어느 유형의 것을 채택하리라는 홉킨스(L. T. Hopkins)의 견해를 받아들였다.

1953년 3월 문교부 장학관이던 심태진은 “교육과정의 연구과제”라는 글에서, 우리의 교육과정 연구활동이 궁극적으로는 우리만이 생각해 낼 수 있는 특수하고 진보적인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것이어야 하겠는데, 그것은 교과 커리큘럼을 경험커리큘럼으로 개조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문교부 장학관의 그러한 견해는 당시의 교육과정 운동의 향방을 가늠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이었다.

그 후 심태진은 새 교육을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이 재검토되어야 할 것임을 다시 강조하고, 새로운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른 생활 교육과정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2) 홍웅선, 교육과정의 변천, 역사·철학적 고찰, 교육과정 및 수업에 관한 연구 방법 탐구, 제 11권 (1955. 12). 한양대학교 한국교육문제 연구소, pp. 1~19.

- 첫째 : 새 교육은 우리의 현실에 입각하여야 한다.
- 둘째 : 새 교육은 민주주의적인 교육이어야 한다.
- 셋째 : 새 교육은 생활 경험을 중심으로 한 교육이어야 한다.

1951년 3월 30일에 문교부가 부령 17호로 “연구학교규정”을 제정 공포한 것은 교육과정의 개편을 추진하는 새 교육운동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 되었다. 전국에 걸쳐 문교부가 연구학교를 지정한 것은 1952년부터였는데, 그 중에서 교육과정을 연구하는 학교로써, 국민학교는 부산 동광, 진주 웅남, 대구 중앙, 공주사범부국, 서울사대부국 등이 있고, 중학교로는 청주 중학, 고등학교로는 부산제일상업 등이 알려졌다. 그 중에서 국민학교의 교육과정을 연구한 연구학교가 제시한 교육과정의 틀은 중핵교육과정을 지향하는 것이었으며, 대체로 다음과 같은 三重 구조로 된 것이다.

- 생활과정 :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 계통과정 : 문화의 영역을 계통적으로 학습하는 과정
- 일상과정 : 개인적이며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과제를 실천하는 과정

2) 교육과정 제정의 경위

위에서 서술한 바 있지만 제1차 교육과정의 제정은 1951년 임시 수도 부산에서 「교과과정연구위원회」와 「연구학교 규정」을 주관하던 장학관실의 심태진의 주도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교육과정연구 위원회의 연구위원은 장학관, 편수관을 비롯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와 학자, 그리고 현직 교원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³⁾, 여기에서 교육과정 제정 논의를 하면서 새교육 운동에 의한 커리큘럼 논의가 본격화되고, 「연구학교 규정」에 의한 연구학교가 교육과정 관련 내용을 연구 주제로 하여 연구함으로써 교육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론적 뒷받침을 해 주었다. 당시의 연구 학교가 교육과정 개정에 끼친 상황 등은 다음의 글(이창갑, 심태진, 문영한, 신집호의 좌담)에서 엿볼 수 있다.⁴⁾

〈이창갑〉 연구학교 규정이 제정 발표된 것이 1951년 3월 30일인데 그러니까 6·25 직후 정부가 부산 피난 중 교육과정 개정 심의가 진행이 되고 있었던 시기으로써 교육개혁 작업이 추진되고 있던 초창기였으며 그때 연구학교 규정을 제정할 당시의 일은 심 장학관이 이를 주도했으며 서울 수복 후에 연구학교 운영이 궤도에 오르고 활성화되는 시기에 주로 수고하신 분은 문 장학관이었다고 기억합니다.

〈심태진〉 교과과정 연구위원회와 같이 우리 나라 새 교육운동의 중추세력으로 연구학교를 발족시켰는데 부산에 있는 동광국민학교와 전주에 있는 풍남국민학교, 이 두 학교를 제1차로 지정하였습니다. 영남과 호남에서 각각 한 학교씩 지정을 했는데 동광국민학교에는 연구열이 강한 김두성 교장이 자발적으로 연구발표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고, 호남 쪽은 편수관으로 있던 최병칠 선생이 이수남 교장을 추천해서 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지정 연구학교인 두 학교의 활동이 기대이상이었어서 제2차 제3차로 확대해 가는데 인천의 조석기 교장이 이끄는 창영국민학교, 대구의 이수완 교

3) 심태진, 신집호, 문영한, 이창갑. 前掲書, p. 33.

4) 沈泰鎭 外 3人, 前掲書, pp. 41~43.

장이 지휘하는 중앙국민학교와 청주의 석교국민학교 등이 연구학교로 추가되고 각 도는 각 도대로 도 지정 연구학교를 만드는 바람에 적극적으로 연구학교 활동이 활기를 띠게 됩니다. 중학교도 윤봉수 교장이 이끄는 청주중학교가 문교부지정 연구학교로 지정되고 고등학교로는 부산의 제일상업고등학교(경남상업)가 지정되었는데 이 학교에는 강삼영 교장과 연구열이 강한 한영석 교감이 있었기 때문에 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구학교 규정에는 모든 사범계부속학교는 당연히 연구학교가 된다고 규정되어 있어 연구학교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눈에 띄게 활동한 학교는 문영한 교장이 재직하던 공주사범학교 부속국민학교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창갑〉 지금 말씀대로 장학관실 지도하에 연구학교가 새교육 운동의 선봉이 되었습니다. 모든 연구학교가 우리 나라 교육개혁을 위한 새 교육을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대하여 학교 행정을 비롯 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 평가 등 전 분야에 걸쳐서 연구를 하고 또 이것을 실험하고 그리고 공개 시범 발표를 하는 기회에 전국의 교원들이 같이 참가하여 서로 토의하며 새로운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데 크게 공헌했다고 생각합니다.

〈문영한〉 문교부에 오기 전부터 새 교육 연구에 관심이 있어서 공주사범에서는 1945년에서 54년 사이 본인이 재직 시 전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발표회를 개최했고 직원들과 새 교육 연구를 위해 전심전력했습니다. 특히 잊지 못하는 것은 당시 우리를 지도해 준 심태진, 이창갑 선생은 발표회 때 사전 지도를 위해서 여러 번 오기까지 했고 문교부에 부임하니 연구학교를 담당하라고 하여 맡게 되었습니다.

당시 교육계는 새 교육 연구의 암중모색기라고 할 수 있으며, 그러므로 연구학교를 통해 새 교육의 방향과 내용, 방법 평가를 개선해 나가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 교육의 방향 제시는 오천석 박사의 '민주교육 건설'이 큰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는, 새로이 제정된 교육과정의 어떻게 활용되느냐 하는 과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육에 실질적인 민주교육의 방향과 방법과 내용을 전환시키는 계기가 된 것은 연구학교가 아니었던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교부에서 각 시도의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각 1교씩을 문교부 지정 연구학교를 지정하였습니다. 사범부속학교는 당연히 포함되었습니다. 그 당시의 우리 교육계의 연구의 실상은 교육사상 유례가 없는 상황을 이루었고 우리 장학관들이 주로 연구학교를 나누어서 1년에 꼭 한 번 씩 발표회를 갖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장학관들의 힘만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각 분야의 전문가, 그리고 민주교육의 훈련을 받은 신진학자들을 중심으로 연구학교 지도위원회를 조직하고 위원들의 책임 하에 연구 주제에 따라 전문분야를 분담 지도하게 하였습니다. 지금 생각나는 지도위원으로 정범모, 성내운, 김종서, 정원식, 박준희, 함종규 씨 등이 생각합니다.

〈신집호〉 앞서 말씀들 하셨지만 장학행정 중 교육발전에 크게 기여한 제도의 하나가 연구학교 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제도가 당해 학교뿐만이 아닌 우리 교육발전에 끼친 공이 큼니다.

당시 「교과과정 연구위원회」에서 논의되던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의 이념, 방침, 편제 등에 관련된 것이었는데, 그것이 성안되어갈 즈음에, 「교수요목 제정심의회」를 관장하던 편수국 쪽에서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제정 심의회」를 관장하는 우리 소관이라고

제동을 거는 바람에 결국은 백낙준 장관의 지시에 의해 구성된 교육과정 제정 합동회의(공식적으로는 교수요목 제정 심의회)를 열어 결정하게 된 것이다. 여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에 대해 심태진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⁵⁾

그리고 부산으로 내려가자마자 뭘 했느냐며는 교과과정 연구위원회의 규정을 내가 만들어서 문교부령을 냈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의 새교육 운동은 학습지도법이 주였어요. 그래서 뭘 했느냐며는 이게 새교육법이라고 저 효제국민학교가 한 연구수업두 아이들을 갖다가...(중략)... 그런데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학습지도법 위주의 새교육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난 부산 내려가면서 사변 나면서 이게 학습지도법 이게 문제가 아니다. 무엇을 가르치느냐가 문제야. 지금 당장 가르치는 내용이 문제지, 뭐 옛날 길 갖다가 지금 뭐 토론을 시킨다, 아이들을 분단학습을 시켜라, 이게 새교육법이다, 이게 말이 안 된다. 빨리 법이 통과 됐으니까 이 교육법에 의한 교육과정을 짜는 게 제일이다. 빨라야 된다. 뭘 가르치느냐 그래서 교과과정 연구위원회규정을 문교부령으로 제정을 해서 공포를 하고, 거기에 의해서 곧 교과과정 연구위원회를 구성, 우리나라의 권위자 뭐 구성하구, 일선 교원들 전부 넣어서 구성을 하고 이런 얘기는 뭣 하려 하느냐, 내가 저 사회를 해가면서 그 회의를 계속해서 했어요. 새로운 교육과정을 맨들라고. 그럼 개조에 아주 선봉에 섰다. 그래서 아마 물어보세요. 일선 교장 교감 중에는 심태진의(중략)..... 그래서 교육과정은 교육과정대로 기왕해서 하고, 한쪽에서 곧 이와 같이 연구 학교 규정을 제정해서 문교부령으로 발표를 했어. 그래 그 연구학교를 지정을 했어요. 그래야 뭐 인제 새로운 교육과정, 새로운 교육에 대한 샘플을 맨들어 가지고 전 교원한테 보이고, 과급을 시켜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은 장학관실에서 만든 교육과정 연구위원회에서 가 맨들어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범학교까지 다 맨들어서 가지고 갈라고 하니까 편수국에서 ‘기다리시오, 교육과정은 편수국에서 하는 일이지 어디 장학관실에서 하는 거요?’, ‘우리는 문교부령이 있어서 이거 해 온 거 아니냐?’ 하니까 ‘이제껏 우리가 써먹지는 않았지만은 대통령령으로 나온 교수요목제정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소’ 아 여기는 꼼짝을 못해. 문교부령에 있어 가지고 문교부령보다 대통령령이 더 위라는 걸 알고 있거든. 옳아요. 편수국에는 대통령령으로 된 교수요목 제정심의회를 가지고 있고, 여기는 교과과정연구위원회라는 게 있고. 일은 여기서 다 해냈어요. 이게 인제 서로 문교부 내에서 관할권 싸움이 돼 가지고 그 때 백낙준 장관이 그러든 합동회의를 해 가지고 이거를 처리해라.....

그래서 교수요목제정심의회하고 교육과정 연구위원회하고 합동 회의를 해 가지고 그래서 그 교과과정 연구위원회에서 맨들어 논 것을 그것을 토의하기 시작을 해서.....(후략).

이 합동위원회의(교수요목 제정심의회의 전체회의)⁶⁾에서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이 확정되었지만, 처음의 안은 「교과과정 연구위원회」에서 작성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1952년 「교과과정 연구위원회」가 발족되어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시간 배당 기준표부터 작성하기 시작하였으나, 「교수요목 제정심의회」를 관장하던 편수국의 이의 제기로 일시 중단되었다가 1953년 3월, 새로운 「교수요목 제정심의회」위원을 구성하여,

5) 沈泰鎭의 口述記錄, 金龍滿 外 4人, 한국교육과정의 변천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과정·교과서 연구회, 1999. pp. 65~66. 필자주석.

6) 교수요목 심의위원회에는 전체 위원회(일반 위원회와 학교별 위원회)와 9개 분과(교과별) 위원회가 있었는데, 그 뒤에 제정·개정된 교육과정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학교급별 위원회, 교과별 위원회(교과목별 소위원회)와 비슷하다. 필자주석.

그 달 즉, 3월 11일에 부산 사범학교 강당에서 제 1회 심의회(소위 말하는 합동회의)가 열려 본격적인 심의를 진행시킨 것이다. 이 심의회의 구성인원은 교수요목 제정심의회 위원으로 내정되었던 분에다 「교과과정 연구위원」으로 구성되었던 분을 모두 합쳐 재조정하여 위촉한 분들로 구성되었다.⁷⁾

이 때 열린 교수요목 제정심의회(일반위원회와 학교별 위원회)에 문교부가 제시한 안건은 다음 다섯 가지였다.⁸⁾

- ①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방침
 - ㉠ 취지 ㉡ 개정의 기본 방침 ㉢ 교육과정 구성의 절차
- ② 교수요목 개정의 기본 태도
 - ㉠ 취지 ㉡ 개정의 기본 방침
- ③ 국민학교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표
- ④ 중학교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표
- ⑤ 사범학교·고등학교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표

그리고 ①의 ㉡ 개정의 기본 방침은 다음의 7개항이었다.

- ① 우리 나라의 교육법 정신을 구현한다.
- ② 교육 현실에 입각하여 점진적이고도 진보적인 것으로 한다.
- ③ 피교육자의 심신 발달 과정에 유의하여 그들의 흥미와 요구에 합치되어야 하며, 개개인의 개성과 소질을 최대한으로 신장시킬 수 있도록 한다.
- ④ 교육 내용의 전국적인 기준을 표시하도록 한다.
- ⑤ 융통성이 있고 신축 자재(伸縮自在)한 것으로 한다.
- ⑥ 각 학교 교육이 의거해야 할 근거가 되도록 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학습 지도 지침을 별도로 편찬한다.

이와 같은 5개항의 안건 중에서 3, 4, 5항부터 토의하기로 하고, 1, 2항의 심의는 뒤로 미루었다고 한다. 그 까닭에 대해 당시 위원회에 참여했던 홍웅선은 “구체적인 사항부터 먼저 결정하고, 그러한 결정의 바탕에 깔린 철학에 따라 기본 방침과 기본 태도를 정하려하였기 때문”⁹⁾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것은 당시의 학문적 여건이나 심의위원들의 사고가 기본 방침이나 기본 태도를 먼저 정하고 교과목별 시간 배당이나 내용을 정할 정도로 발전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1954년 4월 20일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사범학교 교육과정 시간 배

7) 문교부, 문교개관, 대한문교서적주식회사, 1958, pp. 129~130.

8) 洪雄善, ‘韓國敎育課程 生成過程에 대한 再照明’ 統合敎科 및 特別活動 研究, 제 5권 제 1호, 全國敎育大學 統合敎科 및 特別活動 研究會, 1987. p.162.

9) 洪웅선(1987), 前揭論文, p. 162

당령」이 문교부령 제 35호로 공포되었는데, 공포 때까지 「교수요목 제정심의회」의 전체위원회는 전후 29회의 토의를 거쳤다고 한다.

이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의 정신에 따라 각 교과와 교수요목 즉 교과의 목적, 지도 방침, 지도 내용 등을 정한 「교과과정」을 1955년 8월 1일 문교부령 제 44호(국민학교), 제 45호(중학교), 제 46호(고등학교 및 사범학교)로 공포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문서의 총론에 해당되고 「교과과정」은 각론에 해당된다. 총론을 교육과정이라 하고 각론을 교과과정이라고 한 시기는 제 1차 교육과정 기뿐이지만, 상당히 진보된 용어의 선택이었다고 생각된다. 특히 교과과정이라는 말은 각 교과와 교수요목(course of study)을 적절하게 표현한 것이라 생각된다. 강우철 교수는 총론을 교육과정, 각론을 교과과정이라고 한 결정은 지금도(1998년) 옳았던 것이라 생각한다고 하였다.¹⁰⁾

3) 제 1차 교육과정의 특징

① 교육과정 이념상의 특징

제 1차 교육과정을 교육과정 이념상 교과 교육과정, 또는 교과 중심 교육과정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는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의 제 2조에 “본령에서 교육과정이라 함은 각 학교의 교과목 및 기타 활동의 편제를 말한다.”하고 한 규정과, 문교부령 제 44, 45, 46조로 공포된 교육과정의 명칭 자체도 교육과정이라는 용어 대신에 ‘교과과정’이라고 사용한 점을 보아도 교과 교육과정이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특히, 다음에 제시된 당시의 ‘교과과정’내용 중 머리말의 ‘三, 본 과정 운용상의 주의’를 보면 당시의 교육과정 성격이 교과 중심 교육과정이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편찬될 교과용 도서는 본 과정의 지도 목표와 내용을 구현함에 힘쓸 것이며, 본 과정의 세밀한 검토 아래, 지도 범위와 정도를 조절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교과서의 활용은 본 과정의 취지를 벗어나서 다루어질 수 없으며, 모든 학습 자료도 본 과정의 취지 아래 이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교과 중심 교육과정의 틀은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을 작성하거나 심의하는 과정에서 드러나기 시작하여 「교과과정」을 작성, 심의할 때 완전히 굳어졌다고 할 수 있다. 처음 「교과과정연구위원회」에서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을 정할 때만 해도 당시 새 교육 운동을 주도하던 몇몇 진보적 장학관, 교사, 연구학교 관계자들과 같

10) 강우철, 편수행정의 발자취, 제1차 교육과정기, 교과서 연구, 제31호, 한국 2중 교과서협회, 1998, pp. 75~77.

은 급진적인 개혁론자들의 의견에 따라 생활중심 교육과정, 중핵 교육과정 등을 지향하는 것이었으나, 공식적인 심의 과정에서 차츰 점진적인 온건론자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다음과 같은 합의 즉, ‘첫째, 교육과정의 틀을 작성하는데 있어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점진적으로 개조해 나간다. 둘째, 교과 편제는 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며, 신설 또는 폐합을 하지 아니한다.’는 합의에 이름으로써¹¹⁾ 교과 중심 교육과정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각 교과에의 교수요목을 정하는 「교과과정」을 정할 때는 사회생활과를 제외하면 완전히 교과 중심 쪽으로 기울어¹²⁾ 교과 중심 교육과정이 되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정에 대해 홍웅선은 다음과 같이 구술하고 있다.¹³⁾

……(전략) 그때 내가 밖에 있다가 정부가 수립된 뒤에 문교부로 들어갔어. 그랬는데 편수관으로 일을 했는데, 그래서 제1차 교육과정, 1955년 1차 교육과정을 만드는 일에 직접 관여를 했는데, 그때 그러니까 1949년 12월 31일 그러니까 뭐 그 해 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국회에서는 저기루 인제 교육법이 통과돼 가지고 교육과정을 개발하려고 할 무렵에 그러니까 50년 6월에 예, 한국전쟁이 터져가지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교육법이 제정이 되고 교육과정이 정해지고 그러구 교과서가 나오고 하는 것이 순선대, 예 마 이게 우리 나라에선 거꾸로 됐단 얘기를 할려구 하는 것이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얘기를 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법이 나와 가지고 교육과정을 제정하려고 했을 때 전쟁이 나가지고 전부 부산으로 피난 내려갔어 그래가지고 교육과정 아무튼 만들어야겠다고 하는 논의가 구체적으로 일어난 것이 51년 중간에서부터 뭐 52년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때 묘한 것이 어느 경우에나 급진파가 있고 보수파가 있는데, 교육과정에 있어서의 인제 부산에 전쟁 중에 일본에서 문헌이 흘러 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빨리 볼 수 있던 부산에 있는 교육자들이 결국 그 이 미국, 일본을 통해서 들어온 미국의 새교육 사조를 받아들여 가지고 그때 인제 소위 코어커리큘럼이라- 중핵교육과정이 굉장히 유행처럼 우리 나라에서 받아들여졌죠. ……중략……. 나는 그때 구경도 못했는데, 예 그 이 일본서 들어온 자료를 놓고 움직이, 연구가 시작이 돼서 그래서 인제 52,3년경부터 인제 교육과정 운동 물론 교육과정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니까 그 얘기를 먼저 하는 건데, 본격적으로 이제 그 교육과정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것이 소위 그 마 급진파라고 할까요, 마 그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 가지고 그 중에 ……중략…… 그런데 부산에서 이 문교부에서 교육과정 심의를 할 때에는 굉장히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인제 그 리더가 누구냐며는 심태진, 예 문교부 안에서는 심태진 장학관이 그때 급좌계 급진적인 쪽에 리더였었고, 약간 보수적인 쪽에서는 인제 편수국에 있던 사람 최태호, 어 이 최병철은 조금 저이 뭐 진보적인 쪽이었는데, 나도 같이 뭘 했고 해서 그러니까 그때 인제 장학실에서 어 이 코어 커리큘럼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이자고 꺼져 이야기가 됐을 때 거기다가 제동을 건 것이 편수국 쪽이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집단이 두 집단이 따로따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이러다간 안 되겠다 해 가지고 그것이 하나로 묶여 가지고 교육과정심의회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다시 생겼어요. 그 때 경위는 내가 어딘가 썼으니까 그걸 모르면 짐작이 가지지 않겠는데, 그래가지고 54년경부터 윤곽이 서 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니 제일 먼저 나온 것이 54년에 나온 것이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표가 먼저 나오고 그러구 55년에 교과과정이라는 이름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 그래서 인제 그 시대를 교과과정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급

11) 洪雄善(1995), 前掲論文, pp. 4~5.

12) 洪雄善의 육성녹취록, 金龍滿 外 4人(1999), 前掲報告書, p. 67

13) 洪雄善의 육성녹취록, 前掲 報告書, pp. 66~67.

진적인 것하고 약간 보수적인 거 허구가 한데 모여 가지고 조정을 해 가지고 그런데 인제 교육과정 시간 배당의 교과편제를 만드는 데는 다분히 급진적인 아이디어가 들어갔다가 인제 교육과정 실질적인 내용, 국어과에서 뭐 가르치고 뭐 가르치고 한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 보수적인 쪽으로 마 교과중심 쪽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에 이 교육과정 시간배당 교과 편제는 어느 쪽이나 하면 생활중심 쪽으로 강하게 그런 상태가 나타났다가 교육과정은 아주 완전히 교과중심 쪽으로 다만 거기 예외가 사회생활관테, 마 고 이야기는 지금 할라고 하는데, 그래서 인제 그것이 정리가 되가지고 이루어진 것이 제1차 교육과정, 1955년에 나온 것이지요.후략.....

이와 같은 내용으로 보아 교육과정 자체는 ‘교과 중심’이었으나,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편찬하는 교과서는 벌써 ‘생활 중심’을 지향하고 있었다.

② 구성 방침과 목표상의 특징

구성 방침이나 목표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각급 학교에 공통되는 ‘본 과정의 기본 태도’에 나타난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현실 생활을 개선, 향상시킬 사회 개선 의지를 기본 태도에서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시의 상황이 교육을 통하여 전쟁으로 파괴된 국가를 부흥시키고, 미개발 된 사회 환경을 발전시켜 보려는 뜻이 내포된 것이라 생각된다.

둘째, 정부 수립 후 제정, 공포한 교육법에 제시한 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도로서의 교육과정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셋째, 내용은 적절, 필수, 최소량이어야 함을 밝혀 지적 체계와 국가 기준으로서의 교육과정 체계의 한계를 밝히고 있다.

넷째, 반공 교육, 도의 교육, 실업 교육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반공·도의 교육을 강조하게 된 까닭은 광복 후의 사회적 혼란과 6·25 전쟁으로 인하여 도덕적인 타락이 현저하게 나타났으며, 반공 의식의 고양에 어느 때보다 필요함에 따라 취해진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특별활동 시간을 배당하여 전인 교육을 지향했는데, 특히 특별활동의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에서 민주적 학생 활동, 학생의 개별 성장, 직업 준비 및 이용 후생, 학생의 취미에 관한 것이란 점을 밝히고 있다.

여섯째, 일선 학교에 교육과정 운영의 재량권을 크게 허용하고 있는 점이다. 이것은 교육과정 문서를 시간 배당 ‘기준령’이라고 표현한 기준령의 제4조, 제9조, 제13조, 제20조 등에 시간 운영의 재량을 둔 표현을 한 점, 또, 각급 학교 ‘교과과정’의 ‘二. 본 과정의 기본 태도’의 (6)항 및 (7)항의 기술, 그리고 ‘三. 본 과정 운영상의 주의’에서 ‘.....지

역 사회의 특수성과 학생의 실정에 알맞은 독자적인 연구와 창의를 기해야……’라고 표현한 점등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심태진은 ‘기준령’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¹⁴⁾

……54년 4월 20일날 처음 우리 나라에서 교육,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이라는 걸, 기준령이라는 기준은 내가 고집을 피워서 그때 기준을 넣었어. 또 이걸 내놓으면 전국이 똑 같은 교육과정 가지고 할 터이니 교장에게 좀 권한을 주자는 것이 이 기준이다. 이게 지역사회에 맞고 학생의 실정에 맞는 그러한 교육과정을 구상할 수 있도록 맨들자. 내가 주장을 해서 기준령이라는 걸 냈고,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의 교육과정이라는 말은 그때 그 동안에 처음 썼어. 그전에는 커리큘럼, 커리큘럼 했는데, 커리큘럼을 처음에는 교과과정이라고 번역을 했다가 나중에는 교과만이 아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이라는 말로 바꿔 가지고 이 법령의 이름을 맨들었는데, 이것은 심하게 이야기하면 위법이에요. 왜냐하면 그 때만해도 교육법, 교육법시행령에 교육과정이라는 말이 없어요. 교수요목, 교수세목 이런 말은 있지마는 없어요. 그러나 교육과정 기준령이라는 문교부령으로 낼 때 이게 위법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게 통했어요.……(후략)……

③ 문서 구성 체제상의 특징

체제상으로는 구성의 방향, 일반 목표, 학교급별 목표와 편제, 운영상의 유의점 등으로 체제가 갖추어져 있는 제 2차 교육과정 이후의 그것에 비하여 「교육과정 시간 배당령」의 5장 26조에 걸친 규정과 「교과과정」의 앞부분에 간략히 제시된 (1) 본 과정이 나오기까지, (2) 기본 태도, (3) 운영상의 주의만이 총론에 해당되는 것으로 진술되고 있어 교육과정의 정신이나 체계를 이해하는 총론으로서는 미흡한 면이 많다.

결론적으로 제1차 교육과정은 우리 손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교육과정이란 면에서는 무엇보다 의미가 있고, 교과 중심 교육과정에 생활 중심 교육과정의 정신이 스며들어 있는 교육과정으로서의 특징이 있으나, 교육과정령으로서의 체계, 진술 형식 등 여러 면에서 미흡한 점이 많아 보인다.

(2) 제1차 교육과정기의 편제와 특색

1) 학교급별 특색

① 초등학교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의 총칙(제 1조~6조), 국민학교(제 7조~11조) 규정과 별표 <표 II-1>의 시간 배당 기준표에 나타난 제 1차 교육과정의 편제상의 특징은 대략 다

14) 심태진의 육성 녹취록, 前掲 報告書. p. 66.

음과 같다.

첫째, 제1차 교육과정의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영역 편제는 교과 활동, 특별 활동, 도의 교육 활동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1차 교육과정이 기대하는 교육 활동(영역)은 교과 중심의 교과 활동, 교과 외 활동으로서의 특별 활동, 전 교과 및 기타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서 행해지는 도의 교육 활동의 3대 영역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제1차 교육과정의 편제를 교과활동과 특별활동의 두 영역이라고 진술된 문헌들이 많으나, 기준령의 제10조의 규정으로 보아 제2차 교육과정의 ‘반공·도덕, 생활 영역’과 같은 하나의 생활 영역으로이 ‘도의교육 활동’을 포함시키지 않을 수 없다.

<표 II-1> 국민학교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표

(1954. 4. 20)

학 년 시간수 교 과	1	2	3	4	5	6
국 어	25~30 % 분 (240~290분)	25~30 % 분 (250~300분)	27~20 % 분 (290~220분)	20~23 % 분 (220~260분)	20~18 % 분 (240~220분)	20~18 % 분 (250~220분)
산 수	10~15 (100~140)	10~15 (100~150)	12~15 (130~160)	15~10 (170~110)	15~12 (180~120)	15~10 (190~120)
사회생활	10~15 (100~140)	10~15 (100~150)	15~12 (160~130)	15~12 (170~130)	15~12 (180~140)	15~12 (190~150)
자 연	10~8 (100~80)	10~8 (100~80)	10~15 (110~160)	13~10 (140~110)	10~15 (120~180)	10~15 (120~190)
보 건	18~12 (170~120)	15~12 (150~120)	15~10 (160~110)	10~12 (110~130)	10~12 (120~140)	10~12 (120~150)
음 악	12~10 (120~100)	15~10 (150~100)	8~10 (190~110)	8~5 (90~60)	8~5 (100~60)	8~5 (100~60)
미 술	10~8 (100~80)	10~8 (100~80)	8~10 (90~110)	7~10 (80~110)	10~8 (120~100)	10~8 (120~100)
실 과				7~10 (80~110)	7~10 (80~110)	7~10 (90~130)
특별활동	5~2 (50~20)	5~2 (50~20)	5~8 (50~80)	5~8 (60~100)	5~10 (60~120)	5~10 (60~120)
계	100 % (960 분)	100 % (1,000 분)	100 % (1,080 분)	100 % (1,120 분)	100 % (1,200 분)	100 % (1,240 분)
1년간 총 수업 시간 수	840시간 (24)	875시간 (25)	945시간 (27)	980시간 (28)	1,050시간 (30)	1,085시간 (31)

[비고] 1. 백분율은 각 교과 및 특별활동의 1년 간 수업 시간 수에 대한 학년별 시간 배당량을 표시함.

2. () 안의 숫자는 매주 평균 수업 시간량을 표시함.

특별 활동과 도의 교육에 대해서는 「기준령」 제6조와 제10조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第六條 本令에서 特別活動이라 함은 教育目的 및 教育目標를 達成하기 爲하여 必要한 教科以外的 其他教育活動을 말한다.

特別活動은 다음 각호의 一에 該當하는 것이어야 한다.

- 一. 集會其他民主的 組織下에 運營되는 學生活動에 關한 것.
- 二. 學生의 個人能力에 依한 個別成長에 關한 것.
- 三. 職業準備 및 利用厚生에 關한 것.
- 四. 學生의 趣味에 關한 것.

第十條 道義教育은 全教科 및 其他教育活動全般에 亘하여 行하되 各學年 總授業時間數의 範圍內에서 年三十五時間以上을 이에 充當하여야 한다.

둘째, 교과 활동의 교과는 대교과제를 취하여 8개 교과로 하였으나, 지금의 도덕과는 초등학교의 경우는 편제상에 편제하여 나타나지 않고, 각 학년 총 이수 시간 수의 범위 내에서 연간 35시간 이상의 시수를 확보하여 전 교과 및 기타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행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교과명이 이과는 '자연'으로, 가사는 '실과'로 바뀌었고, 교수요목기의 총 이수 시간보다 3~6시간 감소하였다.

넷째, 시간 배당 기준을 총 이수 시간 수에 대한 백분율(%)로 배당하고, 시간 배당의 운영에 융통성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음과 같은 기준령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잘 설명되고 있다.

第八條 國民學校 教育課程時間配當에 있어서는 各教科 및 特別活動의 一年間 總授業時間數에 對한 百分率을 學年別로 表示하고 每週 平均授業時間量을 分으로 하여 參考로 表示한다.

第九條 國民學校의 授業時間은 四十分을 單位로 한다. 但 學校長은 一授業時間을 三個以上으로 나누거나 또는 二個以上の 授業時間을 合칠 수 있다.

② 중학교

첫째, 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교과 활동, 특별 활동, 도의 교육 활동의 3영역으로 되어 있다. 다만 도의 교육을 위한 활동을 위해 사회생활과에 배당된 시간 수 중 최저 35시간을 충당하도록 하고 있어, 도의 교육은 전 교과에 궁하여 행하면서, 사회생활과 내에서 학년별로 주당 1시간(연간 35시간) 정도를 확보하여 도의교육 내용을 학습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도의 교과서는 교육과정이 실제로 운영되면서 편찬, 보급되었다.

둘째, 교과 활동의 교과는 대교과제를 취하여 필수 교과(8개 교과)와 선택 교과(실업·가정, 외국어, 기타 교과)로 하여 학교의 사정에 따라 필요한 교과목을 선택하여 수업량을 늘릴 수 있는 융통성을 부여하였다. 또, 시간 배당 기준은 각 학년별로 연간 이수해야 할 시간 수를 제시하면서 주당 시간 수는 괄호 속에 제시하였다.

<표 II-2> 중학교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표

(1954. 4. 20)

학 시 교	년 간 수 과	1년	2년	3년
필수교과	국어 수학 사회 생활과 과학 체육 음악 미술 실업·가정	140(4) 시간 140(4) 175(5) 140(4) 70(2) 70(2) 70(2) 175(2)	140(4) 시간 105(3) 175(5) 140(4) 70(2) 35(1) 35(1) 175(5)	140(4) 시간 105(3) 140(4) 105(3) 70(2) 35(1) 35(1) 175(5)
소 계		980(28)	875(25)	805(23)
선택교과	실업·가정 외국어 기타 교과	35~245(1~7) 105~175(3~5) 0~105(0~3)	35~245(1~7) 105~175(3~5) 0~210(0~6)	35~245(1~7) 105~175(3~5) 0~280(0~8)
특별활동		70~105(2~3)	70~105(2~3)	70~105(2~3)
계(시간)		1,190~1,330(34~38)	1,190~1,330(34~38)	1,190~1,330(34~38)

[비고] () 안의 숫자는 매주 평균 수업 시간량을 표시함.

③ 고등학교

첫째, 편제가 초, 중학교의 그것과는 달리 교과와 특별 활동 만의 2개 영역으로 되어 있고, 도의교육은 사회생활과 속에 신설된 도덕과목에서 행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인문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을 따로 정하지 않고, 하나의 시간 배당 기준표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실업교육을 하는 학교에서는 선택 교과의 전문 과정(실업 기타 전문에 관한 교과)의 선택 시간을 늘려 운영하도록

했는데 관련 규정은 다음의 「기준령」 제 21조, 제 22조이다.

第二十一條 選擇教科의 專門課程에서 實業에 關한 教科를 專門으로 選擇할 때에는 그 專門課程에서 選擇하는 教科의 時間數와 必須教科中 實業教科에 配當된 時間數를 合算하여 實業教科에 時間을 配當하여야 한다.

選擇教科의 專門課程에서 實業以外の 教科를 專門으로 選擇할 때에는 그 專門課程에서 選擇하는 教科의 時間數와 必須教科中 當該教科에 配當된 時間數를 合算하여 專門教科에 時間을 配當하여야 한다.

第二十二條 實業高等學校 其他專門課程을 主로하는 高等學校에서 專門課程中 實業其他專門에 關한 教科를 選擇하는 基準은 따로 文敎部令으로 定한다.

셋째, 초·중학교와는 달리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표 속에 각 교과 내용의 핵심을 제시하고 있어, 각 교과목의 교육하고자 하는 내용을 알 수 있게 했다. 그러나 그 내용이 목표를 진술하고 있거나, 내용 요소나 학문 영역 등으로 다양하게 진술하고 있어 진술의 통일성을 찾기 힘든 면이 있다.

2) 총론 및 각론의 주요 특징

① 총론(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의 특징

제 1차 교육과정기의 총론에 해당되는 「시간 배당 기준령」의 구성은 제 1장 총칙(제 1조~6조), 제 2장 국민학교(제 7조~11조), 제 3장 중학교(제 12조~18조), 제 4장 고등학교(제 19조~23조), 제 5장 사범학교(제 24조~26조), 그리고 부칙으로 되어 있다.

내용으로서 독특한 것은 교육과정과 특별활동에 대한 성격 규정(제 2조, 제 6조)과 도의교육에 대한 규정(제 10조, 14조), 그리고 각급 학교에서의 시간 배당에 의거한 운영 지침(제 4, 5, 9, 15, 16, 17, 21, 23조)이다. 그 중 어느 곳을 들여다봐도 처음 이 교육과정을 성안할 때의 진보적 교육관 즉, 이른바 새교육 운동으로서의 커리큘럼의 연구 및 실천 결과가 반영되었다는 증거를 찾을 길 없다. 다만 고등학교의 시간 배당표에서 교과목의 성격을 간략하게나마 밝힌 것이라든가, 당시의 교육과정 연구 운동의 결과로서의 특별활동이나 도의교육 등이 반영된 것이 특기할 만한 일 일 뿐이다.

시간 배당 기준령에 나타난 특징을 1958년에 나온 문교개관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¹⁵⁾

15) 문교부(1958), 前掲書, pp. 132~135

<표 II-3> 고등학교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표

학 년 시간수 교과수			1	2	3	내 용		
필수	국 어 (I)	시간 140(4)	시간 140(4)	시간 140(4)	현대인의 국어생활을 중심으로 하고 고전 일부를 넣음			
		사 회	일반사회	105(3)	105(3)	35(1)	정치, 경제, 사회를 중심으로 하고 지리와 역사를 배경으로 하여 민주사회와 공민적 자질을 진장함	
			도 덕	35(1)	35(1)	35(1)	윤리, 도덕을 중심으로 예의를 올바르게 지도함	
	국 사	104(4)	105(3)		문화를 중심으로 우리 나라 역사를 연구함			
	수 학	140(4)	-	-	1차함수, 2차함수, 대수함수, 삼각함수, 기타 일반교양으로 필요한 일반 수학의 기초를 연구함			
	과 학	140(4)	-	-	물리, 화학, 생물, 지학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필수로 과함			
	체 육	31(1)	35(1)	35(1)	건강에 필요한 사항의 연구와 도수육상 경기, 구기, 기계체조(체력검사 등의 실기 지도)			
	음 악	140(4)			성악, 악기, 작곡, 감상에 대한 지도와 연구, 도서, 공작, 서도의 실기 및 그 감상에 대한 지도 연구			
							미 술	
	실업·가정	105(3)	105(3)	105(3)	실업·가정에 관한 이론과 실기를 습득시킨다			
소 계	770(22)	490(14)	420(12)					
선택	보 통 교 과	국어(Ⅱ)	105(3)	105(3)	105(3)	현대문, 고전, 문법, 문학, 어학사, 문학사, 한문 등에 관하여 연구		
		사 회	세계사	195(3)		현대 세계를 이해시키기 위하여 세계문화의 유형과 그 발전의 역사를 고찰함		
			지 리					105(3)
	수학Ⅱ	해 석	105~210(3~6)		수학(Ⅰ)의 기초 위에 해석을 연구함			
	기 학	70~140(2~4)		수학(Ⅰ)의 기초 위에 기하를 연구함				
		물 리	140(4)		물체의 성질, 원자물리의 기초 지식에 관하여 연구함	필수에서		
	선택	보 통 교 과	과 학	화 학	140(4)		무기화학, 유기화학의 기초지식에 관하여 연구함	선택하지 않는 과목 중에서 선택한다
생 물				140(4)		동물, 식물, 생리, 위생을 중심으로 생물 전반에 관하여 연구함		
지 학				140(4)		지질, 광물을 중심으로 하고, 천문, 기상, 해양도 함께 연구함		
교 련		140(4)		140(4)	140(4)	남학생에게는 필수로 과한다. 군사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훈련하여 아울러 심신의 단련을 꾀함		
		철학·교육		-	210(6)		논리, 철학 개론, 교육 원리, 교육사, 교육 심리학, 교육 방법 등 중에서 그 기초를 연구함	
		체 육		0~210(0~6)		체육, 음악, 미술, 중에서 선택함		
음 악								
미 술								
외 국 어		영 어	독일어	0~175(0~5)	0~175(0~5)	0~175(0~5)	영어, 독어, 불어, 중국어 중에서 하나 또는 둘을 선택하되, 문장 문법에 대한 기초 능력, 회화 능력 및 각 국의 문화를 이해하는 능력을 기른다	
			불란서어					
			중국어					
			실업 기타 전문에 관한 교과	0~420(0~12)	0~700(0~20)	0~770(0~22)		
특 별 활 동			70(2)	70(2)	70(2)			
총 계			시간 1190~1365(34~39)	시간 1190~1365(34~39)	시간 1190~1365(34~39)			

[비고] () 안의 숫자는 매 주 평균 수업 시간량을 표시함

- ① 교과를 교과 영역으로 나누었으나 넓은 분야로도 합칠 수 있게 하였다. 따라서, 학생에게 필요한 교육 내용, 교육 경험을 충분히 시킬 수 있는 융통성 있는 것으로 하는 데 유의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교과를 생활 영역으로 나누느냐, 또는 교과 영역으로 나누느냐 하는 문제도 나왔으나, 이미 모범에 교과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것에 준하되, 생활 영역으로 하여 지도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교육 과정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 ② 기초 교양으로써 필수 공통 과목을 설정하는 동시에 많은 선택 과목을 두기로 하였다.
 - ㉠ 시간 배당은 폭이 있게 연(年) 단위로 표시하고, 시간 단위는 퍼센트(%)로 그 기준을 표시하여서, 지역 사회에 융통 자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 국민학교는 시간량에 폭을 두었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필수와 선택의 폭을 넓혀서 개성의 차이에 따라 효과적인 교육이 실시되도록 하였다.
- ③ 특별활동을 중시하여 이것을 일반 교과 학습활동과 동등하게 중시하였다. 교육과정을, 각급 학교의 계획 아래 진행되는 일체의 학습활동과 그 외의 활동을 포함하는 모든 생활 경험을 중시하는 의미에서, 교과 외의 특별활동을 보통 교과 학습활동과 동등하게 인정하였다. 이것으로써, 각 교과에서 충분히 수련하지 못한 점의 충실 확충을 도모할 수도 있고, 또 각 교과목에서 할 수 있는 더 효과적인 생활활동, 사회활동 능력을 수련할 수도 있다. 특히 국민학교, 중학교에서는 각 학생의 특징과 특기를 살려, 그 기능을 발휘 수련시키며, 협조적이고 자치적인 활동, 즉 민주주의 생활태도와 능력, 습관을 도야 계발시키는 기회를 주게 한 것이다.
- ④ 도의교육과 반공 교육의 강화이다.
 동방예의지국이라 칭하는 우리 한국에 해방 이후 급진적으로 들어온 서구 문명은, 일상 생활태도나 습관에 변화를 일으키게 하였으나, 이것을 바르게 받아들일 터전이 충분히 마련되지 못하였다. 한편 6·25 사변으로 인해 사회 질서가 일시나마 혼란 됨과 함께 우리의 양풍 미속도 흩어져 가는 느낌을 주게 되어 우리는 사회적 도의 훈련의 시급성이 요구되었다. 따라서, 종래의 우리 생활 태도에 비판을 가하고, 민주적인 도의, 민주적 사고방식, 민주적인 생활태도, 예의 등에 대한 지도가 절실히 요청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국민학교, 중학교에 있어서는 1주에 1시간 정도의 시간을 도의 교육을 위하여 특별히 설정하기로 했다. 도의교육은 물론 전 교육활동에 있어서 지도되고 생활화되어야 하지만, 또 따로 1시간을 이 부면을 위해서 쓸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고등학교, 사범학교에서는 “도덕”이라는 과목을 특설하여서 이론과 실천의 철저를 기한 것이다.
 한편 문교부의 문교 정책으로써 반공 교육을 강화하여 반공 통일의 기백을 기르기로 했다.
- ⑤ 인문 고등학교와 실업 고등학교의 교과 구성을 같은 표로 구성하여 최저 한도의 필수 과목을 공통으로 하여, 정도의 차이나 질적인 저하를 없이하는 데 유의하였다.
- ⑥ 실업 교육의 강화를 도모하였다.
 한국 산업의 발전은 실업 교육 강화에 있다. 한국인의 폐습의 하나였던 직업에 대한 관념을 고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자는 데 있다. 또 실업 교육활동을 통하여 근로 정신을 길러 주고, 직업의식을 북돋아 주며, 직업에 대한 기초능력을 길러주자는 데 있다. 실업 교육은 교육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어느 학교에서나 실시하여야 한다. 일반 중학교는 전 교과시간의 15% 이상, 고등학교는 10%이상을 실업 교육에 충당해야 하며, 실업 고등학교에서는 30% 이상을 하게 되었는데, 여기서는 60%까지에 해당되는 시간을 실업 전문 부면에 충당하여 하나의 기술이 있는 자로서의 수련을 할 수 있게 규정하였다. 일반 학교에 있어서의 일인 일기 교육의 장려도 이 정신의 하나이고, 또 특별 활동에서도 이 부면을 중시하게 되었다. 실업 고등학교에서 전문 학과를 두어, 그 선택을 한 학생에게는 중견 기술자로서의 기능 훈련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 ⑦ 그 밖의 문제로는 교과 중에서 과거보다도 실업, 과학, 체육, 국어 등에 대해서 더 강조한 점, 고등학교에 있어 선택에 의해서 학생의 능력과 취미에 따른 효과적인 지도를 한다는 취지 아래, 역연 제를 쓰기는 하나 단위제의 정신을 가급 살리기로 하였다.

이상과 같은 점을 그의 특징으로 들었으나, 이것은 과거와 달라 더 검토 강조된 점이요, 과거의 교육과정에서 이미 잘 되어 있거나 중요시되어 있던 것을 그대로 계속 강조한 점은 새삼스러이 이 곳에서 얘기하지 않았음을 밝힌다. 동시에, 이러한 모든 것은 학교에 있어서의 창의성 있고, 지역 사회에 맞는 교육 활동을 하는 데 하나의 기준을 줄 지언정 제약한 것은 아니요, 오히려 그것을 강조 요망하였다.

② 각론(교과과정)의 특징

위의 「시간 배당 기준령」의 정신에 따라 학교 급별로 각 교과목의 교수요목 즉, 각 교과의 목적, 지도 방침, 지도 내용 등을 정한 「교과과정」이 1955년 8월 1일 문교부령 제44호(국민학교), 제45호(중학교), 제46호(고등학교 및 사범학교)로 공포하게 되었다.

이 「교과과정」의 특징을 1958년 판 문교개관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¹⁶⁾

각 교과과정은 그의 성격과 목표, 지도 내용의 범위와 정도를 표시하고, 각 교육에서 요구되는 원칙을 확실히 하여 지도상에 있어야 할 길을 명시함과 동시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교과과정 내용에서 각별히 유의되고 검토된 점을 들으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 ① 우리 나라 교육법 정신과 시간 배당 기준령의 요점을 구현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육성하여야 할 인간성, 능력 등의 요점을 각 교과 내에서 달성할 수 있도록 유의하였다.
- ② 학생들의 심신의 발달 과정, 능력의 정도, 그의 특징을 살려서 각 개인의 개성과 소질을 충분히 신장시킬 수 있게 교과 과정 내용을 배열하는 데 고려되어 있다.
- ③ 교재 내용 표시에 있어서는 너무 세부적인 것을 피하고, 전체적으로 학생들 능력에 맞게 정도를 낮추고, 필요한 최소한의 양을 표시함으로써 개인차에 대한 폭을 주며, 지도에 융통성을 주었다.
- ④ 교재 내용 선택에 있어서는 학생의 일상 생활에 가까운 것을 취하여, 과거에 너무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체계를 중시하던 것을 시정하였다.
- ⑤ 교육 목표도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주지주의적인 것에서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 기능, 이해, 태도, 습관을 기르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함을 더욱 강조하였다.
- ⑥ 학생의 학습 활동이 피동적인 것에서 능동적인 것으로 전환하도록 하게 하였다. 따라서, 암기하는 학습에서 이해하는 학습, 이론적인 학습에서 학생의 실험, 실습, 조사, 연구 등 노작하는 교육, 창조, 발견하는 교육으로 전환하도록 강조하였다.
- ⑦ 지역 사회와 각 학생에 맞는 활동에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교과서의 암기나 읽는 교육에서, 교과 과정을 중심으로 하여 교육 목표에 맞는 학습 활동을 구성하여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요구하고 있다.
- ⑧ 좋은 지도 방법을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기를 요망하고 있다. 즉 단원 학습, 때에 따라서는 강의, 토의, 도서관의 이용, 기타 지역 사회의 모든 시설, 즉, 견학, 실습 등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쓰도록 되어 있다.
- ⑨ 전인 교육을 하는 것을 목표로 각 교과의 종적, 횡적으로 긴밀한 연락을 취하고, 특기할 사항만을 요약해 적어서 새 교육 과정이 어느 방향을 걷고 있고, 요구하고 있는가를 표시하였다.

16) 문교부(1958), 前掲書, pp. 135~136

이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과 「교과과정」은 각각 제2차 교육과정 이후의 총론과 각론에 해당되는 것으로써, 우리 손으로 만든 최초의 체계적인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이 교육과정에서부터 차수(제1차)를 붙이게 된 것이다.

(3) 제1차 교육과정의 편성·운영·평가

1) 전교과에 걸친 편성·운영·평가 지침

제1차 교육과정의 「시간 배당 기준령」이나 「교과과정」에는 그 후의 교육과정에 서처럼 편성, 운영, 평가에 관한 진술이 따로 되어 있지 않고, 「교과과정」의 ‘三. 본 과정의 운용상의 주의’(아래의 전문 참조)에 약간의 언질이 있을 뿐이다.

다음의 ‘三. 본 과정 운용상의 주의’를 놓고 볼 때 교육과정이 학교의 교육의 계획과 경영의 기준이 되고, 교과용 도서 편찬의 기준이 되며, 교사의 학습 지도 계획, 실제 지도, 학습 평가의 보편적 기준이라는 극히 일반적인 것을 진술하고는 있지만, 교육과정의 편성·운영·평가 등에 대한 직접적인 진술을 발견하기 어렵다. 다만, ‘지역 사회의 특수성과 학생의 실정에 알맞는 독자적인 연구와 창의를 기하여야’ 한다는 것과 ‘교사는 각자의 체험에 의하여 본 과정 개선에 참여하도록 힘쓸 것’이라는 극히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진술만이 있어, 이것으로 편성·운영·평가에 관한 내용을 조금이라도 파악하기가 어렵다.

三. 본 과정 운용상의 주의

본 과정은 학교의 교육 계획과 교과 경영의 기준을 보여 준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교육의 계획과 경영은 본 과정의 취지에 따라 이를 구현하도록 지역 사회(地域社會)의 특수성과 학생의 실정에 알맞는 독자적인 연구와 창의(創意)를 가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편찬된 교과용 도서는 본 과정의 지도 목표로 아래, 지도 범위와 정도를 조절(調節)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교과서의 활용은 본 과정의 취지를 벗어나서 다루어질 수 없으며, 모든 학습자료도 본 과정의 취지 아래 이용되어야 한다.

본 과정은 교사의 실제 지도와 학습 평가에 이용되어야 한다. 모든 학습 지도 계획뿐만 아니라, 실제 지도와 학습 평가의 보편적 기준으로 삼을 것이며, 교사는 각자의 체험에 의하여 본 과정 개선에 참여하도록 힘쓸 것이다.¹⁷⁾

17) 문교부, 국민학교 교과과정, 교육주보사, 1955. pp. 3~4

2) 각 교과에서의 편성·운영·평가 지침

「국민학교 교과과정」의 경우, 각 교과에서 교과의 내용 편성, 운영, 평가 등에 대한 진술을 찾아보면, 보건과와 실과만 ‘지도상의 유의점’ 또는 ‘지도에 유의할 점’이라는 항목을 정하여 언급하고 있고, 국어과와 사회생활과는 ‘지도 방법’이나 ‘목표’ 속에서 편성, 운영에 관련된 것이 보이나 평가에 관해서는 직접 언급된 교과가 없어 보인다. 그 외의 교과는 편성·운영이나 평가에 관해 아무런 언급이 없어 보인다.

각 교과의 편성·운영·평가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만 골라보면 다음과 같다.

- ‘지도상의 유의점’ 난을 두고 편성·운영·평가에 대해 진술하고 있는 교과

<보건과>

三. 보건과 및 체육과의 지도상 유의점

- ① 보건과 및 체육과에 있어서는 신체 활동의 목표를 달성함에 힘쓸 것.
- ② 보건과 및 체육과 지도 교재는 그의 특징을 살려 이것을 골고루 지도하고 결코 일부 교재에 치우침이 없도록 할 것.
- ③ 실제 지도에 있어서는 그 지방의 특수 사정과 계절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지도 계획안을 작성하여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데 있다.
- ④ 항상 학생의 체력, 수련도, 연령,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분단으로 나누어 최고도의 지도성적을 얻도록 할 것.
- ⑤ 지도에 있어서는 항상 지도한 성과를 종합, 평가하여 목표 도달에 힘쓸 것.
- ⑥ 보건과 및 체육과 지도에 있어서는 학교 신체 검사와 기타 측정 결과를 참작하여 그의 결함을 제거하는 데에 노력할 것.¹⁸⁾

<실과>

三. 실과 지도의 유의할 점

- ① 실과는 종전에 국민학교에서 과하여 오던 직업과 가사과 및 미술과 공작이 실용적인 교재를 뽑아 내어 통합화한 새로운 교과이다. 이것을 지도함에 있어서는 종전에 분과였다는 관념을 일소하고 종합적으로 다루며 특수한 단원을 제외하고는 남녀 구별할 것 없이 단원을 다 같이 학습하도록 할 것이다(기능의 ○표는 남자만, ×는 여자만, 표 없는 것은 공통임)
- ② 이 교과는 항상 실지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그의 기법과 확실한 이해를 얻게 할 것이다.
- ③ 학생들로 하여금 학습 단원에 대한 목적과 필요성을 파악하게 하여 일상 자동적이며, 계획성 있게 작업을 하도록 할 것이며, 그리하여 계통적인 기능과 지식을 얻을 수 있게 지도하여야 한다.
- ④ 서로가 협조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꾸준히 일하는 태도를 알리도록 할 것이다.
- ⑤ 용구를 중히 여기고, 재료를 아껴 쓰며 작업장을 정돈하는 습성을 기르도록 할 것을 배운다.

18) 문교부(1955), 상계서, pp. 162~163

- ⑥ 일상 생활에 활용하여 나가도록 선도할 것이다.
- ⑦ 지역사회 환경에 맞추어 기동성 있는 지도를 할 것이며, 특히 그 지역사회의 특산물
은 조장 발전시켜 나가도록 협력할 것이다.
- ⑧ 자족자급의 정신을 길러 국산애용에 사상을 고취할 것이다.
- ⑨ 공장 및 기업 단체의 시설 운영의 실태를 자주 견학시키어 생산과 직업 생활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깊게 할 것이다.
- ⑩ 일감과 기능이 타 교과와 단원과 같은 내용을 가진 것은 긴밀히 관련을 지워 학습시
킬 것.¹⁹⁾

● 목표나 지도 방침에서 편성·운영·평가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교과

<사회생활과>

상기의 사회생활과의 목적과 목표에 달성하기 위하여

1. 국민학교의 사회생활과는 사회적 및 어린이의 욕구에 의한 기초적인 문제가 다루
어 져야함.
2. 사회생활과의 내용인 지리, 역사, 공민은 이를 분과적 또는 계통적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심신 발달의 단계로 보아 종합적으로 다루어져야 함.²⁰⁾

<국어과>

四. 국민학교 국어과 지도 방법

……한편으로는 이 교과서를 한갓 학습 보조 자료로 하고 따로 화제와 문제 및 언어 경
험을 정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하여 수업을 전개하는 방법을 취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러한 교과서나 따로 설정한 단원이나 요는 그 구성 원칙에 있어서

- ① 사회적 필요성(교육법 요령을 포함함)
- ② 학생의 발달 정도.
- ③ 학생의 흥미와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이것은 각 학교 교육 계획
및 교사 자신의 통찰(洞察)과 지도력 여하에 좌우될 것이다.

한편 단원 학습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불리한 점이 지적되고 있는 것도 (중략)
그러나 언어 기술만의 계통, 경험 요소만의 단원이란 생각할 수 없고, 언어 생활에
필요한 내용을 이어 적절히 배당하면 학생은 그 단원의 언어 사실에서 언어 기술을
연마하고 언어 경험을 쌓게 될 것이다.

이런 점으로 보아 단원 계획을 세우고 단원 학습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기본
조사가 필요하다.

- ① 언어 능력
학생들이 갖춰야 할 힘 - 발음, 문자, 어휘, 문장의 정도.
- ② 언어 생활
학생들은 어떠한 언어 생활을 하고 있는가의 실례

19) 문교부(1955), 상계서, pp. 252~253

20) 문교부(1955), 상계서, p. 48

③ 흥미를 끄는 화제

학생들이 갖는 흥미와 필요성

이렇게 하여 세워지는 단원에는 다음과 같은 준비와 예상(豫想)이 필요할 것이다.

① 단원의 목표

② 단원의 내용

③ 자료의 수집

④ 도입(導入)

⑤ 기본적 지도

⑥ 발전적 활동

단원 학습에는 마지막으로 반드시 평가(評價)가 있어야 한다.

① 학생들의 성장과 변화

② 단원 계획의 성공 여부

다음에 학습 단원으로서 구성할 수 있는 예를 적어 보기로 한다. 계획 실시에 있어서
는 그 지역과 학교 및 학생의 특수성에 비추어 효과적인 방법을 취해야 할 것이다.²¹⁾

위와 같은 4개 교과에서의 진술만 보아도 우선 교육과정의 편성·운영·평가 등에 대한 일관된 진술이 없는 것으로 보아 편성·운영·평가가 교육과정 기준에서의 중요성을 아직 간과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다음으로 교과간에도 여기에 대한 진술이 일정하지 않고 단순히 교과과정의 내용을 가지고 수업할 때의 유의점 정도로 진술하고 있으며, 더구나 평가에 관해서는 아예 진술되고 있지 않고 있거나, 있더라도 국어과와 같이 평가에 관한 극히 일반적인 원칙을 적어 놓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전 교과에 걸쳐 비교적 공통적으로 진술되었다고 볼 수 있는 교과 운영에 대한 지도에서 아동의 흥미, 욕구, 발달 정도에 적합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경향이다.²²⁾ 이것은 본 교육과정이 작성, 심의될 때 학계와 교육계에 소개되고 보급된 아동 중심의 경험주의 교육 사조가 교과 운영에 반영되고 있음을 말해주며, 이것은 곧 이어 나오는 교과서에 상당히 반영되어진 것으로 보인다.

(4) 제 1차 교육과정 개발시의 교육과정 관련 법제, 행정 조직 및 인적 구성

1) 관련 법령 및 제도

국가가 제시하는 교육내용 기준을 결정하는 구체적 법적 근거의 정점은 1949년 12월에 공포된 교육법 제 157조 ‘대학, 사범대학, 각종 학교를 제외한 각 학교의 학과, 교과는

21) 문교부(1955), 전제서, pp. 37~39

22) 李慶燮, 한국 현대 교육과정사 연구(상), 교육과학사, 1997. p. 159

문교부령으로 정한다.’라는 규정에 있었다. 물론 홍익인간의 이념 구현을 교육목적으로 제시한 교육법 제1조와 각급 학교의 교육목표를 제시한 교육법 제93조 및 94조(초등학교), 제100조 및 101조(중학교), 제104조 및 105조(고등학교)의 규정은 교육내용 작성의 상위 기준으로 대표적인 법규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상기한 교육법 제157조의 근거에 의거 문교부(편수국)에서는 ‘교수요목 제정 심의회 규정(문교부령 제9호, 1950. 6. 2)’을 제정하고, 새교육과정 제정 작업을 시작하였으나 6·25 사변으로 일시 중단되었다. 임시 수도 부산에서 문교부 편수국은 토성동 묘심사라는 절의 납골당을 사무실로 빌려 업무를 추진하였으나, 적은 인력(최현배 국장 이하 6명의 편수관 및 소수의 편수과 직원)으로 시급한 전시하의 교과서 편찬, 공급을 우선으로 해야하는 시급한 업무에 밀려 교육과정 개정에는 미처 손을 쓰지 못하고 있었다. 이때 심태진 장학관을 중심으로 한 장학관실에서 ‘교과과정연구위원회 규정(문교부령 제16호, 1951. 3. 30)’을 정하고, 학습지도 방법 연구에서 커리큘럼 쪽으로 관심을 돌리고 있던 당시의 새 교육 운동의 지원을 받거나 주도하면서 교육과정 개정 업무를 추진했다. 여기에는 역시 장학관실이 성안하여 공포한 ‘연구학교 규정(문교부령 제17호, 1951. 3. 30)’에 의거 선정된 전국의 연구학교의 실험 연구가 이 교육과정 개정 운동에 음양으로 영향을 끼쳤다.

그러니까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법규정으로 대표되는 ‘교수요목 제정 심의회 규정’과 ‘교과과정연구위원회 규정’을 관장하는 기구가 편수국과 장학관실의 둘로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 후의 교육부의 업무 분담을 기준으로 판단해 보면 장학관실이 교육과정 업무를 취급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라 판단되지만, 당시로는 어찌면 그것이 당연했을런지 모른다. 왜냐하면 미군정기부터 편수국 하면 교과서 또는 번역도서 편찬·보급이 업무의 주였고, 교과의 편제, 시간 배당 등은 조선교육심의회 제4분과 위원회(초등교육)와 제5분과 위원회(중등교육)에서 초안을 만들고 미군정청 학무국의 보통교육과의 초등교육계와 중등교육계(1946년 3월 29일 朝鮮政府 各部署 名稱令 공포 후 미군정청 문교부로 직제가 승격된 후에는 보통교육국의 초등교육과와 중등교육과)가 사무처리를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미군정청 학무국의 편수과(1946년 3월 29일부터는 편수국)는 조선교육심의회 제9분과 위원회(교과서)와 연계된 업무처리를 해왔기 때문에 교과의 설정, 시간 배당 기준 결정 등이 좀 더 멀리 있는 업무라고 보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1951년부터 1953년 당시 왜 보통교육국의 초등교육과와 중등교육과에서 교과 편제

및 시간 배당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보통교육국 사정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알 수 없다. 그러나 장학관실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게 된 이유는 대략 다음과 같은 연유에서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첫째, 장학관실 업무 규정 속에 있는 여러 업무중에서 각 실·국에 속하지 않는 교육 내용에 관한 것을 관장하는 관례로 보아 교육과정의 편제와 시간 배당을 장학실의 업무로 보았을 것이라는 점이다.

두 번째로는 무엇보다 심태진 장학관과 같은 당시로는 비전 있고 교육과정 쇄신에 대한 의욕이 있는 분이 장학관실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2) 행정 조직과 관련 인사

제 1차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 공포될 때까지의 장학관실과 편수국의 직제와 업무, 근무한 인사들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정부 수립 후 장학관실은 장관 비서실(지금 같으면 기획관리실, 비서실, 총무과 업무를 모두 관장하던 기구)의 기획과에 속해 있었다<표 II-1>. 비서실의 기획과는 통계, 기획, 선전, 장학, 교육법규 및 타국에 속하지 않는 학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었는데 구성원은 대부분이 교원이거나 舊視學官 출신이었다.²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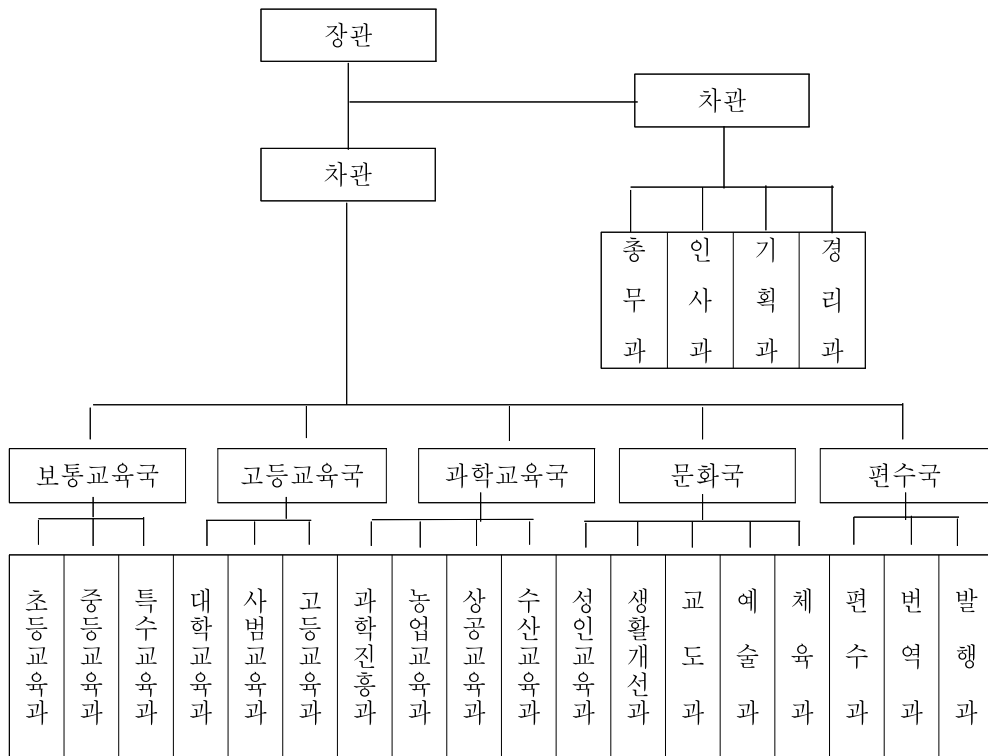
기획과의 장학관실은 1950년 3월의 문교부 직제 개편으로 비서실 제도가 없어지고 당연히 그 산하의 기획과마저 없어짐에 따라 장학관들은 모두 각 국 근무 발령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장학관실은 존속시켜야 되겠다는 문교부 장관의 방침에 따라 궁여지책으로 ‘장학관 직무 규정’이란 것을 문교부 훈령으로 제정하여(4월 19일자) 미약하나마 장학관들의 집단 근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었는데²⁴⁾ ‘교과과정 연구위원회 규정’을 기안 제정했던 1951년 3월의 장학관실은 바로 이 훈령에 근거한 기구였다.

연구학교 규정을 제정할 당시의 장학관은 曹在浩, 吳炳玉, 沈泰鎭 세 분 뿐이었는데 실질적으로 沈 장학관 혼자서 이 일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의 장학관실 사정은 당시의 장학관 심태진, 이창갑의 다음과 같은 회고담에서 알아 볼 수 있다.

23) 鄭泰秀. 韓國教育 基本法制 成立史, 예지각. 1966. pp. 95~99.

24) 沈泰鎭 外 3人, 師友文選, 敎文社. 1994. p. 114

<그림 II-1> 최초의 문교부 직제표(1948. 11. 4 ~ 1950. 3. 31)



군정 때에는 장학관이란 것이 없었고 전부 장학사였지요. 정부수립 후 정부직제에 의해서 장학관제도가 처음 생겼어요.

장학관은 처음에는 문교부 직제 의해서 비서실 밑의 기획과에서 근무했어요. 비서실은 요새 비서실과는 달리 총무국과 같은 것이어서 그 밑에 기획과 외에도 경리과나 총무과나 하는 과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정부의 행정조직법 개정에 따라 각부에 있던 비서실을 일제히 없애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 문교부도 1950년 3월 31일자로 갑자기 비서실이나 기획과가 없어지는 바람에 기획과원인 장학관들이 갈 곳이 없어졌지요. 물론 기획과를 없애면서 문교부 새 직제에 따라 장학관을 보통교육국과 고등교육국에 배치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장학관들은 각국에 분산 배치되는 것은 바라지 않았고 장·차관 역시 장학관들이 집단근무하여 종전과 같이 장학업무 외에 기획업무까지 맡아 줄 것을 바랬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끝에 ‘장학관 직무규정’을 문교부 훈령 제2호로 제정하여 문교부차관 직속으로 집단 근무하게 했습니다.

이래서 그 동안 ‘기획과’와 ‘장학관실’의 두 개의 문패가 달려 있던 장학관실의 ‘기획과’ 문패가 떨어지고 장학관실 문패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발령장에는 보통교육국 또는 고등교육국 근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때부터 ‘직제에 없는 장학관실’이란 소리를 듣게 되었지요. (심태진의 회고)²⁵⁾

직제에 없는 장학관실이란 말이 문교부 내의 일부 일반직 공무원간에 흔히 있었는데 그것은 장학관 전원의 집단사고로 효율적인 장학 행정을 수행함으로써 교육의 발전에 더 도움이 될

25) 심태진 외 3인, 전게서, pp. 23~24.

것이라고 판단하고 집단 집무를 하게 한 장관 방침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학관실이 정규 직제화 된 것은 후일에 가서 이루어진 것이며 그 당시 장학관의 집단 집무가 오늘과 같은 장학행정의 발전을 이룩한 기틀이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학 행정의 기능은 해방 후 미군정 때부터도 있었지만 정부수립 이후에 조제후 장학관을 중심으로 교육 내용 개혁 추진, 교육제도 창설, 새교육 지도 등 교육발전을 위한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일선학교 교육의 지도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건국 초창기에 문교 정책에 대한 기획과 구상의 두뇌 역할을 담당하여 우리 나라 교육 발전에 이바지한 바가 컸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학년초가 되면 장학관실에서는 문교부의 당해 년도 정책을 교육실천면에서 어떻게 구현해 나가느냐에 대한 지도 목표를 장학 방침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일선 학교의 교육이 장학 방침을 구현하는 데 중점 목표를 두고 실천해 나가도록 장학지도에 주력해 왔던 것입니다. 물론 장학 방침의 설정은 장학관들의 집단 사고뿐만 아니라 일반교육 행정관, 교육학자 및 일선 교원들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고 협의하여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이창갑의 회고) 26)

직제에도 없이 문교부 훈령(장학관 직무규정)에 의거해 차관 직속으로 존속되었던 장학관실은 1955년 2월 17일의 직제 개정에 의해 보통교육국 소속으로 나타날 때까지 그대로 있었다(아래 <표 II-4> 참조).

<표 II-4> 제1차 교육과정의 제정 당시부터 시행기의 교육부 직제

改正月日 (法令番號)	1950. 3. 31 (大統領令 第308號)	1951. 4. 12 (大統領令 第473號)	1955. 2. 17 (大統領令 第1000號)	1956. 3. 9 (大統領令 第1140號)
室·局·課 (擔當官)의 數	5局 17課	5局 17課	5局 16課	5局 17課
職 制 變 遷	장관 차관 총무과 경리과 보통교육국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특수교육과 고등교육국 대학교육과 사범교육과 고등교육과 기술교육국 과학진흥과 기술교육과 실업교육과 성인교육과 교도교과 예체 문화국 편수국 편수과 발행과	장관 차관 총무과 경리과 보통교육국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고등교육과 고등교육국 대학교육과 사범교육과 특수교육과 기술교육국 과학진흥과 기술교육과 실업교육과 성인교육과 교도교과 예체 문화국 편수국 편수과 발행과	장관 차관 총무과 보통교육국 장학관 기획조사과 의무교육과 중등교육과 고등교육국 장학관 대학교육과 사범교육과 섭외교육과 기술교육국 장학관 실업진흥과 과학기술과 교육시설과 문화국 성인교육과 교도교과 예체 편수국 편찬과 출판과	장관 차관 총무과 보통교육국 장학관 기획조사과 의무교육과 중등교육과 고등교육국 장학관 대학교육과 사범교육과 섭외교육과 기술교육국 장학관 실업진흥과 과학기술과 원자력교육시설과 문화국 사회교육과 교도교과 예체 편수국 편찬과 출판과
備考	· 비서실 폐지	· 기능에 부합도록 일부과 조정	· 보통·고등·기술 교육국에 장학관을 둠	· 원자력과 신설

26) 전게서. p. 24.

改正月日 (法令番號)	1958. 10. 29 (大統領令 第1140號)	1961. 10. 2 (각령 제180호)	1963. 12. 16 (각령 제1737호))
室・局・果 (擔當官)의 數	5局 16課	4局 14課	2室 4局 14課
職 制 變 遷	장관 차관 총 무 과 장 학 관 기획조사과 보통교육국 의무교육과 중등교육과 장 학 관 대학교육과 고등교육국 사범교육과 섭외교육과 장 학 관 실업진흥과 기술교육국 과학기술과 교육시설과 사회교육과 문화보존과 문화국 예 술 과 체 육 과 편 찬 과 편수국 출 판 과	장관 차관 문교재건자문위원회 총 무 과 교육지도과 학무국 기술교육과 편 수 과 교육과정과 장 학 관 편 수 국 행정관리과 학교관리국 재정관리과 교육시설과 시청각관리과 국민체육과 체육국 학교교육과 사회교육과 문예국 문화교류과 예 술 과 재외주재공무원	장관 차관 중앙교육위원회 기획관리실 기획예산 기획관리실 행정관리 법 무 장 학 실 총 무 과 교육행정과 보통교육국 교육제정과 교육시설과 실업교육과 대학교육과 고등교육국 교 직 과 과학교육과 편 수 과 편수국 발 행 과 사회교육과 문예체육국 국제교육과 예 술 과 체 육 과
	備考 · 원자력원 신설로 원자력과 폐지	· 체육국 신설	· 체육국 폐지

자료 : 趙誠一 · 金永出, 韓國教育行政史, 集文堂, 1996. PP. 360~362.

장학관의 생활에 대한 단면은 아래의 심태진의 부산 피난 시절의 회고담에 잘 나타나고 있다.

문교부 부산피난 시절(심태진의 회고)²⁷⁾

6·25 사변 발발, 1·4 후퇴 당시에 나는 장학관으로 있으면서 崔奎南 문교부 차관의 보좌관이랄까, 비서관이랄까를 겸무하여 차관 비서실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제 2대 白樂濬 장관이 들어오면서 과학교육 국장으로 있던 崔奎南 박사가 차관으로 승진하자 나에게 보좌역을 맡긴 것이다. 국·과장회의 때에 실업학교 문제로 과학교육국 측과 대립하여 논쟁을 벌인 적이 있었는데, 이 때의 발언이 인연이 되어 나를 부른 것 같았다. 대수롭지도 않은 나를 인정하고 등용한 것에 감격하여 성심성의로 차관을 보좌하는 데 전념하였다.

그러다가 6·25 사변 때에는 장관이나 차관으로부터 한 마디의 연락도 받지 못한 채 도강(渡江)을 못하고 술한 고생을 하였고, 1·4 후퇴 때에는 중공군의 서울 침공 소식을 들으면서 차관 차에 崔 차관과 동승하고 피난길을 떠났다.

부산시청에 들어간 문교부 임시 청사라야 사무용 책상 하나에 국민학교 학생용 걸상을 너댓 개씩 늘어놓은 초라한 모습에다가 국·과 간의 칸막이도 없는 국제시장 같은 사무실이었지만 그나마도 모자라 편수국은 토성국민학교 근처의 일본절 자리를 빌려 쓰고 있었다.

27) 前掲書, pp. 117~119.

피난 직후 장학관이라곤 曹在浩, 吳炳沃 장학관과 나의 세 사람 밖에 없었는데, 나는 차관실에서 근무하다가 한 달 후에야 두 장학관과 합류하게 되고, 崔奎南 차관은 얼마 후에 서울대학교 총장으로 진출되었다. 피난지에서의 피난학교 교원들은 사친회(師親會)가 거둬 주는 후생비로 근근히 살아갈 수 있었지만, 문교부 장학관들의 생활은 말이 아니었다. 나는 닥치는 대로 원고를 써서 생활비에 보태 썼다. 참고서의 원고를 많이 썼다. 원고료를 받아 친구들과 술을 나누는 것이 낙이었다. ……(중략)……

부산에서의 장학관의 일은 바빴다. 사변 중의 중학교 입학에 위한 국가고사 제도는 내가 창안해서 실시하게 되었는데, 출제와 인쇄 활자의 문선에서부터 조판, 인쇄, 포장, 수송의 감독에 이르기까지 曹在浩, 吳炳沃 장학관과 셋이서 밤을 새워가며 해치웠다. 그뿐만 아니라 ‘전시학교육 특별조치요강(戰時下教育 特別措置要綱)’을 만들라, 연구학교를 지정하여 지도하라, ‘교과과정 연구위원회’를 열어 새로운 교육과정의 심의를 하라, 사친회(師親會)의 운영을 감독하라 세 사람으로서는 힘에 겨운 업무량이었다. 그러면서도 배고파 못살 정도로 생활의 위협을 받았다.

이리하여 견디다 못하여 曹在浩 장학관은 부산 사범학교장으로, 吳炳沃 장학관은 부산 개성중학교장으로 진출하게 되어 홀로 대한민국 유일의 문교부 장학관이 되고 말았다. 나머지 일선으로 나왔더라면 문교부 장학관의 명맥이 일시나마 끊어질 뻔하였다.

약 반 년 간을 외톨박이 장학관 노릇을 하는 동안에 장관도 바뀌어 金法麟 선생이 제 3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자 장학관의 보충도 시작되었다. 경상남도 학무과의 중등장학사로 있던 李昌鉀 씨와 경남 상업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에 고등고시 제 4부에 합격한 孫永垌 씨가 장학관으로 들어오고, 해방 전에 조선 총독부 학무국 편수과에 근무하던 李興鍾 씨(별세)가 주일 장학관 가기를 희망하다가 일본에는 못 가고 문교부 장학관으로 들어와 曹在浩 장학관의 후임으로 수석 장학관이 되었다. 이리하여 문교부 장학관의 정원은 4명으로 4·19 때까지 고정되고 말았다.

당시 편수국 쪽은 국장 최현배 이하 편수과장 조병옥, 국어과의 최태호, 홍웅선, 수학과 조기환, 사회과의 최병칠, 김홍주, 과학과의 오연석 등이었는데 이들 중 최현배, 최태호, 홍웅선, 최병칠, 조기환 등이 ‘교과과정 연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 편수국의 직제는 국장, 편수과, 발행과, 번역과로 되어 있었으나, 1950년 3월 31일 직제 개정으로 번역과를 편수과에 합침으로써 편수, 발행의 두 과가 운영되었는데, 이 두 과의 명칭은 1955년에 가서 편찬과, 출판과로 바뀌었지만 그 기능은 그대로 유지했다. 교육과정과 교과서 업무를 행하는 편수관들은 편수국에 속해 있었다. 당시의 문교부 직제 중에서 편수국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 편수국에 편수관 및 부편수관을 두되 편수관 및 부편수관은 상사의 명을 받아 교과용 도서의 검인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 편수국에는 편찬과 및 출판과를 둔다.
 - 국장은 이사관으로써 보하고 과장은 서기관으로써 보한다.
 - 편찬과는 국정교과서, 교사용 참고 도서의 편찬, 검정과 인정, 국어 조사 연구, 교수요목 조사 문헌의 번역 및 국내 타과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분장한다.
 - 출판과는 국정 교과서와 교과용 참고 도서의 발행, 국정교과서의 공급 및 보통 간행물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교과과정 연구위원회’에서 초안이 작성된 제1차 교육과정의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을 놓고 편수국 쪽에서 교육과정의 주무국인 편수국으로 넘겨달라는 의의제기가 있자, 처음에 관할권을 놓고 분쟁이 있었으나 교육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교수요목 제정 심의회’라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던 편수국 쪽으로 넘어가 추진되었다. 심태진 장학관은 ‘교수요목 제정심의회’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어 문교부령인 ‘교과과정 연구위원회 규정’보다 상위법이 되기 때문에 넘기지 않을 수 없었다고 회고하고 있으나²⁸⁾ ‘교수요목 제정심의회 규정(문교부령 제9호)’이 부령이 아니고 대통령령이었다는 근거는 없다. 아마 착오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유는 그것보다 작성된 교육과정안을 심의하여 공적인 검증을 하는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교과과정 연구위원회’는 그러한 심의 기능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교수요목 제정심의회’ 만이 그러한 권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1953년 3월 11일 ‘교과과정 연구위원회’와 ‘교수요목 제정심의회’를 합쳐 ‘교육과정 제정 합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을 심의하였다고 하는데, 이 합동위원회란 법적으로는 아무런 근거가 없이 그저 편의상 붙인 명칭이었다. 그러니까 새로 위촉된 ‘교수요목 제정심의회’이었던 것이다.

3) 심의회의 조직과 구성

교육과정 제정 합동위원회는 당시로는 종래의 교수요목 제정심의회원으로 내정되었던 분에다 교과과정 연구위원으로 있던 분들을 모두 합쳐 재조정하여 위촉한 하나의 거국적인 모임으로써, 혼연일체가 되어 한국의 새교육과정을 제정하는데 전 지혜와 정열을 바쳤다고 한다.²⁹⁾ 이 합동위원회 즉 새 교수요목 제정심의회 구성과 심의 과정에 대해 1958년 판 문교사에서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³⁰⁾

위원회는 전체 위원회와 분과9위원회가 있으며, 전체 위원회는 일반 위원과 학교별 위원이 있고, 의장은 문교부 차관, 부의장은 편수국장으로 되었고, 일반 위원에는 교육자, 법률가, 실업가, 정치인, 언론인, 문인, 군인, 학자, 교육행정인 등 32명, 학교별 위원에는 주로 각급 학교 별 교직자로 된 위원 83명, 합계 115명이었다. 또 분과 위원회는 13 부문에 걸쳐 주로 전국 교육자, 기타 그 방면의 권위 있는 학자 등 무려 683명이 참가하였으니, 말하자면 한국인의 총 지혜를 망라 동원해서 최선의 교육과정, 한국 실정에 맞는 독특하고도 우수한 교육 과정을 제정 하자는 데 그 의도가 있었다.

이 위원회의 성격은 문교부의 한 개의 자문 기관이었지만, 문제는 순차로 하나 하나 결정지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되었고, 또 이것이 한국 교육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회 자체로서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결의 기관의 성격을 띠어 활동함으로써 책임 있고 권위 있는 결정을 하

28) 沈泰鎭 外 3人, 前掲書. p. 35

29) 문교부(1958). 문교사, 대한문교서적주식회사, p. 129

30) 문교부(1958). 前掲書. pp. 130~131.

게 하였다. 회의는 민주주의적 회의 진행 절차를 밟아 매회마다 임시 의장을 선출하고, 성원가부를 점검한 후에 정식 회의의 진행, 결의를 하기로 하였다.

당시의 형편으로서는 일정한 회의 장소를 얻는다는 것조차 거의 불가능하여, 장소도 그 때에 따라 달랐고, 각 위원의 형편, 교통 사정 등의 고통도 보통이 아니었으나, 교육 재건을 바라고, 민족의 근간이 되는 인재 육성을 염원하는 각 위원의 희생적이고 분투적인 노력은, 자료의 제공, 우량한 출석률, 토의의 백열상 등등으로 보아 충분히 그 뜻을 짐작할 수 있었다. 협소한 회의장에서 해가 지는 것도 모르고, 혹염 폭우 중에도 회의가 소집되고, 토의하고 심의 결정되어 가는 정경에 대할 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연히 머리가 수그러지고, 한국 교육의 장래에 대하여 신뢰감과 자부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이 회의는 전 30여 차에 걸쳤으며, 여기서 결정된 사항은 다음과 같았다.

- 국민학교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
- 중학교 교육과정 시간 배당 [주간, 야간] 기준령.
- 고등학교 교육과정 시간 배당 [주간, 야간] 기준령.
- 사범학교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

다음으로 이 시간 배당 기준령의 정신을 받들고, 각 교과에 있어야 할 정신에 입각하여, 각 교과의 목적, 지도 방침, 지도 내용 등을 결정하였다.

이것은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전체 13 부면 42 분과로써 인원 680 여명의 각 분야 교육 실무자, 전문 학자 등이 동원되었다.

그리고, 그 전체를 완성하는 데는 1953년 3월부터 1955년 8월 1일 그의 공포가 되기까지에 실로 2년 5개월이 걸렸으니, 그간 심의회를 가진 횟수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여러 차례였으며, 많은 자료와 진지한 토의로써 심의 결정을 보게 되었다.

위에서 언급한 「교수요목 제정 심의회」의 조직과 그 구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일반 위원회 : 의장(문교부 차관), 부의장(편수국장)을 포함하여 교육자, 법률가, 실업가, 정치인, 언론인, 군인, 학자, 교육 행정가 등 32명
- 각 학교별 위원회 : 주로 각급 학교 교직자로서 구성된 위원 83명
 - 국민학교 23명(그 중 부내위원 7명)
 - 중학교 26명(그 중 부내위원 8명)
 - 고등학교 25명(그 중 부내위원 8명)
 - 사범학교 9명
- 각 교과별 분과 위원회 : 13개 분과에 걸쳐 전국의 교육자, 기타 그 방면의 권위 있는 학자 등 638명으로 구성

4) 교육과정 개정 추진 인사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 시간 배당령(문교부령 제15호. 1954. 4. 20)’의 공포와 함께 각 교과의 목표와 내용, 방법 등을 제시하는 ‘교과과정’의 제정에 들어가 이듬해 8월 1일자로 국민학교(문교부령 제44호), 중학교(동 제45호), 고등학교 및 사범학교(동 제46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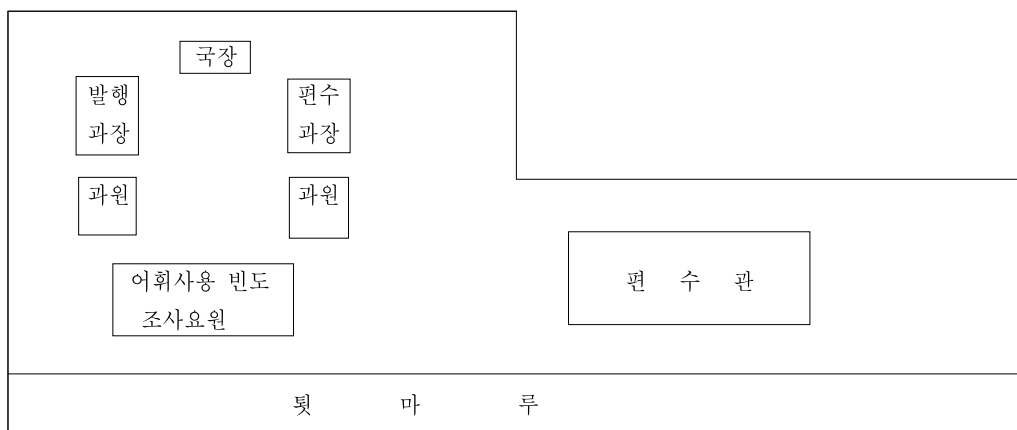
‘교과과정’이 공포되었는데, 이 ‘교과과정’부터 교육과정 관련된 모든 업무는 당연히 편수국 소관으로 추진되는 전통이 세워졌다.

처음의 교육과정 시간 담당령 제정을 추진한 인사로는 ‘교과과정 연구위원회’를 주관했던 장학관실의 심태진 장학관이 주도적 인사였고, 당시 장학관실에 함께 근무하던 장학관은 1952년까지 함께 근무하던 조재호(부산사범학교 교장으로 전출), 오병옥(개성중학교 교장으로 전출) 장학관이었다. 그 뒤 1953년 신학기 때부터 경상남도 학무과 장학사로 있던 李昌鉀씨와 경남 상업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에 고등고시 제4부에 합격한 孫永珦씨, 그리고 광복전 총독부 학무국의 편수사와 광복 후 조선 교육심의회 제5분과(중등교육)위원과 군정청 문교부의 중등 교육과장을 지냈던 李興鐘씨 등 모두 4인의 장학관이 제1차 교육과정 제정 및 시행 시기에 있었다. 曹 장학관은 기획과 소속 시절의 마지막 과장을 역임하고 수석 장학관으로 있었고, 그 다음의 수석 장학관은 李興鐘 장학관이었다.

편수국에는 초대 崔鉉培, 2대 孫晉泰, 3대 申奭鎬씨를 거쳐 부산 피난 시절의 묘심사 편수국 시절에는 崔鉉培 선생이 다시 국장으로 부임해 있었다.

‘교육과정 연구위원회’에서 교육과정 제정을 위한 여러 현안들이 협의될 때인 1951년 3월 이후, 편수국에도 崔鉉培 국장과 국어과 崔台鎬, 洪雄善, 사회 생활과의 崔乘七, 金弘柱, 李相鮮, 수학과 曹夔煥, 과학과의 吳然碩씨가 있었고, 編修, 發行 兩課長, 課員이 각각 4~5명이 있었던 걸로 짐작된다(그림, 묘심사 편수국의 좌석 배치도 참조)

<그림 II-2> 묘심사 편수국의 좌석 배치도³¹⁾



31) 홍웅선, 編修局에서 만난 분들, 한국교육과정, 교과서 연구회, 편수의 뒤안 길, 대한교과서(주). 1995. pp. 37~50.

최현배 국장은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이 공포되기 전에 소위 한글 간소화 파동으로 스스로 사퇴하였다. 당시의 편수과장은 최태호 편수관이었는데, 그는 과장으로서 제1차 교육과정에 의한 검인정 교과서의 검정 작업을 주도했고 편수관으로서 새 교육과정에 의한 국어(초등) 교과서 편찬을 맡아했다.

제1차 교육과정이 공포되고 교과서 개정 작업이 한창이던 1955년경에 있었던 편수관으로는 국장 박만규, 편수관 홍웅선 (중등 국어), 조기환(수학), 최병철(사회 : 수석편수관), 오연석(과학 : 발행과장), 최태호(초등국어 : 편수과장), 이상선(중등 사회), 최홍준(지리), 안병용(미술), 김종빈(사회), 강우철(역사)씨가 있었다.

당시의 장관으로는 白樂濬(1950. 5. 4~1952. 10. 29), 金法麟(1952. 10. 30~1954. 4. 20), 李宣根(1954. 4. 21~ 1956. 6. 7)씨가 있었고, 차관으로는 崔圭南(1950. 5. 12~1951. 9. 20), 高秉幹(1951. 9. 21~1952. 11. 13), 許增秀(1952. 11. 14~1955. 3. 9)씨가 있었다. 제1차 교육과정과 관련되어 문헌에 등장하는 장관은 백락준 장관으로서, 「교과과정연구위원회」와 「교수 요목심의회」를 각각 관장하던 장학관실과 편수국이 교육과정 관할권을 놓고 다툼이 있었을 때, 합동회의를 열도록 명했던 장관이었고, 김법린 장관은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작업에 참여한 李昌鉀 장학관, 교육법 시행령 개정의 실무를 맡았던 孫永垆 장학관을 임용했던 장관이었다. 제1차 교육과정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와 검토가 될 때의 장관은 金法麟 장관이었는데, 그는 李承晚 대통령의 ‘한글 간소화’의 특명으로 빚어진 한글 간소화 파동의 여파로 최현배 편수국장에 이어 1954년 2월 9일 사표를 내고 사임하였다. 그 후 약 3개월 간은 문교부 장관은 결석인 채로 있었다.³²⁾

교수요목 제정 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는 일반 위원에 문교부의 前고등교육국장 金斗憲, 보통교육국장 朴熙秉(1953년 이후는 중앙교육연구소장), 편수국장 崔鉉培, 고등교육국장 司空桓(군정청 문교부 때 사범교육과장 역임), 장학관 沈泰鎭, 편수관 崔秉七, 洪雄善, 崔台鎬 등 문교부의 관련 국·과장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소관 업무와 관련된 이해 집단의 의견을 대변하였기도 하였지만, 무엇보다 이들은 학문적 식견이 높은 관료들이었다. 그밖에도 서울대의 金桂淑, 李寅基 씨 등의 대학교수와, 曹在浩 부산사범 교장, 金斗星 부산 동광국민학교 교장과 연구 학교 교사 등이 참여하였다.

32) 崔台鎬, 나의 編修局 시절, 한국 교육과정·교과서 연구회, 編修의 뒤안 길 제2집, 1995,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pp. 18~20

각 학교별 위원회의 심의위원 중 부내 인사란 편수국의 담당 편수관이었는데, 당시 편수관의 수가 8명 정도였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이 8명은 앞에서 기술한 洪雄善(국어), 金弘柱(사회), 曹夔煥(수학), 崔秉七(사회), 吳然碩(과학), 崔台鎬(국어), 李相鮮(사회), 安秉鎔(미술) 씨였다고 생각되는데, 1955년을 넘기면서 康宇哲(역사), 崔興俊(지리), 金鍾斌(사회), 朱月榮(가정), 李壽南(수학), 玄炳辰(가정), 洪淳喆(영어) 씨 등이 編修局으로 들어왔다. 당시의 편수관들은 자기가 맡은 교과와 분과위원회의 간사로서 심의회를 주관하고, 심의 의견을 정리함으로써 교과과정을 결정하는 주도권을 쥐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3. 초·중등학교 교과용 도서 편찬

(1) 교육과정과 교과서 제도

1) 교육과정과 교과서 제도

우리 나라 최초의 체계적인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제1차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문교부령 제35호, 1954. 4. 20)」과 그 다음에 공포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사범학교의 「교과과정(문교부령 제44, 45, 46호, 1955. 8. 1)」을 합친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1950년에 공포된 「교수요목제정심의회」 규정에 의한 법적 절차를 거쳐 공포하였다. 그러니까 제도상으로 보면 학생들이 배우고 교사가 가르쳐야 할 교육의 내용을 국가가 결정하고 그 운영을 지원해 주는 국가 통제 방식의 중앙집권적 교육과정 행정이 이 시기부터 법적 체계를 갖추고 행하여져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다.

국가 통제 방식의 중앙 집권적 교육과정 행정이란 교육과정의 제정이나 개정의 발의에서 시작하여 공포할 때까지의 모든 절차를 국가가 관장한다는 것을 말한다. 우리 나라의 교육과정은 이 제1차 교육과정부터 이런 방식이 채용되어 지금까지 시행되어 오고 있지만, 제 4차 교육과정 개정 작업 때부터 교육과정 개발 과정 중의 주요 과정인 기초 연구와 시안(試案) 개발을 연구 기관에 위탁하여 연구 기관 주도로 개발하도록 하여 교육부 장관에게 그 시안을 답신 보고서 형식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지만, 그 밖의 발의에서 심의, 검토 등의 절차는 종래와 크게 변한 바 없다.

제 1차 교육과정의 발의는 문교부의 편수국(교수요목 제정 심의회 구성)과 장학관실

(교과과정연구위원회 구성)에서 각각 발의되어 「시간 배당 기준령」의 초안은 장학관실에서 만들어지고 협의되었다. 그러나 교육과정을 법률로써 공포하는 절차는 「교수요목 제정 심의회」를 거치지 않으면 안되었으므로 자연히 편수국에서 주관하게 되었다. 우리 나라는 교육과정의 제정과 이와 관련된 교원 연수, 해설서 편찬·보급, 일선 학교의 학교 교육과정 작성 지원 등 일련의 교육과정 애프터서비스 등을 관장하는 업무와 교과서 편찬, 검정 등 교과서 관련 업무를 교육부의 편수 파트(기구 개편으로 편수국으로 되었다가 장학실에 통합되었다가 하는 등으로 잦은 기구 개편으로 공식적인 이름을 붙일 수 없는 지경이다. 지금의 편수국의 공식 명칭이 뭔지 필자와 같이 그곳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사실은 잘 모르고 있다)에서 함께 맡고 있다. 그러나 이웃 나라 일본은 문부성 초·중·고등교육국에서의 주관과가 달라 교육과정은 유·초·중·고등학교과의 교과조사관이, 교과서는 교과서과의 교과서조사관이 담당한다. 아마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을 당시의 심태진 장학관 중심의 장학관실에서 장관의 결재를 받아 공포하고 그 후속 행정 서비스를 계속했다면, 아마 우리 나라도 일본과 비슷한 제도가 생겼을는지 모를 일이다.

교육과정을 국가가 통제하는 형식도, 민간이나 지방 교육청이 개발한 교육과정을 정부가 승인해 주는 형식에서부터 우리 나라와 같이 발의, 개발, 심의, 공포, 후속 서비스 등을 전부 국가가 통제하는 형식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형식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일단 우리 나라의 교육과정 제도는 이웃 나라 일본과 함께 매우 국가 통제적인 중앙집권적 제도라 할 수 있다.

제1차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의 편찬, 공급도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국가 통제하에 이루어졌다. 이른바 국정 교과서 제도와 검인정 교과서 제도가 「국정 교과용 도서 편찬 규정(대통령령 제337호, 1949. 4. 20)」과 「국정 교과용 도서 편찬 심의회 규정(문교부령 제8호, 1950. 6. 2)」, 그리고 「교과용 도서 검인정 규정(대통령령 제336호, 1949. 4. 29)」에 의거 시행되었던 것이다. 이들 규정이 나오기 전까지의 교과서 편찬, 검정은 관련 법규정이 없는 채로 편찬되거나 검정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된 교과서 공급이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되던 군정기에는 시급히 필요한 교과서는 문교부에서 직접 편찬하였지만, 인력, 기술 등의 문제로 편찬하지 못한 많은 교과서를 학계의 유지들이 저작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그러니까 군정·과정 시기의 문교부로서는 시급히 필요한 교과서를 모두 공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요구에 충족할 만한 책이면 그대고 교과

서로 쓰여지도록 했고, 1949년부터는 문교부가 이런 책들을 제출하도록 하여 정가를 사정해 주고는 검정 교과서라 했을 정도로³³⁾ 편의적인 검정을 행하였던 것이다.

제1차 교육과정기의 교과서 제도는 종전과는 달리 교육법과 교육법 시행령의 모범의 근거 아래 교육과정, 교과서 관련법 제도가 정비되고 그러한 법 제도에 따라 교과서의 편찬과 검정이 행하여짐으로써 국정과 검정이라는 제도가 정착하게 되었다. 제1차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 편찬, 검정과 관련된 법규정은 대략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633호. 1952. 4. 23)

국정 교과용 도서 편찬 규정

(대통령령 제337호. 1950. 4. 29)

교과용 도서 검인정 규정

(대통령령 제336호. 1950. 4. 29)

교수요목 제정 심의회 규정

(문교부령 제9호. 1950. 6. 2)

교과과정연구위원회 규정

(문교부령 제16호. 1951. 3. 30)

국어 심의위원회 규정

(문교부령 제31호. 1953. 7. 7)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사범학교 교과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

(문교부령 제35호. 1954. 4. 20)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사범학교 교과과정

(문교부령 제44, 45, 46호. 1955. 8. 1)

실업고등학교 및 기타 전문과정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 교과 시간 배당 기준표

(문교부령 제35호. 22조 개정)

(문교부령 제76호. 1958. 4. 23)

33) 이대의, 檢認定 教科書의 變遷史, 敎科研究會 創刊號, 한국2종교과서협회, 1988. 2, pp. 5~6.

2) 국정 교과서 제도

「국정」 교과용 도서란 용어가 법적 용어로 처음 등장한 것은 1950년 4월 29일자로 공포된 「국정 교과용 도서 편찬 규정」의 제정, 공포 때부터라고 보지만, 이 제도는 군정기부터 시행되고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총독부 시기에도 있었다. 광복 후 우리말로 된 교과서를 시급히 보급해야 할 시기, 정확하게 말해서 1948년까지 사실상 교과서가 자유 발행되고 있을 때에도 군정청 학무국에서 편찬, 발행하는 국정 교과서는 있었다. 그러나 당시는 오늘날과 같은 법규정에 의해 교과서 행정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저 관행으로 써 오던 국정, 검정이란 용어가 쓰여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1946년 12월에 일선 학교에 통첩된 「국민학교 규정」과 1947년 4월에 시달된 「중학교 규정」은 교육기본법이 없던 당시로는 교육기본법과 같은 성격의 규정이었는데,³⁴⁾ 여기에 나오는 교과용 도서 관련 규정(아래의 규정 참조)에서 국정교과용 도서를 ‘문교부에서 저작권을 소유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국민학교 규정>

제 10조 국민학교 교과용 도서는 문교부에서 저작권을 소유한 것 또는 검인정 한 것으로 함

제 11조 교과용 도서가 동일한 과목에 대하여 수 중 있는 때에는 그 중에서 학교장이 이를 채택(採定)함

<중학교 규정>

제 13조 중학교의 교과용 도서는 문교부에서 저작권을 소유한 도서 및 문교부의 검정을 수한 도서를 사용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장은 문교부장의 인가를 수하여 전항에 규정한 교과용 도서 이외의 교과용 도서를 사용할 수 있음

제 14조 교과용 도서가 동일한 과목에 대하여 수 중 있는 경우는 그 중에서 학교장이 이를 채택함

‘문교부에서 저작권을 소유한 것’이라고 표현한 것은 문교부가 직접 편찬 발행한 교과서 이외에도 타 기관에서 편찬한 것을 문교부 명의로 발행한 것을 포함함을 의미한다. 군정 초기 조선언학회(한글학회)에서 편찬한 ‘한글 첫걸음’과 ‘초등 국어 독본’이나 진단학회에서 편찬한 ‘국사’가 그러한 예라고 생각된다.

34) 군정 당시에는 법조문화해야 할 법규정도 군정 법령으로 공포하지 않고 행정통첩으로 공포한 예가 많았는데, 공문통첩이면 모든 행정을 지휘할 수 있고, 그것에 그대로 순응하는 교육계의 풍토로 인하여 법률적 또는 집행 명령적 성격을 띤 중요 사항도 행정 통첩으로 통용되었다. 이 규정도 그와 같은 예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鄭泰秀, 光復3年韓國教育法制史, 예지각, 1995, pp. 307~308

처음에 편수 제도가 정비되지 못하고 편수 인력이 전문 업무 처리 능력을 갖추기 전에는 국정 교과용 도서를 한글학회나 진단학회 등에서 편찬한 것도 정부가 발행 공급하여 국정 교과서화 하였으나, 차츰 편수국의 전문성이 확보되고 업무 추진 능력이 갖추어진 뒤부터는 모든 교과용 도서를 편수국이 직접 편찬하여 공급하는 체제가 되었다. 제1차 교육과정에 의한 국정 교과용 도서는 모두 편수관이 직접 편찬하는 시스템에 의하여 편찬, 보급되었다.

제1차 교육과정기에 의해 편찬, 보급되는 국정 교과용 도서는 초등학교와 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정규 교과목의 교사용 도서와 중, 고등학교의 국어, 도의 그리고 실업계 고등학교 전문교과의 교과용 도서 중 검정 신청이 없거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었다.

당시의 국정 교과용 도서 편찬 규정(대통령령 제337호, 1950. 4. 29)은 「부록편」에 소개하였다.³⁵⁾

당시의 국정 교과용 도서의 편찬 과정은 문서로 표시된 것이 없어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여러 가지 자료³⁶⁾ 등을 참고로 하고, 홍웅선, 강우철 교수로부터 들은 것들, 1960~70년대의 국정 교과서 편찬 과정을 참고한다면 대략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편찬되지 않았는가 짐작된다. ① 편찬 기본 계획 세우기 → ② 교육과정 분석 → ③ 집필세목 작성 → ④ 집필세목 검토(또는 집필세목 검토심의회) → ⑤ 집필세목 완성 → ⑥ 단원 전개 체계 확정 → ⑦ 집필 → ⑧ 원고본 작성 → ⑨ 수정·검토 → (삼화의회) → ⑩ 원고본 검토 심의회 → ⑪ 수정·검토 → (조판) → ⑫ 조판본 심의회 → ⑬ 수정·검토 → ⑭ 완성본 작성 → (결재) → ⑮ 인쇄 회부

교육과정 분석에서 집필세목 작성 등의 작업은 담당 편수관이 학계 인사와 일선 교사 등 교과교육에 식견이 높은 분과 함께, 사무실에서, 혹은 출판사의 공실에서, 또는 여관 등에서 함께 작업하여 안을 만들게 된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심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겠지만, 심의를 생략하고 좀 더 확대된 인원으로 검토 작업을 거쳐 집필 세목을 만드는 한편, 단원의 전개 모형을 완성하여 집필 준비에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을 것

35) 문교부 편수국, 편수요람, 1959. pp. 24~25

36) 최영복, 편수행정의 발자취, 제1차 교육과정기(1954~1963) - 4·6판을 국판으로, 생활중심으로 엮었다. -, 교과서 연구 제31호, 1988. 12. 20. pp. 80~82

강우철, 5학년 '우리 나라 종교 단원'을 집필하였다. 위의 잡지, pp. 75~77

김종빈, 사상 처음으로 국정 '도덕' 교과서를 편찬하였다. 위의 잡지, pp. 78~79

최태호, 나의 편수국 시절, 한국교육과정·교과서연구회(편), 편수의 뒤안 길 제2집, 대한교과서(주), 1995. pp. 17~18

이다. 집필은 교수, 교사 등이 하게 되고 집필된 원고는 학생 수준에 맞는가? 교육과정에서 의도하고 있는 내용 요소가 적절히 배열되고 있는가? 단원 또는 주제 수준에서 내용의 조직이 잘 되었는가? 내용과 사례의 선정은 적절한가 등 여러 면에서 내용 검토를 하게 되고, 이것이 정리되면 원고본 검토 심의회를 하게 된다. 이 때의 원고본은 등사 원지에 첩필로 굵은 것을 등사하거나, 문선하고 조판하여 만들기도 하였다. 이 때 조판된 원고본의 수정량이 많으면 조판된 판을 전부 무너뜨리고 새로 조판할 수밖에 없었다.

삽화는 원고본이 1차로 수정되어 내용이 어느 정도 확정되면 의뢰하게 되는데, 그림은 전문화가에게, 도표, 지도는 전문 제도사에게 의뢰하고 사진은 직접 찍거나, 전문 사진가에게 의뢰하였다. 특히 사진은 심의위원 중에서 사진에 소양이 있는 분들이 평소에 찍어둔 것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원고본에 대한 심의는 해당 분과 심의회 위원들이 대부분 참석하여(그 때 심의회 출석율이 매우 높았고, 상당히 심도 있는 심의가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담당 편수관 혼자서 주관하고 정리하는 등 업무량이 매우 많았으므로 집필자나 심의위원 중에 편수관과 가까운 분들이 항상 함께 작업했는데, 이후의 수정·검토, 완성본 작성 등에서도 이와 같은 패턴으로 진행되었다. 담당 편수관 혼자서는 이런 일들을 해내기가 매우 어려웠지만 교육과정에 맞추어 좋은 교과서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었던 것은 담당 편수관과 동고동락하며 함께 일한 절친한 교수, 작가, 교사 등이 있었기 때문이다. 초등국어과를 맡은 崔台鎬 편수관(1948~1958 재직)이 姜小泉을 비롯한 수많은 문인들의 도움을 받았고,³⁷⁾ 崔榮福 편수관(1957~1971 근무)이 鄭然泰 교수(서울대), 李貞榮 교사(서울師大附國) 등 7~8명의 검토위원의 도움을 지속적으로 받았던 것³⁸⁾ 등은 좋은 예의 하나이다.

완성본이 되면 윤문 작업이 시작된다. 교과서의 문장은 그 정확성도 정확성이지만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가르칠 내용의 핵심과 그 정신을 나타내는 글이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편수관은 외부 인사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다음의 崔榮福 전 수석편수관의 회고글³⁹⁾은 이것을 잘 나타낸 것이라 생각된다.

37) 崔台鎬, 나의 編修局 시절, 한국교육과정·교과서 연구회, 前掲書, pp. 17~18

38) 崔榮福, 編修獨自, 한국교육과정·교과서 연구회, 編修의 뒤안 길, 대한교과서(주), 1991. pp. 53~54.

39) 崔榮福, 4·6배관을 국판으로, 생활중심으로 엮었다. 교과서 연구 제31호, 한국2중교과서협회, 1998. pp. 80~82.

교과서도 다른 도서처럼 원고가 완성되면 문법에 맞거나 정확히 서술되었으면 괜찮은 것으로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교과서 특히 초등학교 교과서는 어린이들이 처음 접하는 글이기 때문에, 그의 서술은 정확해야 하며, 그 위에 일기 쉽고 시처럼 성조가 고르고 낭송하기 좋아야 한다. 이 때의 국정 교과서를 운문적으로 다듬어 준 분이 당시 한양 대학교 교수 박목월 시인이었다. 바쁜 중에도 오후 늦게 편수관실에 들러 편찬 심의가 끝난 글을 읽어가면서 다듬어 준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렇다고 국가에서 지급하는 수당은 아주 빈약한 것이었다. 물론, 그들은 얼마 되지 않은 심의 수당을 바라고 교과서 편찬 업무를 도와준 것은 아니다. 그야말로 그들은 편수관과의 인간 관계, 어린이 교육이 막중함을 생각하고 봉사했던 것이다.

당시의 교육과정 심의위원, 각급 학교 국정 교과서 편찬 심의 위원회 심의 위원 명단을 보면 당시 학계의 최고급 명사들이 망라되었는데, 모두 이러한 심정으로 참여한 것이었다. 현재 아무렇지 않게 대하는 국정 교과서는 모두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교과서 편찬 예산은 대개 원고료, 삽화료(사진, 그림, 도표, 지도 등에 따라 산출 기준 다름), 심의회비 정도 밖에 확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세목 작성, 수정·검토 등의 단계에는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부족 되는 작업비 때문에 곤란을 겪는 수가 많았다. 원고료나 삽화료의 단가 또한 시중 시세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었다고 한다.⁴⁰⁾

국정 교과용 도서의 교사용 지도서는 제1차 교육과정기의 초등 교과서의 경우는 거의 모두 편찬되었고, 중, 고등학교의 교과서도 국정 교과서는 지도서가 편찬되었다. 이 지도서들은 교과서보다 1년 늦게 공급되었다. 국정 교과서 편찬 과정 중에서 중요한 절차에 해당되는 심의는 「국정 교과서 편찬규정」 제4조에 근거해 공포된 「국정 교과용 도서 편찬 심의회 규정」(문교부령 제8호, 1950. 6. 2)에 쫓아 행해진 것이다. 이 규정은 국정으로 제정하는 교과용 도서의 편찬, 개편 또는 그 기초 조사를 위하여 문교부 편수국에 두는 심의 기구였다. 「교수요목제정심의회」에서와 같은 전체 위원회는 없었고, 모두 학교급별 교과목별로 구성되는 분과 심의회들만 구성되어 있었다. 각 분과 심의회의 구성과 임무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표 II-5> 각 분과 심의회의 구성과 임무

위원의 구성	의장 1인(편수국장) 외 문교부 직원, 현직 교육자, 지방청 교육관계자 및 기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약간 명
의장의 임무	회무를 장리하고 심의회 심의 사항을 장관에게 보고
위원의 임무	국정으로 제정하는 교과용 도서의 편찬 원안 및 교과용 도서 편찬에 필요한 기초 자료 원안의 심의, 또는 기초 자료의 조사 연구

40) 이상의 편찬 과정에 관한 내용은 필자가 제3차 교육과정에 의한 국정 교과서 개발을 하면서 겪은 교과서 편찬 과정을 뼈대로 하여 홍용선(1997년 1월 작고), 강우철(2000년 6월 작고) 선생님께 생전에 들었던 것을 토대로 진술한 것이므로 다소 착오가 있을는지 모르겠다. -필자-

참고로 「국정 교과용 도서 편찬 심의회 규정」(문교부령 제 8호, 1950. 6. 2자)은 「부록편」에 소개하였다.⁴¹⁾

이 심의회 규정 중,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규정했다고 볼 수 있는 규정이 있다. 즉, 각 분과별 심의회의 ‘의장을 편수국장으로 한다.’(제4조 단서)는 규정이다. 교과별로 수많은 분과 심의회의 의장을 편수국장 1인이 어떻게 다 맡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실제로 불가능한 것은 분명하다. 아마 주무를 보던 편수국 직원(편수관)이 의장(편수국장)을 대리하여 회무를 장리하고 심의회의 심의 사항을 정리하여 국장에게 보고하고 국장은 각 분과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종합하여 장·차관께 보고했거나, 국장 전결로 끝냈을 것이다. 국정 교과서의 심의 사항은 담당 편수관이 종합하여 국장에게 보고하는 수준에서 끝날 사항이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장관에게 보고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심의회의 ‘심의’의 법적 기능은 어떠했을까? 이 심의회 규정 뒤에 나온 개정된 규정에는 문교부 ‘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심의회를 둔다고 규정하여 자문 기구로서의 기능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비하여, 본 문교부령 8호에서는 자문이라는 용어를 찾을 수 없다. 그렇다고 의결 기구가 아닌 것도 분명하다. 그래서 글자 그대로 ‘심의하고 조사 연구에 종사하는’ 기능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제1차 교육과정에 의한 국정 ‘도덕’ 교과서 편찬에 종사했던 김종빈 편수관(1956~1972 재임)의 다음 글은 당시의 심의회의 기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듯 하다.

교육과정 편성이나 교과서 편찬에 있어서는 각각의 심의위원회에서의 진지한 논의를 거치게 되어 있어 편수관의 독단에 흐르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로서의 기능이 어느 의미로는 큰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나 다른 한편으로는 담당 편수관으로서 고역이 되기도 하였다.

그 교과에 대해서는 가장 심각하고 정리된 식견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는 입장에서 보면 심의회에서의 논의 과정은 필수적인 것이기는 하되, 집필자의 의도와 편수관의 편찬 취지를 가위질하는 결과를 낳고 생명력을 잃는 소출이 되기 쉽다는 아쉬움도 느끼면서 외롭게 고투했다는 기억이 남아 있다.⁴²⁾

3) 검정 제도

제1차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를 개발할 당시의 교과서 제도는 국정과 검정 교과서를 표준 교본으로 하고, 교육의 효과를 더 올리기 위한 보조 교본으로 인정 교과서 제

41) 문교부 편수국(1959), 前掲 要覽, pp. 9~10.

42) 김종빈, 사상 처음으로 ‘도덕’ 교과서를 편찬하였다, 교과서 연구 제1호, 한국 2중 교과서 협회, 1978. p. 79

도를 도입하고 있었다. 당시 국정, 검정, 인정 교과서의 법적 근거와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과용 도서의 선정은 학교장이 하되, 문교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용 도서(국정 교과서)가 있을 때는 이것을 써야 하며, 이것이 없을 때에는 문교부에서 검정한 도서(검정교과서)를 써야 한다.(교육법 88조 참조) 국정 교과서 또는 검정 교과서가 없을 때에는 인정 교과서를 이에 대신하여 쓴다.(교육법 90조 참조) 인정 교과서라 함은 각 교과목의 효과적인 학습 지도를 위하여 즉 각 학교의 정규 교과목의 지도를 보충 심화하기 위한 학생용 도서로 편찬된 도서로서 문교부가 인정한 보충 교재를 말한다.(교육법 89조 및 교과용 도서 검인정 규정 3조 참조)

교과용 도서에 대한 「검정」이란 용어가 법규적 용어로 공식적으로 등장한 것은 1946년 12월의 「국민학교 규정」과 1974년 4월의 「중학교 규정」에서였으나, 1948년까지는 사실상 많은 교과서들이 자유 발행되고 있었다. 그 뒤 정확히 말해서 1949년부터는 문교부에 수시로 검정을 신청하면 그때그때 검정을 허가해 주는 형식이었다. 제1차 교육 과정에 의한 교과서 검정을 행하던 1956년부터 실시되었던 일괄 제출, 일괄 검정은 없던 것이다. 이것은 우리말로 된 교과서를 시급히 공급해야 될 필요 때문에 공고, 제출, 검정의 절차를 거치는 여유가 없어서였을 것이다.

그러던 것이 1949년부터 문교부에서 그때까지 나와있던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제출시켜 정가를 사정하여 주고 검정에 해당되는 교과서는 검정 교과서로, 인정에 해당되는 것은 인정 교과서로 승인해 주었는데 이것이 제도화된 검인정 교과서의 출발이다. 그 다음부터는 교과서를 문교부에 검인정 출원을 해야 했다. 지금처럼 책을 만들어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복사나 타자 등으로 5부의 원고를 문교부에 제출하면 사열 위원 3인으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였다. 내용이 교육 목적이 아닌 것 이외에는 전부 합격하여 수정 지시가 나오고, 수정하여 제출하면 검정 교과서가 되는 제도였다. 또 제출 시기도 수시로 할 수 있어⁴³⁾ 항상 제출하면 접수해주는 수시 검정 제도였다.

이러한 검정의 수요에 응하기 위해 문교부는 1950년 4월 29일에 ‘교과용 도서 검인정 규정’(대통령령 제336호)을 공포하여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했다. ‘교과용 도서 검인정 규정’에는 검인정 교과서의 목적과 교과용 도서의 범위, 검정의 대상 및 범위, 인정 도서의 정의 및 범위, 출원 절차, 사열 및 수정 절차, 가격 사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그 뒤 4차례 걸친 개정을 거쳐 1967년 4월 16일까지 존속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⁴⁴⁾

43) 이대의, 檢認定 教科書의 變遷史, 教科書研究 創刊號, 한국2중교과서협회, 1988. 12. pp. 5~17

44) 이현목, 검·인정 교과서 관련 법령의 변천, 교과서 연구 제25호, 한국 2중 교과서 협회, 1996. 7.

pp. 148~151.

① 교과용 도서 검·인정 규정(대통령령 제336호, 1950. 4. 29. 제정)

가. 검·정의 목적과 교과용 도서의 범위

교과용 도서의 검정 및 인정은 교육법 기타 법령으로써 정하는 대학교 사범 대학을 제외한 각 학교(이하 각 학교라 칭함)의 교육 목적에 부합하는 교과용 도서의 사정을 목적으로 한다.

본 규정에서 교과용 도서라 함은 각 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학생용 도서와 고등학교, 사범학교, 고등 기술학교를 제외한 각 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용의 패도, 지구의류 등을 말한다(제1조).

나. 검정 도서의 범위

검정은 국민학교, 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제외한 각 학교의 정규 교과용 도서에 대하여 행한다. 단, 실업과 기타 임시로 제정하는 국정 교과용 도서는 예외로 한다(제2조).

다. 인정 도서의 범위

인정은 각 학교의 정규 교과목의 교수를 보충 심화하기 위한 학생용 도서 국민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정규 교과목의 학습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학생용 도서 및 제1조 제2항에 규정한 패도, 지구의류에 대하여 행한다(제3조).

라. 출원 자격, 방법

교과용 도서의 발행자는 그 도서의 검정 또는 인정을 문교부 장관에게 출원하여야 한다. 전항의 출원자로서 대한 민국 반도 내에 주소를 가지지 아니한 자는 검정 또는 인정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대리시키기 위하여 대한 민국에 주소를 가진 자로써 대리인으로 정하여야 한다.

단, 여사한 경우에는 검·인정 출원에 위임장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한 출원자로서 발행자 수인이 있을 때에는 그 중에서 대표자를 정하여야 한다(제4조).

● 전조에 의하여 검정 또는 인정을 출원하는 자는 제1호 서식의 검인정원서, 저작자 이력서, 제4호 서식의 제조비 계산서 각 1통에 검인정 요금 및 도서 간본6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저작자 수인이 있을 때 또는 단체의 저작인 때에는 대표자의 이력서로서 전항의 저작자 이력서로 한다.

검인정 요금은 도서 1종에 대하여 그 도서의 정가의 50배로 한다. 단, 패도, 지구의류

에 한 하여는 그 정가의 5배로 한다.

이미 납입한 검인정 요금은 사유 여하를 불문하고 이를 환불하지 아니한다(제6조).

마. 사열 및 합격

- 교과용 도서의 내용을 사열하기 위하여 문교부 장관은 교과용 도서의 검인정 출원이 있을 때마다 매건에 대하여 3인 내지 5인의 사열 위원을 선정, 위촉하여야 한다. 사열 위원은 위촉받은 교과용 도서의 내용을 사열하여 문교부 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제6조).
- 제4조에 의하여 검정 또는 인정을 출원한 도서 중 사소한 수정을 가하면 검정 또는 인정을 할 수 있다고 시정되는 도서에 대하여는 그 수정을 요하는 개소(個所)를 출원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제7조).
- 전조에 의하여 수정할 개소를 지시 받을 때에는 4개월 이내로 수정 출판하여 제2호 서식에 따라 수정 도서 2부를 첨부하여 그 도서의 검정 또는 인정을 추원(追願)하여야 한다. 단, 극히 경이(輕易)한 수정에 불과할 때에는 정오표를 첨부(添附)시켜서 추원 수속을 약할 수 있다. 전항의 기한내에 수정 추원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검정 또는 인정의 출원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제8조).

바. 가격 사정

문교부 장관은 검정 또는 인정한 도서에 대하여 가격을 사정할 수 있다(제9조).

사. 공고

검정 또는 인정한 도서는 관보에 그 명칭, 책수, 정가, 목적하는 학교 또는 교과목의 종류, 발행 및 검인정 연월일, 해(該)도서에 서명한 저작자 및 발행자의 주소, 성명을 공고하여야 한다(제10조).

아. 기재 사항

검정 또는 인정을 받은 도서는 매책 표지 또는 내표지 등 보기 쉬운 곳에 좌기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제11조).

- 1) 검정 또는 인정의 구별
- 2) 검정 또는 인정 연월일
- 3) 목적하는 학교 및 교과목

자. 도서 납부

검정 또는 인정을 받은 도서를 출판할 때에는 그 때마다 발행 후 3일 이내에 해(該)

도서 2부를 문교부에 납부하여야 한다(제12조).

차. 효력 상실 및 재출원

- 검정 또는 인정을 받은 도서의 명칭, 책수, 정가 및 그 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검정 또는 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제13조).

-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효력을 상실한 도서의 검정 또는 인정을 다시 출원하는 때에는 제3호 서식의 원서에 개정도서 간본 2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항의 출원에는 검인정 요금은 이를 납부하지 않는다. 단, 도서의 정가를 인상하였을 때에는 제5조 제3항에 의하여 그 인상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제14조).

카. 저작자, 발행자 변경

검정 또는 인정을 받은 도서에 서명한 저작자 또는 발행자의 주소, 성명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문교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항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문교부 장관은 관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제15조).

타. 합격 도서의 수정

문교부 장관은 이미 검정 또는 인정한 도서에 대하여서도 이를 다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할 개소를 발행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전항에 의하여 수정할 개소를 지시 받은 때에는 발행자는 2개월 이내에 수정 출판하여 문교부 장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제16조).

파. 검인정의 취소

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도서의 검인정 또는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1조, 제12조 또는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제9조에 의하여 사정한 가격에 따르지 않은 때.
3. 제46조의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4. 검정 또는 인정한 도서로서 문교부에 납부한 도서에 비하여 지질, 인쇄 또는 제본이 나쁜 것을 발매한 때.
5. 그 내용이 교과용 도서로서 부적당하게 된 때.
6. 교과목 또는 그 정도의 변경, 교수 요지 및 교수 요목의 제정 또는 변경이 있을 때(제17조)

하. 벌칙

검·인정을 받지 아니한 도서 또는 검·인정의 효력을 상실한 도서에 검정필 또는 인정필 기타 이와 유사한 문자를 기재하여 발매하는 자는 십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판인본을 몰수한다.

그 사정을 알고 판매의 목적으로 양수한 자도 또한 같다.

거. 부칙

본령은 공고한 날로부터 이를 실시한다.

본령 발행 전에 제출한 교과용 도서 검인정 원서로 처분 미완의 것은 본령, 발행일에 본령에 의하여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1950년 2월 1일 이후에 검·인정의 효력이 연장된 도서는 본령에 의하여 검·인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제1차 개정(대통령령 제423호 : 1950. 12. 21.)

- 검인정의 출원자(제4호) 및 합격도서의 수정권자(제16호)를 발행자로부터 저작권자로 변경
- 검인 또는 인정을 받은 도서의 저작권자와 해(該)도서에 서명한 저작자 또는 발행자에 이동(移動)이 있거나 그 주소, 성명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저작권자는 이를 문교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저작자, 저작권자가 발행자로서 반국가적 또는 비인도적 행위를 감행하여 학생에게 교육상 좋지못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될 때를 검인정 취소 사유로 추가 신설

③ 제2차 개정(대통령령 제1453호 : 1959. 2. 23.)

- 교과용 도서라 함은 ‘각 학교의 학생용 도서와 교수용의 패도, 지구의류를 말한다.’라고 하여 교과용 도서의 범위를 간명하게 함.
- 실업 교과에 있어서는 국정 교과서용 도서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교과의 교과용 도서에 대하여 검정을 행할 수 있도록 함.
- 인정은 각 학교의 정규 교과목의 교수를 보충 심화하거나 또는 그 학습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학생용 도서와 패도, 지구의류에 대하여 행한다라고 하여 인정 도서 범위를 간명하게 정함.
- 납입된 검인정 요금의 80% 해당액 이내에서 각 해당 사설 위원회에 사설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필요에 따라 발행자의 의견을 들어 직권으로써 그 가격을 다시 사정할 수 있도록 함.

④ 제3차 개정(대통령령 제301호 : 1961. 12. 18.)

- 인정은 국민학교, 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제외한 각 학교의 정규 교과목의 교수를 보충 심화하거나 학습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학생용 도서와 각 학교에서 교수용으로 사용하는 패도, 지구의류에 대하여 행한다고 하여 인정의 범위 조정.
- 수정기간을 4개월에서 3개월로 조정하고 수정 추가 출원을 1회로 제한함.
- 검·인정 취소 사유를 강화하여 수정 불응을 수정 불응 및 수정 불충실로 함.

⑤ 제4차 개정(각령 제1371호 : 1963. 7. 3.)

- 교과용 도서라 함은 각 학교의 학생용 도서를 말한다라고 하여 교과용 도서에서 교수용의 패도와 지구의류를 제외함.
- 실업 교과와 검인정 폐지함.
- 인정 도서에서 교수용의 패도와 지구의류를 제외함.
- 검정·인정 출원 기간을 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도록 함.
- 납입한 검·인정 요금의 반환 제한을 삭제.
- 검정·인정 사열 위원회의 의견서에 대한 국정 교과서 편찬 심의회의 자문을 거친 후 검정의 가부 결정을 할 수 있게 함.

당시 검인정 규정은 오늘날의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과 달리 검정의 대상이 되는 교과용 도서의 범위를 각 학교의 학생용 도서 뿐 아니라 각 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교수용의 패도, 지구의류 등을 포함시키고 있었다.

검정의 대상을 초등학교(같은 레벨의 공민학교, 각종 학교 포함)를 제외한 각 학교의 정규 교과용 도서 중 국정으로 제정하지 아니하는 교과용 도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중·고등학교에서는 국정으로 편찬되는 국어, 도의(도덕) 그리고 경제성이 없어 검정을 신청할 수 없는 실업계 고등학교 교과서를 제외한 거의 모든 교과서가 검정의 대상이 되었다.

제1차 교육과정기에 의한 검정은 위의 「교과용 도서 검인정 규정」에 의거 실시되었는데, 종래와는 달리 수시 검정이 아니라 일괄 접수, 일괄 심사 형식의 검정이 행해졌다.

4) 교과서 행정 조직과 관련 인사

교과서 행정을 관장하던 기구는 전과 다름없이 문교부 편수국이었다. 제1차 교육과정 이 준비되던 시기로부터 시행되던 시기까지 편수국 직제는 크게 바뀐 것이 없었다. 다만 1955년 2월 17일 대통령령 제1000호로 개정되었던 5국 16과로의 직제 개정 때에 편수과와 발생과의 명칭이 편찬과와 출판과로 바뀌었을 뿐이었다.

편찬과는 국정 교과서 교사용 참고 도서의 편찬, 검정과 인정, 국어 조사 연구, 교수요목 조사, 문선의 번역 및 국내 타과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그 업무로 하고 있다. 출판과는 국정 교과서와 교과용 참고도서의 발행, 국정 교과서의 공급 및 보통 간행물에 관한 사항을 그 업무로 하고 있다. 편수과에 관해서는 문교부 직제 제3조에 따로 직급과 직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조문은 다음과 같다.

<문교부 직제>

제 3조, 문교부에 총무과와 보통교육국, 고등교육국, 기술교육국, 문화국 및 편수국으로 둔다.

편수국에 편수관 및 부편수관을 두되, 편수관 및 부편수관은 상사의 명을 받아 교과용 도서의 검인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편수관의 업무를 「검인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보다 본질적이고 당연한 업무라 할 수 있는 국정 교과용 도서의 편찬이나 교육과정의 조사, 개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은 법 규정의 정비가 충분치 못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편수관의 업무에 대해 직접 직무규정으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지 않은 것은 편수과의 업무가 거의 편수관의 일상적인 업무와 같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1959판 편수요람에 나와 있는 편수국의 사무 분장표는 다음과 같다.

<표 II-6> 사무분장표

직 위	성 명	분 장 사 항
편수관	최 병 철	사생과, 도의과, 특별활동
"	홍 웅 선	중, 고등 국어과
"	조 기 환	수학과
"	홍 순 철	외국어과, 공민과
"	금 수 현	음악과
"	연 정 희	실과
"	안 병 용	미술과
"	이 희 복	초등국어, 체육
"	최 영 복	지리과
"	최 홍 준	과학과

"	주 월 영	가정과
"	김 중 빈	도 의과 및 독일어
"	이 정 인	역사과
"	편 찬 과	편찬사무
"	출 판 과	출판사무

* 자료 : 문교부 편수국, 편수요람(1959). p. 1.

제1차 교육과정기의 편수국의 주요 업무는 1959년판 편수요람의 차례에 나타난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것은 교육과정 검토, 교과용 도서 및 지도 자료 편찬, 도서 번역, 동식물 도감 제작, 국어 심의회, 조사 연구, 법령관계 출판 문화 및 발행 등으로 되어 있다. 그 구체적 내용과 담당자를 편수요람에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표 II-7 > 편수국 주요 업무

1. 교육과정 검토

요 항	내 용	주 무
1. 교육과정심의회 운영	1. 교육과정심의회 규정	편찬과 및 위원
	2. 기초 자료 작성	홍순칠
2. 현행 교육과정 운영 실태 조사	1. 교육과정 실태 조사 및 일반 사회 여론 조사	홍순칠 김명진
3. 교과서 분석 여론 조사	1. 국정 교과서 분석 여론 조사	조기환
	2. 검인정 교과서 여론 조사	
4. 협의회 개최	1. 협의회 개최	전원
5. 교육과정 실험실 운영	1. 교육과정 실험실 건축	편찬과
	2. 교육과정 실험실 설비	편찬과
	3. 교육과정 실험실 운영	편찬과

2. 교과용도서 및 지도자료 편찬

요 항	내 용	주 무	요 항	내 용	주 무
1. 국정 교과서 편찬및개선	1. 초등국어수정	이회복	2. 교과용 지도 자료 편찬	3. 초등도덕교사용편찬	김종빈
	2. 초등산수수정	조기환		4. 국어과과도편찬	이회복
	3. 초등사회생활수정	최병칠 최홍준 이정인		5. 낭독음반제작(국민 5, 6)	이회복
	4. 초등자연수정(1-1,2 2-1,2)	최영복		6. 음악음반제작	금수현

	5. 초등도덕개편	최병철 김종빈		7. 원자력지도요령	최영복
	6. 초등실과편찬 4, 5, 6	주월영		8. 중학도덕교사용지도서편찬	김종빈
	7. 초등미술개편(1-3)	안병용		9. 일반사회생활학습지도서편찬 (고등)	홍순철
	8. 초등사회생활지도편찬	최홍준		10. 중고등영어과입시출제기준 제정	홍순철
	9. 중학국어수정	홍용선		11. 영어과학습지도자료편찬 (중고등)	홍순철
	10. 중학도덕내용수정	최병철		12. 고교국어과교사용지도서편찬	홍용선
	11. 중학농업개편(1)	연정희		13. 고등도덕교사용지도서편찬	김종빈
	12. 중학공업수산개편(1,2,3)	연정희		14. 외국지명제작	최홍준
	13. 중학상업개편(1)	안병용		15. 술어제정(지리)	최홍준
	14. 고등국어편찬(3)	홍용선		16. 지도자료집(국민학교전기용 외래어수정일람표) 외	이희복 외
	15. 고등도덕내용수정	최병철		17. 색명제정	안병용
	16. 고등실업편찬(공농상)	연정희		18. 학습지도원리와실제에관한 지침서편찬	홍순철
	17. 고등실업개편(공농상)	연정희	3. 교과용 도서검인정	1. 신규검인정교과서내용검토	편수와 전원
	18. 실업고등가정과편찬	주월영		2. 검인정교과서내용검토	편수와 전원
	19. 한국요리서양요리특수 요리편찬	주월영		3. 지리부도인정기준작성	최홍준
2. 교사용 지도자료 편찬	1. 국민학교교사용지도서 편찬 4,5,6	편수관 전원		4. 역사외래서표기법수정	이정인
	2. 특별활동지도서	조기환		5. 검인정교과서평가사정	편찬과

3. 도서번역

요 항	내 용	주 무	요 항	내 용	주 무
1. 도서 번역	1. 외국도서번역	편찬과	1. 도서 번역	A. 국사계관	
	2. 한문도서국문번역	편찬과		B. 국사실화	
	3. 국문도서외국어번역	편찬과		C. 현대한국어교본	
	4. 외국어판도서편찬	편찬과			

4. 동식물도감제작

요 항	내 용	주 무	요 항	내 용	주 무
1. 동식 물도감 제작	1. 편찬자료수집	편찬과	1. 동식 물도감 제작	B. 어류	
	2. 도감발행			C. 조류	
	A. 나비류				

5. 국어심의회

요 항	내 용	주 무	요 항	내 용	주 무
1. 국어 심의회	1. 국어정화	이희복 홍웅선	1. 국어 심의회	4. 학술용어제정	이희복 홍웅선
	2. 문법통일	이희복 홍웅선		5. 활자개량	이희복 홍웅선
	3. 외래어표기	이희복 홍웅선		6. 한글고전영인변각	홍웅선

6. 조사연구

요 항	내 용	주 무	요 항	내 용	주 무
1. 조사 연구	1. 교과서사용상황조사	편수와 편수관	1. 조사 연구	6. 워복조사연구	조기환
	2. 교육과정운영 실태조사	편수와 편수관		7. 음악술어제정	금수현
	3. 사범학교교과서 조사연구	편수관		8. 아동만화조사연구	안병용
	4. 어휘조사(4, 5, 6)	이희복 홍웅선		9. 아동도서조사연구	홍웅선
	5. 과학기술용어조사 정리(외래어포함)	최영복			

7. 법령관계

요 항	내 용	주 무	요 항	내 용	주 무
1. 법령 제정	1. 교육과정제정심의회 규정제정	편찬과	1. 법령 제정	5. 국기심의회규정	이정인
	2. 도서번역심의회규정 제정	편찬과		6. 글자판협의회의규정	김명진
	3. 교과용도서검인정규정 개정	편찬과		7. 저작권시행령및세칙 제정	출판과
	4. 실업고등학교고과령 제정	연정회			

8. 출판문화및발행

요 항	내 용	주 무	요 항	내 용	주 무
1. 출판 문화 및발행	1. 국정교과서발행	출판과	1. 출판문 화및발행	4. 해외도서구입발송	출판과
	2. 외서수반입추천	출판과		5. 국제서적전시회출품 도서구입발송	출판과
	3. 출판사등록및납본수리	출판과		6. 해외교포용교과용도서 구입발송	출판과

1950년대의 편수관실의 분위기와 편수관의 성격에 대해 崔榮福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1950년대의 편수관실

당시 편수국에 들어서면 오른쪽에 편수과(課長 崔台鎬 前編修官, 春川敎大學長, 京畿商高校長 停年, 作故), 왼쪽에 발행과(課長 吳然碩 前編修官, 作故)가 수문장처럼 자리잡고, 두 과 사이를 지나 문을 하나 열면 오른쪽에 崔秉七 수석편수관(輔仁中高校長, 在美)이 버티고 앉아 있었다. 편수관들은 口字형으로 배치되어 있었는데, 수석편수관 오른쪽으로부터 崔興俊(地理, 駐日獎學官 歷任), 李熙福(國語, 首席編修官, 高麗大學校, 停年), 洪雄善(國語, 局長, 延世大敎授, 前韓國敎育開發院院長, 作故), 曹夔煥(數學, 局長, 仁川敎大學長 歷任, 作故), 李壽南(數學, 京畿高校長 歷任, 作故), 金수현(音樂, 作曲家, 作故), 洪淳撤(英語, 局長, 京畿工專・大田産業大學, 仁川善仁專門大學長), 朱月榮(家政, 首都女高校長, 作故), 延廷熙(農業, 作故), 安秉容(美術, 淸州敎育院, 停年), 金鍾斌(局長, 安養高校長, 停年, 前進明女高校長) 등이 있고, 깊숙이 문을 닫고 또하나 열면 安龍伯局長(趙炳旭, 朴萬奎로 이어짐)이 앉아 있었다.(아래 그림 편수관의 좌석도 참조) 앞에서 소개한 崔秉七씨는 「敎育과 人生」에서 초창기부터의 편수관들을 ‘綺羅星 같은 群像’이라 소개했는데, 필자가 취임할 때는 崔鉉培 국장을 비롯, 초창기의 대부분의 편수관들이 대학 등으로 자리를 옮기고 없었으나, 편수관실의 권위와 연구 분위기는 그대로 계승되고 있었다.⁴⁵⁾

<그림 II-3> 편수관의 좌석도(1957. 11 현재)⁴⁶⁾

홍순철	금수현	조기환	이수남	홍웅선	안용백 국장 회의실	
연정희	이정인			이희복		
주월영	김종빈	편수관실				최홍준
최영복	안병용			최병철		
발행과장 오연석 발행과원					편찬과장 최태호 편찬과원	

편수직 성격에 따른 이야기

종래의 편수관은 교원 출신으로 임명되면서도 교육연구관과는 달리 2級乙(理事官, 編修官), 3級甲(書記官), 3級乙(事務官, 編修官補)로 보임되는 일반직이었다. 따라서, 編修官補도 事務官級 이기에 一般職에서는 귀한 존재이었으므로 그 권위는 만만치 않았다. 이 제도에는 장단점이 있다. 장점으로는 편수관들이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직무에 몰두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교과서의 저작은 깊고 넓은 학식과 아울러 편집, 문장력, 때를 놓치지 않는 요령 등에 전문적 기술을 필

45) 崔榮福, 編修獨白, 편수의 뒤안 길, 한국교육과정·교과서연구회, 1991.

46) 崔榮福, 第1次敎育課程期, 人物로 본 編修史, 한국교육과정·교과서연구회, 1999. pp. 16~23.

요로 하는데, 수년의 견습과정을 거친 후에야 제몫을 다할 수 있다. 또, 직무의 성격상 많은 자문위원을 상대로 일을 하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원만해야 한다. 일반교원이나 연구직, 장학직처럼 평등이니 기회균등이니 권위 등을 내세워 몇 해마다 이동을 시켰다가는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편수관실은 매일같이 연수와 회의를 하고, 편수관이 새로 임명될 때마다 편수자료 등을 통하여 편수관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하였다. 때때로 외부 강사와 전직 편수관을 초청하여 연수도 하였는데, 故 崔台鎬 전 편수관이 편수과장 때 강사로 나와 “편수관은 여러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일 아량이 있어야 하지만, 스스로 千金의 무게가 있어야 한다.”고 한 말이 지금도 필자의 뇌리에 남아 있다. 편수관으로서의 자질, 기술, 식견 등은 이와 같이 면면히 편수관들 사이에 이어져 왔고, 또 이어져야 한다.⁴⁷⁾

편수관들은 편수관(이사관급), 부편수관(서기관급)으로 보직되어 있으면서 해당 교과서의 교과서·교육과정 업무를 보았는데, 직급상 행정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었지만, 관료적 냄새는 1950년대나 그 후나 별로 없었다. 업무 자체가 학문 탐구적 성격을 띄고 있어 언제나 책과 씨름하는 학자풍 관료였다고 할 수 있다. 1955년에 편수국에 입국하여 사회과 역사 관계 업무를 보았던 강우철 교수의 다음과 같은 회고는 학자풍 관료 편수관의 행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⁴⁸⁾

1955년의 편수관실

1955년, 문교부 청사는 경복궁 안 남쪽 모서리, 효자동으로 돌아가는 곳에 있었다. 가건물 같은 모습이었다. 원래, 편수관의 직책은 국민학교 교재와 중등국어(국정교과서)를 편찬하는 일이 주된 임무였고, 1차 교육과정 제정 이후 중등교재의 검인정 사무도 관장하게 되었다.

당시의 편수관은 7, 8명이었고, 지금 생존해 계신 분은 2, 3명에 불과하지만, 쟁쟁한 실력자들이었다. 나는 검인정을 담당하는 견습생(촉탁이라고 기재된 발령을 받고)으로 들어가서 1년 반을 근무했으나, 그 시기는 나의 생애를 바꿀 만한 계기를 이루었다. 나는 조직상 이상선 편수관(중등사회)의 휘하에 들어가게 되었으나, 역사 분야에 관한 한 거의 전권을 맡겨 주었고, 나 자신은 최병칠 선배(초등 사회과)를 따라 초등 사회과 교과서 편찬을 열심히 배웠다. 홍웅선 선배에게는 문장 쓰는 지도를 받았고, 최태호 선배에게서는 인간의 배짱과 멋진 삶의 행동양식을 얻어 가지려고 애를 썼다. 1주일에 두 번 오후에 대학 출강도 허락해 주고, 어떤 질문도 자세히 가르쳐 주시던 선배들이었다.

당시에는 교통이 불편해서 편수국 지프차 2대가 이리저리 돌면서 출근을 시켜 주었다. 그 시절을 장관의 차가 철제 뚜껑을 씌운 12호 차였고, 우리가 타던 차는 형질 지붕의 1158호였다. 이 차는 문교부 차가 아니고 문교서적(주)(?)에서 업무용으로 빌려 준 것으로 기억한다. 아침에 출근을 하면 출근부에 도장을 찍었다. 장관실 앞에 수위가 서 있고, 도착순으로 도장을 찍는데, 장관, 차관, 국장(3, 4명) 다음에 편수관 이름이 나열되어 있다. 그 순서는 부임 일짜순으로 되어 있고, 김종빈 씨와 나는 물론 말석이지만, 서기관들보다는 위에 있었다. 당시의 직제에는 이사관, 서기관, 사무관급의 편수관을 두게 되어 있다고 들었으나, 나는 그 아무 것에도 관계없는 임시직인 셈이었다. 그래도 선배들은 후배를 아껴서 편수관 대우(?)를 해 주었다.

내가 대학으로 옮겨갈 때 후임 결정은 더욱 멋진 플레이였다고 지금도 생각한다. 당시 경동

47) 崔榮福, 編修獨白, 前掲書, pp. 62~63.

48) 康宇哲, 1955년의 편수관실, 編修의 뒤안 길, 학교교육과정·교과서연구회, 1991. pp. 35~40.

고등학교에 근무하던 이 정인 씨를 후임으로 추천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질 때 나는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임시직이어서는 안 되고, 둘째는 정중한 초빙 형식이어야겠다는 내용이다. 첫째 조건은 이해가 가는데, 정중한 초빙이란 어떤 뜻이냐는 반문이 있었다. 우수한 교사를 초빙해 오려면, 본인의 의사는 내가 타진할 것이나, 그 다음에 편수관과 편수과장이 직접 교장을 찾아가 설명과 설득으로 본인을 차에 태워 모셔 오자는 것이었다. 선배들은 그 말대로 해 주었다. 마치 요순시대 같은 이야기다.

짧은 1년 6개월이지만, 16년만큼의 경험을 하였다. 굵직한 사건도 더러 있었다. 그러나 당시의 편수관의 권위라는 점, 전문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은 지금과 너무도 차이가 있다. 비좁은 편수관 실은 사색할 만한 분위기가 아니었다. 편수관 출근하자마자 뒤편에 있는 식당 겸 다방으로 자리를 옮긴다. 거기서 하루의 계획이나 의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커피 한 잔을 앞에 놓고 천장을 바라다보고 있어도 그것은 편수관만이 하는 직무수행 과정으로 양해를 받았던 시대이다. 일반직이니 전문직이니 하는 이름을 만들지도 않았고, 모두가 각자 맡은 일에 충실하였으며, 현재 인원의 10분의 1 수준이었다. 문교부 차관을 지낸 장인숙 씨도 20대 전반 때 고시에 합격하여 편수과에 와 있었던 엘리트였다.

제1차 교육과정이 성안될 무렵에는 편수관 정원이 8명 정도였던 것이 그 뒤 차츰 늘어나 1959년도의 편수요람에 나타난 편수관 수는 13명이었다. 제6차 교육과정 제정 당시인 1991년의 교육부 편수관리관 휘하의 교육연구관, 연구사가 41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숫자이었다. 학교급별, 교과별 편수 담당자를 모두 채우자면 40명도 모자라는 숫자이다. 그래서 1950년대의 편수관들은 자기가 맡고 있는 교과 이외의 여러 가지 업무를 맡아 해야 했다. 실업과의 상업과목은 1977년에 비로소 상업 전공 담당자가 부임했으니, 그 이전의 상업은 과학과의 최영복 편수관(1950년대), 음악과의 금수현(1960년대), 사회과의 은용기 편수관(1960~70년대) 등이 담당할 정도로 각 편수관들은 주업무가 아니 각종 업무를 맡아 처리했다. 유명한 작곡가인 금수현 음악 담당 편수관은 음악과 전혀 관계없는 외래어 표기법 관련 업무를 보고 있었다.[(다음의 금수현 편수관(1957~1961)의 회고담 참조]

부임해 보니 홍웅선, 조기환, 이수남, 최병철, 오연석, 최태호, 홍순철, 이상선, 현병진, 주월영, 안병용, 강우철, 김종빈 님 등이 있었고, 뒤에 신집호, 최홍준, 이희복 님 등이 왔다.

나는 술과 당구를 좋아해 밤에는 자주 술모임을 가지고, 퇴근 후는 물론, 어떤 때는 점심때도 당구를 치는 잘못도 저질렀다. 도중에 불러 가는 사람은 과장 때의 최태호 님이었다. 술자리에서는 조크를 자주 했다.

나는 고유의 일 외에 중학교 상업 국정교과서 편찬까지 맡았다. 당시에는 문교부 맞춤법이 있었는데, 책이 없어 매우 불편했다. 그래서 편수관 회의에 제의해 한국학회 맞춤법에 따르고 하는 주장을 하여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로마자 한글표기법 일과 한글 로마자표기 일까지 떠맡게 되었다. 물론, 학자들의 제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지만, 그 세칙은 대단히 복잡하였기 때문에 김종빈 부편수관의 협력을 받아 가며 이 일도 맡게 되었다. 밤을 세워 가며 일을 했다. 그리고 ‘편수 자료’라는 이름으로 책을 만들었다. 각 부처, 신문기자들이 불티나듯이 들고 갔다.

경무대에서 전화가 왔다. 대통령께서 ‘뉴스’는 잘못이니 ‘뉘우스’라고 하라고 하신다는 것이다. 내가 전화를 바꾸어 ‘뉴스’가 옳다고 하고는 끊어 버렸다.

그 후, 국방부에서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에 관한 국제 회의가 있으니 꼭 참석해 달라는 통지가 와 내가 참석하게 되었다. 미 국방부 담당자, 일본에서 온 극동사령부 담당자, 국내 각 부처 담당자 3,40 명쯤 모여 있었다.

미국 국방부 담당자가 입을 여는데 한국이 정한 로마자 표기는 모순이 많다는 것이다. 극동사령부도 비슷한 소리였다. 현 표기로 모든 표기를 고치려면 50만 달러가 들고 3년이라는 세월이 걸리는데 그 사이에 6·25 같은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이다.

다음은 문교부가 차례라 내가 일어서야 했다. 그들은 설복시킨다기보다 우리 부처들에게 신념을 주어야겠다고 덤벼들었다.

“두 분의 이야기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세계에서 외래어 표기를 할 경우에는 1음을 1기호 법으로 하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1음을 2기호법으로 하는 것은 그 나라에 대한 모독입니다. ‘대’자를 대구에서는 Taegu라 했다가 해운대에서는 Haeundae 따위로 쓰면 어떻게 하고, 정주를 Jeongju로 안 쓰고 Cheungju라고 쓴다면 청주는 어떻게 쓸 것입니까? 정주를 폭격할 것을 청주를 폭격할 것이 아닙니까? 일본어 표기에서도 카는 Ka로 합니다. 우리 귀에는 카는 ‘카메’로 들리고, イ카는 ‘이까’로 들립니다. 그래도 일본 사람들은 ‘Ka’로 적습니다.”고 했더니, 극동사령부가 그렇다고 하여 모두 웃었다.

그 후, 모든 표기가 문교부안대로 되었다.⁴⁹⁾

5) 교과서의 가격 결정 제도

제 1차 교육과정기의 교과서의 정가가 어떻게 결정되었는지에 대한 확실한 기록을 찾을 수 없다. 그러니까 교과서의 정가를 사정하는 기준이란 것을 제정하지 않고, 편수국의 발행과(1955년 이후는 출판과)의 업무 관행으로 처리하지 않았는가 생각된다. 정가 사정 기준이란 것이 제정되어 알려진 것은 1961년 2월 27일 文編第590號로 공표된 ‘국정교과서 정가 기준’이다.

이 ‘정가사정 기준’이 발표되기 전에는 발행사가 제출하는 총비용 조사를 참고하여 정가를 결정하였으며 계산 단위 부수로는 중고등 국어 및 문법이 1만부, 중등 실업 교과서가 5천부, 고등 실업 교과서가 1천부 단위였다. 또한 정가는 자재대, 공임, 회사 경비, 공급 수수료로 규정하였다. 자재대는 실제 구입 가격으로 하였으며 공임은 일정한 사정 기준에 의해 작성(실제 공임 단가와 상이)하였으며, 회사 경비는 정가 총액의 25%, 공급인 수수료는 정가 총액의 15%로 규정하였다.

1955년 대한교과서(주)가 중·고등학교용 국정 교과서 번각, 발행에 관한 사업 보고서에 나타난 정가 사정 요서는 생산원가(재료비, 조판비, 인쇄·제조비 등의 직접 경비): 정가의 65%, 공급인 수수료: 정가의 10%, 하조 발송비: 정가의 10%, 영업비: 정가의 15%이었다.⁵⁰⁾

49) 금수현, 내가 겪었던 일들, 編修의 뒤안 길, 한국교육과정·교과서연구회, 1991. pp. 41~48.

이러한 정가 사정의 기준은 1961년 국정 교과서 정가 사정 기준(1961. 2. 27. 文編590號)이 제정됨으로써 정가 사정 체제는 새로운 형태를 띠게 되었는데, 아마 이 기준은 이것을 제정하기 전부터 그 내용의 상당 부분의 기준의 교과서 사정에 쓰여져 왔던 것을 다시 보완하여 정한 것일 것이다. 그 기준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⁵¹⁾

- 정가는 제조비와 영업비, 그리고 공급수수료를 구성 요소로 하고 다음 비율로 책정한 다. 다만, 폐본 또는 기타 이유로 보상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도로 가산, 계상한다.

<표 II-8 > 60년대의 발행사별 요서별 구성비

발행사 요소별	대한문교서적주 식회사	대한서적공사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비 고
제조비	70%	68%	65%	
영업비	20%	22%	25%	대한교과서주식회사의 하청비는 15%
공급수수료	10%	10%	10%	

- 제조비는 원가계산에 의한 査定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분류 산출한다. 자재 비중 용지대는 구입승인서를 기초로 시중 도매구입 단가를, 직접재료대는 소요량의 구입총액을 인정하여 산출한다. 공임은 별도로 책정하는 공장 종업원의 기본 급료와 최저후생금만을 인정하여 산출한 공정별 단가에 의하여 사정한다.
- 중, 고등학교용 교과서 정가는 별도로 책정하는 교과별 사정 단위 부수와 쪽수, 그리고 앞에서 산출한 단가에 의해 쪽당 단가를 산출하고, 실제 쪽수와 상승하여 산출한다.
- 재보상금은 개편으로 폐본되는 교과서에 대하여는 제조비를, 기타 당부요청으로 된 인쇄물에 대하여는 그 자재대만을 각각 인정 보상한다. 다만 관계기관에 대한 기증 및 편집용 도서대와 관계 예산의 부족으로 당부 요청에 의하여 회사가 부담한 편집비는 회사 영업비 중 책정액(영업비 중 3%)을 초과한 상당액만을 보상한다.
- 교과서용지의 인쇄 손지율은 활판인쇄는 15%, 오프셋인쇄는 색지당 2%를 인정한다. 손지의 처분대금은 초등국정교과서에 있어서는 그 시중 판매상당액을 도서지구 국민아동에게 급여하는 교과서대로 충당하고, 중, 고등학교용 교과서는 제조비 중 자재대에서 공제한다.

50) 대한교과서사(1948-1998), pp.304~305.

51) 김태웅 외 2인, 교과용도서 정가 결정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화 방안. (재)한국교과서연구소, 1998. 12. pp. 23~25.

- 사정정가는 실제 부당 단가의 10환 이하의 단수를 사사오입하여 책정한다.
- 영업비는 정가사정 시 전기 영업보고서 및 손익계산서를 검토하여 앞에서 설명한 방식에 의거하여 책정한 영업비에 과다한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적의 조정하여 정가인하의 재원으로 계정한다.

이와 같은 정가사정 방법은 종래의 정가산출 방법을 좀 더 세분화한 것으로 특히 공임의 경우 조판 공임(투입원가 인정, 외부 작업분 공제)과 기타 공임(인쇄공업협동조합 협정요금의 25%를 감한 요금)으로 나누었으며, 공급수수료를 15%에서 10%로 조정하였다.

(2) 제1차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 편찬 및 발행 개황

1) 교과서 편찬

제1차 교육과정기는 1954년 4월 20일 문교부령 제35호로 제정, 공포된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과 그 이듬해에 각급 학교 교과과정이 공포된 시기로부터 1963년의 제2차 교육과정령이 공포되기까지의 시기이다. 이 교육과정에 의해 편찬되는 교과서는 「시간 배당 기준령(1954)」의 부칙에서 정하고 있는 1954년 : 초·중·사범학교, 1955년 : 고등학교 1학년(다만 도덕과 특별활동은 1954년) 시행이라는 규정을 맞추기가 어려웠다. 그것은 새 교과과정에 따른 교과서의 전면적인 개편을 1955년도부터 연차적으로 하게 되고, 교과용 도서의 검·인정 업무도 국정교과서의 개편작업과 함께 1955년부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당시의 교과용 도서 편찬과 검인정에 관련되는 법령 및 규정은 1949년에 공포된 교육법을 정점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것들이었다.

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633호. 1952. 4. 23)

국정 교과용 도서 편찬 규정

(대통령령 제337호. 1950. 4. 29)

교과용 도서 검인정 규정

(대통령령 제336호. 1950. 4. 29)

교수요목 제정 심의회 규정

(문교부령 제9호. 1950. 6. 2)

교과과정연구위원회 규정

(문교부령 제16호. 1951. 3. 30)

국어 심의위원회 규정

(문교부령 제31호. 1953. 7. 7)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사범학교 교과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

(문교부령 제35호. 1954. 4. 20)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사범학교 교과과정

(문교부령 제44, 45, 46호. 1955. 8. 1)

실업고등학교 및 기타 전문과정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 교과 시간 배당 기준표

(문교부령 제35호. 22조 개정)

(문교부령 제76호. 1958. 4. 23)

교과서는 교육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국민학교는 국정을 원칙으로 하고,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는 국어와 실업 등 일부 교과만을 국정으로 하고, 기타 교과용 도서는 전부 문교부가 검·인정으로 허가한 것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편수국에서는 새로운 교과 과정에 따라 새교육 사조에 맞는 국정 교과서의 편찬을 추진하는 일에 착수하여, 1955학년도부터 연차적으로 개편 또는 신규 편찬에 힘써온 바, 1958년에 초등 사회 생활 부도 및 고등 국어 3학년용을 제외한 모든 국정 교과서의 편찬을 완료하였다.(〈표 II-5〉, 〈표 II-6〉 참조)

1955년부터 1958년까지 편찬을 완료한 국정교과서는 전부 9종이며, 고등학교 3학년용 국어와 국민학교용 사회 생활 부도의 2종은 1958년에 개편하여 1959년에 공급되었다. 국정교과서를 전부 새롭게 편찬하는데 있어, 체제면에서는 종래의 4·6판을 5·7판으로 개선하였고 활자를 개량하여 인쇄를 선명하게 하였다.⁵²⁾

국정 교과용 도서의 전면 개편과 함께 새 초·중·고등학교 및 사범학교용 검인정 교과용 도서도 새 교과과정에 따라 개편을 서둘렀는데, 연도별로 점진적으로 검인정하는 것보다 각 학교급별로 모든 교과서를 한꺼번에 검정하는 안을 택하였다. 이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신 교육과정 내용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될 불가피성과 일선 교육자들의 조속 개편 실시 요구도 있어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일시에 다하기로 결정을 보았던 것이다.

52) 중앙대 부설 한국교육문제연구소 편, 문교사(1943~1973), 서울 : 중앙대학교 출판국, 1974. pp. 222~293.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기본 교과서를 모두 국정으로 함에 따라 검정 교과서가 없어지게 되었고, 다만 주 교과서를 보완할 인정도서만 존치시켰다.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의 검인정 사업은 국정 교과용 도서의 편찬 발행 사업과 더불어 두 가지 기간 행정 사업으로서, 용의주도한 계획 아래 진행되었다. 즉, 1955년 10월 6일 ‘검인정 교과서 사열 기준’을 발표한 후 1956년 1월 15일에 심사 결과를 확정하고, 그 해 신학기부터 사용토록 한 것이다. 당시의 검인정 사열을 위한 일선 교육자, 학자 등은 약 350명이 동원되어 수개월 동안 이일에 절대적인 협력을 보여 주었으며, 신청 건수 및 그 처리 사항은 다음과 같았다.⁵³⁾

신청 검인정 권수 992권
허가 권수(수정명령) 847권
불허가 권수 145권

이에 따라 전국 40여개 출판사에서 400여종 정도의 검인정 교과서가 발행되었다. 이때의 국정교과서의 개편 상황과 검인정 교과서의 종수와 권수 및 사용학년 등은 다음 표와 같다.

제1차 교육과정기에 개편되었던 국정교과서의 생산은 1952년에 설립된 대한문교서적주식회사(후에 국정교과서주식회사로 명칭 변경)에서 유네스코와 운크라의 원조기금으로 도입 설치한 최신 인쇄 시설로 인쇄, 공급함으로써 교과서의 대량생산에 의한 적기 공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표 II-9> 제1차 교육과정에 의한 초·중등학교 국정교과용 도서 개편 (1955-1958)

< 학생용 교과서 >

연도별	학 교 별	과 목	사 용 학 년	책 수
1955	초등학교용	국어, 산수, 사회생활, 자연	1,2,3학년 전·후기용	24
		미 술	1,2,3,4,5,6학년용	6
1956		국어, 산수, 사회생활, 자연	4,5,6학년 전·후기용	24
		실 과	4,5,6학년 남녀용	4
	중학교용	국 어	1,2,3학년 전·후기용	6

53) 문교부, 문교개관, 1958. 대한문교서적주식회사, p. 154.

		농업,공업,상업,수산	1학년용	4
	고등학교용	도 덕	1,2,3학년용	3
1957	초등학교용	음 악	1,2,3학년용	3
		도 덕	1,2,3,4,5,6학년용	6
	중학교용	도 의	1,2,3학년용	3
		농업,공업,상업,수산	2,3학년용	8
	고등학교용	국 어	1학년용	2
1958	초등학교용	음 악	4,5,6학년용	3
	고등학교용	국 어	2학년용	1
1959	초등학교용	사회생활 부도	5,6학년용	1
	고등학교용	국 어	3학년용	1

* 1959년은 필자가 추가 기입

< 교사용 지도서 >

연도별	학 교 별	과 목	사 용 학 년	책 수
1955~ 1956	초등학교용	국어,자연,음악,산수,보건,도의사생, 미술	1,2,3학년용	
1956	중·고등학교용	중등국어	1,2,3학년용	
1957		중·고등 영어	상·하	
1957		중등 공민	전학년용	

자료 : 함종규, 한국교육과정변천사연구(전편), 숙대출판부, 1973.

<표 II-10> 국민학교 검인정교과용 도서

교 과 별	검 정		인 정		합 계	
	종류수	권수	종류수	권수	종류수	권수
국 어 과			2	12	2	12
사회생활과			8	48	8	48
산 수 과			1	2	1	2
보 건 과			2	9	2	9
미 술 과			6	20	6	20
합 계			19	91	19	92

<표 II-11> 중학교 검인정교과용 도서

교 과 별	검 정		인 정		합 계	
	종류수	권수	종류수	권수	종류수	권수
국 어 과			30	79	30	79

사회생활과	62	104	18	28	80	132
과 학 과	24	72	1	1	25	73
수 학 과	17	51			17	51
체 육 과	9	11			9	11
미 술 과	9	27			9	27
음 악 과	11	27			11	27
실업,가정과	3	9			3	9
외국어과	26	78	8	17	34	95
합 계	165	379	57	125	222	497

<표 II-12> 고등학교 검인정교과용 도서

교 과 별	검 정		인 정		합 계	
	종류수	권수	종류수	권수	종류수	권수
국 어 과	9	26	18	18	27	43
사회생활과	28	41	4	4	32	45
과 학 과	41	64			41	64
수 학 과	23	25			23	25
체 육 과	7	7			7	7
미 술 과	3	3			3	3
음 악 과	4	11	1	1	5	12
실업,가정과	30	48			30	48
외국어과	32	82	6	10	38	92
교육,철학과	9	9	1	1	10	10
합 계	186	316	30	34	216	350

<표 II-13> 학교별 검인정별 현황

교 과 별	검 정		인 정		합 계	
	종류수	권수	종류수	권수	종류수	권수
국민학교			19	91	19	91
중 학 교	165	379	57	125	222	497
고등학교	186	316	30	34	216	350
계	351	695	106	250	457	938

* 자료 : 1957. 大韓出版年鑑社刊 韓國出版年鑑, 국정교과서 35년사에서 재인용.

새 국정 교과용 도서 편찬에 있어 각별히 유의된 점은 다음과 같다.⁵⁴⁾

<절차 면과 체제면>

- ① 편찬의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편찬 계획부터 편찬이 완료될 때까지 각과 해당 국정 교과용 도서 편찬 심의회로 하여금 내용 검토에 최선을 다한 점.
- ② 종래의 4·6판 체제를 5·7판 체제로 개선한 점
- ③ 한글과 한자의 활자를 개량하여 인쇄 체제와 선명도를 높여 시각적 효과와 독서 능력을 높이는데 배려한 점
- ④ 저학년용에는 색도 삽화와 사진을 되도록 많이 넣어 아동의 정서적 흥미와 시각적 효과를 높인 점

<내용면>

- ① 계통적 학습을 중심으로 하던 종래의 교과 학습의 배열을 버리고 아동 생활 중심의 단원 학습으로 배열한 점
- ② 종래의 소단원제를 지양하고 대단원제로 지정하여 학습의 생활화와 학습의 효과를 갖게 한 점
- ③ 종래의 지식과 암기를 강요하는 주입식 방향을 피하고, 학생의 생활과 경험을 토대로 하여 이해와 기능 및 태도를 기르는 방향으로의 전환에 힘쓴 점.
- ④ 아동 흥미 중심의 작업 단원을 되도록 많이 설정하고, 작업을 통하여 능동적으로 자기 생활과 경험을 심화 확충하는 방향으로 개선한 점.

한편, 실업 고등학교와 기타 전문과정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의 교과 시간 배당 기준표 및 교과 과정 내용 제정을 적극 추진하여 1958년 6월 5일자로 공포 실시함에 따른 교과서 개편도 추진하였다.

실업 고등학교는 농업, 공업, 상업, 수산 등에 걸쳐서 그 분과 과목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으며, 각 분과의 학생 수가 비교적 적은 관계로 교과서 간행이 지지부진인 상태에 있었다. 문교부에서는 이 방면 교과서의 중요성에 비추어 발간 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또 국정과 검인정의 두 길을 병용하여 각종 교과서 편찬 발행을 추진했다. 그러나, 책의 종류와 권수가 많은 관계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그 편찬이 여의치 않

54) 문교부, 문교개관(1958), pp. 147~149.

았다. 그 내용을 대략 들어보면, 각종 실업 교과서 총수는 현재 294종에 이르나 6·25 사변 직전에 편찬 예정이었던 약 100 여종의 교과서가 잿더미로 변하였다. 그래서 다시 원고의 집필, 발행, 검정 도서의 발행 장려 등에 노력을 기울였으나, 1958년 34종의 국정 교과서와 20종의 검정 교과서가 나왔을 뿐이었다. 그래서 다시, 200여 종의 발간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국가 예산이 넉넉지 못한 조건 아래 원고를 마련하려는 관계로 연차 계획을 세워서 매년 몇 권씩의 신간을 낼 뿐 이었다. 그리하여, 1958년도에 14종을 신규 편찬에 착수하여 연차 계획에 의하여 그 편찬을 적극 추진해 나갔다.

2) 교사용 지도서 편찬

교과용 도서의 개편이 일단락 됨에 이어 일선 교사의 효과적인 학습지도를 위한 지도 요령과 참고 자료 등을 제공하려고 국정 교사용 지도서의 편찬을 계획하여 제1차년 계획으로 1957년에 국민학교 저학년용 29종과 중·고등학교용 7종, 도합 36종의 편찬에 착수하여 33종을 편찬 완료하고 3종은 편찬 중에 있었다. 제2차년 계획으로 1958년에 국민학교 고학년용 21종과 중·고등학교용 7종, 도합 28종을 1959학년도 초에 배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편찬에 착수한 바 있는데, 1959년 현재의 교사용 지도서의 편찬 상황을 1958년 판 「문교개관」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⁵⁵⁾

<교사용 지도서 편찬상황>

가. 편찬 완료

· 국민학교용

국어 (1.2.3) 산수 (1.2.3) 사생 (1.2.3)

자연 (1.2.3) 보건 (1.2.3) 미술 (1.2.3)

음악 (1.2.3) 도의 (1.2.3) 실과(1.2.3)

이상 27종

· 중 고등학교용

중등 국어 (1.2.3), 중 고등 영어 (상, 하)

중등 공민 (전)

이상 6종

합계 33종

55) 문교부, 문교개관(1958), pp. 149~150.

나. 편찬 중인 것

· 국민학교용

국어 (4.5.6) 산수 (4.5.6) 사생 (4.5.6)

자연 (4.5.6) 보건 (4.5.6.) 미술 (4.5.6)

음악 (4.5.6.) 특별활동 (상, 하)

이상 23종

· 중 고등학교용

고등 국어 (1.2) 고등 공민 (1.2.3)

중 고등 영어 자료 (상, 하) 중등 특별활동 (전)

이상 8종

교사용 지도서의 편찬 계획과 병행하여, 국민학교 음악과와 국어 낭독의 더욱 정확한 지도와 효율적인 학습을 위한 음반의 편집 제작을 계획하고, 제1차년 계획으로 1957년에 저학년용의 음악과 지도용 음반 10매와, 국어 낭독 지도용 음반 5매, 도합 15매의 편집과 녹음 취입에 착수하여 각각 취입을 완료하였으며, 제2차년 계획으로 고학년용 음반 15매의 편집과 녹음 취입을 1958년에 완료했다. 이 음반과 교사용 지도서가 전국 각 해당 학교에 배부 활용됨에 따라 교육적 효과도 매우 컸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국민학교 교과용 도서를 아동의 어휘 발달 과정에 적합하도록 하고, 각 교과간의 횡적 연관성이 충분히 취해지도록 하기 위한 각 학년 별 및 학기별 기본 어휘책정의 기초 자료로서, 현 국민학교 각 교과서에 쓰인 어휘의 실태를 정확히 조사 파악하여 이를 여러 각도로 분석 검토할 계획을 수립하고, 1958년에는 제 1.2.3학년용 각종 국정 교과서에 대한 어휘 빈도 조사의 분석을 진행하여 거의 완료하였고, 제 4, 5, 6학년용은 1959년도에 조사 실시하였다. 이러한 기본 어휘의 조사분석으로 국민학교용 교과서 편찬의 획기적인 개선을 기할 수 있었다.⁵⁶⁾ 이 기본 어휘의 조사 분석에 대해 홍웅선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두었다.⁵⁷⁾

전쟁을 겪으면서 교과서를 편찬하고 발행하는 일 외에 외솔이 이루어 놓은 또 하나의 업적은 ‘우리말 어휘 사용 빈도 조사’를 해낸 일이었다. 평상시에도 하기 힘든 일을 피난지 부산의 협소한 사무실 한 구석을 빌어 상시 10명 내외의 임시 직원을 고용하여 몇 해 동안 계속되는 업무를 추진하였다는 것은 상식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다. 그렇게 수행된 우리말 어휘의 사용 빈도 조사 연구가 그 뒤에 널리 알려지지 못한 것 같아 여기에 그 내용을 간략히 적어 두기도 한다.

56) 문교부, 前掲書, p. 150.

57) 홍웅선, 편수국에서 만난 분들, 편수의 뒤안 길 제2집, 한국교육과정·교과서연구회, pp. 41~45.

① 목 적

우리말 어휘가 사용되는 반도의 실태를 조사하여, 과학적인 국어의 기본 형태를 파악하고, 우리말의 합리적인 사용을 꾀하며, 국어의 정상적인 발달 및 정화 운동을 목표로 하는 교과서 편집이나 계몽 활동에 활용하고, 나아가서는 국어학 연구의 참고 자료로 제공하려 한다.

② 방법과 범위

본 조사의 방법은 독일 F. W. koeding과 미국의 Edward L. Thorndike 및 일본의 국립 국어 연구소가 한 방법을 참고한 것이다. 어휘 조사는 산 말인 구어(口語)를 녹음한 것, 곧 실사회의 대중이 많이 모인 시장, 극장, 오락처, 술자리, 각종 대합실 등에서 몰래 녹음한 것을 가지고 조사하는 것이 이상적인 실태 조사 방법이라고 하겠으나, 본 조사에서는 시설과 비용 등의 사정이 허락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문장에 나타난 낱말의 단위를 쫓아 분석하여 조사하였다. 조사의 대상이 된 목적물들과 그 분량의 부문별 비율은 다음과 같다.

<표 II-14> 조사물의 부문별 비율(%)

구 분	부 문 별	계	비율(계)
초·중등 교과서	국어, 가사, 사회생활 -----30% 과학, 실업-----20%	50%	100%
일반 간행물	문학, 예술-----30% 신문, 잡지, 방송원고 국회 의사-----30%	50%	

이 비율은 편수국장 최현배, 장관 비서관 박창배, 편수과장 조병욱, 국어 편수관 최태호, 홍웅선, 어휘 조사 주간 이승화가 의논하여 결정하였다.

본 조사 사업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 A. 우리말 어휘 사용의 빈도 조사
- B. 우리말에 쓰인 글자의 빈도 조사
 - a. 한글 사용의 빈도 조사
 - b. 한자 사용의 빈도 조사
- C. 우리말 용언의 보조어간과 어미 사용의 빈도 조사

③ 경 과

본 조사 사무의 계획은 1951년 2월 20일부터 시작되었다. 기초 조사에 들어간 것은 1951년 4월 13일이었고, 기초 조사를 마친 것은 1952년 1월 30일이었다.

기초 조사는 임시 직원(조사원) 63명이 연 9,270일이 걸렸다. 그리고 다시 정리 사무에 들어갔는데, 그리하여 「우리말 어휘 사용의 빈도 조사」 정리 사무를 마친 것은 1953년 11월 초순이었다. 조사된 우리말 어휘의 총수는 56,485 낱말이고, 그 총 빈도는 2,218,737 빈도인데, 그 내역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15> 조사된 어휘 수와 그 빈도

첫 소 리	낱 말 수	빈 도
ㄱ	7,702	303,353
ㄴ	694	18,979
ㄷ	2,037	132,914
ㄹ	3,500	163,840
ㅁ	501	33,927
ㅂ	158	59,724
ㅅ	3,467	119,579
ㅇ	4,957	115,414
ㅈ	437	8,038
ㅊ	19	255
ㅋ	6,871	155,515
ㆁ	351	14,065
ㆁ	6,618	148,081
ㆁ	278	5,859
ㆁ	3,097	39,878
ㆁ	242	6,463
ㆁ	1,127	15,095
ㆁ	1,557	23,364
ㆁ	35	151
ㆁ	3,853	120,433
ㆁ	8,979	733,800
합 계	56,485	2,218,737

본 연구 조사의 보고서는 문교부 발행으로 다음의 2권으로 발간되었다.

- 제1편 「우리말 어휘 사용 빈도 조사」(4·6 배판 1000 페이지) 1956년 12월 21일
 제2편 「우리말에 쓰인 문자 빈도 조사」*(4·6 배판 240 페이지) 1955년 6월 29일
 * 「우리말 용언의 보조어간과 어미의 사용 빈도 조사」 포함.

이상과 같이 외솔이 광복 직후 편수국과 인연을 맺은 것은 일제 때의 일본말 교과서를 없애고, 광복 후 우리말로 된 교과서를 펴내려는 일념에서였으며, 사변 중에 다시 편수국장이 된 것은 전쟁으로 말미암아 발행이 중단된 교과서를 다시 발간하려는 생각에서였다. 그러한 점에 비추어 우리 나라의 교과서의 형태와 교과서 발행 정책의 기초를 다진 것은 바로 외솔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말 어휘의 사용 빈도를 조사한 것은 교과서 편찬에 있어 어휘를 적절히 골라 쓰는 데 활용되었을 뿐 아니라, 우리말 연구에도 크게 기여한 업적이었음을 밝혀 두는 바이다.

문교부는 국정교과서(주)가 설립되기 전에는 대한교과서(주)(중·고용 국정교과서), 대한인쇄회사(초등 도의), 교학도서(주)(초등교사용 지도서), 한국인쇄(주), 합동도서(주) 등에 교과서의 발행 또는 인쇄를 의뢰하였으나, 제1차 교육과정에 의한 학생용 교과서는 거의 전부 대한교과서주식회사(뒤에 국정교과서주식회사)로 하여금 발행토록 하였다. 그러나 국정 교과서(주)가 대량 생산시설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교과서 생산량이 워낙 방대하였던 관계로 국정교과서(주)는 초등 국정교과서의 일부를 한국인쇄(주)와 (주) 보진재, 서울 오프셋, 삼영사, 대한 지공, 한일 원색, 합동 도서 등의 인쇄소에 일부를 도급으로 인쇄를 의뢰하기도 하였다.⁵⁸⁾

58) 국정교과서(주), 35년사, 1987, pp. 545~546.

(3) 국정 교과서의 편찬·발행·공급

1) 국정 교과서 편찬

① 국민학교

「초등학교 교육과정(문교부령 제44호, 1955. 8. 1.)」에 의한 신·개편 교과서는 그 새해 첫해인 1955년에 국민학교 저학년(1, 2, 3학년)의 주요 교과 (국어, 산수, 사회생활, 자연)의 교과서가 개편되었고 그 이듬해에 고학년(4, 5, 6학년) 교과서가 개편되었다. 그러나 미술은 첫째(1955년)에 전학년용이 개편되었고, 음악은 1957년(저학년)과 1958년(고학년)이 개편되었으며, 신편되는 도의 교과서는 1957년에 전학년용이 편찬되었다. 그리고 사회생활 부도는 1959년에 개편 공급되었다.

이로써 광복 후 처음으로 체계적인 교과서 개편이 이루어져 초창기의 체계가 서지 않았던 교과서 편찬이 비로소 본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교과서 내용은 계통적 교과학습의 배열을 피하고, 생활 중심의 단원학습으로 전개하였으며, 소단원에서 대단원제로 제시하여 학습효과를 높이고 생활화를 꾀한 것이다. 주입식방식에서 생활경험에 의한 이해, 태도, 기능의 육성으로 전환하였으며, 흥미중심의 작업단원을 많이 넣어 경험의 심화확충을 꾀하는 등 생활중심, 경험중심의 단원 전개 형식을 취하였다. 이러한 교과서는 각과별로 둔 국정교과용도서 편찬심의위원회의 진지한 심의를 거침으로써 내용 개선과 학계, 교육계 등의 의견 반영 등이 이루어졌다.

이때의 교과서 편찬은 편수관 중심으로 진행되었는데, 편수관은 그가 지닌 학문적 소양, 교과교육에 대한 전문성도 높여야 하지만, 그 보다도 주위의 교과교육학자, 교사 등 전문성을 갖춘 분들을 두고서 수시로 이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 있어야 했다.

다른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때의 교과서 편찬을 주관하거나 원고를 집필했을 때의 편수관의 개인적 능력과 성의는 교과서 질을 좌우했다고 볼 수 있다. 제1차 교육과정에 의한 국정교과서의 편찬과 검정이 행하여지던 시기에 편수관실에 근무한 강우철 교수의 다음과 같은 회고기는 편수관이 교과서 내용을 쓰거나 다 듣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그리고 보람있는 일인가를 잘 말해준다.

드디어 나에게 어려운 지시가 내려졌다. 崔秉七 편수관이 나에게 5학년 ‘우리 나라의 종교’라는 단원을 써 보라는 것이다. 까다로운 단원을 초심자인 나에게 쓰라고 하는 것을 책임자의 궁여지책이기도 하지만, 당시로서는 커다란 모험이며 실험이었다. 나는 즉시 도서관을 찾았고, 관련 학자들도 방문하였다. 내가 제시하고 싶었던 명제는 ① “무종교(무신론)도 종교이다.” ② “무속(무

당) 신앙도 종교이다.” ③ “미신이란 믿는 사람에게 달렸다.” 라는 세 가지였으나, 학구적이고 논리적인 해답을 얻지 못한 채 단원 내용을 구성하여야만 했다. 국판 60쪽에 들어갈 내용은 대략 ① 종교란? ② 원시 종교 ③ 불교 ④ 유교 ⑤ 크리스티교(천주교, 기독교) ⑥ 민족 종교(대종교, 단군교 등)로 하였다. ……(중략)……

근래의 탐구 학습은 이런 정답이 여러 개 있는 논쟁거리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판단 하는데 좋은 수업 방법이지만, 당시의 교과서는 서술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지시적이었기에 한 마디 한 마디가 논리적인 모순이 없어야 했고, 정답은 하나만 있어야 했다. 나는 첫 번째 소단원 ‘나의 믿음’을 3개월에 걸쳐 열 번은 원고지를 옮겨 썼고, 두 번의 교열을 받은 다음에야 초고를 끝냈다. 나머지 각론 ②, ③, ④, ⑤, ⑥을 3개월 정도에 걸쳐 정리했던 기억이 난다. 어찌 보면 나는 1년 4개월의 편수관실 생활(사무 촉탁)에서 5학년 종교 단원 하나를 쓴 것 이외에는 사소한 잔심부름만 하다가 나온 셈이다.

나의 원고는 원형을 찾을 수도 없을 정도로 다시 수정·보완 끝에 교과서에 올려졌다. 그러나 대학으로 옮긴 다음에도 항상 그 단원이 마음에 걸렸다. 이듬해 경상남도 김해 동광 초등학교가 문교부 지정 사회과 연구학교 학교인 것을 알고, 그 곳에 지도 교수를 자청하여 5학년 교실에서 직접 수업도 해 보고, 교사들의 의견도 들어보는 등 전국적인 공개 수업을 마친 다음 다시 수정을 가하는 관심을 보였다.

제 1차 교육과정에 의한 초등학교 국정 교과서는 편수관의 개인적인 능력과 성의에 달려 있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교과서 내용을 결정하는 데도 원고료만 가지고 해 나 나가던 시대였다. 그렇게 짧고 부족한 한 단원의 밑글이 평생 동안 쓴 나의 어떤 원고보다도 귀하게 느껴지는 까닭은 내게 올바른 교과서관과 교육의 사명감을 심어 준 핵이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⁵⁹⁾

또, 편수관이 교과서 편찬에서 주위의 많은 전문 인사들의 협조를 받은 사례로는 당시 초등 국어를 담당했던 崔台鎬 編修官의 다음과 같은 회고기가 좋은 예가 되겠다.

서울로 올라온 문교부는 활기를 되찾았다. 金法麟 장관 시절이었다. 내가 소속되어 있는 편수국은 의무교육 6개년 완성 계획에 따라 교육과정 개정 심의 준비에 바빴고, 1953년 3월부터 시작된 심의는 55년에 제정돼 56년에는 벌써 초등국어 1, 2, 3학년용이 발행되고, 58년에는 6학년용까지 마쳤다.

첫 술에 배 부르라는 식으로 하여튼 나의 임무는 마쳤다. 종래의 계통적 학습을 위한 교과 학습의 배열을 벌리고 생활 중심의 단원학습을 노렸다는 점과, 지식과 암기를 강요하는 주입식 방향에서 말하고 듣고 읽고 쓰는 행동적인 경험을 요구했다는 점과, 특히 문학교육을 크게 강조했다는 점이 방향 전환의 특징이었다.

모든 교과서 편찬은 불과 6명의 정규 편수관과 6명의 촉탁으로 이루어졌다. 얼마나 행정적으로 미약했다는 것을 짐작할 만하지만, 나는 그 중에서도 복이 많은 편이라 수많은 문인들의 도움을 받았었다. 나의 사무실은 편수관실보다도 다방과 대포집과 여관일 때도 많았다. 그들의 의견과 비평도 들으면서 직접 초고의 집필도 부탁했었다. 그 때만 해도 어린이 상대의 문장을 쓰는 문인들이 드물었다., 더구나 어휘 선택에 있어서 단계적인 고려를 해야 할 교과서에는 손질할 곳이 너무나 많았던 것이다. 이런 가운데 소중한 존재는 姜小泉이었다. 그는 자신의 창작에 아무리 바빠도 나의 청탁에는 아끼지 않고 시간을 할애했다.⁶⁰⁾

59) 강우철, 5학년 ‘우리 나라의 종교’ 단원을 집필하였다. 교과서연구 31호, 한국2종교과서협회, 1998, pp. 75~77.

60) 崔台鎬, 나의 編修局 시절, 編修의 뒤안 길 제2집, 한국교육과정·교과서연구회, 1955, pp. 17~18.

이 때의 초등학교 국정교과서는 우리 나라 최초의 체계적인 교육과정(교과과정)에 의거, 전 교과와 교과서가 동시에 개편되는 큰 역사의 산물이었으나, 처음으로 전교과 교과서 동시 공급을 위해 체계적, 종합적으로 편찬하려 했던 국정 교과서가 가지는 허점도 있었다. 초등 자연과를 담당했던 崔榮福 편수관의 다음 회고글은 이를 잘 말해 준다.

내용 면에서는 교육과정 제정의 취지에 따라 종래의 지식 중심에서 생활 중심으로, 소단원제에서 대단원제로 그 틀을 바꾸어 가고, 학생의 생활과 경험을 토대로 학습과 연관짓게 하여 이해와 기능 및 태도가 균형 있게 가꾸어지도록 하였다.

그러나 학문에 비약이 없듯이, 또 새 교육과장에 의거 편찬한 교과서가 처음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학습 내용의 빈곤 및 부족함, 체계상의 미확립, 내용 수준의 난이도, 모호한 문장, 부적당한 용어(과학 기술 용어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래어 표기의 미통일, 맞춤법·띄어쓰기의 불통일 및 내용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교과서로서의 부적당한 부분이 외부로부터 지적 당했으며,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신문지상에서 자주 공격을 받았다.

나의 편수국 근무의 첫 임무는 이러한(이미 떠난) ‘자연’ 교과서의 내용을 바로 잡는 일이었다. 마침 미국 교육 사절단 중에 애담 스미스란 과학 교육 전문가가 있었는데, 그는 우리 나라의 이러한 실정을 알고 그의 모든 정성을 여기에 쏟았고, 또 이 일을 자기의 사명으로 알고 열심히 일했다. 그와 함께 이정찬(서울사대부속초등학교 교사, 후에 한양대학부속초등학교 교감 역임), 최병옥(서울시교육연구소 연구사, 후에 서울시 교장 역임)의 실무진과 학술면에서 정연태(물리, 서울사대 교수), 이근무(화학, 서울사대 교수), 이길상(화학, 연세대 교수), 김준민(생물, 서울사대 교수), 유경로(천문학, 서울사대 교수), 이대성(지학, 연세대 교수) 등으로 ‘자연’ 교과서 검토위원회를 조직하고 매주 토요일 오후 서울사대 부속초등학교에 모여 한 주일 동안 각자 연구·조사한 것을 발표하고 심의해서 시정할 것은 수정하였다. 이렇게 하기를 1년여 동안 계속하면서, 마침내 1959년 1학기용부터 연차적으로 교과서를 개편하였다.⁶¹⁾

② 중고등학교

중·고등학교의 국정 교과서는 중학 국어(1, 2, 3학년용 전·후기 6책), 고등 국어(1, 2, 3학년용 3책), 중학 도의(1, 2, 3학년용 3책), 그리고 중학교의 농업, 공업, 상업, 수산업(1, 2, 3학년용 12책)과 고등학교의 실업계 교과서들이었다.

이들 교과서의 담당은 중학 및 고등 국어 홍웅선, 중학 도의 이상선, 고등 도덕 김종빈 편수관이었다고 판단된다. 실업 교과서들은 각 교과 담당이 하나씩 맡아서 편찬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교과서들은 중학 도의만 대한문교서적(국정교과서의 구명)에서 담당했고 나머지는 거의 모두 대한교과서(주)에서 번각 발행했다.

대한교과서(주)에서는 주로 중·고등 국정 교과서만을 발행·공급하고 있었는데, 1956년 현재의 중·고등학교용 교과용 교과서 발행 실태는 다음 <표 II-16>과 같다.

61) 崔榮福, 4·6판을 국판으로, 생활중심으로 엮었다. 前掲교과서연구 31호, pp. 80~82.

<표 II-16> 중·고등학교 학교용 교과서 발행 실태(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56)

(정가 : 환)

구분	책이름	판형	면수	정가	구분	책이름	판형	면수	정가
중학교	중학국어 1-1	국판	154	185		농작물 두루풀이	국판	85	55
	중학국어 1-2	국판	184	200		농작물 따로풀이	국판	176	115
	중학국어 2-1	국판	154	200		농작물 육종 *	국판	118	75
	중학국어 2-2	국판	148	200		거름	국판	126	80
	중학국어 3-1	국판	154	185		축산가공	국판	120	75
	중학국어 3-2	국판	162	205		뽕나무가꾸기	국판	20	60
	중학농업 1	국판	222	223		과소가꾸기	국판	216	140
	중학농업 2	국판	216	216		수품만들기(상)	국판	156	105
	중학농업 3	국판	226	265		수의학	국판	234	150
	중학농업 1	국판	116	235		수리학	국판	130	120
	중학농업 2	국판	168	225		분석화학	국판	188	120
	중학농업 3	국판	172	285		무기화학 *	국판	188	120
	중학공업 1	국판	206	235		수산생물 *	국판	212	140
	중학공업 2	국판	228	225		수산제조학(1)	국판	176	115
	중학공업 3	국판	286	285		수산제조학(2)	국판	308	200
고등학교	중학수산 1	국판	206	235		누에치기	국판	148	90
	고등국어 1	국판	204	125		누에병리	국판	62	40
	고등국어 2	국판	204	110		우에씨받이	국판	58	35
	고등국어 3	국판	204	140		생실만들기	국판	56	35
	고등도덕 1 *	국판	204	145		방적법(1)	국판	88	60
	고등도덕 2 *	국판	204	155		방적법(2)	국판	102	60
	고등도덕 3 *	국판	204	160		송전 및 배전	국판	180	110
	축산총론	국판	142	90		폭발물	국판	130	80
	가축사양	국판	174	110		섬유소공업	국판	148	90
	과수원예 *	국판	198	180		금속재료학	국판	192	115
전문도서	수품만들기(하) *	국판	144	130		수력학과수력기계	국판	166	100
	삼림보호 *	국판	150	140		문화론	국판	80	60
	잠사화학 *	국판	138	125		농산가공 *	국판	150	95
	양잠 *	국판	190	185					

* 자료 : 李漢國 편, 「4290년판 出版年鑑」, 서울 : 大韓出版年鑑社. 1957, pp. 251~253(中·高等學校國定教科書目錄) 참조한 大韓教科書史(1948~1998)에서 재인용.

<참고> 위의 표 중 *표 도서는 1956학년도용으로 신편된 것(12책)임.

국정으로 편찬·발행되는 실업계 교과서의 교과서들은 그 수요가 적어 생산부수가 적게 됨으로써 검정 교과서로는 수지를 맞추기 힘든 것이었다. 그래서 국정 교과서로 생산하지만 생산부수가 적어 정가 인상 요인이 컸다. 그래서 국어, 도덕 등과 같은 대량생산 교과서에서 나오는 이익으로 커버하는 정책을 쓰게 된다. 즉, 생산부수가 많은 보통 교과서의 교과서에서 나오는 이익으로 실업계 교과서의 교과서의 정가 인상 요인을 억제하여, 실업계 교과 교과서가 비싸지지 않도록 했는데. 이러한 관행은 오늘날 까지 이어져 오게 된다.

실제로 중·고등학교 국정교과서 번각 인쇄를 주로 하던 대한교과서(주)가 1953년부터 1960년 사이에 모두 104책의 신·개편된 교과서를 발행했다. 이를 보통교과의 교과서와 실업계 교과의 교과서로 나누어 보면 17책대 87책으로 벌어져 총 104책 중 84%가 실업계 교과서가 된다. 당시 대한교과서(주)가 발행한 고등학교의 실업계 교과서는 평균 800부 정도였다. 이 대부분이 국어, 도덕 등과 같이 보통 교과서를 새로이 번각·발행하게 되었으면서도 어려움은 여전했다는 것이다.⁶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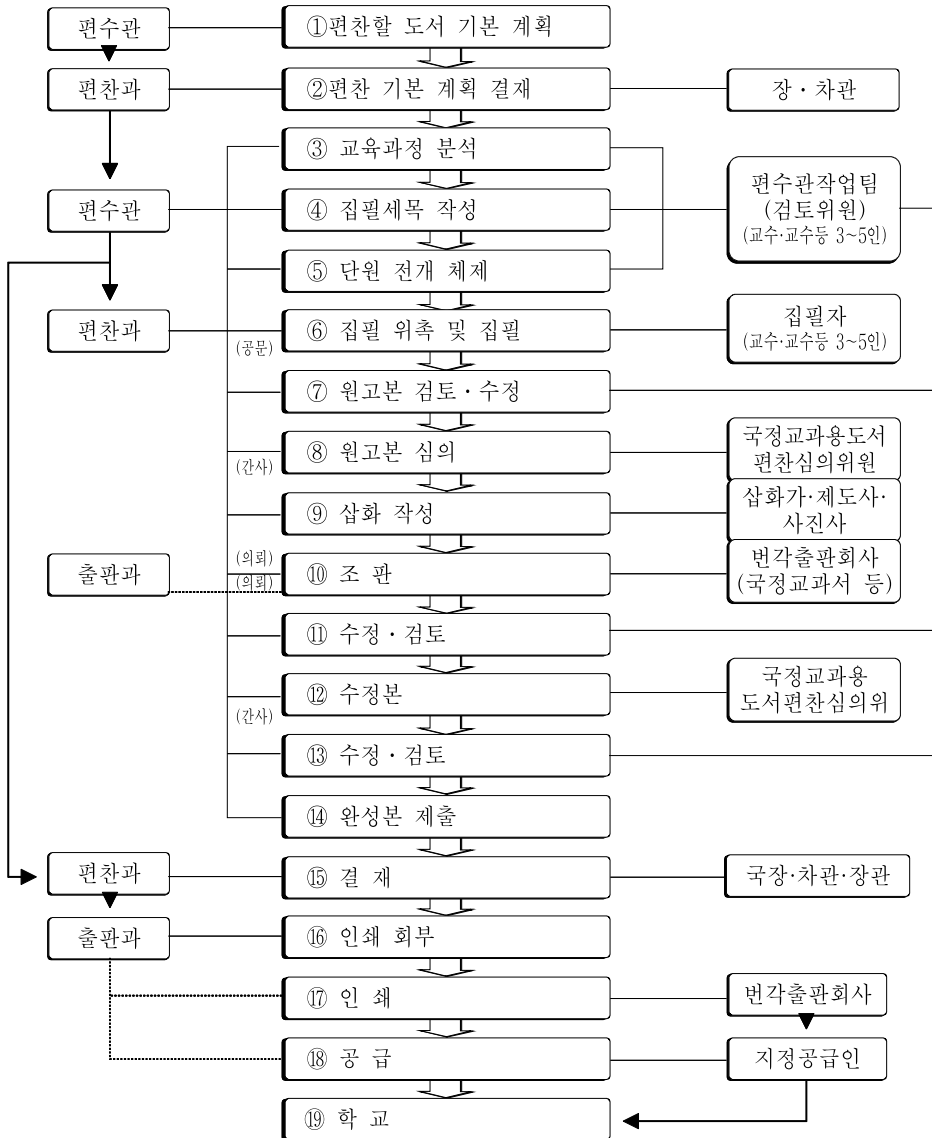
62) 대한교과서(주), 大韓敎科書史(1948~1998), 1998. p. 297.

2) 국정 교과서의 발행, 공급

제1차 교유과정기의 국정 교과서의 편찬·발행 과정에서 문교부 편수국의 편수관, 편수과, 발행고, 집필자, 검토위원, 심의위원, 번각출판회사 등이 각각의 과정에서 그 수업을 다하였다. 그 과정을 그림으로 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공문)

<표 II-16> 중·고등학교 학교용 교과서 발행 실태(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56)



국정 교과용 도서의 편찬·출판·발행 과정을 위 그림의 흐름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편찬 과정

편찬 과정은 전적으로 편수관 주도로 이루어졌다. ①의 편찬할 도서의 기본 계획은 교과과정 공포에 따른 신·개편 대상 교과서의 이름과 쪽수, 그리고 편찬의 세부 계획 등에 관한 개략의 계획이다. 이것은 편찬과에서 정하는 판형, 활자 등의 외적 체제에 관한 것과 함께 ②의 편찬 기본 계획 결재의 주 내용이 된다.

편찬과에서는 각 교과서의 편찬 기본 계획을 취합하여 일괄하여 장관의 결재를 받는다. 이 기본 계획에 따라 편수관은 해당 교과서의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집필 세목과 단원 전개 체제를 정하게 되는데, 이 작업은 편수관과 공·사적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교사, 교수 등으로 구성된 작업팀과 함께 하게 된다. 이 작업의 결과로 나온 집필 세목과 단원 전개 체제는 교과서 편찬에 관한 일종의 설계도가 되는데, 집필자로 위촉된 분들은 이것을 가지고 집필하게 된다.

집필된 원고는 모아져서 등사 원지에 옮겨 쓰여져서 등사된다. 등사된 원고를 가지고 원고본 심의를 하고 내용이 어느 정도 확정되면 조판을 의뢰하고 삽화 과정에 들어간다. 심의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한 수정본이 완성되면 다시 심의회에 회부한다. 이 심의 결과를 반영하고 다시 수정, 검토 작업을 한 결과는 인쇄에 보내어져 수정 조판 또는 재조판하게 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재조판본을 가지고 윤문, 종합 검토를 거치고 수정 조판이 되면 결재본을 만들게 된다. 결재본이 만들어질 때까지의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편수관의 소관 사항이고, 다음의 절차는 편찬과 소관의 결재, 출판과 소관의 출판, 공급 과정이 된다.

② 발행 과정

출판과(발행과)로 넘어온 결재본은 번각출판회사로 보내어져 인쇄하도록 한다. 번각출판사를 지정하는 것은 기존의 번각출판권 부여 관행과 출판사의 인쇄·출판 능력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장관이 지정하는데, 제1차 교육과정에 의한 국정 교과용 도서는 정부 지시로 1952년 7월에 창립된 대한문교서적주식회사(1961년 8월 1일 국정교과서로 명칭 바꿈)와 주식회사 문화당을 모태로 하여 1948년 설립된 대한교과서 주식회사에게 대부분의 발행권이 주어졌다. 대한문교서적(주)은 초등학교용 교과용 도서 거의 전부와 일

부 중·고등학교용까지 번각 발행했고, 대한교과서(주)는 중·고등학교 도의(도덕) 교과서와 중학교 국어(1953년 발행, 1958년 개편 발행), 고등 국어(1953년 발행) 등과 실업계 교과용 도서 등 주로 중·고등학교용 국정 교과서를 번각 발행했다.

문교부가 번각 발행회사에게 교과용 도서의 번각 발행권을 부여할 때는 ① 다짐장(생산 및 공급 계획 보고서) ② 사업 계획서 ③ 시설 현황서 ④ 자산 및 부채 일람표 ⑤ 업무 현황서 ⑥ 정관 ⑦ 등기등본을 제출하도록 하여 교과서의 적기 생산, 공급을 위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한 것으로 보인다.⁶³⁾

대한문교서적(주)은 제1차 교육과정기에 의한 교과서 편찬이 시작되기 직전인 1954년에 UNESCO와 UNKRA의 원조를 받아 대방동에 국정교과서 인쇄 공장을 짓고 활판 운전 인쇄기, 오프셋 매엽 인쇄기 등을 일본으로부터 도입하여 교과용 도서의 대량 인쇄 체제를 갖추고 있었다. 그래서 초등국정교과서 거의 전량을 대한문교서적이 번각발행권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워낙 방대한 수량에 달하는 초등 국정 교과서의 전량을 적기에 생산할 수 없어 한국인쇄주식회사와 보진제, 서울 오프셋, 삼영사, 대한지공, 한일원색, 합동도서 등의 인쇄소에 일부를 도급을 인쇄를 의뢰하기도 하였다.⁶⁴⁾

이 당시 교과서의 체제는 4·6 배판에서 5·7판형으로 개선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량된 활자를 처음으로 사용하였다(<표 II-17> 참조). 개량된 활자는 당시의 교과서의 질을 높이고 가독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

<표 II-17> 신·구 교과서 비교표

구 분		구 교 과 서	신 교 과 서	비 고
책의 크기		4·6판	5·7판 (국판)	
용 지	표지 본문	마분지(후·박2종) 갱지	백상지(모조지) 갱지(일부 저학년용은 백상지)	
활 자	저학년 고학년	1, 2학년 3호 3학년 이상 4호	1학년 32급(사식자) 2학년 28급(사식자) 3학년 16pt 활자 4학년 이상 14pt 활자	활자개량으로 신교과서 체의 활자는 수려함
인 쇄	표지	저학년 단색 고학년 단색	저학년 원색 고학년 단색	
제본		침철 클로즈	침철 클로즈	

자료 : 국정교과서 35년사. pp. 540~541.

63) 대한교과서 50년사(1958~1998), pp. 397~313.

64) 국정교과서 35년사, 1987, pp. 538~546.

개발된 활자가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국정교과서 주식회사 35년사에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⁶⁵⁾

1945년 9월 당사가 영등포구(현 동작구) 대방동에 국정교과서의 인쇄공장을 건립하고 유네스코와 운크라의 원조기금으로 인쇄시설을 도입할 당시 우리 나라에서 자모관계 권위자의 한 사람이었던 박정래, 이홍용을 사원으로 채용하여, 1954년 도입기계의 인수 및 기술연수를 위해 5명의 인수단에 포함하여 일본에 가게하여 약 3개월 간에 걸쳐 기술연수를 받게 하였으며, 인쇄시설과 더불어 당시 우리 나라에서는 최초로 자모조각기 4대를 도입하였다.

당사에서 자모조각기를 도입하기 전 우리 나라에서는 자모제작을 전태법이라 하여 활자에(활자가 없는 자는 목각으로 만들어) 밀랍을 덮어 흑연칠을 한 다음 거기에 동도금을 하여 만들었다.

이렇게 원시적인 방법에 의하여 자모를 만들었던 관계로, 활자는 글자의 획이 잘 나타나지 않았고, 선도 고르지 못하였다.

당사는 인쇄시설도입과 더불어 인쇄공장에 연구실을 설치하고, 새로 도입된 기계의 기술연구 및 기능공 양성을 도모하는 한편, 연구팀을 구성하여 본격적인 활자개발사업에 착수하여 왔다.

이렇게 하여, 1955년도까지 자모용원도를 작성하여 자모를 완성하고, 저학년용교과서부터 새로 개발된 자모로 활자를 주조하여, 1956년도 1학년 2학기용 교과서부터 신활자를 사용하여 명조체를 주축으로 고딕체, 외래어체 등을 혼합, 인쇄의 선명도를 높여 시각적 효과는 물론, 독서능률을 향상시키는 데도 큰 도움을 주었다.

교과서의 생산은 각 회사별로 매학기 개시와 동시에 예상 소요 부수를 추정하여 다음 학기 개시 3개월 전까지는 각 학교로부터의 주문서에 의하여 예상 부수를 조정하면서 각 교과서의 5~10% 정도의 주문 외의 예상 부수를 추가하여 생산하여 추가 수요에 응하도록 하였다.

③ 공급 과정

제1차 교육과정기의 국정 교과서의 공급은 대한문교서적(주)나 대한교과서(주)의 지정 공급인에 의해 행하여졌다. 즉 회사가 지정하는 지정 공급인은 전국 시, 군, 도 단위로 일정한 학생수를 정하여 공급소의 수를 정하고 그 공급소의 구역에서 회사가 제시하는 조건에 맞는 이를 지정 공급인으로 지정했다. 공급소의 수는 200여 개소 이상이었는데, 국정교과서(주)의 지정 공급소가 256개소(1960)이었고,⁶⁶⁾ 대한교과서(주)가 210여 개소

65) 上掲書, pp. 541~542.

66) 申昌鉉, 등불 12월 순년호, 대한문교서적(주), 1960, pp. 31~32.

(1957년)이었다.⁶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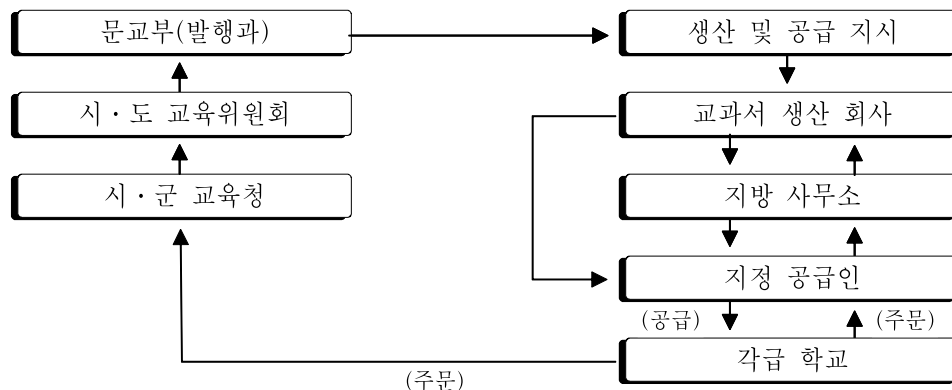
대한문교서적(주)의 경우 공급소의 지정 공급인은 서적상 또는 문방구점을 경영하고, 신원이 확실하며 충분한 자력을 가진 자 중에서 지정했는데, 이 지정 공급인에게는 회사와 신분 관계를 맺어 그 업권을 보장받고 회사에서 정한 공급규정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었다. 지정공급이 하는 일은 각 학교로부터의 교과서 주문 부수를 받아 취합하여 서울, 대구, 대전, 부산, 광주, 이리에 있는 지방 사무소에 보고하여 교과서의 적기 생산이 되는데 기여하고, 공급되어 온 교과서를 적기에 학교에까지 공급하며, 교과서 대금을 적기에 받아 회사로 보내는 일이 주였다. 교과서의 주문 부수와 조사, 보고 체계는 제1차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 공급 시기를 전후하여 각급 학교에게까지 보고되도록 하여 번갈출판사에게 계획 생산이 되도록 하였다. 그 이전에는 지방의 지정 공급인이 학교로부터의 조사서를 받아 회사로 보고하는 체계였다.

교과서의 공급 시기는 대체로 늦어도 학기 개시 1개월 전에 공급을 완료한다는 규정을 공급 규정에 두고 있다.

공급 수수료는 대개 10%에서 15%까지 지급되었고, 회사에서 공급소까지의 운송비는 모두 본사에서 부담하였다.

그러니까 공급 과정은 회사의 인쇄 공장에서 생산된 교과용 도서를 판매과에서 각 지방 사무소로 보내고, 각 지방 사무소에서는 그 관할 지정 공급인에게 학기 개시 1개월 전까지는 발송을 완료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급 과정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II-5> 국정 교과서 공급과정



67) 대한교과서 50년사(1948~1998), p. 313.

(4) 검인정 교과용 도서의 편찬, 발행, 공급

1) 검인정 교과용 도서의 편찬

① 검인정 교과용 도서의 검정 경위

제 1차 교육과정에 의한 검인정은 앞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고등학교의 국어, 도의(도덕), 실업계 교과 교과서를 제외한 대부분의 교과용 도서를 대상으로 행해졌다. 이 검인정은 종래와 같은 수시로 제출하고 검정해 주는 수시 검정이 아니라 일괄 제출, 일괄 심사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처음에는 연차적 계획하에 점진적 개편 방안도 있었으나, 조속한 시일 내에 새교육 내용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될 불가피성과 일선 교육자들의 조속 개편 실시의 요망도 있어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일시에 실시하기로 결정을 보았다.

그 이유로는 검인정 교과용 도서는 개편 출판이 모두 일반 저자와 교과서 출판업자들이 담당할 것이며, 문교부는 소정의 규정에 의해 사무적으로 끝나는 것과 동시에 전면 개편이 가능하다고 보았고, 저자나 출판사 자체로도 이것을 은연중 원하였다. 그러나, 이 개편 사업에 있어 과연 얼마나 많은 교과서가 신청될지, 또 교과서의 질적 향상이 어느 정도인가가 큰 주목이 되었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예상외의 많은 신청이 있었고, 질적으로도 우수한 성과를 거두게 되었던 것이다.⁶⁸⁾

일괄 제출, 일괄 검정은 한꺼번에 일을 몰리게 함으로써 당시의 많지 않던 교과서 편집, 인쇄 전문가들을 구하기 힘들게 했을 뿐 아니라, 작업 일정 자체도 지나치게 짧아 질 좋은 교과서의 편찬을 어렵게 했다. 즉 1955년 8월 1일 교과과정 발표와 동시에 검정 방침을 발표하고, 10월 6일 신청요령(사열기준), 발표, 11월 30일 접수 마감이라는 극히 짧은 기간 안에 교과서 저작을 끝내려는 무리한 일정에 대해 비판이 있었다. 1956년 1월 12일자 동아일보 사설을 보면 ① 교수요목(교과과정) 발표 후 검인정 신청까지의 기간이 촉박하여 저술 제작에 소홀했고 ② 검정 기간도 40일 밖에 되지 않아 심사가 형식에 흐를 우려가 있으며, ③ 교과서의 가짓수가 교과별로 너무 많아 판매 경쟁을 야기시켜 일선 교육계를 흐리게 한다는 등 검인정 과정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⁶⁹⁾

이러한 무리한 일정 때문에 접수 마감을 보름이 늦은 12월 15일로 연기하기도 하였으나 1월 31일까지 사열 업무를 마치고, 검인정 인가에 관한 모든 사무를 1956년 3월 1일까지 완료하도록 하는 큰 일정은 별 차질 없이 진행되었다.

68) 문교개관(1958), pp. 153~154.

69) 대한출판문화협회 40년사, pp. 77을 참조한, 민병덕, 교과서 제도의 정립과 교과서 출판, 교과서 연구 제9호, 한국2종교과서협회, 1991, pp. 84~92.

<표 II-18> 제1차 교육과정에 의한 검·인정 교과용 도서의 신편 범위(1956)

과 목	중 학 교 용	고 등 학 교 용
국 어	작문(13종), 문법(5종), 한문(12종)	작문(5종), 문법(4종) 한문(11종), 고문(5종)
사회생활	공민(24종), 국사(10종), 세계사(12종) 우리 나라 지리(13종) 다른 나라 지리(9종)	공민(14종), 국사(4종), 세계사(7종) 인문지리(10종)
수 학	수학(20종)	수학(12종), 해석 및 기하(15종)
과 학	생물(16종), 물상(13종)	생물(12종), 물상(10종), 화학(15종)
음 악	(13종)	(7종)
미 술	(6종)	(7종)
글씨본	(3종)	(3종)
가 정	(3종)	(3종)
농 업		농업(4종), 농업(실업계19종)
상 업		상업(3종), 상업(실업계8종)
교 육		<사범학교>(10종)
외국어	영어 독본(31종), 영어 문법(5종) 영어 회화(1종)	영어독본(20종), 영어 문법(6종) 독일어(13종), 불어(2종), 중국어(3종)

자료 : 이근술, 출판 20년사(교과서편), 서울 : 출판문화사, 1966, p. 12 (대한교과서사(1948~1998), p. 300에서 재인용)

이때 출판계는 다른 어떠한 출판물보다도 교과서가 실패가 없고 영업상 채산도 맞는 출판물이라 판단하고 교과서 제작이 가능한 출판사는 모두 검인정 교과서를 제작하여 제출하여 했다. 그러나 당시의 학문적 소양을 지닌 교수나 교사의 수가 많지 않아 우선 저자 구하기가 힘들었고, 저자가 구하여져도 이를 편집할 전문 편집 인력이 많지 않았다. 더구나 인쇄 사정은 좋지 않아 검인정 도서를 출원한 출판사 중에서 인쇄 시설을 갖춘 출판사는 민중서관, 장왕사, 백영사 정도였을 정도였다고 한다. 그래서 충원되는 심사본은 타자본이거나 필경으로 등사한 프린트본이었다. 지금의 사정을 감안하여 생각해 보면 타자를 치거나 필경으로 써서 등사했거나 모든 것을 손 작업을 거쳐야 하던 시기에 그렇게 짧은 기간 안에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전 검정 대상 교과와 교과서를 만들어 출원할 수 있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었다. 그 때의 저자 구하기 힘들었던 사정과 수작업으로 검정본을 만들던 사정을 엿볼 수 있는 회고담을 소개한다.

저자 쟁탈전

외부에서도 검인정 교과서가 잘 된다는 소문이 나니 저자 쟁탈이 벌어졌다. 대동문화사의 S대 R씨의 ‘수학’ 검인정 교과서는 단연 판매 부수가 1등이었다. 그래서인지 D출판사는 인쇄 시설이 크고 초등학교 전과 지도서의 원조 출판사인데도, 이 수학책의 저자를 3천만 원의 착수금으로 모셔갔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각 교과서 업자는 자기 회사의 저자가 흔들릴까 봐 긴장 중에 있었는데 어느 날 나는 ‘가정’ 저자 맥을 방문하였더니 선생님은 부재이시고, 문 밖에 검은 지프가 서 있었다.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D출판사와 K사장이 그 집에서 나왔다. 나는 화가 치밀어 “K사장 이러 기요?” 하였더니 그는 “아무 것도 아니다.”라고 잡아떼면서 “안 계셔서 만나지를 못했다.”는 것이었다. “이런 식이면 나도 가만히 아니 있겠오.”하고 눈을 붉혔다.

그런데 D출판사 K사장은 끈질기게 ‘가정’ 뿐 아니라 ‘세계사’ 조의설 박사까지 빼앗아 가려고 가진 모략과 조건 제시를 하였다. 조의설 박사 교과서는 1948년 6월 장왕사에서 출판하여 단연 호평을 받은 책이어서 매상도 최고였다. 조 박사가 K사장에게 거절한 이유는 ① 여지껏 장왕사가 열심히 하고 있고, ② 내가 유학할 때 매월 생활비를 집에 보내 주었고, ③ 출판사를 옮길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다. 참으로 고마운 분이다. 그 후에도 ‘가정’ 저자를 모셔 가려고 하였다. 즉, 표 교수를 D출판사 연대 최 교수님쪽으로 모셔다 하나로 묶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표 교수는 반대로 연대의 최이순 교수님과 이기열 교수님을 모셔 와서(당시 표경조 교수가 대한가정학회 회장이었다.) 이쪽으로 합치자는 얘기였다. 그래서 나는 조의설 박사님을 통해 최이순 교수님께 그 뜻을 전하고 우리가 모셔 오려고 했다(최 교수는 그 때까지 교과서는 안 쓰셨다). 조 박사와 최이순 교수 방에서 대화 중인데 누가 들어오는 게 아닌가. 그 분이 바로 D출판사의 K사장이었다. 결국 이 협상은 깨지고 원래 소속 회사에서 발행하기로 하였다.⁷⁰⁾

이대의 : 56년 교과서가 바뀔 때 과장이 최태호 씨였습니다. 내가 가정책을 접수시킬 때 일입니다. 중학교 1·2·3년, 고등학교 1·2·3년, 요리 실습 등 7권입니다. 가령 의생활 부분에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버전이 약간 다릅니다. 그 때는 삽화를 그려 동판을 떼서 인쇄판에 하나하나 못을 박아 모아서 찍어냈습니다. 전지에 찍어 낸 것을 버선, 스커트, 저고리 등등을 중·고용으로 분리해 일일이 붙여야 했습니다. 문교부에 6권 제출하지만 저자용, 편집용까지 하려니까 적어도 1책에 10권씩을 만들어야 합니다. 7종×10권이면 70권입니다. 접수 장소에서 하루 종일 붙였는데도 다 못 하니까 다음 날 출근 시간인 9시까지자는 가져오라는 겁니다. 지금은 상상도 못할 정도입니다. 최태호 과장은 출판사의 복잡한 작업 과정을 잘 알았기 때문에 편리를 봐 준 것입니다.⁷¹⁾

1955년 12월 15일 검인정 교과용 도서 28개 과목 총 753책 출원을 마감한 문교부는 바로 심사(내용 사열)에 들어갔다. 심사는 교과(목)별로 학자, 교육가, 편수관으로 구성된 4~5인의 심사위원이 심사하여 1월 31일까지 실질적 심사를 끝내고 행정적 절차를 거쳐 그중 384건 747책이 검인정에 통과되어 1956년 2월 15일에 발표되었다.

문교부는 내용 사열에 합격한 검인정 교과서에 대하여 다시 형식 사열(체제 사열 : 판

70) 이대의, 교과서 저자 쟁탈전이 심했다. 교과서연구, 제31호, 한국2중교과서협회, 1998, p. 84. 이 내용은 제1차 교육과정기의 편수행정의 발자취 특집으로 실린 글이지만, 1955년 검인정 출원 당시가 아니고 그 후의 일이 아닌가 생각된다(필자).

71) 이경훈, 대담 : 교과서 출판사 원로에게 듣는다. 교과서연구 제10호, 한국2중교과서협회, 1991. 10., p. 114.

형, 활자 행수, 체제, 제본 등)을 한 후, 수정 지시된 것의 수정 여부를 검토하여 최종 허가 절차를 취하였다.

이리하여 제1차 교육과정에 의한 검인정 교과서에 대한 검인정 허가에 모든 사무를 1956년 3월 1일 이전에 완료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여 일괄 접수, 일괄 검정에 의한 검인정은 완료하게 되었다. 그 이듬해부터 질 좋은 교과서의 계속 공급이라는 명분으로 당분간 계속하여 수시 검정이 행하여졌다.

② 교과용 도서 검인정 종별 및 단위

1955년 8월 1일 「교과과정」의 공포와 함께 교과용 도서의 검인정 방침을 발표했던 문교부는 동년 10월 6일에 총 128개항의 ‘검인정 교과용 도서의 사열 기준’을 발표했다. 그 중에 각 교과목 중 어느 것을 검정이나 인정으로 할 것인가, 그리고 각 교과목의 교과목 단위로 검정할 것인가, 학년별 혹은 영역별로 검정할 것인가 하는 ‘검인정 종별 및 검인정 단위’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⁷²⁾

교과용 도서 검인정 종별 및 단위

<국어과>

1. 중학교 국어과 학생용 정규 교과서는 국정으로 한다.
2. 중학교 국어 과정에 준거하여 그 내용을 부분적으로 보충 심화하는 학생용 도서는 인정으로 한다.
3. 고등학교 국어(1)의 학생용 정규 교과서는 국정으로 한다.
4. 고등학교 국어 중(2) 한문 과정에 의거한 학생용 교과서는 검정으로 한다.
한문 과정에 의거한 학생용 교과서는 학년을 단위로 검정한다.
5. 고등학교 국어 (1) 및 국어(2)에 준거하여 그 내용을 부분적으로 보충 심화하는 학생용도서는 인정으로 한다.

<사회 생활과 및 사회과>

1. 중학교 사회 생활과 과정에 의거한 학생용 교과서는 검정으로 한다.
2. 중학교 사회 생활과 과정에 의거하여 종합적으로 저술된 학생용 교과서는 학년을 단위로 검정한다.

72) 문교개관(1958), pp. 155~159.

3. 중학교 사회 생활과 각 부분(국민, 지리, 역사) 과정에 의거한 학생용 교과서 중 학년별로 저술된 것은 학년을 단위로 하여 검정하고 그렇지 아니한 것은 각부분 단위로 검정한다. 단 지리 부분은 ‘국토지리’와 ‘세계지리’를 단위로 검정한다.
4. 중학교 사회 생활과 과정에 준거하여 그 내용을 부분적으로 보충 심화하는 학생용 도서는 인정으로 한다.
지도첩은 인정으로 한다.
5. 고등학교 사회과 과정에 의거한 학생용 교과서는 검정으로 한다. 단 고등학교 사회과도덕의 학생용 정규 교과서는 국정으로 한다.
6. 고등학교 사회과 일반 사회의 과정에 의거한 학생용 교과서는 학년을 단위로 검정한다.
7. 고등학교 사회과 중 일반 사회 및 도덕을 제외한 각 과목의 과정에 의거한 학생용 교과서는 국사, 지리, 세계사를 각각 단위로 검정한다
8. 고등학교 사회과 과정에 준거하여, 그 내용을 부분적으로 보충 심화한 학생용 도서는 인정으로 한다.
지도책은 인정으로 한다.

<수학과>

1. 중학교 수학과 과정에 의거한 학생용 교과서는 검정으로 한다.
2. 중학교 수학과 과정에 의거한 학생용 교과서는 학년을 단위로 검정한다.
3. 중학교 수학과 과정에 준거하여 그 내용을 부분적으로 보충 심화한 학생용 도서는 인정으로 한다.
4. 고등학교 수학과 과정에 의거한 학생용 교과서는 검정으로 한다.
5. 고등학교 수학과 과정에 의거한 학생용 교과서는 ‘일반수학’ ‘해석’ ‘기하’를 단위로 검정한다.
6. 고등학교 수학과 과정에 준거하여 그 내용을 부분적으로 보충 심화한 학생용 도서는 인정으로 한다.

<과학과>

1. 중학교 과학과 과정에 의거한 학생용 교과서는 검정으로 한다.
2. 중학교 과학과 과정에 의거하여 종합적으로 저술한 학생용 교과서는 학년을 단위로 검정한다.

3. 중학교 과학과 과정에 의거하여 종합적으로 저술한 학생용 교과서는 ‘생물분야’와 ‘물상분야’로 검정하되, 각 분야 공히 학년을 단위로 검정한다.
4. 중학교 과학과 과정에 준거하여 그 내용을 부분적으로 보충 심화한 학생용 도서는 인정으로 한다.
5. 고등학교 과학과 과정에 의거한 학생용 교과서는 검정으로 한다.
6. 고등학교 과학과 과정에 의거한 학생용 교과서는 ‘물리’ ‘화학’ ‘생물’ ‘지학’을 단위로 검정한다.
7. 고등학교 과학과 과정에 준거하여 그 내용을 부분적으로 보충 심화한 학생용 도서는 인정으로 한다.

<체육과>

1. 중학교 및 고등학교 체육과 과정에 의거한 학생용 교과서는 검정으로 한다.
2. 중학교 및 고등학교 체육과 과정에 의거한 학생용 교과서는 학년을 단위로 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단위로 검정한다.
3. 중학교 및 고등학교 체육과 과정에 준거하여, 그 내용을 부분적으로 보충 심화한 학생용 도서는 인정으로 한다.

<음악과>

1. 중학교 및 고등학교 음악과 과정에 의거한 학생용 교과서는 검정으로 한다.
2. 중학교 및 고등학교 음악과 과정에 의거한 학생용 교과서는 학년을 단위로 검정한다.
3. 중학교 및 고등학교 음악과 과정에 준거하여, 그 내용을 부분적으로 보충 심화한 학생용 도서는 인정으로 한다.

<미술과>

1. 중학교 및 고등학교 미술과 과정에 의거한 학생용 교과서는 검정으로 한다.
2. 중학교 미술과 과정에 의거한 학생용 교과서는 미술(도화와 공작)과 서예로 검정하되 각각 학년을 단위로 검정한다.
3. 중학교 미술과 과정에 준거하여, 그 내용을 부분적으로 보충 심화한 것은 인정으로 한다.
4. 고등학교 미술과 과정에 의거한 학생용 교과서는 ‘도화’ ‘공작’ ‘서예’로 검정하되, 각각 학년을 단위로 검정한다.

5. 고등학교 미술과 과정에 준거하여 그 내용을 부분적으로 보충 심화한 학생용 도서는 인정으로 한다.

<실업 가정과>

1. 중학교 실업 가정과 중 농업, 공업, 상업, 수산의 학생용 정규 교과서는 국정으로 한다.
2. 중학교 실업 가정과 중학교 가정 과정에 의거한 학생용 교과서는 검정으로 한다.
3. 중학교 실업 가정과 가정 과정에 의거한 학생용 교과서는 학년을 단위로 검정한다.
4. 일반 고등학교 실업 가정과 과정에 의거한 학생용 교과서는 검정으로 한다.
5. 일반 고등학교 실업 가정과 과정에 의거한 학생용 교과서는 농업, 공업, 상업, 수산, 가정으로 검정하되, 각각 학년을 단위로 검정한다.
6. 중학교 및 고등학교 실업 가정과 중학 가정에 한하여, 그 과정에 준거하여 그 내용을 부분적으로 보충 심화한 학생용 도서는 인정으로 한다.

<교육 및 철학과>

1. 고등학교 및 사범 학교의 교육 및 철학과 과정에 의거한 학생용 교과서는 검정으로 한다.
2. 고등학교 및 사범 학교의 교육 및 철학과 과정에 의거한 학생용 교과서는 ‘교육사’ ‘교육심리’ ‘교육원리’ ‘교육 방법’ ‘철학’ 및 ‘논리’를 단위로 검정한다.
3. 고등학교 및 사범 학교의 교육 및 철학과 가정에 의거하여 ‘교육사’ ‘교육심리’ ‘교육원리’ ‘교육방법’을 종합하여 저술한 학생용 교과서와, ‘철학’ ‘논리’를 종합하여 w 저술한 학생용 교과서는 각각 이를 단위로 검정한다.
4. 고등학교 및 사범학교의 교육 및 철학과 과정에 준거하여 그 내용을 부분적으로 보충심화한 학생용 도서는 인정으로 한다.

<외국어과>

1. 중학교 영어과 과정에 의거한 학생용 교과서는 검정으로 한다.
2. 중학교 영어과 과정에 의거한 학생용 교과서는 학년을 단위로 검정한다.
3. 중학교 영어과 과정에 준거하여, 그 내용을 부분저공로 보충 심화한 학생용 도서는 인정으로 한다.
4. 고등학교 외국어과 과정에 의거한 학생용 교과서는 검정으로 한다.
5. 고등학교 외국어과 과정에 의거한 학생용 교과서는 영어, 독일어, 불란서어, 중국

어로 검정하되, 각 학년을 단위로 검정한다.

6. 고등학교 외국어과 과정에 의거하여 그 내용을 부분적으로 보충 심화한 학생용 도서는 인정으로 한다.

이상의 내용을 검정종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국어, 고등학교 사회생활과의 도독, 중학교의 농업, 공업, 상업, 수산 등의 교과목의 학생용 교과서는 국정으로 하고 그 밖의 학생용 교과서는 검정으로 한다.
- 2) 교과 내용을 부분적으로 보충 심화하는 학생 도서는 인정으로 한다.
- 3) 대부분의 교과서는 학년 단위로 검정하나 다음 교과목은 부분단위로 검정한다.
 - 사회생활과의 중학교 공민, 지리, 역사(단 종합적으로 저술된 것은 학년 단위 포함), 고등학교의 국사, 지리, 세계사
 - 과학과의 중학교 생물 및 물상 분야, 고등학교 물리, 화학, 생물, 지학
 - 중, 고 미술과의 미술(도화와 공작), 서예
 - 외국어과의 영어, 불어, 독어, 중국어
- 4) 각 부분 또는 영역 단위로 검정을 행하되, 이를 다시 학년 단위로 검정하는 교과서는 다음과 같다.
 - 고등학교 사회생활과의 일반 사회
 - 중학교 과학의 생물분야, 물상분야
 - 실업·가정과의 가정(중, 고), 농업·공업·상업·수산(고등학교)
- 5) 학년 단위나 학교 단위를 선택하여 편찬 가능한 교과: 체육

2) 검인정 교과용 도서의 검인정 절차 및 과정

① 출원 자격과 제출 서류

검인정 절차는 「교과용 도서 검인정 규정」(대통령령 제336호, 1950. 4. 29 제정, 1950. 12. 21. 1차 개정)의 제4조(출원 자격), 제5조(제출 서류 및 수수료) 제6조(내용 사열), 제7조(수정 지시), 제8조(수정된 교과용 도서의 追願)의 규정과 1955년 10월 6일에 문교부가 발표한 「검인정 교과서 사열 기준」에 의해 먼저 내용 사열을 하고 다음으로 형식 심사를 하여 합격 여부를 결정했다.

먼저 신청절차로 저작권자(처음의 법규정에는 발행군자였으나 제1차 규정 개정 때 저작권자로 바뀜) 타자본이나 프린트본으로 된 백표지의 도서 간본(신청본) 6부를 검인정 원서(제1호 서식), 저작자 이력서(저작자 수인이 있을 때 또는 단체 저작인 때에는 대표자 이력서로 갈음함), 제조비 계산서(제4호 서식) 각 1통과 함께 제출한다. 이때 각 신청 도서 1종에 대하여 그 도서 정가의 5배인 검인정 요금도 함께 제출한다.

출원자인 저작자가 대한민국 내에 주서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 검정 또는 인정에 관한 인체의 사항을 대리시키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주소를 가진 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경우 검인정 출원에 위임장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출원자로서 저작자가 여럿 있을 경우에는 그 중에서 대표자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검인정 교과서 사열 기준」에서는 **교과용 도서 검인정 심사 절차**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교과용 도서 검인정 심사는 내용 심사와 형식 심사의 둘로 구분하여 행한다.
2. 형식심사는 내용 심사에 합격된 도서에 한하여 행한다.
3. 형식심사에 있어서는 교과용 도서로서의 필요 조건을 충족시킬 때까지 거듭 수정을 지시할 수 있다.
4. 형식심사상 유의사항은 제 4항과 같다.
5. 형식심사에 합격되기 전에 교과용 도서의 검인정을 받은 양 선전할 수 없다.
6. 검정인 된 교과용 도서 목록을 발행하는 때에는 필히 문교부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② 내용 사열

제출된 신청본에 대하여는 내용 사열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편수관을 포함하여 4~5인의 사열 위원이 위촉받아 격리된 장소에서 심사하게 된다.

내용 사열의 사열 위원 및 보조원, 사열 사무의 기밀 유지, 사열 사무의 객관성 유지에 대해 1958년판 문교개관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사열 위원 및 보조원>

사열 위원은 당해 부문의 학사, 교육자 및 편수관으로 구성하였다. 사열위원은 해당 교과와 교과서를 집필하지 않은 분을 원칙적으로 선정한다. 단 사계의 권위자로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본인의 저서 이외의 것을 위촉하기로 하였다. 사열 위원은 한 건에 4명 내지 5명을 원칙으로 가급적 학자 2, 교육자 2의 비율에 편수관 1명을 위촉하였다.

사열 위원의 명단은 일체 염비에 붙이고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동원된 사열 위

원은 총수 약 400명, 편수와 7명에 그 보조원이 약 30명 동원되었다.

<사열 사무의 기밀 유지>

검인정 사무는 저작자 및 출판업자의 이해 관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그 기밀 유지는 극히 중요한 것이었다. 불의의 누설로 말미암아 공정을 실하는 혐의와 잡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 이상의 수고와 시간을 허비한 것은 크나큰 애로가 아닐 수 없다. 그 인단을 피력하면 다음과 같다.

접수 원본은 일률적으로 백 표지로 하여 저자명, 신청자명 및 접수 번호를 기재한 카아드를 첨부하여 따로 보관한 다음, 별도로 백 표지에 교과와 학년 정도와 암호 번호만 기입한 표지를 첨부한 사열 원본을 사열자에게 배포하였다. 이로써 사열자 및 편수관은 저자 및 출판사를 떠난 하나의 사열 원본을 기계적으로 다루게 되었다. 외부 사열 위원에 발송하는 사무는 편수관 책임 하에 직접 교부되거나 사택에 배부된다. 직장 기타 공개 석상은 가급적 이를 회피하였다. 암호 번호는 평점표에 의한 종합 보고서 작성을 필히 후 내용 사열 통과 가불 결정 시까지 이를 계속 하고 최후 결재시(2월 14일)에 공개되었다.

<사열 사무의 객관성 유지>

종래의 예로 보아 사열 위원의 보고는 각자의 주관에 흐르는 감이 있었다. 그러므로, 개정 실시된 사열 방법은 우선 각 교과 사열 기준과 같은 좋은 교과서로서의 기준을 세워, 그 조항에 따라서 평점을 붙이기로 하여 사열위원으로서의 독단적인 가부를 피하고 의견을 별지에 상세히 기입하도록 요망하였다.

사열 기준에 따라 평가를 하되 문교부로서 중시한 것은 교과과정에 충실한가, 국책에 접합한가, 교과서로서의 조직 배열이 잘 고려되어 있는가, 또 창의성이 있는가 등이 있다. 이 사열 기준을 완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이 후에 교과서 선정에 좋은 참고가 되리라고 믿는다.

내용 사열에서 사열 위원이 사열의 기준으로 삼은 각 교과목의 내용 사열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③ 교과용 도서 검인정 내용 사열 기준

국어과 (국어)

1. 교과과정에서 요구하는 교육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가?

2. 교과과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교육내용이 적당히 망라되어 있는가?
3. 교과서를 편찬한 태도는 공정한가?
4. 교재 내용이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가?
5. 교재 내용이 현대인의 생활과 관련이 깊은 것인가?
6. 인용문은 적당한 것인가?
7. 고전의 인용은 그 원전을 신뢰할 수 있는가?
8. 번역된 외국의 작품은 그 번역이 신뢰할 수 있는 것인가?
9. 교재 내용이 학생의 발달 과정에 맞는가?
10. 학생의 생활, 경험 및 흥미를 고려하여 편찬되었는가?
11. 학생의 개인차를 고려할 수 있도록 편찬되어 있는가?
12. 교재의 배열, 분량 및 구분은 적절한가?
13. 그림, 사진, 지도 등의 사용이 유효 적절한가?
14. 교과서로서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목차, 색인, 연구 문제, 참고 자료 등이 갖추어져 있는가?
15. 타교과와의 관련이 충분히 고려되어 있는가?
16. 지역 및 학교 시설(도서관, 학급 문고 등)의 차를 고려하였는가?
17. 표현이 적절하고 표기가 정확한가?
18. 각종의 문장을 고루 다루어 여러 가지 문장을 읽을 수 있도록 고려되어 있는가?
19. 괄호 안에 넣은 한자 및 로마자의 사용이 적절한가?
20. 한글을 전용하는 취지에 맞도록 서술되어 있는가?

중학교 국어과 (한자 및 한자어)

1. 중학교의 한자 및 한자어 학습의 지도 방침에 맞는가?
2. 사용 한자 범위 내의 한자를 습득하게 하려는 방침에 맞는가?
3. 각 학년에 배당된 신출 한자의 분량 및 선정은 적당한가?
4. 효과적인 교수 방법을 쓸 수 있도록 편찬되어 있는가?
5. 교재 내용이 학생의 실생활에 부합하도록 고려되어 있는가?
6. 학생의 흥미를 끌도록 되어 있는가?
7. 교재의 배열 및 분량은 적절한가?
8. 연구 문제, 참고 자료 등을 제시하여 학습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조직되어 있는가?

9. 국어과 학습내용과의 관련이 고려되어 있는가?
10. 표현이 적절하고 표기가 정확한가?
11. 그림 사진 등의 사용은 유효 적절한가?

고등학교 국어과 (한문)

1. 교과과정에서 요구한 교육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가?
2. 교과과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교육 내용이 적당히 망라되어 있는가?
3. 교재 내용의 선택이 편파적이지 않고 공정한 태도로 선택되어 있는가?
4. 학문이 우리 나라 문화 특히 언어 문학에 끼친 영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편찬되어 있는가?
5. 고등학교 국어과(특히 고전) 학습에 도움이 되는 교재가 채택되어 있나?
6. 교재의 인용은 적절 정확하며, 그 원전이 밝혀져 있는가?
7. 교재 내용이 학생의 지능 감정의 발달에 적용하는 것인가?
8. 교재 내용이 학생의 흥미를 끌도록 고려되어 있는가?
9. 학생의 개인차를 고려할 수 있도록 편찬되어 있는가?
10. 교재는 남녀 학생에게 다 같이 적당한 것인가?
11. 교재의 배열 및 분량은 적절한가?
12. 그림 사진 지도 등의 사용이 유효 적절한가?
13. 인구 문제, 참고 자료, 주해 등을 제시하여 학습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조직되어 있는가?
14. 학생이 효과적으로 학문을 학습할 수 있도록 편찬되어 있는가?
15. 각종의 문장을 고루 다루어 여러 가지 문장을 읽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가?
16. 표현이 적절하고 표기가 정확한가?
17. 우리의 실생활에 가장 밀접한 범위 내의 한자 및 학문을 습득하게 하려는 취지에 맞도록 편찬되어 있는가?

사회생활과 (공민)

1. 교과과정의 취지에 부합하는가?
2. 사상을 선도하도록 되어 있는가?
3. 교과과정에서 요구하는 교육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가?
4. 교과과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교육내용이 적당히 망라되어 있는가?
5. 내용의 선택 배열에 균형이 잘 잡히고 있는가?

6. 전체의 서술에 연관성과 통일성이 있도록 고려되어 있는가?
7. 내용이 정확 명료하게 표현되어 있는가?
8. 내용의 난이도가 적당한가?
9. 내용의 서술에 있어서 불필요한 중복 또는 비약이 없도록 고려되어 있는가?
10. 필요한 술어가 적당하게 다루어지고 있는가?
11. 내용이 공정한 태도로 서술되어 있는가?
12. 학생이 흥미를 가지고 읽을 수 있도록 서술되어 있는가?
13. 학생이 자학 자습할 수 있도록 서술되어 있는가?
14. 학생이 스스로 사고하고 활동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편찬되어 있는가?
15. 삽화, 도표 등이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는가?
16. 문장이 학생들에게 적당한가?
17. 교사의 교수 실체에 접합 편리하도록 편찬되어 있는가?
18. 목차, 색인, 부록 등이 교과용 도서 활용에 편리하게 되어 있는가?

사회생활과 (역사)

1. 교과과정에서 요구한 교육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가?
2. 교과과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적당히 망라되어 있는가?
3. 교과 내용이 해당 학년에 적합하도록 편찬되어 있는가?
4. 내용의 선택, 배열에 균형이 잡히고 있는가?
5. 전체의 서술에 관련성과 통일성이 있도록 고려되어 있는가?
6. 사상을 선도하도록 되어 있는가?
7. 지리적 요소의 비중이 적당히 다루어졌는가?
8. 내용이 정확하고 명료하게 서술되어 있는가?
9. 지리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고려되어 있는가?
10. 어휘의 사용이 적당하고 학년에 적합한가?
11. 논지가 분명하고 문장이 쉽게 서술되어 있는가?
12. 학생이 자발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고려되어 있는가?
13. 학생이 흥미를 느끼도록 서술되어 있는가?
14. 교사의 실제 지도에 적합하도록 편찬되어 있는가?
15. 편협된 학설에 취하지 않고 보편적인 학설을 취하고 있는가?
16. 삽화, 도표 등이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는가?

17. 목차, 색인, 부록 등이 교과용 도서 활용에 편리하게 되어 있는가?

사회생활과 (지리)

1. 교과과정에서 요구한 교육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가?
2. 교과과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교육내용이 적당히 망라되어 있는가
3. 교과 내용이 해당 학년에 적합하도록 편찬되어 있는가?
4. 내용의 선택, 배열에 균형이 잘 잡히고 있는가?
5. 전체의 서술에 연관성과 통일성이 있도록 고려되어 있는가?
6. 사상을 선도하도록 되어 있는가?
7. 지리적 요소의 비중이 적당히 다루어졌는가?
8. 내용이 정확하고 명료하게 서술되어 있는가?
9. 지리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고려되어 있는가?
10. 어휘의 사용이 적당하고 학년에 적합한가?
11. 논지가 분명하고 문장이 평이하게 서술되어 있는가?
12. 학생이 자발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고려되어 있는가?
13. 학생이 흥미를 느끼도록 서술되어 있는가?
14. 교사의 실제 지도에 적합하도록 편찬되어 있는가?
15. 편협한 학설을 취하지 않고 보편적인 학설을 취하고 있는가?
16. 삽화, 도표, 사진 등이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는가?
17. 목차, 색인, 부록 등이 교과용 도서 활용에 편리하게 되어 있는가?

사회생활과 (지도)

1. 중학교 사회 생활과 지리 부분 및 고등학교 사회과 지리의 교과과정에 의거하고 있는가?
2. 상기 교과목의 지도 목표 달성에 유효하도록 편찬되어 있는가?
3. 내용이 해당 학년의 정도에 적당한가?
4. 내용이 정확한가?(축척, 표기, 색채, 위치 등)
5. 교재 내용은 지리 학습에 필요한 제 지도가 적절히 망라되어 있는가?
6. 교재의 조직과 배열은 유효 적절하게 망라되어 있는가?
7. 내용은 현대의 진보에 응하고 있는가?
8. 교재 내용을 중학교 사회 생활의 타부분 및 고등학교 사회과의 타교과목 및 각급, 학교의 타교과에도 유효하게 사용하도록 편찬되어 있는가?

9. 특수한 자료에 대해서는 출처 조사 연도가 표시되어 있는가?
10. 인쇄는 선명하고 표기는 정확한가?
11. 지도의 크기와 문자의 크기는 알맞은가?
12. 차례, 부록 색인 등은 학습에 사용하도록 조직되어 있는가?

수학과

1. 교과과정 취지에 맞는가?
2. 교과과정이 요구하는 지도 목표와 부합하고 있는가?
3. 교과과정이 요구하는 지도 내용이 적당히 망라되어 있는가?
4. 교재 내용은 학생의 발달 과정과 실제생활에 비추어 적절한 것이 선택되어 있는가?
5. 문제를 빠르게 고찰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고려되어 있는가?
6. 교재의 조직 배열이 적당하고 계열에 대한 고려가 되어 있는가?
7. 내용은 정확 명료하게 서술되어 있는가?
8. 내용의 난이도가 적당한가?
9. 학생이 흥미를 가지고 자학 자습할 수 있도록 고려되어 있는가?
10. 내용 서술에 불필요한 중복과 비약이 없도록 고려되어 있는가?
11. 전체 조직에 연관성과 통일성이 고려되어 있는가?
12. 교재 내용은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인가?
13. 수학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편찬되어 있는가?
14. 개인차에 대한 폭이 고려되어 있는가?
15. 문장이 평이하고 이해하기에 편리하도록 서술되어 있는가?
16. 필요한 술어가 적절히 다루어지고 통일되어 있는가?
17. 삽화(특히 도형), 도표 등이 효과적으로 사용되어 있는가?
18. 교사가 실제 지도하는 데에 편리하도록 편찬되어 있는가?
19. 차례, 부표 등 교사용 도서 활용에 편리하도록 조직되어 있는가?
20. 교재 분량이 수업 진도에 적당하게 되어 있는가?

과학과

1. 과학과 과정의 취지에 부합하는가?
2. 과학과 해당 과정에서 요구하는 교육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가?
3. 과학과 과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교육 내용이 적당히 망라되어 있는가?
4. 내용의 선택 배열이 적당하고 계열적으로 고려되어 있는가?
5. 학생의 개인차에 응할 수 있는 폭이 고려되어 있는가?

6. 지역사회의 차에 응할 수 있는 폭이 고려되어 있는가?
7. 전체의 서술에 연관성과 통일성이 있도록 고려되어 있는가?
8. 내용이 정확 명료하게 표현되어 있는가?
9. 내용의 난이도는 적당한가?
10. 내용의 서술에 있어서 중복 또는 비약이 없도록 고려되어 있는가?
11. 중요한 내용 또는 술어에 적당한 반복이 고려되어 있는가?
12. 필요한 원리 법칙 술어가 적당히 다루어지고 있는가?
13. 학생이 스스로 사고하고 활동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편찬되어 있는가?
14. 학생이 스스로 사고하고 활동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편찬되어 있는가?
15. 삽화, 사진, 도표, 통계 등이 효과적으로 사용되어 있는가?
16. 문장이 학생들에게 적당한가?
17. 교사가 실제 지도하는데 적합 편리하도록 편찬되었는가?
18. 차례, 색인, 부록 등이 교과용 도서 활용에 편리하게 되어 있는가?

교육, 철학과

1. 교육과 교육 과정의 취지 목표와 부합하고 있는가?
2. 내용이 공정한 태도로 서술되어 있는가?
3. 교과과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교육내용이 적당하게 망라되어 있는가?
4. 내용은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가?
5. 학생의 발달 과정이 고려되어 있는가?
6. 학생의 발달 과정이 고려되어 있는가?
7. 교재 내용의 선택과 배열은 적절한가?
8. 전체의 서술에 계통이 서있고 통일과 연관성이 고려되어 있는가?
9. 삽화, 사진, 도표 등이 효과적으로 사용되어 있는가?
10. 질문, 연습 문제 등의 조직이 유효 적절한가?
11. 문장이 학생에게 적당한가?

체육과

1. 교과과정 취지에 맞는가?
2. 교과과정이 요구하는 지도 목표와 부합하고 있는가?
3. 교과과정이 요구하는 지도 내용이 적당히 망라되어 있는가?
4. 내용은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가?

5. 내용의 난이 정도가 적당한가?
6. 교재의 구분 조직 배열이 적절하고, 불필요한 중복이 없도록 고려되어 있는가?
7. 학생의 발달 정도에 맞도록 되어 있는가?
8. 건강에 대한 사항의 이해와 습관 태도를 기르도록 충분히 고려되어 있는가?
9. 체육의 이해와 체육 활동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고려되어 있는가?
10. 내용이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편찬되어 있는가?
11. 학생이 흥미를 가지고 자학 자습할 수 있도록 고려되어 있는가?
12. 개인의 능력 차에 응할 수 있는 폭이 고려되어 있는가?
13. 전체 조직에 연관성과 통일성이 고려되어 있는가?
14. 문장은 평이하고 이해하기에 편리하도록 서술되어 있는가?
15. 필요한 술어가 적절히 다루어지고 있는가?
16. 삽화, 도표 등이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는가?
17. 교사가 실제 지도를 하는 데에 편리하도록 편찬되어 있는가?
18. 차례, 부표 등 교과용 도서 활용에 편리하도록 되어 있는가?

미술과(미술)

1. 교과과정의 취지와 목표에 부합한가?
2. 필요한 교재 내용이 적절히 망라되어 있는가?
3. 교재 내용이 공정한 태도로 선택 배열되어 있는가?
4. 내용이 풍부하고 정확하게 신뢰할 수 있는가?
5. 교재 내용이 학생들의 실제 생활과 합치되는 것인가?
6. 전체의 편찬에 관련성과 계통이 서 있는가?
7. 교재 내용이 학생의 발달 과정에 합치되는가?
8. 학생이 자습할 수 있도록 편찬되어 있는가?
9. 학생들에게 표현 기술과 능력을 기르도록 고려되어 있는가?
10. 실제 생활에 응용할 수 있는 교재가 적당히 들어 있는가?
11. 설명문이 적절한가?
12. 학생의 개인차에 응할 수 있는 폭이 고려되어 있는가?
13. 학생이 미술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편찬되어 있는가?

미술과(서예)

1. 미술과 교과과정 중 서예의 취지와 목표에 부합하는가?

2. 서풍을 공정히 표현하고 있는가?
3. 서예의 생활화를 피하고 있는가?
4. 필법이 정확하며 개성이 나타나 있는가?
5. 용구의 특징에 맞도록 지도할 수 있게 편찬되어 있는가?
6. 내용이 정확하며 신뢰할 수 있는가?
7. 내용이 학생의 발달 정도에 맞는가?
8. 내용의 선발 배열이 적당한가?
9. 학생이 효과적으로 서예를 할 수 있도록 편찬되어 있는가?

음악과(음악)

1. 교과과정의 취지에 부합하는가?
2. 공정한 태도로 편찬되어 있는가?
3. 가장, 기악, 감상, 창작, 악리 등의 음악 실재를 통하여 음악을 이해하고 또 애호할 수 있도록 편찬되었는가?
4. '리듬'이 이해하기 쉽고 그 성격이 분명하며, 또 그 형이 발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가?
5. 가락의 진행에 무리가 없고 또한 고상하고 아름다우며 가사의 결합이 잘되어 있는가?
6. 음악을 효과적으로 학습시킬 수 있도록 고려되어 있는가?
7. 교재 내용이 남녀 중학생의 흥미와 음악 활동을 고려한 것인가?
8. 가창 교재의 형식이 가요 형식에서 어그러집은 없는가?
9. 가사의 내용 및 문장이 해당 학년에 적당한가?
10. 기보법, 표기법, 음악 용어, 쉼표 등 필요한 교재 내용이 적절히 망라되어 있는가?
11. 속도 기호(술어)와 악상 기호(술어)가 그 곡의 내용에 맞는가?
12. 교재 내용이 학생의 발달 과정에 적합하도록 고려되어 있는가?
13. 교재 내용이 학생의 개인차에 응할 수 있는 폭을 가지고 있는가?
14. 교재 상호간의 연관이 고려되어 있는가?
15. 전체의 조직에 통일성과 개통이 고려되어 있는가?
16. 지역 및 학교 시설의 차를 고려하였는가?
17. 교재의 분량이 적당하다고 내용의 균형이 취해져 있는가?
18. 가사 및 설명은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문장으로 되어 있는가?

실업 가정과

1. 교과과정의 취지와 목표에 부합하는가?
2. 교과과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적절히 망라되어 있는가?
3. 내용의 선택 배열이 적당한가?
4. 교재의 선택이 학생의 발달 과정에 합치하는가?
5. 교재 내용이 생활 개선을 도모하도록 고려되어 있는가?
6. 도표, 삽화, 사진 등의 사용이 유효 적절한가?
7. 학생의 자발적인 학습 활동을 유발하도록 고려되어 있는가?
8. 교재 내용이 실제 생활과 합치되고 있는가?
9. 전체의 조직에 있어서 관련성이 있으며 체계가 있도록 고려되어 있는가?
10. 우리 나라 실정에 비추어 실습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고려되어 있는가?
11. 노작에 흥미를 가지고 근로를 좋아하는 태도를 기르도록 고려되어 있는가?
12. 학생의 개인차에 응할 수 있는 폭이 고려되어 있는가?
13. 교사의 실제 지도에 편리하도록 편찬되어 있는가?
14. 문장이 학생에게 적당한가?

외국어과

1. 당해 교과과정의 취지에 부합하는가?
2. 효과적으로 외국어를 습득시키도록 편찬되어 있는가?
3. 단어의 선택 배열이 적당한가?
4. 난이도가 적당하게 고려되어 있는가?
5. 언어로서의 외국어가 올바르게 정확한가?
6. 발음, 표기의 올바른 체계가 고려되어 있는가?
7. 학생들의 생활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언어 재료를 선택하도록 고려되어 있는가?
8. 학생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고려되어 있는가?
9. 교사의 실지 지도에 편리하도록 조직되어 있는가?
10. 교재 내용이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인가?
11. 교재 내용이 인문계통 또는 자연계통의 어느 한 쪽에만 편중되는 일없이 적당하게 균형이 잡히고 있는가?
12. 교재 내용이 학생들의 지식 정도에 적합한가?
13. 교재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는가?
14. 교재 내용이 사상을 선도하도록 고려되어 있는가?

15. 교재 내용이 외국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고려되어 있는가?
16. 교재 내용이 공정하고 일방에 편파하는 일이 없도록 고려되었는가?
17. 삽화, 도표 등이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는가?
18. 학생이 효과적으로 교과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직되어 있는가?
19. 편찬에 있어 표절 또는 모방이라고 볼 만한 것이 없고 창의적인 편찬인가?

내용 사열이 끝나면 심사위원들은 문교부 장관에게 그 의견서를 제출한다. 내용 사열에서 검정 또는 인정을 출원한 도서 중 수정할 곳이 있으면 그 수정을 요하는 개소를 출원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수정 지시를 받을 경우 4개월 이내로 수정 출판하여 제2호 서식에 의거 수정도서 2부를 첨부하여 그 도서의 검정 또는 인정을 추원하여야 한다.

④ 형식 사열과 교과서 체제 기준

내용 사열이 끝난 도서에 대해서는 형식 심사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형식 심사는 지금의 교과용 도서 체제 기준에 해당된다. 이 체제 기준은 교과서의 외형적 체제 즉, 외적 체제에 관한 것인데, 당시 국정 교과서에는 이미 이 체제에 맞추어 발행되고 있었으므로, 그에 준하여 검인정 내용 심사에 합격한 교과용 도서에 대한 사열 기준을 마련했던 것이다.

이 체제 기준은 문교부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최초의 체제 기준이 되었고, 이후로 모든 교과서 체제에 적용되어 1960년 11월 1일 새로운 ‘교과용 도서 체제 기준’이 나올 때까지 모든 교과서의 체제 기준이 되었다.

당시의 교과용 도서 형식 심사상의 유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교과용 도서 검인정 형식심사상 유의사항>

<판 중>

1. 과중은 4·6판, 5·6판, 5·7판, 4·6배판, 5·7배판으로 한다.
2. 음악과 학생용 교과서, 미술과 학생용 교과서 및 지도책은 5·7판 이상 5·7배판 이하로 하고, 기타 교과서의 학생용 교과서는 5·7판을 원칙으로 삼되, 5·6판 또는 4·6판도 용인 한다.

<활 자>

1. 중등학교 학생용 교과서의 본문에 사용할 활자의 크기는 5호 이상으로 한다.
2. 고등학교 한문 및 중국어의 학생용 교과서의 본문은 4호 이상이어야 한다.
3. 활자는 정확 명료하여야 하며 자획이 선명하여야 한다.

<행수, 자수, 자간, 여백>

1. 행수는 판종과 활자 크기에 의하되 57판에 5호 활자를 사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 1면 본문 750자 이내로 한다. 단 1면 본문 25행을 넘을 수 없으며 1행 32자를 넘을 수 없다. 기타는 이에 준한다.
2. 어간은 반각으로 하고, . ! ? 등 기호는 반각으로 간주하며, 이들 기호와 다음 글자 사이는 전각으로 한다. 단 ‘ , ’와 다음 글자 사이는 반각으로 한다.
3. 천지, 좌, 우는 적당히 여백이 있어야 한다.

<인 쇄>

1. 인쇄는 선명하여야 한다.
2. 인쇄에는 농담이 없어야 한다.
3. 글자 이외의 지면이 깨끗하여야 한다.
4. 글줄이 바르게 되어 있어야 한다.
5. 삽화는 명료하여야 한다.

<제 제>

1. 표지는 120 이상의 후지(厚紙)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교과용 도서 검인정을 받은 표지를 안 표지에 표시하여야 한다.
상기 표지에는 다음 각 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가) 검인정의 구별
나) 검인정 연월일
다) 사용될 교과목의 명칭, 사용 학교 및 사용 학년

<제 본>

1. 제본은 견고하여야 한다.
2. 책면은 고르게 제본되어야 한다.

이 사열 기준에서 판형이 5·7판(A5:14.8×21.0cm) 원칙을 표준화했는데, 이로써 종래의 4·6판 규격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는 우리 교과서 발행사로 볼 때 매우 주목되는 변화라 하겠다. 5·6판의 규격도 허용되고 있는데, 이 형식은 5.0×6.2촌(寸)의 변형판으로써 당시 대부분의 외국어과 교과서가 이 판형이었으나, 현재는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특수 판형의 단행본에 더러 사용되고 있을 정도이다.

활자의 경우는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5호(10.5포인트)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한 바, 이 규격은 오늘날의 중학교 12포인트(18급), 고등학교 10.5포인트(15급) 체제를 유도한 근

거로 뒷받침하게 되었다. 1950년대만 해도 활자 사정이 매우 열악하여 통일된 조판 체제를 갖추기 어려운 형편이었다.

대한교과서는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1958년 1월에 자동활자 주조기를 3대를 일본으로부터 들여왔고, 같은 해 6월에는 당시 세계 최고의 성능을 갖춘 벤티 자모 조각기 2대를 서독에서 도입, 설치한 바 있다. 특히, 벤티 자모 조각기는 1960년대의 ‘대교체(大敎體)’ 개발에 첨예 시설로서의 결정적인 영향을 발휘하게 되었다.

행수, 자수, 자간, 여백에 관한 기준도 통일 규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진전을 보였다. 당시 5·7판 조판 규격이 5호(15급) 활자로 기준하여 ‘1면×25행×32자’ 범위로 제한했는데, 이는 오늘의 통일판(고등학교용 5·7판) 체제인 1면×25행×30자의 경우와 거의 비슷한 형식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인쇄 부문에 관해서는 인쇄 효과에 주안점을 두는 한편, 글줄을 바르게 해야 한다 지목했음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 요컨대 활자 제조에서 인쇄·제본에 이르기까지, 또 인쇄 시설(인쇄기) 자체의 개선을 유도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표지 제작과 제본의 기준은 용지의 두께(표지의 경우)를 강조하고 견고하고도 균일한 책면을 요구했는데, 이 역시 중요한 재선안임을 알 수 있다. 새삼스럽기조차 한 이 기준은, 당시의 교과서 제작 형편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었음을 말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왜냐 하면 운크라나 자유아시아위원회의 지원 물량이 고갈되면서 후도(厚度)가 좋은 용지를 기피(값이 매우 비싸므로)하는 현상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책면의 균일화 작업도 거의 수제(手製) 방식에 많은 부분을 의지하고 있었던 당시의 시설이나 기술 여건으로 볼 때, 접지 균형에 문제점(비틀림 현상 등)이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사열 기준은 교과서의 외적 체제에 대한 통일성과 품질 향상면에서 매우 중요한 유도 기능을 발휘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⁷³⁾

내용 사열, 수정 지시에 의한 추원 심사, 사열이 끝나 검정 또는 인정의 자격을 득한 도서에 대해서는 관보에 그 명칭, 책수, 정가, 목적하는 학교 또는 교과목의 종류, 발행 및 검인정 연월일, 당해 도서에 서명한 저작자 및 발행자의 주소, 성명을 공고한다.

검정 또는 인정을 받은 도서는 매책 표지 또는 속표지 등 보기 쉬운 곳에 아래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 1) 검정 또는 인정의 구별
- 2) 검정 또는 인정 연월일
- 3) 목적하는 학교 및 교과목

73) 前掲, 大韓敎科書史(1948~1998), pp. 279~281

⑤ 검인정 교과용 도서의 심사 결과와 수시 결정

이와 같은 검인정을 통해 1956년 검인정 교과서는 총 916권이 평가되어 출판업계에 교과서 붐을 일으키는 감이 있었다.

문교부는 처음으로 일괄 제출, 일괄 검정에 의해 최대 규모의 검인정을 일단락한 후에도 교과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1958년까지 수시로 검인정 사열을 하여 허가해주었기 때문에 검인정 교과서의 수는 더욱 증가하였다.(표 II-19 참조)

<표 II-19> 검인정 도서 종별 권수

종 별		1954년 말 현재		1958년 4월 1일 현재	
		종 류	권 수	종 류	권 수
국민학교	국어과	2	7	6	36
	산수과	1	2	1	2
	사생과	2	2		
	과학과	1	3		
	음악과	1	6		
	미술과	1	6	6	36
	보건과	6	27	10	28
	소계	14	53	23	102
중학교	국어과	20	43	35	93
	사회생활과	69	84	76	116
	수학과	7	21	18	52
	과학과	34	52	31	89
	체육과	2	3	9	13
	음악과	8	17	15	32
	미술과	5	14	10	30
	실업가정과	1	3	5	13
	외국어과(영어)	26	63	38	100
	소계	172	300	237	538
고등학교	국어과(5부분)	3	5	34	58
	사회생활과(3부분)	15	15	38	53
	수학과(3부분)	5	7	32	35
	과학과(4부분)	15	26	44	62
	체육과	1	1	8	9
	음악과	2	3	7	17
	미술과(2부분)	4	6	8	8
	실업가정과(3부분)	18	23	37	60
	교육 및 철학(2부분)	8	8	11	11
	외국어과(4부분)	10	22	48	113
	소계	81	116	267	426
	총계	267	469	527	1,066

자료 : 문교부, 문교개관, 대한문교서적(주) 1958, p.176

이렇게 많은 교과서가 검인정 되자, 우리 나라 출판계의 웬만한 출판사는 몇 책에서 수십책의 교과서를 가지게 되어 출판 사업을 번성하게 했고, 따라서 자본이 축적됨으로써 출판 산업을 발전시키는 기반을 마련하게 했었다. 이 무렵 검인정 허가를 받아 교과서를 발행하고 있던 출판사는 <표 II-20>과 같다.

<표 II-20> 검인정 교과서 발행소(제1차 교육과정)

출판사	대표자	주소	책수	출판사	대표자	주소	책수
章旺社	李大儀	종로구인사동	56	世界社	趙聖鎭	중구남산동3가	9
正音社	崔映海	중구회현동	47	國民音樂	李康濂	종로구궁정동	8
探求堂	洪錫禹	종로빌딩	43	研究會			
創人社	李堯河	종로구견지동	42	大韓教科書	李耆鍾	종로구충신동	8
民衆書館	李炳俊	종로구동의동	38	新丘文化社	李鍾榮	중구소공동	7
東國文化社	申在永	종로1가	34	새로이	全惠金	충무로4가	6
乙酉文化社	鄭鎭肅	종로빌딩	34	出版社			
民敎社	閔壯植	종로계영빌딩	34	大東堂	李重南	종로구와룡동	6
白映社	白南弘	종로2가	27	尙文院	李根英	종로구도염동	6
一潮閣	韓萬年	종로구안국동	23	螢雪文化社	張河麟	종로기독빌딩	4
弘志社	朱在中	중구채동	23	香麟社	張河龜	중구남산동	4
宇鍾社	徐永錫	종로구명륜동	21	弘人文化社	李基玉	종로구수송동	4
博文出版社	芮東洙	종로구인사동	20	敎友社	李揆大	을지로5가	43
康湖文化社	李康謙	종로구궁정동	20	靑林社	韓淙錫	종로구혜화동	3
陽文社	邊造成	종로구수송동	19	漢城圖書	韓泳淑	종로1가	3
首都文化社	邊宇景	종로구수송동	19	耕學社	崔根學	종로구누상동	3
敎學圖書	崔相潤	중구남대문로	19	新志社	羅淳德	종로구청운동	3
大東文化社	金鍾湜	종로구경운동	19	耕智社	韓昌奎	중구쌍림동	2
文獻社	吳泳泰	중구소공동	19	英雄出版社	韓秉庸	대구시남1동	2
光文社	申聖生	서대문구만리동	18	科學振興社	朴林鍊	종로구신문동	2
思潮社	朱仁龍	대구시포정동	17	文研社	權周遠	종로2가	2
修文閣	金明燮	중구충무로	15	第一文化社	李常輝	종로경운동	2
大洋出版社	金益達	종로구견지동	15	原紀社	崔在壽	종로공평동	2
文化敎育	李奎星	종로장안빌딩	15	愛知社	金永哲	성북구안암동	2
一韓國書	徐福煥	종로구견지동	12	考試學會	李榮宰	을지로3가	2
英志文化社	白萬斗	종로구견지동	12	文星閣	孫姬朝	부산시수창동	2
文化堂	李壽澤	종로구효제동	12	培文社	吳駿泳	성동구사당동	2
平凡社	李活恩	종로3가	12	文友堂	朴台三	중구장충동	2
一心舍	洪鳳珍	중구을지로	10	共同文化社	金寅性	종로구경운동	2
文理社	孫洪明	종로구경운동	9	서울出版社	朴賢植	중구을지로4가	2
金龍圖書	金時必	종로기독교빌딩	9	星文社	金泰奎	중구남창동	2
親友文化社	朴海鳳	종로빌딩	9				

자료 : 교과서연구 제10호, p113, 서울 : 2중교과서협회, 1991.10

위와 같은 교과서 검인정이 제3차 교육과정 이후의 그것에 비하여 특기할 것은 편수관이 사열위원으로 들어가 실질적, 형식적 심사를 했다는 사실이다. 1966년 중학교 교과

서 추가 검인정부터 편수관이 심사에 참여하면 심사결과에 대한 오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하여 편수관을 심사위원에서 제외한 결과, 심사의 객관성이 없어져 교과서 검인정에 통과하는 것이 꼭 복권 추첨과 같이 운에 달려있지 출원된 교과서의 질에 합격, 불합격이 달려 있지 않다는 점이 드러났다. 요즈음의 이런 검정 경향을 고려한다면, 그때는 일단 질 좋은 교과서가 검정에 우선 합격하였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싶다. 왜냐하면 편수관은 교과교육과 교과서에 가장 정통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편수관 스스로도 훌륭한 심사를 하겠지만, 동료 심사위원들의 교과서관이랄까 교과교육관을 깨우쳐 반드시 훌륭한 교과서가 합격할 수 있도록 유도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검인정 교과서는 출판사로서는 큰 이권이기 때문에 검인정 합격에 지대한 관심이 있었을 것이고, 이에 따라 출판업자들은 검인정 합격을 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이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 세태를 당시 편찬과장(편수과장)으로서 검인정 사업을 주관했던 최태호 편수관은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⁷⁴⁾

- 검정교과서 출판 싸움

그 시절의 명동은 무언가 매력이 있었다. 폭격에 파괴된 벽돌더미를 쌓아 놓은 것이 그대로 앉은 술집이 되어 고기 굽는 숯불이 어둠 속에서 이글거렸고, 거기서 쳐다보는 달이 밝다고 ‘명월관’이라고도 했다. 전쟁이 아물지 않은 상처에는 비지 속의 돼지갈비가 또한 별미였다.

……(중략)……

그 시절 나는, 편수관에다 과장을 겸직하고 있었다. 국정교과서 편찬도 거의 끝나고 새로 중·고등학교의 검정교과서 발행 준비를 하던 시기였다. 일국의 교과서를 공급하는 총본산인 문교부에서는 정규 편수관이 아직도 10명 미만인데다가, 중·고등학생은 전란 후 급속히 늘어서 교과서를 새로 편찬하는 일보다도 공급 자체가 막연하였었다. 새로 제정한 교육과정으로 교과서를 민간에게 편찬하여 검정 허가하도록 했는데, 출판사가 너도나도 교과서를 제작해 검정을 받으려 아우성을 쳐 문교부는 그야말로 수라장이 되었다.

“좋은 자리 있을 때 잘 봐 달라.”는 유행어가 횡행하던 자유당 시절은 같은 국과장 자리에도 좋은 자리 나쁜 자리가 있었다. 특히 허가 업무라거나 상인과 거래가 많은 자리를 일러 ‘좋은 자리’라 했다. 내가 앉은 자리가 바로 명당자리라고 했는데, 실상은 커녕 죽을 자리였던 것이다.

모두가 흥길동으로, 학자라고 뽐내는 사람들이 원고를 써서 검인정신청을 냈었고, 출판사도 영세한 자본으로 ‘딸라돈’을 얻어 교과서를 만들어서 결사적으로 출원했지만, TO가 있어서 반이상은 ‘불’자를 매겨야 했다.

그러자니 검정 세칙도 세밀히 만들어야 하고, 천 수백 권 책을 검토할 사열위원을 공정하게 정하여 뒷바라지도 해야 하고, 부정 부조리가 따르게 마련인 세태에서 잡음 나지 않도록 비밀도 보장해야 했으니, 사무가 아니라 아수라 전쟁이었다.

먹음직한 음식에는 반드시 파리가 모이는 법. 대문짝만한 명함이 오고, 별로 찾지 않던 친구도 만나자 하고, 낙하산 비슷한 것도 내려오고, 편수관들의 비명이 울리는 가운데 이것을 감시하는 눈초리도 번쩍이고 하여, 나중엔 사무실을 비밀 장소로 옮기는 법석을 떨었다. 그러나 나

74) 崔台鎬, 나의 編修局 시절, 편수의 뒤안 길, 제2집, 한국교육과정·교과서 연구회, 1995, pp. 27~28

는 공평무사, 신념에 따라 일했다. 장관 결재를 올릴 때는 부록으로 사열백서(사열백서)라는 것을 만들어서 함께 올렸는데, 백서에는 “사무에 약간의 착오가 있을지 모르되, 사열은 원칙에 따라 했을 뿐, 모든 책임을 저와 편수관 일동이 질 각오로 완수했습니다.”라고 썼었다. 다행히 결재가 되고 백서도 공표되었는데, 이때의 경위는 당시의 문교부 출입기자와 저자, 출판사가 잘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역시 소박하던 자유당 시절이라 관계 직원 모두가 합심해서 난국을 용케 헤쳐 나간 것이다.

나중에 절친한 친구에게 “공정하게 한다 해 놓고 내 것을 먼저 자른 것이 아니냐?”는 농담 비슷한 원망도 들었지만, “그 고명한 학자의 책을 어떻게 잘랐느냐?”는 인사도 받았다. 실격한 저자나 출판사 중에는 치명적인 출혈을 한 사람도 많았었다.

그러나 이제 4반세기나 지난 오늘날까지 이해 관계가 얽혔던 그 사람들과 떳떳하게 만나고 구경을 나눌 수 있는 것은, 미련스럽게도 고지식했던 탓이라. 이런 고집도 있고 해서 나는 상사에게서 공무원으로 자격이 모자란다는 아리송한 평도 들었다. 나의 하찮은 고지식과 고집은 다음에 최규남 장관에게 과분한 인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처세가 후환이 되어 건방진 부하로 찍찍혀 속칭 귀양살이라는 치명적인 타격도 받았다.

3) 검인정 교과용 도서의 발행

① 인쇄, 출판 과정

1956년 2월 15일 제1차 교육과정에 의한 검인정 교과서 심사 결과가 발표되었을 때 신규 검인정 총수는 916이고, 주주 총수는 66명이었다.

이때의 검인정 교과서 발행은 회사별 생산, 공동 공급 체제였다. 그러나 공동 공급은 각 교과서별로 주문된 교과서를 공동 배급하는 시스템이었지만 실제로는 치열한 판매 경쟁을 하고 있었다.

검정 교과서의 생산은 각 학교로부터 공급인이 주문 받은 주문서에 의해 집계된 주문 부수를 총 예상 부수로 하여 생산 계획을 수립한 다음, 이 계획에 따라 교과서를 생산했다. 그러니까 학교→공급인→출판사(검인정본 출판사)→문교부의 순으로 조사된 주문서에 의해 인쇄하게 된다.

회사별로 합격된 교과서를 인쇄, 출판하는 일은 대단한 일이었다. 대부분의 출판사가 자체 인쇄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쇄를 의뢰해야 하는데, 모든 검인정 교과서가 한꺼번에 인쇄소로 몰리게 되고, 종이 사정이 나빠 용지를 구하기조차 힘들어 적기에 교과서를 생산, 공급하기가 어려웠다.

제1차 교육과정에 의한 일괄 검인정 후, 부족한 교과서 용지를 조달했던 사례는 다음 이대익(장왕사 사장)씨와 정진숙(을유문화사 사장)씨와의 대담에서 살펴볼 수 있다.⁷⁵⁾

75) 이경훈, 교과서 출판 원로들에게 듣는다. 교과서 연구 제10호, 1991. p. 108.

이대의 : 1956년에 아시아재단인가 우크라의 유상 원조를 부흥부 소개로 20만 달러 어치를 받았습
니다. 제1차 교육과정 개정으로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일시에 바꾸었을 때일 겁니다.

정진숙 : 제가 그 때는 이사로 있었습니다. 사장으로 민장식 씨가 있었습니다. 용지를 받으려고,
나는 민 사장과 홍석우 이사와 함께 경무대, 부흥부, 한국은행을 찾아다녔습니다. 경무
대의 안희경씨와 유창근씨, 부흥부 예산국장 서재식씨에게 교과서 용지가 부족하니 확
보해 달라고 부탁해, 20만 달러 어치를 들여올 수 있게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우
리가 돈이 있어야 달러로 환불 조치를 받을 것 아닙니까? 한국은행 김유택씨에게 떼
를 써서 성사를 시켰습니다. 그 때까지는 나와 민장식 사장, 홍석우 씨만 알고 진행하
다가 매듭이 다 지어진 후에 주주들을 모아 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주들이 깜짝 놀
라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용지 배정하는 회의를 하는데 9시가 넘어 공습 정보가 났
는데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실적에 따라 배정하기로 되어 배정표를 나누어 가
졌습니다.

인쇄 공장에서는 24시간 기계를 돌리고도 적기 생산을 못하여 신학기에 맞추어 교과
서를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24시간 가동되던 인쇄소 사정에 대해서는 자체 인쇄 시설을 가지고 있던 장와사의 이
대의 사장의 글⁷⁶⁾에서 알아볼 수 있다.

당시는 전국적으로 인쇄 시설이 부족하여 교과서 같이 일시에 다량 생산하는 인쇄물은 기계가
있어도 부족할 정도였다.

또한 전기 사정이 나빠서 자가 발전기를 놓아야만 했다. 그러나 철야 작업을 하는 교과서 생산
시기에는 ‘퐁퐁’ 거리는 발동기 소리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투서를 하여 골치를 앓았다.

하루는 검찰청에서 출두장이 나왔다. 아는 검사가 있어서 이유를 물어보니, 동네서 진정서가
들어왔는데, 밤새도록 인쇄기 돌아가는 소리에 잠을 못 이룰 뿐만 아니라 초저녁에 같은 구공탄
이 발동기가 퐁퐁거리며 진동을 하니까 새벽에는 폭삭 꺼져 버린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웃에 사
는 검찰청 서기님께서 감기가 드셨다는 내용이다.

교과서는 신학기에 맞추어 공급하여야 하고, 전기는 부족하니까 발동기를 안 돌릴 수도 없다고
하니, 땅을 파고 발전기를 지하로 묻고 돌리면 진동이 덜할 것이라고 하여 부랴부랴 땅파고 내려
묻고 기계를 돌렸다.

애로는 또 있었다. 기계를 주야 3부 교대로 돌리게 되니 인쇄 직공이 부족하여 각 처에서 선불
을 주고 스카우트해 온다.

어느 날 스카우트한 사람 중 하나가 결근을 해서, 그를 소개한 제본 과정이 찾으러 갔다. 그러나
그 공장서도 내용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면회를 안 시킨다. 문에서 밀고 닫고 하다가 수위 할아
버지가 팽하고 뒤로 자빠졌는데, 하필이면 뇌진탕으로 죽어 버렸다. 밤 12시에 전화가 와서 마포
서로 달려가니, 제본 과장이 유치장에 있다.

또 교과서가 적기 공급되지 못함으로써 빚어진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당시의 인쇄문
화 시보가 설명하고 있다.

76) 이대의, 김인정 교과서의 변천사, 교과서 연구 창간호, 한국2종교과서협회, 1988. pp. 10~11

“교과서에 대하여 일반의 관심이 새로워지고 이목이 집중되는 데는 인쇄의 불선명, 지질의 저악 등에서 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한가지 커다란 이유가 있다고 한다.

즉, 새로 입학한 아동들이나 진급한 아동들에게 제때제때에 책이 차례오지 못하는 데 있다고 한다.

교과서의 인쇄 제작 미흡 또는 기타 원인으로 아동들이 배워야 할 책이 배본되지 않아 지방에 따라서는 학기말이 다 닳쳐오도록 ‘프린트’로 겨우 교과서를 대용하는 예가 왕왕 있어 어린 아동들의 괴로움은 물론 선생님들의 수업에도 지장이 컸었다는 것이다.⁷⁷⁾

1956년에 새 교과과정에 의한 검인정 교과서 허가를 얻은 출판사들은 기존의 ‘한국검인정 도서 공급주식회사’를 개편하여 1957년 7월 공동 생산, 공동 판매의 트러스트 조직인 한국검인정교과서(주)를 설립했는데, 이 조직이 설립된 후부터 교과서의 생산은 회사별로 생산하지 않고 지형을 모두 한국검인정교과서(주)에 맡겨 공동 생산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회사별 생산은 하지 않게 되었다.

② 채택 과정

임시 수도 부산에서 교과서 출판업자들이 1952년 11월 11일 창립한 ‘한국검인정도서공급주식회사’는 회사의 성격을 “생산은 각자가 하고 회사는 위탁 판매한다. 그리고 전국 각 시, 군에 지정 공급소를 두며, 채택 선전은 공동으로 문서로 선전한다.”는 합의 규약을 가지고 있었다. 이 준 문서에 의한 채택 선전 건은 잘 지켜지지 않아 채택 부조리로써 많은 잡음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러나 1957년 새로 검인정 된 교과서가 나왔을 때도 문서 선전에 의한 채택 규정은 명목상으로 남아 있었다.

새 검인정 교과서를 보급하게 되자, 65개 출판사는 사활을 걸고 채택 운동에 들어갔다. 당시의 채택 과정은 교과서 건본이나 목록을 각 학교에 보내어 그것을 학교에서 보고 채택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의 채택은 각종 수단이 동원되는 채택이 됨으로써, 출판사들간에 치열한 판매 경쟁을 일으켰다. 그 결과 출판사들은 거의 모두 도산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출판사들은 살길을 찾아 한국검인정교과서주식회사를 발족시키게 된다.

장왕사 이대의 사장의 다음 글은 이런 상황을 잘 말해준다.⁷⁸⁾

M출판사가 광주에서 15% 준다고 하여 우리 책을 10% 주고 채택된 것이 무너지니 같은 15%로 하여야 우리 것이 다시 채택되니까 자금을 추가로 송금하여 달라고 난리들이다. 하다 못해 갇든

77) 教科書各工場配當, 印刷文化時報(1954. 11. 20.)을 인용한 민병덕의 前掲論文, p. 90에서 재인용.

78) 이대의, 前掲論文, pp. 11~12

까지 끝대로 꾸어올 정도로 자금난이지만 할 수 없이 또 돈을 보낸다. 우리도 동물로 채택료를 주라고 지시하고 나니, 이번에는 대구·부산·전주 각 지방에서 또 야단들이라고 보고이다.

.....(중략).....

서울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이번에 채택되면 내년에도 쓸 것이고 학교도 좋은데 안 잡을 수가 없다. 10% 이자, 15% 이자 아니 20%까지의 사채도 막 갖다 쓴다.

1956년도 신 교과서 판매 경쟁은 치열하였으며, 채택료의 지출은 막대하였으나, 실제로 출고된 것은 절반 정도(고본 사용)에 머무른 실정이었다. 각 출판사마다 재고가 다량으로 남게 되니 다시 한 법 전 교과서 출판업자가 도산 상태에 이르렀다.

한국검인정교과서주식회사의 발족

각 출판사는 회의를 거듭하며 살기를 모색하게 되었다. 그래서 얻어진 결과가, 전전 방책으로 판매 실적을 주식으로 고정시켜 풀(pool) 제로 운영하는 것이다. 즉, 공동 판매뿐 아니라 생산까지도 공동으로 하자는 것이다. 공동 생산을 함으로써, 계획 생산을 할 수 있어 재고를 줄일 수 있고, 판매 실적을 주로 고정시키자는 것이다.

그러나 당년의 실적만 가지고 주 비율을 정하는 것은 불만이라고 하여 합의를 못보고, 1년 더 싸워보자는 의견들이었다.

부득이 1957년에 다시 한 법 채택 경쟁을 하였으나, 정말로 전부다 기진맥진, 케이오 상태로 되었다.

드디어 1957년 7월 한국검인정교과서주식회사가 발족된다.

1957년에 다시 만든 실적을 기준으로 주 비율을 정하되, 실적이 60%, 권수, 정가 30%, 조정수를 10%로 하여 공동 생산, 공동 판매키로 한 것이다.

당시 주주는 72명이었고, 공급인이 225명, 교과서는 925종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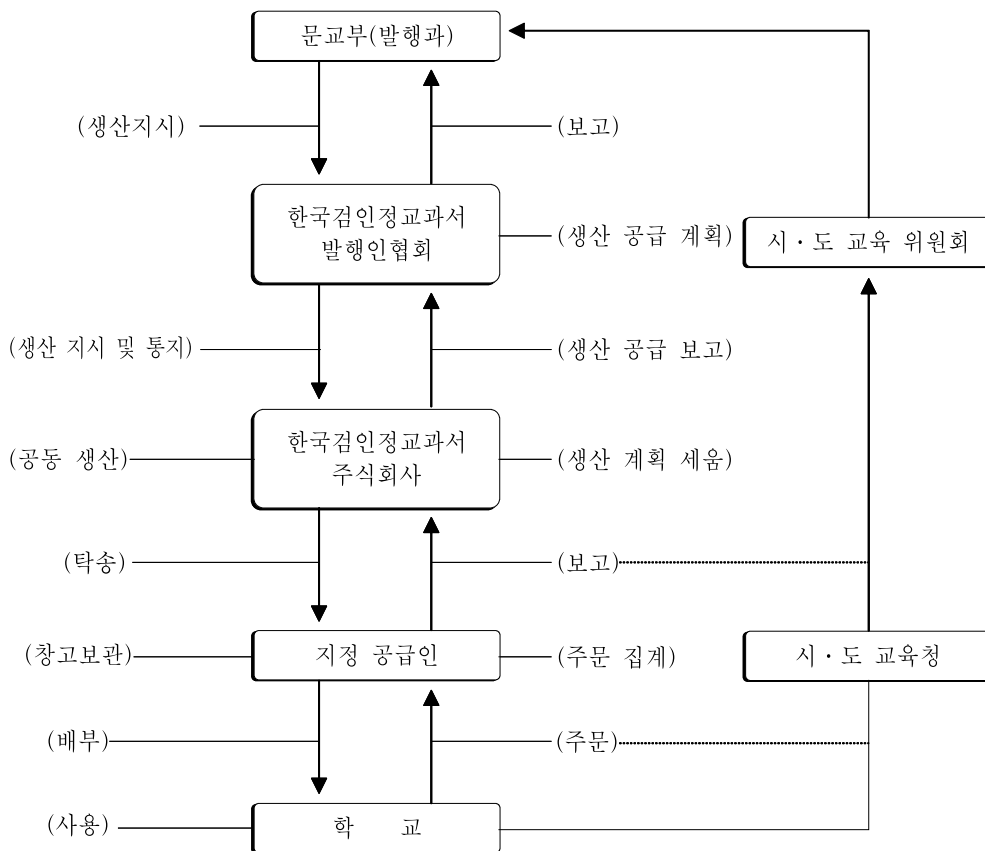
위의 일련의 과정을 보면 1957년 새 검인정 교과서가 처음 공급될 때는 채택료를 내건 치열한 경쟁에 의한 채택 과정을 거친 후, 1957년 7월 기존의 ‘한국검인정도서공급주식회사’의 명칭을 ‘한국검인정교과서주식회사’로 바꾸고, 회사의 성격을 공동 생산, 공동 판매 조직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되자 주주들은 이익도 공동 분배 형식(1956년도의 판매 실적 60% 권수, 정가 30%, 조정수 10%의 비율)이 되게 되어, 판매 경쟁의 실익도 없게 되었다. 그리고 채택을 하게 되는 학교측이나 공급을 하는 출판사나 한국검인정주식회사가 채택 과정에 어떻게 하라는 ‘채택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공급자인 출판사에서 교과서 견본이나 목록 정도를 보내면 학교에서 교과서를 채택하여 지정 공급인에게 통지하거나 정식 행정 루트를 통하여 보고함으로써 문교부에까지 주문 부수가 보고되었다. 문교부에까지 정식으로 보고되고, 보고된 주문 부수를 한국검인정교과서주식회사에 통지하여 생산 및 공급 계획을 세우도록 한 것은 1958년 ‘한국검인정교과서발행인협회’가 설립되고 난 뒤부터이다. 그러니까 이 발행인협회가 생김으로써, 협회는 문교부와 한국검인정교과서주식회사와의 연락 창구 역할을 하면서 공동 생산, 공동 공급을 더욱 원활하게 하게 하였다.

5) 검인정 교과용 도서의 공급

검인정 교과서의 공급 루트는 문교부 발행과가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에서 새 학기의 주문부수를 알려 주고 그에 따른 계획 생산 지시를 하면, 협회는 이를 한국검인정교과서(주)에 알려주어 생산 계획을 세우도록 한다. 그전에 한국검인정교과서(주)는 전국의 지정 공급인으로부터 미리 교과서 주문서를 받고 생산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검인정 교과서의 공급과정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II-6> 검인정 교과용 도서의 공급 체계(제1차 교육과정기)



검인정 교과서의 공급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은 지정 공급인이다. 1957년 설립된 한국검인정교과서주식회사의 지정 공급인은 약 220명 정도였다. 이들은 지방의 서적상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검인정 교과서의 주문과 공급 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다. 지정 공급인에 대해서는 이대의 사장의 대담록⁷⁹⁾에 잘 나타나 있다.

79) 이경훈, 대담/교과서 출판 원로에게 듣는다. 교과서 연구 제10호, 1991. p. 112

이경훈 : 이제는 공동 생산·판매 회사인 한국검인정교과서주식회사의 발족 이후의 사정을 들기로 하겠습니다. 주주 출판사수, 합격 중수, 관련 인쇄소 및 공급인 등에 대해 말씀해 보시죠.

이대의 : 주주 출판사는 62개사가 있었습니다. 교과서는 검정과 인정이 있었는데, 인정은 주로 국민 학교가 많았고, 검정만 추려 중·고등학교만 하면 827종이 됩니다.

처음에 공급인이 341명이었는데, 보증금을 받기 시작하니까, 220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77년 검인정회사 사건이 날 때까지 거의 변동 없이 계속 이 분들이 공급을 했습니다. 공급 수수료는 15%에다 목표액 달성한 공급인에게는 특별 보상금으로 5%를 더 주었습니다. 목표액을 설정한 것은 공동 생산·판매 회사에서 매출액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었습니다. 각사가 선전해서 팔 때는 구매를 자극해서 많이 팔렸는데, 공동으로 판매하게 되어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책이 안 팔립니다. 당시만 해도 현책을 많이 쓸 때였기 때문입니다.

매출액을 높이기 위해 공급인에게 목표액을 설정해 주고 100% 달성하면 공급 수수료 15%외에 5%를 특별 보상금으로 더 주었습니다. 또 이사들이 각 도를 담당하여 현지에 나가 공급인으로 모아 목표액을 시달하여 공급을 독려하였습니다. 건강 위생상 판 사람이 쓰던 현 책을 침발라 넘기면 전염병에 감염될 수도 있으니 새 책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교부에서는 내용이 바뀐 것은 새 책을 쓰고, 바뀌지 않은 것은 현 책을 써도 된다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현 책을 써도 된다고 하면 책이 반도 안 나갔기 때문에, 고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4. 요약 및 제언

(1) 교육과정의 개발

제1차 교육과정은 광범위한 지지층을 기반으로 발의된 것이 아니라 처음에 심태진 장학관과 새교육 운동 관계자들의 노력으로 발의된 것이라 할 정도로 뜻 있는 분들의 열성으로 피난 수도 부산에서 논의되고 추진되었다.

교육과정이 제정되거나 개정되는 사유는 그 시대, 그 나라 나름의 시대적, 국가 사회적, 학문적 요구가 있게 된다. 제1차 교육과정 개정도 그러한 요구에 쫓아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개발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 그것은,

첫째, 새로 제정된 교육법과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서 교육내용에 관한 것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법률적 요구가 있었고,

둘째, 비록 전쟁 중이었지만, 신생 대한민국의 앞날을 짚어지고 나갈 2세들에 대한 종합적, 체계적인 교육내용 설계도를 필요로 했던 국가, 사회적 요구가 있었으며,

셋째, 처음의 학습지도 방법 연구에서 교육과정 연구 쪽으로 방향을 바꾼 새교육 운

동의 연구가 교육과정 사조상의 교과중심, 경험중심 교육과정 제정을 유도하고 촉진시켰다.

이러한 요구들에 쫓아 제정된 제1차 교육과정은 그 제정을 위해 가장 열성적으로 일했던 문교부 장학관 심태진의 주장처럼 우리의 현실에 맞고, 민주적 교육에 기반을 두어야 하며 생활 경험 중심의 교육과정이어야 했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교육과정의 틀을 짜고 기본 방향을 정하기 위하여 중의를 모으는 과정에서 보수적 인사들의 제동으로 처음의 뜻을 살리지 못하고 교육내용의 기준을 정하는데 큰 변혁을 이루지 못했던 것은 안타까운 일이었다. 제1차 교육과정을 상당한 근거에 따라 대체로 교과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하지만 시안 작성 초기에 있었던 생활경험 중심 쪽으로 가지 못하고 교과중심의 색깔도 경험중심의 색깔도 제대로 나타내 보지 못한 것이 그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초의 체계적 교육과정답게 교수요목에 비하면 나름대로의 체계가 있고, 당시의 지적, 학문적 수준에서 보면 상당히 진보적이라 할 새 사조를 담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개발 주체로서의 심태진 중심의 장학관실은 큰 그림을 그리려는 의욕이 있었던 반면에 교사가 가르치고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와 내용의 조직에만 관심이 있었던 편수국은 안정적, 보수적 성향을 띄어 처음의 큰 그림의 뜻을 충분히 이어받지 못했던 것도 유감스러운 일이었다.

총론에 해당되는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과 각론에는 해당되는 각급학교의 「교과과정」이 동시에 공포되지 않고 시차를 두고 따로 공포된 것은 총론의 정신을 받아들여 짜야 할 각론 즉, 각 교과과정에 이를 반영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제1차 교육과정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총론 따로 각론 따로 연출된 것도 당시의 교육과정 개발진들의 수준쯤으로 치부하기엔 너무나 아쉬운 것이었다.

(2) 교과용 도서 편찬

제1차 교육과정이 최초의 체계적, 종합적 교육과정이었듯이 교과용 도서도 비로소 전 학교급별에 걸쳐, 전학년에 걸쳐서 일제히 함께 편찬, 공급된 것은 무엇보다 성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일시에 각 학교급별, 교과별 교과서를 체계적, 종합적으로 개발하게 된 것은 8~9명 정도의 편수 인력으로서는 대단한 성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정 교과서, 검인정 교과서 할 것 없이 1~2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기간 학교의 거의 전교과를 체계적으로 차질 없이 개발한 것만도 대단한 성과였다.

이와 같은 성과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교육법과 동법 시행령과 「국정 교과용 도서 편찬기준」, 「국정 교과용 도서 심의회 규정」, 「교과용 도서 검인정 규정」 등의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미리 되어 있었고, 군정기나 정부수립 직후 편수국에 들어온 고참 편수관들의 교과서에 대한 노하우가 쌓여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당시 학자, 교수, 교사 등 명망있는 지식인들의 교과서 일에 적극 협조하고 참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제1차 교육과정에 의해 개발된 국정, 검인정 교과용 도서는 먼저 일정한 규격이나 체제 기준에 따라 제작되어 이후의 모델이 되었고, 최초로 일괄 편찬, 일괄 검인정이 이루어져 교과서 개발을 체계화, 종합화시킬 기반을 마련했다. 그리고 이 시기부터 새로운 인쇄 시설을 들여와 대량생산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교과서의 질을 높일 수 있었던 것도 제1차 교육과정기 교과서 편찬, 발행의 성과라 할 수 있다.

검인정 교과서는 교과서 출판에 초창기에 뜻을 둔 출판사 사장들이 오로지 검인정 교과서 하나만을 업으로 삼고 이 일에만 매진함으로써 기술을 축적시켜 교과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였다. 그리고 국정 교과서를 번각 발행하던 대한문교서적주식회사(국정교과서의 전신)와 대한교과서주식회사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도 우리 나라 교과서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다. 또 교과서를 학생 손에까지 공급해주던 지방의 지정 공급인의 역할도 학생 교육과 교과서 발전에 기여한 바 크다고 할 수 있다.

(3) 교육과정 · 교과서 행정 조직

제1차 교육과정이 발의될 때는 심태진을 중심으로 한 장학관실이 「교육과정연구위원회 규정」에 쫓아 편제와 시간 배당의 열계를 거의 다 짰다. 교육과정 제정에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국가 차원의 심의회인 「교수요목제정 심의회 규정」을 관장하던 편수국은 전시 생활 등 시급히 편찬, 보급해야 할 교과서 때문에 교육과정을 제정할 여유가 없었던 것 같다.

제1차 교육과정을 주도한 인사가 장학관 심태진, 편수국장 최현배, 편수관 홍응선, 최병철, 최태호 등과 같은 관료들이 주도했지만, 새교육 운동의 열기에 젖은 전국의 교원들의 관심과 지지가 대단했던 것은 그 후에는 없었던 일이다. 일선 교원들에 의한 교육과정 제정 참여는 이 교육과정이 공포되기 직전에 피크를 이루어 점점 식어가고, 새로운 학문을 익힌 신진 학자들이 교육과정 개발의 주역 또는 이론 기반 조성을 하면서 등장하게 되었다.

편수국이 최현배 국장, 홍응선, 최병철, 이상선 편수관과 같은 유능한 인사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처음부터 교육과정 개발에 이니셔티브를 쥐지 못한 것은 군정기부터 있어 온 행정의 관행, 즉 조선교육심의회 초등분과, 중등분과 그리고 이와 행정적으로 연결되어있던 보통교육국의 초등교육과와 중등교육과가 교과 편제와 시간 배당을 관장했던 관행과 편수국은 교과용 도서만을 처리해 온 행정 관행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제1차 교육과정은 당시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실정에 맞는 최초의 체계적 육과정이 제정되었다는 점을 우선 평가해주어야 하고, 이에 관련된 수많은 인사들의 소신과 후세의 교육과정 개발팀들에게 귀감을 준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 국정교과서(주) 편, 「35년사」, 서울 : 국정교과서(주), 1987
- _____, 「10주년지」, 서울 : 국정교과서(주), 1962
- 김용만, 「교과용도서 정책의 개혁과제」, ‘교육과정연구 12집’,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1993.
- 대한출협편, 「대한출협 40년사」, 서울 : 대한출협, 1987.
- 문교부, 「초등학교 교육과정」, 서울 : 교육주보사, 1955.
- _____, 「문교개관」, 서울 : 대한문교서적(주), 1958.
- _____, 「편수요람」, 서울 : 문교부, 1959.
- 신창현, 「등불」, 12월호, 서울 : 대한문교서적(주), 1960.
- 심태진 외 「사우문선」, 서울 : 교문사, 1994.
- 오만석 외 「한국교육개혁의 종합평가」, 성남 : 정신문화연구원, 1995.
- 유봉호, 「한국 교육과정사 연구」, 서울 : 교학연구사, 1992.
- 이경섭, 「한국 현대교육과정사」, 서울 : 교학과학사, 1997.
- 정태수, 「한국 교육기본법제성립사」, 서울 : 예지각, 1996.
- 조성일 외, 「한국교육행정사」, 서울 : 집문당, 1996.
- 이종국, 「대한교과서사」, 서울 : 대한교과서(주), 1998.
- 한국교육과정·교과서연구회편, 「한국교과교육과정 변천 초·중·고」, 서울 : 대한교과서(주), 1990.
- _____, 「편수위 뒤안길 제1집·2집」, 서울 : 대한교과서(주), 1991, 1995.
- _____, 「한국교육과정 변천에 관한 연구」, 서울 : 한국 교육과정·교과서연구회, 1998.
- 한국2종교과서협회, 「교과서연구」 창간호, 10호, 31호 외, 서울 : 2종교과서협회, 1998.
- 함수곤, 「교육과정의 편성」, 서울 : 대한교과서(주), 1994.
- 함종규, 「교육과정 연혁조사 전·후」, 서울 : 숙명여대, 1974, 1980.
- 허 강, 「교육과정의 변천」, 서울 : 한양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1995.
- _____, 「한국교육과정 생성과정재조명」, 특활연구 제5권 제1호, 1987.

III. 제 2차 교육과정 개발과 교과용 도서 편찬

곽상만*

1. 서 론

제 2차 교육과정기는 1963년 2월 15일부터 1973년(국민학교 '73년 2월 15일, 중학교 '73년 8월 31일, 고등학교 '74년 12월 31일)까지의 시기이다. 물론, 그 당시에는 '제 1차 교육과정기'나 '제2차 교육과정기'나 하는 분류 호칭은 전혀 없었으며, 이것은 제 4차 교육과정기 이후에 생긴 말이지만, 제 2차 교육과정기는 광복 후 제1차~제7차 교육과정기 중 그 적용 기간이 가장 긴 것이었다.

교육과정의 개정 주기가 너무 긴 것은 바람직한 것이 못되지만, 제 4차~제 7차기의 5~6년처럼 너무 짧은 주기를 반복함으로써 현장 학교에서의 교육과정 이해(移行)이나 교과서의 발행 및 사용에 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리고 제 3차~제 6차기에서와는 달리 초중고교의 교육과정령을 같은 날짜인 1963년 2월 15일에 함께 공포한 것도 제2차 교육과정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의 교육과정은 1961년 5·16 이후 공채된 편수 진용에 의해 그 개정 작업이 진행되었으며, 짧은 기간 동안에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 원안이 작성되어 교육과정 심의 위원회를 거쳐 심의 의결되었다. 사실은 그 이전인 1958년경부터 교육과정의 개정을 위한 여론 조사와 자료 수집이 진행되고, 1961년에는 부분적으로나마 이미 시안이 작성되고 있었던 것이다. 5·16 후 새 정부에서는 자주성, 생산성, 유용성, 합리성, 지역성을 강조하는 교육을 서둘렀고, 이것을 위하여 조속히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시행해야만 했다. 개편된 초중고교 교육과정은 부령 제119~122호로 1963년 2월 15일에 동시 공포되었고, 국민학교는 1964년 3월 1일부터 3년 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되었고, 중학교는 1966년 3월 1일부터, 일반계 고등학교는 1968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실업계 고등학교만은 1963년 3월 1일부터 시행케 하였는데, 이것은 당시의 정부 방침이 산업 기술의 조속한 진흥을 위하여 실업 기술 교육을 정책적으로 강조하였기 때문이다.

* 한국교육개발원 자문교수

제2차 교육과정기에는 기간 학교 외에도 특수 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실업고등전문학교, 교육대학의 교육과정을 편수국 주관하에 제정(개정)·공포하였다.<표 III-4 >

이 시기의 교과용 도서는 초등의 경우, 3년 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교과서를 국정으로 개편하였고, 중학교의 경우에는 1963년부터 도덕, 국어, 사회, 실업 등의 일부 교과는 국정으로, 여타의 교과는 검정으로 개편하기 시작하여 1965년도까지 검정 교과서를 포함한 전 교과의 교과서를 개편 완료하였고, 1966년도부터 사용케 하였다.

제2차 교육과정기 초기의 국정 교과서는 당시의 문교부 학무국에 속해 있던 편수관실의 14명의 교과별 편수관(일반직)에 의해 직접 편찬되었고, 검인정 교과서는 일반 자에 의해 집필된 것을 검정하여 사용케 하였는데, 문교부의 직제 개편으로 편수관과 편수과가 속했던 제2차 교육과정기 초기의 학무국은 1963년말부터 편수국으로 개편되었고, 그 밑에 편수과와 발행과를 두게 되었다. 그러나 편수관 정원이 과소하여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많았고, 게다가 일반직으로 되어 있어 결원이 생겼을 때의 인원 보충에도 애로가 많았다. 당시에는 한번 임명된 편수관이 장기간 복무를 하였으며, 거둬진 편수업무의 처리로 편수관으로서의 능력도 향상시킬 수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 제2차 교육과정기의 편수 업무는 막대한 업무량의 수행에 비해 선행되어야 할 여건의 마련과 기초적인 연구 조사 등이 미흡했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교육과정이나 교과서의 개편을 위한 내부적인 기초 연구가 아주 적었다.

이 연구에 있어서는 이러한 제한점이 있음을 상기하면서 당시의 실존 근무자들의 증언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등의 자료를 통해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관한 내용을 엮어나가려 한다.

2. 초·중등학교 교육 과정 개발

(1) 교육과정 개발

1) 제정(개정)의 배경과 경과

1954년 4월 20일에 문교부령 제 45호로 개정 공포된 각급 학교 교육과정은, 정부가 수립되고 얼마 안 된 시점에서 제정되고, 다시 6·25 사변을 겪는 등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학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여론이 많고 개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기초 조사가 적은 문교부로서도, 1958년부터 1959년

까지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여론 조사와 자료 수집에 착수하였다.

이 결과, 초·중등 교사의 45.5%가 교육과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고, 1961년에 교육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도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찬성 의견을 들었다. 뿐만 아니라, 문교부는 이 시기에 교육과정 심의회의 규정을 개정하였고, 세계 각국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교육과정 연구 기관의 조직 등의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특히 교육과정 제정의 절차, 시간 배당 기준 등과 관련되는 자료를 수집·조사하였다.

1961년의 5·16 혁명은 빈곤에서 탈피하는 교육, 인간 개조를 위한 교육을 내걸면서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조속히 개편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리하여 문교부는 편수 진용을 개편하고, 교육과정 심의 위원회(운영 위원회, 학교별 위원회, 교과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새로운 교육과정 시안을 마련하였다. 이 시안은 전국의 약 600개에 달하는 학교와 교육 연구 기관 및 교육 행정 기관에 보내어져 의견을 수집하였고, 검토·수정되었다. 이렇게 하여 마련된 제2차 교육과정은 1963년 2월 15일에 문교부령 제119, 120, 121, 122호(각각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실업고등학교)로 공포되어 국민학교는 1964년 3월 1일부터 1년에 2개 학년씩 3년 간에 걸쳐 시행케 하였고, 중학교는 당초 1965년 3월 1일부터 시행케 하였다가 후에 1966년 3월 1일부터로 연기하였다. 그리고 일반계 고등학교는 당초 1965년 3월 1일 시행으로 공포했던 것을 교육제도 심의회 규정이 공포되어 학제 개편 논의가 대두되면서 이 시행 공고를 ‘폐지’하였다가 1966년 7월 5일에 부활시켜 1968년 3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그러나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1963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 교육과정 심의회 조직

교육과정을 개정하기 위하여 착수한 교육과정 심의회 규정의 특색은 「교과별 위원회」, 「학교별 위원회」, 「운영 위원회」의 세 위원회를 둔 데 있으며, 이 밖에 원안 작성 등을 위한 「전문 위원」을 둘 수 있게 한 것이었다(1960. 12. 25. 각령 제 132호).

또, 이 규정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심의회 운영 제척도 정하였는데(1961. 3. 21.), 신설된 운영 위원회는 교육과정 제정에 있어서의 전체적인 원칙 및 목적 조정에 관한 사항을 조정 심의하게 되어 있었다(제 5조).

그리고 ‘각급 학교별로 소위원회를 조직하여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한다’(제 4조)고 규정하였다. 학교별 소위원회에는 ① 국민학교 소위원회 ② 중학교 소위원회 ③ 고등학교 소위원회 ④ 사범학교 소위원회 ⑤ 실업계 고등학교 소위원회 등이 있었다.

또, 운영 위원은 각 학교별 소위원회에서 추천하는 3인씩의 위원과 제 6조(위원)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되는 위원으로써 구성되어 그 위원 정수는 30인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

었다. 문교부는 1961년 8월에, 이 규정에 의하여 각종 위원회 위원 363명을 임명하고 정식으로 교육과정의 심의에 착수하였다. 이 시기의 운영 위원회 위원은 다음과 같다.

<표 III-1> 운영 위원회 위원¹⁾

성 명	소 속	비 고
김선일	문교부 장학실	
이회복	문교부 편수관	
왕학수	고려대학교	
정범모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윤태림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이영덕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서정근	서울중고등학교	
백현기	중앙교육연구소	
심태진	서울시 교육위원회	
이규백	한강국민학교	
최현배	한글학회	
주기용	오산국민학교	
김기성	단국대학교	

• 제 2차 교육과정 개정의 경위

<기초 조사>

편수국은 1959년 1월에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의 관계자 및 학부형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실태 조사 및 여론 조사를 실시하였다.²⁾ 그것을 동년 12월에 집계 분석하여 조사서가 완성되었는데, 그 중 일반 여론 조사에서 교육과정 개정의 필요성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II-2> 교육과정 개정의 필요 여부

학교별	회답수	개정 찬성 비율	평균 비율
국민학교	1272	40.6%	45.5%
중 학 교	1618	45.6%	
고등학교	1260	50.2%	

1) 문교부, 「교육과정 심의회 위원」 명부, 1961.

2) 문교부 편수국, 「교육과정 실태 조사 및 일반 여론 조사 통계 일람표」, 1959.

<표 III-3> 개정해야 할 이유

학교별	회답수	개정의 이유				
		실정과 맞지 않음	기초 학력 부족	구체적 목표 필요	시대에 뒤떨어짐	내용이 어려움
국민학교	1272	28.1%	25.8%	23.6%	11.0%	12.5%
중 학 교	1597	26.4%	24.9%	25.0%	13.4%	12.1%
고등학교	1112	28.5%	18.7%	22.8%	14.3%	15.7%

• 자료 수집

문교부에서는 제2차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참고 자료의 수집에 착수하여 자유 우방의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대상으로, 서울에 있는 각국 대·공사관에 의뢰하기도 하고, 피바디 교육 사절단을 통하여 편수관을 해외로 파견하여 각국의 교육과정 연구와 자료 수집을 하게 하였다.

또, 유네스코 한국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1959년 2월부터 3개월 간 편수관을 파견하여 서독, 영국, 미국, 일본 등의 교육을 시찰케 하고, 각국의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수집하게 하였다.

• 제 2차 교육과정기의 편수국 적체

1961년 5월 16일, 군사 혁명에 의해 설치된 군사 혁명 위원회는 헌법에 상응하는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을 제정하고, 최고 통치 기관의 지위를 가진 국가재건최고회의를 발족시켜 혁명 정부의 기구 개편을 시도하였다.

1961년 10월 2일 정부 조직법(법률 제734호)을 전면 개정 공포하여 문교부 직제가 개정 공포(각령 제180호)됨으로써 문교부는 4국 14과로 개편되어 종래의 편수국이 폐지되고 학무국(편수과, 교육과정과)에 통합되었으며, 편수국에 소속되어 있던 편수관이 장학관과 함께 신설된 학무국에 속하게 되어 사실상 장학 기능과 편수 기능이 통합되었다. 즉, 학무국 아래 편수관을 두고, 편수과와 교육과정과를 두었다.

1963년 12월 14일, 제3공화국의 정부 조직을 확정하는 정부 조직법이 개정 공포(법률 제1506호)되었고, 문교부 직제가 동년 12월 16일 개정 공포(각령 제1737호)되었는데, 이는 5·16 혁명 후 설치되었던 학무국과 학교 관리국을 폐지하고, 문교부 직제 개편(1961. 10. 2) 이전의 형태와 같이 대상별·혼합형 조직의 형태를 갖춘 것이다. 따라서, 편수국이 다시 국으로 승격되어 편수과와 발행과를 두었다.

제3공화국이 들어서면서 문교부 직제는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몇 차례에 걸쳐 개편되었다. 경제 개발 계획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과학 기술 인력의 양성을 위한 행정 체제로 개편되고, 1968년 7월 24일자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2041호)으로 예술·문화재 관리에 관한 업무가 문화 공보부로 이관됨에 따라 동일자로 문교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512호)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문교부의 업무 중 출판·저작권·문화·예술의 기능을 삭제하고, 국정 교과서 편찬과 교과용 도서의 검·인정 기능을 추가한 것이었다.

1970년대에 들어와서도 몇 차례 정부 조직법과 문교부 직제가 개편되었으나, 편수국의 직제는 계속 유지되었으며, 1978년 3월 14일(대통령령 제8889호)에 편수국이 다시 폐지되고 장학실에 통합되었다.

1961년의 5·16 사태는 문교부와 편수국에 일대 혁명을 가져왔다. 다행히, 홍웅선 편수관이 학무국장으로서 승진되고 교육과정 과장에 신집호 편수관이 임명되었다. 그 직전에 해병 대령 문희석씨가 제10대 문교부장관으로 취임한 직후 최고 회의의 지시에 의하여 편수관을 포함한 장급은 전원 사표를 내고 대기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홍웅선 국장은 국립 농아학교 교장으로 전출하였다가 사퇴하고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 이와 같이 하여 1963. 12. 6 편수국이 독립할 때까지 편수국장이란 자리와 직책이 없어졌으며, 대신 법규정이나 직제에는 없었지만 부이사관급의 수석 편수관을 따로 독립시킴으로써 편수국장의 구실을 하게 하였다.

● 제2차 교육과정기의 편수관 명단

정부가 환도한 후부터 1961년의 5·16 혁명 전까지는 홍웅선(국어), 조기환(수학), 최병철(사회), 이상선(사회), 오연석(과학), 홍순철(영어), 최홍준(지리), 안병용(미술), 이희복(국어), 최영복(과학), 김종빈(도덕), 이수남(수학), 신집호(서예), 연정희(실업), 이정인(역사) 등의 편수관이 근무하였다.

5·16 혁명 후에도 이희복(국어, 수석 편수관), 김종빈(도덕), 이정인(역사)의 세 편수관은 계속 남아 있었고, 김낙신(가정), 이영택(지리), 고창식(국어), 정세문(음악), 황오성(역사), 김상만(수학), 전상범(미술) 편수관 등이 새로 보충되었다.

1962년 5월, 문교부의 신문 공고에 의하여 공채 시험에 응시 합격한 최영복(과학; 교장으로 전출하였다가 복귀) 편수관이 임명되고, 뒤이어 곽상만(농업), 임병기(생물), 김중우(공업), 정준모(물리) 등이 편수관으로 임명되었다.

이 때까지만 하여도 편수관(이사관, 서기관, 또는 사무관에 해당)은 일반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고등 전형 행정과의 전형 시험(시험 과목은, 1차 선발 시험은 전공 과목, 영어, 국어, 교육과정, 2차 전형 시험은 법제 및 상식)에 합격해야 했다. 이 장치로 말미암아 혁명 정부라 할지라도 자기들 뜻대로 편수관을 임명하지는 못하였다.

그 후, 이병호(국어), 이종학(미술), 박춘호(영어), 은용기(사회), 이정실(수학), 임광재(역사), 황벽(공업), 정진권(국어) 등이 전형 시험을 거쳐 편수관실에 합류하였다. 그러나 공채에 의한 일반직으로서의 편수관 보충은 인선하기도 어렵거니와 시험을 거쳐 임용하기까지 상당히 긴 시일이 걸렸으므로 과거와 같은 방식의 임용은 매우 어렵게 되었다.

그리하여 제 2차 교육과정기 후반기인 1969년 9월부터 교육 연구관 자격으로 편수관을 보임하는 제도를 검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박순만(불어·일어), 허강(실업), 장운식(수학), 이옥임(가정), 한형식(체육), 김덕기(영어) 등이 편수관으로 발령되었다.

2) 교육과정의 성격과 변천

① 교육과정의 성격

제 2차 교육과정에서는 자주성과 생산성, 유용성, 합리성, 지역성을 강조하였다. 기존 교육에서는 이상과 현실이 유리되어 왔으므로, 구체적이고 자주적인 교육 목표를 수립하고, 문제를 중심으로 학습 내용을 선정하여 국가·민족의 무궁한 민주적 발전을 기하고자 자주성을 강조한 것이다.

또한, 생산성의 강조와 관련해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만들고, 먹고, 입고, 살고 하는 적당한 방법을 습득시켜 생활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태도와 기능을 길러 나가도록 하는 데 주력’하였으며, 유용성과 관련해서는 학교와 사회와 생활이 서로 불가분의 관계가 있음을 주장하면서, ‘국가 사회의 절실한 요구, 학생 생활에 필요 불가결한 과제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생활 경험을 통하여 교육함으로써 쓸모 있는 사회인이 되게 하고, 자활할 수 있는 현실인의 육성’을 강조하였다.

제 2차 교육과정은 외국의 교육 사절단에 의해 지속적으로 제안되어온 생활 중심 교육과, 개혁 및 발전이라는 당시 사회의 시대적 요구를 수용하여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하려는 의지를 강하게 보여 주고 있다.

즉, 교육과정을 서로 단절된 하나의 교수 요목이나 지적인 체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지도하에 학생들이 가지는 경험의 총체’라고 보고 있다. 생활 중심 교육과정에서는 경험 자체를 교육과정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생활 중심 교육과정의 정신은 제2차 교육과정의 곳곳에 나타나 있다. 총론의 ‘교육과정 구성의 일반 목표’에서 “교육과정은 곧 학생들이 학교의 지도하에 경험하는 모든 학습 활동의 총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경험 여하에 따라 그들이 어떤 인간으로 성장하게 되느냐가 결정되는 것이다.”라고 정의하고, 그 성격을 밝히고 있는데, 이 정의는 가장 보편적인 생활 중심, 경험 중심 교육과정의 정의인 것이다.

제 2차 교육과정의 성격을, 교육과정에서 강조한 ‘강조점’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자주성의 강조이다. 자주성은 민족의 자주성, 교육의 자주성, 교육과정 구성의 자주성, 학습의 자주성 등 네 가지 각도에서 강조되었다.

둘째로, 생산성의 강조이다. 교육은 사회 생활을 유지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물자를 만들어, 이것을 현명하게 이용함으로써 더욱 값있는 생활을 발전시키는 기능을 지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소비 생활에 편중되었던 종전의 학습 내용을 재검토하여, 생활하는 방법을 습득시켜 기르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로, 유용성의 강조이다. 교육 현실을 반성할 때 국가나 개인을 막론하고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고, 학교와 사회, 교육과 생활은 밀접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므로, 사회의 요구와 필요는 그대로 학습의 과제가 되어야 하며, 일단 교육을 받은 다음에는 자활적인 생활 능력을 갖추어 유능한 역군으로서 국가 사회의 번영 발전에 헌신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넷째로, 합리성의 강조이다. 교육과정의 구성에 있어서는 교육 목표의 설정과 교육 내용의 선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교육 내용의 선택에 있어서는 내용의 계통성,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선택된 내용을 조직하는 문제, 학생의 심신 발달, 흥미나 능력에 따라 배열하는 문제 등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짚 교육과정이 합리적인 교육과정이다. 제2차 교육과정 개정에서는 합리성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다섯째로, 지역성의 강조이다. 학교는 국가 기준의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지방과 학교의 지역성을 충분히 고려한 독자적인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운영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② 제 2차 교육과정기의 각급 학교 교육과정 변천

제 2차 교육과정기인 1963년 2월부터 제3차 교육과정이 개정되기 전까지, 각급 학교 교육과정이 개정되었거나 제정된 상황은 <표 III-4>와 같다.

<표 III-4> 제 2차 교육과정기의 각급 학교 교육과정 변천

각급 학교 교육과정	문교부령	공포 연월일	비 고
국민학교 교육과정	제 119 호	1963. 2. 15	개 정
중학교 교육과정	제 120 호	1963. 2. 15	개 정
고등학교 교육과정	제 121 호	1963. 2. 15	개 정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제 122 호	1963. 2. 15	개 정
유치원 교육과정	제 131 호	1964. 1. 8	개 정(부분)
인문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제 169 호	1966. 2. 14	폐 지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제 173 호	1966. 7. 15	부활(1968. 3. 1 시행)
중학교 교육과정	제 175 호	1966. 10. 4	교육과정령제정(계열별)
인문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제 181 호	1967. 4. 15	교육과정령으로 통합 (1968. 8. 1 시행)
특수 학교 교육과정	"	"	"
인문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제 187 호	1968. 1. 25	제 정
실업 고등 전문학교	"	"	"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제 207 호	1969. 2. 19	제 정
각급학교 교육과정(교육대 포함)	제 207 호	1969. 2. 19	개 정(부분)
실업고등 전문학교 교육과정	제 207 호	"	"
교육대학 교육과정	"	"	"
각급 학교 교육과정	제 251 호	1969. 9. 4	개 정(부분)
국민학교 · 고등국민학교 교육과정	제 254 호	1969. 12. 11	제 정
인문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제 274 호	1971. 2. 19	개 정
실업중학교 교육과정	제 286 호	1971. 9. 24	개 정
기술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교육과정	제 286 호	1971. 8. 24	개 정
실업계고등학교 교육과정	제 286 호	1971. 8. 24	개 정
중학교 교육과정	제 300 호	1972. 5. 8	개 정(부분)

3) 개정의 기본 방향과 특징(중점)

① 개정의 기본 방향

제 2차 교육과정의 전체 교육 구조는 국민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① 지식과 교양면을 중심으로 한 교과 활동, ② 도덕심의 양양과 승공 사상의 확립을 위한 반공 도덕 생활, ③ 민주 사회인으로서의 생활 태도, 개성의 신장 등을 중심으로 한 특별 활동의 3대 영역으로 조직되었으며, 고등학교의 경우, ① 교과 활동, ② 특별 활동의 2대 영역으로 조직되어 있다.

제 2차 교육과정에서는,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당시의 사회가 절실하게 요청하는 인간상의 구현(학습 경험의 선정과 학습 활동)을 위하여 그 기본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³⁾

3) 문교부, 「국민학교 교육과정 해설」, 1963, p. 13

- 민주적 신념이 확고하고 반공 정신이 투철하며, 민주적인 생활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인간상을 양성하는 데 가장 적합한 학습 경험을 포함시킨다.
- 독립 자존의 민족적 기풍과 아울러 국제 협조의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학습 경험을 포함시킨다.
- 일상 생활에서 당면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필요하고 유익한 지식과 유용한 기능 및 과학적 생활 태도를 기르는 데 직결되는 학습 경험을 포함시킨다.
- 가난을 극복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데 필요한 학습 활동을 충분히 포함시킨다.
- 건전한 정신과 강건한 신체를 가진 국민을 양성하는 데 직접 기여할 수 있는 학습 활동을 포함시킨다.
- 국민 생활을 순수하고 명랑하게 하는 심미적인 정서 생활을 위하여 풍부한 개성을 개발하도록 한다.
- 형식적 추상적 지식에 치우쳤던 반공·도덕 교육을 쇄신하여 일관성 있게 지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실천적 교육에 주력한다.

② 제2차 교육과정(개정)의 특징

제2차 교육과정은 당시 교육 사절단의 지속적인 진보주의 교육내지 생활 중심주의 교육과 개혁 및 발전이라는 당시 사회의 시대적 요구를 교육과정에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제2차 교육과정이 구 교육과정과 구별되는 뚜렷한 특징은 교육의 일반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인데, 학교 교육을 통하여 달성하여야 할 교육 목표 일곱 가지(위에 제시한 7가지)를 ‘개정의 기본 방향’에 제시하였다.

구 교육과정에서는 교과별 시간 배당 기준 및 각과의 교육과정만을 제시하였을 뿐, 학교 교육과정 전체를 통한 교육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 교육법이 지향하는 교육의 목표와 교육과정이 어떤 관련을 가지는지에 대한 아무런 언급도 없었다. 그러나 제2차 교육과정에서는 교육법에 제시한 교육 목표를 교육과정에 구체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교육법과 학교 교육과정 간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제2차 교육과정의 체제 및 편제상의 특징을 살펴보면, 구 교육과정과는 달리 교육과정 전체를 ‘총론’과 ‘각론’으로 나누어 서술했고, 총론에서는 초·중등학교에 공통되는 개정의 취지, 일반 목표, 개정의 요점 등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학교급별 시간 배당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활동별 운영 계획을 교과 활동, 반공·도덕 활동·특별

활동으로 나누어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각론에서는 교과별로 개정의 요점, 교육 목표, 지도 내용, 지도상의 유의점 등을 통일된 형식으로 자세하게 서술하고, 교과별 학년 목표를 제시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교과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교육 내용의 학교급 간의 연계성과 교과 간의 통합성을 강조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계통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내용을 엄선하여 기초 학력의 충실화를 기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제 2차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의 이론 및 체계에 있어 형식의 틀을 처음으로 갖추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그리고 제2차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의 의미를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하고, 교육의 일반 목표 및 학년 목표를 제시한 점, 교육 내용의 연계성과 교과 간의 통합성을 강조한 점에서 볼 수 있듯이 교육과정의 이론적 틀을 갖추려는 노력도 하고 있다.

특히, 제 2차 교육과정은 그 동안 꾸준히 제안되어온 생활 중심 교육과정관을 교육과정에 구체적으로 반영하려 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4) 학교급별 주요 제정(개정) 내용

① 국민학교

제 1차 교육과정이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과 ‘교과과정’을 별도로 공포했던 것을 제 2차 교육과정에서는 이를 합쳐 일련의 체계를 갖춘 교육과정으로 공포하여 명실 공히 교육과정으로서의 체계를 갖추었다. 그리고 명칭도 제1차의 ‘교과과정’에서 ‘교육과정’으로 바꾸어, 교육과정이 교과 활동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의 전 활동과 관련되는 교육과정의 전체 구조에 의한 계획이라는 성격을 분명히 하였다.

교육과정의 전개 체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총론과 각론으로 나누어 진술함으로써 체계면에서 통일된 형식을 갖추었다.

지금까지 전 교과 및 기타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각 학년 총 수업 시간 수의 범위 내에서 35시간씩 확보하여 시행하던 도의 교육, 반공 교육 영역을 교과 활동, 특별 활동과 같은 수준의 영역으로 신설하였고, 특히 시간 배당도 주당 1시간을 배당하여 이수하도록 하였다.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에 나타난 특징은 구 과정에서 각 교과별 시간 수를 총 이수 시간에 대한 백분율과 연간 이수 시간 수를 표시한 것과는 달리 교과별로 주당 이수 시간으로 표시하고, 특별 활동은 총 이수 시간 수의 %로 표시, 그 폭을 두어 운영의 자율

성, 융통성, 신축성을 기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교과는 8개 교과로 하였는데, 특기할 것은 사회 생활과가 사회과로 명칭이 바뀐 것이다.

<표 III-5> 국민학교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1963. 2)

구분 \ 학년		1	2	3	4	5	6
교과	국 어	6~5.5	6~7	6~5	5~6	6~5.5	5~6
	산 수	4~3	3~4	3.5~4.5	4.5~4	4~5	5~4
	사 회	2~2.5	3~2	3~4	4~3	3~4	4~3
	자 연	2~2.5	2~2.5	3.5~3	3~3.5	4~3	4~3
	음 악	1.5~2	2~1.5	2~1.5	1.5~2	2~1.5	1.5~2
	체 육	2.5~3	3~2.5	3~3.5	3.5~3	3~3.5	3.5~3
	미 술	2~1.5	2~1.5	2~1.5	1.5~2	2.5~1.5	1.5~2.5
	실 과				2~1.5	2.5~3	2.5~3.5
반공·도덕		1	1	1	1	1	1
계		21	22	24	26	28	28
특별 활동		5~10%	5~10%	5~10%	5~10%	5~10%	5~10%

이 교육과정의 형식과 내용면에서의 특징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 형식면

- ㉠ 시간 배당 기준과 각 교과 내용이 종합적으로 제정되었다.
- ㉡ 학년별로 주당 시간이 정해져 있고, 교과별로 최저·최고의 시간을 표시하였다.
- ㉢ 교과 활동, 반공·도덕 생활, 특별 활동의 3영역으로 구성하였다. 반공이 강조되었다.
- ㉣ 각 교과의 서술 형식을 목표, 지도 내용, 지도상의 유의점으로 통일하였다.

• 내용면

- ㉠ 계통 학습을 통하여 기초 학력의 충실을 기하였다.
- ㉡ 교과에 학년 목표를 세워 목표와 내용이 일관되도록 하고, 교과 간의 중복을 피하였다.
- ㉢ 저학년에서는 종합 지도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부분 개정

1963년 2월에 공포된 제2차 교육과정은 1964년부터 연차적으로(1, 2학년 1964년, 3, 4학년 1965년, 5, 6학년 1966년) 시행하도록 하여 이에 맞추어 교과서를 발간하였다. 그 후, 1968년의 국민 교육 현장의 선포, 중학교 무시험 진학 제도, 대입 예비 고사제 실시 등에 따라 교육과정의 전면 개편을 하기로 했으나, 우선 긴급을 요하는 것을 부분 개정하였다. 이 때, 국민 교육 현장의 구현과 한글 전용 계획 등 정부 시책과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시행 중인 교육과정의 불비한 점을 보완한다는 취지 하에, 1969년 9월 4일 문교부령 제251호로 초·중·고 교육과정을 부분 개정하게 되었다.

그 내용 중 국민학교와 관련되는 것은 교과 활동의 국어과에서 완전한 한글 전용을 실시하기로 한 것과, 미술과에서의 표준색을 종래의 12색(또는 24색)에서 10색(또는 20 색)으로 한 것, 반공·도덕의 시간 배당을 1시간에서 2시간으로 한 것 등이다. 특별 활동을 강화하여 학급 활동, 학생회 활동, 클럽 활동, 집단 활동 등 각 활동을 학생의 성장·발달에 적합하게 하기 위하여 지도 내용, 지도상의 유의점을 제시하였다.

② 중학교

체제 및 편제상의 특징은 국민학교의 경우와 유사하다. 다만, 시간 배당표에 나타난 특징은, 구 과정과는 달리 중학교 교육이 보통 교육임에 비추어 선택 교과를 두지 않고 공통 필수 교과만을 두었다는 점과, 교과 내의 분과를 허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구 과정은 각 학년의 주간 배당 시간이 34~38시간이었는데, 이 때에는 30~33시간에 특별 활동을 8% 이상 과하여 주당 총 이수 시간을 1시간 정도 줄였으며, 수업 시간도 구 과정의 50분 단위를 45분 단위로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상당한 감축을 이루었다.

<표 III-6> 중학교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1963)

과정 \ 학년		1	2	3
교과	국 어	5~6	5~6	4~6
	수 학	3~4	3~4	2~4
	사 회	3~4	3~4	2~4
	과 학	3~4	3~4	2~4
	체 육	3~4	3~4	2~4
	음 악	2	2	1~2
	미 술	2	2	1~2
	실업·가정	4~5	4~6	3~12
	외국어	3~5	3~5	2~5
반공·도덕		1	1	1
총 계		30~33	30~33	30~33
특별 활동		8%~	8%~	8%~

③ 고등학교

체제 및 편제상의 특징은 국민학교와 중학교의 교육과정과 유사하나 시간 배당 기준표에 나타난 특징은 구 과정과는 달리 단위제와 과정별 선택 과정을 채택했다는 점이 다르다.

인문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은 구 교육과정에서와 같이 필수, 선택으로 나누어 교과군을 편성한 것이 아니고, 공통 과목 외에 인문 과정, 자연 과정, 직업 과정으로 나누어 과정별 선택 과정을 마련하였다.

특별 활동은 구 교육과정에서처럼 교육과정 편제에 명시하지 않고, 교과 과목 단위 시간 기준 지침에서 총 단위 시간 수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시간을 배당 시간 안에서 충당하도록 하였다.

<표 III-7> 고등학교 교과 과목 단위 시간 배당 기준표

교과	과목	단위수	교과	과목	단위수
국어	국어 I	24	미술	미술 I 미술 II	6 42
	국어 II 문법(4) 한문(6) 고전(4) 작문(4)	18		농업 농업 일반 일반 관리 기타 과목	14 4 38
사회	일반 사회 국민 윤리 정치 · 경제 국제 사회 세계사 I 지리 I 지리 II	4 4 4 6 6 6 6	실업	공업 공업 일반 일반 관리 기타 과목	14 4 38
	공통 수학 수학 I 수학 II	8 12 26		수산 수산 일반 일반 관리 기타 과목	14 4 38
과학	물리 I 물리 II 화학 I 화학 II 생물 I 생물 II 생지학	6 12 6 12 6 6 4	가정	상업 상업 일반 일반 관리 기타 과목	14 4 38
	체육	24		가정 일반 일반 관리 기타 과목	14 4 38
음악	음악 I 음악 II	6 24	외국어	영어 I 영어 II 독어 불어 중국어	18 30
				1과목 또는 2과목	

④ 실업계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는 법상 30% 이상의 실업 전문 교과목을 이수하도록 한 것이 특색이다.

인문계 고교에서는 전 교과목의 10% 이상의 실업 교과목을 과하는 데 반하여 실업계 고교에서는 법상 30% 이상, 교육과정상 50~60% 이상의 실업 전문 교과목을 과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실업 전문 교육이 보통 교육보다 우위에 있다. 실업계 고등학교는 전문 교과목의 종류에 따라 농업, 공업, 상업, 수산업, 가정 등의 명칭을 붙인 고등학교로 분류되는데, 계열별 학교의 교과 편제와 단위 배정은 각기 특색 있게 조직되어 있다.

<표 III-8> 실업 고등학교의 교과 편제 및 단위 배당 기준표

보통 교과목		선택 교과목					
			농업계	공업계	상업계	수산계	가정계
필수 교과목	단위		"	"	"	"	"
국 어 일반 사회 및 국민 윤리 국 사 보통 수학 일반 관리 체 육	18	수 학	8~16	8~16	8~16	6~16	6~12
	6	생 물	4~6	4~8	6~16	6~16	4~6
		화 학	4~6		3 과목중	3 과목중	2~4
	4	물 리	2~6	4~8	1 혹은 2	1 혹은 2	2~4
		지 리	2~6	2~6	2~6	2~6	2~6
	8	정치·경제	2~4	2~4		0~4	2~4
	4	세계사	2~6	2~6	4~6	2~6	4~6(음)
	12	음악 또는 미술 외국어			2~6		4~6(미) 12~24
계	52		38~50	36~48	38~50	30~37	38~50
필수 및 선택 합계			90~102	88~100	90~102	82~89	90~102
전문 교과목(필수+선택) 전문 교과목/보통 교과목 비율			102~120 50% 이상	112~122 50% 이상	102~120 50% 이상	115~133 60% 이상	102~120 60% 이상
이수 단위 총계(특활 포함)			204~222 주당(34~37시간)				
특별 활동			5% 이상				

● 부분 개정

1963년에 공포된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1965학년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1964년 ‘교육 제도 심의회 규정’이 공포되자 학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어, 학제 개편 문제가 확정되지 않아 일단 폐기되었다가 1966년 7월 15일에 다시 부활되어, 1968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 후, 문교부는 교육과정의 전면 개편 작업을 하기로 하였으나, 가장 긴급을 요하는 것부터 우선적으로 부분 개정하기로 하였으며, 현행 교육과정의 불

비한 점을 보완한다는 취지하에, 1969년 9월 4일 문교부령 제251호로 교육과정의 부분 개정을 했다.

5) 총론 및 각론의 주요 개정 사항

① 총론의 주요 개정 사항

제2차 교육과정을 그 성격과 추구하는 인간상 교육 목표, 교육과정의 구조 등을 포괄하는 관점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제2차 교육과정의 성격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생활 중심의 교육과정이며, 자주성, 생산성, 유용성, 합리성, 그리고 지역성을 강조함으로써 추구하려는 인간상이 무엇인가를 보여 주고 있다.

제2차 교육과정의 총론에 표시된 일반 목표 7개항도 이미 ‘개정의 기본 방향과 특징’에서 언급하였지만, 그 항목들이 포함하고 있는 하위 목표들이 지닌 특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정의 구성에 앞서 일반 목표를 제시하였다. 제1차 교육과정에는 없었던 것인데, 교육과정 구성에 대한 의도를 목표 형식으로 사전에 밝힘으로써 구성 방향이 분명해지고, 그 의도하는 바가 구성안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으며, 안 자체가 일관성을 지니게 했다. 이렇게 교육과정 구성의 일반 목표를 명시한 것은 교육과정 편성에 있어 바람직한 것이었다.

둘째, 구성의 일반 목표를 매우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구성의 일반 목표는, ㉠ 민주적 신념의 확고, 반공 정신의 투철, 민주적인 생활 발전, ㉡ 독립 자존의 민족적 기품 함양, 국제 협조 정신의 함양, ㉢ 당면한 생활 문제 해결의 지식 및 기능 습득, 과학적 생활 태도의 육성, ㉣ 가난 극복, 경제적 효율성의 증진, ㉤ 건전한 심신을 지닌 국민의 양성, ㉥ 심미적인 정서 생활을 위한 개성의 개발, ㉦ 반공·도덕 교육의 쇄신 등이다.

셋째, 구성 일반 목표의 진술 방식이 지향해야 할 목표와 ‘학습 내용’, ‘학습 활동’, ‘학습 기회’의 마련, ‘노력 중점’, ‘계획 수립’ 등을 결부시키고 있다. 구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이 효과적으로 구성되려면, 여러 가지 지도 방식이나 학습자의 학습 방식 가운데에서 어떤 것이 적절한 것인가를 함축하고 있어야 한다.

제2차 교육과정의 구조를 중심으로 내용에 대한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국민학교와 중학교의 교육과정의 전체 구조를 교과 활동, 반공·도덕 생활 및 특

별 활동으로 하였다.

- ㉠ 기초 학력의 충실을 기했다. 각 교과에 걸쳐 교육과정의 내용은 필요 불가결한 요소를 엄선하여, 기초 학력을 충실히 하도록 하였다.
- ㉡ 교육과정의 계열을 합리화하여 각 학교 사이에 일관성을 지니도록 하였다. 각 교과를 통하여 학년 안에서의 횡적 연관을 취했고, 학년을 통한 종적 체계를 세워 동질적인 중복을 피하도록 하였다.
- ㉢ 생활 경험을 중심으로 하는 교과 경영을 지향하여 관련성 있는 교과의 종합 지도를 강조하였다. 국민학교 1, 2학년에서는 각 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종합 지도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 중학교의 교과는 공통 필수 교과만을 두었다. 중학교 교육이 보통 교육임에 비추어 구 교육과정의 선택 과목을 없애고, 3학년의 시간 배당을 조절하여 학생의 진로 지도를 가능하게 하였다.
- ㉤ 고등학교에서는 단위제를 채택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완전한 단위제를 실시하기는 곤란하나, 고등학교 교육의 획일성을 지양하고, 학생의 진로에 맞는 융통성을 주어, 유용성 있는 교육이 되도록 과목 선택의 융통성을 주었다.
- ㉥ 각급 학교의 관리 교육을 강화하였다. 관리 교육은 구 교육과정에서도 실시하였던 것이나, 국민학교와 중학교에는 필요한 단위를 설정하고, 고등학교에는 실업·가정에서 체계화된 교과목을 설정하였다.
- ㉦ 시간 배당에 융통성을 주었다. 국민학교와 중학교는 최소 시간과 최대 시간을 표시하며, 고등학교는 개별 선택을 가능하게 하여 학교의 실정을 반영시킬 수 있게 하였다.

가. 교과 활동

교과 활동은 교육과정에 편제된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음악, 체육, 미술, 실업·가정 및 외국어의 9 교과를 지도하여 교육 목표를 달성하도록 한다.

이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각 교과의 목표 및 학년 목표
- 각 교과의 지도 내용 등은 각론에서 규정
- 교과 활동의 계획과 운영상의 유의점은 다음과 같다.

- ㉧ 학습 경험의 선정에 있어서는 학생의 발달 단계와 생활 경험을 충분히 고려한다.

- ㉠ 학습 경험의 조직에 있어서는 학생의 흥미, 관심, 필요 등에 유의하여 그들로 하여금 학습 목표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발적으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의한다.
- ㉡ 학생들로 하여금 각자의 능력과 개성을 자각케 하고, 자기 자신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동시에, 장래의 진로를 정확히 결정하는 데 필요한 학습 경험이 충분히 고려되도록 한다.
- ㉢ 모든 학습 경험은 향토 사회를 중심으로 전개하여, 국가 생활에 있어서 중견 국민으로서 필요한 이해, 기능, 태도를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 ㉣ 중학교의 교과에는 선택 교과를 두지 아니하며 교과 내의 과목 분과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단, 외국어는 영어를 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독어, 불어, 중국어를 택하여도 무방하다.
- ㉤ 실업·가정과는 1학년에 있어서는 실업 일반에 관한 학습을 공통으로 과하고 2, 3학년에 있어서는 농, 공, 수산, 가정, 상업의 다섯 분야로 분별하여 그 중 한 분야만을 선택케 하여 지도한다. 단, 여학생에게는 가정에 관한 학습 경험을 모든 학년에 걸쳐 계속적으로 발전시키도록 한다.
- ㉥ 반공·도덕에 관한 학습 내용은 모든 교과에서 다루어져야 하며, 특히 사회 생활과에서 강조한다.

나. 반공·도덕 생활

확고한 민주적 신념과 철저한 반공 의식을 함양하는 것은 학교 교육의 중요한 목표의 하나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의 모든 기회를 포착하여 일관성 있는 종합적 지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학습 활동의 기회가 풍부히 마련되어야 한다.

다. 특별 활동

특별 활동은 교과 학습은 아니나, 교과 학습과 동일한 비중으로 학교 교육의 일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학교 교육의 일환으로서 다루어져야 한다.

특별 활동에 배당되는 시간은 상급 학교로 갈수록 많아진다. 국민학교는 교과 활동과 반공·도덕 생활 시간을 합한 시간의 5~10%의 시간을, 중학교는 교과 활동과 반공·도덕 생활 시간을 합한 시간의 8% 이상을, 인문계 고등학교는 총 이수 단위 시간 수의 10% 이상을, 실업계 고등학교는 총 이수 단위 시간의 5% 이상을 배당하도록 되어 있다.

특별 활동은 클럽 활동이나 자치 활동 외에 학교 행사 등을 포함하며, 학교 행사 등은 교육적 고찰 없이 종래에는 방치되었던 것인데, 제2차기에는 이를 교육 활동으로 간주하고 그 운영을 학교에 일임하였다.

② 각론의 주요 개정 사항

제2차 교육과정에서는, 사회, 과학, 실업·가정 등의 교과를 살펴볼 때, 그 내용에 있어 종합성이 증대되고 있다. 구 교육과정에서는 많은 과목으로 세분되어 교육과정 운영면에서나 학습의 효과면에서 어려움이 있었으나 제2차 교육과정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있다.

중학교 사회과의 경우를 보면, 구 과정에서는 지리, 역사, 공민, 도의가 1주 1~2시간씩 1학년에서 3학년까지 과해지고, 각 소과목에서의 기성 지식의 체계가 존중된 나머지 사회과 내의 횡적 관련은 거의 무시되었다. 1학년에서는 생활 환경의 공간적인 고찰(지리 부분), 2학년에서는 인류 생활 발전의 시간적 고찰(역사 부분), 3학년에서는 현실 사회 생활의 기구와 활동에 대한 고찰(공민 부분)으로 소과목 개념이 해소되고 있다. 이와 같은 과정은 학습의 집중, 지도 교사의 배치, 중학생에게 필요한 가이드ন্스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적합한 과정 형태라 하겠다.

과학의 경우를 보면, 구 과정에서는 물상, 생물의 두 분야가 병렬로 구조되어 있었다. 제2차 교육과정은, 이들을 하나의 「과학」으로 편성하여 생물, 지리, 화학, 지학적인 내용을 각 학년에 균형있게 유기적으로 배열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법은 학습 내용의 정선을 필요로 하고, 현장 학습, 실험 실습 등을 통한 집중적 학습을 가능케 하였다.

실업·가정과 의 경우를 보면, 구 과정은 선택으로서 농, 공, 상, 수산, 가정 중 하나를 과하도록 되어 있었다. 제2차 교육과정은 남자는 구 과정에서 각 학년에 배열되어 있었던 공통 요소를 제1학년 과정에 모아 공통 종합 과정으로 하였고, 제2, 3학년에서 농, 공, 상, 수산 중 한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였다. 여자의 가정에서는 가사 실업을 농, 공, 상, 수산처럼 과하게 한 것도 특색이다.

실업·가정과 는 필수 교과이지만, 내용상으로는 어느 한 과정을 선택 이수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선택 교과이며, 특히 3학년은 시간 배당 최고 한도를 주 12시로 하여 개인의 특성에 맞는 다양성을 기하도록 하였다.

이 때의 각 교과 의 교육과정 각론 형식을 보면, 교과 의 목표, 내용, 운영 등의 제시 방법에 있어 체계성을 기하고 있다. 예컨대, 목표의 제시에 있어서는 교과 의 일반 목표

와 학년 목표를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6)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별로 총론과 각론으로 편성된 제2차 교육과정은 총론편은 각급 학교가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이 편제되어 있다.

1. 교육과정 개정의 취지
 - (1) 교육과정의 내용 - 자주성의 강조, 생산성의 강조, 유용성의 강조
 - (2) 교육과정의 조직 - 합리성의 강조
 - (3) 교육과정의 운영 - 지역성의 강조
2. 교육과정의 일반 목표 - 7개 항목
3. 교육과정 개정의 요점 - 9개 항목
4. 학교별 교육과정
 - (1)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
 - (2) 교과 활동
 - (3) 반공·도덕 생활
 - (4) 특별 활동

학교별 교육과정의 제정·적용 등의 경과, 시간 배당 기준, 교과 활동, 특별 활동에 대한 운영 지침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민학교

가. 제정·적용 경과

국민학교 교육과정은 문교부령 제 119호인 ‘국민학교 교육과정 제정의 건(1963. 2. 15 공포)’으로 되어 있으며, 이 영은 1964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학교별 또는 교과별 시행 단계와 그에 따르는 과도 조치는 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하였다.

나.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

국민학교의 교육 계획은 다음의 시간 배당 기준에 따라 지도하도록 하였다.

㉠ 시간 배당 기준표는 교과 활동, 반공·도덕 생활, 특별 활동의 지도를 위한 주당 시간량을 최소 시간과 최고 시간으로 나타낸 것이다.

㉡ 학교 수업 일수는 연간 35주를 기준으로 하고, 1시간의 수업은 40분 단위로 하되,

1학년에 한하여는 34주로 한 것이다.

- ㉞ 학교에서는 기후, 계절, 아동의 발달 정도, 학습 경험, 내용이 성질 등을 감안하여, 실정에 맞도록 시간 단위를 조정한다.
- ㉟ 반공·도덕 생활의 지도를 위한 배당 시간은 각 학교의 실정에 맞는 계획을 세워 실천 지도에 충당한다.
- ㊱ 각 학교에서는 시간 배당 기준에 의거하여 아동 및 향토 사회의 특수성에 적합한 시간 계획을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시간 배당 기준의 한도에서 학기간, 계절간, 월간, 일간, 시간 계획에 충분한 신축성을 고려할 것.
 - 실제 지도에 있어서는 학습 경험의 계속성, 통합성, 계열성이 보장되도록 시간 계획을 수립할 것.
 - 일일 시간 계획은 교과 활동, 반공·도덕 생활, 특별 활동, 학교 행사 등에 걸친 다양한 학습 활동을 하도록 할 것.

다. 교과 활동

교과 활동은 교육법에 규정된 국어, 산수, 사회, 자연, 음악, 체육, 미술 및 실과의 8교과를 지도하여 교육 목표의 달성을 기하도록 한다.

이에 필요한 ① 각 교과목의 목표 및 학년 목표, ② 각 교과목의 지도 내용 등은 각론에서 상세하게 규정한다.

교과 활동의 계획과 운영상의 유의점은 다음과 같다.

- 학습 경험의 선택 및 조직은 아동의 심신 발달 과정의 특징과, 흥미와 관심 및 그들의 생활을 중심으로 선정한다.
- 1, 2학년의 학습 지도에 있어서는, 교과 간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종합적 지도에 힘쓰고, 다른 학년에서도 교과 상호간의 관련에 유의하여 지도한다.
- 국어 교육 및 반공·도덕 교육과 체육, 음악, 미술 교과를 통한 건강 교육 및 정서 교육은, 교과 시간에는 물론, 특별 활동 및 일상 생활의 지도에서도 전인 교육의 입장에서 중시되어야 한다.

라. 반공·도덕 생활

도덕 교육은, 학교 교육의 모든 기회를 포착하여 일관성 있고 종합적인 지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반공 교육은 도덕 교육과 밀접 불가분한 관계가 있으므로, 각 학교에서는 반공·도덕 교육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 특히 아래와 같은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 학교 교육의 모든 기회를 이용하여 아동의 도덕적 발달을 조장시켜, 실천력이 풍부한 자율적인 인간의 형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 반공·도덕 생활 지도 내용에 의거하여, 아동의 정도에 맞도록 바람직한 생활 습관과 예절을 습득하게 하는 데 필요한 종합적 학습 지도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마. 특별 활동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는 교과 학습만으로는 불충분하므로 교과 외의 여러 가지 활동이 필요하게 된다.

특별 활동은 교과 학습은 아니나, 학교 교육의 일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학교의 정규 과정으로 교육과정의 중요한 영역이 되어야 한다.

특별 활동에서도 교과 학습에서와 같이, 실천을 통해서 지도하는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서 더욱 민주적인 생활 방법을 습득하고, 개성의 신장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중학교

가. 제정·적용 경과

문교부령 제120호인 ‘중학교 교육과정 제정의 건(1963. 2. 15. 공포)’으로 중학교의 교과 과정도 대폭 개정하여 1963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그에 따르는 과도 조치는 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하였다.

문교부령 제45호인 ‘중학교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과 문교부령 제35호인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범학교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 중 중학교에 관한 규정은 이를 폐지하였다. 이때에 개정된 중학교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은 편제와 적용을 거쳤다.

- 구 교육과정은 교과와 특별 활동의 영역으로 나뉘었는데, 이때의 과정은 반공·도덕 생활을 추가하였다.
- 구 교육과정의 교과는 필수 과목(국어, 수학, 사회 생활, 과학, 체육, 음악, 미술, 실업·가정)과 선택 교과(실업·가정, 외국어, 기타 교과)로 나뉘었으나, 이때의 교육과정은 전부 필수 교과이다.

- 전 교과에서 배당 시수의 신축성이 인정되었다.
- 광역 교육과정을 택하고 있다.

중학교 교육과정은 문교부령 제131호인 ‘중학교 교육과정 제정의 건 중 개정의 건 (1964. 1. 8. 공포, 시행)’으로 다시 개정되었다. 즉, “부칙 제1항 중 ‘1965년 3월 1일’을 ‘1966년 3월 1일’로 한다.”고 하여 그 시행을 1년 연기하였다.

나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

중학교의 교육 계획은 다음의 시간 배당 기준에 따라 지도하도록 하였다.

- ㉠ 시간 배당 기준표는 교과 활동, 반공·도덕 생활, 특별 활동의 지도를 위한 주당 시간량을 최소 시간, 최고 시간으로 나타낸 것이다.
- ㉡ 학교 수업 일수는 연간 35주를 기준으로 하고, 1시간의 수업은 45분을 단위로 한다.
- ㉢ 학교에서는 기후, 계절, 학생의 발달 단계, 학습 내용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실정에 맞도록 조정한다.
- ㉣ 반공·도덕 생활의 지도를 위한 배당 시간은 각 학교의 실정에 맞는 계획을 세워 실천 지도에 충당한다.
- ㉤ 각 학교에서는 시간 배당 기준에 의거하여 학생 및 향토 사회의 특수성에 적합한 시간 계획을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시간 배당 기준의 한도에서 학기간, 계절간, 월간, 일간, 시간 계획에 충분한 신축성을 두도록 한다.
 - 실제 계획에 있어서는 학교의 실정과 필요, 학생의 발달 단계에 유의하여, 효과적인 학습 지도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신축성과 융통성을 갖도록 한다.
 - 학습 경험 상호간에 긴밀한 관련을 유지하면서 신체적, 지적, 정서적인 여러 학습 경험이 전체적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마련한다.
 - 교과 활동, 특별 활동, 학교 행사 등은 상호 밀접한 관련을 갖게 하여 전체적 균형과 조화를 취할 수 있도록 유의한다.

다. 교과 활동

교과 활동은 교육법에 규제된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음악, 체육, 미술, 실업·가정 및 외국어의 9교과를 지도하여 교육 목표의 달성을 기하도록 한다.

이에 필요한, ① 각 교과의 목표 및 학년 목표, ② 각 교과의 지도 내용 등은 각론에

서 규정한다.

교과 활동의 계획과 운영상의 유의점은 다음과 같다.

- 학습 경험의 선정에 있어서는 학생의 발달 단계와 생활 경험을 충분히 고려한다.
- 학습 경험의 조직에 있어서는 학생의 흥미, 관심, 필요 등에 유의하여 그들로 하여금 학습 목표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발적으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의한다.
- 각자의 능력과 개성을 자각케 하고, 자기 자신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동시에, 장래의 진로를 정확히 결정하는 데 필요한 학습 경험을 충분히 고려한다.
- 모든 학습 경험은 향토 사회를 중심으로 전개하여, 국가 생활에 있어서 중견 국민으로서 필요한 이해, 기능, 태도를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 선택 교과를 두지 아니하며 교과 내의 과목 분과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단, 외국어는 영어를 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독어, 불어, 중국어를 택하여도 무방하다.
- 실업·가정과는 1학년에 있어서는 실업 일반에 관한 학습을 공통으로 피하고, 2, 3학년에 있어서는 농, 공, 상업, 수산, 가정의 다섯 분야로 분별하여 그 중 한 분야만을 선택케 하여 지도한다. 단, 여학생에게는 가정에 관한 학습 경험을 모든 학년에 걸쳐 계속적으로 발전시키도록 한다.
- 반공·도덕에 관한 학습 내용은 모든 교과에서 다루어져야 하되, 특히 사회 생활 과에서 강조되어야 한다.

라. 반공·도덕 생활

학교 교육의 모든 기회를 포족하여 일관성 있고 종합적인 반공·도덕 교육을 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필요한 학습 활동의 기회가 풍부히 마련되어야 한다.

종합 지도 계획의 수립에 있어서는 특히 다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자주적인 국민 정신의 배양에 적합한 학습 경험의 기회를 풍부히 제공하도록 한다.
- 가정 생활, 학교 생활, 지역 사회 생활, 국가 생활 등의 각 영역에 걸쳐 반공 및 도덕 사상에 대한 확고 부동한 정신을 기를 수 있도록 유의한다.
- 학습 지도의 실제에 있어서는 학생들의 이해에 기초를 두어 관련적인 지도에만 그치지 말고, 국민적 태도의 실질적인 형성에 공헌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생활

경험과 밀접하게 관련시켜 지도한다.

- 반공 및 도덕 생활을 위한 학습 내용은 사회과에서 강조되어야 하나, 이에 필요한 학습 자료를 풍부히 마련하여 학교의 교육 활동 전체에 걸쳐 실시되어야 한다.

마. 특별 활동

특별 활동은 교과 학습은 아니나, 교과 학습과 동일한 비중으로, 학교 교육의 일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학교 교육의 정과정으로서 다루어져야 한다.(국민학교 교육과정과 같음)

③ 고등학교

가. 제정·적용 경과

고등학교 교육과정도 문교부령 제121호인 ‘고등학교 교육과정 제정의 건(1963. 2. 15. 공포)’과 문교부령 제122호인 ‘실업고등학교 교육과정 제정의 건(1963. 2. 15. 공포)’으로 분할되면서 대폭 개정되어, 고등학교는 1965년 3월 1일부터, 그리고 실업고등학교는 1963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으나 고등학교는 순연되었다.

위의 고등학교 교육과정들 중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문교부령 제127호인 ‘고등학교 교육과정 제정의 건 중 개정의 건(1968. 8. 1. 공포, 시행)’으로 개정되었다. 즉, “부칙 제1항 중 ‘1965년’을 ‘1966년’으로 한다.”고 하여 그 시행을 1년 연기하였다.

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문교부령 제169호인 ‘고등학교 교육과정 제정의 건의 폐지의 건(1966. 2. 14. 공포, 시행)’으로 폐지되고, 새로이 문교부령 제173호인 ‘인문계 고등학교 교육과정령(1966. 7. 15. 공포)’이 제정되어 1968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문교부령 제207호(1969. 2. 19. 공포)에 의하여 ‘교련’ 교과를 새로 설정하여 1969년 3월 1일부터 시행했는데, 다시 문교부령 제274호(1971. 2. 19. 공포)에 의하여 ‘반공 및 국민 윤리’를 삭제하고, 그 대신 ‘국민 윤리’를 독립된 교과로 설정하였다.

다른 한편, ‘실업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문교부령 제175호인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령(1966. 10. 4. 공포)’이 제정되어 1968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됨과 동시에 폐지되었다. 그러나 부칙 제2호에 의하여 그 전문 과목은 변함이 없었다.

나. 교육과정 교과·과목 단위 시간 기준

- 고등학교의 학습 지도 계획은 원칙적으로 단위제에 의거한다. 단, 학교의 실정이 단위제를 실시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학년제, 또는 단위제와 학년제를 병용할 수 있다.
- 수업 일수는 연간 36주를 기준으로 하되, 1단위는 50분을 단위 시간으로 하여 한 학기(18주 기준)동안 18단위 시간을 이수함을 말한다.
- 고등학교의 교과목은 학생의 진로와 직업 선택에 따라 인문 과정, 자연 과정, 직업 과정, 예능 과정으로 구분하여 지도하고, 과정별로 교육과정에 제시한 공통 및 선택 교과목을 시수시킨다.

다. 교과 활동

고등학교의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과는 교육법 시행령에 규정된 바에 의하여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체육, 음악, 미술, 실업, 가정, 외국어과의 10교과로 하고, 필요한 과목을 두었다.

- 1학년에서는 공통 과목을 중심으로 계획을 작성하고, 2학년 이상에서는 장래의 희망에 따라 계열 선택을 시키되, 교과의 성격 및 I, II의 특색을 충분히 이해시키도록 한다.
- 반공·도덕 생활의 교육은 일반 사회와 국민 윤리가 중심이 되지만, 전인 교육의 입장을 살려 교육과정 전체에서 강조되어야 한다.

(2)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

제2차 교육과정기 중 교육과정에 관한 문교부 내부의 연구는, 교육과정의 개정을 위하여 1958년부터 시작한 ‘교육과정의 개정을 위한 기초 조사’와 자료 수집을 제외하고는 아주 적은 편이었다.

그러나 외부적으로는 중앙교육연구소와 학계에서 상당히 많은 교육과정 관계 연구물이 발표되었었다.

1959년 1월에 실시된 교육과정 개편 여부에 관한 여론 조사, 1961년 3월에 실시된 교육과정 개편의 방향에 관한 여론 조사가 문교부 내부에서 수행된 연구였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차 교육과정 실시 후, 교육에 대한 서구의 이론이 소개되고, 학교 교육에 대한 경

험이 누적됨에 따라 교육과정의 개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게 되었다. 편수국이 1959년 1월에 실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초·중등 교사의 45.5%가 교육과정을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그 이유로는 기존 교육과정이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점, 기초 학력을 저하시킨다는 점, 그리고 교육 목표가 충분히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이었다.

제1차 교육과정은 6·25 사변과 격동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교육과정을 제정한 경험 이 없는 상태에서 제정하였기 때문에 사회적, 국가적 요구가 반영되지 못한채 제정되어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았다. 이에 따라, 문교부는 1958년부터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기초 조사와 자료 수집에 착수하고, ‘교육과정 심의회 규정’을 개정하여 개정을 위한 준비를 갖추었다.

문교부는 1961년 3월, 교육과정 개편의 이유 및 방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교육 전문가 들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외국의 초·중등 교육과정, 교육 과정 개발의 원리, 교육과정 연구와 연구 기관의 조직, 교육과정 제정의 절차, 시간 배 당 기준 등의 사례를 조사하였다.

1961년에 일어난 5·16 혁명은 교육과정의 개편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혁명 정 부는 사회 각 분야의 개혁 의지를 표방하였으며, 교육 부문에서도 대대적인 개혁이 불 가피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문교부는 교육과정의 개편을 위한 운영 위원회, 학교별 위 원회, 교과별 위원회를 조직하여 새로운 교육과정 및 교과서 시안을 서둘러 준비하였다. 여기에서 작성된 시안은 전국의 초·중등학교와 여러 교육 연구 기관에 보내어져 수 정·검토를 받았다.

한편, 종전 후 우리 나라의 교육 개선을 위해 파견된 유네스코-윌크라 교육 계획 사 절단과 미국 교육 사절단, 피바디 사범대학 교육 사절단 등은 일관되게 생활 중심의 교 육과정관을 강조해 왔다. 특히, 미국 교육 사절단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교육과정 개 혁의 방향으로, 경험 중심 교육과정을 제안한 바 있다. 제2차 교육과정에서 ‘학생의 경 험’이나 ‘생활 중심’의 교육과정관을 내세우게 된 데에는 이러한 교육 사절단의 제안이 배경이 된 것이며, 교육과정의 의미를 학생의 경험 중심으로 개념화하였다는 점, 그리고 교과 내용이나 시간 배당 등을 넘어서 학습 활동의 총화로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특징을 찾을 수 있다.

1963년 2월 15일 이후 교육과정에 관한 문교부의 내부적 연구, 특히 교육과정의 평가 에 관한 연구는 희소한 편이었다. 다만, 편수관이 개인적으로 쓴 글이 교육 관계 월간지

나 그 밖의 학술지에 발표된 사례는 많았다.

외부적 연구로는 각 대학의 교수와 교사들로 이루어진 것이 많았는데, 그 결과는 각 대학의 논문집, 출판사를 통한 저서, 당시의 교육지(誌)인 새교육, 새교실, 교육 평론, 교육 주보, 교육 재료, 교육 신보, 문교 공보, 교육 연구 등에 게재되었다. 이 밖에, 각 시도 교육 연구원에서 이룩한 연구도 많았다.

제2차 교육과정기 중에 발표된 교육과정 관계 연구의 주요한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강신웅, 교육과정, 교육출판사, 1968.

강우철, 교육과정 계획과 운영 지침, 현대교육출판사, 1966.

_____, 교육과정 구성의 기본 문제, 새교육, 1966.

경기도교육위원회, 향토교육과정 조사 연구, 경기도교육연구원, 1965.

곽상만, 새로운 교육과정 사조와 전망, 중등교육, 1969.

_____, 실업고교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대하여, 새한신문, 1963.

이영택, 인문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시행상의 문제점, 새교육, 1967.

유봉호, 고등학교 교육과정 개편에서 고려되어야 할 점, 새교육, 1968.

정범모, 교육과정, 중앙교육출판사, 1963.

주세환, 교육과정 및 특별 교육활동의 계획과 실제(중앙교육), 중앙교육연구원, 1962.

_____, 중학교 교육과정 개혁의 방향, 새교육, 1968.

중앙교육연구소,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조해하는 요인 분석과 그 개선에 관한 연구; 국민학교 교육을 중심으로, 중앙교육연구소, 1972.

_____, 인구문제를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반영시키기 위한 방안연구; 중앙교육연구소, 1972.

_____, 한국공업 및 수산교육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중앙교육연구소, 1967.

천년수 외, 국민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조해하는 요인 분석과 그 개선에 관한 연구, 전국교육연합공동연구, 1968.

함중규, 교육과정 개정과 교과서 개편 문제, 새교육, 1970.

_____, 교육과정 개편이 요구하는 기본적 문제, 숙대신보, 1962.

_____, 교육과정 내용의 선정 기준, 새교육, 1968.

(3) 교육과정 평가

1)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과정 평가

제2차 교육과정은 각급 학교별로 운영에 관한 사항들이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고 교육 활동이 입안한 대로 일반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교육과정 총론의 말미와 각론의 반공·도덕 생활, 교과 활동, 특별 활동 말미에도 운영에 관한 사항들이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경섭⁴⁾은 제2차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들에 나타난 특징을 구명해 보고자 한 연구에서, 제2차 교육과정은 경험 중심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그 운영도 당연히 그런 특징을 지니고 있어야 하는데, 과연 그러한 지를 추구해 보았다. 그는 교육과정이 교육 발전에 보다 바람직하게 기여하려면, 운영에 관한 사항들이 교육과정 실행을 보다 용이하게 하도록 서술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각급 학교 교육과정에 서술되어 있는 운영상의 유의점에 나타나는 제 특징을 경험 중심의 핵심어, 강조 부분 및 각급 학교 간의 연계성에 초점을 두고 연구했다. 이 때의 핵심어란 다음과 같은 언어를 말한다. ㉠ 종합성, 관련성, 실용성, 균형성 및 이런 언어와 매우 유사한 언어, ㉡ 학습자 측면을 강조하는 언어, 예컨대 학생의 심신 발달, 개성, 흥미, 능력, 환경, 욕구 등의 언어와 이런 언어와 매우 유사한 언어, ㉢ 생활 및 경험, 그리고 이런 언어와 매우 유사한 언어.

강조 부분은 목표 부분, 내용 및 경험 부분, 지도 부분 등으로 구분된다. 각급 학교간의 연계성은 국민학교와 중학교 간, 중학교와 고등학교 간, 국민학교와 중학교 및 고등학교 간으로 구분된다.

총론 및 각론의 말미에 언급한 ‘지도상의 유의점’이 곧 운영상의 유의점인데 이것은 실행을 위해 매우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어 각 유의점에 반영되어 있는 경험 중심적인 특징들을 찾아 내어 이것을 묶어 보는 기법을 취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제2차 각급 학교 교육과정의 각 교과, 반공·도덕 생활 및 특별 활동 등의 운영상의 유의점에 나타난 특징들을 경험 중심적인 핵심어, 강조 부분, 각급 학교 간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알아본 것인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경험 중심적인 특징을 분명히 나타내는 핵심어 중심으로 운영상의 유의점들을 알아본 결과, 교과, 반공·도덕 생활 및 특별 활동의 유의점들은 거의 이런 핵심어를 상당 수 포함하고 있으면서 경험 중심적인 제특징을 이 핵심어 중심으로 표명하고 있음을

4) 이경섭, 한국현대교육과정연구사 (상), 교육과학사, 1997.

발견하였다. 교과, 생활 및 활동 영역에서 많이 활동되는 핵심어는 다음과 같다.

- 종합성을 띤 것 : 종합적 지도, 종합적 학습, 종합적 계획
- 관련성을 띤 것 : 타 교과, 과목, 목표 내용, 경험, 활동 등과의 관련
- 실용성을 띤 것 : 실생활 및 교육에의 활용 및 적용, 학교 및 지역 사회의 실정, 문제 해결, 자율적, 능동적, 효율적 참여
- 균형성을 띤 것 : 교과서 및 특정 내용에의 편중 회피, 전 분야의 균형 학습
- 학습자 측면 : 심신 발달, 성차, 능력, 개성, 흥미, 관심, 개인차, 생활 환경
- 기능면 : 실제적 기능, 생활 중심 기능 학습, 실천적 활동, 실험·실습 중심
- 생활면 : 생활의 영위 개선 발전, 생활 환경, 생활 문제
- 경험면 : 생활 경험, 학습 경험, 경험 요소, 간접 경험, 직접 경험

둘째, 진술된 운영상의 유의점은, 주로 지도 목표 + 지도 방식 또는 지도할 내용 및 경험 + 지도 방식 등인데, 그 강조점이 지도 목표 부분, 지도한 내용 및 경험 부분, 지도 부분 가운데서 어디에 놓여 있는 유의점들이 많은가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지도 목표 부분에 강조점이 많이 놓여 있는 것 : 특별 활동
- 내용 및 경험 부분에 강조점이 많이 놓여 있는 것 : 수학과
- 내용 및 경험 부분과 지도 방식 부분에 강조점이 많이 놓여 있는 것 : 사회과, 과학과, 실업·가정과, 체육과, 음악과, 미술과
- 지도 부분에 강조점이 많이 놓여 있는 것 : 국어과, 외국어과, 반공·도덕 생활

이상의 결과를 볼 때, 그는 지도할 내용 및 경험 + 지도 방식의 것이 지배적으로 많은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셋째, 각급 학교 간의 연계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연계성이 높은 것 : 국어과, 수학과, 체육과, 음악과, 미술과
- 연계성이 낮은 것 : 사회과, 외국어과, 과학과, 실업·가정과, 반공·도덕 생활
- 연계성이 없는 것 : 특별 활동

그는 이상의 결과에서 연계성이 낮거나 연계성이 없는 것은 문제점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연계성이 높은 것도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간의 연계성이 전체적으로 매우 낮고 두 학교 수준 간에 다소 높은 것만을 의미하므로, 연계성이 충분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았으며, 각급 학교의 운영상의 유의점을 진술할 때 국민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의 연계성을 고려하는 어떤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2) 교육과정의 발전 방향 제언

제2차 교육과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는 학습 분량의 적부에서, 국민학교에 있어서는 총해답자 수의 41.8%가 “부담이 과중하다”고 했으며, “학습 분량이 적다”고 답한 수는 13.8%에 불과하였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비교해 보면 국민학교의 학습 분량은 대체로 과중하다는 경향이 뚜렷하다. 국민학교에서의 학습 부담의 과중은 어린이의 심신 발달을 크게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므로 국민학교에 있어서의 학습 분량을 적절하게 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교육과정의 편성에 있어서는 학습 부담이 과중하지 않도록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학습 부담이 과중하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었다.

수업 시간 수의 적부에서, 학교의 시간 계획은 학습자의 심신 발달에 큰 영향을 주게 되는데, 국민학교에서는 해답자의 69.3%가 적당하다는 반응을 보여 현재의 수업 시간 수가 대체로 적당한 것 같았다.

중학교에서는 77.9%가 적당하다는 반응을 보였고, “많다”가 13.4%, “적다”가 8.8%의 반응을 보이고 있어 현재의 시간 수가 적절하다는 뜻으로 해석되었다.

고등학교에서는 66.7%가 적당하다는 의견을 표시했고, “많다”가 20.7%, “적다”가 13.6%이어서 현행 정도가 적당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학생들의 이해 정도에서 교육과정의 내용이 학생들의 이해 정도에 적합한가의 여부는 교육과정 구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 문제의 하나이다. 시행 중인 교육과정은 전국적 수준에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적 차이, 학교 차이, 지역적 차이 등에 각 학교가 지역 사회의 실정과 학생의 이해 정도에 맞도록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국민학교 교육과정은 회답자의 60.9%가 학생의 이해 정도에 적합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학생의 이해 정도에 비취 어렵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수가 쉬운 편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 수의 약 4.5배가 되므로, 국민학교의 교육과정은 결코 쉬운 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중학교에서는 응답자의 61.1%가 알맞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고등학교에서는 적당하다는 회답자 수가 52.7%로 줄어들어 조속한 개선을 요청한다고 보았다.

실제로 구 교육과정은 시간 배당 기준과 교육과정이 별도로 제정되어 운영의 묘를 살릴 수가 없었으며, 학년별로 1년 간의 총 수업 시간 수를 정한 다음 각 교과에 주당 시간을 % 또는 분으로 나타내었으므로 운영하기가 불편하였다.

또, 내용면에서도 생활 교육을 중시는 하였으나 운영면이 미흡하게 되어 있어 기초 학력의 저하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고 자주성, 생산성, 유용성, 합리성, 지역성을 강조한 새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 구성의 일반 목표와 개정의 방향을 제시했다.

3) 교육과정 개혁에 대한 평가

제2차 교육과정의 개정은 그 기초 연구가 1958년부터 문교부 냉의 편수국 사업으로 진행은 되었으나, 이것은 여론 조사와 기초 자료의 수집 정도에 지나지 않았고, 이론적인 밑받침이 될 수 있는 연구는 없었다. 그나마 1961년에 발생한 5·16 사태로 연구가 중단되었고, 1962년 봄에 편수국의 진용이 갖춰진 다음에서 본격적인 개편 작업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5·16 사태는 교육 개혁의 촉진제가 되어 교육과정의 개정을 앞당겨지게 했으니, 1962년 한 해 동안에 편수국이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많았다.

초중고 교육과정의 시안 작성과 시안의 검토·수정을 위한 여론 조사, 교과별·학교별 교육과정의 심의, 운영 위원회에서의 교육과정 심의 등으로 교육과정의 개편 작업이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구 교육과정에서는 교과별 시간 배당 기준 및 각과의 교과과정만을 제시하였을 뿐, 학교 교육과정 전체를 통해서 지향하고자 하는 교육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 교육법에서 지향하고 있는 교육의 목표와 교육과정이 어떤 관련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 그러나 제2차 교육과정에서는 교육법 2조에 제시된 교육 목표를 교육과정에 구체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교육법과 학교 교육과정 간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했다.

이에 대하여 당시 문교부 학무국장이던 홍웅선은 제2차 교육과정의 일반 목표가 교육법에 제시된 교육 목표를 일관되게 반영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것은 교육법의 교육 목표를 학교 교육과정에서 구현할 수 있게 한 중요한 계기라고 하였다. 당시의 여론 조사에서도 교육 목표가 충분히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이것을 교육과정에 반영하였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가 크다.

체제 및 편제상의 특징은, 제2차 교육과정은 제1차 교육과정과는 달리 그 구성 체제가 교육과정 전체를 총론과 각론으로 나누어 서술하고 있다. 총론에서는 초·중등학교에 공통되는 개정의 취지, 일반 목표, 개정의 요점 등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학교급별 시간 배당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운영 계획을 교과 활동, 반공·도덕 활동, 특별 활동으로 나누어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각론에서는 교과별로 개정의 요점, 교육 목표, 지도 내용, 지도상의 유의점 등을 자세히 통일된 형식으로 서술하고, 교과별 학년 목표를 제시하여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교과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2차 교육과정에서는 교육 내용의 학교급 간의 연계성과 교과 간의 통합성을 강조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계통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필요 불가결한 최소의 내용을 엄선하여 기초 학력의 충실화를 기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제2차 교육과정은 우리 나라 교육과정에서 교육과정의 이론 및 체계가 형식면에서도 기본적인 틀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또한, 제2차 교육과정에서는 교육의 일반 목표 및 학년 목표를 제시한 점, 교육 내용의 연계성과 교과 간의 통합성을 강조한 데서 볼 수 있듯이 교육과정의 이론적인 틀을 갖추려는 노력도 기울였다.

특히, 제 2차 교육과정에서는 ‘개혁과 발전’이라는 당시의 사회적 요구와 광복 후 외국 교육 사절단에 의해서 꾸준히 제안되어 온 생활 중심 교육과정관을 교육과정에 구체적으로 통합·반영하려고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제 2차 교육과정 개정에 있어 반성할 것 중의 하나는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분리 문제이다.

종전에는 인문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한 책자 안에 표시하였었는데, 1963년에 문교부령 제122호로 제정 공포된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인문계와 실업계를 분리하여 교육과정을 편성했으며, 이에 따라 심지어는 보통 과목의 교과서까지도 인문계용과 실업계용을 구분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이것이 1973년 제3차 교육과정까지도 계속되다가 1981년 제 4차 교육과정에 고시된 ‘고등학교 교육과정’(문교부 고시 제442호)에서 비로소 부령 제45호인 제1차 교육과정 때와 같이 인문계와 실업계가 합쳐져 편제된 교육과정이 재현되었다. 이것은, 합치는 것이 교육 본연의 방향이 아니냐는 일부 주장과, 실업계의 보통 교과 시간 부족이라는 당초의 명분과는 달리 실제로는 두꺼운 분량의 책들이 출간되어 문제가 되었었기 때문이다.

(4) 교육과정 관련 비망·증언

- 이경섭(경북대 사대 교수, 한국 현대 교육과정 연구)

이경섭은 제2차 각급 학교 교육과정을 경험 중심 교육과정으로 보고, 교육과정의 편성 원리, 편성 형태, 교과 편제 및 시간 배당 등에 나타난 교육과정의 특징을 알아본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자주성, 생산성, 유용성 및 합리성은 교육과정의 편성 원리로 강조됨으로써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니게 된다.

원리로서의 자주성은 교육과정 구성 목표의 설정, 교육과정 행정과 교육 내용 및 교사의 중립성 유지, 학습의 자주성 보장에 기여한 것이다. 원리로서의 생산성은 현대 과학 기술, 생산 교육, 직업 및 산업 교육을 강조하게 하여 제1차기의 고등학교 교육과정 체제가 인문계와 실업계로 일원화되었던 것을 실업계를 분리하여 이원화로 전환케 한 것이다. 원리로서의 유용성은 교육과정 내용이 생활·경험 중심으로 선정, 습득, 적용되도록 함과 아울러 취업 지도의 중요성을 인식케 한 것이다. 교육과정 원리로서의 합리성은 국가 기준의 교육과정 구성 및 단위 학교 교육 계획 수립에 조직 원리로 적용되도록 한 것이다.

편성 형태에 대한 결론은, 교과 활동, 반공·도덕 생활, 특별 활동을 구성 요소로 한 하나의 전체 구조를 이루게 되는데, 그 구조는 반공·도덕 생활과 모든 교과 활동이 상호 관련을 맺고, 특별 활동이 모든 교과 활동과 부분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 형태를 취한다.

이러한 형태를 교육과정의 유형적 시각에서 볼 때, 반공·도덕 생활이 중핵 과정(中核課程)을 이루고, 여러 교과 활동과 특별 활동이 주변 과정을 이루고 있으면서 두 과정이 상호 관련을 맺고 있는 경험 중심 중핵 교육과정의 조직 형태가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경험형에 속하는 유사 중핵 교육과정 형태라고 부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각급 학교 교과 편제 및 시간 배당 기준에 대한 결론을 내리면, 국민학교는 반공·도덕 생활에 주당 1시간씩 전 학년에 배당함으로써 중핵 과정이 시간 부족으로 명실 상부한 역할 수행을 할 수 없었다는 것과 다교과(多教科) 및 교과의 준 등가주의(準 等價主義)를 지향하는 경험 중심 교육과정 형태를 취했다는 것이 그 특징이다.

중학교는 선택 교과가 전혀 없었으므로, 중핵 과정인 반공·도덕 생활의 적용 범위가 그만큼 좁아졌다는 것, 그리고 반공·도덕 생활과 교과 활동 가운데서 특히 수학, 외국어, 과학, 체육, 음악 및 미술과의 활동을 관련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 등이 그 특징이다.

고등학교 가운데서 인문계 고등학교는 교과 편제 및 단위 시간 배당 기준이 계별 과

정(系別課程), 즉 인문, 자연, 직업, 예능 과정별로 마련되고, 실업계 고등학교는 계열별 학교마다의 학과 중심으로 마련됨으로써 중핵 과정에 속해 있는 일반 사회 및 국민 윤리의 과목 내용과 주변 과정에 속해 있는 여러 교과와 과목 내용을 교육적으로 유의미하게 관련 지우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 그 특징이다.

● 유봉호(이화여대 명예교수, 한국 근현대 중등교육 100년사)

유봉호는, 제2차 교육과정은 제1차 교육과정이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과 ‘교과과정’을 별도로 공포했던 것을 합쳐 일련의 체계를 갖춘 교육과정으로 공포하여 명실공히 교육과정 기준령으로서의 체계가 갖추어졌다.

그리고 명칭도 제1차의 ‘교과과정’에서 ‘교육과정’으로 바꾸어, 교육과정이 교과 활동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의 전 활동과 관련되는 교육과정의 전체 구조에 의한 계획이란 뜻으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하였다.

교육과정의 전체 체제는 총론과 각론으로 나누고, 총론에서는 초·중·고등학교에 공통되는 개정의 취지, 일반 목표, 개정의 요점을 제시한 다음, 학교급별로 시간 배당 기준을 제시하고, 교과 활동, 반공·도덕 활동, 특별 활동별로 운영 계획이나 지도상의 유의점에 관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각론에서도 각 교과별로 개정의 요점, 목표, 지도 내용, 지도상의 유의점으로 나누어 진술하여 체계면에서 통일된 형식을 갖추었다. 특히, 학년 목표를 신설한 것은 교과와 체계적인 지도를 위해 매우 바람직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체계적인 전개 체제를 갖추므로써, 체계면에서도 제대로 된 형식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국민학교와 중학교 교육과정의 편제는 교과 활동, 반공·도덕 활동, 특별 활동의 세 영역으로 나누었다. 지금까지 전 교과 및 기타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각 학년 총 수업 시간 수의 범위 내에서 35시간씩 확보하여 시행했던 도의 교육, 반공 교육 영역을 교과 활동, 특별 활동과 같은 수준의 영역으로 신설하였고, 특히 배당 시간도 한 주당 1시간을 이수하도록 하였다.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에 나타난 특징은 구 과정에서 각 교과별 시간 수를 총 이수 시간에 대한 백분율과 연간 이수 시간 수를 표시한 것과는 달리 교과별로 주당 이수 시간으로 표시하고, 특별 활동은 총 이수 시간 수의 백분율로 표시, 그 폭을 두어 운영의 자율성, 융통성, 신축성을 기하도록 한 것은 특기할 만하다. 또, 학년별로 주당 총 이수 시간 수를 1시간 정도 줄였다. 국민학교 교과는 8교과로 하였는데, 특기할 것은 「사회생활과」가 「사회과」로 그 명칭이 바뀐 것이다.

3. 초·중등학교 교과용 도서 편찬

(1) 교육과정과 교과서 제도

1) 교육과정과 교과서 제도

교육과정은 교육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학습 경험을 학습자의 발달 단계에 맞추어 계통적으로 조직한 교육 계획의 전체라고 할 수 있다.

교과서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주된 학습 자료의 하나이다. 제 2차 교육과정기의 우리 나라 교과서 제도에는 국정 제도와 검인정 제도가 있었다.

5·16 사태 다음 해인 1962년에 교육과정의 전면 개편이 있었고, 1963년 2월 15일자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실업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공포됨에 따라 국민학교는 1964년부터 1966년까지 단계적으로, 중학교는 1966년에, 고등학교는 1968년에 전 교과목의 교과서가 개편 발행되었다.

그런데 교과서는 관례적으로 교육과정령이 공포되고 교과서의 개편이 시작되면, 해당 교과목의 교과서를 당년에 집필 위촉하여 연내로 조판·심의·교정·편수하여 다음해 초까지는 발행 사용케 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표 III-9> 1968년 각급 학교 국정·검인정 교과서 수⁵⁾

학교별		학교수	교과목수		국정		검인정	
					종수	책수	종수	책수
국민학교		5418	9		11	84	-	-
중 학교		1314	17		4	22	13	399
고등학교		413	33		4	6	38(29과)	533
실 고	농 고	128	전 문	32	22	22	7	24
	공 고	49		148	53	78	8	11
	상 고	112		20	9	12	11	50
	실업고	34		종합	-	-	-	-
	수산고	11	교 과	25	17	19	-	-
	종합고	32		종합	-	-	-	-
	가정고	1		15	6	6	2	5
			보통 교과 16		13	16		
계		7512	315		139	265	79	1022

5) 박상만, 교과서 행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 1968.

과서 내용이 일률적이며 획일적이어서 다양한 개성을 신장시키는 교육을 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제2차 교육과정기에는 교육법 제157조(교과용 도서)에 의해 “사범대학, 대학을 제외한 각급 학교의 교과용 도서는 문교부가 저작권을 가졌거나 검정 또는 인정한 것에 한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교과용 도서의 저작·검정 또는 인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 하였고, “전항의 대통령령에는 그 위반자에 대하여 판인본(版印本)의 몰수 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는 벌칙을 규정할 수 있다”고 정해 놓고 있다.

국정 교과용 도서 편찬 규정(1950년 제정 대통령 제337호) 제1조에 의하면 ‘국정 교과용 도서의 편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에서 “국민학교, 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정규 교과목의 교수를 위한 학생용 도서 및 교사용 도서는 국정으로 편찬한다”고 하였다. 또, 제3조에서는 “제2조에 규정하는 학교 이외의 각 학교의 교과용 도서에 대하여는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교과목에 한하여 국정으로 편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국정 교과용 도서 편찬 심의회 규정은 국정 교과용 도서 편찬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문교부 편수국에 편찬 심의회를 둘 수 있다”고 설치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다. 이 심의회는 의장(편수국장)과, 위원으로 문교부 직원, 현직 교육자, 지방청 교육 행정 관계자 등으로 구성되는데, 문교부장관이 위촉하게 되어 있다.

이 심의회 위원은 “국정으로 제정하는 교과용 도서의 편찬 원안 및 교과용 도서의 편찬에 필요한 기초 자료의 원안을 심의하며, 기초 자료의 조사 연구에 종사한다”는 역할을 맡고 있다. 당시 국정 교과서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표 III-10 > 국정 교과서의 종류(1968년)⁶⁾

★ 국민학교(전 교과)

교과서명	학년·학기별		교과서명	학년·학기별	
국 어	1~6	각 1, 2기	미 술	1~6	각 전기(全期)
산 수	1~6	각 1, 2기	실 과	4~6	각 전기(全期)
자 연	1~6	각 1, 2기	체 육	4~6	각 전기(全期)
사 회	1~6	각 1, 2기	바른생활	1~6	각 1, 2기
사회과 부도	4~6	단권	글씨본	4~6	각 전기(全期)
음 악	1~6	각 전기(全期)	쓰 기	1~3	각 전기(全期)
				총 84 책	

6) 상계서

★ 중학교(국어 · 반공 도의 · 실업)

교과서명	학년 · 학기별	교과서명	학년 · 학기별
중학 국어	1~3 각 1, 2기	중학 실업(농업)	2~3 각 전기(全期)
민주 생활	1~3 각 전기(全期)	중학 실업(공업)	2~3 각 전기(全期)
승공 통일의 길	전학년용 단권	중학 실업(상업)	2~3 각 전기(全期)
중학 실업(종합)	1 각 전기(全期)	중학 실업(수산)	2~3 각 전기(全期)
			총 19 책

★ 고등학교(국어 · 반공 도의)

교과서명	학년 · 학기별	교과서명	학년 · 학기별
고등 국어	1~3 각 전기(全期)	자유 수호의 길	전 학년 단권
국민 윤리	전 학년 단권	일반 관리	전 학년 단권
			총 8 책

★ 실업 고등학교(보통 교과 및 전문 교과)

교과서명		학년 · 학기별		교과서명		학년 · 학기별	
보통 교과 목	국 어	1~3 각 전기(全期)	전 문 교 과 목	농업계 학교용	각 학년	22종(22책)	
	일반 사회			공업계 학교용	각 학년	53종(78책)	
	국민 윤리			상업계 학교용	각 학년	9종(12책)	
	국 사			수산계 학교용	각 학년	17종(17책)	
	수 학			가정계 학교용	각 학년	6종(6책)	
	생 물						
	지 리						
	정치 · 경제						
	음 악						
	미 술						
	영 어 1						
	영 어 2						
	화 학						
	물 리						
계		14		계		107종 135 책	

각급 학교 총계 139종 265책

3) 검인정 제도

정부가 검정을 하는 교과서 제도이며, 이에는 검정 교과서와 인정 교과서가 있었다. 검정 제도는 발행 전에 교과서의 가쇄본을 심사하여 합격한 것에 한하여 교과서를 출판 보급할 수 있게 한 제도이고, 인정제는 교과서를 자유로이 발행한 뒤에 그 사용의 인가를 받게 하는 제도이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이 인정 제도도 검정제와 마찬가지로 발행

전에 원고본을 심사했다는 점에서 구미 각국에서의 인정제와는 다른, 거의 검정제와 같은 제도를 취했다.

전형적인 검정 제도는 동남아 각국에서 볼 수 있는데, 당시에는 우리 나라의 중·고교 일부 교과서와 일본, 대만 등의 일부 중·고교 교과서가 그러하다. 또, 구미 각국에서도 주 정부(州政府) 또는 교육구 단위로 사용할 교과서를 검정하거나 인정해 주는 제도를 볼 수가 있다. 검인정 교과서의 출판권은 저자가 가질 수도 있고 출판사에서 갖는 경우도 있다. 집필은 대개 몇 명의 저자가 공동으로 하게 되지만 단일 저자가 집필하는 경우도 있다.

외국의 경우에는, 주로 현장 교사나 경험이 있는 저자가 최신의 자료를 토대로 최신의 연구 결과를 반영하면서 초고를 작성하고, 이것을 그 분야의 다른 전문가가 검토하며, 문장 전문가가 윤문한 후에, 도안 전문가나 미술가 등의 편집자가 참여하여 편찬 작업이 마무리되는데, 출판사에 우수한 편집진이 있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과정이 끝난 후에 현장 검증 등을 거쳐 인쇄본을 작성하고 백표지를 씌워 검정 신청을 한다.

검인정 제도 하에서 교과서를 채택하는 경우에는 동일 학년의 동일 과목에 여러 종류의 교과서가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하게 된다.

검인정 교과서 제도는 획일화된 국정 교과서의 단점을 어느 정도 보완하고, 다양성 있는 교과서를 채택할 수 있게 한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동남아 제국에서와 같이 통제가 심한 검정 기준을 가진 국가에서는 거의 국정제에 가까운 통제가 가해져 교과서의 종류만 많을 뿐, 내용면에서 다양성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당시의 검인정 교과서는 교과용 도서 저작 검인정령에 의하여 국정 교과서 이외의 교과서에 대하여 문교부장관이 검정(동령 제2조 2항)하거나 국민학교를 제외한 각급 학교의 교과목의 교수를 보충하기 위하여 인정(동령 제2조 3항)하고 있었다.

제2차 교육과정기의 검인정 교과서 제도는 그의 법적 근거를 ㉠ ‘교과용 도서 검인정 규정’(1950. 4. 29.~1967. 4. 16.), ㉡ ‘교과용 도서 저작·검인정령’(1967. 4. 17.~1977. 8. 21.)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검인정 규정과 검인정령의 주요 골자를 발췌해 보기로 한다.

① 교과용 도서 검인정 규정

가. 교과용 도서 검인정 규정(대통령령 제336호, 1950. 4. 29. 제정)

(가) 검인정의 목적과 교과용 도서의 범위

교과용 도서의 검정 및 인정은 교육법 기타 법령으로써 정하는 대학과 사범대학을 제외한 각 학교(이하 각 학교라 칭함)의 교육 목적에 부합하는 교과용 도서의 사정을 목적으로 한다. 본 규정에서 교과용 도서라 함은 각 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학생용 도서와 고등학교, 사범학교, 고등기술학교를 제외한 각 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교수용의 패도, 지구의류 등을 말한다(제 1조).

(나) 검정 도서의 범위

검정은 국민학교, 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제외한 각 학교의 정규 교과용 도서 중 국정으로 제정하지 아니하는 교과용 도서에 대하여 행한다. 단, 실업과 기타 임시로 제정하는 국정 교과용 도서는 예외로 한다.

(다) 인정 도서의 범위

인정은 각 학교의 정규 교과목의 교수를 보충 심화하기 위한 학생용 도서, 국민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정규 교과목의 학습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학생용 도서 및 제1조 제2항에 규정한 패도, 지구의류에 대하여 행한다(제3조).

(라) 출원 등

- 교과용 도서의 발행자는 그 도서의 검정 또는 인정을 문교부장관에게 출원하여야 한다. 전항의 출원자로서 대한민국 반도 내에 주소를 가지지 아니한 자는 검정 또는 인정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대리시키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주소를 가진 자로써 대리인으로 정하여야 한다.
- 검인정 요금은 도서 1종에 대하여 그 도서의 정가의 50배로 한다. 단, 패도, 지구의류에 한하여는 그 정가의 5배로 한다. 이미 납입한 검인정 요금은 사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를 환불하지 아니한다(제5조).

(마) 사열 및 수정 합격

교과용 도서의 내용을 사열하기 위하여 문교부장관은 교과용 도서의 검인정 출원이 있을 때마다 매건에 대하여 3인 내지 5인의 사열 위원을 선정, 위촉하여야 한다.

사열 위원은 위촉받은 교과용 도서의 내용을 사열하여 문교부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제 6조).

- 제 4조에 의하여 검정 또는 인정을 출원한 도서 중 사소한 수정을 가하면 검정 또는 인정을 할 수 있다고 시정되는 도서에 대하여는 그 수정을 요하는 개소(個所)를 출원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제7조).
- 전조에 의하여 수정할 개소를 지시받을 때에는 4개월 이내로 수정 출판하여 제2호

서식에 따라 수정 도서 2부를 첨부하여 그 도서의 검정 또는 인정을 추원(追願)하여야 한다. 단, 극히 경이(輕易)한 수정에 불과할 때에는 정오표를 첨부(添附)시켜서 추원 수속을 약할 수 있다. 진향의 기한 내에 수정 추원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검정 또는 인정의 출원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제8조).

(바) 가격 사정

문교부장관은 검정 또는 인정한 도서에 대하여 가격을 사정할 수 있다(제9조).

(사) 공고

검정 또는 인정한 도서는 관보에 그 명칭, 책수, 정가, 목적하는 학교 또는 교과류, 발행 및 검인정 연월일, 당해 도서에 서명한 저작자 및 발행자의 주소, 성명을 공고하여야 한다(제10조).

나. 교과용 도서 검인정 규정(1963. 7. 3. 각령 제1371호)

- 교과용 도서라 함은 각 학교의 학생용 도서를 말한다라고 하여 교과용 도서에서 교수용의 패도와 지구의류를 제외함.
- 실업 교과류의 검인정 폐지함.
- 인정 도서에 교수용의 패도와 지구의류를 제외함.
- 검정·인정 출원 기간을 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도록 함.
- 납입한 검인정 요금의 반환 제한을 삭제.
- 검정·인정 사열 위원회의 의견서에 대한 국정 교과서 편찬 심의회의 자문을 거친 후 검정의 가부 결정을 할 수 있게 함.

② 교과용 도서 저작·검인정령

이 영은 국정 교과용 도서 편찬 규정, 교과용 도서 검인정 규정 및 국정 교과용 도서 편찬 심의 위원회 규정을 통합한 것이며, 1967. 4. 17. 제정되어 7차의 개정을 거쳐 1977. 8. 21.까지 존속되었다.

가. 교과용 도서 저작·검인정령(1967. 4. 17. 대통령령 제3018호, 제정)

- 대학, 사범대학, 교육대학 및 실업고등전문학교를 제외한 학교의 교과용 도서를 대상으로 하였음.
- 교과용 지도서를 인정.

검인정한 교과서의 저작, 발행자에 대하여 당해 교과서의 교사용 지도서의 저작, 발행 허용

- 검인정 · 요금을 출원 가격의 100배로 하였음.
- 검인정 사열 기준은 문교부장관이 정하도록 하였음.
- 문교부장관이 공급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하였음.

나. 교과용 도서 저작 · 검인정령(1967. 8. 31. 대통령령 제3200호, 개정)

국정 교과용 도서 편찬 규정 제4조에 규정되어 있던 교과용 도서 심의회를 이 영에 삼입 신설함.

※ 검인정 관련 규정 없음.

다. 교과용 도서 저작 · 검인정령(1968. 9. 13. 대통령령 제3580호, 개정)

- 동식물 도감 편찬 위원회 규정, 도서 번역 심의 위원회 규정을 폐지하고 교과용 도서 저작 검인정령에 심의 위원회를 통합 설치.
- 이 위원회에 학교별, 교과별, 사업별로 분과 위원회를 구성

※ 검인정 관련 규정 없음.

라. 교과용 도서 저작 · 검인정령(1970. 8. 3. 대통령령 제5252호, 개정)

- 교과서의 국정 및 검정의 구분을 명시함.
- 검정 교과서의 실시 공고 시기, 책수, 유효 기간, 신청자의 자격, 기타 절차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
- 검정 교과서의 사열 위원수, 사열 기준, 사열 방법, 개편 또는 수정 등을 명확히 함.
- 교과서의 가격 사정 원칙을 설정함.
- 문교부장관의 교과서 편찬 · 발행에 대한 감독권을 체계화 함.
- 별칙으로서 국정 교과서의 발행권과 검정 교과서의 검정을 취소하는 규정을 강화함.

마. 교과용 도서 저작 · 검인정령(1971. 7. 26. 대통령령 제6281호, 개정)

- 교과서 가격 재사정 방법을 합리화하는 것임.
- 교과서 가격을 재사정할 경우에는 종전의 사정된 가격에 물가 변동률, 임금 변동률, 기타 가격의 변동 요인만을 감안하여 사정함.

바. 교과용 도서 저작·검인정령(1972. 7. 11. 대통령령 제6281호, 개정)

- ‘검정 교과서’의 정의를 명백히 함.
- 도서의 인정 신청은 사용 개시일 3월 이전에 하도록 함.
- 검정 실시 공고에 관한 기일 제한을 완화하고 공고 사항을 좀더 구체화함.
- 검정 신청 자격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함.
- 교과서의 원고 심사 합격 여부를 문교부장관이 결정하고, 필요한 부분의 수정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함.
- 교육과정이 개편되지 아니하여 교과서를 개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정 교과서의 유효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함.
- 검정 교과서의 내용 검토를 매년 실시할 수 있게 함.

③ 제 2차 교육과정에 의한 검정 실시

가. 제 2차 교육과정의 공포와 행정 조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실업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1963. 2. 15일자 문교부령 제119~122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문교부는 그에 따른 행정 조치를 1963. 2. 27자로 시달했는데, 그 중 검인정에 관한 부분만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 교육과정 시행 시기

- ㉠ 중학교 교육과정 1965. 3. 1.부터 시행
- ㉡ 고등학교 교육과정 1965. 3. 1.부터 시행(후에 변함)
- ㉢ 실업 고등학교 교육과정 1965. 3. 1.부터 시행

• 새 교육과정에 의한 중·고등학교 검인정 교과서의 검정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였다.

- ㉠ 중·고등학교 중 검인정 대상 교과서 목록(별첨)
- ㉡ 검인정 신청 접수

- 중학교 1963. 12. 10~14.
- 고등학교 1964. 4. 1~15.
- 실업 고등학교 1963. 9. 25~30.

- ㉢ 사열 검정 - 별도 계획에 의함

단, 검인정 수는 각 교과서 별로 3~7종 한도 내에서 조정.

나. 검정 경과

●중학교 검인정

㉠ 접 수

이미 시달된 사열본의 체제, 집필상의 유의점에 의거 저작된 사열본을 1964. 10. 20~1964. 11. 5까지 접수하였다.

㉡ 사열 기준 작성

편수관실에서 극비리에 사열의 일반 기준, 과목별 사열 기준, 종합 의견의 작성 요령 등을 정하였다.

㉢ 사열 실시

- 심사위원을 극비리에 장관 명의로 위촉 소집하여 우이동 청호장에서 외부와 격리된 상태에서 합숙 사열하였다(편수과장 감독 하에).
- 1965. 6. 7 예비 합격 도서 발표, 동시에 제1차 수정 지시. 1965. 8. 17까지 제2차 사열 추천
- 권오병 장관 심사위원들에게 감사 서한 전달
- 검인정 제2차 사열 종합 의견은 담당 편수관의 책임하에 작성.
- 1965. 12. 3 최종 검정 통보(가정 6건을 제외한 모든 교과목은 7건씩 합격)

●중학교 검인정 발표 후

교과서 검인정 출원 접수 전의 문교부 공고에 「검인정 수는 각 교과서별로 3~7종 한도 내에서 조정한다」고 했으므로, 출판사와 저자 모두 이를 잘 숙지했다. 그러나 출판문화의 초창기에, 검인정에 합격 여부는 그 출판사의 사활이 달렸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었으므로, 불합격 출판사와 저자의 불평은 대단하였고, 급기야 문교부를 상대로 한 소송(일조각; 사장 한만년 등)에까지 이르렀다. 그리고 감사원의 감사를 받게 되었다.

문교부 조치에 고의적인 법적 하자는 없었으나, 주로 ① 모든 과목의 교과서를 7종으로 제한한 문제, ② 표절 문제, ③ 시리즈(series) 문제 등이 시비거리가 되었다. 그리고 다음 해인 1966년 중학교 교과서의 검인정을 다음과 같이 추가로 실시하였다.

다) 그 후의 교과서 검인정

㉠ 중학교 추가 검인정

- 1966. 6. 5~7. 15 검인정 추천 도서 227종 접수

• 1966. 10. 88종을 선정 제1차 수정 지시

• 1966. 검인정 통보

㉞ 인문계 고등학교 검인정

• 1966. 6. 7~6. 17 검인정 출원 도서 792종 접수

• 1967. 10. 417종을 제1차 수정 지시

당시 검인정 교과서의 종류는 <표 III-11>에 포함된 국정 교과서 이외의 모든 교과서였으며, 각급 학교별로는 다음과 같다.

<표 III-11> 검인정 교과서의 종류(1968)

• 국민학교 없음

• 중학교⁷⁾

교 과	과 목	종수(책수)	교 과	과 목	종수(책수)
국어과	작 문	17(51)	과학과	과 학	14(42)
	문 법	16(16)	체육과	체 육	12(12)
	한 자	20(20)	음악과	음 악	14(42)
수학과	수 학	16(48)	미술과	미 술	14(42)
사회과	사 회	11(33)	실업 가정과	가 정	8(24)
	사회 부도	9(9)	외국어과	영 어	17(51)

계 177(399)

• 고등학교

교 과	과 목	종수(책수)	교 과	과 목	종수(책수)
국어과	작 문	13(13)	체육과	체 육	14(14)
	문 법	13(13)		음 악 I	15(15)
	고 전	16(16)	미술과	음 악 II	1(1)
	한 문	17(17)		미 술 I	13(13)
사회과	일반 사회	10(10)		미 술 II	1(1)
	정치·경제	9(9)		서예 I	3(3)
	국 사	11(11)		서예 II	1(1)
	세계사	10(10)	가정과	가정 일반	4(8)
	지리 I	12(12)	실업과	농업 일반	5(10)
	지리 II	11(11)		공업 일반	1(2)
	역사 부도	9(9)		상업 일반	7(19)
	지리 부도	13(13)			

7) 문교부, 검인정교과서 일람표(1968)를 자료로 산출

수학과	공통 수학 수학 I	17(17) 16(32) 보충 교재	외국어과	영어 I	15(30)
	수학 II	포함 14(14)		영어 II 영어 작문·문법 독일어 프랑스어 중국어	21(63) 16(16) 16(32) 3(6) 1(3)
과학과	물리 I	11(11)			
	물리 II	12(12)			
	화학 I	12(12)			
	화학 II	11(11)			
	생물 I	18(18)			
	생물 II	15(15)			
	지 학	10(10)			

계 433종 (533책)

• 실업 고등학교

교과목	종수(책수)	교과목	종수(책수)
농업 전문 각과	8(24)	상업 전문 각과	11(50)
공업 전문 각과	8(11)	가정 전문 각과	2(5)

계 29종 (90책)

각급 학교 총계 623종 (1022책)

이 당시 중학교의 검정 교과서 수가 이렇게 늘어난 데에는 추가 합격본 때문이었다.

1965년 중학교 교과서 사열에 있어서는 교과당 7종 이내의 합격본을 낸다는 원칙을 내세웠는데 제한 이유로는, ① 교과서 가격의 저렴화, ② 자금 낭비의 방지 등이었다. 그러나 사열 종료 후 출판사측의 소송 사태가 있자 마침내 당초의 방침을 굽히고, 다음과 같이 추가 합격본을 발표함으로써 교과서 정책에 대한 위신을 추락시켰다.

<표 III-12> 중학교 검인정 교과서 추가 합격 책수

교과 합격수	작문	문법	한자	수학	사회	사회 부도	과학	체육	음악	미술	서예	가정	영어	계
1965년 합격본	7	7	7	7	7	7	7	7	7	7	7	7	7	91
1966년 추가 합격본	10	9	13	9	4	2	7	5	7	7	2	1	10	86
계	17	16	20	16	11	9	14	12	14	14	9	8	17	177

(자료 : 문교부, 1966)

이로 인하여 교과당 평균 14종씩 합격된 셈이어서 책수가 과다하며, 1967년 고등 교과서 검인정에 있어서는 합격 종수를 처음부터 늘려 최고 21종(영어)까지도 증가시킴으로써 출판사측의 반발은 없었으나 교과서 가격 저렴화 등의 정책에는 큰 차질을 초래케 하였다.

4) 교과서 행정 기구

1961년 5월 16일, 군사 혁명에 의해 설치된 군사혁명위원회는 헌법에 상응하는 국가 재건비상조치법을 제정하고, 최고 통치 기관의 지위를 가진 국가 재건 최고 회의를 발족시켜 정부의 기구 개편을 서둘렀다. 그리하여 1961년 10월 2일에 종전의 편수국이 폐지되고(대통령령 제180호), 학무국(교육과정과, 편수과, 교육지도과, 기술교육과, - 편수관실, 장학관실 -)에 편수 기능이 통합되었다.

이때의 학무국장은 홍웅선, 교육과정과장은 신집호, 편수과장은 장순환, 교육지도과장은 장인숙, 기술지도과장은 백영수였다.

이때 최고회의의 문교사회위원회 위원장은 김용순이었는데, 문교부 출입을 담당하던 황중령이 각 국장 및 장학관, 편수관의 출근을 정지시켰다. 당시의 한 인사는 느닷없이 “영감님들 내일부터 나오지 마시오”하는 바람에 집에서 대기했다가 탄 곳으로 전출됐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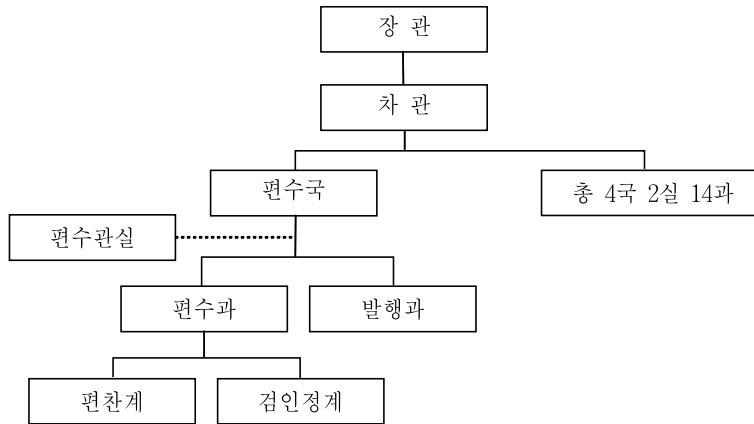
문교부는 4국 14과로 개편되고, 홍웅선, 홍순철, 조기환 등의 편수관은 각각 국장으로 승진되었지만, 보직을 받지 못하고 현장 학교 등으로 전출된 편수관도 있었다.

이때까지만 하여도 편수관(이사관, 서기관, 또는 사무관에 해당)은 일반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고등 전형 시험을 거쳐야 했다. 이 장치로 말미암아 혁명 정부라 할지라도 마음대로 편수관을 임명하지는 못했었다.

5·16 이후의 학무국은, 1963년의 직제 개편에 따라 다시 편수국이 부활됨에 따라 문교부 기구에서 사라졌다. 이 이후 편수국도 몇 번이나 사라졌다 살아났다는 반복하였지만, 이때의 편수국 편제와 직무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편수과의 분장 사무 내용은, ① 교육과정 및 국정 교과서의 저작 및 편찬, ② 교과용 도서의 검인정, ③ 국어 및 교육 자료의 조사·연구, ④ 동식물 도감의 편찬, ⑤ 번역 도서의 편찬 등이며, 이러한 업무를 분담하기 위하여 편수과에 편찬계와 검인정계를 두고 있다.

<그림 III-2> 제 2차기 교육과정기의 문교부 편수국 직제(1963)



발행과⁸⁾의 분장 업무 내용은, ① 교과용 도서의 발행 및 공급, ② 동식물 도감의 발행, ③ 번역 도서의 발행 등으로 되어 있다.

이 밖에 교육과정의 조사·연구와 교과용 도서의 편수, 검정 및 인정 등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편수관을 두고, 편수관실이 비공식 조직으로 설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편수국은 그 후(1978) 다시 폐지되고 장학실과 통합되었으며, 이후에도 여러 번 독립하거나 폐지하는 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 제 2차 교육과정기의 편수관 제도

교과서의 편수 및 검인정과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 연구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문교부 직제 제8조 제6항의 규정으로 편수관 제도를 두었는데, 공무원 임용령(1963. 5. 29 각령 제1317호) 제3조와 별표 I에 나타난 공무원의 직무 분류 구분을 보면 교육 행정직은 일반 행정직군에 포함시키고 편수직만을 별도로 분리하고 있다. 또, 편수직의 직급은 2급 을류로부터 3급 을류까지로 분류되고 있다. 제2차기 후반의 편수관은 편수관(2급 을류) 2인, 부편수관(3급 갑류) 8인, 편수관보(3급 을류) 4인이었다.

8) 출판행정의 문화공보구 이관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1968년 7월 24일, 현재의 문화공보부가 새로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종전의 문교부 편수국 발행과 업무 중에서 저작권과 부정기간행물 및 출판사 업무가, 종전에는 정기간행물만 다루던 문화공보부로 이관되었으며, 문화공보부는 문화국 내에 부정기간행물 및 저작권을 담당한 출판계와, 정기간행물과 언론 정책을 다루는 발행계를 두어 이 두계(係)를 총괄하는 출판과를 두었다.

편수관의 선발 임용에 있어서는 일반 행정직과 같이 국가공무원법(1962. 4. 17 법률 제1325호) 제26조~제28조와 공무원 임용령(1963. 5. 29 각령 제1317호) 및 공무원 임용 시험령(1966. 2. 7 대통령령 제2405호)의 적용을 받게 되어 있었다.

5) 각종 심의회

① 교육과정 심의회

교과서 편찬의 기본이 되는 교육과정을 제정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심의회 규정(1966년 개정, 대통령령 제27355호)에 의한 심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다.

교육과정 심의회의 설치 목적을 보면 ‘문교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대학, 사범대학과 각종 학교를 제외한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이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게 하기 위하여’(동심의회규정 제1조)라고 되어 있었다. 교육과정 심의회의 조직은 다음과 같이 크게 운영 위원회, 교과별 심의회, 학교별 분과 위원회로 되어 있다.

위원은 문교부장관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인 선정은 편수국에서 담당 편수관이 추천 선정하는 형식을 취했다. 그리고 교육과정의 원안 집필도 실질적으로는 편수관이 추천한 집필자에게 장관이 위촉하는 형식이어서 교육과정이나 교과서의 심의 제정에는 편수관의 영향이 크게 작용했었다. 이때, 위촉된 실제 심의 위원的人数은 466명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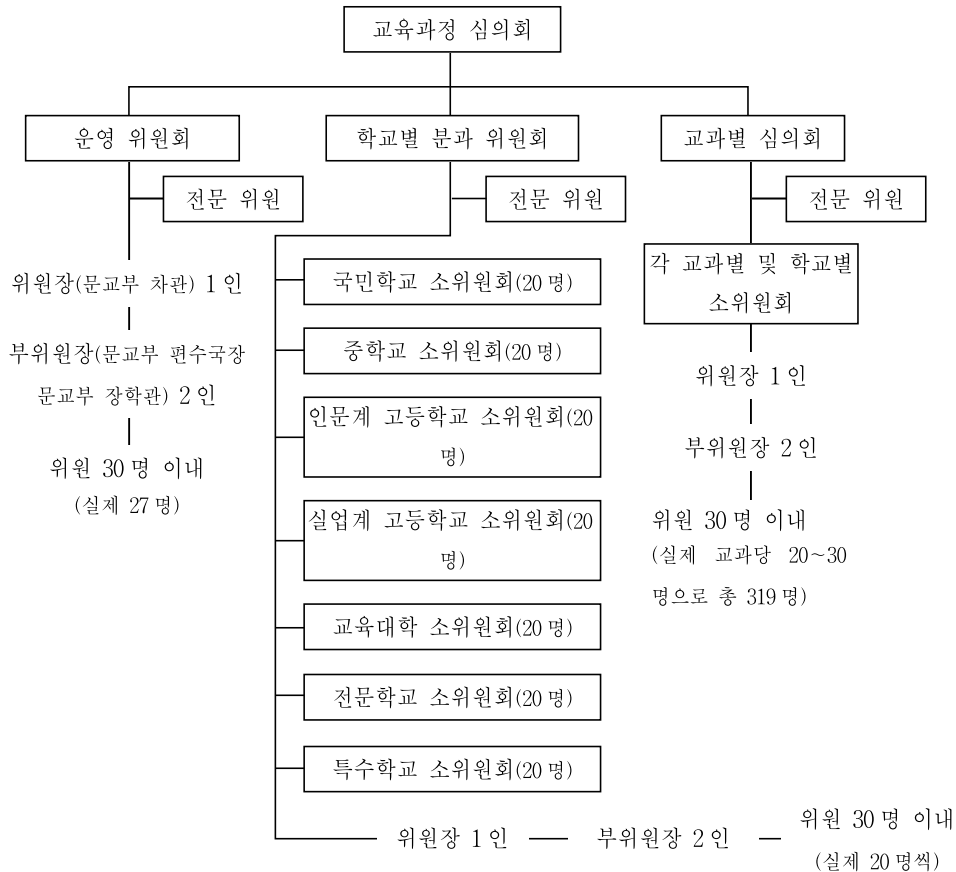
이 교육과정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 작성한 학교별 교육과정의 내용에는 각 교과목의 지도 목표, 지도 내용, 지도상의 유의점 등이 극히 근간적인 사항만에 걸쳐서 수록되어 있으므로, 이것에 의해서 교과서를 편집하기 위해서는 교과서에 수록할 교재 내용의 선정과 조직 배열 등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했다.

이를 위한 국정 교과용 도서 편찬 심의회가 교과용 도서 저작·검인정령(1967. 4. 17, 대통령령 제3018호)에 의하여 구성되었다.

② 교과용 도서 심의회

국정 교과용 도서 편찬 심의 위원회는, 문교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국정 교과용 도서의 편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별, 교과목별로 이를 두는데, 위원장은 편수국장이 되고 위원은 문교부 소속 공무원과 당해 교과목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문교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심의 위원의 실질적인 선정은 역시 담당 편수관이 행했으며, 각 교과별로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수명 내지 30명 정도씩 총계 448명의 교과별 도서 편찬 심의 위원이 위촉되었다.

<그림 III-3> 제 2차 교육과정기 교육과정 심의회의 조직



교과용 도서 심의회는 그 설치 목적을 “문교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교과용 및 교사용 도서와 동식물 도감의 편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이를 둔다”(동령 제2조 2의 1항)고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운영 위원회와 학교별 교과별 또는 편찬 내용별로 필요한 분과 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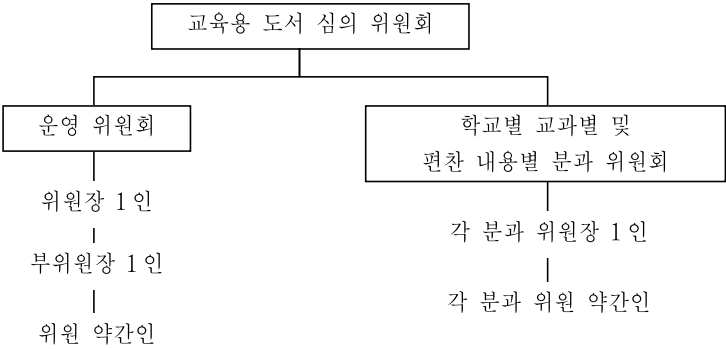
심의 위원들의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교수가 53%로 단연 많고, 다음으로 중고등학교 교원, 국민학교 교원, 본부 편수관 등의 순으로 되어 있다.

위원회의 운영이 일당제로 당일 회의이거나 수일간 연속에 지나지 않아 실효를 거두기 어려웠다.

교육과정, 교과서 내용의 검토 심의에는 신중한 연구 조사와 검토가 가해져야 하는데, 당일 회의의 즉흥적인 심의로서는 합리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어려웠다. 심의 위원들 학

교별 과목별로 구성하고, 분과 위원회를 두어 상임으로 하여 계속적으로 책임 있는 연구 심의를 하게 했더라면 더욱 효율적이었을 것이다.

<그림 Ⅲ-4> 교육용 도서 심의 위원회



<표 Ⅲ-13> 제 2차 교육과정기 교과용 도서 심의 위원 구성 비율

소속별 \ 위원별	교육과정 심의 위원	비 율	교과서 편찬 심의 위원	비 율
유 치 원	6	1.3	1	0.2
국 민 학 교	38	8.2	31	6.9
중 학 교	77	16.5	84	18.9
각 대학, 교대 및 실전	248	53.3	238	53.2
교육 위원회 및 연구소	25	5.4	20	4.4
타 부처	17	3.5	26	5.8
재야 인사	14	3.0	23	5.1
문 교 부	41	8.8	25	5.5
계	466	100	448	100

6) 교과서의 가격 사정

제 2차 교육과정기 초반의 교과서 가격 사정은 1961년에 제정된 국정 교과서 정가 사정 기준(1961. 2. 27 문편 제590호)이 근간이 되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정가는 제조비와 영업비, 그리고 공급 수수료를 구성 요소로 하고, 다음 비율로 책정한다. 폐본 또는 기타 이유로 보상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도로 가산, 계상한다.

<표 III-14> 교과서 정가 사정 관련 자료

발행사 요소별	대한문교서적 주식회사	대한서적 공사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비 고
제조비	70%	68%	65%	
영업비	20%	22%	25%	
공급 수수료	10%	10%	10%	대한문교서적주식회사의 하 청분은 15%

(자료 : 교육부, 교과용 도서 가격 결정 제도 개선 연구)

- ㉠ 제조비는 원가 계산에 의한 사정(査定)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분류 산출한다.
자재비 중 용지대는 구입 승인서를 기초로 시중 도매 구입 단가를, 직접 재료대는
소요량의 구입 총액을 인정하여 산출한다.
공질은 별도로 책정하는 공장 종업원의 기본 급료와 최저 후생금만을 인정하여
산출한 공정별 단가에 의하여 사정한다.
- ㉡ 중고등학교용 교과서의 정가는 별도로 책정하는 교과별 사정 단위 부수와 쪽수,
그리고 2항에 의거 산출한 단가에 의해 쪽당 단가를 산출하고, 실제 쪽수와 상승
하여 산출 사정한다.
- ㉢ 재보상금은 개편으로 폐본되는 교과서에 대하여는 제조비를, 기타 당부 요청으로
된 인쇄물에 대하여는 그 자재대만을 각각 인정 보상한다. 다만, 관계 기관에 대한
기증 및 편집용 도서대와, 관계 예산의 부족으로 당부 요청에 의하여 사회가 부담
한 편집비는 사회 영업비 중 책정액(영업 중 3%)을 초과한 상당액만을 보상한다.
- ㉣ 교과서 용지의 인쇄 손지율은 활판 인쇄는 15%, 오프셋 인쇄는 색지당 2%씩 인정
한다.
손지의 처분 대금은 초등 국정 교과서에 있어서는 그 시중 판매 상당액을 도서
지구 극빈 아동에게 급여하는 교과서대로 충당하고, 중고등학교용 교과서의 제조비
중 자재대에서 공제한다.
- ㉤ 사정 정가는 실제 부당 단가의 10환 이하의 단수를 사사오입하여 책정한다.
- ㉥ 영업비는 정가 사정시 전기 영업 보고서 및 손익 계산서를 검토하여 1항에 의거하
여 책정한 영업비에 과다한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적외 조정하여 정가 인하의
재원으로 계정한다.

<표 III-15> 제 2차 교육과정기 국정 교과서 제조비 계산서

책명	발행 부수		쪽수	체제		판
구분	종별	수량	품명	단가	금액	비고
자재비	본문 용지대					
	표지 용지대					
	크로스대					
	철침대					
	계					
공비	조판대					
	지형대					
	연판대					
	삼화철대					
	본문 원판 제판대					
	동 교정료					
	표지 원판 제판대					
	동 교정료					
	사진 식자대					
	본문 인쇄판대					
	본문 인쇄료					
	표지 인쇄판대					
	표지 인쇄료					
	제본료					
	크로스 첨부대					
	필름 밀착대					
	계					
소계						
영업비	영업비					
	공급 수수료					
	계					
	총계					
	일부 단가					
	일부 정가					

1960년대의 정가 사정 방법은 1950년대의 정가 산출 방법을 좀더 세분화한 것으로, 특히 공임의 경우 조판 공임(투입 원가 인정, 외부 작업분 공제)과 기타 공임(인쇄공업 협동조합 협정 요금의 25%를 감한 요금)으로 나누었으며, 공급 수수료를 15%에서 10%로 조정하였다.

이상은 1960년대 초반의 상황이었고, 1960년대 후반에 가서도 국민학교 아동 1명당의

교과서비 부담은 1년에 평균 262원 꼴이었다.

1968년의 경우, 우리 나라는 아직도 교과서의 무상 급여를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국민학교의 전체 아동이 교과서를 산다고 하더라도 그에 소요되는 총액은 당시의 아동 수 5,382,500명을 곱한 1,410,215,000원이면 되었다.

이 14억 원의 예산으로 헌법 제28조에 규정한 무상이 실현될 수 있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한 것이었다.

① 1960년대 후반의 교과서 가격 사정

교과서 가격은 독점 생산 가격 형성을 억제하기 위하여 정부 승인 제도를 취했다. 국정 교과서의 경우에는 문교부장관의 승인(동사 정관 제41조)을 받도록 규정해 놓았다.

교과서의 가격 책정 형식은 실제 발생 비용+배급비+이윤의 형식을 취했다.

가격을 결정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절차가 필요했다. 하나는 생산 회사가 가격 승인을 받기 위한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생산 회사에서 신청한 가격을 정부에서 승인하기에 앞서 장부와 기타 자료를 심사하여 검토 조정하는 조정 가격 산출 방식이다.

가. 신청 가격 산출

신청가는 먼저 제조 원가를 산출하고, 여기에 일반 관리비와 판매비 및 제보상액을 가산하여 산출하는 것이다.

나. 조정 가격 산출

당시 우리 나라는 실적 표준 원가제를 쓰고 있었는데, 교과서 정가 조정에서 이것은 수년 간 정가 인상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일관되었다.

국정 교과서에 대하여 신청 가격 대 조정 가격, 조정 가격 대 결정 가격 간의 관계를 송금액 대 비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I-16> 정가 억제 대비표

(단위: 원)

구분 년도별	A	B	C	A 대 B		B 대 C	
	신청 금액	조정 금액	결정 금액	D (A-B)	D/A×100	E (B-C)	E/B×100
1964 - 1 기	400,836,532	305,000,000	305,002,000	95,834,532	23.91	-	-
- 2 기	208,702,521	169,202,000	169,202,000	39,500,521	18.93	-	-
1965 - 1 기	404,012,769	362,773,000	307,794,000	41,239,769	10.21	54,979,000	15.16
- 2 기	253,256,487	219,150,000	170,240,000	34,106,487	13.47	48,910,000	22.32
1966 - 1 기	562,075,448	471,789,786	342,041,000	90,285,662	16.06	129,748,786	27.50
- 2 기	350,230,506	268,711,105	197,105,000	81,519,401	23.28	71,606,105	26.65
계	2,179,144,263	1,796,627,891	1,491,384,000	382,496,372	19.55	305,243,891	16.99

자료 : 광상만, 교과서 행정에 관한 연구, 1968)

<표 III-16>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신청 금액보다 매년 10.21~23.91% 저렴하게 교과서 가격이 책정되고 있다. 이것은 정부의 가격 억제 정책에 연유하는 것이지만, 교과서 가격 지수는 연 평균 1.66%의 완만한 상승률을 보였고, 주재료의 상승률은 연 평균 23%의 상승 추세를 보여 국정교과서주식회사는 적자 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

즉, 1966년의 경우, 지출 총원가 631,369,932원에 매출 원가 503,819,339원으로 총 127,550,593원의 적자를 내었고,⁹⁾ 1967년 9월 현재 대외 부채(은행 단기 차입 149,500,000원, 일반 부채 149,500,000원), 합계 405,700,000원에 1967연도 금리 부담액만도 80,000,000원에 달했다.

이상과 같은 흠손액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고 있으나 사후 보상이므로 운영에 큰 지장을 주었다. 당시의 문제점으로는 교과서비를 아동 부담으로 함으로써 의무 교육 무상의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는 문제가 있었다.

그 당시에는 교과서의 무상 공급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무리한 가격 억제로 인하여 교과서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였고, 학부형의 심리적 부담을 약간 감소시키는 외에는 큰 의의가 없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약 14억 원의 예산만 있으면 당시 교과서의 무상 급여가 가능했으므로, 대여제로 하여 2년씩만 쓰게 한다면, 평균 7억 원의 예산으로 무상 공급이 가능했었다. 이것을 실현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으며, 초등 교과서 예산을 학부형 부담에서 지방 교육 위원회 부담으로 돌리지 못한 것도 유감이었다. 그 당시 좀더 깊이 원가 절감에 대하여 연구하고 적정 이윤선상에서 가격을 결정했더라면 하는 아쉬움과, 국정교과서(주)가 좀더 경영자로서의 경영 의욕을 고취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교과서의 가격 합리화와 교과서의 질적 향상에 힘썼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7) 교과서 편찬 제도 비망 · 증언

• 최영복(당시 과학 편수관, 수석 편수관, 전 경북고 교장)

1967. 11. 2 대통령령 제3265호, 문교부 직제 제8조 ⑥항이 신설되기까지는 편수관들은 문교부 직제 “제3조 … 편수국에 편수관 및 부편수관을 두되, 편수관 및 부편수관은 상사의 명을 받아 교과용 도서의 편수 및 검인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라는 규정에 의거 근무하였다(‘편수의 뒤안길’ 창간호에 필자가 8조 ⑥항이라고 한 것은 착오였으므로 수정함).

편수국에서는 당초 교과별로 편수관들의 업무를 분할, 배당하려 하였는데, 편수관의 T/O는

9) 국정 교과서 회사, 영업 결산 보고서, 1966

6~7명에 지나지 않고, 그 T/O는 선임자들이 차지하는 바람에 나머지 사람들은 국·공립 대학 전강 T/O를 빌리거나, 국정교과서회사 등에서 봉급을 받고 촉탁 근무를 하였다.

그러나 T/O 내의 사람이건 촉탁의 직위이건 차별 없이 모두 편수관으로 호칭되고, 한 교과를 맡아 직무를 수행하였으며, 잘못이 없는 한 그 권위는 어느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였다. 편수관은 수가 적고, 고유의 교과목으로 실력과 개성을 발휘하였다. 일반 교원들에게는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때였으므로, 편수관 중심으로 강습회를 열고, 지방에 나가 교육과정 운영과 교과서 사용 실태를 조사하기도 하였다.

촉탁 제도의 모순은 5·16 군사 정변을 계기로 없어지고, T/O도 현실화되었으며, 직무 내용은 1967년에 편수관들의 중지를 모아 “교육과정의 조사·연구와 교과용 도서의 편수·검정 및 인정 등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편수국에 교과별로 편수관, 부편수관 및 편수관보를 둔다.”고 하고, 당시 편수과장이었던 고광득씨(문교부 차관 역임)가 법제화의 수고를 하였다.

당시 편수관은 일반직에 속했다. 편수관보도 3급 을(사무관 : 지금의 5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반직으로서로는 상당히 높은 직위에 속했다. 따라서, 편수관에 임명되려면 고등전형 고시에 합격해야 했기 때문에, 교원 출신은 아무나 지원을 하지 못했다. 첫째 관문인 문교부장관의 추천을 받았다 하여도 총무처가 시행하는 고등 전형 고시에 합격해야 했기 때문이다.

편수관은 교육계에서 몇 명 안 되는 희귀한 존재였다. 반면, 봉급은 형편없었다. 나는 수석 편수관(2급을 이사관)으로서 월 봉급 3만여 원을 받다가 중학교 교장으로 진출하니, 여러 수당을 합하여 5만 원이 넘었음을 기억하고 있다.

(2) 국민학교 교과서

1) 교과서 편찬 제도

제2차기의 국민학교 교과서는 1964년부터 1966년까지 전 과목에 걸쳐서 국정 교과서로 편찬되었다.

당시의 국민학교 교과서는 바른 생활, 국어, 사회, 산수, 자연, 실과, 체육, 음악, 미술 등의 9개이고, 교과서로는 이것 외에 쓰기와 사회과 부도가 있었다.

① 교과서의 편찬 절차

교육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학교 교과서의 저작권은 문교부가 가지며, 편수국 편수관실과 편수과가 교과서 행정을 담당했다. 국민학교 교과서의 편찬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교과서 편찬 계획서의 작성

편찬 진행 전반에 걸쳐 계획을 작성하여 장관의 결재를 받는다.

나. 단위 편성, 예정 분량의 책정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편찬하려는 교과서의 단원을 설정하고, 단위별 원고의 분량, 내용의 방향 등을 결정한다.

다. 원고 위촉

계획서의 결재가 끝나고 단원별 분량, 방향이 결정되면, 이에 근거하여 원고 집필자에게 집필을 위촉한다.

장관 명의로 위촉되는 원고 집필자는 담당 교과 편수관이 추천하게 되며, 작성한 원고는 편수관이 검토하고, 심의회에서 심의하여 인쇄에 회부한다. 그러므로 원고 집필자나 편수관의 위치는 교과서 편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교과서의 편찬은 일반 도서와는 달리 편집자의 자주성이 요망되는데, 환언하면 학문의 성과를 그대로 옮겨 놓기만 하여서는 안 되는 것인데, 그 정도는 고·중·초등학교의 역순으로 강해지는 것이다. 특히 국민학교의 교과서는 예나 지금이나 학문의 성과가 소화되고 재조직·편성되어서 편집되지 않으면 안 된다.

라. 원고 수집 및 정리

집필자로부터 수집된 원고는 담당 편수관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용의 적부, 전체적 체계성, 관련성, 문체의 통일성 등의 시점에서 정리·조정하여 심의 회의에 회부할 원안을 작성한다.

마. 심의 회의

심의 원본을 심의 위원에게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발송하고, 동시에 회의를 소집한다.(심의 회의는 대체로 2회, 매회 3일 정도)

바. 삽화 위촉 및 수집

삽화 위촉을 심의 회의 전에 하며, 완성된 삽화 내용까지 심의에 부쳐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 후 내용이 확정된 후에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 원안 정리, 조판 회부

심의 원안은 심의 회의에서 토의된데 따라 수정·정리하여 내용이 확정되면 장관의 결재를 거쳐 조판에 회부한다.

아. 조판본의 교정

1~7차에 걸치는 조판 교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인쇄에 외부하기 전까지 교정본을 가급적 널리 지정 연구 학교,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배포하여 의견을 청취하여 교정에 반영시킨다.

자. 교료, 인쇄 회부

이상과 같은 절차에 따라 교과서가 편찬되는데, 그 기간은 대체로 8~9개월 정도 걸리게 된다. 편찬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교과서 내용의 집필 과정과 심

의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② 집필 과정

우선, 첫 단계로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교과서의 단원을 설정하고 단원별로 원고의 분량, 내용의 방향 등에 관한 집필 계획을 편수관들이 약 20일 동안에 걸쳐 작성하며, 집필 계획이 작성되면 편수관은 집필자를 추천하고 문교부장관 명의로 집필을 위촉하게 된다. 이 때, 집필자가 지켜야 할 일반적인 집필 기준으로는, ㉠ 국시(國是)에 따른 민주주의 이념의 상징과 한국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 ㉡ 새 시대의 인간상과 아동의 발전 과정에 상응한 적절한 내용이어야 할 것, ㉢ 아동·학생이 창의적으로, 그리고 자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할 것, ㉣ 교과서의 체제, 색도, 용어의 통일 등에 유념하여야 할 것 등이다. 집필 기간은 대개 2개월 정도이며 집필자는 집필 내용에 상응하는 원고료를 문교부로부터 지불받는다. 그러나 원고료는 1매당 70원(삽화료는 400원)으로 잡지류의 원고료에도 미달되고 있었다. 교과서의 집필에는 특히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전문적 식견이 요청되므로, 일반 서적이나 잡지의 경우보다 훨씬 많은 원고료가 지불되어야 했다.

다음으로 문제가 된 것은 교과서 집필 과정에서 집필 기간이 너무 짧다는 것이다. 약 2개월 정도의 기간으로는 집필의 기초가 되는 문헌 연구와 자료 수집을 충분히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집필 기간은 좀더 연장했어야 했다.

③ 심의 과정

집필자로부터 수집된 원고는 해당 교과서의 편수관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용의 적부, 전체적인 체계성, 타교과와의 관련성, 문체의 통일성 등의 시점에서 정리, 조정하여 각 교과별로 심의 회의에 회부될 원안을 작성하여 각 심의 위원에게 사전에 발송하게 된다.

교과서의 심의회는 학교별, 교과별 및 편찬 내용별로 분과 위원회와 운영 위원회를 두고 동심의회에서는 각 교과별로 담당 편수관이 작성한 유인물 원안을 가지고 심의하게 되는데, 그 심의의 기준은 각 교과목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교과서 편찬 취지에 따라 달라서 일정한 기준이 있지는 않다.

당년 예산으로 당년 내 집필 위촉, 탈고, 교정, 심의회, 교정, 인쇄, 교정 등의 과정을 거치게 하는 당시의 국정 교과서 편찬 제도는 편찬 기간이 너무 짧은 것이 문제점이었다.

편찬 기간을 최소한 2년 단위로 연장하고 평균 집필 기간도 당시의 6개월에서 1년 이상으로 늘렸어야 했으며, 편찬 심의회도 적어도 2~3개월 정도 계속해서 심의했어야 했다.

* 국정 교과용 도서 편찬 일정 예 (1968년)

1. 편찬 분량 240 면 × 3.5 매(200 자) = 840 매 × 2 = 1,680 매
2. 편찬 일정
 - (1) 원고 위촉 1968. 2. 25
 - (2) 탈 고 1968. 8. 30
 - (3) 삽화 위촉 9. 10 ~ 9. 30
 - (4) 조판(수정) 9. 30 ~ 10. 15
 - (5) 심의(수정) 10. 15 ~ 10. 30
 - (6) 인쇄본 결재 11. 30

* 제 2차 교육과정기의 교과서 원고료 및 삽화료 (1968)

원고 매당(200 자) 70 원
 삽화 단색소 매당 250 원(평균 400 원)
 사진 매당 200 원
 (자료 : 광상만, 교과서 행정 개선 연구, 1968.)

그리고 당시의 교과서 권당 원고료 5만 원, 삽화료 2만 원, 심의 수당 2만 원 정도의 편수비를 가지고서는 도저히 좋은 교과서를 만들 수가 없는 액수였다. 좀더 많은 예산을 책정하여 우수한 교과서를 만들 필요가 있었다.

2) 교과서 출판 제도

① 교과서의 출판 조직

국민학교 교과서의 발행에 관한 행정적인 업무는 발행과에서 담당했다. 그러나 문교부가 저작권을 가지는 국정 교과서의 번각 발행 및 출판은 문교부가 그 업무를 위촉·대행시키고 있는 3개 회사, 즉 편수국 발행과의 보조 기관인 국정교과서주식회사와 민간 업체인 고려서적주식회사와 문화서적공사가 맡았다. 문교부는 교과서의 발행 및 출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계획·수립하여 3개 회사에 교과서 생산에 관한 세부 내용

을 지시했다.

이와 같이, 국민학교 교과서를 3개 회사에서 분할·출판한 것은 국영 기업체인 국정 교과서주식회사의 출판 시설이 부족하여 민간 업체인 고려서적주식회사와 문화서적공사에 교과서의 출판을 촉탁한 것이다. 3개 회사 중에서 국정교과서주식회사가 출판 업무의 근간을 이룬 것은 물론이다. 국민학교 교과서의 출판 조직에 있어서 특히 문제가 된 것은 교과서의 출판을 3개 회사가 분담하고 있기 때문에 문교부의 지도·감독이 일원화되지 못하여 교과서 행정상 애로가 있었고 일시 공급이 어려운 점 등이었다.

② 출판(생산) 과정

국민학교 국정 교과서의 생산은 시장 생산이 아닌 주문 생산의 형식을 취하고 있어 생산에 관한 기획은 교과서의 공급자보다도 교과서의 수요자와 문교부 정책 결정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국정 교과서의 생산과 공급을 맡고 있는 국정교과서주식회사, 고려서적주식회사 및 문화서적공사는 교과서 생산의 목표량 달성과 소정 기일까지의 생산을 위하여 편수국 발행과의 지시와 통제를 받게 되는데, 3개 회사 중 국정교과서주식회사의 교과서 출판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과서 생산의 첫 단계는 생산 계획을 확정하는 것이다. 국정교과서주식회사의 교과서 생산 계획은 예비 생산 계획과 확정 생산 계획의 2단계로 되어 있다. 문교부로부터 교과서 원고가 입수되면 전학기의 재적 아동수와 교과서 공급률을 고려하여 당해 학년 또는 당해 학기의 소요 예상 부수를 산정하고, 여기에 주문 부수를 산정(1학년 교과서는 학령 아동 증가율을 3%로 보고 산정한다.)하여 총 예상 부수를 산정한 다음, 총 소요 예상 부수의 50%에 해당하는 부수를 목표량으로 한 산정 계획을 수립한다. 이때, 문교부에 제출된 생산 계획이 예비 생산 계획인데, 문교부는 제출된 교과서 예비 생산 계획을 검토·조정하여 승인한 다음 교과서 회사에 송부한다. 교과서 회사는 승인 받은 예비 생산 계획에 따라 생산을 개시하게 되는데, 1학기용은 7월부터 익년 2월까지를, 2학기용은 3월부터 익년 6월까지를 각각 생산 기간으로 했다.

동시에 각 지방의 공급인으로부터 다음 학기용의 실제 교과서 주문 부수가 보고되는데, 보통 1학기용은 11월말까지, 2학기용은 5월 중순까지 보고받게 된다. 이렇게 집계한 것이 실제 확정 부수가 되는데, 이것을 기준으로 하여 확정 생산 계획이 수립된다.

문교부는 교육 위원회 및 교육청으로부터 보고된 주문 부수를 기초로 하여 검토 및

조정함으로써 이 확정 생산 계획을 승인한다. 그리고 인쇄에 필요한 교과서 용지는 교과서를 일정 기일까지 생산하여야 하므로 일시에 막대한 양이 필요하게 되는데 국산만으로는 그 수요량을 충당할 수 없어 본문 용지인 갱지(신문용지)는 외국에서 수입했으며, 모조지, 표지 및 크로스와 보조 재료인 잉크 및 약품 등은 국산으로 충당했다.

3) 교과서의 발행·공급 제도

교과서의 발행·공급에 관한 업무는 편수국의 발행과가 관장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문교부로부터 생산을 위임받은 국정교과서주식회사, 고려서적주식회사, 문화서적공사의 3개사가 대행했다. 문교부는 교과서 공급에 관한 기본 사항과 세부 공급 계획을 수립하여 3개 대행 기관에 지시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했다.

<표 III-17> 1963년도 국정 교과서 발행 실적

종 별	회사명	발행 교과서 종별
국민학교 (국 정)	국정 교과서	국민교 : 64 종
	고려서적	도덕 : 12 종 글씨본 : 3 종 보건 : 3 종
	동아서적	중고 반공 : 2 종 초등(여름 방학) : 6 종 초등(겨울 방학) : 6 종 국어 : 5 종
중 고 (국 정)	대한교과서	도덕 : 6 종 실업 : 126 종
중 등 (검인정)	한국교과서	중학교 : 507 종 고등학교 : 426 종

(자료 : 한국교과서협회 「교과서 회지」, 1963. 5)

공급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3개 회사의 공급 조직을 보면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3단계로 조직된 국정교과서주식회사와 같은 형태이다. 즉, 문교부와 직접 접촉하여 교과서 공급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상부 기구로서의 생산 회사가 있고 중계 기구로서 5개의 지방 공급 사무소 그리고 학교와 직접 접촉하는 지정 공급인으로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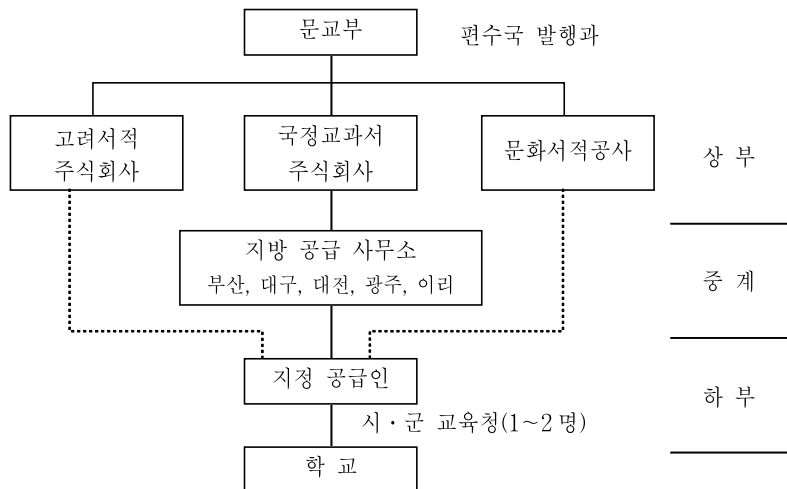
둘째는, 상부 구조인 생산 회사와 하부 구조인 지정 공급인으로 조직된 고려서적, 문화서적과 같은 2단계로 된 형태이다.

이 두 가지 공급 조직은 완전히 분리된 것이 아니고 하부 구조인 지정 공급인은 단일화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국민학교 교과서 생산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국정교과서주식회사가 설치 지정한 지정 공급인을 다른 2개 회사가 공동의 하부 기구로 이용한 것이다. 이를 도시하면 다음과 같다.

일원화된 공급 조직은 공급 업무를 원활하게 하는 기본적인 요소의 하나라고 하겠다. 그러나 당시의 공급 조직은 완전히 일원화된 것이 아니라 하부 기구의 경우에만 단일화되어 다소간의 편의가 도모된다고 하겠다.

상부 기구인 생산 회사들은 공급을 전담하는 부서를 두고 있으며, 여기서는 ㉠ 교과서의 수급 계획 및 수요 부수의 조정, ㉡ 공급 예산의 편성, ㉢ 교과서의 공급 및 기장 보관, ㉣ 공급인의 지정, 감독, ㉤ 교과서의 공급 대금 및 수납

<그림 III-5> 국정 교과서의 공급 체계



검산, ㉥ 지방 공급 사무소의 관할 등에 관한 업무와 ㉦ 제품의 포장, 보관 및 발송, ㉧ 하조 운송 및 운임의 조사, 조정, ㉨ 하조 자재 수급 계획, ㉩ 불용품의 보관 및 출납에 관한 업무로 나누어서 처리했다.

이 밖에도 중계 기구인 지방 공급 사무소의 역할도 하고 있어 전체 공급 업무의 관리와 현업 부서적 성격도 가지고 있다.

중계 기구인 지방 공급 사무소는 국정교과서주식회사만이 설치하고 있는 기구로, 전

국에 5개소, 즉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이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 교과서의 수주 및 공급, ㉡ 관내 공급인의 지도 감독, ㉢ 교과서 검수 및 보관, ㉣ 교과서 대금의 수납 및 검산, ㉤ 운송 운임의 지급, ㉥ 기타 본사에서 지시하는 사항을 담당 처리했다.

본사가 직할하는 지역은 서울, 경기, 강원 및 충청남·북도의 일부와 경상북도의 안동, 영주 지방이며, 부산 지방 공급 사무소는 경상남도과 제주도 전역을, 대구 지방 공급 사무소는 안동, 영주 지방을 제외한 경상북도와 울릉도를, 대전 지방 공급 사무소는 충청남북도의 29개 시군 중 15개 시군을, 전라남도 전역은 광주 지방 공급 사무소가, 전라북도에는 이리 지방 공급 사무소가 관할했다.

일선 학교와 직접 접촉하고 있는 하부 기구인 지정 공급인은 교과서의 생산과 공급을 대행하고 있는 3개 회사와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담당 업무는 담당 구역 내의 각 국민학교로부터 학기별, 학년별로 아동 수와 교과서의 소요(주문) 부수를 조사하여 지방 공급 사무소 또는 본사로 보고하여야 하며, 본사 또는 지방 공급 사무소로부터 운송되는 교과서를 각 학교에까지 운반 공급하는 일과, 교과서 대금의 수금, 상부 기구로부터 전달되는 여러 가지 지시 사항을 수행했다.

지정 공급인의 자격 요건은 해당 지방에서 서적상 또는 문방구상을 1년 이상 계속한 자로서 성실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에 정하고 있다.

지정 공급인의 수를 보면, 전국적으로 260명을 지정하고 있는데, 이는 1968년 4월 1일 현재 국민학교 아동수 5백 54만 8천여 명에 비교할 때 공급 규정에 정한 3만 명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공급 조직에서 문제가 된 것은 상부 기구는 분리되어 있는데 하부 기구인 지정 공급인은 단일화되고 있어 지정 공급인들이 업무를 처리하는 데 이중적인 노력이 필요했고, 불편한 점이 많았다는 점이다.

교과서의 주문은 문교부가 교과서 주문에 관한 사항을 교육 위원회와 교육청을 경유하여 일선 학교에 지불하며, 또 직접 교과서의 공급을 대행하고 있는 각 회사에 지시하면, 일선 학교에서는 학급 담임이 아동을 통하여 가정에 교과서의 주문을 통고하고, 주문을 받아 교내 도서 담당 교사에게 보고하며, 보고된 숫자는 학교 학년별로 집계되어 행정 기관으로 보고된다.

각 학교는 행정 기관인 교육청에 보고함과 동시에 지정 공급인에게 통고하여 소요 부수를 주문하게 된다. 지정 공급인은 각 학교로부터 주문된 부수와 함께 관할 구청 내에서 소요될 부수를 함께 조사·파악하여 지방 공급 사무소를 거치거나 직접 본사에 보고

하게 된다.

소요 부수의 파악 시기는 대체로 6~8개월의 여유를 두고 주문 받게 된다. 즉, 교과서가 사용될 전학기 초의 예를 들면 1969학년도 1학기용 교과서는 1968학년도 2학기에 주문을 받아 전국적으로 소요될 부수를 파악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주문 부수 내지 소요 부수가 파악되면, 문교부와 교과서 생산을 위임받은 각 회사가 일정한 절차에 따라 확정 생산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교과서를 생산하게 된다.

4) 국민학교 교과서 편찬 제도 비망·증언

● 이경화(당시 문교부 발행과 근무, 전 대치국교 교장)

5·16 이전에는 전국 사립학교 재단 연합회가 출자하여 만든 국정교과서주식회사가 생산 공급을 해 왔는데 5·16 당시 군사 혁명 전단을 찍은 고려서적주식회사(이학수 사장)에게 생산 공급권을 주기 위하여 국민학교의 '바른 생활'(도덕)책을 새로 편찬하여 생산회사로 지정하였으며, 5·16 당시 자금을 댔다는 동아서적(주)(고진영 사장)에는 대한교련에서 생산 공급하던 방학책을 생산 공급하도록 이권을 주었다. 그리고 교과서 공급인은 각 군청 단위로 정부가 지정하여 공급 수수료를 교과서 가격의 국정 교과서는 10%, 검인정 교과서는 15%로 결정, 지급하였다.

물가 단속을 위하여 시중에서 팔거나 지정한 종목의 가격을 정부가 약 50종 이하로 정해서 인상을 억제하여 왔는데(인플레이 상승 기준), 이 중에 교과서 가격이 포함되어 있어 교과서 가격은 문교부장관이 정하지 못하고, 경제기획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되어졌다.

교과서 가격은, 직접 자료비, 간접 자료비, 공임, 공급 수수료, 관리비(검인정 교과서는 인세 10% 포함) 등을 기준으로 산출했다.

교과서 가격을 좌우하는 것은 부동산 요소인 교과서 용지대, 인쇄료, 공급 수수료 등의 공임 등은 책당 가격에 생산 부수에 변함 없이 포함되는데 반하여 유동 요소인 조판비, 지형대 등은 생산 부수에 따라, 즉 조판비가 100만 원이 들었을 때 10만부를 생산할 때와 100만부를 할 때는 책당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특히 검인정 교과서나 국정 교과서도 그 내용이 바뀌어 헌책을 다시 사용할 수 없도록 관계 회사가 편수 당국에 부분 개편을 할 수 있도록 작용한 것도 같으며 생산 수에 따라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문교부 당국자에게 생산 부수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한 것도 사실이다. (첫해는 조판비가 들어갔는데 다음 해에는 조판비가 없으면, 책값이 떨어져야 하는데 공급 부수가 주는 경우 등)

교과서 원고는 문교부가 담당 편수관을 중심으로 과목별 편찬 심의위원회에게 원고를 위탁, 원고를 지급하고 책에 들어가는 삽화는 크기에 따라 삽화를 그린 화가에게 지급하였다.

책의 인쇄는 오프셋 인쇄(색도 인쇄)를 했는데, 예를 들어 산수책에 연필 3자루가 들어간 삽화가 있으면 푸른색과 검은색으로 인쇄를 하게 되면 핀트가 맞게 인쇄가 되면 3자루가 되고 핀트가 안 맞은채 인쇄되면 색도가 틀린 6자루의 연필이 되어 교과서의 내용이 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문교부가 3명의 감독관을 두어 인쇄회사를 매일 감독시켰는데, 내용이 틀려지고, 못쓸 책을 생산 회사가 그대로 공급하려고 가진 노력을 했고, 못쓸 책이 공급되기도 했다.

그러던 중 국정교과서주식회사 사장(이세정)이 문교부장관으로 발령되면서, 즉시 감독 제도를 없애는 쪽으로 결정이 되었다. 감독관 중의 하나였던 나(이경화)는 생산 회사로부터 봉투를 안

받은 것은 물론, 식사 제공도 안 받고 소신껏 잘못 인쇄된 교과서를 공급하는 회사를 편수국의 상관들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그 보고서는 언제나 국장실 이상에서 없어지곤 했다. 그러던 차에 감독 제도가 없어지고 해임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당시 허선간 발행과정에게 이경화가 말하기를 저는 그만두어도 되는데, 동아일보사에 찾아가 그 동안 보고한 것이 없어졌고, 부당하게 교과서가 생산·공급된다는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니, 이것이 장관실에까지 들어가 너만은 문교부에서 신분 보장을 해 주고, 그대로 있게 한다가에 나머지 두 사람도 있게 해 달라고 했더니, 그 두 사람은 봉투도 받고, 식사 등도 대접 받고 했으니 절대 안 되고, 너만 그대로 문교부에 남아 있으라 했다.

검인정 교과서는 동일한 과목의 교과서가 수종씩 수개의 출판사에서 인쇄되어 공급되는 관계로 저자는 주문을 많이 받아 인세를 많이 받으려고 저자가 제자인 교사를 찾아가 판촉 활동을 하는가 하면, 출판사는 이윤을 많이 올리려고 각 학교에 다니며 돈을 뿌려가며 판촉전을 벌이기 때문에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하여 한 때는 풀 제도라고 하여 단 500부가 팔린 책이나 7000부가 팔린 책이나 간에 다 합쳐서 산술 평균으로 분배함으로써 각 출판사의 판촉 비용을 줄인 일도 있었다.

(3) 중등학교 교과서 편찬·발행

1) 교과서 편찬 제도

① 교과서의 종류

제2차 교육과정기의 중등학교 교과서는 일부 교과서는 국정으로, 나머지 교과서는 검인정 교과서로 편찬·발행하였다.

국정 교과서의 편찬 과정은 전술한 국민학교 교과서의 경우와 같으므로, 여기서는 검인정 교과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② 검인정 절차

가. 검정 규정 및 절차

교과서의 검정 또는 인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신청 기간을 정하여 문교부장관이 공고하여야 하며(동령 제4조 1항), 저작자는 동기간 내에 문교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교과서 검인정 신청서에 이력서, 신청 가격 계산서 및 검인정용 도서 6부를 첨부하여 문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동령 제4조 2~3항)

문교부장관은 검인정을 신청한 도서에 대하여 그 적부를 사열하기 위하여 매교과당 3~5인의 사열 위원을 위촉하고, 사열 위원은 문교부장관이 정하는 사열 기준에 따라 위촉을 받은 교과서의 내용을 사열하고, 그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동령 제5조)

<표 III-18> 제 2차 교육과정기의 중등학교 교과서

국정·검 인정별	중 학 교			인문계 고등학교					
	과목	종수	권수	과목	종수	권수	과목	종수	권수
국정	국 어	1	6	국 어	1	3			
	도 덕	1	3	도 덕	1	1			
	(민주 생활)			(국민 윤리)					
	실 업	1	1	일반 관리	1	1			
	농 업	1	2	반 공	1	1			
	공 업	1	2						
	상 업	1	2						
	수 산	1	2						
	반 공	1	1						
	계	8	19	계	4	6			
검정	수 학	16	48	수학			생물 I	18	18
	사 회	11	33	공통 수학	17	17	생물 II	15	15
	과 학	14	42	수학 I	16	16	지 학	10	10
	체 육	12	12	수학 II	16	16	체 육	14	14
	음 악	14	42	보충 교재	16	16	음 악	16	16
	미 술	14	42	(전문용)			음 악	13	13
	실업·가정	8	24	수학 II	14	14	미술 I	1	1
	외국어	17	51	사 회			미술 II	4	8
	(영어)			일반 사회	10	10	실업·가정	5	10
				정치 경제	9	9	농업 일반	1	2
				국 사	11	11	공업 일반	7	19
				세계사	10	10	상업 일반		
				지리 I	12	12		15	30
				지리 II	11	11	외국어	21	63
				과 학			영어 I	16	32
				물리 I	11	11	영어 II	3	6
				물리 II	12	12	독 어	1	3
				화학 I	12	12	불 어		
				화학 II	11	11	중국어		
	계	106	294				계	332	432
인정	작 문	17	17	작 문	13	13			
	문 법	16	16	문 법	13	13			
	한 자	20	20	한 문	17	17			
	서 예	9	9	고 정	16	16			
	지리 부도	9	9	사회 부도	13	13			
				역사 부도	9	9			
				영어 작문법	16	16			
				서 예	4	4			
	계	71	71	계	101	101			

(자료 : 문교부, 1969)

㉠ 1963년 실고용 검정 접수 사열 - 1964년부터 사용
㉡ 1965년 중학교용 검인정 접수 사열 - 1966년부터 사용
㉢ 1967년 고교용 검인정 접수 사열 - 1968년부터 사용

```

graph TD
    A[저자] -- 원고 --> B[출판사]
    B -- "프린트 원고(백표지)" --> C[문교부 편수국]
    C -- "사열 평가서 의 건서" --> D[교과서 사열 위원  
(교과당 3~5인)]
    D -- "심사(2차 사열) 가 채본  
수정본 심사 경유" --> B
    B -- 통지 --> E[교과서 전사회]
    E --> F[채택]
    C -- "점수 일람표  
(편수국장 종합)" --> G[문교부장관]
    C -- "종합 의견서  
(편수관 종합)" --> G
    G -.-> C
    C -.-> B
  
```

㉠ 교육법에 명시된 교육 목적과 각 교과지의 지도 목표에 일치되도록 하여 교육과정의 정신과 내용을 충실히 반영시켜야 한다.

㉡ 특정한 종교, 정당 단체에 편파된 사항과 재료를 써서 선전 또는 비난하여서는 안 된다.

㉢ 내용 및 이용하는 자료는 최신의 것으로 정확하여야 한다.

- ㉔ 내용과 정도는 학생의 심신 발달 과정에 맞도록 배열할 것이며 기초 학력의 충실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 ㉕ 외국 서적을 모방하거나 그 내용을 그대로 옮겨 써서는 안 된다.
- ㉖ 특정한 상품을 선전 또는 비난하는 표현이 되어서는 안 된다.
- ㉗ 지역성이 고려되어 학습 지도의 편의가 도모되어야 한다.
- ㉘ 편찬의 창의성을 발휘하여 교과서로서의 특색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 ㉙ 표기법 및 학술 용어는 정확하고 표준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
- ㉚ 삽화, 사진, 도표, 통계 등은 정확, 간명하여야 한다.
- ㉛ 본문 사용 활자는 5호 이상으로 아름답고 선명한 인쇄 효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 단, 주석이나 참고 사항은 예외로 한다.
- ㉜ 학교별 교과 종목에 별도 지시되어 있지 않는 교과서는 국판 형서를 원칙으로 한다.

집필상의 유의점과 교육과정을 기초로 한 교과서의 집필 기간은 대체로 6개월 내지 12개월이다. 검인정 교과서 집필 과정에서 불합리했던 점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서 내용의 집필 기준이 되는 ‘집필상의 유의점’이 획일적이었다. 교과서가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는 교과서가 ①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교육 계획과 교과 경영의 기준에 따라 일관성 있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편찬되어야 하며, ② 지식의 정도나 아동의 학습 능력에 비추어 적절한 내용이어야 하고, ③ 교육학적 근거를 가진 생활의 제현상을 이해하고, 과학적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여 이를 실생활에 적용하는 학습 지도 방법이 제시되어야 하며, ④ 내용의 정확성과 타당성을 기해야 하고, ⑤ 위생적이고 미학적인 만족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집필상의 규제가 지나쳐서 교과서 구성의 창의성, 지역성, 특수성 및 융통성 등까지도 잃게 된다면 좋은 교과서의 편찬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둘째, 원고의 집필 기간이 너무 짧았다. 중등학교 교과서는 중견 국민의 육성에 필요한 지식과 전문적인 기술을 내용으로 하고, 그 내용 또한 상당량이 되므로, 참고 자료의 수집 및 문헌 연구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집필 기간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집필할 수 있도록 했어야 했다.

③ 출 원

- ㉠ 문교부에서 공고하는 교과에 한하여 기준가의 10% 가감 한도 내에서 가쇄본(유인물), 통표지(卷表紙)로 하여 6부를 제출한다.
- ㉡ 출원 구비 서류는 검인정 규정에 의한다.
- ㉢ 사열 수수료(정가의 50배)와 제조비 계산서를 권별로 계산하여 제출한다.
- ㉣ 저자의 이력서는 공저 전원의 것을 제출한다.
- ㉤ 사열본에는 머리말이나 권두화를 넣지 못한다.
- ㉥ 사열본의 체제는 문교부가 제시하는 양식을 따른다.

④ 사열 과정

교과용 도서의 저작, 검인정령에 나타난 검인정 교과서의 사열은 문교부장관이 위촉한 사열 위원이 출판사(또는 저작자)로부터 신청된 교과서에 대하여 문교부장관이 정하는 사열 기준에 의거하여 그 내용을 사열하고, 그 의견서를 문교부장관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으며, 문교부장관은 그 의견서에 따라 검인정의 승인 여부를 정하고 관보에 공고하게 되어 있다.

검인정 교과서의 신청분을 사열하기 위한 별도의 기구는 구성되어 있지 않았으며, 사열 기준, 사열에 관한 절차 등은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⑤ 사열 기준

사열은 1차, 2차로 나누어 내용 사열과 형식 사열을 하였는데, 법규나 부령으로 정해진 사열 기준은 없었으며, 사열이 있을 때마다 편수관이 작성하여 장관의 재가를 얻어 실시하였다. 1967년에 실시한 인문계 고등학교 검인정 교과서 사열에 있어서는 각 교과마다 20개항을 사열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데, 15개항은 교과마다 동일한 기준이고, 5개항만이 교과별 기준이었다. 이때의 사회과의 교과용 도서 사열 기준¹⁰⁾은 다음과 같다.

가. 절대 조건

검인정 교과용 도서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 ㉠ 교육법과 동시행령에 규제된 우리 나라 교육의 목적 및 방침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다.
- ㉡ 국시와 국가 정책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다.
- ㉢ 교육과정에 제시된 해당 전과목의 지도 목표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다.
- ㉣ 특정한 종교, 사회 단체를 선전, 비난함을 목적으로 한 편파적인 서술이 없이 교육

10) 문교부, 인문계 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검인정 사열 기준, 1968.

적으로 건전하다.

나. 필요 조건

검인정 교과용 도서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학습 효과를 올릴 수 있어야 한다.

- ㉠ 해당 교과목의 교육과정 내용에 따르고 소홀히 다루거나 누락된 부분이 없다.
- ㉡ 수록된 내용은 편협된 견해나 일부의 의견을 그릇되게 일반화하지 않고 보통 타당성을 띠고 있다.
- ㉢ 문장은 간명하고 학생의 이해력에 비추어 적절하다.
- ㉣ 학습 내용의 선정, 분량과 단원의 조직은 지도 시간이나 학생의 이해력 정도로 보아 적절하다. (집필상의 유의 사항에 지정된 쪽수를 참작한다.)
- ㉤ 본문의 서술 내용, 문제 등은 정확하다.
- ㉥ 삽화, 도표, 통계, 기타 자료는 정확하고 효과적이다.
- ㉦ 오자, 탈자가 없고 맞춤법이 정확하다.
- ㉧ 학습 내용은, 계통적으로 발전하여 이해와 능력의 배양에 알맞게 되어 있다.
- ㉨ 서술 내용은 전후의 모순과 불필요한 중복이 없고 일관되어 있다.
- ㉩ 문장의 표현, 외래어의 한글 표현, 한글의 로마자 표기, 용어, 기호 등이 통일되어 있다.
- ㉪ 서술 내용은 학습 경험을 생활화하고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되도록 충분히 고려되어 있다.
- ㉫ 예제, 연습 문제 등을 적절히 수록하여 기초적 사항을 반복 연습하는 기회가 마련되어 있다.
- ㉬ 차례, 부록, 주, 찾아보기 등은 필요에 따라 적절히 배치되고 이용하기 쉽게 되어 있다.
- ㉭ 서술과 삽화, 도표 등은 다른 도표를 표절한 일이 없으며 저자의 연구 결과를 반영시켜 충분히 창의성을 발휘하고 있다.
- ㉮ 교재의 선택, 조직, 기타에 학생의 흥미를 유발시키고 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저자의 창의성이 발휘되어 있다.
- ㉯ 학생으로 하여금 우리 나라의 현실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의욕을 일으킬 수 있도록 고려되어 있다.
- ㉰ 시사성이 강한 변동 교재 서술에는 충분한 융통성이 고려되어 있다.
- ㉱ 삽화, 사진, 도표 등은 균형 있게 적소에 배치되고 시사적인 것은 최신의 자료에

근거하고 있다.

㉞ 사회과의 다른 교과목과의 관련이 잘 고려되어 있다.

㉞ 단원, 절 등의 표시, 행바꿈 면바꿈, 본문 주 등의 활자의 변화 등 편찬 체제가 적절하다.

이상의 사열 기준은 대외비로 하고 있고, 사전에 공고하지 않음으로써 집필 요령의 내용과 다르다 하여 일반의 오해를 사는 일도 적지 않았다.

⑥ 사열 위원

사열 위원은 교과당 3~5명으로 구성하고, 해당 교과의 교과서를 집필하지 않은 자로 함을 원칙으로 했다. 대개, 교과당 대학 교수 3명 대 중학교 교사 2명꼴로 위촉 구성하였고, 편수관은 1965년 중학교 사열시부터 사열 위원으로서의 참여는 중지되었고, 사열 기준의 작성, 종합 의견서의 작성, 합격본에 대한 수정 지시 등에만 관여하였다. 사열 위원은 공개하지 않았으며 사열 내용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엄중한 통제를 가하였다.

그러나 우리 나라와 같이 대부분의 교수가 교과서를 집필하는 나라에서는, 질적으로 집필자보다 우수한 사열 위원단을 구성하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우수한 교육자나 학자라고 해서 반드시 우수한 사열자가 될 수 있다고 할 수는 없으나 사열 업무에 숙련된 위원이나 전문가가 포함되지 못한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아쉬운 일이다.

2) 교과서 출판 제도

① 교과서 출판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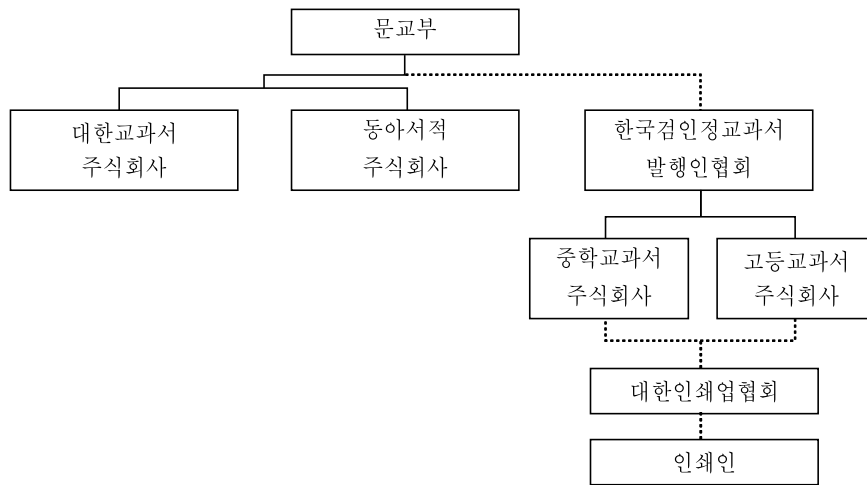
중등학교 교과서의 출판 조직은 국정 교과서와 검인정 교과서의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국정 교과서의 출판은 민간 업체인 대한교과서주식회사와 동아서적주식회사가 문교부의 지시를 받아 행하였는데, 전자는 중학교의 국어, 도덕, 실업, 고등학교의 국어, 도덕,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 교과서를, 후자는 중고등학교의 반공 교과서의 출판을 담당했다.

검인정 교과서의 출판은 검인정 교과서를 발행하고 있는 출판사의 집합체인 중등교과서주식회사와 고등교과서주식회사가 담당했으며, 이 두 회사의 생산과 공급의 일원화를 기하기 위한 한국검인정교과서발행인협회가 있다. 그리고 검인정 교과서는 대한인쇄업 협회를 통하여 각 인쇄인에게 하청을 주어 출판케 했다.

이때의 한국 검인정도서공급주식회사는 1952년에 계획성 있는 교과서의 출판과 공급을 위해 공동 판매 기구로서 설립된 것이다.

<그림 III-7> 중등학교 교과서의 출판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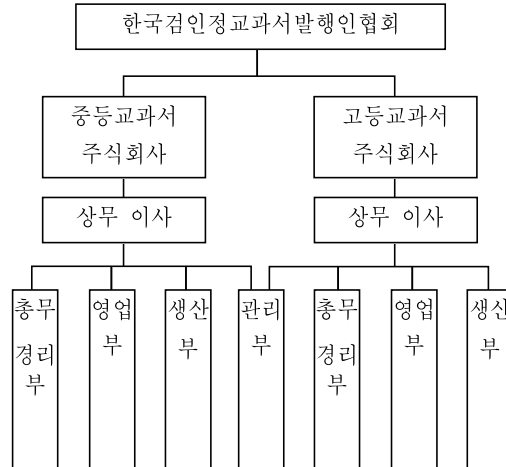
이 이후 검인정 교과서의 판매는 위탁 판매의 형태로 되고, 교과서 출판업계는 질서를 잡게 되어 교과서의 적기 공급이 원활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다가 1957년에는 출판 및 공급 조직을 일원화하고, 주수에 따라 이윤을 배당하는 조직 형태, 즉 공동 생산 공급 기구인 한국검인정교과서주식회사 형태를 취하게 된 것이다. 이 조직은 구 후 한국검인정교과서발행인협회를 통제 조정 기관으로 한 중등교과서주식회사와 고등교과서주식회사로 개편됐다.

이 조직은 다음의 도표와 같다.

검인정교과서주식회사의 사업 내용

- ㉠ 교과서 발행에 관한 조사, 연구, 개선 진흥 및 지도
- ㉡ 정부의 지시 또는 위임에 의한 업무 수행
- ㉢ 저자의 저작권 행사와 교과서 편찬에 대한 협조
- ㉣ 교과서의 일원 공급
- ㉤ 교과서의 계획 발행
- ㉥ 교과서의 공동 선전

<그림 III-8> 제 2차 교육과정기 검인정 교과서 회사의 조직



이상과 같이 중등학교 교과서 출판 조직은 국정 교과서 출판 조직과 검인정 교과서 출판 조직의 이원 체계로 되어 있고, 후자는 전자와 대조적인 조직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이러한 이원 조직 제도는 중등학교 교과서를 국정 교과서와 검인정 교과서로 하고 있는 당시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였다. 그러나 검인정 교과서가 출판되기까지는 문교부 편수국 — 한국검인정교과서발행인협회 — 검인정교과서주식회사(중등 및 고등) — 대한인쇄업협회(인쇄인)의 경로를 밟게 되는데, 각 단계의 조직은 실제로는 독립적인 업무 체계를 가지므로, 교과서 발행의 효율적인 일원화를 기하는 데 무리가 있었다.

나. 출판 생산 과정

교과서의 출판 과정은 국정인 경우와 검인정인 경우 크게 다르다.

국정 교과서의 출판은 대한교과서주식회사와 동아서적주식회사에 의해 대행되고 있었는데, 국정 교과서의 대부분을 출판하고 있는 대한교과서주식회사의 출판 과정은 국민 학교 교과서와 똑같은 절차를 밟았다. 즉, 문교부로부터 원고와 함께 출판 지시를 받으면 총예산 생산 부수를 책정하고 그 부수의 50~70%에 대한 예비 생산 계획을 세워 문교부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다. 문교부의 승인을 받으면 동계획에 따라 생산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데 대체로 1학기용은 5~6개월 전에, 2학기용은 3개월 전에 각각 생산 활동을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하여 교과서의 생산 활동이 진행되는 동안 지방의 공급인으로부터는 주문 부

수가 보고된다. 이 주문 부수에 따라 전국적인 소요 부수를 산정하고, 확정 생산 계획을 세운 다음 다시 문교부의 승인을 받고 생산 활동을 하게 된다. 검인정 교과서는 문교부에서 검인정된 교과서를 중등교과서주식회사와 고등교과서주식회사에서 종합하여 생산했다. 즉, 각 출판사에서 교과서의 원고를 조판하여 완성한 지형을 수집하고 각 학교로부터 공급인이 주문받은 주문서에 의해 집계된 주문 부수를 총예상 부수로 하여 생산 계획을 수립한 다음, 이 계획에 따라 교과서를 생산했다.

3) 교과서 채택 제도

자유 발행제나 인정 제도를 취하는 외국에서와는 달리, 교과서의 채택을 위한 특별한 ‘채택 기준’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검정 또는 인정에 합격된 교과서라 할지라도 이를 학교에서 채택하고자 할 때에는 합리적으로 분석, 평가할 기준을 가지고 학교의 여건과 실정에 부합되는 교과서를 채택하여야 한다.

당시에는 교과서의 생산과 공급을 각 출판사에 맡기고 있어 출판사와 저자는 교과서를 판매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였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 즉, 교과서의 우량 여부에 따라 교과서를 채택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이해와 직결시켜 채택하는 폐단도 있었던 것이다. 이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서 각사가 생산, 공급해 오던 교과서 출판사를 공동 투자에 의한 교과서 생산 회사로 통합하였던 것이다.

당시 중앙교육연구소가 실시한 ‘교과서 행정에 관한 연구’에서는 ‘검인정 교과서의 채택 기준’ 설문 조사를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표 III-19> 검인정 교과서의 채택 기준

기 준	계		대도시		도 시		농 촌	
	N	%	N	%	N	%	N	%
ㄱ. 저자의 학문적 권위	30	8.85	4	3.81	12	9.91	14	12.39
ㄴ. 과거에 사용하던 책	28	8.26	10	9.52	6	4.96	12	10.62
ㄷ. 스승이 지은 것 (아는 분의 것)	8	2.36	2	1.91	3	2.48	3	2.65
ㄹ. 기준이 없이 상부의 지시	3	0.88	-	-	1	0.83	2	1.77
ㅁ. 교과서의 내용이 좋은 것	270	79.65	89	84.76	99	81.82	82	72.57
ㅂ. 기 타	-	-	-	-	-	-	-	-
계	339	100.00	105	100.00	121	100.00	113	100.00

(자료 : 중앙교육연구소, 1969.)

채택의 대상이 되는 교과서는 검인정 교과서에 한하게 된다. 1966년 이전에는 문교부의 계획과 지시에 따라 교육위원회별로 검인정 교과서 채택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검인정 교과서의 종합 전시회를 전학년도 9월경에 개최하고, 교사들에게 참관·선정의 기회를 주도록 하였다.

각 학교에서는 교과별로 대표 교사 또는 전교사들이 일정 기간 동안에 이것을 참관하였다. 그러나 1967년부터는 교과서의 전시회를 중단시키고, 발행된 검인정 교과서 전체를 각 학교에 견본으로 발송하고 있다.

교과서의 주문기가 되면 문교부는 검인정 교과서 목록을 작성하여 각 학교에 일괄 배부하여 주었다.

각 학교에서는 교과서 목록, 교과서 전시회(견본 분석) 등의 활동을 토대로, 여러 가지 관점에 따라서 교과별 교사 협의를 통하여 채택 사용할 교과서를 일차적으로 선정하고, 이를 교장에게 보고하면 교장이 이를 다시 검토하여 그 학교에서 사용할 교과서를 최종적으로 채택하게 되는 것이다.

4) 교과서 발행·공급 제도

① 공급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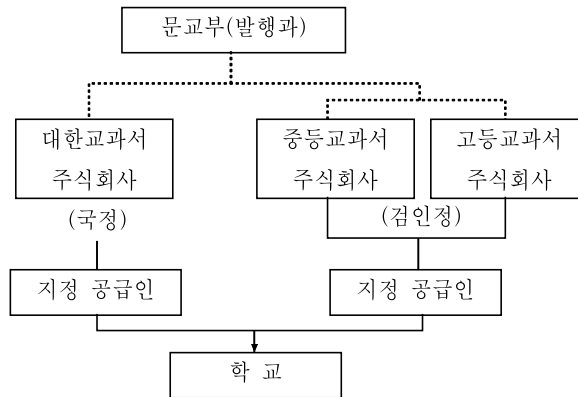
중등학교 교과서의 공급 조직도 국민학교용 교과서의 공급 조직과 대체로 같은 형태이다. 문교부의 보조 기관적 성격을 띤 대한교과서주식회사와 중등교과서주식회사 그리고 고등교과서주식회사 등 3개 회사가 중등학교 교과서의 생산과 공급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였다.

국정 교과서의 생산과 공급을 위임받은 대한교과서주식회사는 민간 기업체이므로, 국민학교 교과서의 생산과 공급을 위임받아 대행하고 있는 국영 기업체인 국정교과서주식회사와는 그 성격이 다소 다른 것이었다.

중등교과서주식회사와 고등교과서주식회사는 검인정 교과서만을 생산 공급하는 기구였다.

상기한 3개 회사의 전반적인 공급 조직을 보면, 다음과 같이 국정 교과서와 검인정 교과서의 공급 조직으로 이원화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III-9> 제 2차 중등학교 교과서의 공급 체제



공급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은 상부 기구인 생산 회사와 하부 기구인 지정 공급인의 이단계로 조직되어 있다. 상부 기구인 본사들은 문교부와 접촉하며 각 회사가 필요한 사항을 하부 기구인 지정 공급인들에게 지시 전달하며, 하부 기구인 지정 공급인은 상부 기구로부터 전달 지시되는 사항을 이행하며 학교와 접촉하는 일을 담당했다.

학교와 접촉하는 하부 기구인 지정 공급인을 보면 국정 교과서를 공급하는 대한교과서주식회사가 관장하는 공급 조직과 검인정 교과서를 공급하는 중등 교과서주식회사 및 고등교과서주식회사가 관리하는 공급 조직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중고등학교의 국정 및 검인정 교과서뿐만 아니라 국민학교용 교과서의 공급까지 일괄 담당하고 있는 지정 공급인이 상당수 있었다.

② 공급 절차

공급 절차에는 교과서의 주문, 발송 및 배부 과정이 포함된다. 교과서의 주문은 제1단계로 문교부 편수국 발행과에서 교과서 주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 다음, 이를 각 특별시·도교육위원회를 경유하여 전국의 각 중·고등학교에 전달하는 한편 중등학교용 교과서를 생산 공급하는 각 회사에도 전달한다. 이와 함께, 문교부는 검인정된 교과서의 목록을 발표하거나 목록을 학교에 배부하도록 교과서 회사에 지시하여 학교에 송부된다.

제2단계로는 중고등학교에서는 배부 또는 발표된 교과서 목록에 의하여 학교 단위로 채택할 교과서를 결정한 다음 학생들로부터 교과서 주문을 받는다. 이러한 주문은 일반

적으로 국민학교에서와 같이 학년도 초 약 6개월 전에 시작한다.

제3단계는 주문이 끝나면 각 학교는 일정 기간 내에 학교의 학년별 학생 수 및 예정 수 그리고 교과서 소요 부수를 소정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도 교육 위원회를 경유 문 교부에 보고하고, 당해 지정 공급인에게도 통보한다.

지정 공급인은 각 학교로부터 받은 주문 부수를 파악하여 주문 부수에 해당되는 교과 서 대금액과 함께 교과서 회사에 보고하게 된다.

이와 같은 주문 절차를 거쳐 교과서 소요 부수가 파악되면, 문교부와 각 교과서 생산 회사 간에 일정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 확정 생산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의거하여 교과 서를 생산하게 된다.

당시 이러한 공급 절차에 대한 현장 학교의 반응은 교사의 업무량 과다와 현금 취급 상의 애로점 때문에 부정적인 면도 있었다.

5) 중등학교 교과서 편수 비망 · 비망

• 민병덕(혜전 대학 교수, 교과서 연구지 10호)

중학교 국정 교과서 18책 중 1964년까지 7책이 편찬되었고 나머지 11책은 1965년도에 편찬을 완료, 1966년도를 기하여 중학교 전 과정이 새 교과서로 대체되었다.

문교부가 중학교 검인정 교과서의 개편 계획을 공고한 것은 새로 제정한 교육과정을 공포한 때로서, 1963년 2월 15일 ‘교과용 도서 검인정 실시 규정’을 공고하고, 당초 계획에는 1963년 12월에 출원을 접수하고 1965년을 사용 연도로 정하였는데, 그 동안 여러 가지 사정으로 3차의 계획 변경을 거쳐, 1964년 10월에 출원을 접수, 1965년 6월에 중학교 교과서의 검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당시 검정에서는 교과서 공급의 과당 경쟁과 원가 인상 요인을 막기 위해 각 과목당 7종 합격으로 제한하였다. 그 결과 유명 저자의 교과서가 탈락되어 소송까지 제기되는 사례가 있었다.

그리하여 문교부는 1966년 6월에 이 7종 제한 제도를 실시한 지 불과 1년도 못 되어 철폐하고 다시 원상으로 환원하고 말았다.

당시 제1차 출원사가 82개 사로 324종 742책이 신청되었는데, 합격은 43개사 91종 203책이었다.

제 2차로 다시 검인정 신청을 받아 추가 합격된 것이 200책으로 1·2차를 합쳐 모두 403책이 나 되었다.

당시 학교별 검인정 대상 교과서는 다음과 같았다.

- 중학교 9교과 13과목 28종(총 403책)
- 고등학교 13교과 38과목 45종(총 종수 418, 총 책수 498) (고교는 계열에 따라 I·II로 나뉘어 종류가 많음)
- 실업 고등학교 - 농 · 공 · 상 · 가정 등의 과목

(4) 교과서에 관한 연구

제 2차 교육과정기의 대표적인 교과서 관계 연구물은 중앙교육연구소가 과학기술처와 USAID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실시한 ‘교과서 내용 분석과 행정 개선에 관한 연구(1969)’이다.

이 연구는 천년수 연구 책임자 주도로 1969년 5월에 끝을 맺은 것으로 기획 위원, 자문 위원, 분과 자문 위원단의 지도 조언 아래 문교부, 행정 개혁 조사 위원회, 과학 기술처, USAID의 관계자, 일선 학교 교사들이 망라되어 추진되었다.

연구 보고서의 내용은 국민학교 교과서의 내용 분석과 교과서 행정, 중고등학교 교과서 행정에 대하여 심층 분석하고 있으며, 특히 교과서 행정 부분은 교과서의 편찬, 출판, 채택, 공급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연구 분석하고 있다.

중앙교육연구소의 연구 보고서 외의 대형 연구물은 거의 볼 수 없으며, 다만 1963년에 ‘교과서 회지’가 처음으로 나오으로써 교과서를 체계적으로 연구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된 것은 다행한 일이었다. 단편적인 연구로는, 다음에 예시한 바와 같은 연구물들이 학위 논문지, 교육지, 각 시도 교육연구원의 연구지 등에 수록되어 발간되는 정도였다.

강상준, ‘한국 생물 교과서에 수록된 실험 실습 문제의 검토와 실험 실습 계획에 관한 연구’, 서울대, 1968.

곽상만, ‘교과서 행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 1968.

구인환, ‘국어 교과서에 나타난 문장 용어(1~2)’, 『학습 지도 자료(중·고)』 1962. 5

변호성, ‘교과서 개편의 근본 문제’, 『새교육』, 1964. 9.

심태진, ‘현대 교과서 제도의 문제점’ 『교과서회지』(제1집), 서울 : 한국검인정교과서발행인협회, 1963.

이명권, ‘국민학교 교과서의 표현상의 문제점’, (상·중·하), 『새교실』, 1964. 2.

이선영, ‘개편된 저학년 음악 교과서의 비판’, 『교육 연구』, 서울 : 충북교육연구원, 1964. 6.

이응백, ‘중·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나타난 특수 어휘의 전거’, 『학습 지도 자료』(중·고), 1961. 5.

이정근, ‘국어 문법 교과서에 대한 관견’, 『사대학보』, 1963. 2.

윤창원 외, ‘산수과 교과서의 분석과 그 지도에 관한 연구’, 『논문집』, 전주 : 전주교육대학, 1966. 2.

임헌도, ‘국어 교육과 교과서 문제’ 「국어 국문학」, 1967., 1968.

조변환, ‘교과서와 장학’, 「교과서 회지」 제1집, 서울 : 사단법인 한국검인정교과서 발행인협회, 1963.

중앙교육연구소, 「국민학교 교과서 분석 평가 연구 보고서」, 서울 : 중앙교육연구소, 1962.

중앙교육연구소, 「교과서 내용 분석과 행정 개선에 관한 연구」 서울 : 중앙교육연구소, 1969.

최병철, ‘개편 중등 교과서의 진단’, 「새교육」, 1966. 5.

최태호, ‘교과서 개편’ 「새교실」, 1968. 11.

함중규, ‘교육과정과 교과서’, 「교과서 회지」(제1집), 서울 : 한국검인정교과서발생인협회, 1963.

황재기, ‘중학교 사회1 교과서의 내용 분석’, 「논문집」, 서울대 대학원, 1967. 2.

(5) 교과서 제도 평가

제2차 교육과정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교과서의 편찬에 있어서 편수관의 능력과 역할이 중요한 시기였다.

교과서의 편찬을 연구 기관이나 대학 등에 위촉하지 아니하고 편수관 스스로 처리하고 진행해야 했기 때문이다. 당시의 편수관 진용은 공개 모집에 의하여 1차 선발을 거친 다음 내각 사무처의 고등 전형(행정 고시) 시험을 통과해야 임용이 되었기 때문에 능력면에서 보증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제2차 교육과정은 경험 중심 교육과정으로, 교과서의 구성도 발견 학습, 탐구 학습 등의 편찬 방식을 지향하면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교과서의 행정 기구나 제도, 편찬·발행 기간이나 방식 등이 적절하지 못하여 많은 문제점이 있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 ㉠ 국정 교과서의 경우, 편찬 기간이 1년 단위로 되어 있어 집필 기간이 너무 짧았다.
- ㉡ 집필된 교과서 내용의 심의 기간이 너무 짧고, 예산 책정이 적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으며, 교과서 내용을 검증하는 실험 등도 하지 못하였다.
- ㉢ 교과서의 생산 시설이 노후하고, 양질의 교과서 용지를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잉크 약품 등의 보조 재료가 규격화되지 않았다.

- ㉔ 국민학교 국정 교과서의 경우, 1개 국영 기업체와 2개의 민영 기업체가 분담 생산하고 있어 회사 간의 생산 보조가 맞지 않아 적기 생산, 적기 공급에 지장이 있었다.
- ㉕ 교과서의 판형, 지질, 색도 등이 낙후되어 있었다.
- ㉖ 교과서 공급에 있어 추가 주문과 반품 처리가 잘 되지 않아 각 학교의 담당 교사와 지정 공급인 사이에서 대립을 초래하였다.
- ㉗ 교과서의 인수, 보관, 지급, 처리 등과 같은 일로 교사의 업무량이 과다하여 수업에 지장을 주었다.
- ㉘ 교과서의 무상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악조건 하에 있으면서도 제2차 교육과정기의 국정 교과서는 내용면과 편찬·공급면에 있어서 당시로서는 과히 손색이 없는 교과서로서 발행되었다.

중고등학교의 검인정 교과서 제도도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 ㉙ 사열 기준이나 사열 과정을 비공개로 하고 있어 좋은 교과서를 만드는 데에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
- ㉚ 사열위원의 수준이 집필자보다 낮아 좋은 교과서를 선정하는 데 애로가 있었다.
- ㉛ 검인정 교과서 회사는 생산 능력과 기술에 차이가 있는 시중의 인쇄업자들에게 외주를 주어 인쇄함으로써 교과서의 질과 적기 생산에 차질을 가져왔다.
- ㉜ 검인정 교과서의 채택 기준이 모호하여 학교의 실정에 맞게 채택하기가 어려웠다.
- ㉝ 3개 민간 업체가 중등 국정, 중학교 검인정, 고등학교 검인정별로 분담 생산하고, 공급 조직도 국정과 검인정 조직의 이원화로 공급 수행에 지장이 많았다.

4. 결 론

(1) 제 2차 교육과정기의 교육과정

제 2차 교육과정기의 교육과정은 1963년 2월 15일에 초중고교 및 실교의 교육과정(문교부령 제119, 120, 121, 122호)이 동시에 공포되었다.

이 교육과정은 국민학교는 1964년 3월 1일부터 3년 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되었고, 중학교는 1966년 3월 1일부터, 고등학교는 1968년 3월 1일부터, 실업계 고등학교는

1963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제 2차 교육과정의 성격을, 교육과정에서 강조한 몇 가지 ‘강조점’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자주성의 강조이다. 자주성은 민족의 자주성, 교육의 자주성, 교육과정 구성의 자주성, 학습의 자주성 등 네 가지 각도에서 강조되었다.

둘째로, 생산성의 강조이다. 교육은 사회 생활을 유지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물자를 만들어, 이것을 현명하게 이용함으로써 더욱 값있는 생활을 발전시키는 기능을 지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소비 생활에 편중되었던 종전의 학습 내용을 생활하는 방법을 습득시키는 데 주력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셋째로, 유용성의 강조이다. 국가나 개인을 막론하고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고, 학교와 사회, 교육과 생활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사회의 요구와 필요가 그대로 학습의 과제가 되어야 하며, 일단 교육을 받은 다음에는 자활적인 생활 능력을 갖추어 국가 사회의 발전에 헌신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넷째로, 합리성의 강조이다. 교육 목표의 설정과 교육 내용의 선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교육 내용의 선택에 있어서는 내용의 계통성,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선택된 내용을 조직하는 문제, 학생의 심신 발달, 흥미나 능력에 따라 배열하는 문제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교육과정도 합리적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합리성’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다섯째로, 지역성의 강조이다. 학교는 국가 기준의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지방과 학교의 지역성을 충분히 고려한 독자적인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운영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제 2차 교육과정의 전체 교육 구조는 국민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① 지식과 교양면을 중심으로 한 교과 활동, ② 도덕심 양양과 승공 사상의 확립을 위한 반공 도덕 생활, ③ 민주 사회인으로서의 생활 태도, 개성의 신장 등을 중심으로 한 특별 활동의 3대 영역으로 조직되었으며, 고등학교의 경우 ① 교과 활동, ② 특별 활동의 2대 영역으로 조직되어 있다.

제 2차 교육과정에서는,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당시의 사회가 절실하게 요청하는 인간상의 구현을 위하여 그 기본 방향 7가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민주적 신념이 확고하고 반공 정신이 투철하며, 민주적인 생활을 발전시킬 수 있

는 인간상을 양성하는 데 가장 적합한 학습 경험을 포함시킨다.

- ㉠ 독립 자존의 민족적 기풍과 아울러 국제 협조의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학습 경험을 포함시킨다.
- ㉡ 일상 생활에서 당면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필요하고 유익한 지식과 유용한 기능 및 과학적 생활 태도를 기르는 데 직결되는 학습 경험을 포함시킨다.
- ㉢ 가난을 극복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데 필요한 학습 활동을 충분히 포함시킨다.
- ㉣ 건전한 정신과 강건한 신체를 가진 국민을 양성하는 데 직접 기여할 수 있는 학습 활동을 포함시킨다.
- ㉤ 국민 생활을 순수하고 명랑하게 하는 심미적인 정서 생활을 위하여 풍부한 개성을 개발하도록 한다.
- ㉥ 형식적 추상적 지식에 치우쳤던 반공·도덕 교육을 쇄신하여 일관성 있게 지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실천적 교육에 주력한다.

제2차 교육과정의 체제 및 편제상의 특징을 살펴보면, 구 교육과정과는 달리 교육과정 전체를 ‘총론’과 ‘각론’으로 나누어 서술했고, 총론에서는 초·중등학교에 공통되는 개정의 취지, 일반 목표, 개정의 요점 등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학교급별 시간 배당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활동별 운영 계획을 교과 활동, 반공·도덕 활동·특별 활동으로 나누어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각론에서는 교과별로 개정의 요점, 교육 목표, 지도 내용, 지도상의 유의점 등을 통일된 형식으로 자세하게 서술하고, 교과별 학년 목표를 제시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교과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제2차 교육과정은 그 동안 꾸준히 제안되어 온 생활 중심 교육과정관을 교육과정에 구체적으로 반영하려고 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제2차 교육과정의 개정 요점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 ㉦ 기초 학력의 충실을 기한다.
각 교과에 걸쳐 교육과정의 내용은 필요 불가결한 최소 한도의 요소를 엄선하여, 그 기초 학력을 충실히 하도록 한다.
- ㉧ 교육과정의 계열을 합리화하여, 각 학교 사이의 일관성을 지니도록 한다.
각 교과를 통하여 학년 간의 횡적 연관을 취하고, 학년을 통한 종적 체계를 세워 동질적인 중복을 피하도록 한다.

㉔ 생활 경험을 중심으로 하는 교과 경영을 지향하여 관련성 있는 교과의 종합 지도를 강조한다.

국민학교 1, 2학년에는 각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종합 지도가 가능하도록 한다. 중학교의 사회과 및 과학과는 교과 안의 과목 구분을 철폐하여 종합지도의 실효를 거두도록 한다.

㉕ 국민학교와 중학교의 교육과정의 전체 구조를 교과 활동, 반공·도덕 생활 및 특별 활동으로 한다.

㉖ 중학교의 교과는 공통 필수 교과만을 둔다.

㉗ 고등학교에서는 단위제를 채택함을 원칙으로 한다.

㉘ 각급 학교이 관리 교육을 강화한다.

㉙ 시간 배당 계획의 융통성을 주도록 한다.

국민학교와 중학교는 최소 시간과 최대 시간을 표시하며, 고등학교는 개별 선택을 가능하게 하여 학교의 실정을 반영시킬 수 있게 한다.

㉚ 교육과정 내용을 서술하는 형식을 통일한다.

제2차 교육과정은 생활 중심 교육과정, 경험 중심 교육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총론 및 각론의 여러 곳에 상세하게 나타나 있다.

제2차 교육과정기에는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와 평가가 대규모로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단편적인 연구물들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일반론적인 경험 중심 교육과정의 특징과 장단점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 제2차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학생들의 흥미와 필요를 토대로 학습 내용을 구성하고 학생들의 자발적인 학습 활동을 촉구했다. 학생들이 스스로 닥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계획을 세우고, 직접 참여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학습을 유도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다.

둘째, 실제적인 생활의 장을 부여하고, 생활 문제와 결부되는 학습 활동을 하게 했으므로, 생활 문제를 올바르고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기를 수 있는 교육과정이 되었다. 그러나 변화하는 미래에 적응하는 능력을 생각치 않고 현재의 문제 해결에 주력하였으므로, 현재 지향적이라는 비판도 받았다.

셋째, 민주 사회가 필요로 하는 협동성, 책임감, 창의성, 사회성, 반성적 사고 방식 등의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데 크게 도움이 되는 교육과정이다.

넷째, 수업 진행에 있어 학습 현장에서 학생과 교사와의 공동 계획을 하는 경우가 많

게 되므로 학습 전개 과정이나 학습 형태가 획일적이 아니고 다양하게 전개되는 교육과정이다.

그러나 다음 제3차 교육과정(학문 중심 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제2차기와 같은 경험 중심 교육과정은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게 하는 교육과정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2) 제2차 교육과정기의 교과서

1963년 2월 15일에 제2차 교육과정이 개정, 공포되었고, 이에 따라, 1963년부터 1967년에 걸쳐 대대적인 교과서 개편 작업이 진행되었다.

이 시기의 교과서 출판 제도는 국정 교과서와 검인정 교과서로 크게 나뉘고, 국정 교과서는 문교부장관이 편찬, 저작권을 가지고 몇 개 출판사에 위탁하여 발행하였으며, 검인정 교과서는 민간인 저자가 저작, 민간 출판사가 문교부의 검인정 사열을 거쳐 발행하도록 되어 있었다.

국민학교의 경우, 1963~1966년까지 1, 2학년용은 1963년에 편찬을 완료하여 1964년부터 사용하게 하였다. 그리고 3, 4학년은 1965년, 5, 6학년은 1966년부터 사용케 하였다.

중등학교의 경우는 국어, 사회, 반공 도덕, 실업 등의 일부 교과서는 국정으로 편찬·발행되고, 그 밖의 것은 모두 검인정 교과서로 발행되었다.

국정 교과서의 편찬 과정은, 교육과정령이 공포되고 교과서의 개편이 시작되면, 해당 교과서의 교과서를 당해 연도에 집필 위촉하여 당해 연도 내에 조판, 심의, 교정하여 익년도 신학기 전까지 발행하게 되어 있었다. 이 시기의 국정 교과서는 장관 명의로 위촉되지만, 원고 집필자는 담당 교과서의 편수관이 추천하게 되며, 작성한 원고는 편수관이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심의회에서 심의하여 인쇄에 회부되었다.

제2차 교육과정기 초기의 국정 교과서는 당시 문교부 학무국에 속해 있던 편수관실의 14명의 교과별 편수관(일반직)에 의해 직접 편찬되었는데, 문교부의 직제 개편으로 편수관과 편수과가 속했던 제2차 교육과정기 초기의 학무국은 1963년말부터 편수국으로 개편되었고, 그 밑에 편수과와 발행과를 두게 되었다.

국정 교과용 도서 편찬 규정(1950년 제정, 대통령령 제337호)에 의하여 ‘국정 교과용 도서의 편찬에 관한 사용을 규정’하였는데, 이 규정은 “국민학교, 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정규 교과목의 교수를 위한 학생용 도서 및 교사용 도서는 국정으로 편찬한다”고 되어 있다.

국정 교과용 도서 편찬 심의회는 ‘편찬 심의회 규정’에 따라 편수국에 설치된 것인데, 이 심의회는 분과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심의회 규정에는, 위원은 “국정으로 제정하는 교과용 도서의 편찬 원안 및 교과용 도서의 편찬에 필요한 기초 자료 원안을 심의하며, 기초 자료의 조사 연구에 종사한다”고 되어 있다.

제2차 교육과정기의 국정 교과서 체제는 판형이 제1차 교육과정기의 4·6판에서 5·7판(국판)으로 바뀐 그대로였으며, 활자는 개량된 것을 사용하였었다. 그리고 용지는 모조지(표지)를, 본문(갱지이지만 저학년은 백상지 사용)은 갱지를 사용하였다. 활자 크기는 1학년은 32급, 2학년은 28급, 3학년은 16포인트 활자(24급), 4학년 이상은 14포인트(20급)를 사용하여 제1차 교육과정기의 교과서 활자보다 큰 쪽을 사용하였다. 표지 인쇄는 저학년은 원색을, 고학년은 단색을 썼으며, 제본은 제1차 때와 같이 침철 클로스로 하였다. 원색 삽화는 국민학교의 경우 ‘자연’은 4학년 일부까지, ‘바른 생활’은 3학년, 그 밖에 교과는 2학년까지만 적용하였다.

제2차 교육과정기의 검인정 교과서는 시행 연도에 맞추기 위하여 1963년 2월 15일에 검정 실시를 공고하였다.

당시의 검인정 교과서의 제도는, 그의 법적 근거를 ① ‘교과용 도서 검·인정 규정’(1950. 4. 29~1967. 4. 16) ② ‘교과용 도서 저작·검인정령’(1967. 4. 17~1977. 8. 21)에 두고 있다.

이 때의 검정 교과서 범위는 국민학교, 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제외한 각 학교의 정규 교과용 도서 중 국정으로 제정하지 아니하는 교과용 도서에 대하여 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인정 교과서는 각 학교의 정규 교과목의 교수를 보충 심화하기 위한 학생용 도서, 국민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정규 교과목의 학습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학생용 도서에 대하여 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검인정 교과서의 출원과 사열에 관한 규정 중 주요한 것은 다음과 같았다.

- 교과용 도서의 발행자는 그 도서의 검정 또는 인정을 문교부장관에게 출원하여야 한다. 전항의 출원자로서 대한민국 반도 내에 주소를 가지지 아니한 자는 검정 또는 인정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대리시키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주소를 가진 자로써 대리인으로 정하여야 한다.
- 교과용 도서의 내용을 사열하기 위하여 문교부장관은 교과용 도서의 검인정 출원이 있을 때마다 매건에 대하여 3인 내지 5인의 사열 위원을 선정, 위촉하여야 한다.

사열 위원은 위촉받은 교과용 도서의 내용을 사열하여 문교부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검인정 요금은 도서 1종에 대하여 그 도서의 정가의 50배로 한다.

이에 따라 시행된 사열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검인정 신청 접수

㉠ 중학교 1963. 12. 10~14

㉡ 고등학교 1964. 4. 1~15

㉢ 실업 고등학교 1963. 9. 25~30

- 사열 검정 - 별도 계획에 의함. 단, 검인정 수는 각 교과서 별로 3~7종 한도 내에서 조정

이때의 검인정 도서의 사열에 있어서는 우수한 사열 위원을 선정하기 어려웠다는 점, 사열 위원의 수가 너무 적었다는 점 그리고 사열 기간이 너무 짧았다는 점이 문제였다.

• 중학교 검인정

- 집필상의 유의점에 의거하여 저작된 사열본을 1964. 10. 20~1964. 11. 5까지 접수하였다. 학교별 검인정 대상 교과서는 중학교 9교과 13과목 28종, 고등학교 13교과 38과목 45종이었고, 실업고등학교는 농업, 공업, 상업, 가정 등의 과목이었다. 문교부는 공고와 동시에 집필자를 위하여 '집필상의 유의점'을 작성, 배포하였다. 여기에서 12항의 일반 원칙으로 내용, 표기, 창의성, 형식 등을 제시하였고, 다시 각 교과별로 편찬 내용에 대한 유의점을 명시하였다. 그리고 편수관실에서 극비리에 사열의 일반 기준, 과별 사열 기준, 종합 의견 작성 요령 등을 정하였다.

- 사열 실시

㉠ 심사 위원을 극비리에 장관 명의로 위촉 소집하여 우이동 청호장에서 외부와 격리된 상태에서 합숙 사열

㉡ 1965. 6. 7 예비 합격 도서 발표, 동시에 제1차 수정 지시, 1965. 8. 17까지 제2차 사열 추원

㉢ 권오병 장관 심사 위원들에게 감사 서한 전달

㉣ 검인정 제2차 사열 종합 의견은 담당 편수관의 책임하에 작성

㉤ 1965. 12. 3 최종 검정 통보(가정 6건을 제외한 모든 교과목은 7건씩 합격)

문교부는 교과서 검인정 출원 접수 전에 「검인정 수는 각 교과서별로 3~7종 한도 내

에서 조정한다」고 공고하였다. 그러나 출판 문화의 초창기에, 검인정 교과서의 합격 여부는 그 출판사의 사활이 달렸었으므로, 불합격된 출판사와 저자의 불평은 대단하였고, 급기야 문교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까지 이르렀다. 그리고 감사원의 감사를 받게 되었다.

문교부 조치로서 고의적인 법적 하자는 없었으나 주로, ① 모든 과목의 교과서를 7종으로 제한한 문제, ② 표절 문제, ③ 시리즈(series) 문제 등이 시비 거리가 되었다. 그리고 다음 해인 1966년 중학교 교과서의 검인정을 다음과 같이 추가로 실시하였다.

● 중학교 추가 검인정

㉠ 1966. 6. 5~7. 15 검인정 출원 도서 227종을 접수하고, ㉡ 1966. 10. 합격한 88종에 대하여 제1차 수정 지시를 하였으며, ③㉢1966. 11. 검인정 통보를 하였다.

● 인문계 고등학교 검인정

① 1966. 6. 7~6. 17 검인정 출원 도서 792종을 접수하고, ② 1967. 10. 417종에 대하여 제1차 수정 지시를 하였으며, ③ 1967. 11. 검인정 통보를 하였다.

그 결과, 1966년의 중학교 검인정 교과서 합격사는 54개 사, 1967년의 고등학교 검인정 교과서 합격사는 85개 사가 되었다. 이들은 제작과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한국검인정교과서주식회사, 한국검인정교과서발행인협회 등을 조직하여 공동 출판 활동을 전개하였다.

판형과 체제는 국판(A5판)으로 종전과 같았으나 색채와 삽화가 증가하고 활자가 개량되어 사용되었다. 또, 한자의 혼용이 이루어지고 학교 문법이 통일되었으며, 국사의 문제점이 어느 정도 통일되어 반영되었다. 그러나 1969년에는 1970년도용 교과서에서 전면적으로 한자가 삭제되어, 일관성 없는 어문 정책을 편 여파로 교과서 제작에 큰 혼선을 빚었다.

교과서 제작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1963년에 ‘교과서 회지’가 발간됨으로써 비롯되었다. 그것은 검인정교과서발행인협회가 비매품으로 발간한 것이었다. 또, 교과서에 대한 여론 조사를 학부형, 학생, 전문가들에게 실시하였으며, 교과서에 대한 기초 연구도 실시하여 읽기의 능률과 관련하여 활자의 크기 등 여러 가지 연구가 진행되었다. 한편, 중앙교육연구소가 각급 학교 교과서의 내용 분석과 행정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여 1969년에 상세한 연구 보고서를 냈는데, 이것은 당시로서는 교과서 편찬에 대한 가장 방대한 연구 성과였다.

제2차 교육과정기의 교과서 행정의 몇 가지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학교의 전 교과서와 중고교의 일부 교과서를 국정제로 하였고, 그 밖의 것

은 검인정제로 하였는데, 검인정제는 통제가 강한 편이었다.

둘째, 교과서의 편수 기간이 너무 짧고, 판형, 지질, 인쇄 등이 효과적이지 못했다.

셋째, 편수 행정을 위한 기구의 빈번한 개편과 적은 예산이 교과서 편찬에 많은 어려움을 주었다.

넷째, 검인정 교과서의 사열 기간이 너무 짧았고, 사열 기준을 대외비로 함으로써 ‘좋은 교과서’의 편찬에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다섯째, 교과서비 부담을 아동층의 부담으로 하고 있어 의무 교육 정신에 위배했다.

여섯째, 교과서의 채택을 위한 교과서 전시회, 교과서 평가 등이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였다.

참 고 문 헌

- 곽상만, 교과서 행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 1968.
- 교육과정·교과서 연구회, 한국 교과 교육과정의 변천-국민학교, (주)대한교과서, 1990.
- _____, 한국 교과 교육과정의 변천-중학교, (주)대한교과서, 1990.
- _____, 한국 교과 교육과정의 변천-고등학교, (주)대한교과서, 1990.
- _____, 한국 교육과정 변천에 관한 연구, 보명사, 1999.
- 국립중앙도서관, 한국 교육과정 관계 자료 목록 1945~1980, 국립 중앙도서관, 1980.
- 국정교과서(주), 35년사, 1987.
- 대한교과서(주), 대한교과서사, 대한교과서(주), 1988.
- 문교부, 국민학교 교육과정, 문교부, 1963.
- _____, 중학교 교육과정, 문교부, 1963.
- _____, 고등학교 교육과정, 문교부, 1963.
- _____, 편수 자료1, 문교부, 1963.
- _____,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1946~1981) 총론, 문교부, 1963.
- 민병덕, 1960년대 교과서 출판, 한국 2중 교과서협회-교과서 연구 10호, 1991.
- 오만석·이길상·신재철·박부권, 한국 교육 개혁의 종합적 평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유봉호·김영자, 한국 근현대 중등교육 100년사, 교학연구사, 1998.
- 이경섭, 한국 현대교육과정 연구(상), 교육과학사, 1997.
- 조성일·김영출, 한국교육행정사, 집문당, 1996.
- 중앙교육연구소, 교과서 내용 분석과 행정 개선에 관한 연구, 과학 기술처·미국 국제 개발 협조처, 1969.
- 중앙대 부설 한국교육문제연구소, 문교사 1945~1973, 1974.
- 한국 교육과정·교과서 연구회, 편수의 뒤안길 제2집, 대한교과서(주), 1995.

IV. 제 3차 교육과정 개발 및 교과용 도서 편찬

허 강*

1. 서 론

(1) 교육과정 개발

제 3차 교육과정¹⁾은 1973년 각급학교 교육과정 개정(제정) 후 1981년 12월 제4차 교육과정 개정 때까지를 말한다. 이 기간 중에는 초·중·고(인문계·실업계)와 실업고 등전문학교 및 교육대학 등의 교육과정을 개정하였으며, 특수학교와 체육중학교, 체육고등학교 및 전문학교의 교육과정을 제정하였다.

즉, 제 3차 교육과정은 국민교육헌장이 선포된 다음 해인 1969년에 문교부에서 개편의 기본 방침이 수립되었고, 이 방침에 따라 기존 교육과정에 대한 전문가의 분석과 현장의 여론 조사를 토대로 1971년 1월 국민학교와 실업고등학교의 교육 과정의 시안을 작성 발표하였으며, 그 후 국민학교는 2년간의 실험평가를 가진 뒤 1973년에 국민학교와 중학교 및 실업고등학교 교육과정을, 1974년에는 인문계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개정·공포하였다.

이 시기에는 초·중·고 기간 학제 교육과정 이외에 전문학교와 교육대학의 교육과정의 제정(개정) 업무까지를 문교부 편수국에서 주관하였다. 그리고 문교부가 1970년대에 추진한 문교시책 중 교육 내용의 개선을 위해 각급학교 교육과정을 개편 내지 제정에 힘을 기울이기도 하였다.

제 3차 교육과정은 이념적으로 1970년대 우리 나라 교육이념을 주도했던 국민교육헌

* 한국교육과정·교과서 연구회 사무국장

1) 우리 나라 교육과정의 변천

-홍응선: ① 교수요목 시대(미군정 때 교수요목 제정 위원회를 조직하여 교수요목을 제정 실시하던 시대)
② 교과과정 시대(1949. 12. 31 교육법이 공포된 후 교과과정 연구위원회와 교수요목 제정 심의회가 위촉되어, 교과과정 연구위원회에서는 교과와 설정 및 시간 배당을 정하고, 1954. 4에 교수요목 제정 심의회에서는 각급학교의 교과과정을 심의하여 1955년 8월에 공포한 이후)
③ 교육과정 시대(1963년 2월에 각급학교 교육과정이 제정·공포된 이후)

·자료: 홍응선, 「새 교육과정의 이론적 기저」, P. 63, 서울: 배영사, 1971. 6.

-김호권: ① 정초기(1945~1949, 군정시대의 교육 과정)

장 및 유신 교육의 이념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론적으로는 1960년대 미국 교육 개혁을 주도했던 학문 중심 교육과정 이론을 반영하고 있다. 이 시기에 교육과정이란 각 학문 간에 내재(內在)해 있는 지식 탐구 과정의 체계적인 조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2) 교과용 도서 편찬

제 3차 교육과정기의 교과서 행정은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온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즉, 제 3차 교육과정기 중 1977년 중반기까지는 ‘교과용 도서 저작·검인정령’이 적용되었고, 그 후에는 소위 ‘검인정 교과서 사건’이 계기가 되어 새로 제정된 대통령령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었던 시기이기도 하다. 즉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도하에서는 ‘교과용 도서 저작·검인 정령’시대와는 다르게 문교부는 교과서를 직접 제작하지 않고, 기획·감독 기능만 하고 집필·교정 등의 편집 기능은 교과서 개발 기관(연구기관·대학교 등)에 위임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 시기의 교과서 제도는 크게 1종(국정), 2종(검정) 및 인정제를 운영하였으며, 교과용 도서에 관련 법률은 교육법 제157조를 근간으로 하였다. 또, 교과서 공급에 있어 ‘검인정령’시대에는 공급인 제도를 채용하였으나, 새 규정하에서는 중간 상인의 배제 및 적기 공급 등을 내세워 정부 투자기관인 국정 교과서(주)가 공급 업무를 대행자로 지정 받아 학교에 직접 공급하게 하였다.

-
- ② 재건기(1950~1959, 교육과정 제 1차 개정)
 - ③ 개혁기(1960~1969, 교육과정 제2차 개정)
 - ④ 발전기(1970~현재, 교육과정 제 3차 개정)
 - 자료: 김호권 외 2, 「현대교육과정론」, p. 89, 서울: 교육출판사, 1977. 2.
 - 유봉호: ① 교수요목 강조기(1945~1953) ② 제 1차 교육과정(1954~1962)
 - ③ 제2차 교육과정(1963~1973) ④ 제 3차 교육과정 (1973~1981)
 - 자료: 유봉호, 「현대 교육과정 - 개정 증보판」, p. 6~7, 서울: 교학 연구사, 1993. 3.
 - 교육부 및 한국 교육과정·교과서 연구회:
 - ① 교육에 대한 긴급 조치(1945~1946)
 - ② 교수 요목기(1946~1954)
 - ③ 제 1차 교육과정기(1954~1963)
 - ④ 제2차 교육과정기(1963~1973)
 - ⑤ 제 3차 교육과정기(1973~1981)
 - 자료: 한국 교육과정·교과서 연구회편, 「한국 교과교육 과정의 변천, 초·중·고」, pp. 1~17, 서울:대한교과서 주식회사, 1990. 12.
 - 자료: 교육부,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Ⅰ)」, pp. 33~45, 서울: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1998. 11.
 - 이경섭: ·교과 중심 교육 과정 유형
 - ① 과도기 교육과정(1945~1946)
 - ② 교수요목기 교육과정(1946~1954)
 - ③ 제 1차 교육과정(1954~1963)
 - 경험 중심적 교육 과정 유형 - 제2차 교육과정(1963~1973)
 - 학문 중심적 교육 과정 유형 - 제 3차 교육과정(1973~1981)
 - 자료: 이경섭, 「한국현대 교육과정사 연구(상)」, p.19, 서울: 교육과학사, 1997. 12.

어쨌든 문교부는 교과서 편수 행정을 쇄신하여 과거와 같은 검인정 교과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고 보다 좋은 교과서를 싼값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교과용 도서의 체제 개선 측면에서는 제2차 교육과정기 때에 비해 크게 변혁된 것이 없었으며, 교과서관이나 교과서의 기능 등에 있어서도 별다른 개념의 차이가 없었던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3) 교육과정 · 교과 행정 기구

한국의 각급학교 교육과정은 교육법 및 교육법 시행령이 정한 바에 따라 문교부 장관이 부령으로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문교부 내에서는 장관을 보좌하여 편수국이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있다. 즉, 교육과정의 개정 및 제정과 국정교과서의 편찬·발행·공급 그리고 교과서의 검인정 등 교과서 행정에 관한 업무는 편수국에서 행하게 되어 있다.

제 3차 교육과정 개정(제정) 초기인 1973년과 1974년 문교부 직제²⁾의 편수국은 편수관실, 편수과, 발행과가 있었으며, 그 뒤 편수국은 장학실에 통합(1978. 3. 14)되어 폐지되었다가 다시 복원(1980. 2. 27)되었으며, 그 후 또 다시 편수국과 장학실이 통합하여 장학 편수실(1981. 11. 2)로 되었다. 이처럼 편수국은 문교부 안에서 교육 내용의 중요성이나 교육의 중심적 기능을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직 개편 때마다 흔들렸다.

본 연구 영역에서는 교육 과정 개발시 편수국 등의 직제 및 편수활동에 대해 조사하기로 한다.

(4) 연구 범위 및 제한점

본 연구는 크게 교육과정 개발과 교과용 도서 편찬 등 두 영역으로 나누어 서술하기로 한다. 먼저 교육과정 개발은 제 3차 교육과정 개정(제정)의 배경과 경위 및 특징을, 또 각급학교 교육과정 개정(제정) 편제와 특색 및 교육과정 편성·운영 등을 알아본다. 그리고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물도 연구 영역별로 조사하고, 끝으로 교육과정 평가를 언급하며, 교육과정 관련 비망과 증언도 게재하기로 한다. 교육과정 관련 비망·증언은 교육과정 관련 항목에서 이에 관한 자료를 삽입하기로 한다.

다음으로 교과용 도서 편찬은 교육과정과 교과서 제도를 교과서 행정 조직을 포함해서 먼저 개관하고, 그 다음으로 국민학교 교과서 편찬·발행을, 또 이어서 중등학교 교

2) 문교부 직제(1973. 3. 28 대통령령 제6595호). 제1조(직무): 문교부는 교육, 과학, 체육 및 국정 교과서의 편찬과 교과용 도서의 검인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과서 편찬·발행을 정리하기로 한다. 제 3차 교육과정기는 교과서 제도가 획기적으로 변화된 시기이므로, 법적·제도적 변천도 사실(史實)은 바탕으로 객관화할 필요가 있다.

사실을 객관화하기 위해서는 편수와 관련된 특징이나 문제점 등을 강조하여야 하고 그러려면 이에 관한 자료가 있어야 하나 이들의 자료가 혼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여하튼 그 자료의 발굴 및 증언 등에 최선을 다해야 할 일이다.

끝으로, 제 3차 교육과정기의 각급학교 교육과정의 개발과 교과용 도서 편찬 등에 관한 결론 부분을 정리하게 된다. 이것은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관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데 있다.

한편, 본 연구는 기간 학제인 초·중·고(실고 포함)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개정(제정)을 중심으로 그 사실을 중점 서술하기 때문에, 제 3차 교육과정기에 학교 제도에 포함된 공민학교(고등고민학교 포함), 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 포함), 고등전문학교, 전문학교, 교육대학의 교과 편제 및 시간(단위) 배당 기준 등은 다루지를 않으며, 또 교과용 도서 개념에 포함되는 인정 도서는 그 중요도에 있어 국정(1종), 검정(2종)에 비해 떨어지므로 제외하기로 한다.

2.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발

1970년대에 들어 제 3차 교육과정 개정(제정) 작업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즉, 문교부는 1969년 9월부터 각급 학교 교육과정의 전면적이고 단계적인 개정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당시 교육과정에 대한 전문학자 및 편수관에 의한 객관적 분석 연구와 당시 교육과정에 의해 실지 운영을 해온 학교측에 대한 여론조사, 그리고 다른 나라의 교육과정 정책, 교육조직 및 교육사조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개선의 방향을 모색하였다.

이렇게 하여 1970년 6월부터 개편 교육과정의 성안 단계에 들어가 국민학교와 실업고등학교 교육과정 시안이 발표된 것은 1971년 1월이었고, 그 후 국민학교 교육과정은 2년이라는 실험평가(교과서 현장 검증)기간을 가진 뒤, 1973년 2월에 문교부령 제310호로 확정 공포되었다. 새로 개편된 교육 과정은 변천하는 시대에 적응하고 국민 교육 현장 이념과 한국적 가치관에 입각한 국적 있는 교육의 구현을 위하여 국민적 자질의 함양, 인간교육의 강화, 지식·기술 교육에 쇄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리고 중학교 교육과정은 1973년 6월에 시안을 발표하여 동년 8월에, 인문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1974년 12월 31일에 각기 개정·공포되었다. 또, 제 3차 교육과정기(197

3~1981)에는 교육대학 교육과정을 개정하였으며, 실업계 전문학교와 특수학교, 체육중학교 및 체육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제정하였다. 제 3차 교육과정기의 각급 학교 교육과정 개정(제정) 상황은 <표Ⅳ-1>과 같다.

(1) 제 3차 교육과정 개정(제정) 배경·경위 및 특징

교육과정은 시대 발전에 맞추어 부단한 개선이 필요하므로 제정된 후에도 부분 개정이 가하여지지만 전문적인 개정은 대체로 5~10년 주기로 이루어지고 있다.

문교부가 교육과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 중에 있는 교육과정을 총론과 각 교과 내용별로 분석·검토한다. 그 분석·검토한 것을 참작하여 편수관과 전문가에 의하여 새로운 교육과정의 심의 원안을 집필 작성하게 된다.

심의 초안은 교육과정 심의 위원회에 설치된 각 교과분과위원회의 심의와 학교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운영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침으로서 교육과정 시안이 성립된다.

< 표 Ⅳ-1> 제 3차 교육과정기의 각급학교 교육과정 개정(제정) 상황

기간	각급학교 교육과정	개체	연월일	공포 법령	비고
제 3차 교육 과정기 (1973. 2 ~ 1981.12)	국민학교	개	1973. 2. 14	문교부령 제310호	* 문교부령(교육과정령)에 의하여 교육과정이 제정, 개정되었으나 1979년 3월 1일부터 문교부 고시로 바뀌었다. 즉, 문교부령 제424호 '교육과정령'이 폐지됨, 따라서 국민학교, 중·고등학교, 전문학교, 교육대학, 기술학교 등 16개 각급 학교 교육과정이 문교부령에 문교부 고시로 법령의 성격이 바뀌었다.
	중학교	"	"	"	
	인문계 고등학교	"	"	"	
	실업계 고등학교	"	"	"	
	실업계 고등전문학교	"	"	"	
	실업계 전문학교	제	"	"	
	중학교	개	1973. 8. 31	문교부령 제325호	
	인문계 고등학교	"	"	"	
	특수학교(정박아, 초등부)	제	1974. 1. 31	문교부령 제334호	
	교육대학	개	"	"	
	인문계 고등학교	"	1974. 12. 31	문교부령 제350호	
	실업계 고등학교	"	1976. 2. 23	문교부령 제379호	
	체육중학교	제	"	"	
	중학교(산업체 부설)	개	1977. 2. 28	문교부령 제404호	
	국민학교	"	"	"	
	인문계 고등학교	"	"	"	
	실업계 고등학교(산업체)	"	"	"	
	체육 고등학교	제	"	"	
	실업계 전문학교	개	"	"	
	특수학교(맹)	"	"	"	
	유치원	"	1979. 3. 1	문교부고시제424호	

자료: 허 강, 「우리 나라 교과서 연표」, 교과서 연구 제20호, pp. 136~139 발췌, 서울: 한국2종교과서협회, 1994. 12.

이 시간에 의하여 각급 학교, 연구기관, 각계 인사들의 여론과 의견을 청취하고, 또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시안에 반영하여 전항과 같은 각급 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여 장관의 최종 결심을 얻어 문교부령으로 공포·시행하게 된다.

교육과정 제정(개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교육과정 내용에 관계되는 모든 것을 편수관의 주관하에 진행된다.

전문위원회(공식 명칭은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편 연구조정위원회)는 교육학 전공교수(분야별) 약 10명(실제 위촉된 인원은 7명이었다)으로 구성되어 교육과정 심의에 참가조언한다. 이렇게 교육과정이 제정 또는 개정되면 새 교육과정에 의하여 교과용 도서를 편찬한다.

1) 교육과정 개정의 배경³⁾

교육과정을 개정하거나 제정하는 것은 교육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주변 상황의 변화로 인한 교육의 외적 요구에 의한 것과 이에 따른 교육 목표, 교육 내용 및 방법, 실천 운영에서 오는 문제점과 불합리성 그리고 교육환경·여건 등과 관련된 제 문제 등으로 인한 교육 내적인 요구에 의한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교육과정의 개정(제정)은 이와 같은 교육의 내외적인 요구에 부응하여 사회적 적합성, 학문적 적합성, 개인적 적합성을 높이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제 3차 교육과정 개정의 배경을 생각해 보자.

제2차 교육과정은 1963년에 개정된 것이고, 그 후 60년대 후반기부터는 국내외의 정세와 사회 상황이 급격히 변하여 그간에도 부분적으로는 개정을 하였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여 이에 대대적인 개정(제정)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배경을 생각하게 된다. 다시 말해, 지식의 증가와 급격한 사회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축적되어 온 기성 지식의 전수나 단순한 생활 경험으로는 장래 생활에 적응할 수가 없으므로, 교과와 핵심적인 지식 체계로의 구조화와 그것을 발견·탐구하는 과정을 통하여 학습시키자는 주문에 국가적으로는 새마을 운동⁴⁾의 적극

3) '제 3차 교육과정 개정 배경' 및 '개정 경위'는 김용만 외 집필, 한국교육과정·교과서 연구회 발행 (1998. 12), 「한국 교육과정 변천에 관한 연구」를 참고하였다.

4) 교육 50년사 편찬위원회편, 「교육50년사」, p. 86, 서울: 교육부, 1988. 8 -결국 새마을 운동과 그 교육을 통한 교육과 지역 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고조시켜 간 접은 평가할 만한 것이었다.

다만, 새마을 운동은 당시의 막강한 정치력을 통해 일어난 범국민적인 사회운동으로 교육이 새마을 정신을 함양하는 정치 도구화로 악용되었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 한국교육개발원편, 「새마을교육의 이론과 실제」, pp.20-21에서 유달영 서울대 교수는 '새마을운동의 필연성'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추진, 유신 과업의 강력한 수행을 위한 국적 있는 교육의 강조 등이 제 3차 교육과정의 개정(제정) 작업에 착수하게 된 배경이었다.

① 정치·사회적 배경

정치적으로는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중국·소련의 다각 외교와 남북 적십자회담 등으로 국내외 정세는 급변하였다. 그러는 동안에 우리 나라는 주체성을 가지고 능동적인 대응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고, 또한 현명하게 민족의 활로를 개척하여 온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나라는 안으로는 획기적인 국력 신장과 통일예의 노력을 꾀하였고, 밖으로는 국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또한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서 인력 자원 개발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이 인식되자, 교육은 “1970년대의 국운은 교육이 좌우한다.”는 표어 아래 국민 윤리, 국민정신교육,⁵⁾ 민족주체성 등의 교육을 강화하기에 이르렀다. 교육 내적인 측면에서는 1963년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 나라에서 전개된 가장 큰 사회활동은 농촌을 주로하는 새마을 운동이다. 이 운동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는 우리는 새마을 운동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역사적 필연성을 무엇보다도 먼저 검토·분석해야 할 것이다. 이것을 하지 않고서는 새마을운동의 분명한 이념을 세울 수도 없고, 또 거국적 역량을 발휘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지금온 인류가 일찍이 상상도 못했던 고속도시시대. 이 놀라운 고속도시대에 자신을 제대로 가누고 안전하게 달리지 않고서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빠져서 무참하게 짓밟히게 될 것은 너무도 분명하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돌아 볼 때에 우리도 상당한 속도로 달리고 있기는 하지만 여러 곳에 약점을 지니고 있어서 어느 시점에서 큰 사고에 직면할는지 불안하기 짝이 없다. 그런데 그 약점이라는 것이 쉽게 시정할 수 있는 지엽적인 것도 있고, 그와 반대로 매우 힘든 근본적인 것에 속하는 것도 있다. 그런데, 우리는 불행히도 후자에 속하는 몇 가지 약점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지식수준이 급상승해가고 있는 반면에 사회윤리는 크게 뒤떨어져 있는 점도 그 하나다. 이 약자의 간격이 크면 클수록 위험성은 증대된다. 마치 자동차의 속도는 놀라게 빠르는데 그 차가 달려야 할 노면은 엉망인 경우와 같다.

경제생활면을 훑어본다면 오늘의 우리 국민 일반의 소비수준이 서울지역에는 급상승하였으나 이를 위한 생산과 소득은 까맣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출은 엄청나게 많고 수입은 이를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생활은 파산을 목전에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소비와 생산의 격차는 날이 갈수록 벌어지고 있지만 이것을 좁히는 일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이러한 현실을 객관할 때 이대로는 우리가 번영의 광장으로 순조롭게 전진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분명하다.

그러므로, 우리의 약진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큰 요인들을 하루 빨리 제거하고, 안전하고 건전한 전진의 태세로 바로 잡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새마을 운동은 이 시점에서 우리가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역사적 과제가 되었고, 이 운동의 성패는 우리의 흥망에 직결되어 있는 것이다.

1961년에 우리는 거국적으로 재건국민운동을 전개하였다. 그것이 곧 거국적 새마을 운동의 시도였다. 그 운동의 중단은 우리의 전진을 대단히 늦춘 결과가 되었다고 필자는 아쉬워한다. 그러나, 늦기는 하였지만 온 국민이 특히 각계각층의 중견인물들이 오늘의 새마을 운동의 필요성과 이념을 분명히 하고 또 성공의 비전을 확실하게 간직해야 하겠다.

5) 국민정신교육에 대해 다음과 같은 논리전개가 있었다. 다음 제시내용은 한국교육개발원편 「국민정신교육의 제문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76. 11. 중에서 발췌한 것들이다.

-이돈희 교수: 국민윤리교육, 사상교육, 반공교육, 도덕교육, 정치교육, 주체성교육, 새마을 교육 등으로 표현된 교육적 방향감(感)에 우리의 교육계는 이미 익숙해 있고, 이런 용어들은 국민 정신교육의 개념이 포괄하는 판도 속에 내포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25쪽).

-정세구 교수: 국민정신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은 문교부의 유신 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 계획(1976~1981), 그 중 사상 교육 강화 방안(1975. 11)에서 정확하게 밝혀지고 있다. 그 내용 중 첫째 교사

의 경험중심 또는 생활중심 교육과정이 1969년에 일부 보충되기는 하였지만, 이 생활중심 교육과정의 비판과, 학문의 기본 개념과 기본 원리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교육과정의 혁신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⁶⁾

② 기본 개념의 파악

제 3차 교육과정은 제2차 교육과정에서의 생활중심 교육과정을 지양하고 학문 중심 교육과정을 강조하였다. 학문중심 교육과정 사조에 의하면, 교육과정은 각 학문에 내재해 있는 지식 탐구 과정의 조직으로 정의된다. 이 과정을 천명한 브루너에 의하면, 교육과정은 곧 각 교과가 나타내고 있는 지식의 본질(즉 구조)을 가장 명백히 표현할 수 있도록 그 지식을 체계적으로 조직해 놓은 것을 가르킨다.⁷⁾

이 ‘지식의 구조’를 문제로 삼는 학문중심 교육과정이 나타난 동기를 미국에서의 ‘스푸트닉(sputnik) 충격’에 의한 생활 또는 경험중심 교육과정의 반성을 들기도 하고, 오늘날의 지식 및 정보의 폭발적인 팽창에 따르는 교육 내용의 선정 문제를 들기도 하며, 교과를 잘 가르치기 위한 탐색적 노력의 결과라고 보기도 한다. 그러나 학문적 교육과정은 아동의 자발적인 탐구를 통한 지식의 이해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경험중심 교육과정의 개념을 보다 엄밀하게 구체화하고 있으며, 지식의 탐구 과정은 학생 경험의 총체 중의 특수한 부분을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경험중심 교육과정과 정면 대립되지는 않는다고 보기도 한다.⁸⁾

학문적인 교육과정의 방향은 제 3차 교육과정의 기본방침에서 밝혀진 ‘지식 기술 교육의 쇄신’이라는 항목 속에 표현되어 있으며, 그 내용 중 특히 학문중심 교육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 **기본 개념의 파악:** ‘지식의 구조를 이루는 기본개념과 그 관계를 이해하고 지적인 탐구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지도 내용을 정선하여야 한다.’

위의 표현은 학문 중심 교육과정의 내용을 그대로 표현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우

면에서는 ① 사상 교육 담당 교사 양성 제도의 부재 ② 재교육 기회 부재 및 미체계화 등을 들고 있다(52쪽).

-강우철 교수: 첫째, 어떤 교육 내용을 가르쳤기에 교육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는가, 둘째, 교육 과정의 구성 문제이다. 셋째, 가치 교육을 단일 교과에서 다룰 것인가 아니면 복합적으로 여러 교과에서 다룰 것인가 등을 문제 제기하고 있다(77~78쪽).

한편, 1982년 2월에 확정된 ‘국민정신교육추진종합계획’에서는 국민정신교육목표로 ① 민족사적 전통성과 올바른 국가관의 확립 ② 국가 현실의 바른 인식과 통일 안보관의 확립 ③ 민주 국민의 생활 윤리 정립 등을 제시하였다.

6) 문교부, 「한국교육 30년사」, p.73, 서울: 문교부, 1980.

7) 이흥우 외,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 pp. 30~31, 문교부 정책 연구보고서.

8) 이흥우 외, 상계서, pp. 31~34.

리는 지엽적인 학습을 지양하고 보다 원리적이며, 근간적이고 항구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학습을 정선해서 지도해야 할 것이 요청되는 것이다.

③ 국적 있는 교육의 요청

1972년 3월 24일 전주에서 열린 총력 안보를 위한 전국 교육자 대회에서 전 교육자는 ‘국적 있는 교육’을 하기로 다짐하였다. 제 2차 교육과정에서도 그 개정의 취지에서 자주성을 강조하여 ‘고유의 역사와 전통을 지니고 역사적 현실 속에서 명확한 사명감을 자각하고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을 기를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제 ‘교육과정 구성의 일반목표’, ‘각 교과 목표’, ‘학년 목표’, ‘지도 내용’ 등을 살펴보면, 우리 나라의 국시를 바로 인식하고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일깨우는 부분이 드물었다. 그리고 각 학교에서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사명을 일깨우는 부분이 드물었다. 그리고 각 학교에서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교육은 그 취지와는 반대로 중3병, 고3병이라고 일컬을 정도로 고입, 대입 위주의 비정상적이었으며, 그 결과는 국가도 민족도 없는 극단적인 이기주의, 금전 만능주의, 세계주의 등을 불건전한 사고와 풍조를 만들어 냈다. 이제까지 우리는 소질을 계발하고 능력을 기르는 교육을 입신 출세시키는 수단으로 보아왔던 감이 있다. 특히 8·15 후 잘못 도입된 개인주의 사고가 이러한 그릇된 개인중심의 교육 과정을 뒷받침함으로써 이러한 교육이 새 교육인양 오인하였다.

이제야 우리는 우리 민족의 나아갈 바를 찾아 역사적 사명감을 깨닫고 국력을 조직화하고 길러 평화적인 남북 통일을 달성하고 번영을 지속하여 세계 평화에 이바지할 때에 이르렀다. 우리는 이러한 유신과업에 적극 참여하고 일익을 담당할 국민을 양성해야 한다.⁹⁾

이것은 70년대의 교육 정책을 유신 교육의 추진이라고 특징 지을 수 있을 만큼 문교부는 유신 과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는 교육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하여 여러 정책들을 추진하였다. 그 첫째는 국민교육헌장 이념의 구현이다. 문교부는 무엇보다도 국민교육헌장 이념의 생활화가 곧 유신과업¹⁰⁾의 구체적인 실천이라고 보고, 국민교육헌장 선포 이후 추진해 온 국민교육헌장 이념 구현을 위한 다각적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¹¹⁾

9) 최영복 외, 「국민학교 교육과정 해설」, pp. 19~20, 교학도서(주), 1973.

10)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편, 「한국 교육 이념의 탐구」, pp. 32~34, 서울: 서울시 교위, 1973. 7.

-한국 교육의 과제 중에서 ‘10월 유신의 5대 과제’를 첫째, 국민도회의의 양양과 윤리 규범의 확립, 둘째, 전통의 창조적 개발을 통하여 민족의 주체성 확립, 셋째, 범국민적 과학화 운동 및 경제 성장 추진, 넷째, 국가관 확립과 국민 정신의 고취, 다섯째, 한국적 민주주의의 기반 구축 등으로 정립하였다.

11) 한국교육개발원편, 「한국 교육 정책의 이념」, 「국민 교육 헌장 선포 제4주년 기념 박정희 대통령 치사」 중에서(pp. 316~319) - 10월 유신의 정신은 국민 교육헌장의 이념과 그 기초를 같이 하는 것

이며, “이 현장 이념의 생활화는 곧 유신과업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길”임을 강조하였다. 이렇게 보면, 10월 유신은 국민 교육 현장의 이념을 정치적으로 확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④ 국민교육헌장 이념 구현

1960년대 이후 주체성을 강조하여 한국의 전통을 존중하고 창조의 정신을 기쁨으로써 국가 발전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역군을 배양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었는데, 이에 부응하여 제정된 것이 국민교육헌장이다.¹²⁾ 제 3차 교육과정은 이 국민교육헌장에 나타난 교육의 지표인 ①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개인 윤리면) ② 협동 정신(사회 도덕 윤리면) ③ 국민정신(국민 윤리면)을 최대 반영하고 있다.¹³⁾

⑤ 급격한 사회적·문화적 상황의 변화

현대는 부단히 변화할 뿐 아니라 가속적으로 변화하는 시대이다. 따라서 80년대 사회적·문화적 상황 변화에 대한 예측과 과학기술 발달의 가속성을 그 근거로 제시한다.¹⁴⁾

⑥ 장기 종합교육 계획 심의회 교육과정 연구반의 보고

이 보고서¹⁵⁾는 장기종합교육계획의 일부로서 80년대의 교육과정을 전망한 것인데, 우리 나라 교육과정이 밝아온 과거를 더듬어 반성과 비판을 하는 한편, 문제점을 찾고 또

12)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편, 상계서, p.35.

-「국민교육헌장 이념의 생활화로 교육의 체제를 쇄신하고 “국적있는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유신과 업 수행에 앞장서는 “참다운 새 한국인”을 육성한다」- 라고 하였다.

13) 홍웅선, 「교육과정 신강」, 「한국 교육의 지표」, pp. 37~38, 1979.

14) 제3·4차 경제 개발을 수출이 증가하고 경제 성장으로 인한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고 교육에도 크게 영향을 끼쳤다. 다음은 주요 지표의 성장률을 나타낸 것이다.

주요 지표의 성장률

연평균 증가율(%)

내역	1차 계획		2차 계획		3차 계획		4차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국민 총생산	7.1	7.8	7.0	9.7	8.6	10.1	9.2	5.6
산업별 성장								
농림어업	5.7	5.6	5.0	1.5	4.5	6.1	4.0	-0.7
광 공 업	15.0	14.3	10.7	19.9	13.0	18.0	14.2	9.2
(제조업)	15.0	15.0	-	21.8	13.3	18.7	14.3	9.4
사회간접자본및기타	5.4	8.4	6.6	12.6	8.5	8.4	7.6	6.0
인 구	2.8	2.7	2.2	2.2	1.55	1.7	1.6	1.55
1인당국민총생산	4.2	5.0	4.7	7.3	7.0	8.2	7.5	4.0
고정 투자	14.6	24.7	10.2	17.9	7.6	11.1	7.7	10.5
상품 수출	28.0	38.6	17.1	33.8	22.7	32.7	16.0	10.5
상품 수입	8.7	18.7	6.5	25.8	13.7	12.6	12.0	10.3
취업 인구	4.7	3.2	3.3	3.6	2.9	4.5	3.2	2.3

◦ 자료: 「한국 경제 연감」, pp.83~85, 서울:한국경제인연합회, 1984.

15) 장기 종합 교육 계획 보고서는 전문 2부 6장으로 되었는데, 제3장 ‘교육이념과 목표’에서 한국 교육이 추구해야 할 이념, 지표, 목표 등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즉 장기종합교육계획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따른 국가 계획의 추진과 개발의 연대라고 불리어지던 1960년대의 시대적인 요청을 배경으로 장기적인 안목에 비추어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는 정책적인 필요에서 제기된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이 계획은 1525면의 본문과 499면의 부록을 포함하는 방대한 것으로서 종적으로는 학생, 교원, 교육프로그램, 시설, 행정, 재정 등 6개 부분을 망라하였고, 횡적으로는 초등교육, 중등교육, 실업교육, 교원교육, 취학전 교육, 해외교육, 특수교육, 학교외 교육 및 통일교육 등 10개 부분을 대상으로 포괄하였다.

한 앞으로 20년간(1966~1986)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인구, 인력 등의 각 분야에 일어날 추세와 전망에 입각하여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을 찾아내는 한편, 그 구성에 관하여 건의하였는데,¹⁶⁾ 제 3차 교육과정 개편에 있어서는 이것이 많이 채택되었다.

2) 교육과정 개정의 경위

문교부는 1969년 9월 각급 학교 교육과정의 전면적이고 단계적인 개정(제정)에 대한 계획을 세웠는데, 첫째 사업으로는 국민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개정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였다. 개정 준비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들 수 있는데, 그 하나는 현행 교육과정에 대한 전문학자 및 편수관에 의한 객관적 분석 연구사업이고, 다른 하나는 현행 교육과정에 의해 실시 운영을 해 온 학교측에 대한 여론 조사였다.¹⁷⁾

이 같은 사업은 교육과정 개정(제정)을 위해 반드시 밝아야 하는 수순으로서 사전 연구 또는 기초연구에 해당된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작성된 시안은 학교별 소위원회에서 총론 등을 심의하고, 교과별 소위원회에서는 각론이 검토되었으며, 운영위원회에서 총론 및 각론에 대한 의견을 종합해서 시안(최종)이 확정되었던 것이다.

본 고에서는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사전 연구와 시안 작성 및 개정 시안에 대한 논의 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①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사전 연구

문교부는 교육과정·교과서 분석 및 여론 조사 등의 연구 과제를 1970년 말까지 끝내기로 하고, 1970년 4월에 강우철(이화여대), 유형진(건국대), 이규호(연세대), 이영덕(서울대), 함종규(숙명여대), 홍웅선(연세대) 등 7인을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편 연구조정위원으로 위촉하고, 최영복(수석편수관)¹⁸⁾, 김종빈(편수관), 은용기(편수관)¹⁹⁾ 등 문교부²⁰⁾ 담당 편수관과 같이 연구기획, 조정, 결과의 종합 등을 맡게 하였다. 즉, 사전 연구는 다음과 같이 현행(제2차)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과 여론 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여기서 얻은 연구 결과는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편 연구 조정 위원회(7인)가 중심이 되어 개정될 총론과 각론의 기초 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이 때 분석에 참여한 인원

16) 장기 종합교육계획 심의회 교육과정 연구반, 「교육과정의 무제점과 전망」, 유인물, 1969.

17) 함종규, 「교육과정 연혁조사」 후편, p.120. 1980.

18) 최영복 수석편수관은 1970년도 전반기 때 서울 도립여자중학교 교장으로 전출하였으나, 그 후에도 문교부 교육과정 운영위원회 위원 등으로 참여하였다.

19) 은용기 편수관은 중학교 소위원회 위원으로서 제 3차 교육과정 개정(제정 포함) 작업시 각급 학교 교육과정 총론 분야에 깊이 참여하였다.

20) 1970년 당시 운영위원회 및 국민학교 소위원회의 문교부측 위원으로는 김종빈 수석 편수관과 정세문 편수관이 두 위원회에 참여하였다.

은 교과별 모두 35명이었다.²¹⁾

가. 교육과정 연구 내용

- 국민교육헌장에 나타난 교육지표와 각 교과목의 목적 분석
- 각 교과 지도 내용의 조직 및 개념 분석
- 국민학교 교육과정(총론) 분석(① 교육목표의 분석 ② 교육과정의 조직 분석 ③ 시간 배당 기준 분석)

나. 교과서 분석 연구

교육과정 분석연구와 더불어 교육내용 개선의 일환으로 국민학교 각 교과의 교과서를 분석 연구하여 새 교육과정 개편 기회에 이용하도록 하였는데, 교과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그 방향은 다음과 같았다.

- 국민교육헌장에 입각한 분석: 국민교육헌장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높이고, 학습지도와 교과서 개편에 참고하기 위하여 국민교육헌장이 각 교과의 교과서 내용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를 조사하였다.
- 교과서 내용 분석: 각 교과의 내용이 교과서에 적절하게 선택·배열되었는가를 조사하였다(정의적 요소는 국민교육헌장 분석쪽으로 미루고, 여기서는 주로 지적 영역만을 조사함).
- 기초 자료 조사: 각 교과의 교과서 내용에 수록되어 있는 어휘(국어) 및 각종 용어와 술어를 교과별 특성에 비추어 가려내고, 용어 사용의 타당성과 빈도를 조사하였다. 아울러 도표, 삽화, 그림 등을 검토하였다.

다. 여론 조사 실시

여론 조사를 위해 1970년대에 해당 학교, 교육연구기관, 교육행정기관, 기타 전문기관 약 1,200 곳을 상대로 상세한 문항을 작성하여 실시하였다. 이 조사의 집계는 1970년 5월에 완료되었으며, 현행(제2차) 교육과정을 운영해 본 경험을 토대로한 산 자료를 얻었다.

라. 기타 자료 수집

각 교과별로는 그 동안 중앙과 각 시도에서 교과별로 행한 학력평가 결과는 종합하여, 교과별 지도 내용 편성에서의 난이도 측정 자료로 삼았다. 이와 동시에 다른 나라의 교육 과정에 관한 자료를 얻기 위해 질문지를 약 10여개국에 발송하여 그 나라의 교육과정 정책, 교육과정 조직 등에 관한 최신 자료를 수집해서 참고하였다.

21) 인원(35명)은 기록상 남아 있어 정확한 숫자이며, 누가 참여했는지는 기록이 없어 불확실하지만, 필자의 기억으로는 분과별 교육과정 심의위원(문교부 교과 담당 편수관)으로 판단된다(교육과정: 5, 반공도덕: 3, 국어: 4, 사회:4, 산수:3, 자연:4, 체육:3, 음악:3, 미술:3, 실과:3).

②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시안 작성

가. 교육과정심의회의 심의 조정

사전 연구를 거쳐 정리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실제로 개정 교육과정의 시안 작성 단계에 들어간 것은 1970년 6월부터였다. 문교부가 교육과정 제정 또는 개정을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기구로는 교육과정심의회의(1969. 12. 4. 대통령령 제4388호)가 있다.²²⁾

이 심의회에서 각급 학교 교육과정에 관한 조사연구를 실시한다. 그리고 이 심의회에는 교과별 위원회, 학교별 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등 3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다(제2조).²³⁾

제 3차 교육과정 개정에 있어서 국민학교 교육과정 심의를 위해서 약 430명, 실업고등학교 교육과정 심의를 위해서 약 350명 위원이 각각 45회와 90회의 회합을 거쳐 심의하고 조정하는 일을 맡아보았다. 이러한 절차를 밝아 국민학교와 실업고등학교 교육과정 시안이 발표된 것은 1971년 1월 28일이었고, 그 후 국민학교 교육과정은 우리나라 교육과정 개정상 처음으로 2년이라는 기간에 교육과정 시행에 앞서 이의 적용 탐색을 위한 실험용 교과서의 현장 실험 등을 실시한 뒤,²⁴⁾ 1973년 2월 14일 문교부령 제310호로 확정 공포되었다.

<그림 IV-1>은 국민학교 교육과정의 개정 추진 절차를 개괄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나. 각급 학교 교육과정 시안 작성 과정

각급 학교 교육과정 시안 작성 과정은 <표 IV-3>과 같으며, 본 고에서는 국민학교 교육과정 시안 작성과정만을 제시하기로 한다.

● 국민학교

제2차 교육과정은 1963년 2월 15일 문교부령 제119호로 공포되어 1·2학년은 '64학년

22) 교육과정심의회의는 1960년 12월 23일 제정되었으며, 이와 같은 기능을 했던 기구로는 교수요목심의회 규정(1950. 6. 2. 문교부령 제9호)과 교과과정연구위원회(1951. 3. 30. 문교부령 제16호)가 있었다.

23) 문교부 법무관실 김낙운 외, 『문교법전』(1973년판), pp. 175~176, 서울:교학사, 1973. 5.

○ 교과별 위원회(제3조): 교과별 위원회는 교육법 시행령에 규정된 교과 및 학과별로 소위원회를 조직하여, 각급 학교의 동계 교과와 전문학과에 대한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한다. 위원 정수는 30인 이내로 한다.

○ 학교별 위원회(제4조): 학교별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각급 학교별로 소위원회를 조직하여 동계학교의 교육과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한다. [1. 국민학교 소위원회 2. 중학교 소위원회 3. 인문계 고등학교 소위원회 4. 상업계 고등학교 소위원회(기술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포함) 5. 교육대학 소위원회 6. 실업고등전문학교 소위원회 7. 특수학교 소위원회] 위원 정수는 30인 이내로 한다.

○ 운영위원회(제5조): 운영위원회는 교육과정 제정에 있어서의 전체적인 원칙 및 목적 조정에 관한 사항과 다른 위원회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조정·심의한다. 운영위원회는 각 학교별 소위원회에서 추천하는 3인씩의 위원과 문교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되(제6조), 그 위원 정수는 30인 이내로 한다.

○ 위원(제6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24) 국민학교 교과서 편찬: 한편, 국민학교 교과서의 개편작업은 전국 30개 실험학교를 지정하여 1년간의 실험·평가를 거친 후 1·2·3학년용은 1973학년도부터, 4·5·6학년용은 1974학년도부터 사용하도록 준비하였다.

도부터, 3·4학년은 '65학년도부터, 5·6학년은 '66학년도부터 적용되었는데, 문교부는 제 3차 교육과정 개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사전 연구와 절차를 밟았다'

- ㉠ 현행 교육과정의 분석연구: 1969년 8월부터 12월까지 연구위원은 59명으로 교과당 3~5명이 담당하였다.
- ㉡ 현행 교육과정의 여론조사 : 조사 대상은 국민학교 680교, 교육행정기관 181개처, 교육연구기관 39개처로 총 900개처로 하였다.
- ㉢ 교육 전문가에 의한 연구 : 1970년 6월부터 9월까지의 연구 내용은 ① 교육이념 ② 교육과정 구성의 일반목표 ③ 국민학교 교육과정 구성의 일반목표 ④ 교육과정 구성의 기본 방침 ⑤ 교육과정의 편성과 시간배당 기준 등이었다.
- ㉣ 학교별 소위원회 : 1970년 4월 19일부터 4월 25일까지 20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제 1차 학교별 소위원회를 열었으며, 동년 9월 9일부터 9월 14일까지 20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제2차 학교별 소위원회를 열어 총론(시안)을 심의·조정하였다.
- ㉤ 교과별 위원회 : 제 1차 모임은 1970년 9월 22일부터 9월 26일까지 시의위원 180명이 참석하여 '교과별 요소표'를 심의하였으며, 제2차 모임은 동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80명이 참석하여 '각론(교과별)' 원안을 심의·조정하였다.
- ㉥ 집필위원 및 전문위원의 작업 : 1970년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집필위원 및 전문위원 31명이 모여 교육과정 '총론' 및 '각론(교과별)' 원안을 작성하고 이를 종합하였다.
- ㉦ 운영위원회 : 1970년 11월에 교육과정 총론 및 각론에 대한 의견을 종합해서 작성한 시안의 원안 심의를 28명 위원이 참석하여 심의·조정하여 1971년 1월 28일에 발표했는데, 특이한 것은 다음과 같다.
 - 주당 교과 시간을 현행 평균 25.8 시간에서 28.7 시간으로 늘인다.
 - 현행 8개 교과 외에 '반공도덕생활'을 '도덕'으로 묶어서 9개 교과로 한다.(도덕을 정규교과로 신설한 것이다).
 - 기초학력의 충실화, 지식 내용의 정선 및 구조화를 촉진하며, 특히 산수, 자연 등에 있어 중등학교와의 연계성을 이루는데 중점을 둔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시된 것은, 결과적으로 국민교육현장의 정신을 교육과정 개편 내용의 골자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그 밖에는 별다른 이론이 없었으며, 다만 제시 덕목들을 교육내용상 어떻게 구체화시키느냐 하는 방법이 문제시되었다.²⁵⁾

25) 함종규, 전계서, pp. 123~124.

<그림 IV-1> 제 3차 교육과정 개정(국민학교) 추진 절차

추진단계	추진내용	추진일정
정책결정 계획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방향의 설정 ◦ 개정 및 제정계획의 수립 	*68. 12 - 69. 8 9개월
기초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사회의 요구 조사 ◦ 학생·교원·학부모의 필요 조사 ◦ 교육과정의 국제비교 ◦ 현행 교육과정의 분석 	69. 8 - 70. 6 11개월
총 론 시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의 방향 전문 강조점 ◦ 교육 목표 편제 시간 배당 ◦ 운영지침 	70. 6 - 70. 9 4개월
심 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별 소위원회 2차 	70. 4. 9 2개월
각 론 시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 및 특별활동의 목표 ◦ 지도내용 및 유의점 	70. 6-70. 9 4개월
심 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별 소위원회 	70. 9 - 70. 10 2개월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론 ◦ 각론 	70. 10. - 70. 11 2개월
심 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별 소위원회 ◦ 교과별 소위원회 ◦ 운영위원회 	70. 10. - 70. 11 2개월
시안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교부 교육과정 심의회 실험평가 ◦ 교과용도서 실험본 등 	71. 1. 28 2년간
수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수정·보완 	3개월
확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교부령 제310호 	73. 2. 14

* 1968년 12월에는 국민교육헌장이 선포되어 국민 교육의 지표가 명시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문교부는 각급학교 교육과정에 검토를 가하고 연차적으로 개편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추진일정에 포함시켰다.

< 표 IV-3 > 국민학교와 기타학교 교육과정 개정 시안의 작성 과정²⁶⁾

구분	항목	국민학교	중학교	인문계고등학교	실업계고등학교
사전연구	1.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분석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기간: '69. 8 - 12 연구위원: 59명 (교과당 3-5명) 연구내용: 총론은 3항에의 한 분석, 각론은 별도의 3항에의 한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기간: '70. 6 - 11 연구위원: 78명 (교과당 3-5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착수: '71. 6. 1 연구위원: 총론부분 6명, 각론 12명 ('71. 5. 30위촉) 연구내용: 타당성 검토(12학목), 9기준에 의한 총론부분의 분석('71.6-8.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구기간: '69.9-12 연구위원: 20명 (계열별 3-5명) 연구내용: 총론 및 각론(계열)분석 및 개선 연구
	2. 교육과정에 대한 여론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대상: 900개처 (국민학교 680교, 교육행정기관 181개처, 교육연구기관 39개처) 외국 10 여개 국: 교육과정의 정책, 조직에 대한 최근 자료수집을 위한 질문지 발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간: '71. 5. - 8 조사대상: 중학교 240개교, 교육행정기관 24개, 교육연구기관, 교육행정기관 75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론조사 및 개정을 위한 문제점 추출 9기준에 의한 작업, 조사기간: '71. 6. 18-7. 17, 처리기간: ('71.10.15-12.10), 제2차 조사: 조사대상: 인문계 고교 147개교, 종합고교 13개교, 연구기관 7개 조사기간: '72. 4. 1-5.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간: '70. 4.10-5.15 조사대상: 실업계 고교, 실업계 교육행정기관, 대학 등 256개처
	3. 교육 전문가에 의한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체: 교육과정 전문위원회 연구기관: '70. 6 - 9 연구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이념 (2) 교육과정 구성의 일반목표 (3) 국민학교 교육과정 구성의 일반 목표 (4) 교육과정 구성의 기본방침 (5) 교육과정의 편성과 시간배당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체: 교육과정 전문위원회 기간: '71. 11 - '72. 2 안건: 3차에 걸쳐 각론 심의와 종합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위원회에 대한 기초작업 기간: '70. 5. 22 - 6. 22 참여자: 농, 공, 상, 수산, 가정 계열 전문위원 15명 안건: 기초 작업으로서의 원칙작성을 위한 회의
시안의 심의·작성·발표	1. 학교별 소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1차 학교별 소위원회 개최 일시: '70. 4. 19-4. 25 참석위원: 20명 안건: 국민학교 교육과정 총론심의 ○ 제2차 학교별 소위원회 개최 일시: '70. 9. 9 - 9. 14 참석위원, 안건은 제 1차와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2 일시: '73. 12- '74. 3 (수차) 인원: 24명 안건: 교육목표 개정방향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1차 학교별 소위원회 개최 기간: '70. 4. 8-4. 14 ○ 제2차 학교별 소위원회 개최 기간: '70. 9. 8. - 9. 13 참가인원: 각각 20명 위원 심의안건: 교육과정 총론 심의

26) 자료: 이경섭, 「한국현대 교육과정사연구(상)」, pp. 329~330. 서울: 교육과학사, 1997. 12.
기호 * 1·2·3·4·5·6은 연구자(허강)가 추가한 것임).

구분	항목	국민학교	중학교	인문계고등학교	실업계고등학교
시 안 의 심 의 · 작 성 · 발 표	2.교과별 심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1차 시의회 개최 · 일시:'70.9.22-9.26 · 참석위원:180명 · 안전:교과별요소*3 표심의 ○ 제2차교과별심의회 · 기간:'70.10.1-10.31 · 참석자:180위원 · 안전:각론(학과별)의원안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71.9 · 안전:교과별 요소표 심의 *3 · 일시:'73.6.25-28(최종안) · 안전:대한교련주최공청회여론등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4 · 일시:'73.12-'74.3(수시) · 위원:24명 · 안전각론(교과별)원안 심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최일시:'70.11.2-11.6 · 참석위원:20명 · 심의안전:각론(교과별)심의
	3. 집필위원 및 원원의 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70.10.15-11.4 · 참석위원:집필위원및전문위원31명 · 안전:총론및각론(학과별)원안을작성하고 이를종합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1.9교육과정 원안집필작업 착수 · 기간:'71.11-'72.2 · 안전:각론원안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최기간:'70.10.5-11.14 · 참석위원:집필위원 및 전문위원 30명 · 작 어 내 용 :총론 및 각론(교과별)의 원안 작성 및 종합정리
	4. 운영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70.11월 · 안전:교육과정 총론 및 각론에 대한 의견을 종합해서 시안의 원안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5 · 일시:'73.12.18 · 참석자: 30명 · 안전:학교별안 심의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0년 11월에 교육과정 총론 및 각론에 대한 의견을 종합해서 시안의 원안 심의,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침
	5.편수국과 전문위원과 의 연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6 '74.3.22-3.29 	
	6. 시안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1년1월28일시안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3년5월22일시안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4년 10월 최종안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1년 1월 28일시안 발표

③ 개정 시안에 대한 논의

교육과정 개정(제정) 시안에 대한 논의는 (가) ‘국민학교 교육과정 시안 작성 과정’에서 언급하였으므로, 즉 교과별 소위원회, 학교별 소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그리고 문교부 편수관과 전문위원²⁷⁾과 연합회의 등에서 논의점 등을 소개하였기에 여기서 다시 언급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 생략한다. 다만 2차에 걸쳐 행한 공청회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가. 제 1차 공청회²⁸⁾

국민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시안에 대해 한국교육학회는 한국 교육학회 교육과정연구회와 공동 주최로 1971년 3월 9일 심포지엄 형식으로 국민학교 시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 심포지엄에서 김종서 교수가 ‘교육과정 개편 시안의 몇 가지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당일의 교과별 발표자는 <표 IV-4>와 같다.

<표 IV-4 > 교과별 발표자명

교과(영역)별	발표자	소속
교육과정의 전체 구조	김종서	서울대 교수
도의 교육	이규호	연세대 교수
국어과	이용백	서울대 교수
산수과	박한식	서울대 교수
사회과	강우철	이화여대 교수
자연과	최기철	서울대 교수
체육과	나현성	서울대 교수
음악과	유덕희	서울교대 교수
미술과	김화경	서울교대 교수
실과	최철인	서울교대 교수

김종서 교수는 발표 중 두 가지 특징(① 가치관 교육을 중시하였다. ② 특히 이수와 (산수·자연) 계통은 학문 중심 교육과정으로 짜여져 있다)고 지적하였고, 다음 6가지의

27) 교육과정 심의회 전문위원의 정식 발족은 1972년도부터였으며, 이 때에는 운영위원회와는 별도 기구로 설치되었다가, 1973년도에는 운영위원회 전문위원(11명)으로 유지하였고, 1974년도부터 이 기구는 교육과정 심의위원단에서 없어졌다. 이 때의 전문위원은 강우철, 강운호, 김기석, 박준희, 박한식, 이영덕, 이용길, 최영복, 함종규, 홍용선, 오기형 등이었다.

그리고 교육과정 심의회 전문위원과 담당 편수관(1970년부터 1973년까지 운영위원회 위 원 등의 참여 편수관은 김종빈, 정세문, 은용기, 이영택, 김종우, 임병기, 김덕기, 정진권 등이었다)은 수차례 거쳐 심의조정회를 가진 바 있다.

28) 한국교육학회와 한국교육학회 교육과정연구회 공동 주최, 「국민학교 교육과정 시안에 대한 심포지엄」, 1971. 3. 9. 장소: 서울신문회관, 유인물.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① 실험연구 후 시행해야 한다. ② 교원들의 현직연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가치관 교육에 대한 실시 내용·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④ 교육과정 개정의 성격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⑤ 저학년에서는 통합교과가 이루어져야 한다. ⑥ 양적인 면에서 내용의 검토가 있어야 한다.

나. 제 2차 공청회

제 1차 공청회 주최 후 1973. 3. 16 대한교육연합회 주최로 제2차 교육과정 시안에 대한 공청회가 교육회관에서 있었으며, 주제는 ‘교육과정 개편에 관한 공청회’였다. 이 공청회는 제 1차 공청회 때와는 달라서 실업계, 언론계, 교육계의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 이날 발표자와 주제명은 <표 IV-5>와 같다.²⁹⁾

< 표 IV-5 > 발표자 및 주제명 등

발표자	소속	주제명 등
김종빈	문교부 수석 편수관	주제 해설(교육과정 개편의 취지 및 방향)
함종규	숙명여대 교수	교육과정 개편 시안의 문제점
최 상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박사	교육과정 개편에 대한 의견
송건호	동아일보 논설위원	교육과정 개편안에 대한 의견
정희근	성동공업고 교장	실업고등학교 교육과정 개편에 대한 소견
김병순	인천교대 부속고 교사	교육과정 시안의 몇 가지 문제점
홍용선	연세대 교수	공청 내용의 종합

함종규 교수는 ‘교육과정 개편시안의 문제점’에서 개정 시안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³⁰⁾

(가) 교육과정 구성 내용면의 특징

- 국민교육헌장의 이념 구현
- 지식의 양적 팽창, 기술의 다원화에 대비하는 내용으로 개편
- 1~3학년은 8교과로, 4~6학년은 9교과로 각기 1교과를 증가하여 편제
- 특별활동의 다변화

(나) 교육과정 구성 형식면의 특징

- ‘반공·도덕’ 영역을 도덕 교과로 독립시켜 교과활동과 특별활동 등 두 영역으로 형식을 갖추

29) 대한교육연합회 주최, 「교육과정 개편에 관한 공청회」, 1971. 3. 16, 장소: 대한교련강당, 유인물.

30) 함종규, 전계서, pp. 139~140.

◦ 학년별 주간 시간 배당을 증배

④ 교육과정 실험학교에서의 실험³¹⁾

본 고에 대해서는 (6) ‘3차 교육과정 개정과 연구학교 운영’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생략한다.

우리 나라의 제 3차 교육과정 개정 경위에 나타난 학문 중심적인 특징에 대해 이경섭³²⁾은 다음과 같이 요약 진술한 바 있다.

- 개정의 경위 가운데에서 새로운 교육 과정을 마련하기 위한 사전 연구를 보면, 연구는 주로 시행되고 있는 교육 과정 및 교과서의 분석, 설문지에 의한 교육 기관의 여론 조사, 개정될 각급 학교 교육 과정의 총론, 각론 마련을 위한 기초 작업 등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학문 중심적인 특징과 관련한 내용은 ‘각 교과 지도 내용의 조직 및 개념 분석’, ‘전체 구조의 타당성 여부’, ‘필요한 개념, 기능의 구조적 배열 또는 수락 여부’, ‘교육 사조의 변천과 학문의 양의 팽창’뿐으로서 국민 교육 현장의 이념 구현과 관련한 내용보다 적은 편이다. 이런 결과를 볼 때 사전 연구에서는 제 3차 교육과정이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하다고 보는데, 그것은 사전에 확고한 학문 중심적인 교육 과정관을 지니지 않고 연구에 임한 것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개정의 경위 가운데서 시안 작성 과정을 보면, 각종 위원회의 심의 → 시안 작성 → 심의 결정이라는 일련의 작업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학문 중심적인 특징을 크게 부각시킨 흔적을 찾아 볼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볼 때, 사전 연구와 시안 작성 과정에서는 학문 중심적인 각급 학교의 교육 과정을 입안한다는 확고한 사전 의도가 미흡했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개정 시안에 대한 반응들을 보면 경험 중심과 학문 중심 교육관을 절충해야 한다는 반응도 다소 있었으나, 국민 교육 현장의 이념을 구현해야 한다는 것과 학문 중심적인 특징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경향이었다. 이것을 볼 때 전자 즉 국민 교육 현장의 이념 구현은 그 당시 우리 나라의 현실, 후자는 그 당시 학문 중심적인 교육 사조 등에서 유래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제 3차 교육과정의 특징

본 고에서는 이념상, 기본 방침 및 일반 목표상의 특징을 제시하고, 또 제 3차 교육과정의 문제점 등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³³⁾

① 이념상의 특징

제 3차 교육과정은 제2차 교육과정에서의 생활 중심 교육 과정을 지양하고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을 강조하였다. 학문 중심 교육 과정 사조에 의하면 교육 과정은 각 학문에 내재해 있는 지시 탐구 과정의 조직으로 정의된다. 이 과정을 천명한 브루너에 의하면,

31) 최영복 외, 「국민학교 교육과정 해설」, pp.18-19, 교학도서주식회사, 1973. 및 함중규, 전계서, pp.145-146. 1980.

32) 이경섭, 전계서, pp. 354~355.

33) 한국교육과정·교과서 연구회편, 「한국 교과교육과정의 변천(초·중·고편)」 ‘이념상, 기본방침·목표상의 특징’ 등 참고, 서울: 대한교과서(주), 1990. 12.

교육과정은 곧 각 교과에 전문가들이 각 교과가 나타내고 있는 지식의 본질(즉, 구조)을 가장 명백히 표현할 수 있도록 그 지식을 체계적으로 조직해 놓은 것을 가리킨다.³⁴⁾

이 ‘지식의 구조’를 문제로 삼는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 나타난 동기를 미국에서의 ‘스푸트니크 충격’에 의한 생활 또는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의 반성을 들기도 하고, 오늘날의 지식 및 정보의 폭발적인 팽창에 따르는 교육 내용의 선정 문제를 들기도 하며, 교과를 잘 가르치기 위한 탐색적 노력의 결과라고 보기도 한다. 그러나 학문적 교육 과정은 아동의 자발적인 탐구를 통한 지식의 이해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의 개념을 보다 엄밀하게 구체화하고 있으며, 지식의 탐구 과정은 학생 경험의 총체 중의 특수한 부분을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경험 중심 교육 과정과 정면 대립되지는 않는다고 보기도 한다.³⁵⁾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의 방향은 그 기본 방침에서 밝힌 ‘지식 기술 교육의 쇄신’이라는 항목 속에 표현되어 있으며, 그 내용 중 특히 학문 중심 교육 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기본 개념의 파악 : 지식의 구조를 이루는 기본 개념과 그 관계를 이해하고 지적인 탐구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지도 내용을 정선하여야 한다.”

위의 표현은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의 내용을 그대로 표현했다고 볼 수 있다.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의 특징이 가장 잘 나타나고 있는 교과는 수학과 과학, 사회 등이며, 특히 국민학교 1학년에 ‘집합’의 개념이 도입되어 있는 것은 종래의 생활 수학에서는 생각조차 못했던 일이다.

학문 중심 교육 과정과 함께 제 3차 교육 과정의 이념이 된 것은 국민 교육 헌장 이념이다. 1960년대 이후 주체성을 강조하여 한국의 전통을 존중하고 창조의 정신을 기쁨으로써 국가 발전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역군을 배양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었는데, 이에 부응하여 제정된 것이 국민 교육 헌장이다. 제 3차 교육 과정은 이 국민 교육 헌장에 나타난 교육의 지표인 ①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개인 윤리면) ② 협동 정신(사회 도덕 윤리면) ③ 국민 정신(국민 윤리면)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다.³⁶⁾

그리고 제 3차 교육 과정의 특징은 적어도 두 가지로 크게 요약될 수 있다. 하나는 교육의 방향에 있어서의 국민정신교육의 강화이며, 또 하나는 교육의 방법적 원리에 있

34) 이흥우 외, 「교과과정과 교과서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 「문교부 정책연구 보고서」, pp. 30~31.

35) 이흥우 외, 상계서, pp. 31~34.

36) 홍웅선 전계서(한국교육의 좌표), pp. 37~38.

어서의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을 배경으로 한 기본 개념의 이해와 지식의 구조적 학습과 탐구의 능력을 중시한 것이다.³⁷⁾

② 기본 방침 및 일반 목표상의 특징

제 3차 교육 과정을 구성함에 있어서는 국민 교육 현장 이념의 구현을 기본 방향으로 삼고, 국민적 자질의 함양, 인간 교육의 강화, 지식·기술 교육의 쇄신을 기본 방침으로 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 ㉠ 국민적 자질 함양: 민족 주체 의식의 고양, 전통을 바탕으로 한 민족 문화의 창조, 개인의 발전과 국가의 융성과의 조화
- ㉡ 인간 교육의 강화: 가치관 교육의 강화, 비인간화 경향의 극복, 근면성과 협동성의 양양
- ㉢ 지식·기술 교육의 쇄신: 기본 능력의 배양³⁸⁾, 기본 개념의 파악, 판단력과 창의력의 함양, 산학 협동 교육의 강화

위와 같은 기본 방침에 따라 교육 과정이 추구하는 일반 목표는 개인면과 사회면의 두 측면에서 고찰하여 자아 실현(개인면)과 국가 발전 및 민주적 가치(사회면)을 들고 그 구체적인 사항들을 나열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본 방침과 일반 목표에 제시된 정신을 국민학교 교육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교육 과정의 각 영역에 대한 내용과 활동의 선택, 구성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다음 가지 점을 그 구성 방침에서 제시하고 있다.

- ㉠ 기초적이며 기본적인 학습 내용의 정선
- ㉡ 어린이들의 심신 발달 및 경험의 고려
- ㉢ 각 교과에 특징에 알맞은 학습 방법의 전개
- ㉣ 지역 사회의 특수성 고려
- ㉤ 학년 간, 학교 간의 연계성과 교과 간 및 교과와 특별 활동 상호의 관련성 고려

37) 김호권 외, 「현대 교육 과정론」, pp. 103~104, 서울: 교육출판사, 1982. 2.

38) 홍용선, 「교육과정 및 수업에 관한 연구 방법 탐구」 제11권, pp.10, 서울:한양대학교, 1995. 12.

기본 능력을 배양한다는 것은 어느 교육과정에서나 한결같이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새삼스러운 것이 없는데, 제 3차 교육과정에서 그것을 특히 강조한 것은 그러한 능력이 학습과 사고의 기본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경험중심 교육과정이나 교과 중심 교육과정이 다 같이 기본 능력을 강조하고 있지만, 하나는 그러한 능력이 문제 해결에 활용되는 것이라면, 다른 하나는 보다 넓고 깊은 교과학습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점이 다르다고 하겠다. 제 3차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기본능력은 어느 쪽이나 하면 후자의 경우가 될 것이다.

여기서, 기초적이며, 기본적인 학습 내용의 정선은 학문 중심 교육 과정으로서의 특징을 잘 대변해 주는 것으로, 제 3차 교육 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개선점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본 방침, 일반 목표, 국민학교 과정의 구성 방침에 나타난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³⁹⁾

첫째, 국민 교육 현장의 이념을 학교 교육 전반에 걸쳐 반영시키는 데 역점을 두었다.

국민 교육현장의 이념은 어느 나라에도 통하는 일반적인 교육의 지침이 아니라, 한국이 처한 특수한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우리의 교육이 지향할 좌표를 밝힌 것이었다. 이 때문에, 1949년에 공포된 교육법의 교육 방침을 시의에 맞게 새롭게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는바, 이러한 교육 방침 또는 지표가 교육 과정의 기본 방향이 되었다는 것은 매우 뜻있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 교육 현장 이념의 반영은 제 2차에서 뚜렷하지 못했던 피상적인 목적관에서 벗어나 교육의 목적 설정을 분명히 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다가올 1970년대 또는 1980년대의 시대적 상황을 깊이 통찰하고 이에 대비하는 교육의 목표를 적절하게 제시하였다.

1960년대 이후,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에 따라 서구화,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문제가 우리 사회가 당면한 긴박한 문제였다. 이의 해결을 위해 국적 있는 교육과 기대되는 한국인상 정립의 요청에 부응하여 민족 주체 의식을 지니고, 전통을 바탕으로 한 민족 문화를 창조할 수 있으며, 개인의 발전과 국가의 융성과를 조화시킬 수 있는 국민적 자질을 기본 방침으로 내세웠다. 따라서, 산업의 고도화에 따른 인간성의 소외, 도시화에 따른 인간의 고립화를 예견한 비인간화의 극복을 내세운 것, 그리고 사회의 급격한 발전에 따른 지식 정보량 및 그 수용의 폭증에 대비한 지적 탐구 방법을 강조한 것과 경제의 지속적 성장에 필요한 과학적 지식과 유용한 기술을 생산에 적용시키려는 산

39) 문교부령 제325호, 「중학교 교육 과정 해설」, pp.12~13, 서울: 교학도서(주), 1973. 12.

-중학교 교육과정 구성 방침-

- ① 중학교의 독자성과 국민학교와의 보다 밀접한 연계성 고려
- ② 중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는 가치관 확립
- ③ 자아 실현을 위한 노력과 진로 선택을 위한 탐색 활동 기회 부여
- ④ 교과 및 특별 활동에서의 기본적인 내용 정선

-고등학교 교육과정 구성 방침-

- ① 중견 국민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고등 보통 교육과 전문 교육의 특징을 고려
- ② 지적 학습과 정의적 학습이 조화로 전인 교육 확립
- ③ 자아 실현, 국가 발전을 위한 학습 활동 기회 부여
- ④ 기본 능력 배양, 기본 개념 파악, 창의력 배양 지도

학 협동의 강화를 부르짖은 것 등은 당시와 다가올 시대의 상황에 교육적으로 적절하게 대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학문 중심 교육 과정으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식의 구조를 이루는 기본 개념과 그 관계를 이해하고, 지적인 탐구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지도 내용을 정선하도록 함으로써, 명실 공히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의 성격을 분명히 하였다. 이에 따라 각 교과와 내용 조직에서 지식 구조의 체계화에 의한 학교급별, 학년별 계열성을 더욱 뚜렷이 할 것과, 내용의 선택에서 기본 개념과 학문 원리 및 기초 이론을 일관된 지식 구조의 체계화에서 전개하는 이른바 나선형 교육 과정으로 할 것, 그리고 학습의 방법 면에서 기억 위주나 단순한 경험의 방법이 아니라 철저한 발견, 탐구의 과정과 기본 개념의 이해 과정을 강조할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제 2차 교육 과정의 피상적인 목적관을 벗어나 보다 구체적인 목적을 제시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한국적 현실과 국가 정책적 의지가 강조되고 있다.

우리의 교육 이념이 지향하고 있는 인간상 구현을 위해 매우 구체적인 수준의 목표를 제시하면서 우리 나라에 알맞은, 우리 풍토에 알맞은 민주적 인간을 육성할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올바른 국가관, 국민 연대 의식, 국토 및 자원의 보존과 개발, 세계 속의 한국인으로서의 자각 등 유신 이후, 국가가 추구하는 정책 의지가 깊게 반영되고 있다. 특히, ‘세계 속의 한국’이라는 구호가 교육 목표에 반영된 것은 특기할 만하다.

기본 방침이나 목표에서 위와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기본 방침과 일반 목표가 성격상 구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각각 그 역점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산만하다는 점, 목표 하나 하나의 의미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 점이 있다는 비판도 있다.⁴⁰⁾

③ 제 3차 교육과정의 문제점 등

제 3차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구성의 기본 방침에서 ‘기본 개념의 파악’을 강조하면서 “지식의 구조를 이루는 기본 개념과 그 관계를 이해하고 지적인 탐구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지도 내용을 정선했다.”고 주장하면서, 학문중심 교육과정 이론을 반영하려는 의욕을 보인 바 있다. 이러한 이론적 입장은 특히 수학, 물리, 화학 등 자연과학 분야에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제 3차 교육과정에서 시도한 학문중심 교육과정이 충분한 교육적 효과를 거두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이 이론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도 있겠으나 그보다는 당시 우리 나라 교육 여건의 한계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아야

40) 이흥우 외, 전제서, pp. 209~217.

할 것이다.

김순택이 지적인 바와 같이, 제 3차 교육과정의 학문적인 교육과정은 “현장의 수요태세 부족, 즉 교사 훈련 부족, 학부모의 이해 부족, 지도 방법의 빈곤 실험기기의 부족 등으로 학교로부터 당혹감을 유발한 채 문서상으로만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 되어 버렸다.”⁴¹⁾고 하였다. 이와 같은 교육여건상의 한계 외에 새로운 이론을 공식적으로 수용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이론적·실제적 검토와 논의 없이 채택해 버리는 관행도 새 교육과정 이론이 우리 나라 교육과정의 발전에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또, 제 3차 교육과정의 문제점으로 ① 학습 내용의 과다 ② 학습하기 어려운 교육내용 ③ 교과목 위주의 분과교육 ④ 기초 및 일반 교육의 소홀 ⑤ 전인교육·인간교육의 미흡 등을 제시하고 있다.⁴²⁾

김호권은 제 3차 교육과정 그 자체에 대해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즉 “그것은 바로 국민정신 교육적 특색과 학문중심 교육과정의 특색이 어떤 논리적 필연성 없이 결합되어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그것은 새로운 교육 과정의 이론이 전 교과에 걸쳐 적용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수학과, 자연과, 사회과는 그 자체가 학교 교육의 전통적 주류에 속하는 것이며, ‘지식의 구조’가 비교적 잘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새 교육과정의 이론이 비교적 쉽게 응용될 수 있다(중략). 그러나 비교적 지식 체계가 이완된 도덕과, 국어과, 예능과의 경우에는 새 교육과정 이론의 적용을 찾아보기 힘들다.”⁴³⁾

또, 김호권은 제 3차 교육과정을 해부할 때 적어도 네 가지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첫째로 현행 교육 과정은 지식 위주의 교육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런 경향은 특히 실천적 현상으로서의 교육과정에서 더 심하다. 둘째로, 편중된 지식교육의 한 필연적인 결과로서 인간교육의 측면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상태에 놓여 있으며, 이런 사태의 극복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사회풍토 및 가정교육이 학교교육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 셋째로, 학습의 현실적 맥락이 크게 약화되어 학생들의 학습은 현실적인 절박감이 수반되지 않은 대리적 학습 경험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다. 넷째로, 학교교육과정이 어느 정도의 개인적·사회적 연관성을 갖고 있느냐의 문제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으며, 예견되는 개인적·사회

41) 김순택, 「학교 교육의 내용과 방법 연구」, “한국 교육학의 성장과 과제” 중에서, p.221,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42)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과정 개정안의 연구·개발」-답신보고서, 1981, p. 15.

43) 김호권 외, 전거서, p.105.

적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개혁이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그는 교육과정의 개혁을 위해서는 그 문제 자체가 교과 내용의 문제를 넘어서는 사회전반의 문제이므로, 사회 각계 각층의 공동참여가 요청되며, 개혁은 또한 일시적인 미봉책에 그쳐서도 안되며,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를 통한 학습가능성의 검증을 거칠 필요가 절실하다고 하였다.⁴⁴⁾

학문 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비판은 또 있다. 홍용선 교수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즉, 학문의 구조를 바탕으로 한 학문 중심 교육과정은 예를 들면 PSSC 물리에서와 같이 현대 과학의 최첨단을 걷는 원자 물리학, 양자역학을 교재에 포함시킬 정도로 질적으로 고도화되고 양적으로 방대하여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것을 배우게 하는 수업의 방법으로 채택한 발견학습, 탐구학습이 실제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교과 내용을 따라가지 못하는 저학력 학생, 학습 지진아 등을 양산하게 되었다. 교육과정 개혁 운동으로, 그것은 지적 수월성을 추구한 나머지 학문적 재능을 타고난 학생들만을 편중하는 교육상의 엘리트주의에 빠져들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사람의 능력차를 초월하여 교육에서의 평등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비난을 받게 된 것이다.

이러한 현상과 사실을 포괄적으로 검토할 때, 학문중심 교육과정은 현대의 과학과 학문 중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면 아니 될 것이 무엇인가는 분명히 하였지만, 학생들이 무엇에 흥미를 느끼고 무엇을 배우려 하고 있는가는 전적으로 무시한 것이 되고 말았음을 알 수 있다.

첫째, 학문의 특성을 강조한 학문 중심 교육과정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주로 이론적인 지식이 가치있는 교육 내용으로 간주되고, 학문적 성격과 구조가 분명하지 않은 교과(예: 체육, 미술, 음악)나 특별활동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리고 학문의 특수성이 강조됨으로써 개인적, 사회적, 문제 해결에 요구되는 학문간의 협력적, 통합적 접근을 어렵게 하였다. 따라서 학문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개인적·사회적·적합성에 충분한 관심을 돌려야 할 것이다.

둘째, 우리 나라의 교육과정 운영면의 문제점과 불비한 학교 환경의 여건이 전인 교육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특히 인문계고교는 대학 입시 준비에, 실업계는 기능 훈련에만 전념하여, 전인 교육의 바탕이 되는 일반 교육을 소홀히 하고 있다. 한편 과밀학급 현상, 시설의 불비 등은 개별학습의 기회를 막고, 다양한 경험의 제공을 어렵게 하여 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교육을 실시할 수 없게 하였다.⁴⁵⁾

44) 김호권, 「교육 개혁의 과제(2)-교육과정」 주제 발표 자료, 서울: 전국경제인 연합회, 1976. 12.

45) 홍웅선, 전 계서(제11권), pp. 13~14.

(2) 제 3차 교육 과정의 체제 및 편제상의 특징

1) 각급학교 교육과정의 체제

체제면에서 교육 과정의 전개 체제가 더욱 체계화되었다. 총론을 구성의 일반 목표와 학교급별 교육 과정으로 나누고, 구성의 일반 목표에 기본 방침, 일반 목표를 학교급별 교육 과정에 구성 방침, 편제와 시간 배당, 운영 지침을 제시하고 있어 제 2차 교육과정보다 단순화, 체계화되었다.

각론에서도 각 교과별로 목표, 내용, 지도상의 유의점으로 구분하고 있다. 특히, 목표는 교과 목표에 해당하는 일반 목표와 각 학년별로 학년 목표를 진술하고 있어 그 위계와 체계가 분명하게 되었다.

2) 국민학교의 교육과정 편제상의 특징

① 편제상의 특징

교육 과정의 편제면에서 제2차 교육과정의 도덕·반공 활동이 없어지고 도덕과가 독립함으로써, 교과 활동과 특별 활동이 이원적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도덕과가 교과화됨에 따라 교과는 9개 교과로 되었다. 중등 학교에서는 도덕과와 함께 국사도 교과로 독립하였으나, 국민 학교에서는 종전대로 사회과 내의 국사 분야로 존치시키도록 하되, 5, 6학년에서 국사 부분 내용을 따로 편성하고 교과서를 따라 편찬하도록 하였다.

시간 배당면에서는, 주 단위로 최소 시간과 최대 시간으로 이수의 폭을 두어 운영의 신축성을 기하도록 했던 제 2차 교육과정과는 달리 교과별, 학년별로 연간 최소 시간량(단, 괄호 안에 주당 시간 표시)으로 단일화하였다. 이것은 제 2차 교육과정에서 이수의 폭을 둔 것이 실제에 있어서는 여유의 폭이 좁을 뿐만 아니라, 학년별 수업 시수의 계가 고정되어 있어 여유의 폭이 거의 없었으며, 교육 현실이 교과 담임제가 아니고 학급담임이 전 교과를 단일의 국정 교과서로 지도하므로 그 폭이 별 의의가 없었기 때문에 바뀐 것이다. 연간 수업 시수로 표시한 것은 주당 시수로 표시함으로써 요일에 따라 수업이 빠져 교과별로 수업 시간이 기준을 넘거나 모자랄 가능성이 있는 점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또, 수업 시간 단위를 40분 또는 45분으로 했는데, 이것은 1~6학년의 성장 조건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활용하려는 취지를 따른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45분이 수업 시수로 등장한 것은 국민 학교 교육 과정사상 최초였다.

운영 지침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도덕 교육, 국사 교육, 체육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도덕 교육은 도덕과를 굴대로 하되, 각 교과 활동과 특별 활동, 기타 학교 교육 활동 전반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고, 국사 교육은 전학년을 통하여 강화하되, 5, 6학년에 체계적으로 지도하도록 하며, 건강 증진, 보건 위생, 체력 향상, 안전 교육도 체육과의 학습 활동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 전체에 걸쳐 전개되도록 하였다.⁴⁶⁾

< 표 IV-6 > 국민학교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

과목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도덕	70(2)	70(2)	70(2)	70(2)	70(2)	70(2)
국어	210(6)	210(6)	210(6)	210(6)	210(6)	210(6)
사회	70(2)	70(2)	105(3)	105(3)	140(4)*	140(4)*
산수	140(4)	140(4)	140(4)	140(4)	175(5)	175(5)
자연	70(2)	70(2)	105(3)	140(4)	140(4)	140(4)
체육	70(2)	105(3)	105(3)	105(3)	105(3)	105(3)
음악	70(2)	70(2)	70(2)	70(2)	70(2)	70(2)
미술	70(2)	70(2)	70(2)	70(2)	70(2)	70(2)
실과				70(2)	70(2)	105(3)
계	770(22)	805(23)	875(25)	980(28)	1050(30)	1085(31)
특별활동	35~(1~)	35~(1~)	52.5~(1.5~)	52.5~(1.5~)	52.5~(1.5~)	52.5~(1.5~)

* 사회과 5, 6학년 시간 배당 140(4) 중, 70(2) 시간은 해당 학년의 국사 부분에 배당한다.

◦ 이 기준표는 교과활동과 특별활동의 지도를 위한 연간 최소 시간량을 나타낸 것이며, ()안은 연간 수업 주수 35주일 경우의 주당 평균 시간량을 보기로 나타낸 것이다.

② 체제 개선

이 과정은 1979년 3월 1일자로 ‘문교부령’에서 ‘문교부 고시’로 법령의 성격을 바꿈과 동시에 교육 과정 전체의 자구 통일, 문장 전개의 일관성 등의 면에서 체제 개선을 했으나, 그 내용 자체에서 근본적인 변화는 없었다.

46) 한국 교육과정·교과서 연구회편, 전제서, pp. 22~24

3) 중학교의 교육 과정 편제상의 특징

① 편제상의 특징

교육 과정의 편제면에서 제 2차 교육과정의 반공·도덕 활동이 없어지고 도덕과가 교과로 독립함으로써, 교육 과정의 구조는 교과 활동과 특별 활동의 이원적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반공·도덕 생활이 도덕 교과로 독립되었다 하더라도, 도덕적 품성을 기르기 위한 교과 외에서의 여러 교육 활동을 배제한 것은 아니었다. 또, 국사도 교과로 독립하였고, 실업·가정과에서 여자 기술을 가정으로 개칭하고, 가정(선택)을 가사로 개칭했다.

교과는 원칙적으로 12개 교과 모두를 필수로 하고, 일부 과목(실업·가정)을 선택으로 한 것은 제 2차 과정과 달라진 점이 없다.

도덕과와 국사과의 신설은 국민적 가치관의 확립과 반공 교육의 방법 전환 및 체계적인 지도, 그리고 민족 주체성에 입각한 자주·발전적 사관 확립을 위한다는 명분하에 독립되었으나, 도덕 생활이 지식 전달로 가능할 것인가, 독립 교과화한 국사 교육이 국수주의적 역사관과 비타협적 사고를 가진 인간을 형성하지 않을 것인가 등의 의문과 함께 사회적 사실과 현상, 변천 개념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 문제 해결 및 국민적 자질을 기르려는 통합 교과로서의 사회과를 파행화(跛行化)시켰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다.

시간 배당면에서는 구과정의 교과서 주 단위로 최소 시간과 최대 이수 시간으로 이수의 폭을 둔 데 비하여, 도덕, 국어, 국사와 1학년 전 과목의 시간수를 고정시켜 놓고 있고, 전 교과의 시간 배당을 연간 총 이수 시간 수로 표시하여 학교장에게 교육 과정 운영 재량을 폭넓게 부여도록 했다.

과목별 시간 배당에서는 실업·가정, 음악, 미술과의 시간이 조금씩 줄었다. 운영 지침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도덕 교육, 국사 교육, 체육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도덕 교육은 도덕과 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 활동과 특별 활동, 기타 학교 교육 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고 건강 증진, 보건 위생, 체력 향상, 안전 교육도 체육과의 학습 활동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 전반에 걸쳐 전개되도록 하였다.⁴⁷⁾

② 부분 개정

1977년 2월 28일에 문교부령 제404호로 부분 개정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위하여 산업체에 중학교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길을 열게 한 것

47) 한국 교육과정·교과서 연구회편, 전게서, pp. 23~25

이다. 그 내용은 교육 과정 ‘운영 지침’에 다음 사항을 삽입한 것이다.

◦ 교육법 제 103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근로 청소년을 위한 특별 학급 및 산업체 부설 중학교는 문교부의 승인을 얻어 이 교육 과정의 편제와 시간 배당 기준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표 IV-7 > 중학교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

과정 \ 학년			1	2	3
도 덕			70(2)	70(2)	70(2)
국 어			140(4)	175(5)	
국 사				70(2)	70(2)
사 회			105(3)	70~105(2~3)	70~105(2~3)
수 학			140(4)	105~140(3~4)	105~140(3~4)
과 학			140(4)	105~140(3~4)	105~140(3~4)
체 육			105(3)	105(3)	105(3)
음 악			70(2)	35~70(1~2)	35~70(1~2)
미 술			70(2)	35~70(1~2)	35~70(1~2)
한 문			35(1)	35~70(1~2)	35~70(1~2)
외 국 어			140(4)	70~175(2~5)	70~175(2~5)
실업 가정	필수	기술(남) 가정(여)	105(3)	105(3)	105(3)
	선택	농·공·상·수산· 가사 중 택일	.	105~140(3~4)	105~245(3~7)
총 이수 시간			1120 (32)	1120~1225 (32~35)	1120~1225 (32~35)
특별활동			70~(2~)	70~(2~)	70~(2~)

- 이 표의 시간수는 학생들이 1년간에 이수하여야 할 기준 시간량을 나타낸 것이며, 괄호()안의 숫자는 1년간의 35주의 수업을 할 경우의 주당 평균 시간 수를 나타낸 것이다.
- 1시간의 수업 시간의 길이는 45분으로 한다. 다만, 계절학교 및 학생의 실정에 따라 50분 또는 40분으로 할 수 있으나, 연간 평균은 45분이 되어야 한다.
- 학교는 이 시간 배당 기준에 따라 계절이나 학교의 실정을 고려하여 적절한 교육과정 시간 배당 계획을 짜야 한다.
- 특별활동에 배당된 시간은 학급활동, 클럽활동, 학생회 활동을 정한 것이므로, 학교 행사, 기타 활동 시간은 별도로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 총 이수 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한다.
- 교과 간 및 교과와 특별 활동 간의 균형을 유지하되, 실습을 요하는 교과는 현장

실습으로 대체할 수 있다.

또, 1979년 3월 1일에는 교육 과정 전체의 체제 통일, 자구 수정, 맞춤법 통일 등 체제 정비를 하여 문교부 고시 제 424호로 공포하였으나, 교육 과정의 법적 성격이 문교부령에서 문교부 고시로 바뀐 것 밖에는 교육 과정 내용의 변화는 없었다.

4) 인문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제상의 특징

① 편제상의 특징

여기에서 개정된 교육 과정의 단위 배당 기준 <표 IV-8>에 따라 제 2차 교육과정과 차이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전체 구조: 교과 활동과 특별 활동으로 전체 구조를 갖추고, 교과 활동은 필수 및 필수 선택 과목과 과정별 선택 과목으로 구성하였다.
- ㉡ 과정 설정: 과정별 편성은 인문 과정, 자연 과정, 직업 과정으로 구분하고, 제 2차 교육과정과는 달리 직업 과정에 준하여 별개의 과정으로 예능, 체육, 외국어 및 기타 과정을 둘 수 있도록 하였다.
- ㉢ 총 이수 단위: 3개년에 이수한 총 이수 단위를 인문 과정 214단위, 자연 과정 222단위, 직업 과정 216단위 등 과정별로 이수 단위를 고정시켰던 것을 개정 과정에서는 구별 없이 204~222단위로 이수 단위에 폭을 두어 융통성을 부여하였다.
- ㉣ 교과목별 단위: 공통 과목, 과정별 선택 교과목에서 이수 단위를 고정시켰던 것을, 교과목별 이수 단위에 폭을 둬으로써 교과 운영면에서의 융통성과 신축성을 부여하였다.
- ㉤ 자유 선택 교과목: 0~6 단위와 자유 선택 교과목을 새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학생의 희망에 따라 철학·교육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표 IV-8>에 제시된 교과목 중에서 선택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 과목 명칭: 교과목에 I, II를 붙여 그 구별에 혼돈이 많았으나,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필수 과목에는 I, 과정별 선택 과목에는 II를 붙임으로써 교과목의 명칭을 명확하게 구분하였다.
- ㉦ 총 과목수: 공통 수학, 물리 II, 화학 II, 생물II, 음악II, 미술II, 산업 일반 및 기초 공학 등 8개 과목을 삭제하였고, 대신에 한문 I, II 등 2개 과목을 신설함으로써 총 41개 과목을 35개 과목으로 축소 또는 통합하였다.
- ㉧ 특별 활동 단위 배당: 교과목 단위에서 할애받아 특별 활동에 충당하여 운영해

왔던 것을 별도로 12단위를 배당하였다.

② 부분 개정

1977년 2월 28일 문교부령 제404호로 부분 개정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㉓ 사회 교과 내에 있는 5개 과목 중 정치·경제 과목은 필수로 과하고, 나머지 4개 과목 중 인문 과정은 전 과목을, 자연 과정은 1과목을 이수하도록 하였다.

㉔ 산업체의 근로 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 학급’과 ‘부설 고등 학교’의 교육 과정에 대한 예외 조치를 규정하였다.

㉕ 특별 활동의 내용을 대폭 개선하고, 특히 학생회 대신 학도 호국단을 운영 육성하도록 하였다.

또, 1979년 3월 1일에는 교육 과정 전체의 체제 통일, 자구 수정, 맞춤법 통일 등 체제 정비를 하여 문교부 고시 제424호로 공포하였으나, 교육 과정의 법적 성격이 문교부령에서 문교부 고시로 바뀐 것 외에는 교육 과정 내용의 변화는 없었다.⁴⁸⁾

5)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제상의 특징

새 교육과정(문교부령 제379호, 1976. 2. 23 공포)은 그 편성 형태에 있어서는 제 2차 교육과정과 비슷하나, 근래의 급진적인 산업 사회화의 양상들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필요로 하는 전문화된 기술·기능인 배출에 부응하게 주안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즉, 많은 신 교과목이 설정되었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최신의 기술·지식들을 반영시킨 점이다. 상업 고교처럼 보통 교과목의 무게가 비교적 큰 학교가 있고, 공업계나 수산·해운계 학교처럼 전문 교과목의 실험·실습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는 학교도 있어, 새 교육 과정에서는 산업계열에 따라서 보통 교과목과 전문 교과목의 총 단위수의 비중에 큰 차이를 두게 된 점 등이 다른 점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인문고의 교육과정과는 달리 교육과정의 첫 머리에 그 계열 학교의 교육 목표를 명시하고 있는 점이다. 이는 실업계 고교가 각각 그 특색을 발휘해야 하는 필요성에 비추어 교육법이나 교육법 시행령에서 분명히 나타내지 못한 것을 문교부령으로 보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⁴⁹⁾

48) 한국교육과정·교과서 연구회편, 전제서, pp. 23~25

49) 대한교련편, 『한국교육연감 '77~'78』, pp. 103~104, 서울:대한교련 외, 1978.

< 표 IV-8 > 인문계 고등학교 교과 단위 배당 기준

교과		과목	단위수	필수및필수선택 교과목단위수	과정별선택 교과목 단위수		
					인문	자연	직업
국민윤리		국민윤리	6	6			
국 어	국어Ⅰ	20~24	20~24				
	국어Ⅱ	8~10		8~10			
국 사	국사	6	6				
사 회	정치·경제	4~6	택2 8~12	공통에서 제외된 3과목 12~18			
	사회·문화	4~6					
	세계사	4~6					
	국토지리	4~6					
	인문지리	4~6					
수 학	수학Ⅰ	14~18	14~18				
	수학Ⅱ	8~14			8~14		
과 학	물리	8~10	택2 16~20		공통에서 제외된 2과목 16~20		
	화학	8~10					
	생물	8~10					
	지구과학	8~10					
체 육	체육	14~18	14~18				
교 련	교련	12	12				
음 악	음악	4~6	4~6				
미 술	미술	4~6	4~6				
한 문	한문Ⅰ	4~6	4~6				
	한문Ⅱ	4~6		4~6			
외국어	영어Ⅰ	10~12	10~12				
	영어Ⅱ	10~12		10~12	10~12		
	독일어	10~12		택1 10~12	택1 10~12		
	프랑스어	10~12					
	중국어	10~12					
	에스파니아어	10~12					
	일본어	10~12					
실업· 가정에 관한교 과	실업	기술(남)	8~10	택1 8~10 18			
		농업	8~10				
		공업	8~10				
		상업	8~10				
		수산업	8~10				
	가정	가정(여)	8~10	18			
		가사(여)	8~10				
직업에 관한 교과목			44~64				44~64
자유선택 교과목			0~6		0~6	0~6	
소계				140~160	44~64	44~64	44~64
교과목 총 이수 단위 수					192~210	192~210	192~210
특별활동			12		12	12	512

◦ 1단위라 함은 50분을 1단위 시간으로 하여 매주 1단위 시간씩, 1학기(18주 기준) 동안에 이수하는 수업량을 말한다. 다만, 야간제 수업을 하는 학생에 있어서는 40분을 1단위 시간으로 할 수 있다.

◦ 위 표에서 배당한 각 과목별 단위수는 3년간에 이수하여야 할 총 이수 단위수를 나타낸 것이다.

<표 IV-9 > 실업계 고교 교육과정 교과 편제 및 단위 배당 기준

보통과목(필수)	단위 수	보통과목(선택)	단위수
국민윤리	6	사회·문화	2~4
국 어	14	세 계 사	2~6
국 사	4	지 리	2~6
정치·경제	2	수 학Ⅱ	4~16
수 학Ⅰ	8	과 학	4~12
과 학	6	(필수에서 이수하지 않은 것)	
(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중 1과목)		음 악	2~4
체 육	6	미 술	2~4
교 련	12	한 문	2~4
		외 국 어	6~24
		(영어·독어·불어·중국어·에스파니아어·일어중 1또는 2과목)	남 4~ 6 여 6~10
이수단위	58	이수단위 8~44 단;공업계 8~32 수산·해운계 8~24	
소계	66~102 (공 업 계: 66~90) (수·해운계: 66~82)		
전문과목	102~156 (공 업 계: 114~156) (수·해운계: 122~156)		
총계	204~222		

보통 과목의 필수 교과목 이수 단위는 58단위이며, 선택 과목에 있어서는 8~44단위로서(공업계와 수산·해운계 고교 외) 66~102 단위이다.

전문 과목에 있어서는 총 102~156단위로서 공업계가 114~156단위, 수산·해운계가 122~156단위로서, 이는 실습이 중시되고 기술 기능 수련에 비중을 더욱 크게 둔 것이 특징이다. 특별 활동은 총 이수 단위의 5%인 12단위 이상이 배당되어야 한다.

특히 근로 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부설 고등학교에 대한 특별 조치로서, 다음과 같은 규정을 새로 둔 것은 특기할 만한 일이다. 즉 ① 교과목 이수단위 총계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한다. ② 보통 과목 중 필수 과목은 이수 단위 수 그대로 하고, 선택 과목은 8~12 단위를 확보하며, 전문 과목은 70~78단위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은 특별 조치는 근로 청소년들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기 능력을 충분히 기

르며 발전시킬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서, 이는 개개인의 경제적인 면뿐만 아니라 인도주의적 면과 사회 기강이 바로 잡혀져서 사회 문제화 되어가는 탈선 경향을 순화시키는 일역도 되며, 나아가서는 국민총화면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게 하는 획기적인 조치인 것이다.

(3) 제 3차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1) 편성 · 운영의 개념

제 3차 교육과정기 때에는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이란 용어가 흔히 쓰였다가 또는 보편화된 개념은 아니었다. 다시 말해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대한 용어는 제 6차 교육과정 고시 때부터 본격화된 용어라 할 수 있다.⁵⁰⁾ 여기서 교육과정기의 사정을 살펴보면, 제 2차 교육과정 때에는 ‘교육 과정의 운영’ 제목 하에 ‘지역성의 강조’를 제시하였는데 “교육과정이 국가 수준으로 제정된 것은 전국 학교가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교육을 하는 것을 피하고 지방 실정에 따라 국가 수준을 중심으로 제각기 다른 교육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학교는 국가 기준에 의거해서 교육 과정을 재구성하여야 하며, 이 재구성과 운영에는 그 지방의 지역성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중략>.

“구 교육과정(제 1차 교육과정을 가리킴) 시간 마다 기준령만 보더라도 국민학교의 시간 배당은 고정시키지 않았고,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필수 교과와 선택 교과를 두고 상급학교로 갈수록 선택 교과의 폭을 넓게 하였지만, 실지 사용되는 각급 학교의 교과 시간 배당은 거의 같은 것으로 고정되어 버렸고, 각 교과의 교육 과정도 일반적인 지도 요향을 제시하였건만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교과서에 기재된 내용을 맹목적으로 전달할 뿐, 지역성을 살린 교육은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는 지역 사회 학교를 건설하여야 할 것이다.”⁵¹⁾고 강조하였다.

제 3차 교육과정(초·중·고·실고)을 보면, ‘교육과정 운영 지침’(실업고등학교는 ‘교육과정 운영상의 유의점’으로 제시)으로, 제 4차 및 제 5차 때는 제 3차 때와 마찬가지로 ‘운영지침’이라 하였으나, 이 제목하에 계획·지도·평가·기타를 두어 제 3차 때에 비해 세분화하였다. 제 6차 때에는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본 지침’을 제시하여 편성·운영 모두 시·도 교육청과 학교에 그 지침을 주고 있다.⁵²⁾

50) 제 6차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1992-19호, '92. 10. 30), pp.10~17. 서울: 대한교과서(주) 1992. 11.

51) 문교부,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 문교부령 제121호』, pp. 18~19, 서울: 대한교과서(주), 1963. 9.

- 52) 교육과정 연수자료3,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작성 요령」, ‘머리말’ 중에서, 서울: 교육부, 1993. 5.
<전략> 그러나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은 추상적·요강적·거시적 수준의 보편적 기준이므로, 그것이 교육현장에서 의미있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역과 학교 수준에서의 전문적이고 미시적인 가공작업을 필요로 한다. 즉, 실제 교육에 맞도록 구체화·적합화·적정화시키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교육과정 운영에서 이 작업을 거의 외면하여 「의도된 교육」과 「실현된 교육」 사이에는 커다란 괴리가 생기게 되었고, 국가 수준 교육과정은 선언적·형식적 문서 계획에 그치고 말았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1992년에 고시한 제 6차 교육과정은 지금까지의 「주어진 교육과정」, 「찾지 않는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보지 않으면 안되는 교육과정」,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이 되도록 시·도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 작성과 학교 교육과정 편성을 기본 지침에 명문 규정으로 제시하여 의무화하였다. 이것은 교육과정 정책의 획기적인 변화인 것이다. 이러한 정책 변화에 따라 지금 각 시·도는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개발하고 있으며, 학교는 교육부의 교육과정과 시·도의 편성·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다. 이 자료는 이러한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위상별 역할 기능의 분담 수행 과정에서 요구되는 이론적 기저와 실제 작업 지침을 제공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후략>.

2) 제 3차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제 3차 교육과정 때는 ‘편성’에 대한 독립된 개념이 없었으며, 다만 ‘운영지침’에서 교과활동과 특별활동에 대해 제한적이지만 ‘편성’의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먼저, 운영지침 가항에서 ‘학교는 이 영에 따라 지역 사회와 학교의 실정 및 학생의 심신 발달에 적합한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에서 ‘운영 계획의 수립’은 교육과정의 편성을 다분히 내포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나항에서는 ‘학교는 이 영에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교과나 특별활동에서 제시하는 모든 내용을 이수시켜야 한다’고 하였으며, 그 밖에도 ‘운영지침’의 여러 항목에서 교과 활동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야간 수업을 하는 학교에서, 또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을 하는 중학교(고등학교)에서는 이 영에 제시하는 교과 활동과 특별활동의 내용을 모두 이수시켜야 한다’고 제시하므로써,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지침을 제공했다고 보아야 한다.⁵³⁾

어쨌든, 제 3차 교육과정(제4차·5차 교육과정도 마찬가지임)은 제 6차 교육과정때와는 현저한 차별성 있는 국가 수준만을 강하게 풍겨주는 차원의 지침이었고, 특히나 시·도에서의 재구성이나 학교에서의 구체성 있는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지침은 제시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⁵⁴⁾

53) 중학교 교육과정(문교부령 제325호, 1973. 8. 31. 공포), p. 12, 서울: 교학도서(주), 1973. 10.

54) 이경섭, 『한국 현대 교육과정사 연구(상)』, pp. 499~500, 서울: 교육과학사, 1977. 12.

-먼저 각급학교의 운영지침에 나타난 학문 중심적 특징을 보면, 여러 특징 가운데서 특히 ‘어떤 경우에서도 각 교과의 기본 내용은 반드시 학생들로 하여금 이수하도록 한다’는 것과 각 교과의 계통성과 그 학습 내용의 계열성은 필히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교육과정 운영에 각 교과의 학문적 내용의 논리적인 계열성이 분명하게 반영되어야 함을 뜻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제 3차 교육과정 시행에 앞서 중앙교육연구소(현 한국교육개발원 전신)가 주최하고 문교부 후원으로 1972년 11월 25일과 26일 양일간에 ‘제 3차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세미나’를 서울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개최한 일이 있다. 여기서 논의된 내용을 통해서도 ‘편성·운영’보다는 ‘운영’ 개념이 앞서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본 세미나의 목적은 ① 새 교육과정의 정신을 재인식하고 이의 방향을 재확인 ② 새 교육과정의 실제 실천 방안 모색 ③ 새 교육과정을 받아드리고 반영하는 일선의 교육태세 확립 ④ 본 연구소의 목표지향 교수 효율화 계획에 새 교육과정 정신을 바르게 반영하여 본 계획의 발전을 모색하려는 것이었다.

본 세미나에는 문교부 장학관, 편수관 전원, 각 시도 교육위원회 초등교육과장, 새 교육과정 심의위원, 본소 연구진 등 45명의 광범위한 교육계 인사들이 모여 진지하게 새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전략을 토의하였다.

세미나의 첫날에는 ‘새 교육과정 개편의 기본 방향’에 대해 수석 편수관 정세문씨의 발제 강연과 ‘새 교육과정의 특징과 운영 방안’이란 제목으로 새 교육과정 심의위원장 홍웅선씨의 주제 강연이 있었고, ‘새 교육과정의 교과별 특징과 운영 방안’에 대하여 교과별로 분과 토의가 있었다. 둘째 날에는 ‘새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전략’이란 주제로 패널 토의가 열렸다. 분과 및 패널토의에서 진지하게 논의된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새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편에 따라 대두되는 문제로서 ① 새 교육과정을 다룰 교사들에 대한 재교육의 부족 ② 현행 교과서와 새 교과서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지도상의 난점 ③ 새 교육과정 정신을 구현시킬 수 있는 지도 자료의 확보에 대한 재정적·시간적 애로 ④ 새로운 학력관에 의한 평가방법 개발의 시급성 등이 지적되었다.

둘째, 새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으로서, ① 새 교육과정의 목표를 이해하고 적절한 지도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 전 교사들에 대한 적절한 사전 교육 ② 새 교육과정의 기본 정신과 목표, 적절한 지도 방법을 제시한 각종 지도 자료의 개발 보급 ③ 탐구과정 중시에 따르는 새로운 교육방법 및 교수 기술의 개발을 위한 연구와 보급 등이 선행되어야 새 교육과정의 성공적 운영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⁵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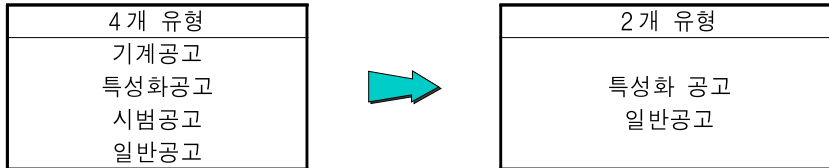
제 3차 교육과정기 후반기에 교육과정 편성·운영 사례 중 ‘공업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즉, 여기서 발견되는 사항은 현행 교육 과정상의 ‘목표’와 ‘단위 배당 기준’ 및 ‘운영상의 유의점’ 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55) 강신웅, 『중앙교육연구소 20년지(1953~1973)』, pp.250~251, 서울: 중앙교육연구소, 1973. 3.

는 점이다.

① '80년도 공고 교육개선(80. 4. 22)에서 공고 교육목표 및 공고 체제 정비 및 내실화 연건을 보면 다음과 같다.

- 교육 목표: 산업 현장의 단기적 수요에 충당하는 단능(單能) 기능인 양성에서 산업 현장의 장기적 수요에 대처하는 인력을 양성한다.
- 체제 정비 및 내실화 여건



② 기계 공고 운영 실태('81. 4. 30 기준)

- 교육과정 운영: 공고 교육개선(80. 4. 22) 방안 시달 후 실기 위주의 비정상적인 운영에서 정상적 운영으로 개선되고 있다.
-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의 비율

개선 방안 시달 이전		개선 방안 시달 이후		현행 교육과정령	
보통교과	전문교과	보통교과	전문교과	보통교과	전문교과
30%	70%	30~43%	65~57%	30~44%	70~56%

- 전문교과 중 이론과 실습의 비율

개선 방안 시달 이전		개선 방안 시달 이후		현행 교육과정령	
이론	실습	이론	실습	이론	실습
30%	70%	35~45%	70~55%	30~40%	70~60%

교육과정 운영 조치: 현행 교육과정령에 의거 기초 교과과 폭 넓은 기초 실습 강화토록 재지시하고, 기능 자격 취득을 학생 희망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취득토록 하였으며, 새 교육과정(제4차) 운영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다.⁵⁶⁾

3) 제 3차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상의 문제점

학교 운영의 의의는 교육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으며, 그것의 구체화는 교육 과정을 전개함으로써 행하여진다. 따라서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은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그래서 「교육과정 중심학교」라는 말이 깊은 의미를 지닌다. 그런데 제 3차 교

56) 문교부 산업교육국(1981. 6. 25) '공고 교육의 정상화 방안' 중 일부 내용 발췌.

육과정기에는 무엇이 문제였는지에 대해 서술하기로 한다.

먼저, 교육과정이 학교 운영과 교육의 전과정에 연결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 즉, 교육과정이라는 두툼한 문건은 현장 교사들에게 외면을 받고 있으며(주어지지도 않지만) 장학과 평가에 간요하게 활용되지도 않는다. 또 교육과정이 ‘목표’, ‘내용’, ‘방법’ 등을 안내하는 교육 계획서라면 그것은 교원, 연구사, 장학사들에게 매우 소중한 자료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육과정이 현장에서 외면 당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현대적 교육관리체제, 학교경영체제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데 있다. 교장, 교육장, 교육감은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행정 단위의 책임자이다. 그런데 교육과정에 명시된 목표가 시·도별로, 군별로 그리고 학교별로 어떻게 편성·운영되고 있는지에 관한 체계적인 평가자료의 수집·분석·발견·처방의 노력이 별로 없었던 것이다.

두 번째, 교육과정 운영의 이중 구조이다. 국가 사회적 요구와 필요를 반영시키는 일은 교육과정 설계에 있어서 하나의 원리이기도 하다. 우리의 경우, 그 동안 전통적인 학문 분류 방식에 의한 교과 편제 중심의 교육 과정은 지속적인 도전을 받아왔다. 민주시민 교육, 반공 교육, 안보 교육, 안전 교육, 인구 교육, 새마을 교육, 환경 교육, 자연 보호 교육, 국민 정신 교육 등이 학교 교육에 포함되기를 국가 사회는 계속 요청해 왔다. 그 결과로 어떤 것은 교육과정 속에 잘 융해된 것도 있으며, 또 어떤 것은 독립 교과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도 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그러한 필요는 교육과정 개편의 긴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장학 행정지시로 학교에 전달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접한 학교는 현재의 교육과정 운영은 계속하면서 추가로 그들의 지시 사항을 교육 현장에 실천하는 노력이 있었던 것이다. 말하자면 교육과정 운영과 장학행정 지시에 의한 학교 운영의 이중구조가 발생하는 셈이다. 이러한 이중 구조의 문제는 교과목 진도의 부진과 교사의 사기 저하 등으로 현행 교육 과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할 수 있다. 즉, 제 3차 교육과정 시기에는 이러한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이중 구조의 문제 때문에 결과적으로 교육력을 약화시켰다고 판단된다.⁵⁷⁾

함중규 교수는 제 3차 교육과정은 편제와 운영면에서 많은 문제가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57) 한국교육개발원편, 「학교 교육 제도 및 교육과정 발전 방향 탐색」 ‘새 시대의 교육과정 발전 방향,’ pp. 56~57,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81. 4.

즉,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서 단위별·계열별 선택과정은 '63년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직도 운영상의 합리성을 기하지 못한 채 명목상의 편제로 그치고 있으며, 이 밖에도 교육과정 운영면에서 「법」이나 「영」에 위배되는 사례가 흔하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면, 우리 나라 초·중·고등학교의 연간 수업일수는 240일인데, 교육과정은 주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선택교과는 명목상 존재할 뿐 학교당국에서 선택하면 학생들의 경우는 필수 일변도로 굳어지게 된다. 과열과외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법의 테두리를 떠나 조기 과외수업이 운영됨으로써 시간당 기준이 위면되고 있으며, 인간교육을 강조한다면서 법적 근거도 없는 '자유학습의 날'이 운영될 뿐만 아니라 이 같은 학습이 오히려 매스컴의 각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중략> 요는 교육의 원리나 교육과정 편제상의 원칙보다는 때로는 당국의 시책 방향에 따라 좌우되고, 또 운영면에서도 '법'이나 '영'에 위배되는 실례가 노정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교 교육에서는 다음 사항에 역점을 두고 운영돼야 할 것이 요망된다.

첫째로, 교육과정은 그 유형이나 내용이 어떠한 형태를 띠는 것이든지를 불문하고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성립된다. 따라서 교육과정은 “가르쳐야 하는 것이든가 또는 전달해야만 하는 것”⁵⁸⁾이라 하여 목적시해서는 안 된다. 목적은 어디까지나 학생의 성장·발달에 있는 것이고 교육내용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학교 교육은 모름지기 이 모순을 시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어떠한 사람을 육성할 것인가에 목적이 있음을 재확인하고 인간교육의 이념이 직결될 수 있는 운영방안을 누려야 한다.

둘째로, 학교교육은 학력(學歷)주의 인생을 지양하고 기초적인 지식과 다양한 가변적인 능력을 신장시키기에 주력해야 한다.<중략> 여기에서 교육과정의 운영은 졸업증이나 간판을 얻기 위한 안이한 대량 생산적인 교육을 지양하고 근간적인 기초지식과 다양한 가변적 기초능력을 갖추 수 있는 인간육성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셋째로, 교육과정은 부단히 개정되어야 하며 그 운영은 점진적인 성장·발달을 추구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후략>⁵⁹⁾

58) H. R. Douglass, *The High School Curriculum*. (New York: The Fernald Press Co. 1947) p.24

59) 한국교육개발원편, 「교육과정의 변천과 학교 교육의 방향」(함종규), pp. 197~200,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81. 4.

(4) 제 3차 교육과정 개발시의 편수국 직제 및 편수활동

본 고에서는 제 3차 교육과정 개정·공포 때부터 제 4차 교육과정 개정 때까지, 즉 1973년부터 1981년 12월 사이에 문교부 편수국의 기구와 직제의 변천 과정을 정리하고, 또 제 3차 교육과정기에 재직한 장·차관, 편수국장, 편수관 및 편수행정관 등의 명단을 정리해 놓기로 한다(부록 게재). 이들은 이 시기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교육 과정 개정(제정) 작업에 참여한 사실이 우리 나라 교육내용 행정에 발전적으로 기여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 법적 기구인 교육과정 심의회 위원 명단(운영위원회, 학교별 소위원회 등, 부록 게재)을 소개하기로 한다. 다만, 교과별 위원회 명단은 연도별로 300~500명이 되므로 그 양이 많아 생략한다.

1) 편수 행정 조직

한국의 각급 학교 교육과정은 교육법 및 교육법 시행령이 정한 바에 따라 문교부 장관이 부령으로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문교부 내에서는 장관을 보좌하여 편수국장이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있다. 즉, 교육과정의 개정 및 제정과 국정 교과서의 편찬·발행·공급, 그리고 교과서의 검인정 등 교육과정과 교과서 행정에 관한 업무는 편수국에서 행하게 되어 있다.

제 3차 교육과정 개정(제정) 당시인 1973년 문교부 직제⁶⁰⁾의 편수국⁶¹⁾은 편수관실, 편수과, 발행과가 있었으며, 정원으로는 편수국장 1명과 비서 1명이었고, 편수관실은 정원 편수관⁶²⁾ 20명이었으며, 편수과는 과장, 사무관, 주사 등을 포함하여 8명이었고, 발행과는 과장, 사무관 주사 등을 포함하여 4명으로 합계 정원 34명이었다. 문교부 편수국 기구 및 분장 사무는 <그림 IV-2>와 같다.

그리고 <표 IV-10> 제 3차 교육과정기 편수국 등 인원 현황에 따르면 편수관은 제 3

60) 문교부 직제(1973. 3. 28 대통령령 제6595호) 제1조(직무): 문교부는 교육·과학·체육 및 국정 교과서의 편찬과 교과용 도서의 검인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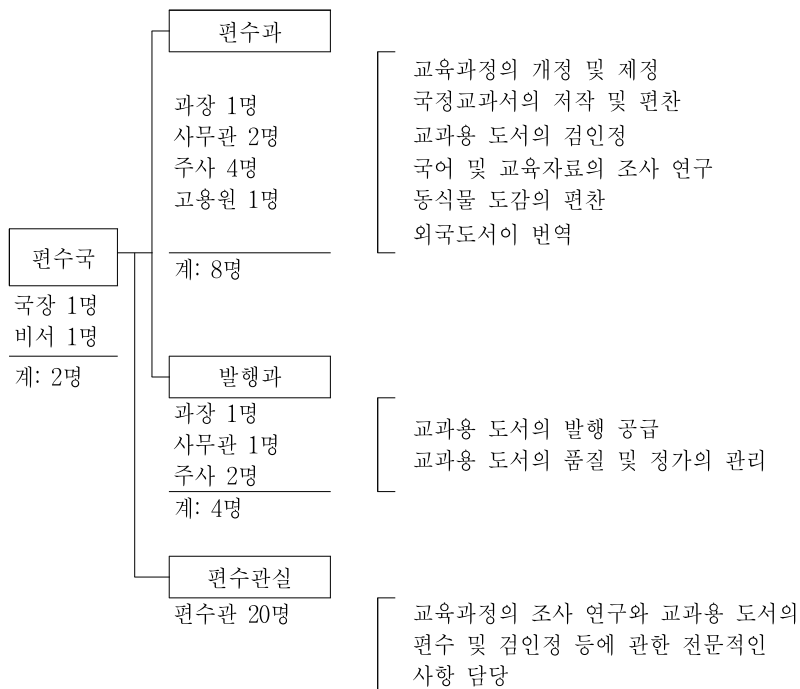
61) 자료: 문교부 편수국 발행(1973. 7) 유인물, '교육 과정과 교과서 행정', p. 2에 것 전재함.

62) ○ 편수관(編修官)이란, 고려 시대 1356년(공민왕 5년)에 제정된 사관(史館)의 벼슬로서 3품 이상의 벼슬아치가 겸하는 극수찬관(克修撰官), 극편수관(克編修官), 겸편수관(兼編修官) 등의 벼슬아치가 있었다. 당시 사관은 1362년(공민왕 11년)에 원래대로 춘추관(春秋館)으로 고쳐졌다. (오희복, 『우리나라 역대 국가들의 관료 기구 및 관직명 편람』, p.440, 461, 서울: 여강출판사, 1999. 11)

○ 조선 시대의 춘추관은 현행 당시의 정사에 대한 기록을 맡은 관청으로서 편수관은 정 3품으로부터 중 4품까지의 벼슬아치가 있었다. 이같은 관직은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의한 이조시대 관직표 동반(東班)에도 나타나 있다(한국도서관학연구회, 『관안』, 별지 '이조시대 관직표' 중에서 서울:보진재, 1971. 12).

차 교육과정 중반기인 1977년까지는 20명 이내였으나 후반기인 1978년부터는 26명에서 39명, 38명으로 무려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이처럼 편수관 인원이 증가한 것은 편수 업무의 중요성과 편수직제 개편에 따른 분장 업무의 영역 확대 등이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 그림 IV-2 > 문교부 편수국 기구 및 분장 사무



편수국 전체 인원을 보면, 1974년도에 56명으로 그 숫자가 제일 많은데, 이때는 교육 과정 및 교과서 개편 과정에서 필요한 임시직을 10여명 채용한 것과 파견 교사(편수국에 5명만 실제근무, 나머지 5명은 타부서 근무) 숫자 때문이다. 이런 실정을 감안할 때, 편수국 직원은 1973년에 34명이 최저였으며, 그 뒤는 대체로 40명 선을 유지하다가 중반기에는 제 4차 교육과정 개편 작업 등 업무 증가로 인해 47명으로 증가하였다.

2) 편수국 직제의 변천 과정

1970년대에 들어와서는 정부 행정 부처에 일괄적으로 담당관제 도입이 시도되어 몇 차례의 정부 조직법과 문교부 직제가 개편되었으나 편수국의 직제는 계속 유지되었고, 1976년 12월 31일 문교부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 8,400호)으로 중화학 공업 교육 비중의 증대로 공업계 고등학교 교과서 편찬을 위한 편수 요원이 대폭 증원되기도 하였다. 그

러나 급격한 경제 성장으로 고급 인력에 대한 수요 급증에 따라 대학의 신설·대학생 증원 등 대학의 양적 팽창으로의 정책 변화가 시작되었고, 한편 급격한 사회 변천에 따라 역작용으로 나타나는 사회 불만 요소들로 인해 이른바 학원 소요 문제가 크게 대두되어 소요 학생의 지도를 위한 문제가 대학 교육행정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 수 없었다.

<표 IV-10> 제 3차 교육과정기 편수국 등 인원 현황

연도별 부서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편수국폐지)	1979-1980 (편수국부활)	1981 (장학편수실신설)
편수국장	1	1	1	1	1		1	편수관리관1
편수관	20	19	20	18	19	26*	39*	38*
편수과정(직원)	1(7)	1(13)	1(6)	1(8)	1(8)	1(2)*	1(2)	1(7)
발행과정(직원)	1(3)	1(5)	1(3)	1(3)	1(4)	1(2)*	1(1)	
과건교사		10	5	5	5			
기 타	1(비서)	6	4(교정)	4(임시)	6 (전문위원3)	7 (전문위원2)		
교육과정 담당관							1(4)	1(4)
인문교육 담당관						1(5)	1(8)	
사회과 교육 담당관						1(4)	1(6)	
과학 교육 담당관						1(14)	1(17)	
교과서 행정 담당관						1(6)		
인문과학 편수관								1(7)
사회과학 편수관								1(6)
자연과학 편수관								1(17)
합 계	34	56	41	41	45	40	45	47

*자료: 문교부 편수국 업무현황('73~'78) 및 한국교육연감('77~'82) 중 '문교부 본부인사' 등을 근거하여 작성한 것임.

보기 1. *표(1978~1981) 중 편수관 숫자는 담당관·편수관 숫자와 중복됨.

2. 1978년 교과서 행정 담당관 () 안의 6명은 편수관·발행과 직원 숫자로서 중복됨.

3. 1978~1981년 () 안의 직원 숫자는 고용원 및 임시직 불포함 숫자임. 다만, 1978년도 기타 숫자는 별도임.

이와 같은 일련의 대학 교육에 대한 행정 수요의 급증에 대처하기 위한 행정 체제 확립이 불가피하게 됨에 따라 1978년 3월 14일 문교부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8,889호)으로 종전의 2실 7국 21과 13 담당관을 2실 8국 25과 15 담당관으로 대폭 확대 개편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고등교육국을 분리 확대 개편하고, 편수국을 폐지하여 장학실에 통합하고 장학실장 밑에 인문교육 담당관, 사회과 교육 담당관, 과학교육 담당관, 교과서행정

담당관을 설치하여 편수 업무를 담당하게 했다.

그 후 1979년 10·26 사태 이후 정치·사회적으로 통제에서 벗어나 민주화를 요구하는 등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로 각 부분에서 많은 부작용과 시행착오를 겪었다. 특히, 교육계 일각에서는 학원의 자율화가 강력하게 주장되고, 학원 자율화의 물결을 탄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학생 소요 사태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여건과 정치적 요구에 따라 대학의 자율화로 교육 행정 조직에도 개편이 따랐는데, 1980년 2월 27일 개정(대통령령 제9,788호)된 문교부 직제는 대학 학사 지도를 주기능으로 하는 학술 진흥국을 폐지함으로써 대학생 지도는 대학 자율에 맡기고, 장학실의 담당관제를 폐지하고 업무성질별로 분담하는 담당 장학관제로 변경하여 장학지도 기능을 강화하고자 6개 장학관을 두었다.

특히, 장학실에는 편수 업무를 담당하던 담당관제를 다시 편수국으로 부활하여 편수과와 발행과를 두고, 교과 영역별로 교육과정 담당관, 인문교육 담당관, 사회교육 담당관, 과학교육 담당관을 설치하였다.

제 5공화국 헌법이 1980년 10월 27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정치 질서와 사회 안정을 되찾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1981년 1월 19일 문교부 직제가 개정 공포 되었는데, 종전의 심의관을 폐지하고 교육정책실을 신설하였다. 곧이어 “국가 보위 비상 대책위원회”는 학교 교육의 정상화와 과열 과외 해소 방안 등을 포함하여 7·30 교육개혁 조치를 단행하였다. 그리고 1981년도 정부 조직 방침은 제 5공화국의 출범에 따른 새 국정 지표의 효율적인 추진 체제를 구축하고, 변모된 80년대의 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현행 정부 조직 체제상 불합리한 요소를 개선하여 새 시대 새 풍토에 맞는 ‘간소한 정부’를 구현하였다.

이에 따라 새 시대 교육지표에 알맞은 행정 체제를 갖추기 위해 1981년 11월 2일 문교부 직제 전문 개정(대통령령 제 10,535호)으로 3실 6국 26과 19담당관으로 개편하였다. 여기서는 장학실과 편수국을 통합하여 장학편수실을 신설하였고 편수총괄관, 교육과정 담당관, 인문과학 편수관, 사회과학 편수관, 자연과학 편수관을 두어 편수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⁶³⁾ 다음은 정태수 전 문교부차관이 편수국 직제와 관련한 이야기를 게재한다.

63) 정영선, ‘교육부 편수국 직제 변천 과정’, 『교과서 연구 제25호』, pp. 143~144, 서울: 한국 2중 교과서협회, 1996. 7.

*정태수, ‘문교부의 태양’ 『편수국』 회상기와 새 제안, 『편수의 뒷안길 제1집』, pp. 129~131,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1. 12.

‘문교부의 태양 「편수국」 회상기와 새 제안’ 정태수*

1981년의 실패

필자가 문교부에 재직하고 있던 1981년의 일로 기억된다. 문교부 기구 개편작업에 착수한 일이 있었다. 이 때 필자는 차관직에 있었기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담당할 국, 즉 편수국을 문교부의 수석국에 두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이 발상은 문교부 역사상 처음 있던 일로, 일반 행정 공무원측으로부터는 돌출발상으로 이질감을 느끼게 한 것 같았고, 장학직 공무원측으로부터는 그 때까지의 장학우위론에 배치된다 하여 거센 반발을 받았다. 전통적으로 내려온 장학관실의 권위에 도전하였다는 패썹죄까지 범하게 되어 뒤에서 쑥덕공론이 많았다.

그러나 우리 내부의 다툼은 문제시되지 않았다. 조정권을 가진 총무처의 힘에 휘말리고 만 것이었다. 그 결과, 「1부처 5개국 원칙」이라는 감축 방침에 눌려 「장학편수실」이 생기고 말았다. 이때의 고배는 지금에 와서도 입에 쓴맛을 느끼게 한다. 그런데 이 판에도 필자는 편수국을 앞세우기 위해 「편수 장학실」로 하는 것이 어떠냐고 소위 「지침」을 내려봤다. 이에 대한 장학실의 반응은 그전보다 더 거세어 회오리 바람이 있었다. 그렇다고 하여 편수 쪽 사람들의 호응도 별로 보이지 않았다. 마치 여자 우위를 주장하다가 남자측의 반발은 물론이고, 여자측의 협력도 받지 못한 것이 비유되었다. 필자는 당시 막강한(?) 힘이 있었지만 일패도지하여 후퇴하고 말았다. 그러나 이 주장은 교육과정 담당관을 신설하는 데만을 효과를 나타나게 되어 김상태 장학관을 선발하여 앉혔다.

철학 없는 교육부의 조직

사실, 그 때의 필자의 생각을 늦게나마 지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교육행정은 교실(교육현장)의 효과적 운영을 돕는 것이 그 목적이다. 교육을 위한 교육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제도의 개혁도 궁극적으로는 교실을 개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즉, 교실 개혁을 위하여 교육 제도 개혁을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교육행정 기관 안에서도 교육목표 행정(교육과정부)이나 교육내용 행정(교과서부, 장학부)은 교육조건 행정(보통교육국, 대학국 등의 관리 행정부분의 부서)보다 우위에 있어야 한다. 즉 실·국 조직의 서열은 교육목표 행정→교육내용 행정→교육방법 행정→교육조건 행정의 순으로 배열되어야 한다. 이러한 줄거리였다. 그리하여 필자는 직원연수 때에는 “교육과정은 문교행정의 태양, 교과서 편수 행정과 장학행정은 제 2차 위성, 그 밖의 각국은 행정, 재정, 시설 등을 계획하는 제 3차 위성, 이러한 태양계의 구조처럼 문교부가 역할을 분담해서 협동해야 한다.”는 줄거리로 허공에 궤도를 둥글게 그려 가면서 설교식 연설도 가졌으나, 그 때 표면으로 동조해 준 사람은 별로 보이지 않았다. 안팎 곱사등이가 된 필자는 결과적으로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은 「장학」·「편수」실이라는 거대한 기형아를 만들고 말았다.

<중략> 각설하고……, 필자는 지금도 교육부의 철학 없는 나열식 기구에 불만을 갖고 있다. 교육부의 기구는 전통적으로 각급의 교육 단계별 국 조직을 주(主)로 삼고, 각종의 특별 기능별 국 조직을 종(從)으로 삼아 순차 나열하는 방법을 써서 짜 놓고 있다. 평면 조직에 불과하며 입체감이 없다. 이러한 배열 방법은 행정 편의주의적인 관점에서 짜여진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그리고 그것이 행정 내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문제의식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밖은 그렇지 않은 것이 세계적인 현상이다.

< 표 IV-11 > 문교부 편수국 직제 변천과정(제 3차 교육과정기)

연 월 일	법령	내용	비고
1973. 3. 28	대통령령 제6595호	· 편수국장의 직급을 장학관으로 함.	문교부 총 정원 285명
1976. 12. 31	대통령령 제8400호	· 편수국장을 장학관에서 이사관, 부이사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함. · 편수요원 증원 14명(교육연구관4, 교육연구사10)	총 정원 334명
1978. 3. 14	대통령령 제8889호	· 2실 8국 25과 15담당관으로 개정 · 기구 개편 -담당관제 신설: 교육연구 담당관, 인문교육담당관, 사회과교육 담당관, 과학교육 담당관, 교과서 행정 담당관. -편수국 폐지 -편수과·발행과 폐지	총 정원 407명 · 종전의 장학실 소속 장학관은 교육연구 담당관만 존치되고 나머지는 8개 실국에 분산 배치했음.
1980. 2. 27	대통령령 제9788호	· 2실 8국 30과로 개정 · 기구 개편 -편수국 신설 ⁶⁴⁾ -편수과·발행과 신설 -담당관제 신설: 교육과정 담당관, 인문 교육 담당관, 사회과 교육 담당관, 과학교육 담당관	총 정원 519명
1981. 11. 2	대통령령 제10535호	· 3실 6국 19과, 26과로 개정 · 기구 개편 -장학실과 편수국을 통합, 장학편수실로 하여, 장학편수실장 밑에 편수 총괄관, 교육과정 담당관, 인문과학 편수관, 사회과학 편수관 및 자연 과학 편수관을 두어 편수 기능을 담당하게 함.	총 정원 531명

자료: 문교부, '문교부 직제 연혁', pp. 955~959 중에서 편수국 관계 자료만 발췌, 「문교 40년사」, 서울: 문교부, 1988. 6.

그 실패 후 10년이 흘렀다. 그 때 만약 안으로부터의 압력(주로 장학진의 압력)을 이기고, 또 밖으로부터의 압력(총무처를 대표로 하는 정부방침)을 다 물리쳐서, 교육과정실을 독립시켜 교육부의 수석국으로 하고, 편수국과 장학실을 각각 제1위성, 제2위성의 위치로 제자리를 찾게 했더라면, 지금에 와서는 제2의 기구 개편을 다시 발진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느낀다, <후략>

64) 편수국 분장 사무: 편수국에 편수과·발행과를 두고, 국장 밑에 교육 과정 담당관·인문 교육 담당관·사회과 교육 담당관 및 과학 교육 담당관 각1명을 둔다. 국장은 이사관, 부이사관 또는 장학관으로, 담당관은 장학관,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편수과는 ① 교과용 도서의 편찬 및 건인정, ② 국사 편찬 위원회 및 한국 학회의 지도·감독, ③ 학습 참고서 자율 단체의 지도·감독, ④ 기타 국내 다른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발행과는 ① 교과용 도서의 정가 사정, ② 교과용 도서의 발행 공급

교육 과정 담당관은 ① 교육 과정의 개선, ② 교과서 개발 기본 계획의 수립

인문 교육 담당관은 ① 국어 및 한국 교육, ② 외국어 교육, ③ 예능 및 체육 교육 사회과 교육 담당관은 ① 사회과·역사·지리 교육, ② 반공·도덕 및 국민 윤리 교육

과학 교육 담당관은 ① 수학·물리·화학 및 생물 교육, ② 지구 과학 교육, ③ 농업·공업·상업·수산·해양 및 가정 교육을 담당한다.

3) 편수 활동

① 편수관실

편수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편수국 조직에서 편수관실의 위치는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문교부 편수국에는 편수관들의 집단 근무를 위해 편수관실을 두고 수석편수관제를 마련하고 있었다. 그러나 편수관실이 공식적으로 직제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편수과와의 업무 및 책임 한계가 명확하게 구별되지 못했다. 이런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편수관실의 직제화가 자주 논의되었다. 편수관의 직무내용과 편수과와의 직무 내용이 질적으로 보아 차이가 있으며, 그 책임의 중요성이 크게 인식되고 있음을 비추어 편수관실을 장학관실과 같은 독립된 기구로 직제화하여 능률적인 편수행정을 기해야 한다는 현실인식이 강하게 논의되었었다.

한편, 편수관의 정원이 20명(1970~1977)으로는 초·중·고등학교 및 실업계 고등학교의 국정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의 편찬, 중등학교 교과서의 검인정 및 각급학교 교육과정의 조사, 연구 및 자료 수집 등의 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특히 교과서의 1교과당 1인도 안되는 정원으로서 편수업무를 담당하기가 어려웠으며, 그래서 편수관의 기능을 교육과정 담당과 교과서 담당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법정 정원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 편수관의 업무 중 교과서 편찬에 필요한 각종 자료 수집과 교정 사무 및 교과서 사열 등에 관한 사무적 업무를 보조하는 보조원을 편수관 밑에 적어도 1인 정도는 두게 하여 소기의 편수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었다.

이에 대해 문교부 수석 장학관 심태진씨는 그의 저서 '교육 단상'(1971. 4)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문교부 내 공무원 중에서 일반 행정 공무원과는 엄격히 구별되고, 이에 부합된 처우를 받아야 할 또 하나의 전문직 공무원은 편수관이다. 편수관은 장학관과 함께 일반직 공무원이 감당할 수 없는 특수한 분야의 전문가요, 일선 교육의 성패를 좌우할 중대한 직책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편수관은 장학관과 같이 별정직 교육 공무원으로 하여 그 질의 향상을 기하는 한편, 직제상으로도 편수위원회식 제도로 하든가 장·차관 직속하에 편수실을 두든가 하여 교육과정 개발과 교과서 편찬 사열업무 등에 전념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할 것이다.

② 편수관 명단

가. 교육과정 개정(제정) 초기에서 공포 때까지(1969. 9. ~1973. 8)

문교부는 1969년 9월부터 각급 학교 교육과정의 전면적이고 단계적인 개정에 관한 기

본 계획을 세우고 우선해서 국민학교와 실업 고등학교 등의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사전(기초)연구를 본격화하였는데. 이 시기의 편수관은 모두 20명이었으며, 이들 20명이 문교부 장·차관, 국장 등을 제외한 인적 조직(실무종사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1969년 9월 교육과정 개편 작업 당시의 편수관은 최영복(수석편수관, 과학), 김종빈(도덕과 담당, 편수실장), 정세문(음악), 이영택(지리), 임병기(과학), 이병호(국어), 정준모(물리), 김종우(공업), 곽상만(농업) 은용기(사회), 이종학(미술), 이정실(수학), 임광제(역사), 황벽(공업) 정진권(국어), 박순만(제2외국어), 허강(수산·해운), 장운식(수학), 한형식(체육), 이옥임(실과·가정), 김덕기(영어) 등이었다.

이들은 국민학교, 중학교, 실업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개정하고, 또 실업전문학교 교육과정을 제정하거나, 그 뒤 인문계 고등학교와 교육대학 교육과정을 개정하는 데 초기부터 참여하였다.

나. 교육과정 제정(체육 중·고등학교) 준비 단계(1975. 7)

각급 학교 교육과정을 개정('73. 2. 14)하거나 제정(전문학교, 특수학교)한 다음, 다소 숨돌릴 시간을 가지면서 체육중·고교 교육과정을 제정하기 위한 기초 작업과 중·고 교육과정 개정 및 교과서 편찬 업무를 추진하는 시기의 편수관 명단이다(부록계제). 이 시기를 전후해서 문교부를 떠난 편수관은 최영복(서울 도립여자중학교 교장), 김종빈(편수국장 후 시청각교육원장), 이영택(수석편수관 역임 후 충주공전 교장), 정준모(출판계 진출 후 1971년 작고), 곽상만(문교부 장학관), 은용기(경기도 덕소중학교 교장), 이정실(부산교대 교수), 임광제(미국 이민), 이종학(인천교대 교수), 김덕기(미평화봉사단 조정관) 등이고, 이들 후임으로 새로 들어온 편수관으로는 김종성(물리), 안위중(수학), 이한국(일반사회), 김철(역사), 박승희(농업), 안귀덕(도덕), 박창규(지리) 및 정찬영(영어) 등이었다. 그리고 이 시기(1975. 7) 이후에 발령받은 편수관으로는 1976년에 소병화(사회), 김기숙(미술), 1977년에 임덕순(지리)이었다.

다. 검인정 사건 후와 편수국 폐지로 새로 장학실에 통합 조직(1977. 7 ~1978. 3).

1977년 3월, 세칭 '검인정 교과서 사건'으로 억울하게 연루되어 그 당시의 모든 편수관들은 문교부를 떠났으며, 그 자리를 메운 편수요원들은 모두 그 해 발령 받은 신참들이었다. 이들은 당시의 편수관실 직제에 따라 독립된 교과목 중심 체제를 유지하다가

1978. 3. 14(대통령령 제 8,889호)자로 편수국이 폐지되고 장학실에 통합되는 직제 개정에 따라 새롭게 편성된 기구에 소속되었다.

라. 장학실 통합에서 다시 편수국으로 독립 조직(1980. 2~)

1980년 2월 27일 개정된 문교부 직제에 따라 편수국을 신설·독립시키고, 편수국에 편수과와 발행과를 두고 국장 밑에 교육과정·인문교육·사회과교육·과학교육 등의 담당관을 두게 하였다.

③ 각종 심의회

가. 교육과정 심의회

제 2차 교육과정 때에는 1960년 12월 23일에 제정(국무원령 제 132호)한 교육과정 심의회(규정)에서 각급학교 교육과정을 심의 조정하였고, 제 3차 교육과정 개정(제정) 때에도 이 심의 기구를 통해 각종 교육 과정을 심의 조정하였다.

교육과정 심의회의 설치 목적을 보면, “문교부 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대학·사범대학과 각종 학교를 제외한 각급 학교의 교육 과정의 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 (동 심의회 규정 제 1조)라고 되어 있다. 즉, 제 3차 교육과정 개정 등 작업 당시의 교육과정 심의회의 조직(1969. 12. 4 대통령령 제4388호)을 보면, 크게 교과별 위원회, 학교별 위원회 및 운영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행 규정과 비교할 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나. 교과서 편찬심의회

(가) 국정 교과서 편찬 심의회: ‘교과용도서 저작·검인정령’ 제7조(국정교과서 편찬심의회) 제 1항에 의하면, “문교부 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국정 교과서의 편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문교부에 학교별·교과목별로 국정교과서 편찬 심의회를 둔다.”고 규정하였으며, 제 2항에 의하면, “심의회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해 교과목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문교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규정하였다. 심의위원의 선정은 담당 편수관이 실질적인 행해 왔으며, <표 IV-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심의회(교과별) 및 인원수의 증감 폭은 연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IV-12> 제 3차 교육과정기 국정(1종) 교과서 편찬심의회 분과 및 인원 현황

연도	학교별 · 교과별 심의회수	인원	비고
1973	73	631	‘교과용 도서 저작 · 검인정령’시기
1974	73	647	“
1975	72	650	“
1976	84	766	“
1977	-	-	“
1978*	50	915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시기
1979	-	-	“

자료: 문교부, 「1973~1981년도 국정교과서(1종) 편찬심의회 위원명단, 유인물

*1977년도 편찬심의회 심의위원 명단은 발행하지 않았음.

제 3차 교육과정 개정(제정)을 전후해서 심의회가 어떻게 변모하였는지 교과별, 학교별, 운영위원회별로 조사해 보면 <표 IV-1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소위원회나 위원수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소위원회수가 가장 많은 시기는 1975년도와 1976년도로 각기 41개이고 위원수도 1975년에 745명, 1976년도에 750명으로 최고였다.

제 3차 교육과정 개정(제정) 직업 시기인 1970년도부터 1972년도까지는 소위원회와 위원수가 완만하게 상승하였고, 교육과정 개정 공포 시기인 1973년도와 그 다음해는 교육과정 개정 작업 시기에 비해 위원 숫자는 현저하게 증가세를 나타내었다.

<표 IV-13> 교육과정 심의회 위원 현황

조직별 구분		연도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1	1	1	1	1	1	1
	위원수	28	28	28	30	30	30	30
학교별	소위원회수	10	10	10	10	8	9	10
	위원수	180	191	188	161	162	192	203
교과별	소위원회수	16	19	22	27	30	31	30
	위원수	320	401	446	475	507	523	517
기 타	교육과정 및 교과서개편 조정위원	1						
	위원수	7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1			
	위원수				11			
합계	소위원회	28	30	33	39	39	41	41
	위원수	535	620	662	677	699	745	750
기타위원회	교학개선 심의회 위원(수)	18	18					
	교육과정 심의회 전문위원(수)			11				
	특수학교 교육과정 연구위원(수)			5				

자료: 문교부, 「교육과정 심의회 명단」, 1970~1976년 발행 유인물을 가지고 집계한 것임.

(나) 1종 도서 편찬 심의회: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 6조(1종 도서 편찬심의회 설치)에 의하면, “문교부 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문교부에 학교별·교과목별로 1종 도서 편찬 심의회를 둔다”고 하였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는 ① 1종 도서의 집필상의 유의점 등 편찬 방법에 관한 사항 ② 1종 도서의 내용심사 ③ 기타 1종 도서의 편찬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그리고 제 7조(심의회 구성)에 의하면, “각 심의회는 15인 이상 2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고,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문교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고 했다. 그런데 ‘교과용 도서 저작·검인정령’ 제 7조에 비해 1종 도서 편찬 심의회에 관한 세부 사항이 보다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

(5) 제 3차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

제 3차 교육과정기에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는 크게 문교부 편수국(후에 장학편수실로 개편)에서, 한국교육개발원(KEDI)에서, 그리고 대학이나 학회 및 교육단체 등 세 부류에서 실시하였다.

먼저, 문교부는 제 3차 교육과정 공포 후 이의 편성·운영에 관한 현장 행정지도와 부수되는 현상 연구를 편수관 중심으로 행하였으며, 또 교육과정 공포 후 연계되는 교과용도서 등의 연구 개발도 함께 추진하였다. 즉, 문교부는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 정책 연구에 주력하였으며, 각급학교 교육과정 관련 연구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현행 교육과정(기간학제 및 교육대학 등) 분석 연구 (총론·각론)
- 교육과정 개정(개선) 기초 연구(기본방향·교육목표·교육내용 등)
- 교육과정 개정 정책·계획 수립
- 기타 교육 개혁 과제 중 교육 내용에 관한 연구 과제 등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1973년부터 교육과정에 관한 기초 연구 및 관련 과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였으며, 그 후 1978년을 전후하여 우리 나라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 정책에 크게 변화가 있었는데, 그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이 이른바 ‘검인정 교과서 사건’이었다. 이 사건으로 문교부 직제 개편시 편수국이 장학실로 통합되면서 문교부 편수국이 전담하던 교육과정·교과서 개발 업무가 연구 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즉, 한국교육개발원은 CDC(Curriculum Development Center)를 중심으로 교육과정 연구·개발 업무를 추진하였는데 주요 연구 과제 등은 다음과 같다. 이와 같

은 연구 과제는 우리 나라 교육과정을 개발 발전시키는 일에 크게 기여하였다.⁶⁵⁾

- 국민학교 교육과정 상세화 연구(1973)
- 중학교 교육과정 상세화 연구(1974)
- 국민학교 교육과정 및 교과서 실험 연구(1973)
- 교육 목표 편람 개발 연구(1977)
- 제 4차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1975~1981, 중학교 가정과 교육과정 개발 연구 외 15 과제)
-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개선 연구(1977~1981, 농업고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 외 13 과제)
- 기초 과학 진흥을 위한 과학·기술계 교육과정 개발(1979, 국·중·고)

끝으로, 대학이나 학회 및 교육단체 그리고 시·도 교육 연구원 등에서 수행한 ‘교육 과정에 관한 연구’ 과제는 <표 IV-14>에 나타난 바와 같다. 여기서, 교육과정의 연구 영역은 교육 내용을 담고 있어 그 범위가 넓으며, 연구 대상 항목을 유형별로 묶어 연구 대상으로 삼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종래의 교육 과정의 연구 동향과 연구 과제를 유형별로 나누어 즉, <표 IV-14>와 같이 6가지로 분류하였다.

<표 IV-14>에 나타난 210 논문수(일반 교육과정)는 제 3차 교육과정기에 발표된 ‘교육 과정에 관한 연구’를 모두 집계했다고 보지는 않는다. 그리고 연구 영역의 통계 숫자는 제 3차 교육과정 연구의 경향을 파악하는데 좋은 시사점이 되고 있다. 또, 이 시기에 연구 논문 발표 수가 많은 학자는 홍웅선, 함종규, 강우철, 정세문, 이홍우, 이경섭 등으로 조사되었다.⁶⁶⁾

한편, 한국교육과정 연구 방법론에 대해 유봉호는 「한국교육과정의 탐색」(1992, 교육연구사, 비매품)에서 ① 교육과정 연구를 위한 상설 기구가 있어야 하고, ② 현재 교육과정을 비교 교육학적으로 연구·검토해야 하며, ③ 교육과정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연구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즉, 교육과정의 역사적 연구는 ① 교육과정 전체 구조의 변화 측면에서, ② 각 교과별 교육 목표, 교수 요지 등의 변화면에서, ③ 각 교과별 교육 내용이나 교과서의 분서면에서 심층적인 연구·분석·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⁶⁷⁾ 이러한 연구 과정을 통하여 교육과정의 구성과 시행에서 어떠한 오류가 있었

65) KEDI 10년사 편찬위원회편, 「한국교육개발원 10년사」, pp. 118~129 발췌, 서울: KEDI, 1983. 8.

66) 국립중앙도서관편, 「한국교육과정 관계 자료 목록」(1945~1980) 중에서 제 3차 교육과정기 자료 발췌 재구성, 서울:국립중앙도서관, 1980.

67) 유봉호(1982), 「일본 식민지 정책하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변천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

는가를 발견하여 다음의 교육과정 구성과 실행 과정에서 반영되어야 할 사항들을 종합 정리하는 일이 끊임없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과제 「한국 편수사 연구」는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표Ⅳ-14> ‘교육 과정에 관한 연구’ 영역별 집계표⁶⁸⁾(일반 교육과정)

단위: 논문 편수

연구영역	집계 합계 (%)	발표 구분		연구 과제명(예시)
		*잡지 등(%)	**연구지 등(%)	
1. 교육개념의 분석	29(13.8)	11(37.9)	18(62.1)	· 교육과정 개념에 대한 논의 · 가치 교육과 교육과정 구성 · 부르너의 교육과정 이론과 우리 나라 교육과정 이론과의 연계 연구
2. 교육이념의 연구	22(10.5)	5(22.7)	17(77.3)	· 교육 개혁에 있어 사회학적 분석 · 교육 과정으로 본 교육 이념 · 현대 교육과정 전개에 기본 문제(discipline 이념 중심)
3. 교육 목표 및 교육 내용 연구	32(15.2)	5(15.6)	27(84.4)	· 인구 교육의 과정 구성 등 · 유신과업 완수를 위한 학교 교육 목표와 교육과정 · 국적 있는 교육의 지향
4. 교수·학습 및 평가 연구	30(14.3)	14(46.6)	16(53.4)	· 새 교육과정과 교수·학습의 시스템화 · 새 교육과정과 탐구학습의 제 문제 · 새 교육과정의 평가 사례
5. 교육 과정 편성·운영	54(25.7)	9(16.6)	45(83.4)	· 새 교육과정 운영의 향토화(새마을) · 각 교과 교육 운영의 효율화 · 유신이념 생활화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6. 교육과정 개발(절차, 연수, 비교 등)	43(20.5)	15(34.8)	28(65.2)	· 교육과정 개발과 경제 개발 · 1963년 교육과정과 1973년 교육과정의 비교 연구 · 새 교육과정의 실험 연구
합 계	210(100)	59(28.1)	151(71.9)	

* 잡지명(과학·시정각 교육, 교육연구, 새교실, 교육평론 등)

** 연구지(한국교육학회, KEDI, 대학(원), 시·도 교육연구원, 기타 학회지 등)

<표Ⅳ-15>은 각급 학교 교과별로 교육과정 연구 과제수를 집계한 것이다. 이 집계는 교과별 논문 편수만을 하였고, 연구 영역에 대해서는 생략하였다. 이 표에서 ‘자연과’와 ‘산수과’가 많은 것은 기본 개념의 이해와 지적인 탐구 방법을 강조한 교육과정의 기본 방침 등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학원 박사학위 논문, p. 217.

68) 국립중앙도서관, 「한국교육과정 관계 자료 목록」(1945~1980) 중에서 제 3차 교육과정기 자료를 발췌 집계함.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1980.

<표 IV-15> 각급학교 교과별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 논문수 집계표⁶⁹⁾

단위: 논문편수

교과목 \ 학교별	일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교대)
1. 일반	210	37	29	19	29
2. 국어	10	6	4	2	1
3. 반공도덕	4		2	1	4
4. 사회	11	3	4	2	2
5. 국사	1		1	1	
6. 지리				3	
7. 세계사				2	
8. 산수(수학)	2	15	7		
9. 자연(과학)	25	8	13	3	1
10. 화학				3	
11. 음악	5	2	6	2	
12. 미술	4	4	2		1
13. 체육	9	4	8	1	
14. 외국어(영어)	1		4	1	
15. 가정	2		3		
16. 공업	2				
합 계	286(100)*	79(28)	83(29)	40(14)	38(13)

* 일반 교육과정 지수 100인 경우에 초·중·고·대학별로 나타냄.

(6) 제 3차 교육과정 개정과 연구학교 운영

1951년 문교부령 제17호로 공포된 이래 몇 차례 개정을 거친 ‘연구학교 규정’에 근거하여 연구학교가 지정 운영되고 있다. 현행의 ‘연구학교 규정’(1969. 7. 19 문교부 부령 제 233호)에 의하면 “연구학교는 교육의 이념, 방침 및 기술을 연구 실천하여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제 1조)”고 밝히고 있다.

본 고에서는 제 3차 교육과정기의 문교부 연구학교 지정 개황을 알아보고, 특히 새 교육과정 적용과 교과용 도서 실험 운영 상황 등에 대해 정리하기로 한다.

1) 문교부 지정 연구학교 연구 지정 개황

각급학교의 교육연구는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학교 나름으로나 교원 개인 나름으로 자발적으로 진행하는 연구이고, 둘째는 문교부 및 시·도 연구 지정 학교로서 연구를 진행하는 방법이다. 전자의 경우는 학교나 개인이 표면에 드러내 놓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 결함을 짐작할 방법이 없으나, 연구 지정 학교의 경우는 비

69) 자료: 국립중앙도서관편, 상계서 pp. 5~151 중에서 발췌, 집계·재구성함.

교적 짐작하기가 쉽다.

<표 IV-16> 문교부 지정 연구학교 연구 지정 개황(제 3차 교육과정기 '73~'81)'70)

학년도 지정수 내용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비고
	220	151	137	63	52	41	38	77	99	
교과목 영역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54 특활:2 반공도덕:22 국민정신:8 새마을:10 새교육과:14 정적용:30 생활지도:13 학습지도:36 국민교육:현장:7 급식:9 산학협동:2 서예:10 직업교육: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연구:13 (교과교육현장, 여성, 자유학습, 서예 등) 반공도덕:5 안전교육:4 새마을교육:10 자활:2 새교육:2 과정적용:30개교 시정각교:63 과학교육: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연구:41 (교원, 특활, 교육현장, 새마을, 서예, 특수, 안전, 자유학습, 반공도덕 등) 교육행정:2 과학교육:22 시정각교:22 기능교육:3 체육교육:30 급식: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30 특활:1 교육현장:2 새마을:6 도서관:3 생활지도:2 특수교육:1 안전교육:1 자유학습:1 과학교육:11 학교급식:4 교육행정: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29 특활:1 새마을:8 주체석함양:1 교육현장:1 도서관:2 자유학습:1 덕성교육:1 보건위생:2 학교급식:2 생활지도:2 특수교육: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25 특활:1 국민정신:3 새마을:7 급식:1 생활지도:1 교육행정:1 특수교육:1 교육과정운영: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24 특활:1 새마을:4 국민정신:3 급식:2 교육행정:1 생활지도:1 특수교육: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26 국민정신:3 덕성:2 새마을:2 직업:1 교육행정:2 생활:1 특수교육:1 외국어교육:11 예체능:10 새교육체제: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18 특활:2 학습지도:8 생활지도:2 환경교육:1 인구교육:1 유치원:1 교육행정:2 교육평가:2 학습방법:1 학교방법:1 	*1972년 2차는 제 2차 교육과정기 새 교육과정 적용 관련 연구 내역을 포함하여 지정을 하였다.

제 3차 교육과정기의 연구 지정 과제수에서 교과목별 대 영역별 비율을 보면, 1972년은 24:76, 1973년은 9:91, 1974년은 30:70, 1975년은 48:52, 1976년은 56:44, 1977년은 61:39, 1978년은 63:37, 1979년은 34:66, 80·81년도는 18:82 등이다. 이 통계에서 특히 1972년과 1973년의 영역별 중에는 ‘새 교육과정 적용’ 연구 주제수가 30개씩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1972년도와 1973년도에 국민학교 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실험용 교과용 도서를 현장 적용하는 사업 때문이었다.

제 3차 교육과정기에 영역별 중 눈에 띄는 연구학교 과제는 ‘과학교육’을 들 수 있다. 이 밖에도 ‘새마을 교육’과 ‘국민 교육 현장’ 및 ‘국민 정신 교육’ 등이 있는데, 이것은 이 시기의 교육 이념과 시대상을 나타내는 과제라 해석된다.

70) 자료: 각 연도별 「교육연감」(1973~1982) 발간 자료 중 발췌하여 재구성. 서울: 대한 교육 연합회 해당 연도 발행.

2) 새 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교과용 도서 실험 운영 등

전국의 교육 대학 및 사범대학 부속 국민학교 14개교, 일반 국민학교 16개교, 합 30개교를 선정하여 교육과정 시안에 따라 제작된 1·2·3학년 실험용 교과서를 1972년도에, 4·5·6학년의 실험용 교과서를 1973학년도에 실험하여 그 결과를 참고하여 마지막으로 수정한 다음 새 교육과정을 확정 공포하였다.

새 교육과정 적용(실험)연구의 목적은 첫째, 개정된 교육과정 시행에서 볼 수 있는 문제점 및 장단점을 사전에 발견하여 이를 시정 보완하고, 둘째 실행하는 교과서 편찬 방향의 타당성, 교육과정과 교과목의 목표 및 내용과의 부합 여부 등을 평가하여 좋은 교과서를 제작·발행하는 데 있었다. 이 연구 대상 교과는 도덕, 국어, 사회과, 산수과, 자연과, 음악과 등이었다.⁷¹⁾

제 3차 교육과정기에 있었던 교과용 도서 실험 운영은 제 4차 교육과정 시안에 따라 개발된 국민학교 통합 교과서를 한국 교육개발원이 주관하였으며, <표 IV-17>와 같이 개발 일정에 따라 추진하였다.⁷²⁾

<표 IV-17> 교과용 도서 개발 일정

구분 절차	우리들은 1학년,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산수, 자연, 체육, 음악, 미술, 특활(국교 1·2·3학년)	국민 정신 교육 내용 관련 교과용 도서(국교 전학년)	국어, 산수, 자연, 체육, 음악, 미술, 실과, 특활(국교 4·5·6학년)
기초 연구	1980. 1. 1 ~ 4. 30	1980. 1. 1 ~ '81. 2. 28	1980. 1. 1 ~ '81. 2. 28
개발	2. 15 ~ 12. 31	1981. 2. 1 ~ 8. 31	1981. 2. 1 ~ '81. 12. 31
현장 검증	12. 1 ~ '81. 10. 15		1982. 1. 1 ~ '82. 10. 31
수정·보완	1981. 6. 1 ~ 12. 31	9. 1 ~ 12. 31	1982. 6. 1 ~ '82. 12. 31
현장적용 및 질관리	1982. 1. 1 ~	1982. 1. 1 ~	1983. 1. 1 ~

자료: 홍웅선, 「한국교육개발원 10년사」, p.155, 서울:한국교육개발원, 1983.

제 3차 교육과정기에 또 다른 특색있는 영역별 연구 주제는 ‘과학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과학교육’의 지정은 1973년부터 1975년까지 연속 3개년간을, 1980·1981년에도 ‘과학교육’ 주제가 상당량 있었다. 이것은 제 3차 교육과정이 학문 중심이고, 또 ‘지식의

71) 교육과정의 실험 연구에 참여한 문교부 편수관은 도덕과의 이영택, 국어과의 이병호, 사회과의 은용기, 산수과의 이정실, 자연과의 임병기, 음악과의 정세문 등이었다.

72) 홍웅선, 상계서, p. 157.

구조화'(기본 개념의 파악) 등을 강조하였던 것의 반증이라 할 수 있다. '과학교육'에 관한 연구 주제가 가장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원인은 앞에서 제시한 바처럼 '지식의 구조화'에서 찾아 볼 수 있으며, 새로운 '지식 구조 형태'의 교육과정이 완전히 채택된 데 따른 가장 문제시되었던 자연과(과학) 교육에 대한 현장의 문제점을 해결·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것은 연구 주제명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자연과 교수·학습 개선 연구', '자연과 학습 자료 개발 및 학습지도 방법 개선 연구', '과학적 탐구력을 기르는 자연과 학습지도', '탐구 과정의 체계화 연구' 등과 같은 것이다.

(7) 교육과정 평가

제 3차 교육과정기에는 '교육과정 평가'라는 교육학 용어가 별로 사용되지 않아 생소하였고, 이와 관련된 교육학자들의 연구 발표도 극히 제한된 건수에 불과하였다. 또, 이 시기에 문교부의 교육평가 개혁안을 보면, 교육과정 평가라는 용어는 볼 수 없고, 다만 교과학습과 신체 발달 외에 품성형성 평가만을 강조하고 있다.⁷³⁾

그러던 것이 이 용어의 사용이 제도적으로 본격화된 것은 1992년 제 6차 교육과정을 통해 단위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 개발 체제가 도입되면서 부터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교육과정 평가 이론이나 연구·실제 등의 역사는 일천할 수 밖에 없다.

물론, 제 4차 교육과정이 개발된 이후부터 교육과정 평가의 부분적인 시도들이 이어져 왔으나 그 당시까지만 해도 교육과정 평가의 이론적 틀이 정립되지 못한 시점이고, 교육과정 평가의 의미도 학생의 학업 성취 결과에 의한 확인 작업을 벗어나지 못하였던 게 사실이다.

그렇지만 교육과정 평가의 용어 조차 생소하였던 시점에서, 한국교육개발원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온 교육과정 체제 및 교과별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 작업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⁷⁴⁾

그러나 교육과정 평가의 실체는 제 3차 교육과정 개정 작업 때(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초기)에 존재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교육과정 평가의 개념이나 평가 모형을 준거해서 평가 작업을 실시하였던 것은 아니다.

즉, 문교부 편수국에서 교육과정 개정시 행하는 기초 연구나 자료 수집을 통해 교육 목표를 설정하거나 교육 내용을 선정 조직하고, 교육 방법을 모색하는 등 경험·분석적

73) 문교부, 교육평가 개혁안(1971. 9), 유인물.

74) 최호성, 「교육과정 평가론」, p.4, 마산:경남대학교 출판부, 1998. 2.

관점에서 교육과정 평가를 실시한 것은 사실이다. 이것이 오늘날의 교육과정 평가 체제와 기법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 할 수 있으나 교육 목표, 교육 내용·교육 방법 및 체제 등 교육과정 설계에 대한 평가와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 대한 평가를 내포하였다는 점이다.⁷⁵⁾ 요는 이같은 평가는 교육과정 체제 개선을 위한 교육과정 평가의 한 사례로 지적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나라에서는 1973년과 1980년의 2회에 걸쳐 한국행동과학연구소가 국민학교 교육의 전국적 평가 연구를 수행하는 데서 이러한 접근을 부분적으로 활용한 바 있다.⁷⁶⁾

다음에 제 3차 교육과정이 공포된 이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연구한 교육과정 평가 연구 과제를 제시하고, 초등학교 교육과정 개선 연구에 대해 총론 부분을 제시한다.⁷⁷⁾

1) 제 3차 교육과정 평가 연구

- 교육과정 정책과 그 운영의 개선점(1978. 3. 학습내용의 선정과 조직, 교과서 모형 탐색 등)
- 교육과정 개발원리 (1978. 9-11. 교육과정의 정책 방향, 결정 요인, 목표 설정, 내용 선정 및 조직 원리 등)
- 교육과정의 방향 탐색 세미나(1979. 2. 교육과정의 이론 및 설계원리, 현행 국민학교 교육과정 문제점 및 개선 방향 등)
- 현행 국민학교 교육과정의 분석 및 개선 방향의 탐색 연구[1979. 3-7. 교육과정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에 질문지 발송 및 회송(2,196명) 내용 분석·처리 등]
- 외국의 교육과정 분석(1979. 7-12. 27개국 73개처 교육과정 개선 질문지 발송, 교육과정 개발, 교과서, 편제 등 조사 분석)
- 학교 교육 목표에 대한 사회적 요구 탐색 및 분석(1979. 6. 세미나에서 자아실현과

75) 교육과정 평가에 대한 G.A. Beauchamp는 다음 네 가지 차원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것은 ① 교사들의 교육과정 이용에 대한 평가 ② 교육과정의 평가에 대한 평가 ③ 학생들의 학습결과에 대한 평가, ④ 교육과정 체제에 대한 평가이다(Beauchamp, 1968, p. 138).

또, 김종서는 교육과정 평가를 보다 나은 교육과정을 계획하거나 또는 운영하기 위한 교육과정의 연구활동이라고 보고, 교육과정 평가의 구성 요소를 교육과정의 사고체계 따라 ① 교육 목표의 평가, ② 과정 계획의 평가, ③ 교수·학습과정의 평가, ④ 평가의 평가하는 네가지 항목으로 분류하였다(김종서, 1979, pp. 49-71)

결국 교육과정 평가란, 교육과정의 개선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교육의 과정에 직접, 간접으로 관련되는 모든 요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76) 권 조 외, 「학교 교육의 전국적 평가 연구」, 서울: 한국행동과학연구소, 1973 및 이성진 외, 「한국 국민학교 교육의 평가(Ⅰ), 학력평가」, 서울: 한국행동과학연구소, 1980.

77) 박병선, 「한국의 교육과정」, pp. 386~390,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85. 10.

- 교육목표, 가정·지역·국제사회와 교육목표, 종교·도덕·문화와 교육목표 등 논의)
- 기초 과학 진흥을 위한 과학·기술계 교육과정 연구(1979. 2-11. 과학 기술계 교육과정 개발 기초 연구 등)
 - 농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개선 연구(1979. 3-12. 농고 교육과정 개선 기초 연구 등)
 - 중학교 교육과정 분석(1980. 5-11.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위촉, 전국 300개 중학교 유증 표집하여 교사에게 교육과정에 대해 질문지 발송 및 회수(183개교) 분석 처리함.
 - 우리 나라 중·고등학교 학생의 관심 및 요구조사(1980. 8-11. 중고생(약 3천명) 유증 표집하여 질문지 조사 및 분석처리 등)
 -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실태 조사(1980. 5-11. 중학교 244개교, 고등학교 119개교 유증 표집하여 질문지 조사 실시: 교과 시간, 교육과정 운영 문제점 등)
 - 공고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1980. 1-12. 교육과정 개선연구 등)
 - 인문계 고등학교 실업·가정 교육과정 개선 연구(1981. 3-9. 인문계 고등학교 실업·가정과 교육의 문제점, 개선 방향 등)

2) 국민학교 교육과정 평가(교육과정 총론)⁷⁸⁾

- ① 기본 방침과 일반 목표: 기본 방침과 일반 목표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기본 방침으로는 (가) 국민적 자질의 함양, (나) 인간 교육의 강화, (다) 지식기술 교육의 쇄신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가) 국민적 자질의 함양은 그 대부분이 일반 목표의 국가 발전 목표에 포함되어 있고, (나) 인간 교육의 강화는 일반적 목표의 민주적 가치와 비슷한 내용이며, (다) 지식기술 교육의 쇄신은 일반 목표의 자아실현 목표에 충분히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다.
- ② 교육과정 목표: 교육과정 목표, 교과목표, 학년목표, 단위목표간의 위계성이 뚜렷한 경우도 있지만, 교과에 따라서는 각 목표의 진술 관점이 서로 다르고 상호간에 밀접한 관련성을 찾아보기 어려움 등 목표간의 위계가 모호하다. 그리고 학년목표에 있어서, 학년차별로 성취해야 할 목표에 대한 두드러진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 ③ 교과목표: 교과목표에는 내용목표와 행동목표가 모두 제시되어야 하는데, 내용목표는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되어 있으나, 행동목표의 진술이 개념적으로 불분명하고 통일성이 없다.
- ④ 단위 목표간의 관계: 교육과정 내용과 단위 목표간의 관계에 어떤 원칙이나 통일

78) 신세호 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80.

성이 결여되어 있다. 내용만 있고 단위목표가 없는 것이 있으며, 단위목표와 내용이 모두 있는 경우, 단위목표는 불분명하고 학습 범위는 명백히 표현되어 있는 경우 등 각 단원의 목표 진술과 내용 진술에 원칙과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다.

- ⑤ 내용 진술방법: 교과에 따라서 다르며 동일 교과라 하여도 학교급별에 따라서 다르다. 즉, 내용만 간단히 진술되어 있는 경우와 목표적인 성격을 띤 내용의 경우가 있어 내용 진술의 방법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 ⑥ 지도상의 유의점: 그 진술방법, 상세도, 내용 등에 있어서 교과에 따라 다르며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다.
- ⑦ 교육과정 운영지침: 각 학교급별로 통일을 기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과정 운영지침은 전급학교(全級學校)에서 강조되어야 할 일반지침과 학교급별에 따라 차이가 나는 학교급별의 지침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현행 교육과정에는 일반지침과 학교급별 지침이 나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학교들과의 연계성 및 강조점을 파악할 수 없다.
- ⑧ 학교급별의 구성 방침: 구성 방침간의 일관성이 없다. 국민학교에서는 학습경험 선정의 원칙이 강조되어 있고, 중·고등학교에서는 학교의 특성 및 청소년들의 심리적 발달에 대한 진술에 중점을 두고 있다.
- ⑨ 교육과정 개정취지: 교육과정이 전반적으로 개정될 때마다 교육과정 개정취지가 총론에 수록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과정이 왜 달라져야만 하는지를 교육 행정가와 일선 교사가 알고 있어야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개정 취지에 맞게 할 수 있을 것이다.
- ⑩ 교육목표 정립: 교육목표 정립에 대한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 부족하다. 각 교과 영역이라는 편의상의 구획이 정해지기 전에 현대 교육철학의 사조, 국가·사회적 요구, 문화적 유산의 취사선택, 학습자의 발달 특징에 따른 목표 추출 등의 작업을 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 같다. 이러한 사고를 기초로 한 교과편제, 시간배당 등에 대한 탐구 노력이 소홀했다.

(8) 제 3차 교육과정 관련 비망·증언

• 함종규 교수(숙명여자대학교)

또, 국가 최고의 책임자께서 산업근로 청소년의 교육 문제를 지시하면, 그들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 기준령이 제정되어 파격적인 특혜를 주는 교육과정이 편제되고, 어문정책에 대한 담화

나 연구지시가 있으면 교과서 편찬에서 한자의 사용여부, 교과서에 실려 있는 한자를 ()로 바꾸기에 대한 개폐가 반영되어 일관성 있는 어문교육의 방향을 누리지 못한 경험도 있다.

그 뿐만이 아니다. 교육과정의 구성이나 개편작업에서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거나 심의작업에 참여하면 자신의 학문영역에 대한 비중을 높이기 위한 아집에 빠지는 경우도 있어왔다. 이렇듯 우리 나라 교육과정의 개편은 그 동기나 결정요인이 교육계의 요구나 필요보다는 제 3의 요인이 크게 작용되는 경우가 많았다.[한국교육개발원편, 「한교제도 및 교육과정 발전 방향 탐색」, pp.195.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81. 4]

• 유봉호 교수(이화여자대학교)

사실상 제 2차 교육과정의 총론에는 「학생들의 생활 경험을 통하여 교육한다」는 표현이 있고, 제 3차 교육과정에는 「지식의 구조를 다루는 기본 개념과 탐구 방법을 익힐 수 있는 지도 내용을 정선하다」는 표현이 있다. 그러나 문제는 총론의 정신이 각론을 구성하는 데 실제로 얼마나 반영되었는가 또는 반영될 수 있도록 총론이 서술되어 있는가 하는 데에 있다.<중략> 이때까지의 총론은 각론 구성과 별도로 이루어졌고, 각론은 총론과는 별관계 없이 그 교과 자체의 「논리」에 따라 이루어졌다. [유봉호 박사 정년 기념 논문집 간행위원회, 「한국교육과정의 탐색」, p. 324, 서울: 교학연구사, 1992. 8]

• 정세문 문교부 편수국장(1973. 5~1975. 11)

‘기대되는 한국인상 정립을 위한 교육내용의 개선 방향’ 논문(1974. 3)에서 <전략>교육 내용의 개선이 국민교육현장의 이념 구현을 그 기본 방향으로 삼는다는 것은 극히 자연스럽고, 또 당연한 것이라 하겠다. 이것은 동시에 ‘국적있는 교육’을 교육내용의 결정 단계에서도 실시한다는 뜻이 된다.

우리의 민족적 사명은 바로 우리 민족의 중흥을 이룩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교육내용의 개선도 결국 이 사명을 다하는 데 유용한 한국인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 <중략> 우리는 기대되는 한국인상을 정립함에 있어서 최선의 것이라고 믿어지는 교육 내용을 위하여 끊임없는 고민을 체험해야 할 것이다.

• 은용기 교장(덕성여자고등학교)

교육 과정 개정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여러 작업 단계에서 참여하게 되는데, 그 전문가의 주축을 이루는 것이 대학 교수이다. 그 교과에 관련되는 학문을 평생 동안 연구해 온 교수들이 주축을 이루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 분들에게는 또한 자기 분야 이외의 것에 관심이 적고 교육현장의 사정에 그리 밝지 못하다는 약점도 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선 학교의 교육자들도 참여하게 되지만, 이 분들 역시 자기 교과를 위주로 교육을 생각하고 현재까지 큰 무리 없이 아이들을 교육하여 왔기 때문에, 타 분야와의 타협이나 새로운 변화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 [교과서 연구 제 12호, p.71, ‘교육 현대화를 위한 교육과정·교과서’, 서울: 한국2중교과서협회, 1992.]

• 김옥기 연구 제 2부장(중앙교육연구소)

새 교육과정 시행에 앞서 교사 재교육(특히 수학, 과학)의 실시와 실험기구의 지원사업, 한국교육학회와 학회 내의 교육과정연구회가 공동 주최한 “국민학교 교육과정 개편시안”에 관한 심포지움, 중앙교육연구소 주최의 “새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세미나”는 비록 시대에는 맞지

않았지만 한국적 교육목표를 재정립하려는 시도로서는 뜻있는 행사였다고 하겠다.[「중앙교육연구소 20년지(1953-1973)」, p. 201, 서울: 중앙교육연구소, 1973.]

• 안귀덕 교수(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발 업무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문교부로부터 1977년에 한국교육개발원에 넘어오게 된 역사의 뒷면에는 강우철 교수를 중심으로 하는 편수행정 개혁 연구팀의 역할이 컸었다. 이 연구팀에 부산대에 재직 중인 변영계 교수(당시 한국교육개발원 책임연구원)와 구학봉 장학관(당시 본원 연구원)이 연구진으로 참여하였고, 이병호 선생님과 필자도 그 연구팀에 자문하는 기회를 가졌었다. <중략> 사실 이 연구작업은 변영계 교수의 증언에 의하면, 엄격한 보안상태 하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에 관한 관련서류가 연구진에도 남아 있지 않다고 한다. 어떤 내용이 연구되고 어떤 정책이 건의되었는지 서류상으로 밝힐 수 없지만 구전된 내용은 교육과정과 교과서 정책뿐만 아니라 문교부의 직제 개편안도 함께 제시되었다. 강우철 교수가 주관한 편수행정 개혁연구팀의 정책 건의안에 따라 문교부에서는 편수국을 없애고 장학실에 편수국 기능을 통합하는 것이었다. 물론,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발 기능이 법적으로 한국교육개발원에 주어진 것이 아니었다. 문교부가 자신들의 교육과정, 교과서에 관한 권한 일부를 잠정적으로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하였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발 업무를 둘러싸고 해마다 보이지 않는 갈등이 없지 않았다. [한국교육개발원 동우회편, 「KEDI 탄생과 성장-그 숨은 이야기」, p.73-74,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97. 8]

• 강신웅 교수(홍익대학교)

우리 나라 교육과정의 가장 두드러진 문제 중의 하나는 교육과정이 완전히 중앙집권적으로 결정되고 지역, 종교, 학생의 진로와 필요 및 그들의 관심과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똑같은 교육내용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것, 교과서 편제가 경직되어 있어 융통성과 탄력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 등이다. 더욱이 군사정권 이후에는 교육부의 인적 구성마저 일반 행정관료 중심으로 개편되어 획일성·경직성이 강화되어 왔다. 여러 차례 교육과정 개정은 있었지만 대부분 이론이나 경험이 부족한 관료와 소수의 관변학자들에 의해 주도되어 교육과정 이론은 무력해지고 학교가 무미 건조해져 왔다. 한마디로 교육적 타당성·효율성보다 행정적 효율성, 행정편의주의가 심화되어 온 것이다. [「한국교육과정의 새로운 좌표 탐색」, 「교육과정 결정 주체」, p.89, 서울:교육과 학사, 1996. 8]

• 신세호 연구부장(한국교육개발원)

첫째로 전근대성의 문제이다. 이 문제는 결국 전문적 훈련을 받은 사람의 부족이라는 문제와 관련이 있으나, 지난 30년간 겨우 10~20여명, 교과 전공자를 가지고 약식에 의한 교과서 편찬업무가 주종을 이루어 왔던 문교부 편수국의 실정만으로도 그 문제의 단면을 짐작할 수가 있다. 이러한 실정에서 교육과정 정책수행이 부실했다는 것은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중략> 교과 전공자라고 해서 반드시 교과 전문가가 아니며 교육과정 전문가는 더욱 아니다. 이 전문 인력의 문제란 그 당시 회사 모든 분야가 유사했겠지만 30여년을 지나오면서 우리는 아직도 전문가의 유인체제도 또 양성기관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느끼는 것이다. [한국교육개발원편, 「학교제도 및 교육과정 발전방향 탐색」, p.55, 서울:한국교육개발원, 1981.4]

3. 초 · 중등학교 교과용 도서 편찬

제 3차 교육과정기의 교과서 행정은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온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즉, 제 3차 교육과정기 중 1977년 중반기까지는 ‘교과용 도서 저작·검인정령’이 적용되었고, 그 후에는 소의 ‘검인정 교과서 사건’이 계기가 되어 새로 만들어진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었던 시기인 것이다.

다음의 두 법령은 제 3차 교육과정기의 두 형태, 즉 ‘교과용 도서 저작·검인정령’과 새로 제정되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중 목적을 제시한 것이다.

- ‘교과용도서 저작·검인정령’(1967. 4. 17 제정, 대통령령 제3018): “교육법 제 157조 제 2항에 의하여 대학, 사범대학, 교육대학, 실업고등전문학교 및 전문학교를 제외한 각 학교의 교과용도서의 저작, 검정, 인정 및 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1977. 8. 22 제정, 대통령령 제 8660호): “교육법 제 157조 제 2항에 의하여 대학, 사범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을 제외한 각 학교의 교과용 도서의 저작, 검정, 인정, 발행, 공급 및 가격 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도하에서는 검인정령 시대와 다르게 문교부는 교과서를 직접 제작하지 않고, 기획·감독 기능만 하고 집필, 교정 등의 편집기능은 연구 기관, 대학에 위임하였던 것이다.

또, ‘검인정령’ 시대에서는 교과서를 국정·검인정으로 분류하였으나 새 규정에서는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1종은 ‘연구개발형’이라 부르고, 2종은 ‘자유경쟁형’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1종 교과서는 전문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공동 집필하여 단행본으로 편찬하게 하였으며, 2종은 일반 저자가 편찬하여 문교부의 검정을 받게 하였는데 복수본으로 하여 합격을 1교과당 5종 이내로 한정하였다.⁷⁹⁾

79)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 19조(합격종수) 및 2종도서 검정 1차 합격공고(78. 5. 4) 내용 등

교과서의 공급에 있어 ‘검인정령’ 시대에는 공급인제도를 채용하였으나, 새 규정에서는 중간 상인의 배제 및 적기 공급 등을 내세워 정부투자기관인 국정 교과서(주)가 공급업무 대행자로 지정받아 직접 학교에 공급하게 하였다.

본 고에서는 제 3차 교육과정기의 교과서 편찬제도, 편수관 제도와 편수활동 및 국민 학교와 중등학교 교과서 편찬·발행 등에 대해 서술하기로 한다.

(1) 제 3차 교육과정기의 교과서 편찬

한 나라의 교과서 편찬 제도⁸⁰⁾는 과거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여 형성된 것인만큼 그 나라의 고유한 면을 지닌다. 그래서 나라마다 그 기준이

80) 교과용 도서 관련 법령의 변천

- ‘교과용 도서 검인정 규정’ 시기(1950. 4. 19~1967. 4. 16)
- ‘교과용 도서 저작·검인정령’ 시기(1967. 4. 17~1977. 8. 21)
-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시기(1977. 8. 22~현재까지)

1. 교육법 ‘교과용 도서’

제 3차 교육과정에 법률 제2710호(1974. 12. 24) 제157조 제1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실업고등전문 학교 및 전문학교의 교과용 도서 중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문교부의 검정 또는 인정을 받은 것을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법률 제3054호(1977. 12. 31) 제 157조 제 2항에서 교과용 도서의 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 및 가격 사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한다”라고 하여 발행·공급과 가격 사정을 추가하였다.

2. ‘교과용 도서 저작·검인정령’

이 영은 ‘국정 교과용 도서 편찬 규정’(1950. 4. 29 제정, 대통령령 제 337호), ‘교과용 도서 검인정 규정’(1950. 4. 29 제정, 대통령령 제 336호) 및 ‘국정 교과용 도서 편찬 심의회 규정’(1950. 6. 2 제정, 문교부령 제8호)를 통합한 것이며, 1967. 4. 17 제정되어 7차의 개정을 거쳐 1977. 8. 21까지 존속되었다.

이 시기에 개정 주요 내용은 대통령령 제3200호(1967. 8. 31)에서 국정 교과용 도서 편찬 규정 제 4 조에 규정되어 있던 교과용 도서 심의회를 이 영에 삼입 신설하였으며, 대통령령 제 5252호(1970. 8. 3)에서 교과서의 국정 및 검정의 구분을 명시하고, 또 검정 교과서의 검정 위원수, 사열기준, 사열방법, 개편 또는 수정 등을 명백하게 규정하였다.

그리고 대통령령 제 8006호(1976. 3. 18)에서 검인정 심사 위원수를 교과목마다 3인에서 5인으로 하였으며, 교과용 도서의 검정 수수료는 문교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가격의 400배로 하였다.

3.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이 영은 ‘국정 교과용 도서 저작·검인정령 및 동 시행 세칙’, ‘교육과정 심의회 규정’을 폐지하고 제정되었다.

대통령령 제8660호(1977. 8. 22 제정)의 주요사항은 ① 교과용 도서는 교과서·지도서 및 인정도서로 한정하고, 교과서 및 지도서를 각각 1종(국정도서) 및 2종(검정도서)으로 구분하였다. ② 2종 교과서 및 2종 지도서의 범위를 정함. ③ 2종 교과서의 검정 신청을 그 원고를 집필한 자가 하도록 함. ④ 2종 교과서 검정 합격의 유효기간은 최초 사용학년도부터 5년간으로 함. ⑤ 인정도서의 사용범위 및 사용 승인 절차를 정함. ⑥ 교과서 및 지도서의 수정은 3년마다 한다. ⑦ 교과서의 공급은 교과서 발행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 투자기관을 공급대행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함. ⑧ 교과서의 가격 사정에 있어서는 직접 재료비, 직접소모비 등 원가요소별에 의하도록 함 등이었다.

또, 이시기에 개정 주요 내용은 대통령령 제 8849호(1978. 2. 9)에서 교과서 가격 사정에 있어 노무비, 영업비 및 이윤을 매출액 변동성 비율에 따라 계산하도록 했으며, 가격 사정의 기초 자료로 사용할 재무제표 작성기간을 교과용 도서발행 회사의 사업 연도에 불구하고 학년도에 따르도록 했다. 그리고 대통령령 제 11013호(1980. 9. 26)에서 교과서 공급 제도를 개선하여 중·고등학교 교과서 도서 정가에 공급 수수료(정가의 5%)를 계상하도록 했다.

일정하지가 않다. 그러나 그것은 시대와 사회의 조류에 따라 변천하기도 한다.⁸¹⁾ 우리나라의 교과서 제도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 3차 교육과정기에는 ‘검인정령’ 제도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이 1977년 8월을 전후해서 제도 변혁이 있었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제 3차 교육과정기에 교과용 도서의 국정 제도와 검인정 제도에 대해 서술하기로 한다.⁸²⁾ 즉, 본 고에서는 앞으로 서술할 국민학교·중등학교 교과서 편찬·발행을 포괄하는 개요적 내용으로 정리하기로 한다.

1) 국정 제도

우리 나라 교과서 편수행정에 있어서 교과서의 국정제도는 교육법 제 157조와 ‘교과용 도서 저작·검인정령’(1972. 7. 11자 대통령령 제 6281호) 제 3조(국정 및 검정의 대상) 제 1항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즉, 제 3조 제 1항에 의하면, “국민학교 교과서와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과서 중 다음 각 호의 것은 국정 교과서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각 호에는 ① 국어(독본), 도덕, 국민윤리 ② 문교부 장관이 인정하는 교과목의 교과서 ③ 실업에 관한 교과목 중 문교부 장관이 정하는 교과서 ④ 검정 신청이 없는 교과목의 교과서 등을 규정하였다.

국민학교용 교과서는 국민학교 교육이 무상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어 국가이념의 강력한 실현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서 국정으로 하고 있다. 또 중등학교용 ‘국어’는 일제하에 잃었던 우리말을 되찾아 이를 정리하고 문법 체계를 확립하며, 나아가 국민사상을 순화하고 통일하기 위한 국어교육의 막중한 사명에 입각하여 국정으로 하고 있으며, 중고등학교용 도덕 교과서도 도의 교육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근거하고 있다.⁸³⁾

이러한 교과서의 국정제도는 교육 내용이 고정적이고 획일적이어서 교과서의 시대성과 발전성에 적응이 결여되기 쉬우며, 국가 의사가 과도히 반영하기 쉽고 극단의 경우에는 교육내용의 국가 통제의 성격을 띄게 될 우려가 있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서 1종 도서(국정교과서)는 제 4조에 ① 국민학교 교과서 및 지도서 ② 중학교 교과서 및 지도서⁸⁴⁾ ③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과서 및 지도서⁸⁵⁾ ④

81) 허강, 「교과용 도서 목록 제 1호」, 「각국의 교과서 제도」, p. 7, 서울:한국교과서 연구소, 1998. 10.

82) 김용만 외, 「한국 교육과정 변천에 관한 연구」, 「제 3차 교육과정기」, pp.196~198, 서울: 한국교육과정·교과서 연구회, 1998. 12.

83) 중앙교육연구소, 「교과서 내용 분석과 행정 개선에 관한 연구」, p.130, 서울: 과학기술처 외, 1969.

인문계 고등학교의 교과목 중 국어(독본), 국민윤리, 국사와 문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목의 교과서 및 지도서 등을 규정해 놓았다.

‘검인정령’ 제 6조(국정교과서의 편찬과 발행)에 의하면, “국정 교과서는 문교부 장관이 편찬 발행한다.”고 규정하고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 5조(편찬)에 의하면 “1종 도서는 문교부가 편찬한다. 다만 문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종 도서는 연구기관 또는 대학 등에 위탁하여 편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오늘날 외국의 교과서 제도가 국정제에서 검인정제로, 검인정제에서 자유발행제로 대거 옮겨가고 있으며, 교과서의 무상공급제(무상대여제)가 점차 확대되는 단계에 있다. 우리 나라도 앞으로 선진국의 이러한 교과서 정책을 검토하고 현행 제도에서 많은 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2) 검인정 제도

우리 나라의 중등학교용 교과서는 ‘교육법’ 제 157조의 규정과 ‘교과용 도서 저작·검인정령’ 제 3조 제 2항(전항 각 호의 교과서 이외의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과서는 문교부 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에 규정하고 있으며, 동령 제 4조(인정의 대상)에는 “학교에서 교과목의 교수를 보충하거나 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사용하는 교과서 이외의 학생용 또는 교사용 도서는 문교부 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우리 나라는 국정제와 검인정제를 병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 12조(2종 도서의 대상)에 의하면, “1종 도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과용 도서는 이를 2종 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 13조(검정실시 공고)에서 “문교부 장관은 2종 도서의 검정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그 2종 도서의 최초 사용학년도 개시 1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규정에 의해 제 3차 교육과정기에 검정 공고를 하고, 검정 신청을 받아 검정심사 후 합격시켜 공고까지 한 일이 단 한번 있었는데, 이것은 1979학년도에 사용할 인문계 고등학교 2종 교과서 및 지도서로서 ‘문법’ 외 23개 교과목이었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검인정 제도는 확일성을 지양하고 다양하고 특색

84) 문교부, 「편찬기본계획」, p.1, 1977. 8(유인물)에 의하면, “국민학교 졸업자의 진학률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취학면에서 준의무 교육화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실현될 의무교육연장에 대비하기 위해 그 교과서를 모두 1종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85) 문교부, 상계서, p. 2, 1977. 8(유인물)에 의하면, “실업고등학교는 실업교육을 진흥시키고 최신 산업기술 정보를 기민하게 반영시키며, 수요부수가 적은 데 따른 책가의 양등을 막기 위하여 그 교과서를 1종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있는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집필상의 유의점’ 등에서 ① 교과 내용에 대한 통제주의를 과감하게 배제하고 ② 질적으로 우수한 교과서 편찬이 가능하게 체제 개혁을 유도하고 ③ 자기 주도 학습력을 높이는 내용으로 조직하고 ④ 특히 시각 디자인 측면의 과감한 도입 등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검인정 제도는 자유 경쟁하에서 검정 기준에 따라 평점제(제 3차 교육과정기)로 합격을 결정하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장점이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제도는 ①교과서의 자유경쟁을 허용하기 때문에 교과서 가격이 국정 교과서에 비해 비싸고 ② 검정 기준에 미흡한 교과서가 출원될 것이므로, 국가적으로 자재와 그 밖의 경제적 낭비를 초래하기 쉬우며 ③ 검정 교과서 선정(채택)을 에워싸고 무용의 경쟁을 유발할 염려가 있을 수 있다는 게 단점이다.

• 홍웅선 교수(전 연세대학교)

우리는 같은 학년의 모든 학생들에게 똑같은 교과서를 쓰게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학생들 개개인의 특성을 무시한 것인가를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중략> 따라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도 한 가지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그 중에서 기본적인 학습이 있어 다 같이 배워야 할 것이 있지만, 그러한 기본적인 학습을 할 때에는 개인으로 하여금 집단의 기준에 무조건 따르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pp. 75~76).

그 후 교과서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어서 교과서가 학습을 돕는 자료로 쓰여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해되고는 있으나, 아직도 교과서 중심의 교수 형태가 바뀌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교수 내용의 획일화는 면할 길이 없게 되었고, 교수 형태에 있어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기회는 크게 제한을 받고 있다.

교과서란 본시 교육과정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어서 교과서는 교육과정에 맞는 학습지도를 전개하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교수활동의 실체에 있어서는 정작 목적이 되는 교육과정은 등한시되고 교과서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생각되고 있다는 데에도 문제가 있다.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가장 유의할 점이 학습자의 개별성과 학교가 처한 지역성임을 생각할 때, 교과서를 획일적으로 다루는 데 따르는 결함이 무엇인가는 심각하게 반성해야 할 것이다(pp. 112~113). [「홍웅선 교육수상록」 중에서, 서울: 보성사, 1994. 5.]

3) 편수관 제도 및 편찬활동

① 편수관 제도

교과서를 편찬하는 일은 편수국에서 한다. 편수국은 8·15 광복 후부터 문교부에 독립된 국(局)으로 설치되어 왔으며, 5·16 혁명 정부에 의해서는 일시 학무국 산하의 편수과로 축소된 일이 있었으나, 그 후 다시 편수국으로 승격되어 오다가 제 3차 교육과정기에는 장학실에 통합(1978. 3. 14)되어 폐지되었다가 다시 복원(1980. 2. 27)되고, 그

후 장학실과 편수국이 통합(1981. 11. 2)되어 장학편수관실로 가능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⁸⁶⁾

편수국의 편수 업무 중 교육 내용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편수관을 두었는데, 제 2차 교육과정기(1963. 2~1973. 2) 중 1969년까지는 편수관을 일반 행정직으로 임명하였고,⁸⁷⁾ 1969년 9월부터는 교육전문직으로 편수관을 보임하였다.

먼저, 제 2차 교육과정기 때의 편수관 제도는 일반직에 속했기 때문에 고등고시 행정과의 전형시험(전공 과목 외 법제 및 상식)에 합격해야 했다. 한편, 당시에 편수관을 우대한다는 구실로 교육공무원으로 보임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으나, 그렇게 될 경우 일반 교육공무원과 달라 5년 이상의 경륜과 전문적 학문 및 기술을 요하는 편수직이 불안정하고 악용될 수 있어 모든 편수관은 이를 배격하고 직무에 몰두하여 5·16 혁명과 그 뒤의 정치 사회적 혼란 속에서도 편수행정이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었다. 또, 편수관은 교과별로 독립하여 직책을 수행하였으며, 다만 직무의 성질상 국장 밑에 비공식 조직체인 편수관실을 두고 각 편수관은 협조하여 일을 원만히 수행해갔다.

그 후 편수관이 수행할 업무가 ① 교육과정의 제정·관리 ② 국정 교과서의 편찬 ③ 교과서의 검인정 사무·수정지시 ④ 규정 및 검인정 교과서의 수정·보완 ⑤ 기타 편수국의 업무를 전문직의 입장에서 집행·협조하는 등으로 증가하였고, 제 3차 교육과정 개정(제정) 작업으로 인하여 인력이 턱없이 모자라는 불합리성이 생기면서, 지금까지 해 온 일반직으로서의 편수관 보충은 편수직의 성질상 인선도 어렵거니와 임용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관계로 과거와 같은 방식의 임용이 지극히 어렵게 되었다.⁸⁸⁾

이에 1969년부터 교육연구관 자격으로 편수관을 보임하는 제도가 생겨, 동년 9월에 특별전형(교육감 추천 후 문교부 서류 전형 및 면접 등)을 거쳐 6명이 문교부 사상 최초로 교육 전문직 직군으로 편수관 발령을 받았다.

이때의 특별 전형 기준은 ① 대학 또는 전문학교 교수 또는 교수의 경력이 있거나 동등 이상의 전문 지식이 있는 자 ② 초·중등 교육에 관해 이해와 식견이 있는 자 ③ 시

86) 본 보고서 중 편수국 직제는 ‘제 3차 교육과정 개발시 편수국 직제 편찬’에서 상세히 언급하였으므로, 생략한다.

87) 문교부 직제 제 8조 제 6항의 규정으로 편수관 제도를 두었는데, 공무원 임용령(1963. 5. 29 각령 제 1317호) 제 3조와 별표 I 에 나타난 공무원의 직무 분류 구분을 보면, 교육행정직은 일반행정직군에 포함시키고 편수직만을 별도로 분리하고 있다.

편수관의 선발 임용에 있어서는 일반 행정직과 같은 국가공무원법(1962. 4. 17 법률 제 1325호) 제 26조~ 제 28조와 공무원 임용령(1963. 5. 29 각령 제 1317호) 및 공무원 임용 시험령(1966. 2. 7. 대통령령 제 2405호)의 적용을 받게 되어 있었다.

88) 김용만 외, 전계서, 101~102.

야가 넓고 인격이 고결한 자 ④ 사상 온건하고 신체 건강한 자 ⑤ 원칙적으로 연령 35세 전후였는데, 이상의 기준에 합치된 자 가운데서 문교부 장관이 임용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국립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등) 등에서의 추천 등을 감안하였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 제도로 인해 제 3차 교육과정기인 1977년 소위 ‘검인정 교과서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편수관은 일반 행정직과 교육 전문직이 공존하였는데, 이 사건 후로는 일반 행정직은 없어지고 교육 전문직으로만 통일되었다.

• 허강 국장(한국교육과정·교과서연구회)

1969년 제 2차 교육과정기의 문교부 편수국 소속 편수 요원은 교과별로 부이사관, 서기관, 행정 사무관, 교육연구관으로 보(補)하였으며(문교부 직제 제14조(편수국)), 그 해 9월에 발령 받은 편수국의 교육 연구관(당시 타실국에는 교육연구관이 없었음)은 기존의 일반 행정직과 함께 교육과정과 교과서 업무를 맡아 일했다. 이 때 교육연구관은 계급상 2급을류(부이사관), 3급갑류(서기관), 3급을류(행정사무관) 등 세 부류로 배치되기도 했다(문교부 공무원 직제 별표). 그래서 교육연구관은 당시 세 부류에 소속된 신분상의 차이 때문에 개인적으로 하급적인 경우에는 몹시 못마땅해 했다.

또, 이 때 교육연구관은 직군별로 계급이 뚜렷하게 문서화되어 있지 않았으며, 가령 공업연구관이 1급에서 3급 을류까지 공무원 임원령 별표 직급표에 명시되어 있는 것에 비해 문교부 교육연구관은 직급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그래서 문교부는 편수관에 대한 신분(계급)을 사무적으로, 또는 실무적으로 나타내는 경우에 직급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애매한 태도와 불확실성을 노정하기도 했다.

< 표 IV-18 > 조직 현황(편수관실) 1977. 2.

직 급 별	정 원	현 원
· 부이사관 또는 교육연구관	2	1
· 서기관 또는 교육연구관	21	19
· 교육연구사	10	0
· 파견교사		(5)
· 임시직	3	3
계	36	23(5)

한 예로, 편수국에서 선임 편수관은 행정직렬이고 고등전형시험에 합격했다는 사유로 부지불식간 그의 권요를 행사(?)하였는데 때로는 의도적으로 또는 농담으로 신분을 나타내기도 했다. 물론, 여기에는 그들이 문교부 편수관으로 먼저 왔다는 선배 의식과 편수국 나름대로의 ‘전통의 텃세’가 한몫 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교육 전문직 편수관은 교과교육 담당자로 전국에서 발탁되어 특별전형(교육감 추천과 문교부에서의 서류 전형 및 면접 등)을 거쳐 들어왔으며, 계급상 2 등에서 3 등에 이르고, 특히 대한교수의 보수 규정 별표(문교부 근무 장학관·교육연구관에게는 대학 교원에 해당하는 당해 호봉의 직책 수당을 지급한다)를 적용받았기 때문에 경제적·대우면에서 훨씬 만족하고 있었다.

물론, 인사 서류상 또는 공부상에는 편수직명이 일반 행정직명을, 또는 교육전문직 직명을 표

시하였으나, 그 밖의 일상 업무에서 또는 관련 서류(업무현황, 교육과정·교과서 심의위원 명단 등)에는 관행적으로 편수관으로 기재하고 명패도 편수관으로 표시하였던 것이다. 이같은 통칭어 ‘편수관’ 사용은 1977년 ‘검인정 교과서 사건’이 나기 전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져 왔던 것이다.

• 정태범 교수(한국교원대학교)

편수직 종사자들은 그들의 독특한 전문직적 능력과 자질로서 봉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이들은 학교의 행정가나 장학 담당자로서 봉사하기 보다 편수직의 전문성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그들의 신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편수직에 봉사하는 전문직이 교육 과정을 근거로 한 교육 자료의 제작에 그들의 전문성을 발휘함으로써 보람과 자긍심을 갖게 해주어야 한다. 특히 편수직은 경유하는 자리가 아닌 전문성으로 봉사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평생직이 되어야 할 것이다.

편수 기능은 그 성격으로 보아 교육부 외청의 독립 기관으로 운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성격이 비슷한 다른 기관과 통합함도 가능할 듯하다. 편수직만은 교육 전문직 가운데서도 어떠한 외적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자율적으로 그들의 전문직적 특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되어야 할 것이다.『교과서 연구 제 25호』 pp. 34~35, 서울: 한국2중 교과서협회, 1996. 7.]

• 정완호 교수(한국교원대학교)

현재의 교육부 조직에서 떼어내 외청 형식으로 기구를 설치함이 타당하지 않을까 한다. 그리하여 원장은 1급 상당의 직급으로 보하고 교육 과정 개발 부장과 교과서 편찬 부장은 2, 3급으로 하되 수석 편수관으로 보한다. 부장 밑의 여섯 자리의 편수관(교육과정,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응용과학, 예술·체육 등)은 4급 상당의 편수관으로 보하고 편수관 밑의 각 교과별로 몇 명의 부편수관을 두어 5급 상당으로 한다. 다시 부편수관 아래에는 몇 명씩 6급 상당의 편수사를 두고, 편수사 아래에는 그를 돕는 7급 상당의 부편수사 몇 명씩 둔다. 이상의 직렬을 일목요연하게 나타내면 수석 편수관 → 편수관 → 부편수관 → 편수사 → 부편수사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 이렇게 일반직에 비견할 수 있는 등급이 있다면 평색직으로 하더라도 그들의 욕구를 일부 충족시켜줄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보수체계도 외청으로 두었기 때문에 특수 직렬에 따른 보수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본다.『교과서 연구 제25호』상게서, pp.48~50]

② 편찬 활동

제 3차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새로 개편된 교과서 내용에 부합되는 각급 학교 교과서가 1973년도에 100여 책이 편찬되었다. 즉, 국민학교의 실험용 28책, 본 교과서 34책을 비롯하여 중학교 교과서 19책, 실업계 고등학교 27책, 인문계 고등학교 1책, 교포용 1책 등 국정 교과서 110책을 편찬했고, 종래 여러 갈래로 발행되어 온 사회과 및 외국어과의 영어 검정 교과서를 단일화하여 중학교는 사회·영어 각 3책씩을 편찬하였고, 인문계 고등학교는 계열용 영어 6책을 편찬하였다.

또, 국민학교 교사들의 지도지침이 되는 교사용 지도서 11책과 실업 고등학교 영어 교사용 지도서 1책 및 수출산업 교사용 지도서 4책을 편찬하였다.⁸⁹⁾

89) 4책(수공예, 농산물, 공산물 수산물 교사용 지도서)

제 3차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편찬된 1973년도 국민학교 교과서와 중학교 교과서의 편찬 방침(강조된 사항)을 제시하면 <표 IV-19> 및 <표 IV-20>과 같다.

<표 IV-19> 1973년도에 편찬된 국민학교 교과서(예시)

구분 교과	교과서명	종별	편찬 기본 방침(강조된 사항)
도덕과	바른생활 1-2	실험용 교과서	• 국민 교육 헌장 이념 구현
	" 2-2	"	• 주체 의식 고취
	" 3-2	"	• 새마을 운동과 수출 증대
	" 4-1	본 교과서	• 한국적 민주주의의 이념 체득과 유신 과업 수행
	" 5-1	"	• 평화적 통일을 위한 반공 교육의 강화
	" 6-1	"	
	" 4-2	실험용 교과서	
	" 5-2	"	
	" 6-2	"	
사회과	사회 1-2	실험용 교과서	• 대한민국의 정통성 고취와 주체적 민족 사관과 올바른 국가관 확립
	" 2-2	"	
	" 3-2	"	• 유신 과업 수행, 국민 총화적 단결 강조
	" 4-1	본 교과서	• 한국적 민주주의의 당위성과 독자성 강조
	" 4-2	실험용 교과서	• 민족 문화의 독자성, 우수성 강조
	사회과부도 4-6	본 교과서	• 국력 배양, 국가 안보, 국토 통일, 국토 보전 등 국가의 당면 과제 중시
	국사 5	"	• 근면·자조의 개척적 생활 풍토 조성
산수과	바른생활 1-2	실험용 교과서	• 한국의 국제적 지위 향상 강조
	" 2-2	"	
	" 3-2	"	
	" 4-1	본 교과서	
	" 5-1	"	
	" 6-1	"	
	" 4-2	실험용 교과서	
	" 5-2	"	
	" 6-2	"	
자연과	자연 1-2	실험용 교과서	• 사고의 합리화를 기하여 비생산·비능률성 제거
	" 2-2	"	• 집합 개념을 바탕으로 지도 내용 개편
	" 3-2	"	• 수학적 구조 구명
	" 4-1	본 교과서	• 논리의 엄밀성과 원리의 이해 강조
	" 5-1	"	• 학습 내용의 조기 도입으로 수학적 개념의 조기 지도
	" 6-1	"	
	" 4-2	실험용 교과서	
	" 5-2	"	
	" 6-2	"	
자연과	자연 1-2	실험용 교과서	• 과학적 자세로 탐구 사고하여 과학화 촉진
	" 2-2	"	• 기본 개념의 체계화를 위한 내용 선정
	" 3-2	"	• 탐구 과정을 거쳐 아동 스스로 개념을 파악하여 조장
	" 4-1	본 교과서	• 실험 관찰 내용 제시
	" 5-1	"	• 개념 중심 대단원으로 집약
	" 6-1	"	• 탐구 과정을 체계화하여 기초적인 현상 파악
	" 4-2	실험용 교과서	
	" 5-2	"	
	" 6-2	"	

<표 IV-20> 1973년도에 편찬된 중학교 교과서(예시)

구분 교과	교과서명	종별	편찬 기본 방침(강조된 사항)
국어과	국어 1-1	국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 교육 현장 이념 구현 · 국가 시책의 반영 · 민족 문화의 창달 · 국어사용 기능의 신장
	" 2-1	"	
	" 3-1	"	
국사과	국사	국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족사관의 정립 · 전통 문화의 계승 발전 · 새로운 한국인상 부각
사회과	사회 1	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 민국의 정통성 고취와 주체적 민족 사관과 올바른 국가관 확립 · 유신 과업 수행, 국민 총화적 단결 강조 · 한국적 민주주의의 당위성과 독자성 강조 · 민족 문화의 독자성, 우수성 강조 · 국력 배양, 국가 안보, 국토 통일, 국토 보전 등 국가의 당면 과제 중시 · 근면 자조의 개척적 생활 풍토 조성 · 국력 신장, 한국의 세계적 지위 향상 강조
	" 2	"	
	" 3	"	
외국어과 (영어)	영어 1	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적인 영어(언어) 사용 기능의 습득 강화 · 국적 있는 한국인으로서의 자세 확립 · 세계로 발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질 배양
	" 2	"	
	" 3	"	
실업 가정과	기술 1	국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 인력의 저변 확대 · 창의성 계발 · 농촌의 근대화 촉진(영농의 과학화) · 실기 교육의 강화(실습 교재 부록 편찬)
	" 2	"	
	" 3	"	
	농업 2	국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화된 생산 기술의 반영(실용적 기술, 새로운 품종과 자재 등의 도입) · 합리적인 농업 경영의 강조 · 새마을 운동의 도입 전개
	" 3	"	

교육의 질적 개혁은 교육과정의 개정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교사나 학생에게 더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교과서나 교사용지도서의 내용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따라서 문교부에서는 교육과정 개정을 위하여 여론 조사와 충분한 검토 심의를 거친 것과 마찬가지로 교과서 개편을 위해서도 교과 내용의 요소 분석,⁹⁰⁾ 편찬 방향 설정, 제재 선정, 집필진 선정, 내용 심의, 보완 조정 등의 절차를 밟아 내용의 충실

90) 제 3차 교육과정기 초기 단계 ‘교과서 분석 덕목·소제 일람표’(문교부 편수관실)는 다음과 같다.

1. 덕목(22개): 인사·경애·박애·관용반성·친절·정의·명량·정직·공명정대·근면·자주·협동·검소·책임·용기·인내·창의·개성신장·심미·탐구·건강
2. 소제(60개): ① 국가관(7), ② 국가 방위(7), ③ 민족전통 계승발전(6), ④ 국가발전(8), ⑤ 과학기술(5), ⑥ 생활질서(8), ⑦ 환경개선(7), ⑧ 생활향상(8), ⑨ 인류공영(4)

을 기하였다.

제 3차 교육과정 전반기에 들어서면 교과서에 대한 국가통제는 한층 강화되었다. 제 3차 교육과정은 일명 학문 중심 교육 과정으로도 불리고, 실제로 교가서가 이 원칙에 의하여 개편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에 모든 교과서가 전적으로 학문 중심 교육 과정에 입각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것보다 더욱 두드러진 특징은 정치적 이념 교육이 교과서 내용에 노골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정권의 요구와 유신 체제 및 국민 교육 현장 등 외적 요인 때문에, 본래의 교과서 편찬 기능에 허점이 생긴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와중에서 교과서는 기존의 체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정치적 이념을 반영하는 데에 더 많은 비중을 두게 되었다. <표 IV-19>와 <표 IV-20>에 나타나듯이, 이 시기 교과서 편찬의 기본 방침을 보면, 수학과 과학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교과에 국민 교육현장 및 유신체제에 관한 홍보 내용이 실리도록 되어 있었다.⁹¹⁾

그러나 제 3차 교육과정의 후반기에 들어서면 이러한 특성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1977년에 ‘검정 교과서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 사건을 기점으로 교과서 정책에 큰 변화가 나타났다.

즉, 1977년 8월 22일 대통령령 제 8660호로 제정 공포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과용 도서의 저작, 검정·인정, 발행·고급 및 가격 사정에 관한 사항이 바뀌었으며, 또 문교부에서 교과서 편찬 및 발행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오면 편수국이 장학실에 편입되었다. 이러한 변화들은 집적적으로는 1977년에 야기된 ‘검정 교과서 사건’ 때문이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국가 주도(엄밀히 말하면 편수관 주도)의 교과서 편찬 방식에 변화를 가져오면서, 교과서 편찬 업무의 전문화 요구가 부상되었던 데에 원인이 있다. 실제로 중·고등학교의 1종 교과서의 경우, 한국교육개발원, 서울대학교 과학교육연구소,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서울교육대학, 국사편찬위원회, 충남대학교 공업교육대학, 홍익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등 다양한 기관들이 교과서 개발에 참가함으로써 교과서의 수준은 한층 제고되었다.⁹²⁾

4) 교과용도서 심의회

교과서 행정에 관련되는 심의회는 교육과정심의회와 국정교과서 편찬심의회(1종도서

91) 이혜영 외, 『한국근대학교 교육 100년사 연구(Ⅲ)』, p.128~130,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98. 12.

92) 이혜영 외, 앞게서, 130.

편찬심의회)가 있다. 본 고에서는 교과서 편찬 심의회 중 앞에서 언급한 것은 피하고 서술하기로 한다.⁹³⁾

① 1종 도서 편찬심의회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 7조(심의회 구성)에 의하면, “각 심의회는 15인 이상 21인 이내의 위원으로 위촉한다.”고 했다. 그런데 ‘교과용도서 저작·검인정령’ 제 7조에 비하면 1종 도서 편찬심의회에 관한 세부 사항이 보다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심의위원의 선정은 담당 편수관의 추천으로 행해졌으며, <표 IV-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심의회(교과별) 및 인원수의 증감폭은 연도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표 IV-21>제 3차 교육과정기 국정(1종) 교과서 편찬심의회 분과 및 인원 현황

연도	학교별·교과별 심의회수	인원	비 고
1973	73	631	‘교과용 도서 저작·검인정령’ 시기
1974	73	647	“
1975	72	650	“
1976	84	766	“
1977*	-		“
1978	50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시기
1979	-	915	“

자료: 문교부, 「1973~1981년도 국정교과서(1종) 편찬심의회 회원명단 유인물」

*1977년도 편찬심의회 심의위원 명단은 의촉하지 않았음.

1종 도서는 편찬하는 교과목별로 심의회를 구성하는데 초·중·고등학교 교과별로 상설 심의회를 구성해 놓고, 당해 연도에 편찬하는 교과목은 그때그때 심의회를 구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또, 초·중·고등학교를 통틀어 교과 단위로 1종 도서 심의회를 구성해 놓으면, 이와 관련된 각급 학교의 교과목을 편찬할 때에는 편찬의 방향, 수준, 학습 분량 등을 일관성 있게 조정하고, 편찬 방향을 제시해 줌으로써 각급 학교급별 내의 교과목의 계열성과 계속성이 유지되고, 그 교육 과정 기간 동안 일관성 있는 교과용 도서의 편찬이 제고된다는 사실이다.

② 2종 도서 심의회의 구성과 기능

2종 도서 심의회도 교과서별로 상설 위원회를 만들어 심사 기준의 심의를 이 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고, 검정하는 과목은 필요할 때 구성하여 현재와 같은 방법을 활용하되, 여기에 교과 담당 편수관이 1차 심사 때부터 참여하여 심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93) 김용만 외, 전계서, 200~201.

중수를 제한할 때는 심사에 따른 부담이 있었지만 지금은 일정한 심사 기준에 도달하면 합격할 수 있고, 불합격의 경우 재심의 기회가 계속 주어지므로 이의 시행이 필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육 과정의 기본 정신에 부합되는 교과용 도서를 결정하는데 기여한다고 본다. 따라서 2종 도서는 교과별로 상설 심의 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사 기준과 검정 기준을 작성하고, 검정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적 발전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⁹⁴⁾

5) 교과서 가격 사정

교과서의 가격 사정은 교과서의 출판 및 검인정 절차와 함께 교과서 행정의 중요한 부분이다. 즉, 교과서의 가격은 교과서의 질적 수준, 출판사의 이익, 학생들에게 주는 부담 등 여러 가지 요인들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제 3차 과정기의 교과서 가격 사정은 ‘교과용 도서 저작·검인정령’ 시기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시기로 나누어 논의하기로 한다.

① 교과용 도서 저작·검인정령 시기

제 2차 교육과정기인 1960년대의 정가사정 방법은 1950년대의 정가산출방법을 좀 더 세분화한 것으로 특히 공임의 경우 조판공임(투입원가 인정, 외부 작업분 공제)과 기타 공임(인쇄공업협동조합 협정요금의 25%를 감한 요금)으로 나누었으며, 공급 수수료를 15%에서 10%로 조정하였다. 그러다가 1970년대에 들어서서야 교과용 도서 저작·검인정 제도가 등장하였다. 즉, 1970년대의 법령 개정 내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⁹⁵⁾

- 1970. 8. 3 “교과용 도서 저작·검인정령” 제정 공포(대통령령 제 5252호)
- 1970. 11. 25 “교과용 도서 저작·검인정령 시행세칙”(문교부령 제 270호)
- 1971. 7. 26 제1차 개정 저작·검인정령(대통령령 제 5723호)
- 1971. 11. 25 1차 개정 시행세칙(문교부령 제285호)
- 1972. 7. 11 2차 개정 저작·검인정령(대통령령 제6281호)

-문교부장관에게 제조공정표, 공급계획서, 정가산출표 등의 발행 계획서 제출, 교과서전시회 (제 30조) 개최의 규정)

이중 중요한 사항을 몇 가지 짚어보면 1970년 8월 3일 국정교과서 편찬규정과 교과용 도서 검인정 규정을 교과용 도서 저작·검인정령으로 개정하여 원가조사에 의한 단위당

94) 「교과서 연구 제 25호」, 전계서, pp. 58~59.

95) 김태웅 외, 「교과용 도서 정가 결정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화 방안」, ‘연구보고서 98-2’, pp. 25~26, 서울: 한국교과서연구소, 1998. 12.

가격의 정산산출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했다. 이 제도하에서의 정가 구성요소는 재료비, 인쇄·제조비, 영업비, 공급수수료, 인세(국정교과서를 제외한다) 등이다. 또한 발행자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검정을 받은 저작자는 2월 이내에 발행자를 지정하여 문교부 장관의 승인을 득하도록 하였다.

한편 1976년 3월 18일의 교과용 도서 저작·검인정령(대통령 제8606호) 3차 개정에서는 정가사정 기준의 법령화 및 물가조사에 의한 정가산출제도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교과서 가격의 구성 요소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 재료비: 감모량 규정(옅싯인쇄 1.5%색도, 활판인쇄 3%색도)
- 인쇄·제조비: 제판·인쇄 제본의 물량
- 영업비: 교과서의 공급에 필요한 제잡비(역무비 포함) 규정(국민학교 20%, 중고등학교 국정교과서 21.5%, 검정교과서 25%)
- 공급수수료: 공급인이 학교에 공급할 때 필요한 경비로서 가격총액의 11%로 규정(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 동일)
- 인세(국정교과서 제외): 가격 총액의 10%
- 단위당가격: 2 이상의 공인물가 조사 기관의 조사가격으로 결정
- 교과서 전시회

②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시기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⁹⁶⁾ 시기부터 국정과 검정으로 구분해오던 교과서 발행 제도

96)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중 '가격 사정'

제 7장 가격 사정

제 35조 (가격 사정) 교과서 및 지도서의 가격은 원가 요소별로 문교부 장관이 사정한다. 다만, 개편 또는 수정의 경우에는 이미 발행된 교과서 및 지도서의 평균 쪽당 단가를 적용하여 사정할 수 있다.

제 37조 (제조 원가, 총 원가 및 판매 가격) 교과서 및 지도서의 제조 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및 제조 간접비를 합한 액으로, 총 원가는 제조 원가와 영업비를 합한 액으로, 판매 가격은 총 원가에 발행자의 이윤과 저자의 인세를 합한 액으로 한다.

제 38조 (제조 원가의 계산) ① 제 37조의 규정에 의한 교과서 및 지도서의 제조 원가를 계산함에 있어 직접 재료비는 투입된 총 물량에 단위 단가를 곱한 액으로, 직접 노무비는 산출된 총 물량에 단위 단가를 곱한 액으로, 직접 노무비는 산출된 총 물량에 단위 단가를 곱한 액으로, 직접 경비는 투입 산출 또는 취득한 물량에 단위 단가를 곱한 액으로 하며, 제조 간접비는 전년도 제조 간접비 총 액 또는 추산 근거를 명백히 한 추정 제조 간접비 총액에 연간 총 인쇄량에 대한 당해 교과서 및 지도서 인쇄량의 비율을 곱한 액으로 하되, 제조 간접비는 당해 교과서 및 지도서 제조 원가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적용할 단위 단가는 공인된 2이상의 물가 조사 기관의 조사 결과 최저 가격에 따르되, 제조 원가 산출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하여 결정된 단위 단가는 직접 재료비의 경우에는 6월간, 직접 노무비의 경우에는 1년간 이를 적용할 수 있다.

제 41조 (인세의 계산) 인세는 다음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1종 도서의 경우에는 인세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가 1종과 2종으로 변경되었다. 이와 함께 1978년 2월 9일 1차 개정(대통령 제 8849호)을 통해 원가 계산 이론에 의한 정가사정방법이 도입되었다.

이 제도하에서의 정가 구성요소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제조 간접비, 영업비, 발행자 이윤, 인세 등이다. 그러나 가장 급격한 변화는 '50~'77년까지 유지해온 공급인 제도를 폐지하고 교과서 공급 대행기관 지정 제도를 신설한 것이었다. 검인정 교과서 발행을 국정교과서(주)에 당분간 일원화하는 특별조치를 단행하였다.

이를 계기로 일본 교과용 도서의 정가 제도를 모방해오던 주먹구구식의 기존 교과용 도서 가격사정제도가 기업회계방식의 원가계산 방식으로 대폭적인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이 제도는 계산상의 어려움과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등을 이유로 1983년 12월 3일 종전 형태의 가격사정방식으로 환원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교과용도서의 가격 결정 제도의 변천 과정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IV-22> 단위 가격의 원가 구성과 변천

구 분	도입기 (1950~1977)	개혁기 (1977~1983)		정체기 1983년 12월 이후
	일본 교과서 정가 인가 방식 모방	- 교과서 검인정 사건 - 물가 조사 의뢰 제도 폐지 (민간물가 조사 기관 난립) ‘78. 3. 6 원가 계산 용역 기관 지정 - 이론적인 원가계산방식 (기업회계 원가방식)도입		개혁기 이전 도입기로 회귀

원 가 와 비 용 구 성	재료비	직접비	재료비	재료비	
	인쇄·제조비		노무비	인쇄·제조비	
			경비		
		간접비	제조부문		
	영업비	영업비	일반관리비 및 판매비	일반관리비	
	발행자 이윤			발행자 이윤	
	공급 수수료			공급 수수료	
	인세			인 세	
				기타 경비	심의본비 폐기도서

$$\text{인세} = (\text{제조원가} + \text{영업비} + \text{이윤}) \times \frac{1}{9}$$

제 42조 (책당 정가의 계산) 책당 정가는 다음에 의하여 계산한다.

$$\text{책당정가} = \frac{\text{판매가격}}{\text{발행부수}}$$

제 45조(정가의 공고) 문교부 장관은 교과서 및 지도서의 가격을 결정하였거나 재사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 이보령 실장(교육부 기획관리실)

문교부 편수국, 한 마디로 풍비박산 그대로였다. 소위 ‘검인정 교과서 사건’으로 일컬어지는 회오리 바람에 편수국의 대부분의 사람이 수감 또는 면직되고, 업무는 거의 마비상태에 있었다. <중략> 솔직하게 말해서, 그때까지만 해도 발행과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잘 알지를 못했다. 그 엄청난 사건 후에 무슨 일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갈피를 잡기가 어려웠다.

무엇보다 급한 것이 내년도 교과서를 제때에 생산, 공급할 수 있느냐는 문제인데, 이 문제에 손댈 틈도 없이 교과서 가격을 재사정하라는 상부 명령에 얹매어야 했다. 교과서 가격사정에 관한 한 나는 누구보다도 할 말이 많은 사람 중의 한 사람이다.

교과서라고 해서 원가 구성요소가 특별히 다를 까닭은 없다. 재료비, 노무비, 일반관리비 등 원가 구성요소별로 원가 산정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그런데 왜 못 하느냐? 두 가지 심각한 문제점에 봉착하게 된다.

첫째, 노무비를 교과서 제작 기간 중에 교과서 제작에 투입된 노무비만 인정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다. 전시(戰時)를 대비하여 막대한 방위비를 투입하면서 군대를 유지, 관리하듯이 교과서 회사는 교과서 생산을 위하여 교과서 생산 기간이 아닌 기간 중에도 기술 인력을 유지, 관리해야 한다. 물론, 이 기간 중에는 외주 인쇄물을 받을 수는 있으나, 교과서 생산에 지장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수주에 많은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둘째, 이론적 원가에 근거한 가격 사정을 할 경우, 현실적으로 너무나 큰 모순이 생긴다는 점이다. 교과서는 발행 부수가 수십만 부로부터 단 몇십 부에 이르기까지 과목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발행 부수에 따라 1책당 단가가 현저한 차이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데, 발행 부수가 적어 책당 단가가 몇 배 내지 몇 십배 비싼 책은 모두가 실업계학교의 전문 교과에 속하는 과목들로서, 이는 일반교과의 교과서보다 더욱 저렴하게 공급해야 할 대상이라는 현실적 모순에 봉착하게 된다.

<중략> 이처럼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마련한 가격사정 방법이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규정되고, 이에 따라 교과서 가격을 전면 재사정하기에 이르렀는데, 교과서 가격사정 방법의 모색보다 더한 고민이 생겼던 것이다. 새로 마련한 방법에 의하여 교과서의 가격을 전면 재사정한 결과, 가격의 하락폭이 의외로 컸기 때문이다. 당시 청와대 사정팀과 감사원에서는 나름대로 가격을 재사정해서 감춰두고 문교부의 재사정 결과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재사정안을 가지고 미리 청와대와 감사원에 갔더니, 더 삭감할 수 있는데 왜 이 정도밖에 삭감하지 않느냐는 질책이다. 더 삭감하면 내년도 교과서 생산과 공급을 책임질 수 없다고 맞서(?) 겨우 조율이 끝났으나, 가격 삭감 내용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라는 지시를 거역할 수 없는 괴로움이 고통으로 느껴졌다. 왜냐 하면, 당시 구치소에 수감되어 재판을 기다리던 분들은 교과서 가격의 재사정 결과가 재판에 악영향을 끼칠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다는 전갈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교육과정·교과서연구회편, 「편수의 뒤안길 제 2집」, ‘교과서 가격 사정과 적기 공급에 얹힌 얘기들’, pp.145-147 중에서, 서울: 대한교과서(주), 1995. 9]

* 필자 이보령은 당시 문교부 발행과장이었음(1977-1978).

(2) 국민학교 교과서 편찬·발행

문교부는 교육법 제 1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학교 교과서의 저작권을 가지며, 편수국의 편수과와 발행과가 교과서 편수행정을 그리고 편수관실은 교과용 도서의 편수와 검인정 등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담당하였다. 여기서는 문교부 편수국(’78년은 장학실이 통합시는 단당관계)이 주관했던 국민학교 국정교과서의 편찬, 발행(출판), 공급 등에 대해 서술하기로 한다.

1) 교과서 편찬 제도

국민학교 국정교과서의 편찬은 ‘교과용 도서 저작·검인정령’⁹⁷⁾ 시기에는 편수관 주관 하에 편찬 진행하였으며, 1977년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시기부터는 연구기관 또는 대학 등에 위탁하여 편찬하였다. 본 고에서는 이 두 시기의 편찬 제도를 서술하기로 한다.

① 교과용 도서 저작·검인정령 시기

이 시기(1977. 8. 21 이전)의 교과서 편찬은 편찬 진행 전반에 걸쳐 담당 편수관이 계획을 세워 장관 결재를 얻어 추진하였다. 교과서 편찬 발행은 당년 집필 위촉하여 연내로 조판, 심의, 교정, 인쇄하여 익년도 초까지 발행 사용케 하였다. 편찬 절차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단원 편성·예정 분량 선정
- 원고 위촉(집필 위촉장, 원고지 발송)
- 원고 수집 및 정리(편수관이 검토 후 원안 작성)
- 국정교과서 교과별 심의 회의
- 삽화 위촉 및 수집
- 원안 정리 조판 회부(장관 결재)
- 조판본 교정(7차 교정, 지정연구학교 검토)
- 교료(校了) 및 인쇄 회부

먼저 편찬계획은 교과 담당 편수관이 소정의 절차를 밟아 매년도 초에 편찬할 교과서의 종류를 결정하고 규격, 체제, 내용의 대강, 집필자 및 삽화가의 선정 범위, 예산, 업무 진행 일정을 계획하여 장관의 결재를 얻어 시행한다. 그리고 집필 세부 작업은 편수관이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교과서의 상세한 내용, 도표, 사진·삽화의 종류 등에 대한 집필 세부 계획을 세워 집필자에게 넘긴다. 본 작업이 보통 1주일 정도가 소요된다.

교과서의 집필과정은 우선 첫 단계로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교과서의 단원을 설정하고, 단원별로 원고의 분량, 내용의 방향 등에 관한 집필 계획을 편수관이 작성한 후, 교과목마다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3~5명의 집필자를 추천하여 장관의 결재를 얻은 후 집

97) 제 3차 교육과정기의 교과서 행정은 제 1기(1973~1977)와 제 2기(1978~1981)로 구분하고 (안귀덕 교수, ‘한국의 교과서 변천사’, pp. 80~84, 서울: KEDI), 안희천 KEDI 연구원은 제 3기를 더하고 있다(같은 책, p.123). “이것은 제 4차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교과서의 개발로서 2종 도서의 과목을 확대하여 자율화를 포함과 동시에 경쟁을 어느 정도 고취한 시기이다.”고 언급하였다.

필을 위촉하였다.

이 때 집필자가 지켜야 할 집필 기준으로는 각 교과목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지침⁹⁸⁾과 교과목 특성에 따른 교과목별 지침이 있었다. 이상의 집필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집필기간(약 3개월)이 짧았으며, 원고료가 너무 저렴하다는 점 등이었다.

②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시기

이 시기(1977. 8. 22 이후)의 교과서 편찬은 동 규정 제 2장(1종 도서)에 따라야 하며,

98) 「국정 교과용 도서 집필 요령(초·중·고 공용)」 유인물, 문교부 편수국(‘교과용 도서 저작·인정령’ 검인정령 시기 사용)

1. 과목은 교육과정 편제에 따른다.
2. 내용은 교육과정에 따르되 교과목의 계통성을 고려하여 해당과목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조직 전개한다.
3. 분량은 집필 의뢰서에 지정하는 바에 따른다.
4. 내용은 전국적인 시야에서 보편성을 고려하여 특수 지역이나 특수 시설을 갖춘 학교에 치우치지 않도록 한다.
5. 학생 심신의 성장 발달에 유의하여 학습의 계통적인 발전을 기하도록 한다.
6. 문장은 한글 전용으로 서술하고 표준말로 간결, 평이하게 상체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국민학교 3학년 이하는 경체).
7. 어휘의 배열은 국어 교과서를 기준으로 하여 선택 사용한다.
8. 해당 교과목만에 속하는 부분은 창의적으로 설명을 전개할 수 있으나, 타 교과 영역에 속하거나 중복되는 부분은 해당 교과목의 설명과 모순됨이 없도록 한다.
9. 특별한 경우 외에는 생존에 있는 인물에 관한 기사는 수록하지 않는다.
10. 특별한 종교, 사회 단체 등을 편파적으로 선전하거나 비난하는 내용이어서는 안 된다.
11. 편협된 견해나 특정상품을 선전하는 내용이 있어서는 아니되며 보편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12. 연구문제와 연습 문제를 다수 수록하여 자학 자습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13. 인명지명은 「편수자료」 4집, 수학·물리·화학의 용어는 「편수 자료」 5집에 따른다. 그 밖의 용어는 국정교과서에서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는 용어에 따르되, 편수국에서 제정한 용어 또는 과학기술용어 제정 위원회에서 제정한 용어인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4. 로마자의 한글화 표기와 한글의 로마자 표기는 문교부 제정에 따른다.
15. 삽화는 학습 전개에 필요한 부분에 넣되 삽화의 크기는 실 인쇄물 크기의 1.5배 이내로 하고, 그림·사진, 통계표 등은 정확하고 선명한 것을 크기(cm×cm)와 아울러 위치를 지적한다.
16. 길이, 무게, 넓이, 부피 등의 단위는 미터법을 쓸 것이며, 석, 평, 인치 등 척관법 또는 야드, 파운드법을 쓰지 않는다.
17. 단원 표시는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 대 단원 I, II, III - 면바꿈
 - 중 단원 1, 2, 3 - 행바꿈
 - 소 단원 (1), (2), (3) - 행바꿈
 - 본 단원 (가), (나), (다) - 3자땀
18. 기타 참고 사항
 - (1) 수락한 기일을 엄수한다.
 - (2) 정해진 원고분량을 엄수할 것.
 - (3) 집필한 원고는 개인 출판에 옮기지 못한다.
 - (4) 타인의 저서를 옮겨서는 안되며, 부분적으로 인용한 경우에는 그 근거를 밝힌다.
 - (5) 집필자는 편찬 심의회의 결의에 따라 원고에 수정을 가하고, 또 교정에 응한다.
 - (6) 집필자는 완성된 원고에 따라 소정의 원고료를 받는다.

참고로 1977년 8월 문교부 발행 ‘1종 교과서 및 1종 지도서 연구 개발을 위한 편찬기본 계획서’의 해당 내용을 발췌 인용하기로 한다.

1종 도서는 연구기관 또는 대학 등에서 해당 분야의 많은 전문가들이 연구, 집필, 심의, 교정, 현장실험, 수정 등의 과정을 거쳐 공동으로 연구개발하는 교과서와 교사용지도서를 말한다. 그리고 1종 도서의 편찬기능은 기획감독기능과 연구편집 기능으로 나누고, 기획감독기능은 문교부가 수행하고, 연구편집기능은 연구기관 또는 1종도서 연구개발위원회가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과용 도서의 편찬은 현행 교육과정구성의 기본 방향, 기본 방침, 일반 목표의 기초 위에 바탕을 두며, 집필상의 기본 지침⁹⁹⁾에 따르도록 하였다.

문교부는 1977년 8월에 김인정 교과서 사건 후, 1979학년도부터 사용할 1종 교과서(국정교과서) 238책을 27개 연구기관 등에 편찬 위탁하였다. 그리고 제 3차 교육과정기에 국민학교 1·2·3학년용 교과서와 4학년용 ‘자연’의 일부 교과서가 원색화되었다. 또, 이 시기에 용지는 특수 갱지를 사용하였으며, 표지는 제 2차 교육과정기까지는 클로즈에 편면(片面) 마닐라지를 사용하였으나, 제 3차 시기부터는 180g/m² 모조지에 유선철통표지(筒表紙)로 예쁘게 만들어진 상당히 발전된 교과서로서, 판형은 종전처럼 그대로 국판이었다.¹⁰⁰⁾

③ 교과용 도서 편찬 예산

교과용 도서 편찬 예산을 연도별, 각급학교 교과서별, 그 밖의 실정에 따라 구분해서 밝히는 게 좋겠으나, 수집 자료가 부족하고, 또 제 3차 교육과정기에는 교과서 가격 사

99) 문교부, 「1979학년도부터 사용할 1종 교과서 및 1종 지도서 연구 개발을 위한 편찬 기본 계획」, pp. 12~17, 1977. 8(유인물).

1. 김인정령 시기 ‘집필요령’ 18항목에 비해 새 규정의 ‘집필상의 기본 지침’(일반적 지침)은 26개항이었다.
2. 교과서 일반적 항목: ① 교육 목적과의 일치 ② 교육목표와의 일치 ③국시 국책과의 일치 ④ 긍정성의 유지 ⑤ 교육과정 내용의 반영 ⑥ 내용의 정선 ⑦ 내용의 수준 ⑧ 내용의 진실·정확성 ⑨조직의 체계 ⑩ 조직의 균형성 ⑪ 진술의 통일성 ⑫ 표현·표기의 적합성 ⑬ 창의성 ⑭ 편의성 ⑮ 편집 및 편찬체제 ⑯ 보편성 ⑰ 개념과 과정 ⑱ 교과와 계열성 ⑲ 내용의 선정조직 ⑳ 타 교과와의 관계 ㉑ 연구·연습문제 ㉒ 표절의 배제* ㉓ 인물기사의 제한 ㉔ 편파성의 배제 ㉕ 계량단위 ㉖ 교과서의 분량

* ‘국정 교과서 집필 요령’ 18항과 ㉒ ‘표절의 배제’에서 저작권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제 3차 교육과정기에는 교과서에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게재)하는 경우, 교과서는 임의 게재를 가능하게 했으나 학습 참고서인 경우,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해석이다. 그런 점에서 이 시기에는 교과용 도서 편수 활동에는 저작권 사용료에 대한 어려움이 별로 없었다.

100) 국정교과서(주) 35년사 편찬위원회, 「국정교과서 35년사」, p. 555, 서울: 국정교과서(주) 1987. 3.

정 항목 대변혁이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 제 3차 교육과정 초기 연도(1974년), 즉 ‘검인정령’ 시기의 것과 ‘검인정 교과서 사건’ 직후, 즉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시기의 것(1977년) 및 그 시기 후반기 것(1981년) 등 세 부분으로 나누어 정리하기로 한다.

가. 검인정령 시기의 편찬 예산

1974년도 편찬비 소요 예산(국민학교용 책당)은 다음과 같다.¹⁰¹⁾ 자료 분비로 구체적인 내용(원고료, 삽화료, 제도, 표지도안 등)이 빠져 있다.

<표 IV-23> 편찬비 소요 예산(책당)

(단위 : 원)

항목	예산	항목	예산
원고료	170,000	편찬 작업비	120,000
삽화료	100,000	심의 수당	160,000
합 계		550,000	

나.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시기(1977년도)의 편찬 예산

문교부에서 1977. 8 작성한 편찬 기본 계획¹⁰²⁾에 따르면 < 표 IV-23 >과 같다. 이 예산 계획은 ① 연구 개발에 필요한 예산은 책당 산출하고, ② 연구 개발비는 연구 개발 위원회¹⁰³⁾에서 신청하며, 문교부 장관이 이를 심의·조정·책정한다는 게 방침이었다.

다. 교과용 도서에 관한 시기(1981년 -1984년)의 편찬 예산

1980. 7. 30에 당시 국가 보위 비상 대책 위원회의 문교공보분과 위원회가 발표한 「교육정상화 및 과열과의 해도 방안」이라는 이름의 교육 개혁을 우리는 흔히 「7.30

101) 문교부 편수국, 「편수업무 현황 - 교육내용 개선 중심으로 -」, p.12, 유인물.

102) 문교부, 「1979학년도 사용할 1종 교과서 및 1종 지도서 연구 개발을 위한 편찬 계획서」, 전게서, p. 106-108.

103) 문교부, 앞게서, p.102.

1종 도서 연구 개발위원회 구성: ① 구성 원칙: 연구개발기관 중 연구소는 1종 도서 연구 개발위원회를 대신하고 대학 또는 학회 등에서는 1종 도서 연구개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연구진: 교육과정 전문가 또는 교과교육전문가,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③ 집필진: 당해 교과 중등학교 교육경력 5년 이상 또는 대학(전문학교 포함)의 전임 강사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자로 구성한다. ④ 협의진: 해당 교과의 전문가와 현장 교사 등으로 구성하고, 연구계획, 집필세부계획, 원고본 교정·수정 현장 실험 등 해당 도서의 편찬에 관한 내용을 심의한다.

교육개혁」이라 부른다.

즉, 1980. 7. 30일 교육개혁 조치에 따라 초·중·고 교육과정을 개정하여 1981. 12 중
고시할 방침으로 추진 중인 1981. 5월 문교부 편수국에서는 현행 초·중·고 교과용 도
서를 전면 개편하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이 때의 연도별 소요 예산액은 <표 IV-25>
와 같으며, 1982년도 교과용도서 편찬 소요 비용 산출(예시)를 참고로 제시한다.¹⁰⁴⁾

<표 VI-24> 연구 개발비 산출 기준

단위 : 원

품명	규격	단위	'77년 단가				
작시작사료	편	1편	6,000		원색 120m/m	"	5,000
작곡료	곡	1곡	8,000	모필료	국판	"	3,000
편곡료	곡	1곡	6,000	경필료(글씨본)	"	"	2,400
삽화료	원색국판	1매	5,000	지도제도	4×6 배판	"	13,000
	" 1/2	"	4,000		국판	"	10,000
	" 1.4	"	3,000		국판 1/2	"	7,000
	단색국판	"	3,000	지 도	" 1/4	"	5,000
	" 1.2	"	2,000		4×6 배판	"	7,000
	" 1/4	"	1,500		국판	"	4,000
표지도안	4×6 배판	"	10,000		국판 1/2	"	3,000
	국판	"	6,000		" 1/4	"	2,000
미술작품	원색국판	"	5,000	외국어 교과서 원고	타자지	"	3,000
	" 1/2	"	3,000	제 도	국판	"	5,000
	" 1/4	"	2,000		국판 1/2	"	3,000
	단색국판	"	2,000		국판 1/4	"	2,000
	" 1/2	"	1,500		4×6 배판	"	7,000
	" 1/4	"	1,000	원고료	(20×10)	매	800
사진작품	원색 실사판	"	3,000	개고료	"	"	800
	" 복사판	"	1,400	번역료	(20×10)	"	400
	흑색 실사판	"	2,000	(외국어를 한글로)			
	" 복사판	"	1,000	번역료	(20×10)	"	2,000
슬라이드	원색 35 m/m	"	3,000	(한글을 외국어로)			
				편집비	1인	1책	40,000
				수정검토료	"	1책	60,000
				협의회수당	"	1책	5,000

104) 문교부 편수국, 1981. 5. 9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 편찬 계획」 중 일부 내용 발췌

<표 IV-25> 연도별 교과용 도서 개편 소요 예산

단위: 천원

구분 \ 연도별	'81	'82	'83	'84	계
교과용도서 개편수	119책	385	426(-197)	228	1,158
소요예산	703,919	5,144,097	3,258,910	3,244,497	12,351,423

<표 IV-26> 1982년도 교과용 도서 편찬 소요 비용 산출

목별	세목별	교과서(고등학교 국판 300p)	지도서(동일)
보조비 (보조 기관 집행)	원고료	300p×4매×2,500=3,000,000	300p×9매×2,500=6,750,000
	삽화료	100매×20,000 = 2,000,000	100매×20,000=2,000,000
	표지도안료	1매×25,000 = 25,000	1매×25,000=25,000
	사진원화료	6매×10,000=60,000	6매×10,000=60,000
	회의수당	10명×10,000×3일×3회=900,000	10명×10,000×3일×3회=900,000
	인건비	220,000×12월=2,640,000	220,000×12월=2,640,000
	프린트비	200,000×2회=400,000	200,000×2회=400,000
	자료구입비	80,000=80,000	80,000=80,000
	여비	2명×18,500×5일×3회=555,000	2명×18,500×5일×3회=555,000
	집중작업비	15,000×5명×3일×2회=450,000	15,000×5명×3일×2회=450,000
	소 계	10,110,000	13,860,000
편찬비 (각부 집행)	심의수당	9일×18명×10,000=1,620,000	9일×18명×10,000=1,620,000
	현장실험여비	2지역×25,500×5일=255,000	2×25,500×5일=255,000
	인쇄비	1,950×20부×3회=117,000	1,950×20부×3회=117,000
	표기법및내용검토사례	3명×100,000=300,000	3×100,000=300,000
	집중작업비	40,000×3명×2회=240,000	40,000×3명×2회=240,000
	기타	700,100	700,000
	소 계	3,202,000	3,202,000
합 계		13,312,000	17,062,000

<표 IV-24>와 <표 IV-26> 소요 예산 내역 등을 보면, 제 3차 교육과정기 후반기의 교과용 도서 편찬에 관한 원고료(2,500원), 삽화료(20,000원), 표지 도안료(25,000원), 회의수당(교과서 편찬 심의수당, 10,000원) 등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문교부는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교과용 도서 편찬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과정 적용 연도에 교과서를 발행 공급하였다.

2) 교과서 출판제도

① 교과서 출판 조직

‘검인정령’ 시기의 국민학교 교과서의 발행에 관한 행정적인 업무는 문교부 편수국 발행과에서 담당하였다. 그러나 문교부가 저작권을 가지는 국정 교과서의 번각발행 및 출판은 문교부가 그 업무를 위촉 대행시켰던 3개 회사, 즉 편수국 발행과의 보조기관인 국정교과서(주)와 민간업체인 고려서적(주)과 문화서적 공사가 맡고 있었다. 문교부는 교과서의 발행 및 출판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계획 수립하여 3개 회사에 교과서 생산에 관한 세부내용을 지시하는 행정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제 3차 교육과정기인 1974년도 3개사가 가지고 있던 교과서 발행 상황을 보면, 국정 교과서(주)가 ‘국어’를 비롯해서 7과목 57종이고, 고려서적(주)가 ‘바른생활’을 비롯 4과목 22종이었으며, 문화서적이 ‘체육’을 비롯 3과목 12종이었다. 그 후 국민학교 교과서의 번각 발행권의 일원화가 1979학년도부터 시행되어 국정 교과서(주)로 일원화되었다. 이로써 국정교과서(주)에서는 1종 교과서 전량을 자체 생산하게 되었고, 일부 교과서의 업무 대향으로 넘겨주었던 번각 발행권을 모두 회수하였다.¹⁰⁵⁾

<표 IV-27> 교과용 도서 발행권 현황

연도 회사	'73-'76		'77		'78		'79-'80	
	과목수	종수	과목수	종수	과목수	종수	과목수	종수
국정교과서	7	57	7	57	9	72	11	79
고려 서적	4	22	4	22	3	10		
문화 서적	3	12						
동아 서적			3	12	2	9		
합 계	14	91	14	91	14	91	11	79

② 출판(생산)과정

국민학교 국정 교과서의 생산은 시장 생산이 아닌 주문생산의 형식을 취하고 있어 생산에 관한 기획은 교과서의 공급자보다는 교과서의 수요자와 문교 정책 결정자의 영향

105) 국정 35년사 편찬위원회, 「전계서」, pp. 279-280.

을 받아 수립되는 게 상례였다.

교과서 생산의 첫 단계에서 할 일은 생산계획을 확정하는 일이다. 국정 교과서(주)의 교과서 생산 계획은 예비 생산 계획과 확정 생산 계획의 두 단계로 되어 있다. 문교부로부터 교과서 원고가 입수되면 전학기의 재적 아동수와 교과서 공급량을 고려해서 당해 학년 또는 당해 학기의 소요 예상 부수를 산정하고, 여기에 주문 부수를 산정하여 총예상 부수를 산정한 다음 총소요 예상 부수의 50%에 해당하는 부수를 목표량으로 한 생산계획을 수립하여 문교부의 승인을 받는다. 이 때에 문교부에 제출된 생산계획이 예비 생산 계획이다. 문교부는 제출된 교과서 예비 생산 계획을 검토·조정해서 승인한 다음 교과서회사에 송부한다.

3) 교과서 발행 공급제도

① 교과서 발행 공급

‘검인정령’ 시기의 교과서 공급에 관한 업무는 행정적으로 문교부 편수국 발행과가 관장하였다. 그러나 실제적인 업무는 문교부의 보조기관적 성격을 갖고 교과서의 생산을 위임받은 국정교과서(주), 고려서적(주), 문화서적공사의 3개사가 대행하였다. 그러므로 문교부는 교과서 공급에 관한 기본 사항과 세부 공급 계획을 수립하여 3개 대행기관에 지시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하였다.

또, 공급 제도가 개선될 때까지 즉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정 이전까지 공급제도를 보면, 국정교과서(주) 발행의 초등학교교과서만을 전담하는 공급인이 있었고, 또한 중등학교 국정 교과서만을 전담하는 공급인과 검정만을 전담하는 공급인 이렇게 3대 주류를 형성하고 있었다.

공급 수수료는 각기 상이했으나 정가의 12%에서 15%까지 지급되었으며, 국정교과서(주)는 12%의 공급수수료를 지급하고 공급소까지의 운송비는 모두 국정교과서(주)에서 부담하였다. 교과서 공급 제도의 개혁이 있기 전까지의 초등학교 교과서를 공급했던 국정교과서(주)의 공급인 수는 1976년 당시 서울 공급소 외 9 군데 총 250명이었다.

그 후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1977. 8. 22 대통령령 제 8660호)이 제정되면서 국민학교 교과서의 공급은 동 규정 제32조(교과서 등의 공급대행기관)에 의거 국정 교과서(주)에서 대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지방의 교육위원회(제주도 제외)에는 출장소를, 그리고 지방 교육구청의 소재지에는 주재원을 두게 하였으며, 1978학년도 1학기 교과서부터 국정교과서(주)에서 직접 공급업무를 대행하였다.¹⁰⁶⁾

106) 김용만 외, 전계서, p. 205.

이 때(1977. 10) 교과서 공급업무에 참여한 시도 교육청 단위의 주재원은 총 158명이 었다. 그런데 이에 앞서 전국 공급인 총 연합회에서는 공급인 제도 폐지를 반대하는 청 원서를 각계 요로에 제출하였으며, 동 연합회는 청원에서 ‘공급인 제도의 환원’을 재검 토해 줄 것을 바란다고 하였다.

한편, 국정교과서(주)가 교과서 공급 업무를 대행하면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 관계 규정 제 33조에 ‘교과서 발행회사는 제 41조에 규정된 공급 수수료를 공급대행기관(국정 교과서)에 지불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또 제 41조에도 조항을 신설 「공급 수 수료는 발행자의 교과용도서 판매가격의 5%로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수수료는 판매가 격의 5%한도 내에서 징수하도록 하였다.¹⁰⁷⁾

② 국민학교 교과서 무상 지급

교과서 대금은 의무 교육의 원칙에 입각하여 전체량은 무상으로 분배하는 것이 원칙 이었으나, 국가의 재정형편상 하는 수 없이 유상이었다. 그러나 1957년도 2학기부터 도 서 벽지의 극빈 아동 6,826명에서부터 시작하여 농어촌과 벽지의 면·읍·소도시 순으 로 점차 유상에서 무상으로 전환해 왔으며, 1979학년도 부터는 고본 재활용의 폐지와 함께 교과서를 전면 무상으로 배부하기에 이른 것이다.¹⁰⁸⁾

< 표 IV-28 > 교과서 무상 지급 현황

(단위: 1,000원)

구분 연도별	총학생수	지급학생수	%	예산	비고
1965	4,941,345	175,686	3.55	34,610	· 새책 교본 포함
1970	5,749,301	1,470,773	25.6	508,909	· 전국 새책
1975	5,599,074	3,662,621	65.4	2,326,328	
1979	5,711,883	5,711,883	100	7,069,557	

자료: 문교부, 「교육재정현황」, 1979.

참고로 제 3차 교육과정기에 교과용도서 생산 실적은 <표 IV-29>와 같으며, 1973년 도 약 4,700만부, 제 3차 교육 과정기 후반기인 1981년도는 7,900만부로서 1973년도에 비 해 약 68% 증가하였다.

107) 국정교과서(주) 35년사 편찬위원회, 전세서, pp. 290-292.

108) 위 책, pp. 571-572.

<표 IV-29> 교과용 도서(국민학교) 생산 실적

(단위: 100부)

영업기별	생 산 량	영업기별	생 산 량
25기(1973)	46,904	30기(1978)	67,860
26기(1974)	49,671	31기(1979)	89,237
27기(1975)	47,772	31기(1980)	88,420
28기(1976)	40,782	33기(1981)	79,158
29기(1977)	53,140		

자료:『국정 교과서 35년사』, 전계서, p.633.

4) 국민학교 교과서 편찬·발행 비망·증언

• 동아일보 사설

-교과서 편수행정이 지닌 문제점의 단적인 예가 각급 학교용 교과서에 직접적으로 정치성을 띤 내용이 포함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강조돼야 할 것은 교육의 자율성과 정치적 중립이 교과서 편수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교과서가 교육의 기본 교재임을 새삼스럽게 강조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교과서 개편 작업은 문교부나 특정 기관의 용역 사업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한시적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 연구자들은 물론 일반 교사들과 학부모 및 교육과 관련된 각계의 의견이 종합적으로 반영되게 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특별위원회가 현행 교과서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이상적인 개정 방향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보고서를 토대로 개편의 구체적인 작업은 전문기관에 위촉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그런 점에서 국어를 도덕 및 사회과목과 통합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국민학교 교과서의 개편 방향』 1980. 1. 7자]

• 대한출판문화협회 제 7차 이사회 결의문

-그러므로 교과서의 국정화는 획일적인 교육내용과 교과서 저술 및 표현의 자유의 중대한 제한이며, 출판 기업 자유의 범위의 제한이 아닐 수 없다. 교과서의 저술, 제작, 공급은 처음부터 끝까지 행정권력의 개입과 간섭이 배제된 채로 정당한 범위내의 행정적인 감독만으로 충분하며, 이는 어디까지나 민간인의 손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민주 교육의 왕도임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주장을 천명하여 국민의 이해와 당국의 국정화 정책의 시정이 있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서 초·중·고 교과목 중 1종(국정) 교과서로의 결정을 문교부 장관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이는 문교부 장관의 재량에 맡길 것이 아니라 입법 사항으로 전환하여 교과용 도서에 관한 법령의 새로운 제정을 촉구한다.

둘째, 교과서는 저자들의 자유로운 경쟁과정에서 비로소 질적인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문교부의 국정화 광대 조치가 다양해야 할 학습의 발전을 획일화시키는 결과를 빚게 되고, 창의와 개발의 기능을 저하시킬 것으로 우려되므로, 소수의 저자만이 국정 교과서의 편찬에 참여하는 정부 출판의 독점성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셋째, 교육비 부담가운데 교과서 대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적으므로 국정과 검인정 교과서의 상대적인 가격차의 근소한 인하만으로는 국정화의 이유가 되지 못한다.

넷째, 검인정 교과서 회사의 지난번 사태는 교과서 발행제도의 결함에 그 원인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불합리한 관리로 말리암은 것임을 분명히 밝히며 지난번 사태가 교과서 국정화의 이유가 될 수 없다.[1977. 9. 21 대한출판문화협회 제 7차 이사회에서 ‘교과서 1종화 정책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문교부 등 요로에 전달하였다.]

• 강우철 교수(이화여자대학교)

-자료 중에서 으뜸가는 것이 교과서임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교육자나 학부모, 그리고 학생들의 교과서관이 달라지고 정부의 교과서 정책에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교과서 숭배에서 오는 잘못은 막지 못한다.

오랫동안 교과서 정책이 미시적인 제도의 변경과 신경질적인 흥분으로 논쟁을 일삼아왔고, 대국적인 검토가 없었음을 반성한다. 여기다가 타성에 흐른 상흔이 교육적 관심을 몰아내고 비전문성이 교과서 정책을 좌우하는 사태가 나타난 때도 있었다. 어쨌든 교과서는 교육적 성과와 투자의 극대화를 모색하는 과감한 정책 연구가 있어야 한다. [한국교육개발원편, 「교육체제 혁신의 방향」, 「교육과정 자료의 확충·심화」, pp. 204-205 중에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75. 11]

• 최종진 교장(화곡여자중학교)

-그 당시 제 4공화국이 출범하여 박정희 대통령이 재집권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함께 새마을 운동이 새로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그러면서 이어서 나온 노래가 「새마을 노래」라는 새로운 노래가 라디오와 텔레비전에서 불려지기 시작하였다. 교과서에도 이 노래를 수록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그래 이곳저곳에다 수소문하여 원본을 구해보니 작사와 작곡자가 제각각이었다. 처음에는 「홍연택 작사·작곡」으로 나왔다가 그 다음에는 「문화공보부 제정」으로 바뀌어 나왔다. 하도 이상하여 문공부에다 질의를 하였더니, 자기들도 잘 모르고 있으며, 뒷집(청와대를 뜻함)에서 그렇게 결정되어 내려온 것이라고 하면서, 뒷집에다 물어 보라는 것이다. 하는 수 없이 뒷집에다 알아 달라고 정중하게 연락을 하였더니, 며칠 뒤 16절지 하얀 모조지에 굵직한 검정 사이펜 글씨로 마치 국민학교의 「쓰기」책에 나오는 글씨체처럼 또박또박 쓴 「새마을 노래」 「박정희 작사·작곡」으로 된 1절부터 3절까지의 가사를 받아들게 되었다. 그 때 그 순간의 기쁨은 이루 형언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새마을 노래」만은 자신있게 교정하여 5학년 교과서 첫 제재로 취급하였다. 그리고 막 결재를 받아 국정교과서(주)에 인쇄를 넘기고 나니까, 바로 그날 저녁 석간 신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전라북도 전주에서 실시된 새마을 운동 진진 대회에 참석한 후, 내장사를 거쳐 상경하는 승용차 안에서 새마을 노래 4절을 작사하였다.”는 신문 기사가 나는 것이 아닌가? 깜짝 놀랐다. 그 때가 1973년 11월 20일경이었다. 그래 부리나케 회사에다 연락하여 보니, 벌써 윤전기에 걸어 현재 5천부 정도가 인쇄되었다는 것이다. 아찔하였다. 그래 이리저리 궁리한 끝에 윤전기를 세우게 하였다. 물론, 그 때까지 인쇄한 것은 폐기할 수밖에 없었다. 우선 전화로 4절 가사를 불러 주고, 수정을 빨리 해 오도록 하였다. 밤을 새워 고쳐 온 것을 다시 교정을 보아 인쇄에 회부하였던 기억이 생생하다. 그 이후부터 새마을 노래가 내 귀에 들릴 때마다 당시에 당황하였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눈앞에 아른거려 혼자서 씩씩한 미소를 짓곤 하였다.

이와 같이 편수판과 결재본의 운명은 함께 하는 것으로, 내기도 어려우려니와 낸 후에도 처음부터 강그리 보고 또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한국교육과정·교과서 연구회편, 「편수의 뒤안길 제 1집」, 「음악 교과서에 얹힌 이야기」 중에서, pp. 104~105, 서울: 대한교과서(주), 1991. 12.]

(3) 중등학교 교과서 편찬·발행

본 고에서는 앞에서 서술한 국민학교 교과서 편찬·발행과 같은 유형의 제목과 다른 측면, 즉 검정제도라든가, 교과서 선정(채택) 및 교과서 발행·공급 등에 대해 ‘교과용 도서 저작·검인정령’ 시기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시기별로 구분 서술하기로 한다.

1) 교과서 편찬 제도

① 국정(1종) 교과서 편찬

중·고등학교 교과서는 국정 교과서와 검인정 교과서로 구분되어 있다. 중등 국정교과서의 편찬 절차는 국민학교 교과서의 편찬 절차와 동일하다. 즉, 문교부 편수관이 교과서의 편찬 계획을 세우고 문교부 장관의 결재를 얻은 다음, 집필자를 선정하여 원고의 집필을 위촉하고 원고가 수집되면 편수관이 이를 검토한 후 심의회를 거쳐 인쇄에 넘긴다.

1977년에 제정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서 1종 도서의 편찬(제 5조)은 문교부가 저작하게 되어 있으며, “다만, 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종 때는 연구 기관 또는 대학 등에 위탁하여 편찬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았다. <표 IV-30>은 1종 교과서 연구 개발 단체의 한 보기이다.

< 표 IV-30 > 1종 교과서 연구 개발 단체

단 체 명	과목수		구성인원			비고
	과목	책수	연구진	집필진	협의진	
한국교육개발원	16	50	108	110	644	
서울대학교(9개 연구소)	64	82	295	301	488	
국사편찬위원회	1	4	30	6	24	
서울교육대학(음악·서예)	2	8	24	17	78	
부산 수산 대학	1	2	7	8	8	
홍익대학교(3개 연구소)	8	9	34	21	64	
충남대학교	11	12	38	35	52	
고려대학교(2개 연구소)	14	14	59	46	85	
한국행동과학연구소	2	2	8	8	19	
덕성여대 산업과학연구소	1	1	5	2	5	
송전대학교 전자계산연구소	3	3	9	8	20	
광운대학교 통신과학연구소	3	3	12	9	14	
한양대학교 산업과학연구소	15	15	59	42	69	
연세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	8	8	38	25	47	
한국속기교육협회	1	1	4	1	3	
계(27)	150	214	730	639	1,680	

자료: 문교부, 「업무현황, 1978. 2 편수국」, p. 22-23. 유인물.

이렇게 교과서의 개발 업무가 전문 연구기관이나 대학의 I 종 도서 개발 위원회로 위임되자 문교부와 개발기관과의 책임과 역할 분담이 모호하여 I 종 도서의 연구 개발에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그 후 1979년에 문교부와 개발기관 간의 편찬 업무를 조정 분담하여 교과용 도서 편찬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게 하였다.

그리고 교과용 도서 개발 절차에 대해서는 한국교육개발원이 체계화·전문화 작업을 이행하여 개발 단계를 세분화하는데 힘을 기울인 바 있다. 즉, 종래(1977년 이전)의 절차는 I, III, IV, IX, XII 단계의 절차에 의해 교과서 및 지도서가 개발되었지만 한국교육개발원은 이를 세분화하여 종래에 없었던 II 기초 연구 단계, V, VI 및 VII의 실험 평가 단계, VIII 자료 분석·수정 단계 등을 강화하여 보다 많은 의견 수렴과 전문가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수집할 수 있게 하였다. 특히 이 절차의 전문화과정에서 괄목할만한 것은 종전에는 필자의 원고가 절대적인 역할을 했는데, 이 절차에서는 전문가의 초안(특히 국민학교의 경우)은 참고자료에 불과하며 전문적인 편집안목(Editorial Processing)에서 그 초안의 아이디어를 재편성 내지 재구성하게 한 일이라 하겠다.<그림 IV-3>

참고로 제 3차 교육과정기(1973~1981)의 중·고 교과서 편찬 체제(주로 외적체제)를 게재한다.<표 IV-32>

<표 IV-31> 편찬 과정 업무 분담

단 계 \ 기 관	문 교 부	연 구 기 관
I 종 도서 편찬 기본계획	○ 편찬 기본 계획 수립 ○ 연구 개발 기관 선정	
계획서	○ 연구 개발 계획서 및 집필 세부 계획서 심의 확정 통보(편찬 심의회)	○ 연구 개발 계획서 및 집필 세부 계획서 작성 제출(연구진·집필진· 협의진 구성 등)
집필	○ 집필과정 확인 및 지원	○ 집필 ○ 원고본 작성 ○ 원고본 검토(협의진)
원고본 심의 현장 실험	○ 원고본 심의 및 수정 보완 지시 ○ 실험 학교 선정 ○ 실험 결과 평가	○ 수정 보완 후 실험본 작성 ○ 실험 계획서 작성 ○ 실험 ○ 실험 결과 보고 및 실험본 수정
수정본 심의	○ 수정본 심의 ○ 인쇄 지시	○ 심의회 결과 반영 ○ 인쇄본 교정
인쇄본 종합 검토	○ 인쇄본 종합 검토	
발행 공급	○ 생산 지시·공급 확인·결과 협의	○ 결과 협의

자료: 1종 교과서 및 1종 지도서 연구 개발을 위한 편찬 기본 계획(문교부, 1977. 8), 전게서, pp. 103~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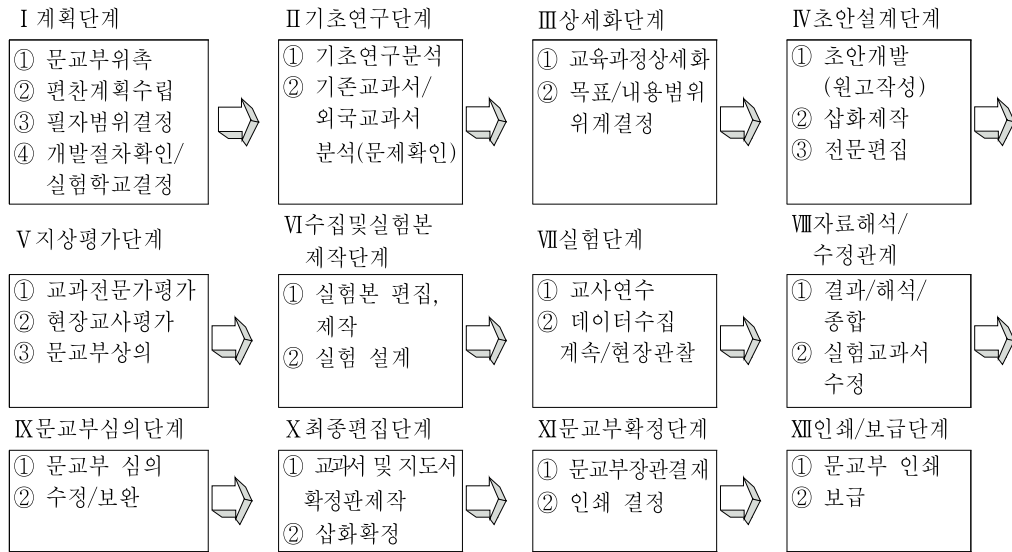
② 검정(2종) 교과서 편찬

검인정 교과서는 ‘교과용 도서 저작·검인정령’(’74. 12. 31) 제 11조 내지 제 18조 규정의 적용을 받아 편찬되었다. 즉, 동령 규정(제 11조)에 의하면, 문교부는 검정 교과서의 신청기간을 공고하게 되어 있으며, 그 공고 사항에는 ① 준거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종류 ② 심사본의 제출 부수 ③ 수수료 ④ 검정 신청의 자격 및 기간 ⑤ 검정 기준 ⑥ 검정 교과서 집필상의 유의점 ⑦ 첨부서류 등을 명시하게 되어 있다(제 12조).

<표 IV-32> 제 3차 교육과정기의 중·고 교과서 편찬 체제(검정)

연도 체제	1974학년도 사용교과서 (중·고·실업)	1979학년도 사용 교과서 (인문고)	1984학년도 사용 교과서 (중·고)
판형	· 국판: 중·고·실업 등 · 4·6배판: 사회과부도, 미술·음악·실고 실습 교본 등	· 국판: 문법 외 19종 (크기 148×210mm) · 4·6배판: 음악, 미술, 서예, 사회과부도(크기 182×257mm)	· 국판: 체육 외 26종 · 4·6배판: 사회과부도 외 10종 · 크라운판:(크기 167×236mm, 고등학교 과학 8종)
지질	· 표지: 모조백색 220g/m ² (사회과부도 모조 100, 합지 1mm) · 본문: 미색 갠지 55g/m ² (사회과부도·미술아트 100g/m ² , 음악 모조 80g/m ²) · 속표지: 모조지 100g/m ² · 면지: 모조 100g/m ² · 화보: 아트 100g/m ²	· 표지: 엠보싱 백색 180g/m ² (사회과부도 레자크 500g/m ² 또는 합지 1,300 g/m ²) · 본문: 미색 갠지 55g/m ² (사회과부도 아트 100g/m ² , 미술아트 120g/m ² , 음악·서예 모조 80g/m ²) · 속표지: 모조 100g/m ² · 면지: 모조 100g/m ² · 화보: 아트 100g/m ²	· 표지: 교과서용 특수용지(엠보싱 모조코팅 260g/m ²) · 본문: 교과서용 증질지 미색 70g/m ² (단, 사회과부도 강광 120, 미술아트 120, 서예 80, 사회과부도 모조 70g/m ²) · 속표지: 모조 80~100, 아트 100g/m ² 등 *국정교과서(주)표준 규격임 · 면지: 모조 100g/m ² , 사회과부도 강광 150g/m ² · 화보: 아트 100g/m ²
색도	· 표지: 2도 이내 · 본문: 흑백 1도(단, 사회과부도, 미술 제한 없음) · 속표지: 1도 · 화보: 2도 이내(2쪽 이내)	· 표지: 4도 이내 · 본문: 흑백 1도(단, 사회과부도 미술 제한없음. 서예1도추가) · 속표지: 2도 이내 · 화보: 4도 이내(4쪽 이내)	· 표지: 4도 이내 · 본문: 흑백 1도(단, 사회과부도·미술 제한없음. 서예 1도 추가) · 속표지: 2도 이내 · 화보: 4도 이내(4쪽 이내)
제본	· 호부장으로 한다(단, 사회과부도 각양장으로 한다).	· 호부장(철사로 퀘멘 평철)으로 한다. 단, 사회과부도 양장으로 한다.	· 유선철 호부장으로 한다. (단, 사회과부도 반양장, 세양사 첨부한다).
체제 근거	· 문교부 교과서 내용 검토 조치(1974학년도 사용) 서류 · 중: 200종 · 인문고: 392종 · 실고: 286종	· 문교부 교과서 1020-303 ('78. 6. 14) 공문	· 문교부 편관 1016-275 (83. 1. 17) 공문

<그림 IV-3> 교과용 도서 개발 절차



교과서의 검정은 저작자 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저작자로부터 당해 도서의 발행권에 관한 승낙을 받는 자만이 신청할 수 있다(제 13조).

1. 검정 신청 접수일 현재 검정 교과서를 발행하고 있는 자

2.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출판사로서 검정 신청 접수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3년간 매년 2종 이상의 간행물을 발행한 실적이 있는 자

검정 수수료는 신청 가격의 200배이다(제 14조). 심사위원은 교과목마다 3인을 원칙으로 하며(제 15조), 심사 기준은 교과목별로 절대 요건과 필요 요건으로 나누어 문교부령으로 정한다(제 16조). 그리고 검정합격본의 검정 유효기간은 5개 학년도로 규정하고 있다(제 19조).

가. 집필과정

중 · 고등학교 국정 교과서의 집필과정은 국민학교 교과서의 집필과정과 동일하므로, 여기서는 서술을 피하기로 한다. 그런데 문교부가 제시한 ‘집필상의 유의점’ 내용에 대해 출판사측과 저자들의 의견은, 집필 기준의 제한점이 많아 독창성을 발휘하기가 어려우며, 교과서의 판형, 쪽수, 용지 등의 규제는 무리한 행정조치라고 지적하였다.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1977. 8. 22제정)에 의하면, 검정 실시 공고(제 11조)와 공고 사항(제 12조), 검정신청(제 13조), 심사위원(제 15조), 심사기준(제 16조) 등은 ‘검인정령’과 별로 다른 게 없으며, ‘검인정령’에서 검정 합격 중수가 불명확했던 것에 비

해 새 규정에서는 과목당 5종 이내로 규정하였으며. 검정 수수료는 400매로 인상되었다는 점이다.

나. 사열(심의)과정

중·고등학교 국정교과서의 심의과정은 앞에 서술한 국민학교 교과서의 그것과 같으므로, 본 고에서는 중복을 피한다. ‘교과용도서 저작·검인정령’에 나타난 검정교과서의 사열은 문교부 장관이 위촉한 사열위원(교과목당 3인)이 출판사로부터 신청한 교과서에 대해 문교부장관이 정하는 사열기준(절대요건 3항, 필요요건 20개항 등)에 따라 그 내용을 사열하고, 의견서를 문교부장관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으며, 문교부장관은 그 의견서에 따라 승인 여부를 관보에 교과목별로 공고하게 되어 있다. 이상과 같은 사열과정은 새 규정에서도 큰 변동 없이 그대로 규정되어 있다.

사열에 관한 문제점으로는 제 3차 교육과정기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다음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1. 사열 위원수(3~5인)가 검정교과서의 신청건수에 비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일정 시일 내에 그 많은 양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2. 교과서의 검정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검정의 공정성을 잃기 쉽다.
3. 사열위원은 적격자가 선정되지 못하고 있다.

2) 교과서 출판제도

① 교과서 출판 조직

중등학교 교과서 출판조직은 국정교과서 출판조직과 검인정 교과서 출판조직의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 즉, 국정교과서 출판은 민간업체인 대한교과서(주)와 동아서적(주)가 문교부의 지시와 통제를 받아 행하고 있으며, 전자는 중학교의 국어, 도덕, 실업, 고등학교의 국어, 도덕, 실업고교의 모든 교과서를, 후자는 중·고등학교 반공 교과서를 각각 출판하였다.

검인정 교과서출판은 검인정교과서를 발행하고 있는 출판사의 집합체인 중등교과서(주)와 고등교과서(주)가 행하고 있었으며, 이 양회사의 교과서 생산 계획과 공급의 일원화를 기하기 위해 한국검인정교과서 발행인협회가 있었다. 그리고 검인정 교과서는 대한인쇄협회를 통해 각 인쇄인에게 하청을 주어 출판하였다.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편성된 교과서 발행 회사(1978년도)의 현황은

<표 IV-33> 제 3차 교육과정기의 교과서 제도 개요

교육과정기 및 교육과정 유형		교과서 제도			특 색
교육과정기	유형 및 교육과정	관련 법규	국·검정 교과서 제도	편찬 체제	
제 3차 교육과정기('73. 2~'81.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 문 중 심 적 교육과정유형 -국민학교 교육과정('73.2.14) -중학교 교육과정('73.2.14) -중학교 교육과정('73.8.31) -인문계 고등학교 교육과정('74. 12. 31) -실업고교 교육과정('73. 2.14) '76. 2.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용 도서 저작·검인정령’('77. 8. 21폐지) ·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77. 8. 22 대통령령 제 8660호) -교과용 도서의 저작, 검정, 인정, 발행, 공 및 가격 사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검인정 제도 -1977. 8. 21까지 ‘교과용도서 저작·검인정령’에 의거 국·검정 제도 시행 -1977. 8. 22부터 현재까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의거 1종, 2종 제도 실시 -1종(국정):연구개발형(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편찬) -1종 도서:집필-심의-출판-공급(연구진, 집필진, 검토진) · 2종(검정):자유경쟁형(저작자와 출판사) -2종 도서:검정 공고-출원-심사-합격 여부 결정-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차 교육과정 목표 달성 · 1종 교과서 편찬(계획서) -1종 도서 연구위원회:연구진, 집필진, 협의진 구성 -판형:거의 국판 -단원의 학습 목표 제시 -동기유발을 위한 예화, 사진 제시 · 2종 교과서 편찬(집필상의 유의점) -판형:거의 국판 -색도:1도(국민학교 일부 원색) -지질:미색강지(55g/m²) -집필상의 유의점(화보:단색 및 원색 4-6쪽수록/단원표시:국정 교과서 체제에 따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3차 교육과정기에는 두 개의 교과서 관련법규가 적용됨. · 교과용 도서 개발을 1종(연구개발형)과 2종(자유경쟁)으로 크게 제도 변화가 있었음. · 교과서 체제 중 편집디자인이나 레이아웃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음. · 집필상의 유의점(1,2종)에 제시된 ‘편집 및 편찬체제’는 제 2차 교육과정기 때와 큰 차이 없음. · 초·중·고 교과서 판형은 ‘국판’이 절대적으로 많았고, 4·6배판은 일부(사회과부도, 예체능, 실습용)였음. · '79학년도부터 신편된 중·고교과서에 6쪽이 내의 원색 화보를 게재토록 조치함(아트 100g/m²) · '79년부터 제본은 무서철로 발전함.

<표 IV-34>와 같으며, 그 당시 검인정 교과서 사건의 수습단계에서 검정 관계 4개사의 업무는 국정교과서(주)에서 관리단을 파견 관리하기도 했다. 그 뒤 2종 교과서를 공동사업으로 관리함으로써 교과서의 질적 향상 및 적기 생산·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조합원의 공동 이익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국 2종 교과서 발행조합’을 만들었다(1978. 8. 23 정관 제정).

동 조합은 1978년 9월 30일에 교과서 채택 경쟁 방지를 위해 동일 교과목 저자 인쇄(印稅) 균등 배분을 적극 추진키로 결의하였으며, 동년 10월 28일에는 국정교과서(주)와 교과용도서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1981년 12월 8일 사단법인 ‘한국 2종 교과서협회’ 창립 총회를 개최하여 정관 제정 및 임원 인사 등을 단행함으로써 2종 교과서의 생산·공급 체계를 갖추었다.

<표 IV-34> 교과서 발행 회사

회사별 \ 구분	국민학교 (책)	중학교 (책)	인문고교 (책)	실업고교 (책)	계(책)	발행부수 (천부)
국정교과서(주)	72				72	51,335
고려서적(주)	10				10	7,254
동아교과서(주)	9	1			10	7,409
대한교과서(주)		24	4	329	357	11,789
동아서적(주)		4	1		5	2,377
삼화서적(주)			4		4	195
*한국교과서(주)		1	1		2	856
*한국중등교과서(주)		200			200	13,359
*한국고등교과서(주)			300		390	6,661
*한국검정실업교과서(주)				286	286	1,441
재향군인회			2		2	457
합 계	91	230	402	615	1,338	103,133

자료: 문교부, 「업무현황 1978. 2. 편수국」, p. 9.

* 검인정관계 4개사의 업무는 국정교과서(주)에서 관리단을 파견 관리하였다.

② 교과서 출판과정

중·고등학교 교과서의 생산 및 출판이 시장생산이 아닌 주문생산의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출판에 있어서는 문교 행정당국의 지시와 통제를 많이 받았다. 그리고 교과서의 출판과정은 국정인 경우와 검인정의 경우를 들 수 있는데, 이 두 형태는 그 시대에 적합한 특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3) 교과서 채택(선정) 제도

교육법 시행령('75. 1. 27 대통령령 제 7536호) 제 185조(교과서의 선정)에 의하면, 각 학교의 교과용 도서의 선정은 학교장이 하되, 문교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용 도서(국정교과서)가 있을 때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하고, 국정교과서가 없을 때에는 문교부에서 검정한 교과용도서(검정교과서)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또 “검정교과서를 선정하였을 때는 문교부 장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정 당시의 제 3조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었고, 제 34조(채택 권유 금지)에서는 “저작자와 발행자는 학교의 교직원에게 그가 저작 또는 발행한 2종 도서의 채택을 권유할 수 없다”고 하였다.

오늘날에는 학교의 장이 당해 학교에서 사용할 2종 도서를 선정할 때에는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규정해 놓았다(제 3조 제2항).

- 윤종영 교장(영림중학교)

-그래서 이러한 교과서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들 중 부정적인 요소를 최소화하고 공정한 교과서 선정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교과서 선정위원회를 만들고, 이 위원회에서 공정하게 평가할 기준안을 작성하는 일이다. 그리고 이 기준안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교육 과정의 기본 정신 반영 문제, 교과서 체제 문제, 내용 조직 문제, 단원별 내용 선정, 조직 구성 문제 등으로서 이러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세분화되어 작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준안을 가지고 위원들은 각 항목별로 제시한 기준에 의거 교과서를 심사 분석하고 이를 계량화하여, 교과서 선정의 자료로 삼아야 할 것이다.[「교과서 연구 제 19호」, ‘교과서 선정의 바른 길’, pp. 9~10 중에서, 서울: 한국2종 교과서협회, 1994. 7]

4) 교과서 발행 · 공급 제도

① 공급 조직

‘교과용 도서 저작 · 검인저령’ 시대의 교과서 공급은 제 29조(현황조사)에 규정하고 있다. 즉, 제 1항에서 “문교부 장관은 교과서의 제조 · 공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행자로부터 교과서의 제조 · 공급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소속 직원을 파견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 · 인정령’ 시대가 지나고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시대가 도래하면서 교과서 공급 체제는 일대 변화를 가져왔다. 이 규정 제 32조(교과서 등의 공급 대행기관)에 의하면, 제 1항은 교과서 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투자기관을 공급 대행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제 2항에서는 교과서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시 · 군 교육장의 관할구역 단위로 공급담당사원을 주재시켜야 한다”고 규정했다.

② 공급 절차

공급절차에 대해 ‘검인정령’에는 별도 제시가 없었으며, 새 규정 제 33조(공급 및 공급 수수료)에는 “발행자는 교과서를 주문자에게 직접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주문자가 소재하는 시군에 공급 담당 구재원이 있을 때에는 그에게 인도함으로써 주문자에게 공급한 것으로 본다”고 하였다. 여하튼 1977년도 이후에는 학교 현장에서 공급 절차에 대해 불만족스러운 의견이 속출하였다.

5) 중등학교 교과서 편찬·발행 비망·증언

제 3차 교육과정은 ‘공표’라는 법적 용어를 쓰는 경우, 이 교육과정기간은 거의 10년이 된다. 이 10년 세월 속에 초등학교 교과용 도서 편찬·발행(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가격 사정 등)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거지 사건 사고와 문제점 등은 공개된 것이 있으나 그렇지 않은 상당량이 숨겨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본 고에서는 이 기간에 일어난 교과용 도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자료)들을 모아서 솔직하게 비망·증언으로 제시하려고 하였으나, 그 범위가 너무 방대하고, 또 심도있게 다루어야 할 것도 있어. 이 중에서 사회적, 교육적으로 다루어야 할 몇 개를 선정, 제시하기로 한다. 이 가운데에서 특히 ‘검인정 교과서 사건’은 사건 경위 등에 대한 자료가 이번 기회에 모아져서 그때의 상황을 진실되게 알리려고 하였으나, 그 분량이 너무 많아 이번에는 그 개요만으로 요약하기로 한다. 따라서 앞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는 더 광범위하게, 또 심도있게 진실된 내용으로 다루어지기를 기대한다.

①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 선정

기초한자 1,800자는 한자 교육이 고전(古典) 이해와 한문 문화권내의 조화를 전제로 선정되었는데 1971년 12월에 착수, 9개월만인 1972년 8월 16일에 확정·공표됐다.

문교부는 중·고등학교 한문교육을 이 기초한자에 따라 실시하되 인명·지명 등 고유명사는 기초한자에 관계없이 지도하고 학습 효과를 위해 부득이한 한자는 기초 한자수의 10% 범위 내에서 추가 교육 시킬 수 있도록 했다.

● 정진권 교수(한국체육대학교)

-초안 심의가 끝나자, 아는 상세한 보도자료를 만들고, 그 심의 결과를 문교부 시안으로 공표하는 일에 매달렸다. 그 다음에는 교육계, 학계, 언론계 등 약 130개처에 질문지를 보내 여론을 조사하고, 또 결과를 심의 위원회에 회부했다. 그리하여 마침내 중학교교육용 900자, 고등학교교육용 900자의 한문 교육을 기초 한자가 선정되었다. 드디어 장관 결재도 받았다.

-한문교육용 기초한자는 그 뒤 청와대의 재가를 받아서 확정, 공포했는데, 이에 대해 특별한 논쟁은 없었다. 이것은 중학교 한문 교육의 목적이 정당하고(그 목적을 고전문화 계승의 기초를 마련하고 한자 문화권과의 조화를 도모한다는 데 두었다.) 한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여론을 충분히 반영한 까닭이 아닌가 한다. 지금 다시 살펴보면, 이 한문교육용 기초한자는 결함도 더러 눈에 띈다. 가능하면, 전문 학자들에게 충분한 연구비를 주어서 한번 개정해 보았으면 싶다. 그러나 어쨌든 1970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것으로써 학생들에게 한자와 한자어, 한문을 가르치고 있으니, 그런 대로 제 몫을 하고 있는 셈이다. [「편수의 뒀안길 제 1집」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그 선정 과정의 뒷이야기’, pp. 87~97 중에서, 서울: 대한교과서(주), 1991. 12]

- 정세문 회장(한국음악교육연구회)*

-광복 후부터 교과서에 한자를 노출시켰다가 괄호 안에 넣었다가, 그 수를 줄였다 하면서 교과서에 한자를 병용해 오던 교과서를 1970년에 들어서부터는 교과서에서 한자를 일체 없애 버렸다. 그리고 5년 뒤인 1975년부터는 다시 한자를 괄호 안에 넣기로 했는데, 그 과정에서 한쪽으로부터는 혹독한 비난을 받아야만 했다. 심지어는 ‘한글을 팔아먹을 놈’이라는 욕을 먹은 일도 있다.

한자 교육에 관해서는 윗분들의 뜻에 따라서 많은 학자들의 자문을 받아가며 계획을 수립하고,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에게까지 결재를 받아 신중하게 결말을 지었던 것인데도 욕은 나 혼자 먹어야만 했으니 아이러니한 일이었다. [「편수의 뒀안길 제 2집」 ‘한자교육과 음악과 국장’, p. 138, 전게서]

* 정세문: 1961-1975 문교부 음악과 편수관, 편수국장

② 검정교과서 단일본화

- 안귀덕 교수(한국정신문화연구원)

-특히 중·고등학교의 교과서 편찬 정책은 제 3차 교육과정에 따라 검정 공고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일화라는 방법에 의해 운영되었다.

국민학교 교과서는 모두 국정 교과서로 되어 있었으나 중학교의 경우는 도덕과 국어(독본),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도덕과 국어(독본)만 국정이고, 대부분의 교과목은 검정교과서였다. 1973년에 중학교 교육과정, 1974년에 고등학교 교육과정, 그리고 실업계 교육과정이 1976년에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시급히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새 교육과정에 맞게 개편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남북대화의 중단, 10월 유신, 월남의 패망 등 국내외적으로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국적 있는 교육’, ‘주체성 교육’, ‘유신 이념 교육’ 등의 국민정신교육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는 타당성 속에서 검정 교과였던 국사를 국정화(1973년)하고 1차적으로 사회과 교과서를 단일본으로 편찬하도록 하였다(1973년 편찬, 1974년 적용).

또, 중학교 검정 교과서를 단일화 내지 국정화하여야 한다는 여론도 없지는 않았다. 평가 교수단의 건의 내용에 “중학교 교과서의 국정화 또는 단일화를 이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학교는 명실공히 준의무 교육화되었고, 그 동안 발행된 검정 교과서의 내용이 대동소이하고, 출판사와 저자의 교과서 채택 운동으로 인한 잡음이나 종이의 부족을 막으려면 중학교 교과서는 물론 고등학교의 이른바 공통과목까지도 가능한 한 국정 또는 적어도 단일화하는 방향으로 기본적인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겠다”고 하였다.

이것은 문교부의 전문가나 각 교육위원회의 장학진과 교장, 교사들의 거의 일치된 강

력한 요망 사항이라고 하여 중학교 교과서의 국경 또는 단일화를 지지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고등학교의 정책 교과(사회, 국사, 도덕)의 단일화, 또는 국정화는 이들 교과를 검정화했을 때에 시간적으로 오래 걸린다는 이유 이외에, 국가지도 이념을 교육에 과감하게 반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며, 일선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수험 준비 교육을 위해서도 단일화가 편리한 제도로 받아 들여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1972년에서부터 1974년에 걸쳐 검정 교과서가 다음과 같이 단일화되어 적용되었다.

그러나 검정 교과서의 단일화 조치는 교과서의 종류를 줄이고, 정책 의지의 반영에도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지만, 그 근거가 모호한 과도적 행정조치라고 볼 수 있다. 즉, 이 제도는 법령상 명문의 근거가 없는 행정조치였으며 기존의 검정교과서의 저작 및 발행자에게 계속 특권을 설정하는 불합리한 제도였으므로, 학계와 단일화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출판사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표 IV-35> 단일화 전후의 검정교과서 현황

학교별	교과서명	단일화 전	단일화 후	비고
중학교	한문, 사회, 영어, 과학, 수학, 체육, 사회과 부도(7)	98종 215책	7종 16책	(6종) 184종
인문고교	한문, 정치·경제, 영어 I, 영어 II, 영작문법, 일본어(6)	78종 135책	6종 10책	사회·문화는 '74~'75년 개발 '76년 활용
실업고교	한문(선택) (1)		1종 1책	285종
합 계	14 교과목	176종 350책	14종 27책	845종

자료: 허강 「교과서 연표」, 「교과서 연구 제20호」 p.137, 1994

문교부는 1973년부터 1974년에 걸쳐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을 개정 공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고 명확한 교과서 정책을 수립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가 1977년의 '검정 교과서 사건'을 겪은 후에 새로운 교과서 정책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③ 국가 중요 시책의 반영면에서 본 신·구 교과서 내용 분석

제 3차 교육과정은 국민교육헌장의 이념 구현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 국민적 자질의 함양, 인간교육의 강화, 지식기술 교육의 쇄신을 기본 방침으로 삼고 있다. 한편, 교과서 개편의 전제는 긍정적 사고, 능률적 행동, 국민적 총화, 한국적 민주주의 등 유신과업을 수행하여 국력을 배양하고, 평화통일 및 민족중흥에 이바지한다고 하였다.

• 문교부 편수국

제 3차 교육과정 초기에는 국가 시책을 구현하기 위해 신·구 교과서의 내용 분석을 국민학교·중학교 전 교과에 걸쳐 실시하였는데, 그 분석 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IV-36> 교과서 분석 기준

1.편찬의 기본방침	1. 편찬의 기본방침		
2.조국의 근대화	1. 근대화 2. 국력배양 3. 국토개발 4. 경제발전 5. 생산 기술의 연마 6. 중화학 공업 육성 7. 저축 8. 수출 증대 9. 국민의 과학화 10. 생활 합리화	5. 유신이념 의 구현	1. 유신체제 2. 국민총화 3. 민족 주체성 4. 민족적 긍지와 사명감 5. 애국심 6. 국가관 7. 민족사관 8. 민족사적 정통성 9. 국위선양 10. 한국민주주의 11. 비능률, 비생산성 제거
3.새마을 운동의 전개	1. 새마을 운동 2. 근면 3. 자조 4. 협동 5. 소득증대 6. 생산 증강 7. 향토애 8. 환경 개선 9. 생활 개선	6. 국민적 자질함양	1. 전통 계승 2. 경애·신의 3. 근검·절약 4. 책임완수(국민의 의무) 5. 창의성 6. 국토 자원의 보전 7. 공익 질서 8. 문화 애호
4. 총력 안보체제 의 확립	1. 안보태세 강화 2. 국방 3. 반공 4. 국토통일 5. 군경원호	7. 기타	1. 각 교과목의 특성

자료: 문교부 편수국, 「국가 중요 시책의 반영면에서 본 신·구 교과서 내용 분석-국민학교·중학교 분-」, 유인물, 1974. 5 및 문교부 편수국, 「편수업무현황」, 「교육 내용의 개선을 중심으로」 p. 17, 유인물, 1974. 5.

④ 검인정 교과서 사건 전말 등

이 사건의 전말은 꽤 복잡하다. 다만, 결과적으로 대법원에서 “무효”라는 승소 판결이 났다. 당시 이 사건의 보도는 부정적으로 일관되게 보도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이 문교부 관계 사건이어서 국민을 크게 놀라게 하였는데, 과연 그 잘못이 어디에 있었는지와 이 사건의 원인 등을 관계 자료를 통해 알아보기로 한다.

또, 이 사건의 진위를 가리기 위한 검정 교과서 회사 소송 진행과 대법원 승소 등의 과정, 끝내는 불명예에서 명예로 회복한 검정 교과서 회사 관계자와 문교부 공무원 등 에 대해서 그들의 증언을 게재하기로 한다.

가. 당시 지상 발표 등 사건 전말

중·고등학교 검인정 교과서를 독점으로 제작, 공급해 오던 한국중등교과서주식회사와 고등교과서주식회사가 교과서 내용 수정과 가격 인상을 둘러싸고 문교부 담당자들과 결탁, 뇌물을 주었던 사실이 밝혀져 문교부 편수국장 등 13명이 구속되고 16명이 1977년 3월 15일 입건되었다.

검인정교과서 출판업자들은 문교부·국세청 공무원을 매수하여 1974년부터 100억원 이상의 폭리를 취하고 탈세한 사실도 드러났다.

시중에 교과서 값이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여론에 따라 치안본부가 1977년 2월부터 수사에 착수, 3월 17일 문교부 편수국장 등 이사관급 2명을 포함한 전·현직 문교부 편수관계자 7명, 국세청 공무원 4명, 교과서 업자 2명 등 13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및 뇌물수수,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했고, 문교부 직원 5명과 교과서출판주식회사 직원 11명 등 16명은 불구속 입건했으며, 문교부 공무원 19명이 사표를 제출했다.

문교부 공무원들은 구속된 교과서 회사로부터 뇌물을 받고 검인정 교과서 가격 사정 때 영업비, 수수료 등을 높게 책정해 150원 정가의 교과서를 3배나 비싼 400원으로 책정해 주었으며, 현책을 다시 사용하지 못하도록 숫자·부호 등을 수정·보충했으며, 교과서를 단일본화(單一本化)하여 독점 공급토록 하는 등 막대한 특혜를 주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인정 교과서 발행의 구조적 모순이 수사에 의해 밝혀지자 문교부는 교과서 제도를 대폭 개선, 초·중·고등학교 국정 및 검정 교과서를 1종 및 2종 교과서로 새로 편찬 1979학년도부터 발행기로 했다.

새 교과서 개선책에 따라 개편되는 1종 교과서는 전문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전문가들이 공동 연구·개발, 단일본으로 집필하며, 자유경쟁형인 2종 교과서는 검인정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일반 저자가 집필 편찬하되 복수본으로 제작, 과목당 5종 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또, 새 교과서는 잦은 수정을 막기 위해 3년마다 정기적으로 내용을 수정하며, 교과서 편찬비도 권당 13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나. 검인정 교과서 사건의 원인

이 사건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앞에서(사건의 전말) 언급한 바 있으나, 이외에도 당시 유신정책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또 정치·사회적인 사건들과 함께 불가피하게 검인정 교과서가 표적 사건으로 등장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 이 대의 사장*(장왕사 회장)

-1977년 3월 세경 김인정 교과서 사건 당시 김인정 교과서를 발행하는 출판사는 중등교과서 회사가 58사, 고등 교과서 회사가 86사, 실업 교과서 회사가 67사, 한국교과서 회사가 96사로, 중복된 회사를 빼면 117사였다. 이들 4개사는 해마다 2500만부의 중고등학교 김인정 교과서를 생산 공급하고 있었다.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정부는 유신 정책에 따라 김인정 교과서를 국정으로 또는 단일 본으로 하여, 그 내용을 유신에 맞도록 수정하였고, 신규 김인정 교과서의 접수는 하지 않았다. 때문에 새로 김인정 교과서를 출판하고자 하는 신규업자들은 그 모순에 반발하였고 그 파문이 커져만 갔다. 특히, 긴급 조치가 발동되어 세상은 한가닥으로 통일되어 가는데, 천여명이 넘는 대학교 교수인 저자와 출판사들은 한국식 민주주의로 획일화시키는 교과서 개편 작업에 의견도 많았고, 그로 인한 충돌도 빈번했다.

또, 내부의 일부 주주들 사이에는 단일본으로 된 교과서의 자습서를 가지고 이해 관계가 상반되는 일도 있었고, 외부 신규업자의 질시라든가, 정부에 대하여 만만치 않은 출판사 태도 등으로 백안시당하는 일도 있었다. 내부, 외부에서 투서와 잡음이 끊이지 않아서 김인정 회사를 복마전이라고 비꼬기도 했다.

유신 체제에 비협조적이었기 때문에 정부에 곱게 보이고 있지 않던 교과서 발행 출판사이었으므로, 드디어 김인정 사건이 터졌다. [「교과서 연구 제14호」, 전게서, pp.104-109 중에서 발췌]

* 이대의: 1992. 12. 고등교과서주식회사 대표 청산인.

- 심성태 사장(현대음악사)*

- 그때는 이 사건에 정치성이 다분히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검증하라고 하면 아무 것도 없지만, 그 때 박대통령이 무슨 정보를 들었나 하면, 너무 업계가 탈세도 많고 또 썩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서열을 정해 놓고 내려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진주의 대동공업, 쌍방울 메리야스, 미원 등 22개 회사가 리스트에 적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김인정을 칠 적에도 내무부에 무슨 큰 사건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터질까 보아 이슈를 이쪽으로 몰아 터뜨렸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관계했던 고위층들은 알 겁니다. [「교과서 연구 제 14호」, 상게서 p.113]

* 심성태: 사건 당시 중등교과서(주) 상임감사.

- 채문식 국회의원

현재 우리 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정 사건의 한 예라고 하겠습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공무원사회의 누적된 적폐요소, 요즘 말로 하면, ‘부조리 현상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월간지 「신동아」, ‘국정화나 김인정화나’ 대담 중에서 1977. 4. 22]

* 채문식: 사건 당시 국회문공위원장, 신민당.

- 윤종현 논설위원*

교과서 판매 과정은 전문적으로 파고들지 않을 것 같으면 잘 모르게 되어 있더군요. 애당초 교과서 값의 기준을 사정할 때 너무 높게 책정했어요. 처음에는 높게 사정할 도리밖에 없었겠지요. 왜냐하면 초판은 제작비가 월등히 많이 들게 되니까요. 그러나 다음부터는 얼마 들지 않아요. 그런데도 해마다 교과서 값은 인상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공급 방법을 부정하게 하여 가격면에서 엄청난 폭리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구조적인 면에서 허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월간지 「신동아」, 상게서]

* 윤종현 사건 당시 한국일보 논설위원

● 이종석 차장*

이번 김인정 교과서 사건의 발단도 어느 공급인이 공급권을 팔아 먹고 김인정 회사에 와서 또 다시 공급권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앙심을 먹고 고발했다는니, 같은 지주회사의 한 사람이 주주들간의 압력으로 고발했다는니 하는 풍문과 함께 어느 비교과서 출판인이 찢었다는 풍문도 심심찮게 나돌았을 정도로 이들간에는 서로 풀리지 않는 웅어리가 있었다.[월간지 「신동아」, 상계서]

* 이종석: 사건 당시 동아일보사 문화부 차장

다. 검정 교과서 회사 소송 진행 및 소송 결과

중등교과서(주)는 사건 후 7년만에 대법원에서 승소하였다. 그러나 마포 세무서는 불복하고, 당시 명세를 부쳐서 재고지 발부하였다. 이것도 5년만에 ‘강박에 의한 과세처분’은 무효라 하여 고지 취소 판결이 났다.

(가) 중등교과서 회사(부과금 취소의 소)

- 1977. 8. 1 감사원에 심사를 청구함
- 78. 11. 7 감사원에서 기각 결정됨
- 79. 1. 6 고등 법원에 행정 소송 제기(79구 8호)
- 84. 2. 11 고등 법원 승소
- 84. 10. 10 대법원 승소(84누 184호)
(납세 고지서에 과제 처분 내역을 명시하지 않음은 위법)
- 84. 11. 1 재고지 발부(마포 세무서장-명세서 기재하여)
- 85. 6. 5 고등 법원에 행소 제기(고법 85구 526호)
- 87. 12. 17 고등 법원 승소
- 89. 5. 23 대법원 승소

(나) 고등교과서회사(부과금 취소의 소)

- 1977. 8. 6. 감사원에 심사 청구
- 78. 11. 7. 감사원에서 기각 결정
- 79. 1. 9. 고등 법원에 행정 소송 제기(부과 처분 취소)
- 83. 11. 18. 감사원에 심사를 청구함고등 법원 승소
- 84. 3. 13. 대법원 승소
(납세 고지서에 과제 처분 내역 명시하지 않음은 위법)
- 84. 7. 10. 재고지 발부
- 85. 11. 1. 고등 법원 승소
- 87. 2. 24. 대법원 파기 환송(재정 시효 무관)
- 88. 9. 6. 고등 법원 승소(강박에 의한 과세는 위법)
- 90. 7. 22. 대법원 승소
- 90. 9. 1. 민사 지방 법원에 부당 이익금 반환소 제기
(재정시효 소멸이라고 환급 거부하므로)
- 90. 7. 25. 고등 법원 승소
- 92. 3. 31. 대법원 승소

고등 교과서 회사도 7년만에 대법원에서 승소('84. 3. 13)하였으나 그러나 세무서에서 재고지 발부하였다. 이것도 5년만에 재정 시효 소멸이 성립되는 것으로 고등법원에서 승소하였다.

● 김중성 회장*

이 사건이 너무나 허망하기도 하고 억울한 생각과 함께 화가 무척이나 났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교과서 편수업무가 공정하고 누구에게나 그 진실을 말할 입장이었기 때문에 나 개인의 명예회복도 그렇고, 문교부 편수관 전체의 명예도 감안하고 소송을 냈습니다. 내가 해당되는 것은 교과서 편찬시 수정비조로 수수된게 증수되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몇몇하게 각종 자료를 수집함은 물론, 해당 증인을 찾아가 호소하고 그들이 법정에 나와 진실을 밝히게 하는 등 난생 처음 법원 출입을 하였으며, 결과적으로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후 공무원으로 복직 의사도 있었으나 그것은 당시의 승소에 따른 부푼 희망 사항이었지 실제로 복직에 매달리는 그런 '집념은 아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때는 승소에 집착하였고 '진실'이란 가치 개념에 호뭇하였던 것입니다. [사건 당시 문교부 과학 편수관]

* 동산과학 어린이집 회장

라. 명예 회복

1990년 7월 대법원에서 '무효'라는 승소 판결이 남음으로써 검인정 교과서 회사 사건은 그 당시 어마어마한 탈세와 불법이 있었다고 언론에 보도되었으나,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밝혀져, 납부한 세금은 환급되고 있다. 그러나 대대적으로 왜곡 보도한 신문 기사 때문에 많은 교과서 관계자들은 친구는 물론 가족에게까지 오해를 받았고, 그 심적인 피해는 말할 수 없는데, 이런 피해에 대한 보상책은 찾을 길이 없다.

또, 수뢰 등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던 문교부 관계자와 회사 관계자로 집행 유예 또는 불기소 처분 등으로 거의 풀려났다. 판결에 의하여, 유신 정책에 협조하는 과잉 충성 세력의 압력으로 검인정 사건이 확대되었다는 사실이 들어나, 어느 정도 피해자들의 명예가 회복된 것만도 다행으로 생각하는 바이다.

끝으로, 이번 기회에 문교부 편수관을 비롯하여 관계자 여러분들에 대하여는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밝힌다.

또, 이 사건으로 인하여 당시 을유문화사의 정진숙 사장은 “출판 30년의 문화 사업에 결국 범죄자의 낙인을 찍혔다”고 자탄하면서도 “명예를 회복하고 다시 국민앞에 낮을 들 수 있는 계기를 당국이 마련해 줄것”을 당부하였으며, 정음사의 최철해 사장은 “전대의 유업에 먹칠을 하게 된 자신의 과오와 회사가 문을 닫게 되면, ……(중략), 외솔회에서 발간하는 「나라 사랑」마저 중단할 위기”라고 하였다.

그리고 일조각 한만년 사장과 일지사 김성재 사장도 “재산상의 손실이나 도산의 위험보다 평생을 걸고 이룩한 회사의 이미지와 출판인으로서의 명예손상에 더 신경이 쓰인다.”고 술회한 적이 있다. 따라서 대법원의 승소는 이들에게 출판인으로서의 명예를 회복시켜준 것으로서 꽤 다행스럽다고 하겠다.

(4) 교과서에 관한 연구

제 3차 교육과정기에 ‘교과서에 관한 연구’는 앞에서 논의한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와 마찬가지로 문교부 편수국(후에 장학편수실로 개편)에서, 한국교육개발원(KEDI)에서, 그리고 대학이나 학회 및 시도 교육연구원과 같은 교육 연구 단체 등 세 부류에서 실시되

었다.¹⁰⁹⁾

문교부는 그 당시(1973~1977) 정책 개발 연구를 주로 하였으며, 여기에는 교과용 도서 편찬 정책(계획)이라든지 현행 교과서의 검토·분석 및 실험본 교과서의 현장 실험 등 다음과 같은 것들이었다.

- 교과용 도서 편찬 정책(계획)에 관한 행정 연구
- 현행 교과서의 검토·분석 조사 연구
- 실험본 교과서의 현장 학교 적용 연구
- 실험본 교과서의 현장학교 적용 연구
- 교육과정·교과서 연계 발전 연구
- 기타 학습 자료(탐구생활 등) 연구 개발 위촉 등

한국교육개발원은 교과서 개발 업무를 본격적으로 수행(1978)하기 이전에 많은 기초 연구를 수행하였다. 즉, 초·중학교 교육발전사업(E-M 사업)이 그것인데, 이것은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으로서 ‘배움책’과 ‘교사용 지도서’를 개발하였다. KEDI는 본격적으로 1976년과 1979년 두 차례 교과서 체제의 개선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1980년에는 교과용 도서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여 1980년부터 개발할 초·중 교과서 연구 개발 사업에 대비하였다. KEDI에서 연구·개발한 과제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새 교과서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1976. 4. ~1977. 2)
- 국민학교 교과서 구조 개선에 관한 연구(1978~1980)
- 교과용도서 개발을 위한 용역 연구(1979, 교과서 제도의 국제 비교 연구 외 3건)
- 중학교 교과서 개선에 관한 연구(1981)
- 교과용 도서 연구 개발(1981)
- 기타 교수·학습 자료 연구·개발(1974~1981, ‘탐구생활’, 특활 교육 프로그램 등)

이 가운데에서 ‘국민학교 교과서 구조 개선에 관한 연구’는 우리 나라에서 본격적으로 교과서에 대한 연구를 시도한 첫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산발적으로 있었던 부분적인 연구와는 달리 국민학교 교과서 전체를 체계적으로 분석·검토하여 새로운 모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의의는 뚜렷한 바 있다. 특히 연구 문제로서 교과서의 일반적인 체제, 각 교과별 교과서의 특징, 교과서의 내용과 외형 체제, 교과서와 교육과정과의 관계, 교과서 개발의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다룬 것으로서 이것은 교과서를

109) 한국교육개발원 10년사 편찬위원회, 상계서, pp. 146~150.

질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데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 바 크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대학이나 학회 및 교육단체 그리고 시도 교육연구원 등에서 수행한 ‘교과서에 관한 연구’는 <표 IV-37>에 나란한 바와 같다. 여기서 ‘교과서에 관한 연구’ 영역은 <표 IV-37>과 같이 ‘교과서 이론’, ‘교과서 연구’ 등 10개 항목으로 나누어 집계하였는데, ‘교과서 연구’, ‘교수·학습’, ‘국제비교’는 1건도 없으며, ‘교과서 내용’과 ‘교과서 제도’가 그 중 많은 편에 속한다. 이렇게 볼 때 활자·지질과 가독성에 관한 사항이나 조직 체계(그림·사진 등 일러스트)에 관한 사항과 장식(표지, 제본, 판형 등)과 관련된 분야는 연구 실적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표 IV-38>은 초·중등학교 교과별 연구 과제를 집계한 것이다. 이 집계는 교과별 논문 편수만으로 정리하였고, 연구 영역별로는 조사되지 않았다. 이 표에서 초등학교가 저조한 경향이고, 중등학교는 17편으로 더욱 저조한 편이다.

<표 IV-37> ‘교과서에 관한 연구’ 연구 영역별 집계표(일반)

연구영역 집계	합계(%)	발표 구분		연구 과제명(예시)
		*잡지등 (%)	**연구지 등(%)	
1. 이론 (총론·본질·기능 등)	2 (8.3)	1 (50)	1 (50)	· 교과서 모형 개발 연구 · 교육과 교과서
2. 연구(방법)				
3. 내용 (선정·체계)	6 (25.0)	1 (16.6)	5 (83.4)	· 교과서에 반영된 한국민주주의의 연구 · 실험용 교과서의 분석적 연구
4. 교수·학습				
5. 역사	3 (12.5)	1 (33.3)	2 (66.4)	· 교과서관의 형성과 변천 · 한국 개화기의 교과서
6. 발행 (가격·출판)	2 (8.3)	1 (50)	1 (50)	· 교과서 정가 구성 비율 연구 · 교과서 관리의 합리화 방안 연구
7. 제도 (행정·정책 등)	5 (20.8)	1 (20)	4 (80)	· 고본 교과서 재활용 문제 · 교과서 단일화와 교육과정 개편
8. 편집 (체제 등)	3 (12.5)	1 (33.3)	2 (66.4)	· 교과서 개편과 집필상의 제문제 · 교과서의 편찬 방향
9. 비교 (국제 등)				
10. 교육	3 (12.5)	2 (66.4)	1 (33.3)	· 제일 동포 2세의 교과서 · 교재:제일한국학교(하계학교)
합계	24 (100)	8 (33)	16 (67)	

자료: 국립중앙도서관, 『한국교육과정 관계자료 목록』(1945~1980) 중에서 제 3차 교과서 자료, 서울:국립중앙도서관, 1980.

*잡지명: 새교실, 교육연구, 교육평론 등

** 연구지 [한국교육학회, KEDI, 대학(원), 시도교육연구원 등]

<표 IV-38> 초, 중등학교 교과별 ‘교과서에 관한 연구’논문수 집계표

교과별 \ 학교별	일반	초등학교	중등학교	비고
1. 일반	24	6	4	
2. 국어	3	5	4	
3. 도덕	1			
4. 국사	2		1	
5. 산수(수학)		1	1	
6. 자연(과학)	2			
7. 생물			2	
8. 체육	1		1	
9. 영어	1		4	
합계	34*(100)	12(35)	17(50)	

자료: 국립중앙도서관편, 상세서 pp.157~182 재구성, 교과목이 없는 것을 연구과제가 없는 것임.

* 일반 교과서 지수 100인 경우에 초등·중등 별로 나타냄.

(5) 교과서의 외적 체제 현상 조사 및 개선

1) 외적 체제 현상 조사

문교부는 제 3차 교육과정기에 교과서를 구성하는 판형, 쪽수, 색도, 도판류, 지질, 글자, 제책 등 외적 체제에 대해 제 2차 교육과정기에 비해 근본적으로 제도변화를 가져오게 한 것은 별로 없다.¹¹⁰⁾

- ① 판형: KEDI에서 ‘새 교과서 모형 개발 연구’에 나타난 바대로 국판보다는 4·6배판이 내용 조직 및 편집상 적절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즉, 교과목 특성에 따라 그 크기를 정하되 4·6배판 쪽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 ② 쪽수: 지질과도 관계된다. 일본 교과서 380페이지 짜리와 우리 교과서 300페이지짜리 두께가 비슷하다. 쪽수는 그 교과서 학습량과 관련되므로, 그 교과목의 특성을 감안해서 정하는게 좋다. 쪽수는 판형과도 관련된다. 다시 말해, 교과목 특성과 자기 학습력 증진, 축약형과 자율학습형의 장점을 혼합한 형식 등에 따라 증감된다.
- ③ 색도: 인쇄 색도야말로 앞으로 연구해야 할 과제로서 원색은 어렵더라도 2도 정도로 인쇄한다면 학습효과를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있을 것이다. 또, 근래 인쇄기술 및 기계의 고도 발달로 독자들의 색도 관념이 많이 바뀌었고 비용면에서도 평판쪽이 활판보다 싸다는 사실을 교과서 편집·제작 관계자들은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

110) 허강 외 「교과서외적체제 개선 연구」, pp.275~290, 서울:교과서연구소, 1977.

다. 즉, 초등은 4도 인쇄, 중등은 교과목 특성에 따라 색도수를 늘리고, 과학, 기술, 지리 등의 교과서는 시습히 원색 인쇄가 이루어져야 한다.

- ④ 도판류: 교과서 삽화를 전문적으로 그리는 삽화가의 양성이 시급하다. 이것은 삽화나 사진 등이 교과 내용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또 시각 매체의 원색화 등도 감안해야 한다
- ⑤ 지질: 우리 나라의 개인 소득이 100\$ 미만이었을 때의 교과서 지질(갱지)이 1,500\$이 넘었을 때까지 계속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미색 중질지($55\text{g}/\text{m}^2 \rightarrow 70\text{g}/\text{m}^2$)로 개선이 시급하다.
- ⑥ 활자: 학생들의 시력을 보호하고 학습능력을 올릴 수 있도록 예술적으로 고려되고 다양화되어야 한다.

· 중학교 교과서 본문활자	11p(현재 크기)→11p=#16(이상적 크기)
· 고등학교 교과서 본문활자	10.5p(현재 크기)→10p=#14(이상적 크기)

- ⑦ 제책: 오늘의 우리 교과서는 인문계 고교의 경우, 사회과부도를 제외한 전과목이 철사로 꿰맨 평철호부장에 뒤를 강력폴로 바른 통표지로 제본되어 있는데. 이 제본방법은 책을 펼쳐 보는 데에 좀 문제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제본 기술이 향상된 무선철 제본기로 제책하는 게 바람직하다.
- ⑧ 레이아웃 및 편집 디자인: 가독성과 조형성이 합리적으로 균형을 유지해야 하므로 현상태에서 아트 디렉션 개념이 도입되어야 한다. 우리 나라 교과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러 레이아웃 및 편집 디자인기법이 혁신되어야 한다.

2) 교과서의 질적 개선

우리 나라의 교과서는 내용면에서는 그런 대로 연구와 개선이 있었다고 하겠으나 편집체제 등 외형적인 면에서는 더 연구·발전할 여지가 있다.

- 교과서를 집필하는 데 주어지는 기간이 너무 짧다. 충분한 시일의 여유를 주어서 집필하는 교과서의 내용을 현장에서 실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교육과정을 지나치게 세밀하게 해 두면 집필자가 창의성을 발휘해서 집필하는 데 저해 요인이 되므로 이것이 시정되어야 한다.
- 집필상의 유의점에 지나치게 제한이 많아서 창의적인 집필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 각 교과목의 특색이 저자의 창의를 의하여 발휘되고, 각 교과목의 기본 목표가 달성되도록 의도적으로 편집되게 한다.

- 앞으로의 교육은 다양화하고 유연성을 지녀야 하므로, 교재 내용을 다채롭게 하여 누구나 자기의 관심, 실력에 맞게 공부할 수 있게 한다.
- 교사들의 교과서관을 정보화 시대에 맞게 사고를 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즉, 교사들의 교과서관이 구태의연하다면 아무리 내용이 좋은 새 교과서가 나온다 할지라도 교육실제에 활용되지 못하여 허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 교과서 내용의 질적 향상을 위한 검정제의 전면 부활이 바람직스럽다. 이는 다만, 질적 향상만이 아니라 복수 다원 가치의 신봉의 민주적 교육 조치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끝으로, 교과서의 편집체제 및 품질의 연구개발에는 당국자나 출판인뿐만 아니라 수리학, 미학, 생리학, 심리학 등의 각계 학자 그리고 인쇄 및 편집 전문가, 예술가들의 지혜가 모아져야만 그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

(6) 교과서 평가

교과서 평가는 교과서의 체제나 그것이 조직된 구조와 거기에 담겨진 내용을 검토 분석하는 일로서 여기에는 계획 단계의 평가, 교과서 체제와 구성의 평가, 적용 단계의 평가 및 교육결과의 평가 등이 포함된다.

1) 교과서 평가

① 계획 단계의 평가

제 3차 교육과정기 중반기까지의 교과용 도서 편찬은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조직 전개하였으며, 이 계획은 문교부 편수관과 집필자 간에 제시되는 문교부 방침에 따라 추진되었다. 그러나 1977년 이후부터는 이 같은 계획 단계가 KEDI 쪽으로 옮겨져 그 기능이 수행되었다.

먼저 교과용도서의 개발 단계에서 기초이론이나 선행연구물(각급 학교 교과서 내용 분석, 각 교과 내용의 학교급별 체계 연구 등)은 주로 문교부 자체에서 조사한 자료와 문교부와 외부 교육학자 및 교과 교육 전문가가 참여해서 작성한 교과별 연구 자료 등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 때 교과용 도서 개발에 학문적 배경이나 기초 이론 등을 제시한 자료는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학회, 한국행동과학연구소에서, 또 문교부 심의 기관인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편 연구 조정위원회’(정범모, 유형진, 이규호, 이영덕, 함종규, 강우철, 홍웅선 등 7명) 등에서 나왔다.

<표 IV-39> 교과용 도서(국정 및 1종)의 개발 절차와 기능 분담

제 3차 교육과정기 기능분담 절차	1973. ~1977. 8		1977. 8 ~1981. 12	
	기능분담		기능분담	
	문교부, 편수관	집필자, 연구기관*	문교부	전문연구기관**
1. 교과서 편찬 정책 수립 ◦ 교과서 편찬 정책안 수립 ◦ 교과서 편찬 정책안 심의 ◦ 교과서 편찬 정책의 확정	○		○	
2. 교과서 편찬 계획 확정 ◦ 교과서 편찬 계획 수립 ◦ 심의 및 확정 ◦ 교과과 편찬 의뢰	○		△	○
3. 현행 교과서의 검토 ◦ 집필 팀의 확정 ◦ 지도 목표 및 내용의 재확인 ◦ 교과서 분석 기준의 설정 ◦ 분석 결과의 검토 협의	○			○
4. 교과서·지도서 시안 작성 ◦ 집필 계획 확정 ◦ 시안의 집필 ◦ 시안의 심의 ◦ 수정 및 보완	○			○
5. 현장 학교 실험 ◦ 현장 학교 시행 준비 ◦ 교사 연수 실시 ◦ 현장 학교 시행 실시 ◦ 자료 수집 및 문제점 분석	○	△	△	○
6. 수정·보완 ◦ 수집·분석 자료의 협의 ◦ 수정·보완 실시 ◦ 가인쇄	○	△		○
7. 종합 심의 ◦ 종합 심의 실시 ◦ 수정 및 보완 실시 ◦ 인쇄 준비 완료	○	△	○	△
8. 인쇄 ◦ 인쇄 부수 및 가격 사정 ◦ 인쇄 의뢰	○		○	
9. 공급 ◦ 공급 계획 확정 ◦ 공급 완료	○		○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10년사 편찬위원회편, 「한국교육개발원 10년사」, p.116, 서울:한국교육개발원, 1983.

○표: 주관 △표: 협조 * 연구기관(KEDI 연구학교 및 교과용 도서 심의회 등 포함)

** CDC(Curriculum Development Center) 교육과정개발기구

결과적으로, 제 3차 교육과정기의 교과서 개발은 제 2차 교육과정기 때부터 이어져 온 문교부 편수관 중심의 편찬 체제였다고 볼 수 있다. 이 체제는 교과서 개발의 경험과 실적을 가진 교과별 편수관이 계획 단계에서 인쇄·공급 단계까지 그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또 국정교과서 편찬심의회(1종 도서 편찬심의회)의 자문을 받아 교과서 개발을 추진하였다. 그 후 1977년 8월에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이 바뀌고 교과용 도서 편찬 업무가 문교부에서 한국교육개발원으로 옮기면서 그 기능이 <표 IV-39>와 같이 분담되었다.

② 교과서 체제와 구성의 평가

제 3차 교육과정기에 문교부 편수국에서 집필자에 제시한 ‘국정교과용 도서 집필요령’(초·중·고 공용)을 참고하였다. 즉, 다음 중 ‘집필요령’에 제시된 것은 교과용 도서 편찬에 반영된 것으로 간주하였다.

첫째, 교육내용의 타당성

평가 항목	집필 요령(해당번호)	교과용도서 반영여부
1) 학문적 특성의 반영	· 교육과정 내용을 조직 전개(2)	○
2) 내용의 포괄성과 체계성	· 보편성 고려(4), 교과내용중복탈피(8)	○
3) 발달 수준의 고려	· 학생의 심신 성장 발달 유의(5)	○
4) 실용성의 반영	· 해당 교과목표 달성(2)	○(실업계)

둘째, 내용조직의 합리성

평가항목	집필요령(해당번호)	교과용도서 반영여부
1) 교육목표의 적합성	· 해당 교과목의 목표 달성(2)	○
2) 다양성과 동기유발	· 없음	×
3) 체계적 심화	· 없음	×
4) 서술의 이해 가능성	· 한글서술, 간결평이하계(6)	○
5) 삽화·도표 등의 적절성	· 학습전개 필요성 등 선명한 것 제시(5)	○
6) 정보 지식의 양	· 집필 분량(지정분량) 따른다(3)	○

- 제 3차 교육과정기의 교과서 내용 조직은 제 2차 교육과정기에 비해 외적 체제와 내용 조직이 월등하게 변화된 게 없으며, ‘다양한 학습의 동기를 유발할 수 있게 편집 디자인을 구성하거나 내용 조직 체계에 변화를 가져온 것이 별로 없다.’
- 제 3차 교육과정기에 교과서의 ‘체계적 심화’는 대단히 어려운 일에 속한다. 이것은 제 3차 교육과정기의 교과서의 판형은 거의가 국판이었고, 내용 조직이 요약 제시형이었기 때문에, 심화학습 내용을 체계화해 제한된 쪽수에 수록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불가능했다.
- ‘서술의 이해 가능성’은 한글 전용으로 서술하고 표준말로 간결·평이하계 상체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국민학교 3학년 이하는 경제), 우리 나라 교과서가 전통적으로 요약 제시형이어서 알기 쉽게 풀어 쓰는 데는 집필자의 오랜 관습으로 쉽게 해결되지 못했다.

셋째, 체제의 효율성

평가 항목	집필 요령(해당번호)	교과용도서 반영여부
1) 단원구성의 적절성	· 교육과정 편제 준수(1,17)	○
2) 수업과정과 수업방법의 제시	· 없음	×
3) 평가내용과 평가방법	· 연구 문제와 연습문제 다수 수록(12)	○
4) 교과서 활용의 지침	· 없음	×
5) 자율학습 기회의 제공	· 자학 자습에 도움되게 꾸밈(12)	○

- ‘교과서의 서술’은 지식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야 하고, 수업과정의 진행과 학습 활동의 특징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나 그렇지 못했다.
- ‘교과서 활용’은 교과서가 구체적으로 수업의 상황에서 어떻게 활용되어야 하는가를 제시해야 하나 그렇지 못했다. 이것은 ‘둘째, 교과서 내용 조직의 합리성’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당시의 교과서가 요약 제시형이었기에 교과서로서 갖추어야 할 제 기능이 제시되지 못했다.
- 그리고 평가 항목으로 ‘교과서의 외적 체제’(판형, 글자 모양·크기, 지질, 쪽수, 색도, 제책 등)와 편집 기법 등이 제시되어야 하나 당시 우리 나라는 교과서의 외적 체제나 편집 디자인 기법이 너무 열악하였으며, 디자인 개념이 없었던 시기였다. 다만, 이 시기에 KEDI에서는 1976년 ‘새 교과서의 모형 개발’과 1979년 ‘교과서 구조 개선 연구’ 등을 통해 교과용 도서 체제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데, 힘을 기울였다.

③ 적용 단계의 평가

교과용 도서가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이며, 이것의 평가 영역은 ‘교수·학습 과정’과 ‘지원 체제’ 및 ‘교원 연수(교육 프로그램)의 타당성’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교수·학습 과정

평가 준거	평가 항목	평가 기관 등
교과서에서 의도하고 있는 활동이 수업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1) 수업계획단계 2) 교수, 학습 과정 3) 평가 단계	· 문교부 연구학교·지정학교 등에서 평가 실시 · 문교부 장학·편수진의 현장 지도 등 · 한국2종교과서협회 주관 중등학교 교과별 교과서 교수·학습 보고 대회 개최

교과서가 교수·학습 과정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는 위 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문교부 연구 학교 등에서의 계획 단계, 교수·학습 과정 및 평가 단계에서 제시한 현장 보고서를 통해 평가된다. 제 3차 교육과정기에는 교수·학습에 관한 연구학교 운영을 위해 약 30개 학교가 동원되었고, 1977년부터는 KEDI가 직접 연구학교를 운영해

교수·학습에 대한 평가 업무를 추진하였다.

또, 문교부 편수관의 해마다 교육과정 운영 및 교과서 현장 적용 등 실태 조사를 위한 현장 출장(시·도 교육위원회)을 통해 교수·학습 과정에 관한 생생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평가해서 교과서 편찬 업무에 피드 백하였다.

둘째, 지원체제

교과서 교과서 적용 단계 평가 중 지원체제는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서 의도하고 있는 환경 구성에 대한 평가라 할 수 있다. 이 평가는 문교부 지정 연구학교가 중심이 되고, 또 한국2종교과서 협회 주관 교과별 교과서 편찬에 관한 발표회를 통해 지원체제(교실·교재·교육자료·연구활동 등) 현상을 평가하였다.

셋째, 교원연구의 타당성

평가기준은 교과서에서 의도하고 있는 목표 및 수업 방법을 이해하고 적용하는데 필요한 재교육을 뜻한다. 문교부는 교육과정 개정(제정) 공포와 함께 중앙에서 연수 교육을 실시하고 이들이 다시 전달 강습을 실시하게 하는 등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관한 이론과 실재를 습득하는데 주력하였다.

④ 교육 결과의 평가

교육 결과의 평가는 ‘학업성취의 평가’와 ‘사회적 성취의 평가’가 있으나 여기서는 학업성취에 관한 평가만을 언급하기로 한다. 즉, 국가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평가 중 학업성취도 평가는 1990년도 초 교육부 산하 국립교육평가원이 설치되기 이전에는 실시가 어려웠으며, 특히 제 3차 교육과정기 때에는 학업성취도 평가의 개념이 생소하였던 시기였다. 즉, 학업성취도 평가가 전국 초·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교육 목표 성취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여 교육정책 수립이나 교육 방법 개선을 비롯한 각종 교육활동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이의 평가는 앞으로 교과용 도서 개발과도 관련시킬 필요가 있다

여기서, 새로운 교과서를 개발(새 교과서 모형 개발, 1976, KEDI)하여 가르친 후의 학업 성취 결과와 실험 중에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견에서 밝혀진 연구 결과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실험용 교과서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율을 높이는 데 효과적임이 밝혀졌다.

둘째, 새 교과서에서 시도한 체제는 교수·학습 과정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교사와 학생이 사용하기에 편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4. 결 론

앞에서 제 3차 교육과정기의 교육과정 개발과 교과용 도서 편찬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문에서 다루었듯이 제 3차 교육과정기는 정치·사회적으로 격동의 시대였으며, 이런 가운데서 교육과정 개정의 중요한 기초적 요인이 된 것은 1968년 12월 공포된 국민교육헌장의 이념과 1970년도부터 시작된 새마을 운동의 기본 정신과 국제 정세의 변화에서 오는 국가 안보를 위한 국민의 총화 단결의 절실한 요청, 1972년의 10월 유진 그리고 과학적 지식과 기술의 변화에서 온 학문중심 교육과정 이론 등이었다.

다시 말해, 제 3차 교육과정은 이념적으로는 1970년대 우리 나라 교육 이념을 주도했던 국민 교육헌장 및 유신 교육 등 이념을 반영하고, 이론적으로는 1960년대 미국 교육 개혁을 주도했던 학문중심 교육과정 이론의 반영이라고 적시한다.

한편, 제 3차 교육과정 개발 방식은 제1차, 제 2차 때와 마찬가지로 문교부(편수국)가 중심이 된 ‘중앙집권형’으로 이루어졌으며, 흔히 말하는 ‘국가수준 교육과정 유일 체제’시대였다고 지칭한다. 이것은 또 새 과정이 제 1차, 제 2차와 마찬가지로 ‘중앙집권형 교육과정 체제’를 그대로 이어왔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이 시기는 교과용 도서 편찬 제도가 소위 말하는 ‘검인정 교과서 사건’을 계기로 대변혁이 일어났는데, 법령상으로는 ‘교과용 도서 저작·검인정령 시대’에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시대’로 옮겨져 운영된 시기였으며 편수행정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본 연구는 모두 4개로 나누어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심이 되는 게 ‘초·중등 교육과정 개발’과 ‘초·중등 교과용 도서 편찬’이다. 여기서 제 3차 교육과정 개발과 적용·평가 등에 대해 그리고 초·중등 교과용 도서 편찬·발행 및 교과서 연구·평가 등에 대해 상세히 논의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의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발

교육과정의 개정은 곧 교육내용을 개선한다는 뜻과 함께 한다. 그렇다면 제 3차 교육과정 개정의 전제는 무엇인가?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민족중흥’이라고 제시할 수 있다. 이 단어를 역사적 전망에서는 미래의 이미지이고, 역사적 현재에서는 민족적 사명으로 해석한다. 당시에는 이와 같은 당위성을 전제로 하여 가장 기대되는 인간상을 적립할 수 있도록 기본 방향을 정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여, 유신과업을 수행함으로써 국력을 배양하고, 국력을 배양함으로써 평화 통일을 성취하고, 나아가 ‘민족중흥’의 이미지를 실현하는 데 참여할 수 있는 인간상을 정립하는 방향으로 교육내용을 개선하도록 하였다.

제 3차 교육과정이 제 2차 교육과정에 비해 달라진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제 2차는 생활 중심인데 반하여 학문을 위한 기초 교육, 즉 학문 중심 교육으로 발전하였다.
- ② 과거 생활 중심의 학습에서 계통학습을 중심으로 한 지식의 구조적인 체계화가 강조되었다.
- ③ 제 3차 교육과정에서는 총론을 일반 목표와 학교급별 교육과정으로 나누어 구성하고, 일반 목표에서는 교육과정 구성의 기본 방침과 일반 목표를 다루었으며, 학교급별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의 구성 방침 및 편제와 시간 배당, 그리고 운영 지침을 다루고 있다.
- ④ 각과 교육을 다루는 각론에서는 교과별 목표, 내용 지도상의 유의점 등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교과 목표에 해당하는 일반 목표와 학년별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그 위계를 명백히 하려고 하였다.
- ⑤ 국민적 가치관의 확립과 민족 주체성에 입각한 자주, 발전적 사관의 확립을 목적으로 도덕·국민 윤리과와 국사과를 독립시킨 것도 3차 교육과정의 한 주요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도덕 및 국민 윤리과가 교과로 독립됨으로써 3차 교육과정은 종전의 반공·도덕 활동이 없어서 교과활동과 특별활동의 2원적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1973년 개정된 제 3차 교육과정은 그 시행 과정에서 여러 전문가, 교육자 및 학부모 사이에서 지적되거나 조사된 문제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제 3차 교육과정에서 시도된 학문중심 교육과정이 충분한 교육적 효과를 거두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이유로서는 이 이론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도 있겠으나 그보다 당시 우리 나라 교육 여건의 한계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학습내용이 과다하게 많고, 또 그 내용이 어렵다는 것이다.
- ② 교육과정 조직 원리의 불분명, 각론의 연계성과 일관성이 부족되어 있으며, 목표진술의 모호 및 중복 등도 지적된다. 이것은 교육목표-교육내용-교육평가 간의 일관성이 결여되었다는 것이다.

- ③ 국민 정신의 개념 체계화 작업이 있어야 하며, 그것의 실천 방안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 ④ 새롭게 강조되는 가치를 기존 교육과정에 추가하는 데서 오는 교육 과정의 부가적(additive) 성격이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 ⑤ 교육 내용의 진실성과 체계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즉, 교육내용을 선정 조직하는데 있어 정치나 사회 체제 등에 예측화되는 것으로 편성되어서는 안 된다.

(2) 초·중등학교 교과용 도서 편찬

우리 나라는 광복 후 줄곧 국민학교에서는 국정 제도를, 중등학교에서는 국정과 검인정 제도를 혼용해 오다가 1977년 소위 ‘검인정 교과서 사건’ 이후 1978년부터 국민학교와 중학교,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 교과와 인문계 고등학교의 교과목 중 국어(독본), 국민윤리, 국사와 문교부 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목의 교과서(‘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 4조, 1978. 2. 9 개정)는 1종 도서로 하도록 규정되었고, 공급도 공급인을 통하던 종래의 방식과는 달리 교과서 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 투자기관으로 지정하고, 이 기관으로 하여금 시·군 교육청 단위로 공급 담당 사원을 주재시켜서 행하도록 하고 있다(동 규정 제32조). 교과서비 부담은 초등의 경우 1979년 현재 무상지급이 실현되고 있어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제27조)의 정신에 접근하고 있다.

제 3차 교육과정기의 교과서 제도는 제 1기와 제 2기로 나누어 고찰해 볼 수 있다. 제 1기는 ‘교과용 도서 저작·검인정령’ 시대이고, 제 2기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시대이다. 제 1기는 제 2차 교육과정기의 교과서 제도가 이어져 온 시기로서 ‘검인정령’의 개정이 급변한 게 없어 대체로 제 2차 때의 교과서 제도를 연장선상에 두고 해석하면 된다. 그러나 제 2기는 교과서 제도에 큰 변혁이 있었던 시기이므로, 이에 대해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문교부는 교과서를 집적 제작하지 않고 기획, 감독 기능만 하고 집필·교정 등 편집 기능은 연구기관, 대학에 위탁하게 하였다. 이는 종래의 편수관 중심 편찬보다는 전문가를 동원하고 널리 자료를 활용하는 면에서 개방적이며 능률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
- ② 과거에 국정·검인정으로 교과서를 분류하던 것을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1종을 연구 개발형, 2종을 자유 경쟁형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즉, 국가의 의사를 최대한 교

과서에 반영할 수 있고 검인정보다 교육 과정의 정신을 정확하게 교과서에 반영할 수 있으며, 국가적으로 재화의 낭비를 막아 저렴한 가격으로 교과서를 공급할 수 있다.

- ③ 제 2종은 일반 저자가 편찬하여 문교부의 검정을 받게 하였는데 복수본으로 하여 1교과당 5종 이내로 한정하였다.

이러한 교과서 제도의 이행은 정채 수행과 행정 능률화에 크게 공헌한 반면, 교육과정을 토대로 한 교과 운영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어, 교과 중심의 주입 편중의 폐를 가중한 요인이 되었다. 더욱이 진학의 입시 문제가 단일 교과서 안에서 출제되도록 규정되어 이른바 암기 중심으로 흐르는 학습 방법을 초래하는 근본요인이 되었다.

또, 전인교육이 학생중심의 개별화에서 이루어지고, 학습자료 또한 다양화를 바라고 있는 교육계의 요망에 비추어 국정 단일의 1종 도서는 적어도 몇 가지로 복수 발행하거나 인정도서 사용의 폭을 넓혀 자료 다양화의 길을 주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다.

교과서 내용에서 크게 달라진 것은 국민학교인 경우 국어과·사회과·산수과·자연과 등에서 더욱 현저하다. 국어과에서는 국어의 영역별로 지도체계를 세워서 교과서를 편찬하였고, 사회과에서는 철저한 중요 개념 이해를 위하여 탐구학습을 시키도록 편찬하였으며, 산수과에서는 집합개념에 의한 수의 발견 과정과 수학의 원리탐구를 체계적으로 도입, 지도하게 하였다. 자연과에서는 관찰과 실험을 거치지 아니하면 원리를 깨낼 수 없도록 편찬하였다.

제 3차 교육과정기의 교과서 제도에 있어 특히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속한 제 2기 때의 문제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제 2차 교육과정기 때와 동일하게 내용이 획일적이고 망라적이며, 지식 전달이 주목적으로 조직(편찬)되어 있어 개성 교육의 저해와 사고력·창조적·자기학습력 등 신장에 지장이 있다. 이것은 문교부가 제시하는 국정(1종)·검정(2종)의 교과서 편찬 방침 중 ‘집필상의 유의점’에 개혁이 없기 때문이고, 또 교과서 개발에 있어 제반 절차가 행정 질서에 과분하게 구속된 데 있다 하겠다.
- ② 교과서는 건국 초창기부터 저가정책·적기공급이라는 경직된 행정적 과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인지 교과서 개선 중 지질, 판형, 색도와 편집 디자인 등에 변혁이 없어 품질이 조잡하고 교수·학습에도 지장이 있다.

- ③ 생산 공급을 대행하는 정부 산하 회사가 관료화하여 말단 행정기관이나 학교를 공급기관시함으로써 공급의 불원활의 책임을 교육기관에 전가시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 ④ 교과서 가격 사정은 문교부 장관이 원가 요소별로 사정하기 때문에 연구 개발비(질적요소) 항목이 배제되어 품질 개선책에 지장을 주고 있다. 이런 실정은 가격 사정의 제약으로 2종 교과서의 품질 개선이 어려워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상과 같이 이 연구의 결론에 부치면서 앞으로의 연구를 위해 몇 가지 제언을 덧붙이로자 한다.

첫째, 제 3차 교육과정·교과용 도서 자료를 더욱 발굴하여 그에 대한 집중적인 해독과 분석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그에 관한 것들은 대략 다음과 같으며, 본문에서 다룬 내용이지만, 그 범위와 심도를 더하여 계속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 ① 이번 연구에서 제외된 공민학교, 기술학교, 특수학교 및 전문학교와 교육대학에 관한 것
- ② 편수관 제도
- ③ 교과용 도서의 외적 체제 및 편집 디자인과 인쇄 품질의 변천
- ④ 교과서 제도(가격·발행 공급 등)
- ⑤ 검인정 교과서 사건

둘째, 민간출판사 부분의 관계 자료의 발굴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검인정 교과서(2종)는 민간 출판사에서 편찬되므로 여기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는 중요한 가치가 있다.

- ① 검인정 교과서(2종) 편찬·발행 관련 자료
- ② 검인정 교과서 개발 관련 비망·증언 등 자료

셋째, ‘부록편’에 교육과정·교과서와 관련된 부록에 게재할 성격의 자료를 수집(집성) 게재하되, 특수 자료 발굴에도 힘을 기울인다.

넷째, 끝으로 교육과정 개발·편성·운영 등과 관련하여 ‘우리 나라 초·중등학교 교육이 어떻게 변천되었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역사적 고찰에 속한다. 그리고 교과목별로 ‘교과서 개발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 정리할 필요가 있으며, 또 ‘교과서 제도와 교과서 재판’ 등도 앞으로 다루어야 할 제재라 판단된다.

참 고 문 헌

- 곽병선 외, '교과서 공급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서울:한국교육개발원, 1988.
- 곽상만, '교과서 행정에 관한 연구', 서울: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1968. 11.
- _____, '교과서 공급 제도 개선' 「교과서연구 제 30호」, 서울: 한국2종교과서협회, 1998.
- _____, '교과서 연구의 과제와 전망' 「교과서연구 제31호」, 서울: 한국2종교과서 협회, 1998.
- 교육부, 「집필상의 유의점: 제 3차 ~ 제 7차」, 서울: 교육부, 1977~1999.
- _____, 「편수 업무 편람」, 서울: 교육부, 1995.
- _____,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 작성 요령」, 서울: 교육부, 1993. 5.
- 국립중앙도서관 편 「한국교육과정 관계 자료 목록」, (1945-1980),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1980.
- 국정교과서주식회사 35년사편찬위원회 편, 「국정교과서 주식회사 35년사」, 서울: 국정교과서(주), 1987.
- 김용만, '교과용 도서 정책의 개혁 과제'(교육과정 연구 12집),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93.
- _____, '국제화시대의 경쟁대비 교가서의 질향상 어떻게 할 것인가'(교과서연구 제18호), 서울: 한국2종교과서협회, 1994
- 김용만 외, 「한국교육과정 변천에 관한 연구」('98 교육부 위탁 연구과제 답신 보고서), 서울: 한국교육과정·교과서연구회, 1998.
- 김태웅 외, 「교과용도서 정가 결정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화 방안」, 서울: 한국 교과서연구원, 1988. 12.
- _____, '교과용도서 공급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화 방안', 서울: 한국교과서연구원, 1999.
- 대한 교육연합회 외, 한국교육연감(77-78, 79-80, 81-82) 서울: 대한교육연합회 외, 1978-1982.
- 대한출판문화협회편, 「대한출판문화협회 40년사」, 서울: 대한출판문화협회, 1987.
- 동아일보사, 「신동아 4월호」 '국정화나 김인정화나', 서울: 동아일보사, 1977. 4.

- 문교부, '중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 처리' 유인물, 1970.
- _____, '교육과정과 교과서 행정', 유인물, 1973. 7, 1975. 7(2개년).
- _____, '편수 업무현황', 유인물, 1974-1978(5개년).
- _____, '신구 교과서 내용 분석'(국민학교·중학교분), 유인물, 1974. 5.
- _____, '국민정신 교육내용 현황 분석표', 유인물, 1976. 11.
- _____, '1979학년도 사용할 1종 교과서 및 1종 지도서 연구개발을 위한 편찬 기본 계획', 유인물, 1977. 8.
- _____, '1979학년도부터 사용할 2종 교과서 및 2종 지도서 집필상의 유의점', 유인물, 1977. 7.
- 문교부령 제310호, 「국민학교 교육과정 해설」, 서울: 교학도서(주), 1973. 3.
- 문교부령 제325호,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 서울: 교학도서(주), 1973. 12.
- 문교부령 제350호, 「인문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서울: 교학도서(주), 1975. 9.
- 문교30년사 편찬위원회 편, 「한국교육 30년사」, 서울: 문교부, 1987.
- 백종억, 「주요국의 교육행정 제도」, 서울: 교육과학사, 1998.
- 서울시교육위원회 편, 「한국 교육이념의 탐구」, 서울: 서울교위, 1973. 7.
- 안귀덕 외, 「한국 근·현대교육사」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12.
- 오만석 외, 「한국교육개혁의 종합적 평가」,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11.
- 유봉호교수 정년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한국교육과정의 탐색」, 서울: 교학연구사, 1992. 8.
- 유봉호, 「한국 교육과정사 연구」, 서울: 교학연구사, 1992.
- 이경섭, 한국현대 교육과정사 연구(상), 서울: 교육과학사, 1997.
- 이경섭 외, 「교육과정-이론·개발·관리」, 서울: 교육과학사, 1982. 2.
- 이경환,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1)-총론·재량활동-」, 서울: 교육부, 1998. 11.
- 이용숙 외, 「교과서정책과 내용구성 방식 국제비교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95.
- 이종국, 「한국의 교과서」, 서울: 대한교과서(주), 1991.
- _____, 「대한 교과서사(1948~1998)」, 서울: 대한교과서(주), 1998.
- _____, 「한국의 교과서 편찬 정책과 그 적용과정에 대한 연구」 「'98 출판학 연구」, 서울: 범우사, 1998.
- 이혜영 외, 「한국 근대학교 교육 100년사 연구(Ⅲ)」, 「해방 이후의 한국교육」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98.

- 정찬섭 외, 「편집 체제와 글의 읽기 쉬움」, 서울: 대한교과서(주), 1993.
- 정태범, 「교육행정학」, 서울: 양서원, 1998. 2.
- _____, 「교과서 정책 기본 방향」 「새 교육」, 서울: 대한교육연합회, 1983. 2.
- 정태수, 조규향 편, 「한국 교육정책 개발사(1975-1984)」 일봉 정태수 박사 회갑 기념
논총, 서울: 예지각, 1991.
- 조성일 · 김영출, 「한국 교육행정사」, 서울: 집문당, 1996.
- 중앙교육연구소 20년지편찬위원회 편, 「중앙교육연구소 20년지」, 서울: 중앙교육연구
소, 1973. 3.
- 중앙교육연구소, 「교과서 내용 분석과 행정 개선에 관한 연구」, 서울: 과학기술처 외
1969.
- 중앙대학교 부설 한국교육문제연구소 편, 「문교사(1943~1973)」, 서울: 중앙대학교 출판
국, 1974.
- 최호성, 「교육과정 평가론」, 마산: 경남대학교 출판부, 1998. 2.
- 한국교육개발원 편, 「새 마을 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73. 12.
- _____, 「국민정신 교육의 제문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76. 11.
- _____, 「교육체제 혁신의 방향」,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75. 11.
- _____, 「교과서 구조 개선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79.
- _____, 「교육과정 및 교과용 도서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80.
- _____, 「학교 교육제도 및 교육과정 발전 방향 탐색」, 서울: 교육과학사, 1981.
- _____, 「교과서 개발의 원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82.
- _____, 「교육혁신 그 10년」,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84. 12.
- 한국교과서연구소 편, 「교과용 도서 관련 법규집」, 서울: 한국교과서연구소, 1977~
1981(개정).
- 한국교육과정 · 교과서연구회 편, 「한국 교과 교육과정의 변천(초 · 중 · 고)」, 서울: 대
한교과서(주), 1990
- _____, 「편수의 뒤안길 제1집, 제 2집」, 서울: 대한교과서(주), 1991, 1995.
- 한명희, 「교과서 여구 제22호」, 「교과서 선정의 공정성 확보」, 서울: 한국2종교과서협회,
1995. 8.
- _____, 「교과서 연구 제24호」 「교육과정과 교과서 제도 개선」, 서울: 한국2종교과서협

- 회, 1996. 5.
- 함수곤, 「교육과정의 편성」, 서울: 대한교과서(주), 1994.
- 함수곤 외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실제」, 서울: 동아출판사, 1994.
- 함수곤, 「교육과정과 교과서」, 서울: 대한교과서(주), 2000. 12.
- 함종규, 「교육과정 연혁 조사(전편), (후편)」,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1974, 1980.
- 허 강, 「좋은 교과서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교과서연구 제16호」, 서울: 한국2종교과서 협회, 1993.
- _____, 「우리 나라 교과서 연표」, 「교과서연구(제18호~제20호)」, 서울: 한국2종교과서 협회, 1994. 4 ~1994. 12.
- 허 강 외, 「교과서 외적 체제 개선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교과서연구소, 1997.
- 허 강 외, 「교과서의 외적 체제 및 편집 디자인 현상 국제 비교 연구」, 서울: 한국교과서연구원. 2000.
- 홍용선, 「새 교육과정의 이론적 기저」, 서울: 배영사, 1971. 6.
- _____, 「신 교육과정의 연구」, 서울: 연세대 출판부, 1973. 7.
- _____, 「한국 교육이 추구하는 인간 특성」, 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9. 9.
- _____, 「교과서 제도 개선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90.
- 下村哲夫, 「신·교육과정의 법률학」, 일본: 동경(주)학습연구사, 1992.
- 浪本勝年 「교육내용 행정의 한」, 일본: 동경 기다쥬, 1984. 5.
- 教科書研究센터, 「교과서 작성 요람」, 일본 동경: 교과서연구센터, 1995.
- Rise, Stanley, 「Book Design : Text Format Models」, N.Y.: R. Bowker Co; 1978.
- Marshall Lee. 「Bookmaking」, New York : R. R. Bowker Co; 1979.
- Muther C. 「How to evaluate a basal textbook」: The Skills trace. Educational leadership, 1985.
- David H. Jonassen. 「The Technology of of Text, Vol 1, 2」, New Jersey: Educational, Technology Publications, 1985.

부 록

Ⅰ. 교과용도서 관련법규

Ⅱ. 우리 나라 교과서 연표

I 교과용도서 관련법규

교육법

(1949.12.31)
법률 제86호

18차 개정 1973. 3. 10 법률 제2586호

제 7 장 학과와 교과

제155조 대학, 사범대학, 각종학교를 제외한 각 학교의 학과, 교과는 각령으로, 각 교과의 교수요지, 교수요목 및 수업시간수는 문교부령으로써 정한다.

각 교과의 수업량은 연단위로 표시한다.

교과에는 필수과목 외에 선택과목을 둘 수 있다.

중학교는 전교과의 15퍼센트 이상을, 인문계 고등학교는 전교과의 10퍼센트 이상을 실업과목으로 과하여 학생 각자로서 하여금 1인 1기를 습득케 하여야 한다.

제156조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중에서 전교과의 30퍼센트 이상을 실업과목 또는 체육과목으로 하는 학교는 실업중학교·실업고등학교·또는 체육중학교·체육고등학교의 명칭을 할 수 있다. 고등학교에서 인문과정과 실업과정을 또는 2이상의 상이한 실업과정을 아울러 두는 학교는 종합 또는 실업학교의 명칭을 관할 수 있다.

제8장 교과용도서

제157조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실업고등전문학교와 전문학교를 제외한 각 학교의 교과용도서는 문교부가 저작권을 가졌거나 검정 또는 인정한 것에 한한다.

교과용도서의 저작, 검정 또는 인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전항의 대통령령에는 그 위반자에 대하여 관인본의 몰수 또는 1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는 벌칙을 규정할 수 있다.

교육법시행령

(1970.2.12)
대통령령제4589호

9차개정 1973.4.20 대통령령 제6638호

제 6 장 교육용도서와 수업보조물

제185조 (교과서의 선정) ①대학·사범대학·교

육대학·전문학교·실업고등전문학교를 제외한 각 학교(이하 본 장에서는 각 학교라 칭한다)의 교과용도서의 선정은 학교장이 하되, 문교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용도서(이하 국정교과서라 칭한다)가 있을 때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하며, 국정교과서가 없을 때에는 문교부에서 검정한 교과서용 도서(이하 검정교과서라 칭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전항에 의하여 학교장이 검정교과서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6조 (인정도서) 각 교과의 효과적인 학습지도를 위하여 학교장은 문교부가 인정한 도서(이하 인정도서라 칭한다)를 보충교재로 선정하여 병용할 수 있다.

제187조 (대용) 국정교과서 또는 검정교과서가 없을 때에는 인정도서를 교과용 도서로 대용할 수 있다.

제188조 (교과서 대용의 인가) 학교장은 다음 경우에는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국정교과서, 검정교과서 또는 인정도서 이외의 도서를 교과용 도서로 사용하고자 할 때.
2. 교과서용 도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필기 또는 등사로 교과서용 도서를 대용하고자 할 때.
3. 국정교과서, 검정교과서 또는 인정도서 중에 게재된 것 이외의 가사, 악보를 교수하고자 할 때.

제189조 (교육용 영화 등의 지정) 교수용의 교육영화·슬라이드·줄사진·음반·패도·표본·지도·지구의 기타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은 문교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것이라야 한다.

제190조 (시험준비서 등의 사용금지) 교과용 도서를 해석한 도서, 상급학교 입학시험준비서 또는 이와 유사한 도서는 수업중 사용할 수 없다.

제191조 (교육방송) 문교부장관이 지정한 종목의 방송은 이를 수업에 사용할 수 있다.

제192조 (위임) 제185조 내지 191조에 규정한 사항 중 교과용도서의 저작·검정 및 기타 교재의 인정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제193조 (국정교과서의 발행 등) 국정교과서의 번각, 발행과 판매에 관하여는 문교부장관이 정한다.

특수 교육 진흥법

(1977. 12. 31)
법률 제 3053호

전문개정 1995. 12. 29, 법률 제5069호

제25조(교육과정 및 교과용도서) ①특수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은 장애의 중별과 정도를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②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한 교과용도서는 무상으로 지급한다.

③특수교육을 위한 교육지원자의 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 및 가격사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

(1978. 8. 30)
대통령령 제9151호

전면개정 1994. 10. 4. 대통령령 제14395호

제19조 (교과용도서) ① 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과용 도서의 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 및 가격사정 등에 관하여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교육부장관은 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교과용 도서중 시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용 점역교과서의 원활한 발행·공급을 위하여 그에 관한 업무를 점역시설·설비를 갖춘 기관에 대행시킬 수 있다.

산업교육진흥법

(1963. 9. 19)
법률 제1403호

전문개정 1995. 1. 5. 법률 제4880호

제22조 (교육과정 및 교과용도서) ① 국가는 산업교육에 관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교과용도서의 편찬, 검정·인정 및 발간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교육의 진흥

을 위한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교육에 관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교과용도서의 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교육진흥법 시행령

(1969. 11. 25)
대통령령 제4312호

8차개정 1996. 2. 22 대통령령 제14920호

제23조 (교과용도서의 발행에 대한 보조) ①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산업교육에 관한 교과용도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진 산업교육에 관한 교과용도서
2. 교육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산업교육에 관한 교과용도서
3. 산업교육에 관한 인정도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교육에 관한 교과용 도서의 발행에 필요한 경비에 관한 보조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과용 도서는 그 제판에 필요한 경비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과용도서는 그 편집 및 제판에 필요한 경비

교과용도서검인정규정

(1950.4.29)
대통령령 제336호

개정 1960. 12. 21 대통령령 제423호

제1조 이하 각 학교의 검정 및 인정은 교육법, 기타 법령으로써 정하는 대학과 사범대학을 제외한 각학교(이하 각학교라 칭함)의 교육목적에 부합하여 교과용도서로써 적합하다고 사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규정에서 교과용도서라 함은 각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학생용도서의 고등학교, 사범학교, 고등기술학교를 제외한 각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교수용의 책도, 지구의류를 말한다.

제2조 검정은 국민학교, 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제외한 각학교의 정규교과용도서 중 따로 국정으로 제정하지 아니하는 학교용도서에 대하여 행한다. 단, 실업과 기타 수시로 제정하는 국정교과용도서는 예외로 한다.

제3조 국정은 각학교의 정규교과목의 교수를 보충심화하기 위한 학생용도서, 국민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정규교과목의 학습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학생용도서 및 제1종, 제2항에 규정한 책도, 지구의류에 대하여 행한다.

제4조 이교과용도서의 저작권자는 그 국가의 검정 또는 인정을 문교부장관에게 출원하여야 한다. 전항의 출원자로서 대한민국판도내에 거주를 가지지 아니한 자는 검정 또는 인정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대리시키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거주를 가진 자료써 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단, 여타한 경우에는 검인정원서에 위임장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한 출원서로서 저작권자 승인이 있을 때에는 그 중에서 대리자를 정해야 한다.

제5조 전조에 의하여 검정 또는 인정을 출원하는 자는 제1호 서식의 검인정원서, 저작자 이력서, 제4호서식의 제조비계산서, 각1통에 검인정요금 및 도서간본 6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검정자 요금은 도서 1종에 한하여 그 도서의 정가의 50배로 한다. 단, 책도, 지구의류에 한하여는 그 정가의 5배로 한다. 이미 납입한 검정자요금은 사유여하를 불문하고 이를 환부치 아니 한다.

제6조 교과용도서의 내용을 사열하기 위하여 문

교부 장관은 교과용도서의 검인정 출원이 있을 때마다 매건에 대하여 3인 내지 5인의 사열위원을 선정위촉하여야 한다. 사열위원은 위촉받은 교과용도서의 납입을 사열하여 문교부 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제2항의 정한 바에 의하여 납입한 검인정 요금의 80% 해당액을 전항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한 해당 각 사열위원에 대하여 사열수당으로 지불한다.

제7조 제4조에 의하여 검정 또는 인정을 출원한 도서중 사소한 수정을 가하면 검정 또는 인정할 수 있다고 사정되는 도서에 대하여서는 그 수정을 요하는 개소를 출원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제8조 전조에 의하여 수정할 개소를 지시받은 때에는 4개월 이내에 수정 출판하여 제3호 서식에 따라 수정 도서 2부를 첨부하여 그 도서의 검정 또는 인정을 추원하여야 한다. 단 극히 경이한 수정에 불과할 때에는 정오표를 첨부시켜서 추원 수속을 약할 수 있다.

제9조 문교부 장관은 검정 또는 인정한 도서에 대하여 가격 및 재사정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 검정 또는 인정한 도서는 관보에 그 명칭, 책수, 정가, 목적하는 학교 또는 교과목의 종류, 발행 및 검인정 연월일, 해당도서에 서명한 저작자 및 발행자의 주소성명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 검정 또는 인정을 받은 도서는 매책 표지 또는 내표지 등 보기 쉬운 곳에 다음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검정 또는 인정의 구별
2. 검정 또는 인정 연월일
3. 목적하는 학교 및 교과목

제12조 검정 또는 인정을 받은 도서를 출판할 때에는 그때마다 발행후 3일 이내에 해당 도서 2부를 문교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 검정 또는 인정을 받은 도서의 명칭, 책수 그 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검정 또는 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14조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효력을 상실한 도서의 검정 또는 인정을 다시 출원하는 때에는 제3호 서식에 개정 도서간본 2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항의 출원에는 검인정 요금은 이를 납부하지 않는다. 단 도서의 정가를 인상하였을 때에는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인상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 검정 또는 인정을 받은 도서의 저작권자와 해당 도서에 서명한 저작자 또는 발행자에 이동이 있거나 그 주소성명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저작권자는 이를 문교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항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문교부 장관은 관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 문교부 장관은 이미 검정 또는 인정한 도서에 대해서도 이를 다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할 개소를 저작권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전항에 의하여 수정할 개소를 지시 받은 때에는 저작권자는 2개월 이내에 수정 출판하여 문교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좌의 각 호의 1의 해당하는 때에는 도서의 검정 또는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1조, 제12조 또는 제15조 1항의 규정에 위반할 때
2. 제9조에 의하여 사정된 가격에 따르지 않은 때
3. 제16조의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4. 검정 또는 인정한 도서로서 문교부에 납부한 도서에 비하여 지질, 인쇄, 또는 제본이 나쁜 것을 발매할 때
5. 그 내용이 교과용도서로서 부적당하게 된 때
6. 교과목 또는 그 정도의 변경, 교수요지 및 교수요목의 제정 또는 변경이 있을 때
7. 저작자, 저작권자 또는 발행자로서 반국가적 또는 비인간적 행위를 감행하여 학생에게 교육상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될 때

제18조 검인정을 받지 아니한 도서 또는 검인정의 효력을 상실한 도서에 검정필 또는 인정필 기타 이와 유사한 문자를 기재하여 발매하는 자는 천원 이상의 벌금에 처하고 그 판인본을 몰수한다.

그 사정을 알고 판매의 목적으로 양수한 자도 또한 같다.

국정교과용도서 편찬규정

- 제1조** 본 영은 국정으로 제정하는 교과용도서의 편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국민학교, 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정규과목의 교수를 위한 학생용 도서 및 교사용 도서는 국정으로 편찬한다.
- 제3조** 전조의 규정하는 학교이외의 각 학교의 교과용도서에 대하여는 문교부 장관이 지정하는 교과목에 한하여 국정으로 편찬할 수 있다.
- 제4조** 국정으로 제정하는 교과용도서의 편찬, 개편 또는 그 기초 조사를 위하여 문교부에 교과용 도서 편찬위원회를 둔다. 교과용 도서 편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따로 문교부 장관이 정한다.
- 제5조** 국정으로 제정하는 교과용도서의 저작권은 문교부가 취득한다.
- 제6조** 국정으로 편찬한 교과용도서의 번각은 문교부장관이 지정한 자에 한 한다. 전항에 규정한 이외의 자가 국정으로 편찬한 교과용 도서를 번각한 시에는 천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판인본(判印本)을 몰수한다.

부 칙

본 영은 공포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본 영은 시행전에 국정으로 편찬한 교과용도서는 본 영에 의하여 편찬된 것으로 간주한다.

국정교과용도서의 편찬심의회 규정

- 제1조** 국정으로 제정하는 교과용도서의 편찬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교부 편수국 교과용도서 편찬심의회를 둔다.
- 제2조** 심의회는 분과별로 하며 초등·중등·고등의 구별 및 전기(前記) 각 학교의 교과목 구별에 따른다.
- 제3조** 교과용도서의 편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심의하기 위하여 문교부장관은 전조에 규정한

이외의 분과심의회를 둘 수 있다.

제4조 각 분과심의회는 의장 1인, 위원 약간명(1950.4.29 구성)한다.
(대통령령 제337호) 의장은 문교부편수국장이 된다.

위원은 문교부직원, 현직교원, 지방 교육행정 관계자 및 기타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문교부 장관이 위촉한다.

제5조 의장은 회무를 장리하며 심의회의 회의 사항을 문교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위원은 국정으로 제정하는 교과용도서의 편찬 원안 및 교과용도서의 편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원안을 심의하며 또는 기초자료의 조사연구에 종사한다.

제6조 동일사항으로 2인이상의 분과심의회에 관련이 있을 때에는 관계분과심의회를 연석 회의를 열 수 있다.

전 항의 경우에도 의장은 문교부편수국장이 된다.

제7조 심의회에 관한 사무는 문교부 장관의 명에 의하여 문교부편수국장이 이에 종사한다.

본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950.6.2)
(문교부령 제8호)

교육용도서저작·검인정령

(1967.4.17)
(대통령령 제3018호)

개정 1971.7.26 대통령령제5723호

개정 1972.7.11 대통령령제6281호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교육법 제1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사범대학·교육대학·실업고등전문학교 및 전문학교를 제외한 각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교과용도서의 저작·검정·인정 및 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과서”라 함은 학교의 교육을 위하여 교육과정에 따라 편찬한 교육의 주된 교재로서 교수용으로 사용되는 학생용 또는 교사용 도서로 문교부장관이 저작권을 가졌거나 그의 검정을 받은 것을 말한다.
2. “교과서의 수정”이라 함은 문구·삽화의 증감이나 교정, 서술방법·삽화·쪽수나 활자체의 변경, 기타 시사변동에 따른 내용의 부분적인 수정으로서 개편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교과서의 개편”이라 함은 교육과정의 개정 없이 당해 교과서의 총쪽수의 3분의 1이내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육과정의 부문 개정에 따라 총쪽수의 4분의1 이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4. “교과서의 신편”이라 함은 교과목의 신설에 의한 교과서의 신규편찬 또는 교육과정의 전면개편이나 기타 사유로 인한 교과서의 개편의 범위를 넘는 내용의 변경을 말한다.
5. “교과서의 검정”이라 함은 문교부장관이 특정한 도서가 국가 이념과 교육법의 취지에 부합되어 학교의 교육용도서로서 적합한가의 여부를 심사·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교육용 도서의 인정”이라 함은 학교에서 교과목의 교수를 보충하거나, 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사용하는 교과서 이외의 학생용 또는 교사용도서로서 적합한가의 여부를 문교부장관이 심사·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7. “국정교과서”라 함은 문교부장관이 저작권을 가진 교과서를 말한다.

8. “검정교과서”라 함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교과서를 말한다.

제3조 (국정 및 검정의 대상) ①국민학교의 교과서와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과서중 다음 각 호의 것은 국정교과서로 한다.

1. 국어(독본)·도덕·국민윤리
 2. 국가 이념을 반영하거나 그와 직접 관련된다고 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교과목의 교과서.
 3. 실업에 관한 교과목의 교과서 중 문교부장관이 정하는 교과서.
 4. 실업계학교의 보통교과목의 교과서중 문교부장관이 정하는 교과서.
 5. 검정신청이 없는 교과목의 교과서.
- ②전항 각 호의 교과서 이외의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과서는 문교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제4조 (인정의 대상) ①학교에서 교과목의 교수를 보충하거나 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사용하는 교과서 이외의 학생용 또는 교사용 도서(교육교재인정규정 제1조에 규정한 것을 제외한다)는 문교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인정에는 제5조·제13조·제14조(다만, 수수료는 당해 도서의 신청가격의 150배로 하되, 4개 이상의 교과로 편집된 도서는 신청가격에 교과서의 수를 곱한 금액의 150배의 3분의 1로 한다)

③인정을 받아야 할 도서의 범위와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문교부령으로 정하되, 그 인정의 신청은 당해 도서의 사용개시일 3월전에 하여야 한다.

제5조 (표지방법) 교과서에는 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자의 성명과 발행자 및 인쇄자의 주소·성명 인쇄년월일 및 발행년월일을 명시하여야 하며, 제3조2항의 교과서는 그 표지에 문교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하여야 한다.

제 2 장 국정교과서

제6조 (국정교과서의 편찬과 발행) 국정교과서는 문교부장관이 편찬 발행한다.

제7조 (국정교과서편찬심의회) ①문교부장관의 자문에 의하여 국정교과서의 편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문교부에 학교별 교과목별로 국정교과서편찬심의회(이하 “심의

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문교부소속공무원과 당해 교과목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문교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문교부에 직접 소속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④심의회는 운영에 관한 사항은 문교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 (발행권 부여) 문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과서의 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투자기관 또는 인쇄능력 및 발행능력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국정교과서의 발행권을 부여할 수 있다.

제9조 (발행권의 부여 절차) ①문교부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정교과서의 발행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과서의 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투자기관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발행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자의 자격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인쇄 및 제책의 시설을 완비할 것.
2. 공급조직이 편성되어 있을 것.
3. 생산자금이 확보되어 있을 것.

②이 영이 정한 것 외에 발행권 부여와 자격심사에 관하여는 문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조 (발행자의 의무)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으로부터 국정교과서의 발행권을 부여받은 자는 당해 교과서를 문교부장관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발행하여야 한다.

②국정교과서의 발행권을 부여받은 자는 그 발행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당해 교과서를 타인으로 하여금 제조하게 할 수 없다.

제 3 장 검정교과서

제11조 (검정실시의 공고) ①교과서의 검정은 교과목별로 한다.

②문교부장관은 교과서의 검정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실시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공고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2조 (공고사항) 전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준거교육과정과 교과서의 종류.
2. 심사본의 제출부수.

3. 수수료.

4. 검정신청의 자격 및 기간.

5. 검정기준.

6. 검정교과서 집필상의 유의점.

7. 첨부서류.

제13조 (검정신청) 교과서의 검정은 저작자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저작자로부터 당해 도서의 발행권에 관한 승낙을 받은 자만이 신청할 수 있다.

1. 검정신청접수일 현재 검정교과서를 발행하고 있는 자.
2.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출판사로서 검정신청접수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3년간 매년 2종이상의 간행물을 발행한 실적이 있는 자.

제15조 (심사위원) ①문교부장관은 교과서의 검정을 실시함에 있어서 신청된 도서의 심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교과목별로 당해 교과목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을 가진 자 중에서 심사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전항의 심사위원은 과목마다 3인을 원칙으로 하되, 복합교과목은 당해 교과목에 포함된 분야가 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그 수를 증가할 수 있다.

③심사위원에게는 납입된 검정수수료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료를 지급한다.

제16조 (심사기준) 교과서의 검정에 있어서의 심사기준은 교과목별로 절대요건과 필요요건으로 나누어 문교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 (심사 결과의 보고) 심사위원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에 따라 위촉을 받은 도서의 내용을 심사하고 심사서를 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심사 및 공고) ①교과서의 검정은 원고심사와 가채본 심사의 2단계로 나누어야 한다.

②원고심사에 있어서는 제16조의 절대요건과 필요요건을 충족한 도서를 합격으로 하되, 그 합격여부는 문교부장관이 결정한다.

③문교부장관은 원고심사에 합격된 도서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원고에 의한 가채본의 작성·제출을 명한다.

이 경우에 문교부장관은 표현 기타 필요한 부분에 관한 수정을 지시할 수 있다.

④가채본 심사에 있어서는 그 가채본이 원고심사에 합격된 원고 및 전항 후단의 수정지시

에 따라 인쇄된 여부 및 그 체제가 교과서로서 적합한가의 여부를 심사한다.

⑤문교부장관은 가쇄본심사의 결과 교과서로서 적합하다고 심사된 도서를 검정교과서로 결정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교과서명.
2. 검정번호.
3. 책수.
4. 해당학교.
5. 최초의 사용학년도 또는 학기.
6. 검정년월일.
7. 쪽수.
8. 저작자 및 발행자의 주소 성명.

제19조 (검정유효기관) ①전조의 규정에 따라 검정된 교과서는 전조 제5항에 의하여 공고된 최초의 사용학년도(학기를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개 학년도에 한하여 검정교과서로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교육과정의 전면개편으로 인하여 교과서를 신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문교부장관은 교육과정이 개편되지 아니하여 교과서를 개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전항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 (검정교과서 내용검토) ①검정교과서의 저작자 및 발행자는 당해 교과서를 제18조제5항에 의하여 공고된 최초의 사용한 학년도부터 매년 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교과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그 검토결과 개편 또는 수정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개편 또는 수정하고, 그 도서를 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개편 또는 수정지시) ①문교부장관은 검정교과서를 개편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저작자 또는 발행자에게 필요한 개편 또는 수정을 명할 수 있다.

②저작자 또는 발행자가 전항의 소정기간에 개편 또는 수정한 도서는 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 (개편)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편될 교과서의 심사에는 제14조와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14조의 200배는 100배로 한다.

제23조 (변동신고 등) ①검정교과서의 발행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되는 발행자는 제13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③검정교과서 발행자의 주소·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또는 소재지)이 변경된 때에는 그 발행자는 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동 신고서를 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문교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동된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23조의2 (발행자의 지정) 저작자가 교과서의 검정을 받은 때에는 그 검정을 받은 날로부터 2월내에 제13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발행자를 지정하여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4조 (교과용지도서) 문교부장관은 검정교과서의 저작자 또는 발행자에 대하여 당해 교과서의 교사용 지도서를 저작·발행하게 할 수 있다.

제 4 장 발 행 및 공 급

제25조 (발행) ①발행자는 학년도(학기를 사용 기준으로 한 교과서의 경우에는 학기)마다 발행하고자 하는 교과서의 다음 각호의 서류를 포함한 발행계획서를 당해 교과서를 사용할 전학년도의 월말까지 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조공정표.
2. 공급계획서.
3. 정가산출서.

②문교부장관은 전항의 발행계획서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수정을 명할 수 있다.

③제1항의 발행계획서에는 제1항의 사항이외에 교과서의 지질·인쇄·제본 기타 문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6조 (발행자의 의무) ①발행자는 교과서를 그 발행계획서에 따라 제조·공급하여야 한다.

②발행자는 교과서를 발행할 때에는 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된 교과서 2부를 부쳐 지체없이 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 (가격사정) ①교과서의 가격은 문교부장관이 사정한다.

②교과서의 가격은 재료비·인쇄·제조비·영업비·공급수수료 및 인세(국정교과서를 제외한다)등 가격구성요소를 공인된 도매물가에 따라 적정하게 산출하여 사정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가격구성요소의 비율산출방법 기타 교과서 가격 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교부령을 정한다.

④문교부장관은 교과서의 가격을 사정할 때에는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 공고한다.

제28조 (가격제사정) ①교과서의 가격을 제사정할 경우에는 종전의 사정된 가격에 물가변동률, 임금변동률 기타 가격의 변동요인만을 감안하여 사정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전조 제4항을 준용한다.

제29조 (현황조사) ①문교부장관은 교과서의 제조·공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행자로부터 교과서의 제조·공급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소속직원을 파견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30조 (교과서 전시회) ①문교부장관은 필요에 따라 교과서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전항의 전시회의 시기·장소·기타 필요한 사항은 문교부장관이 정한다.

제 5 장 감 독

제31조 (국정교과서 발행권의 취소) 문교부장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정교과서의 발행권을 부여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발행권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0조의 규정에 위반된 때.
2.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권부여에 관한 자격심사를 받았거나 입찰을 한 때.

제32조 (검정의 취소) 문교부장관은 검정교과서 또는 발행자나 저작권자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검정을 취소하거나 일정한 기간 그 발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이 영 또는 이 영에 의한 문교부장관의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2. 저작권자의 성명 표시가 검정한 당시의 저작권자와 다를 때.
3. 내용이 검정한 때와 다를 때.
4. 저작자가 반국가적 행위를 한 때.

5. 지질·인쇄 또는 제본 등이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발행계획서와 다른 때.

6. 제25조 제1항 각호의 내용과 달리 제조 또는 공급을 한 때.

7. 검정된 도서를 제18조 제5항에 의하여 공고된 최초학년도 또는 학기 개시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발행하지 아니한 때.

제33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법 제1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당해 도서를 몰수한다.

1. 문교부장관의 발행권 부여를 받지 아니하고 국정교과서를 발행한 자.
2. 문교부장관의 검정 또는 인정을 받지 아니한 도서나 검정 또는 인정이 취소된 도서를 검정 또는 인정 교과서로 발행한 자.
3. 그 점을 알고 제1호 또는 제2호의 교과서를 인쇄한 자나 그 도서를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은 시행당시 국정교과서를 발행하고 있는 자는 이 영에 의하여 발행권의 부여를 받은자로 본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의 검정교과서는 이 영 시행 당시의 검정교과서는 이 영에 의하여 검정된 교과서로 본다.

④(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국정교과서로서 제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동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문교부령으로 정하는 시기까지 이를 국정교과서로 한다.

부 칙(1971.7.26 대통령령제5723호)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2.7.11 대통령령제6281호)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교과용도서저작·검인정령 시행세칙

(1970.11.25)
문교부령 제270호

개정 1971.7.27 문교부령 제285호
1973.7.12 문교부령 제316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교과용도서저작·검인정령 (이하 “검인정령”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정교과서편찬심의회 의 직무)
국정교과서편찬심의회는(이하 “심의회”라 한다)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국정교과서의 편찬방법에 관한 사항
2. 국정교과서의 초고심사에 관한 사항
3. 기타 국정교과서 편찬에 관한 사항

제3조 (심의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①심의회에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며, 심의회를 대표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교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회의)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보고)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간사와 서기) ①심의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문교부소속 공무원중에서 문교부자관이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7조 (인정도서의 범위) 검인정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할 교과용도서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학습의 효과를 높이거나 교수를 보충하기 위하여 수업에 직접 사용되는 도서 다만, 국민학교용 도서를 제외한다.
2. 정기적인 휴가기간 또는 특수한 사정으로 인한 휴학기간 중 학습을 보충하기 위한 도서.

제8조 (인정기준) 교과용 도서의 인정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한다.

1. 교육기본이념의 구현에 적절한 도움을 주도록 편찬되어 있을 것.
2. 교과서의 내용을 심화 보충하고 있을 것.
3. 창조적 사고력과 표현 노력의 향상 및 우리 생활문화의 체득에 도움이 될 것.
4. 내용이 공정 정확하여 난이도가 적합할 것.
5. 도표·삽화 등 편집체제가 창조적이며 적절할 것.

제9조 (심사기준) 검인정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계 고등학교의 실업에 관한 교과목의 교과서에 대한 검정심사기준은 별책과 같이 정한다.

제10조 (표지) ①교과서 및 교과용 도서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발행자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발행자 변동 신고) 검정교과서의 발행자가 변동되었거나 발행자의 주소,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소재지)이 변경된 때에는 그 발행자는 검인정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발행자 변동사항 신고서에 당해 도서 2부와 다음 각호의 서류(발행자가 변동된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문교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저작권자의 동의서
2. 변동전 발행자와의 합의서
3. 출판사등록증 사본

제12조 (교과서 가격의 구성) 검인정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정하는 교과서의 가격에는 재료비·인쇄·제조비·영업비·공급수수료(공급인이 공급하지 아니하는 교과서는 제외한다) 및 인세(국정교과서는 제외한다)를 포함한다.

제13조 (교과서의 가격의 사정) ①교과서의 가격을 사정할 때에는 책별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원가계산조서를 작성한다.

1. 재료비는 자재의 물량(인쇄용지의 감모량을 포함한다) 및 그 단위당 가격. 다만, 인쇄용지의 감모량은 옅셀인쇄의 경우에는 색도당 1.5퍼센트 활판인쇄의 경우에는 3퍼센트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2. 인쇄 제조비는 제판·인쇄 제본의 물량 및 그 단위당 가격.
3. 영업비는 교과서의 생산·공급에 필요한 제잡비(역무비를 포함한다)로서 국민학교 교과서의 경우에는 가격 총액의 22퍼센트, 중·고등학교 교과서의 경우에는 가격 총액의 2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4. 공급수수료는 공급인이 학교에 공급함에 필요한 경비로서 국정교과서의 경우에는 가격총액의 10퍼센트, 검정교과서의 경우에는 가격총액의 1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5. 인세는 가격총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 ②제1항 제1호의 자재의 단위당 가격 및 동항 제2호의 제판·인쇄·제본의 단위당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2이상의 공인된 물가조사기관이 조사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그 단위당 가격이 공인된 물가조사 기관에 의하여 조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교부장관이 별도로 물가조사를 실시하여 정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1. 7. 27 문교부령 제285호)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3. 7. 12 문교부령 제316호)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 책]

실업계고등학교의 실업교과서 검정심사 기준

1. 절대요건

- (1) 교육법과 동시행령 및 교육과정령에 규정된 교육의 목적과 방침 및 목표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 (2) 국가 이념과 국가정책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 (3) 특정한 종교, 사회단체 등을 편파적으로 선전하거나 비난하지 아니할 것.

2. 필요 요건

- (1) (단원편성) 학습내용의 단원편성에 있어서 해당교과목의 교육과정에 비추어 소홀히 되어 있거나 누락된 부분이 없을 것.
- (2) (분량과 질) 학습내용은 교육과정의 배당 단위시간과 지도내용에 비추어 그 분량과 질이 적절한 것.
- (3) (정확성) 본문의 내용은 실업에 관한 이론과 실기면에서 정확할 것.
- (4) (계통성) 본문의 내용은 계통적으로 체계 있게 전개되어 있을 것.
- (5) (보편 타당성) 본문의 내용은 편협된 견해나 일부의 의견을 그릇되게 일반화하여서는 아니되며 보편타당성을 띠고 있을 것.
- (6) (난이성) 본문의 내용은 학생의 심신 발달 단계로 보아 그 난이도가 적절할 것.

- (7) (간명성) 본문의 설명은 간명하고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을 것.
- (8) (윤리성) 본문의 서술, 삽화의 내용 등은 산업에 종사할 국민으로서 윤리적 가치와 정신적 자세를 갖추 수 있도록 되어 있을 것.
- (9) (공정성) 본문의 서술, 삽화의 내용 등은 특정한 산업체나 상품 등에 대한 선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정을 기하고 있을 것.
- (10) (시대성) 본문의 서술, 삽화의 내용 등은 우리 나라 산업 발전에 기여할 새로운 기술을 적절히 다루고 있을 것.
- (11) (유용성) 본문의 서술, 삽화의 내용 등은 산업에 관한 기초적인 기능을 기르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것.
- (12) (관련성) 본문의 서술, 삽화의 내용 등은 전후에 모순이 없고 다른 교과와의 관련이 고려되어 있을 것.
- (13) (신빙성) 본문의 서술, 삽화의 선정 등은 다른 도서를 표절함이 없어야 하며, 인용한 자료는 출처를 밝혀 신빙할 수 있을 것.
- (14) (창의성) 본문, 삽화 등의 소재 선정이나 내용 전개에 있어서 학생의 흥미를 유발시키고 학습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창의성이 발휘되어 있을 것.
- (15) (부합성) 삽화·도표·도면 등은 정확하고 본문의 내용과 부합되어 있을 것.
- (16) (통일성) 본문, 삽화, 도면 등에 사용된 외래어의 한글 표기, 한글의 로마자 표기, 용어, 기호, 계량 단위 등은 정확하고 통일되어 있을 것.
- (17) (편의성) 통계·부록·주·차례·찾아보기 기타 자료는 필요에 따라 적절히 배치되어 있고 학습에 이용하기 쉽게 되어 있을 것.
- (18) (오자 맞춤법) 오자 탈자가 없고 맞춤법이 정확할 것.
- (19) (연습 등) 실험실습문제, 연습문제, 예시 등은 적절히 수록되어 실업에 관한 기초적인 기능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것.
- (20) (편집 체제) 판형 면수 등은 문교부장관의 지시에 따르고 있어야 하며, 활자, 행간, 여백 등은 학습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적절히 배려되어 있을 것.

교육과정령

(1969. 7. 19)
문교부령제231호

9차 개정 1974년 12월 31일 문교부령 제350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교육법 제155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사범대학 및 각종 학교를 제외한 각급 학교의 교과와 교수요지, 과목 및 수업시간수와 기타 학습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하 “교육과정”이라 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각급학교의 교육과정) ①국민학교의 교육과정은 별책 1과 같다.

②중학교의 교육과정은 별책 2와 같다.

③인문계 및 실업계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은 각각 별책 3 및 별책 4와 같다.

④특수학교의 교육과정은 별책 5, 별책 6 및 별책 6의 2와 같다.

⑤실업고등전문학교 및 실업계 전문학교의 교육과정은 각각 별책 7 및 별책 7의 2와 같다.

⑥교육대학의 교육과정은 별책 8과 같다.

⑦유치원의 교육과정은 별책 9와 같다.

⑧공민학교 및 고등공민학교의 교육과정은 각각 별책 10 및 별책 11과 같다.

⑨기술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의 교육과정은 각각 별책 12 및 별책 13과 같다.

⑩실업중학교의 교육과정은 별책 14와 같다.

[별책생략]

부 칙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문교부령 제207호 부칙 단서의 규정은 계속 그 효력을 가진다.

부 칙(1969.9.4 문교부령제251호)

이 영은 197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중학교 실업·가정과와 인문계 고등학교 실업 및 가정과에 관한 부분은 197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1969.12.11 문교부령제254호)

이 영은 197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1.2.19 문교부령제274호)

이 영은 197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1.8.24 문교부령제286호)

이 영은 1972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1972학년도 제1학년 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1972.6 문교부령제300호)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3.1.14 문교부령제310호)

이 영은 197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국민학교 교육과정 중 사회과를 제외한 4학년, 5학년과 6학년의 교육과정에 관한 부분은 197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3.8.31 문교부령제325호)

이 영은 197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수학과, 과학과, 체육과, 음악과, 미술과와 실업·가정에 관한 교과 중 가정(여자) 및 가사에 관한 부분은 1975학년도부터 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부 칙(1974.1.31 문교부령제334호)

이 영은 197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4.12.31 문교부령제350호)

이 영 중 편제와 단위 배당에 관한 규정은 1977학년도 1학년부터 시행하고, 편제와 단위배당에 관한 규정 이외의 규정 중 국민윤리, 국어 I, 국사, 정치, 경제, 한문 I, 영어 I, 영어 II 및 일본어 과목에 관한 규정은 1975학년도부터 문교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교육과정심의회규정

(1969. 12. 4)
문교부령제4388호

제1조 (설치목적) 문교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대학·사범대학과 각종 학교를 제외한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과정의 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이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게 하기 위하여 문교부에 교육과정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심의회의 조직) 심의회는 교과별위원회, 학교별위원회와 운영위원회로 구분하여 조직한다.

제3조 (교과별위원회) ①교과별위원회는 교육법시행령에 규정된 교과 및 학과별로 소위원회를 조직하여, 각급 학교의 동계교과와 전문학과에 대한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한다.

②전항의 각 소위원회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되는 위원으로써 구성하되 그 위원정수는 30인 이내로 한다.

제4조 (학교별위원회) ①학교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각급 학교별로 소위원회를 조직하여 동계학교의 교육과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한다.

1. 국민학교 소위원회(유치원, 공민학교 포함).
2. 중학교 소위원회.(고등공민학교 포함)
3. 인문계고등학교 소위원회.
4. 실업계고등학교(기술학교와 고등기술학교를 포함한다)소위원회.
5. 교육대학 소위원회.
6. 실업고등전문학교 소위원회.
7. 특수학교 소위원회.

②학교별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전항 이외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전2항의 각 소위원회는 각 교과별 소위원회에서 추천하는 1인씩의 위원과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되는 위원으로서 구성하되 그 위원정수는 30인 이내로 한다.

제5조 (운영위원회) ①운영위원회는 교육과정 제정에 있어서의 전체적인 원칙 및 목적조정에 관한 사항과 다른 위원회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조정·심의한다.

②운영위원회는 각 학교별 소위원회에서 추천하는 3인씩의 위원과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되는 위원으로써 구성하되 그 위원정수는 30인 이내로 한다.

제6조 (위원) 각 위원회의 위원은 현직교원, 교육전문가 또는 교육행정이 중에서 문교부장관이 위촉하되, 그 임기는 2년으로 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장 등) ①각 교과별 소위원회와 각 학과별 소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두되, 각 소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②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두되, 위원장은 문교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 중 1인은 문교부 편수국장이 되며, 기타 1인은 문교부장학관 중에서 문교부장관이 위촉한다.

③각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의 회무를 장리하며,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되고, 각 부위원장은 당해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교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8조 (의결정족수) 운영위원회와 각 소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9조 (의결의 효력) 운영위원회와 각 소위원회의 의결은 심의회의 의결로 본다.

제10조 (보고) 각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전문위원) ①각 위원회에는 필요에 따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각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이 위촉하고, 당해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촉받은 사항의 자료수집, 조사연구와 계획된 입안을 하며 당해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2조 (간사 등) ①각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문교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한다.

②간사는 당해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에 종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3조 (수당) 각 위원회의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1977.8.22제정)
대통령령제8660호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교육법 제15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사범대학·교육대학·실업고등전문학교·전문학교를 제외한 각 학교의 교과용 도서의 저작·검정 또는 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과용 도서'라 함은 교과서·지도서 및 인정도서를 말한다.
2. '교과서'라 함은 학교에서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의 주된 교재를 말하며, 문교부가 저작권을 가진 도서(이하 '1종 교과서'라 한다)와 문교부 장관의 검정을 받은 도서(이하 '2종 교과서'라 한다)로 구분한다.
3. '지도서'라 함은 학교에서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교사용의 주된 교재를 말하며, 문교부가 저작권을 가진 도서(이하 '1종 지도서'라 한다)와 문교부 장관의 검정을 받은 도서(이하 '2종 지도서'라 한다)로 구분한다.
4. '인정도서'라 함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학교장의 신청에 의하여 문교부가 저작권을 가졌거나 문교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도서 이외의 도서를 교과서 또는 지도서로 대용하도록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도서를 말한다.
5. '개편'이라 함은 교육과정의 전면 개정 또는 부분 개정이나 기타 사유에 의하여 교과서나 지도서의 내용 전부 또는 총 쪽수의 3분의 1을 넘는 내용의 변경을 말한다.
6. 수정이라 함은 교육과정의 부분개정이나 기타사유에 의하여 교과서나 지도서의 문구·문장·통계·삽화등을 교정·증감·변경하는 것으로서 개편의 범위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교과용 도서의 선정) 학교의 장은 1종 도서(1종 교과서 또는 1종 지도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있을 때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하고, 1종 도서가 없을 때에는 2종도서(2종 교과서 또는 2종 지도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선정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도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 장 1종 도서

제4조 (1종 도서의 대상) 다음의 도서는 1종 도서로 한다.

1. 국민 학교의 교과서 및 지도서
2. 중학교의 교과서 및 지도서
3. 실업계 고등 학교의 교과서 및 지도서
4. 인문계 고등 학교의 교과목중 국어(독본)·국민윤리·국사와 문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목의 교과서 및 지도서
5. 인문계 고등 학교의 교과목중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과목의 교과서 및 지도서로서 검정 신청이 없는 것.
6.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각 학교의 교과목중 문교부 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목의 교과서 및 지도서

제5조 (편찬) 1종 도서는 문교부가 편찬한다. 다만, 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종 도서는 연구 기관 또는 대학등에 위탁하여 편찬할 수 있다.

제6조 (1종 도서 편찬 심의회의 설치) 문교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문교부에 학교별 교과목별로 1종 도서 편찬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1종 도서의 집필상의 유의점 등 편찬방법에 관한 사항
2. 1종 도서의 내용 심사
3. 기타 1종 도서의 편찬에 관한 사항

제7조 (심의회의 구성) 각 심의회는 15인 이상 2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문교부 소속 공무원과 당해 교과목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문교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8조 (위원장 등) ①각 심의회에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두되, 당해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장은 당해 심의회의 회무를 통리하며 심의회를 대표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위원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의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0조 (간사 등) ①각 심의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당해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1조 (수당 등) 심의회의 위원과 간사 및 서기 중 문교부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3 장 2종 도서

제12조 (2종 도서의 대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1종 도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과서는 이를 2종 교과서로 한다. 다만,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 도서의 경우에는 실적이 있는 출판사와 검정 신청한 2종 도서의 출판에 관한 약정이 되어 있을 것.

2. 하나의 과목의 2종 교과서가 2책 이상으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그 저작자는 동일인일 것.

3. 2종 교과서와 그 교과서에 대한 2종 지도서의 저작자는 동일인일 것.

4. 2인 이상의 공동 저작인 때에는 그 대표자가 지정되어 있을 것.

제15조 (검정 기준) 2종 도서의 검정 기준은 과목별로 문교부 장관이 정한다.

제16조 (검정 방법) ①2종 도서의 검정 방법은 1차 심사와 2차 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1차 심사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 기준에 따라 평점제로 한다.

③2차 심사는 가채본에 의하여 1차 심사 결과 보완 지시가 있는 사항의 이행 여부와 체제등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한다.

제17조 (심사 위원) ①문교부 장관은 검정을 신청한 도서의 심사를 위하여 교과서별로 1차 심사에 있어서는 5인의 심사위원을, 2차 심사에 있어서는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심사료를 지급한다.

제18조 (검정 수수료) ①2종 도서의 검정을 신청하는 자는 당해 도서의 신청가격의 400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서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9조 (합격종 수) 2종 도서의 합격종 수는 과목당 5종류 이내로 한다.

제20조 (합격 결정) ①2종 도서의 검정의 합격 결정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결과에 따라 문교부장관이 행한다.

②하나의 과목의 2종 교과서로서 부적합하거나 교과서와 지도서 중 그 어느 하나라도 부적합할 경우에는 그 저작자의 신청 도서는 모두 불합격으로 한다.

제21조 (합격 공고) 문교부 장관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2종 도서의 합격을 결정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2종 도서명

2. 검정 연월일과 검정 번호

3. 책수 판형 및 쪽수

4. 지질과 제본 방법

5. 사용 대상 학교

6. 최초 사용 학년도

7. 저작자의 주소 성명

8. 발행자의 주소 성명

제22조 (유효기간) 2종 도서의 검정 합격의 유효기간은 최초 사용 학년도부터 5년간으로 한다.

제 4 장 인정 도서

제23조 (인정도서의 사용 범위) 학교장은 당해 학교의 교과목에 관한 1종 도서 또는 2종 도서가 없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로 1종 또는 2종 도서를 사용하기 곤란한 때에는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인정 도서를 사용할 수 있다.

제24조 (인정 도서의 사용 승인 절차)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도서의 사용 승인에 관하여는 제15조 내지 제17조,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5 장 수정 및 개편

제25조 (내용 검토) 1종 도서를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아 편찬한 연구기관 또는 대학 등과 2종 도서의 저작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매 학년도 또는 매학기 개시 10월 전에 문교부 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26조 (수정) ①문교부 장관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직권에 의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3년마다 1종 도서의 경우에는 이를 수정하고, 2종 도서의 경우에는 저작자에게 수정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 연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수정하여야 할 내용이 있을 때에는 문교부 장관이 따로 수정 자료를 학교장에게 배포한다.

제27조 (개편) ①교과서 및 지도서는 최초사용

학년도부터 5년간 개편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문교부 장관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직권에 의하여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종 도서의 경우에는 이를 개편하고, 2종 도서의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저작자에게 개편을 명할 수 있다.

③제2항의 명을 받은 2종 도서의 저작자는 소정 기간 내에 당해 도서를 개편하여 문교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④제3항의 경우 검정 수수료는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청가격의 200배로 한다.

⑤제3항에 의한 검정의 유효기간은 당초 유효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6 장 발 행

제28조 (발행권 부여) 문교부 장관은 교과서의 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 투자기관 또는 인쇄 제본 및 발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1종 도서의 발행권을 부여할 수 있다.

제29조 (발행권의 양도 등 제한)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으로부터 1종 도서의 발행권을 부여받은 자와 2종 도서의 저작자와 출판에 관한 약정을 한 자는 문교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발행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공할 수 없다.

제30조 (주문) ①학교장은 1학기에 사용될 교과서 및 지도서는 당해 학기 개시 6월 전까지 2학기에 사용될 교과서 및 지도서는 당해 학기 개시 4월 전까지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주문하여야 한다.

②서울특별시·부산시·도의 교육감은 관할 구역내의 교과서 및 지도서의 주문 상황을 조사하여 제1항의 기간 경과 후 20일 이내에 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 (발행 계획) ①발행자는 1학기에 사용될 교과서 및 지도서는 당해 학기 개시 8월 전까지, 2학기에 사용될 교과서 및 지도서는 당해 학기 개시 6월 전까지 예비 생산 계획을 제30조 제1항의 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한 확정 발행 계획서를 각각 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산 계획서

2. 공급 계획서

② 문교부 장관은 제1항의 예비 생산 계획서 및 확정 발행 계획서를 접수하여 이를 심사한 후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

는 이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32조 (교과서 등의 공급 대행 기관) ①문교부장관은 교과서 및 지도서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과서 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투자기관을 공급 대행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급 대행 기관은 교과서 및 지도서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시·군교육장(서울특별시·부산시의 경우에는 교육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 구역 단위로 공급 담당 사원을 주재시켜야 한다.

제33조 (공급) ①발행자는 교과서 및 지도서를 그 발행 계획서에 따라 제조하고 주문자에게 직접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주문자가 소재하는 시·군 교육장의 관할 구역 안에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 담당 사원이 주재하고 있을 때에는 그에게 인도함으로써 주문자에게 공급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과서 및 지도서를 인도받은 공급 담당 사원은 지체없이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장에게 이를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은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 대행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제34조 (채택 권유 금지) 저작자와 발행자는 학교의 교직원에게 그가 저작 또는 발행한 2종 교과서의 채택을 권유할 수 없다.

제 7 장 가격 사정

제35조 (가격 사정) 교과서 및 지도서의 가격은 원가 요소별로 문교부 장관이 사정한다. 다만, 개편 또는 수정의 경우에는 이미 발행된 교과서 및 지도서의 평균 쪽당 단가를 적용하여 사정할 수 있다.

제36조 (원가소요) 교과서 및 지도서의 원가소요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제조 간접비, 영업비(일반 관리비와 판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발행자의 이윤 및 저자의 인세로 한다.

제37조 (제조 원가, 총 원가 및 판매 가격) 교과서 및 지도서의 제조 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및 제조 간접비를 합한 금액으로, 총원가는 제조 원가와 영업비를 합한 액으로, 판매 가격은 총원가에 발행자의 이윤과 저자의 인세를 합한 액으로 한다.

제38조 (제조 원가의 계산) ①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교과서 및 지도서의 제조 원가를 계산함

에 있어, 직접 재료비는 투입된 총 물량에 단위 원가를 곱한 금액으로, 직접 노무비는 산출된 총 물량에 단위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직접 경비는 투입 산출 또는 취득한 물량에 단위 단가를 곱한 액으로, 직접 경비는 투입 산출 또는 취득한 물량에 단위 단가를 곱한 액으로 하며, 제조 간접비는 전년도 제조 간접비 총액 또는 추산 근거를 명백히 한 추정 제조 간접비 총액에 연간 총 인쇄량에 대한 당해 교과서 및 지도서 인쇄량의 비율을 곱한 액으로 하되, 제조 간접비는 당해 교과서 및 지도서 제조 원가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적용할 단위 단가는 공인된 2인 이상의 물가조사 기관의 조사 결과 최저 가격에 따르되, 제조 원가 산출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하여 결정된 단위 단가는 직접 재료비의 경우에는 6월간, 직접 노무비의 경우에는 1년간 이를 적용할 수 있다.

제39조 (영업비의 계산) ①영업비는 다음에 의하여 계산한다.

$$\text{영업비} = \text{전년도영업비} + \frac{\text{당해교과서및지도서매출액}}{\text{총매출액}} \\ + \frac{\text{당해교과서및지도서의 당해연도발행부수}}{\text{당해교과서및지도서의 전년도발행부수}}$$

②제1항의 전년도 영업비, 당해 교과서 및 지도서 매매액 및 총 매출액은 발행자의 전년도 결산 실적에 의하되, 문교부장관이 결산 실적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마다 추산근거를 명백히 한 추정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③문교부 장관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교과서 및 지도서의 가격을 사정할 때마다 제조 원가에 대한 영업비 총액의 상한 비율을 정하고, 발행자의 결산 실적에 의한 영업비가 그 상한 비율을 초과할 때에는 그 한상 비율 초과분에 해당하는 액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40조 (이윤의 계산) ①이윤은 다음에 의하여 계산한다.

$$\text{이윤} = \text{총자본} = \text{자기자본} + \text{기업위험률} \\ \times \frac{\text{당해교과서및지도서매출액}}{\text{총매출액}} \times \frac{\text{당해교과서및지도서의 당해연도발행부수}}{\text{전년도발행부수}}$$

②제1항의 총자본, 자기자본, 당해 교과서 및

지도서 매출액 및 총매출액은 발행자의 전년도 결산 실적에 의하되, 총자본 중 문교부장관이 부실채권으로 인정하는 것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하며, 자기자본 이자율은 15퍼센트를, 기업 위험율은 3퍼센트를 한도로 한다.

제41조 (인세의 계산) 인세는 다음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1종 도서의 경우에는 인세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text{인세} = (\text{제조원가} + \text{영업비} + \text{이윤}) \times \frac{1}{9}$$

제42조 (해당 정가의 계산) 해당 정가는 다음에 의하여 계산한다.

$$\text{해당정가} = \frac{\text{관매가격}}{\text{발행부수}}$$

제43조 (해당 정가의 조정) ①문교부장관은 해당 정가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을 행하는 경우에는 발행자별로 교과서 또는 지도서마다 그 해당 정가에 발행 부수를 곱한 합계액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제44조 (가격의 재사정) ①물가의 변동 등으로 전년도 교과서 및 지도서 가격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재사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사정은 표본으로 추출된 교과서 및 지도서의 가격 변동률을 구하여 모든 교과서 및 지도서의 전년도 해당 정가에 그 가격 변동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본은 발행자·발행부수·전년도 대비 발행 부수의 증감 등을 고려하여, 전수의 5분의 1이상을 추출한다.

④제2항의 가격변동률은 표본으로 추출된 교과서 및 지도서에 대하여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원가 요소별로 해당 정가를 재사정하고, 재사정한 해당 정가에 당해 연도 교과서 및 지도서별 발행 부수를 곱한 합계액으로 나누어 소수점이하 3위까지 산출한다.

제45조 (정가의 공고) 문교부장관은 교과서 및 지도서의 가격을 결정하였거나 재사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 8 장 감 독

제46조 (위탁의 취소) 문교부장관은 1종 도서의 편찬을 위탁받은 연구기관 또는 대학 등이

다음 각 1호에 해당 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하고, 교부한 편찬에 관한 경비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이 영 또는 이 영에 의한 명령에 위반 하였을 때.
2. 편찬업무를 해태한 때.
3. 1종 도서를 부실하게 편찬하였을 때.
4. 기타 그 업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제47조 (검정의 합격 취소) 문교부장관은 2종 도서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그 검정의 합격을 취소하거나 일정기간 그 발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저작자 또는 발행자가 이 영 또는 이 영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2. 내용, 체재, 지질 등이 검정한 것과 다를 때.
3. 저작자의 성명 표지가 검정 당시의 저작자와 다를 때.
4. 기타 2종 도서로 존속시키기 곤란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제48조 (발행자의 결산보고 의무 등) ①발행자는 사업년도 종료 후 40일 이내에 대차대조표, 손익 계산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부속 명세서
 2. 손익계산서 부속 명세서
 3. 공인회계사의 결산 감사 보고서
- ②문교부 장관은 교과서 및 지도서의 제조, 공급 및 가격의 사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때마다 발행자의 관계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발행자의 관계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49조 (보고 해태 등에 대한 조치) 문교부장관은 발행자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해태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기피 또는 방해한 때와 보고 내용이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 결과 허위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1종 도서의 경우에는 발행권 부여를 취소할 수 있으며, 2종 도서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들어 당해 교과서 및 지도서의 저작권자에게 발행권 설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 9 장 보 칙

제50조 (표지 방법) 교과용 도서에는 문교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자의 성명과 발행자 및 인쇄자의 주소·성명 인쇄 연월일 및 발행 연월일을 명기하여야 하며, 2종 도서

와 인정 도서는 문교부장관이 정하는 검정 또는 인정의 표지를 하여야 한다.

제51조 (교과용 도서 이외의 도서 등의 사용 금지) 이 영에 의한 교과용 도서 이외의 도서는 이를 수업 중 사용하지 못한다.

제52조 (실업 고등 전문 학교 등에의 준용) 교육법 제15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이 실업 고등 전문 학교·전문 학교의 교과용 도서 중 검정 또는 인정 도서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 영에 의한 2종 도서 또는 인정 도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3조 (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법 제1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4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당해 도서를 몰수한다.

1. 문교부 장관의 발행권 부여를 받지 아니하고 1종 도서로 표지된 도서를 발행한 자.
2. 문교부 장관의 검정 또는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종 도서 또는 인정 도서로 표지된 도서를 발행한 자.
3. 그 규정을 알고 제1호 또는 제2호의 도서를 인쇄하거나 그 도서를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
4. 제2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부 칙

- ①(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폐지 법령) 교과용 도서 저작·검인정령은 이를 폐지한다.
- ③(경과 조치) 이 영에 의한 교과용 도서의 최초의 사용 학기개시 전까지 이 영 시행당시의 국정교과서는 이 영에 의한 1종 도서로서, 검정교과서는 이 영에 의한 2종 도서로서 인정도서 중 이 영에 의한 교과서 또는 지도서에 해당하는 도서는 이 영에 의한 2종 도서로 보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도서에 대하여는 이 영에 의한 교과서 및 지도서의 최초 사용 학기 전일까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 ④(동전) 이 영 시행 당시 국정 교과서 편찬 심의회는 이 영에 의한 1종 도서 편찬 심의회가 설치될 때까지 존속한다.
- ⑤(동전) 이 영 시행 당시 국정 교과서 발행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전년도 결산보고서를 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⑥(동전) 이 영 시행 당시 국정 교과서의 발행권을 부여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하여 발행권을 부여받은 자로 본다.

- ⑦(동전)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진행중인행위는 이 영에 의한 행위로 본다.
- ⑧(동전) 이 영 시행 당시 교과용 도서·저작·검인정령 제3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별 표]

제조 원가 산출 기준표

구 분	단위	물 량 산 출 기 준	비 고
1. 재료비			
지형용지	쪽	$\text{쪽수} \times \text{발행부수} \times \frac{1}{30,000} \times \frac{1}{10}$	$\frac{\text{용지연수}}{30\text{원}}$ 에서 정수 미만의 단수는 정수 1로 본다.
사진제판필름	쪽	$\text{쪽수} \times \text{색도수} \times \frac{1}{3}$	
오프셋 인쇄판	판	$\frac{\text{용지연수}}{30\text{원}} \times \text{색도} \times \frac{1}{3}$	
표지	연	{ (1) 활판의 경우 정미 연수×1.03 (2) 오프셋의 경우 정미 연수×1 + (색도×0.015)	
내표지	연		
본문용지	연		
면지	연		
화보용지	연		
접착테프	m	책당소요량×발행부수	
2. 노무비			
조판공임	쪽	$\text{쪽수} \times \frac{\text{발행부수}}{30,000} \times \frac{1}{10}$	$\frac{\text{용지연수}}{30\text{원}}$ 에서 정수 미만의 단수는 정수 1로 본다.
지형제작 공임	쪽	$\text{쪽수} \times \text{발행부수} \times \frac{1}{30,000} \times \frac{1}{10}$	
문선 공임	쪽	$\text{쪽수} \times \frac{1}{3}$	
사진 식자 공임	쪽	$\text{쪽수} \times \frac{1}{3}$	
제판(사진원판)공임	쪽	$\text{쪽수} \times \frac{1}{3}$	
연판 제작 공임	쪽	$\text{쪽수} \times \text{발행부수} \times \frac{1}{30,000}$	$\frac{\text{용지연수}}{30\text{원}}$ 에서 정수 미만의 단수는 정수 1로 본다.
오프셋 인쇄판 제작공임	판	$\frac{\text{용지연수}}{30\text{원}} \times \text{색도수}$	
인쇄 공임	연	인쇄쪽수	
제본 공임	쪽	제본쪽수	
3. 경비			
삼화료	쪽	삼화쪽수	1종 제외

※ 주 : 노무비 단위 단가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조사한다.

$$\text{노무비 단위단가} = 1\text{인당 월평균 임금} \times \frac{1}{1\text{인당월평균산출물량}}$$

II.우리 나라 교과서 연표

■차 례

- I. 군정기 및 교수요목기 (1945~1954)의 교과용 도서 편찬
- II. 제1차 교육 과정기(1954~1963)의 교과용 도서 편찬
- III. 제2차 교육 과정기(1963~1973)의 교과용 도서 편찬
- IV. 제3차 교육 과정기(1973~1981)의 교과용 도서 편찬

I. 군정기 및 교수요목기(1945~1954)의 교과용 도서 편찬

연 월 일	교과서 관계 사항	연 월 일	교과서 관계 사항
		1945.9.24	초등학교 개교(중등학교 10.1 개교)
1945.8.15	8.15 광복	1945.9.30	군정청 법령 제6호 “중등학교 수업 과목 시간표(4년제)” 발표(교과목명:공민·국어·역사·지리·수학·물리·화학·생물·가사·재봉·영어·체육·음악·습자·도화·수예·실업 등) · 국민학교·중학교 교과편제 및 시간배당 제정
1945.8.25	조선어학회(현 한글학회) 총회에서 우선 하여 임시 국어 교재(한글 첫걸음)엮기로 의결	1945.10.10	「펜맨십」 이대의·백남홍지음·본문은 등사기로, 표지는 석판으로 인쇄한 프린트 교재물인데, 이 당시 대부분의 교재가 프린트물이었다.
1945.8	광복직후의 국정 교과서 번각 발행 회사는 일제 때부터 존속된 조선서적(주)와 조선교학도서(주)임	1945.10.15	「국사교본」 초등 5~6년용, 진단학회 편찬 완료
1945.9. 2	조선어학회 교재편찬위원회를 구성(20인)하여, 일반용으로 「한글입문」, 초·중등용으로 「국어」 교과서를 편찬 발행키로 함	1945.10.16	“한자 폐지 발기 준비 위원회” 결성함(위원장 장지영, 준비위원 30명)
1945.9.13	「한글맞춤법통일안」(조선어학회편)발행	1945.11. 6	광복 후 최초의 한글 전용 교과서용 도서 「한글 첫걸음」발행, 제1과:바다, 나라, 가자, 조선어학회편, 군정청 학무국에서 발행하였으며, 12.12배포 시작함(100만부) ※용지:갱지, 제본:호부장본, 판형:국판, 활자(본문):4호, 본문:49쪽, 인쇄:11월3일, 기타:가로쓰기, 각주에 한문 있음.
1945.9.16	조선어교육위원회 발족(미군정 교육행정 자문) ※학무국 인수 후 오천석 외 6인이 조직(초등·전문·교육전문·의학·학계 대표)	1945.11.20	「국어교본」(상) 초등 1, 2학년용, 제1과: 어머니, 아버지 60만부 인쇄하여 12. 16 배포 시작, 조선어학회 지음, 군정청 학무국 발행
1945.9.17	조선교육위원회 건의로 “일반 명령 제4호”전달(산수·이과 이외는 일본 교과서 사용 불가), 수신(修身)과목 대신 공민(公民)과목 등장	1945.11	「조선어 표준말 모음」조선어학회 편저·발행
1945.9.18	법령 제6호 “교육조치”(군정청 학무국의 교과서 발행 시책 근거임. 즉, 조선학교에서의 교육용어는 조선어로 한다. 조선어로 상당한 교육용 재료를 활용할 때까지 외국어를 사용해도 무방함(제4조). 교육과정(제5조)에 대해서는 “조선의 이익에 반하는 과목은 교수하거나 실습하지 아니할 것”		
1945.9.22	군정청 법령 제6호 “국민학교 교과 편제와 시간 배당표(6년제)” 발표(교과목명:공민·국어·역사지리·산술·이과·체조·음악·습자·도화·공작·요리·재봉·실과 등)		

이 연표의 제목은 ‘우리나라 교과서 연표’이다. 교과서는 교육과정을 근간해서 편찬되므로 교육과정을 떠난 교과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항목은 ‘교과서 연표’의 성격보다는 ‘교육과정 연표’로 인지될 만한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상호 연관성 때문이다. 이 연표는 한국2종교과서 협회에서 발행한 ‘교과서연구’ 19호(94.7.20), 20호(94.12.15) [전 문교부 허강 편수관 발표] 내용을 그대로 전제한 것이다.

연 월 일	교과서 관계 사항	연 월 일	교과서 관계 사항																
1945.11.20	중앙청에서 군정 장관에게 「한글 첫걸음」 「초등국어 교본」 증전식 있었음(상징적 행사로서 이 두 종류의 교과서는 다시 국민학교 남녀 어린이에게 군정 장관이 증정하는 절차를 밟다)	1946.3.29	미군정령 제64호 미군정하의 학무국을 문교부(부장 유억겸)로 승격하다. · 편수국[번역과, 편찬과(초등교과서계·중등 교과서계). 경리과, 교재과]																
1945.11.23	조선교육심의회 10개 분과 조직함(제9분과: 교과서 분과)	1946.4. 1	일제시 폐간된 조선어학회 기관지 “한글” 복간되면서 교과서의 한글전용 주장이 가열되다.																
1945.11.23	국민교 교과목과 학년별 주당 시간표 시달	1946.5	“국민학교 설치 요령” 제정하다																
1945.12. 2	초등「국어교본(중)(하)」 초등 3·4, 5·6년용 조선어학회 지음, 군정청 학무국 발행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th>수업 연한</th><th>교과목</th><th>비 고</th></tr> </thead> <tbody> <tr> <td>소년과</td><td>2~3년</td><td>공민·국어·국사·지리·산수·이과·음악·체조·가사 및 재봉</td><td>국민학교와 동일</td></tr> <tr> <td>성년과</td><td>1~2년</td><td>공민·국어·산수</td><td></td></tr> <tr> <td>보수과</td><td>1년</td><td>공민·국어·국사</td><td></td></tr> </tbody> </table>	구 분	수업 연한	교과목	비 고	소년과	2~3년	공민·국어·국사·지리·산수·이과·음악·체조·가사 및 재봉	국민학교와 동일	성년과	1~2년	공민·국어·산수		보수과	1년	공민·국어·국사	
구 분	수업 연한	교과목	비 고																
소년과	2~3년	공민·국어·국사·지리·산수·이과·음악·체조·가사 및 재봉	국민학교와 동일																
성년과	1~2년	공민·국어·산수																	
보수과	1년	공민·국어·국사																	
1945.12	「한글 교수지침」 조선어학회 제작, 학무국 발행																		
1945.12. 5	조선교육심의회에서 학제 결정(6-6-4)																		
1945.12. 8	조선교육심의회(9분과)에서 “각급 학교 교과서는 한글 전용 및 가로쓰기 한다”고 결의함. ※필요에 따라 ()안에 한자 넣는다.	1946.6.22	「국사교본」 중등 내지 전문학교 및 국민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과서, 진단학회 지음. 군정청 문교부 발행, 용지: 갹지, 쪽수: 178, 판형: 국판 · 「국사교본」 이외에도 「동국통감」 「삼국사기」와 번역 도서 발간하다. · 제일 교포 자녀에 초등 교과서 배포																
1945.12.11	「국사」 중등학교용 교과서, 진단학회 편찬																		
1945.12.16	「공민」 초등(상), (중), (하) 3책으로 편찬(50여만권 발간, 가로쓰기 하였으며, 한자는 극히 제한함)	1946.9. 1	조선교육심의회에서 새로운 민주적인 각급 학교 교육 과정(교수요목) 시행하다(교과목: 국어·사회생활·이과·산수·보건·음악·미술·가사). ※사회생활: 공민·역사·지리를 통합하여 민주시민 육성을 교과 목표로 하다.																
1945.12.19	군정청 학무국 편제(편찬과)																		
1945.12.20	「음악」 초등 1~6년용 발간	1946.9. 8	한글 맞춤법 통일안(3차)수정 완료																
1945.	대학 입시제도: 대학별 단독 시험 실시(~1953)	1946.9.20	문교부 “국민학교 및 중등 학교(초급·고급) 교과 편제 및 시간 배당” 발표																
1946.1.21	군정청 학무국 편제 3실 7과 · 3실: 연구실·특수과학실·총무실 · 7과: 편수과·초등교육과·중등교육과·고등교육과·성인교육과·문화과·기상과	1946.11.10	문교부, 초등 교과서 500만부 배포하다(정부사업으로 교재 첫 공급).																
1946.1.23	서울 시내 전문 및 대학장 회의 개최, 초등용 「국사」와 「공민」 교과서 배포·조치	1946.11.15	문교부, “교수요목 제정 위원회” 설치하여, 교수요목 제정 및 교과서 편찬 착수하다.																
1946.1.26	「국어교본」(상) 중등 1·2년용 조선어학회 지음, 군정청학무국 발행	1946.11.20	문교부, 일본용어 추방을 위해 “학술용어 제정 위원회” 조직(교과서에 있는 왜색 용어 말살)																
1946.1.28	「국어교본」(하) 중등 5·6년용 조선어학회 지음, 군정청학무국 발행	1946.11.30	문교부, 편수 완료 교과서(한글 첫걸음·국어교본·공민·음악·셈본·국사·공예·교수용 교본 등 8종, 총발행부수: 5,423,350부)																
1946.2	「중등 조선말본」 최현배 지음, 정음사 발행																		
1946.2.15	「습자」 1·2년용, 「지리」 5학년용 발행																		
1946.2.21	교수요목 제정위원회 조직함																		
1946.2.23	국민교에서 최초로 「국사」 수업 실시																		
1946.3. 7	조선교육심의회에서 우리 나라 교육 이념을 “홍익인간”으로 결정함.																		

연 월 일	교과서 관계 사항	연 월 일	교과서 관계 사항
1946.12.31	국내 출판사수:152개, 이 중 국·검인정 교과서 발행사는 30여 개사이다	1948. 8.15	“대한민국 정부” 수립 · 정부수립과 함께 중학교는 초급 중학 3년, 고급 중학 3년이 됨 · 박창해·최태호 편수관 지음, 「바둑이와 칠수」 국어1-1 외 11권 발행, 이때의 교과서는 문장식 학습으로 발전하였고, 단원제 도입한 게 특징이다.
1947. 1.10	「국어 교본」(중) 중학 3·4년용, 조선어학회 지음, 「초등학교 각 교과 교수요목집」을 학무국 발행	1948. 9. 8	문교부(편수국장), 조악한 교과서의 범람으로 사회적 물의(지질·내용·활자)가 있음을 지적함
1947. 2. 5	문교부, 실업계 전문 교과서 생산 공급 등 번각 발행 회사 설립을 중용 촉구하다.	1948. 9.24	대한교과서(주) 출범(법원등기)
1947.7. 16	문교부, 초·중등 교과서 80% 확보 발표	1948.10. 9	법률 제6호 “한글전용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
1947.11.23	대한교육연합회 창립 총회, 발족(회장 최규동)	1948.11. 4	대통령령 제22호 문교부 기구 개편(1실 5국) ※편수국(편수과·번역과·발행과)
1947.12.24	문교부, 출판업자 30명 초청, 교과서용 도서 생산·공급 등 협력기구 창설 등 협의	1948.11.27	문교부, 중등 과정용 교과서 특히 실업 교과서 번각 발행을 대한교과서(주)와 계약하다.
1947.12.26	문교부 발표, 초·중·고 교과서 총수:134종(초등 41, 중등 70종, 기타 전문대 23종), 학습 참고서 총수:160여종	1949. 7.12	대한교련에서 교사용 「여름 공부」 5000부 무상 배부
1948. 3.18	광복후 최초로 국민학교에 「한글습자교본」을 배부하다.	1949. 9.28	대한민국 “학도 호국단 규정” 공포[대통령령 제1573호(1960.5.10)로 폐지되다]
1948. 4.17	조선 중등 교과서 출판(주) 발기 창립하다 (후에 대한교과서(주)로 개칭).	1949.11. 5	국회, 국민학교 한자교육건 정부에 건의하다.
1948. 4.28	문편 제18호 대한교과서(주) 설립 근거	1949.12.31	법률 제86호 “교육법”제정·공포(11장 177조) 1. 교과용 도서에 관한 제도적 뒷받침 마련 〈제8장 교과용도서〉 157조:사범대학·대학을 제외한 각 학교의 교과용 도서는 문교부가 저작권을 가졌거나 검정 또는 인정한 것에 한한다. 교과용 도서의 저작·검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초등교육(6년제):국어 외 7교과
1948. 5.10	유엔 감시하에 총선거 실시(역사상 주권행사)		3. 중등교육(중학:4년, 고등:2~3년):국어 외 10교과
1948. 6. 2	문교부 발행, 「우리말 도로 찾기」:초·중·고 교과서에서 활용되고 있는 938개의 일본어식 용어를 우리말로 바꿔 정리한 자료이다.		4. 실과 교육 강화(1인1기):전 교과 15%
1948. 6.30	문교부, 국정 교과서 발행수(초·중등)는 54종으로 집계하다(정부수립사무인계서).	1950. 3.10	법률 제118호 “교육법” 개정(6-3-3-4제)
1948. 7. 1	국회에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다.		
1948. 7.17	“헌법”제정 공포		
1948. 7.21	대한교련에서 최초로 국민학교용 방학책 「여름 공부」를 발행하다.		
1948. 8	문교부, 검인정 신청 건수:334책, 합격 건수:174책, 불합격 사유: 무책임한 번역·맞춤법 혼란 등 ※광복 후부터 1948.8.15 정부 수립시까지의 국·검정 제도가 잘 지켜지지 않았다(이 기간이 교과서의 자유발행 시기이다).		

연 월 일	교과서 관계 사항	연 월 일	교과서 관계 사항
1950. 3.10	별률 제118호 “교육법” 개정(6-3-3-4제)	1951. 5.26	문교부, 초·중등 교과서 일부 개편과 가격 9배 인상 결정
1950. 4.29	대통령령 제336호 “교과용도서 검인정 규정” 제정·공포. 1. 교과용 도서란 학생용 도서, 교수용 도서, 패도, 지구의류를 뜻한다. 2. 수시 검정 제도임	1951. 7.25	· 문교부, 중지되었던 1951년도 교과용도서 신규 검인정 사무 재개하다. · 50여개 출판사에 각 1억환씩 융자해서 교과서 출판을 지원하다.
1950. 4.29	대통령령 제337호 “국정 교과용 도서 편찬 규정” 및 “교과서 정가 사정 기준” 제정·공포	1951. 7.31	중학교 입학 지원자에 대한 국가 고시 실시
1950. 4.30	문교부, 중등학교용 국검정 교과서 467책 집계 발표	1951.10.20	부산으로 피난 온 교과서 인쇄업자가 협의회를 구성하여 인쇄 공장 부흥 등 결의하다.
1950. 6. 2	문교부령 제8호 “국정교과용 도서 편찬 심의회 규정” 제정·공포	1952. 2	교육법 시행령 제188조 “교과용 도서와 수업용 보조물” 개정
1950. 6. 2	문교부령 제9호 “교수요목 제정 심의 위원회 규정” 제정. ※각급학교 교육 내용 편성 등 심의 착수	1952. 2.10	· 국민교 교과서를 미국 “타고마” 교회에서 인쇄 공급하다. ·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출판물 거래 규정”과 “검인정 교과서 판매규정”을 정하다.
1950. 6.25	6·25 전쟁 일어남	1952. 3.13	문편 제25호 “국정 교과서(주)(대한문교서적(주)) 설립 근거 마련하다.
1950. 8.30	문교부 “전시 학교 운영 대책” 발표	1952. 3	대한문교서적(주) 설립(사단법인 문교재단 연합회(조동식), 전국 71개 사학 재단은 문교부 권고에 따라 지가 증권 전부를 출자하여 대한문교 서적을 설립하다.
1951. 2.26	· 문교부, “전시하 교육 특별 조치요강” 제정·공포(1인1기, 멸공·도의·국방 등) · 문교부(1.4후퇴 후) 국민학교 「전시 생활 1·2·3」과 중등 학교용 「전시 독본 각 3집」 및 교사용으로 「전시 학습 지도 요령」을 발행 ※이때의 교과목은 국어·사회·이과·산수·보건·음악·미술·가사였다.	1952. 4.23	대통령령 제633호 “교육법 시행령” 개정. 즉, 국정교과서가 있으면 이를 쓰고 이것이 없으면 검정을 사용하며, 검정이 없으면 인정 교재를 쓴다.
1951. 3.30	· 문교부령 제16호 “교과과정 연구 위원회 규정” 제정(교과의 제정 및 시간 배당 등) · 문교부, 언어 교육상 “한글·한자 사용 빈도”조사	1952. 6.10	유엔 한국 재건 위원단에서 교과서 용지 2500톤과 750만권의 교과서를 한국에 수송하다. ※이 기증 용지로 신학기 국정교과서를 인쇄하고, 감사의 뜻으로 교과서 판권란에 용지 등 기증 사실을 게재함
1951. 4.13	6.25전쟁으로 중지된 기존 검인정 교과서 재등록 실시(~5.10까지)하고, 1951년도 교과용 도서의 검인정 사무를 1951.7.25부터 재개하다.	1952. 7.15	국정교과서(주)(전 대한문교서적(주)) 창립(1952.6.1 정관 제정)
1951. 4.30	· 문교부 편수국(최현배), 한글 자체(字體)심의 위원회 두고, 한글 서체 개발에 힘쓰다. · 문교부, “한자 지도 요령” 발표(국민교 1000자:4학년 300자, 5학년 300자, 6학년 400자)	1952. 9	· 자유 아시아 위원회에서 교과서 용지 1,000톤 기증 ※이 용지로 국민교 「국어」외 22책, 중등 「국어」 6책, 합계 29책을 발행하다. · 3차에 걸쳐 현직 교육 및 교육 개선을 위한 외국 교육전문가 초빙 (~1955.6까지) ※제3차 교육사절단의 보고서 「교육과정과 지침」은 아주 귀중한 자료로 평가됨
1951. 5. 4	문교부령 제19호 “대학 교육에 관한 전시 특별 조치령” 제정(전시 연합 대학 설치)		

연 월 일	교과서 관계 사항
1952.10.18	문교부, 구미 각 대학에서 사용중인 이공과 교재 1,826권을 인수하고 각 학교에 배정함
1952.10.27	문교부, 대한교육연합회 주최 “제1회 전국 교육대회” 개최(주제:교육과정의 개조).
1952.11.11	한국검인정도서공급(주)창립(이사:15명, 주주:27, 교과서 종수:420책, 창립대표:민장식) ※생산은 각 출판사에서 하고 회사는 위탁 판매하며 선전은 공동으로 문서 선전한다.
1952.12.17	문편 제120호, 문교부는 대한교과서에 중·고등 「국어」 교과서 번각 발행 및 판매케 하다.
1953. 1. 5	문교부 “외국 도서 번역 위원회” 설치
1953. 1.26	문교부 편수국에서 10여억원 횡령 혐의 사건
1953. 2.22	국정교과서(주)영등포 공장, 기공식 거행
1953. 3. 9	중앙교육연구소 창립(문교부와 대한교련이 공동 운영)
1953. 3.11	· 문교부, 교수요목 제정 심의 위원 위촉 · 문교부, 제1차 교육과정 제정을 위한 제1회 교육과정 심의 전체회의를 개최(역사적 회의) ※편수국의 “교수요목 제정 심의회”와 장학실의 “교과과정 연구 위원회”가 합동 회의를 했다. ※위의 두 위원회는 후에 교육과정 합동 위원회로 통합되었으며, 100여 차례의 회합 끝에 문교부령 제35호(초·중·고 교육과정을 탄생 시켰다.)
1953. 7. 6	문교부령 제30호 “외국 도서 번역 심의 위원회 규정” 제정 공고
1953. 7. 7	문교부령 제31호 “국어심의위원회 규정” 공고(첫 사업은 한글간소화)
1953. 7.27	휴전 협정 조인
1953.10. 1	문교부, 국어 심의회에서 한글 맞춤법 심의 하다.

II. 제1차 교육 과정기(1954~1963)의

교과용 도서 편찬

연 월 일	교과서 관계 사항															
1954. 4.20	문교부령 제35호 “국민학교, 중학교(야간제별도), 고등학교, 사범학교(연수과 별도)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 제정·공포 ※ 대한민국 수립 후 처음으로 제정(제1차 교육과정:우리나라 학교의 교과목 및 교육활동의 편제 등) 대학 입시 제도:국가 고사제(대학 입학연합 고사)실시															
1954. 7. 3	한글 간소화 정부안 발표, 각계에서 반대															
1954. 9.15	문교부, 번역 도서 「법에 있어서의 상식」(서돈각 번역) 첫 번째로 발행															
1954.12.31	문교부 초·중·고 검인정 교과서 집계 발표 <div>1954년말 현재</div> <table><tr><th>학 교</th><th>종 류</th><th>권 수</th></tr><tr><td>국민교</td><td>14</td><td>53</td></tr><tr><td>중학교</td><td>172</td><td>300</td></tr><tr><td>고등교</td><td>81</td><td>116</td></tr><tr><td>합 계</td><td>267</td><td>469</td></tr></table>	학 교	종 류	권 수	국민교	14	53	중학교	172	300	고등교	81	116	합 계	267	469
학 교	종 류	권 수														
국민교	14	53														
중학교	172	300														
고등교	81	116														
합 계	267	469														
1955. 6	문교부, 한글 간소화 3원칙 발표															
1955. 8. 1	· 문교부, 각급학교 교육과정 시간배당 기준령에 따라 “각급학교 교육과정” 제정 1. 문교부령 제44호, “국민교 교과과정 제정” 2. 문교부령 제45호, “중학교 교과과정 제정” 3. 문교부령 제46호, “고등학교 및 사범 학교 교과과정 제정” ※성문화는 처음이며 제1차 교육과정기에 속함 ※교과 중심 이론의 교육과정임 · 문교부, 초·중 교과용 도서 검인정에 관한 기본 방침 발표															
1955.10. 6	문교부, “검인정 교과서 사열 기준” 발표(전문 128개항, 사열 형식, 교과용 도서 검인정 종별 및 단위, 심사상 유의점 등)															
1955.10.12	문교부 장관, 도의 교육 위원회(30명) 설치하여 「도의」 교과서 편찬 방침 세우다.															

연 월 일	교과서 관계 사항	연 월 일	교과서 관계 사항															
1955.10.15	문교부, 교과용 도서(검인정 교과서)접수 마감 (제1차 교육과정 제정에 따른 검인정 교과서) ※접수:28개 교과목 총 753책	1957.10. 9	「우리말 큰 사전」 30년만에 완간															
		1957.11. 1	문교부(국어 심의회), 한자 빈도를 토대로 “임시 제한 한자” 1,300자 발표															
1955.12.16	문교부, 검인정 교과서 심사 착수 ※합격 발표:56.2.15, 384건 747책	1957.12.31	1957년도 21종 국정 교과서(초·중·고) 편찬 완료(국민교:음악·도의 등)															
1955.12.31	1955년도 30종 편찬 완료:국민학교용(국어·산수·사회생활·자연·미술 등 국정 교과서)	1958. 1. 7	한국검인정교과서 발행인협회 창립(한국검인정도서공급회사의 개편) ※1958.3.27 문교부 설립인가(∼1965.12)															
1956. 1.31	한국 거류민단, 제일 동포의 문맹퇴치 성인교육용 「국어독본」 1만부 배포	1958. 2	문교부, 제1차 교육과정 제정(1955년)에 따른 교과서(국정·검정·인정)편찬 완료 발표															
1956. 1	문교부, 검인정 교과서 심사 결과 발표 ※신규 검인정 종수는 916이고, 주주는 66명 ※심사본은 프린트 또는 타자본 이었다. 1956년 검인정 심사 이전은 수지 검정제이다.	1958. 3	한국검인정교과서 발행인협회 창립(초대회장 이대익) ※공동 생산, 공동 판매 목적															
1956. 2.17	문교부, 새 학기 교과서 384종 전면 개편한다고 발표	1958. 4.26	대한문교서적(주) 정부 관리 업체로 전환															
1956. 2. 1	문교부, 고등학교용 「도덕」 교과서 국정으로 발간	1958. 6. 5	문교부 제76호 “실업고 및 기타 전문에 관한 교과서의 시간 배당 기준” 제정·공포															
1956. 4	교과서 부정 판매 사건과 검인정 증수회 사건이 일어난다.	1958.10. 3	문교부,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의 한글화 표기법” 제정·공포(∼10.20)															
1956. 4.24	문교부령 제53호 “야간제 고등학교 교육과정 시간 배당” 제정 공포	1958.12.31	문교부, 검인정 교과서 허가상황(집계)															
1956.10. 1	문교부, 제일 교포 교육을 위해 민간계 교포 학교 및 야간 강습소에 국·검정 교과서 무상 공급하다.		<table><tr><td>학 교</td><td>종 류</td><td>권 수</td></tr><tr><td>국민교</td><td>23</td><td>102</td></tr><tr><td>중학교</td><td>237</td><td>538</td></tr><tr><td>고등교</td><td>267</td><td>426</td></tr><tr><td>합 계</td><td>527</td><td>1,066</td></tr></table>	학 교	종 류	권 수	국민교	23	102	중학교	237	538	고등교	267	426	합 계	527	1,066
학 교	종 류	권 수																
국민교	23	102																
중학교	237	538																
고등교	267	426																
합 계	527	1,066																
1956.12.31	1956년도 41종 편찬 완료:초·중·고 국정 교과서(※중학교:농공상수)																	
1957. 1.28	법률 제432호 “저작권법”제정·공포	1959. 1.10	문교부, 교과서 여론 조사 실시(일반인, 교육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분량·흥미도·이해도·기초지도 사항 등)															
1957. 2. 1	문교부, 중학 「도의」 국정으로 발간(1957년 이전까지는 인정교과서였다)	1959. 3	문교부령 제81호 교육과정심의회 규정															
1957. 4. 1	문교부, 종합고교로 “평택중고”를 교육과정 운영 연구 실험학교(인문·농업·공업·상업·가정)로 지정하다.	1959. 9.15	문교부, 「편수자료」(제1집)발행 ※4·6배판, 36쪽, 비매품															
1957. 7	한국검인정교과서(주)(한국검인정도서공급(주)명칭 바꿈) 설립하다(공동 생산, 공동 판매의 트러스트). ※이 회사는 후에 한국교과서(주)로 개명 ※주주:72명, 공급인:225명, 교과서 종수:925종, 사장:최영해	1960. 2.23	문교부, 중고교 교육과정 운영 실태 및 국민학교(4·5·6학년)교과서 어휘 분석 실시															
1957.10. 1	문교부, 극빈 도서 지구 아동 6,826명에게 57,000여부의 국정 교과서를 무상 공급하다	1960. 3. 4	문교부, 도서 벽지 국민학교에 국정교과서 57,012책 무상 분배															
		1960. 4. 5	문교부, 중학교 영어 27책, 지도 5책 검정필															

연 월 일	교과서 관계 사항	연 월 일	교과서 관계 사항
1960. 4	문교부, 「편수 자료」 제2집 발행 ※4·6배판, 54쪽, 외국 지명 등 게재	1962. 5	문교부, 국민학교 교과서 분석 평가 연구 ※중앙교육연구소 위탁사업으로 주관
1960. 4.19	4.19의거(제2공화국 탄생)	III. 제2차 교육 과정기(1963~1973)의 교과용 도서 편찬	
1960.11. 1	문교부, 「편수 자료」 제3집 발행		
1960.12. 1	문교장관(오천석) 국민학교 인정 교과서 150종 중 2종(「습자」, 「보건」)을 제외한 148종을 1961.4월에 폐지한다고 발표.	1963. 1. 5	국정 교과서, 정부에 건의서 제출 “교과 서 용지 개선”
1960.12.23	문교부 “교육과정 심의회 규정” 개정(국 무원령 제132호) 교과별·학교별·운영위 원회를 두기로 함)	1963. 2. 6	국어국문학회, 중·고 국정 교과서(국어 과)를 검정으로 풀어 줄것과 국어 문법 통일 문제를 문교부에 건의
1960.12.25	문교부, 「과학기술용어집」 제12집 발간 ※제1집은 1951.2발간(10년간 사업 종결)	1963. 2.15	· 문교부령 제119호 “국민학교 교육과정 개정” ※「사회생활」→「사회」·「보건」→「보육」 「반공도덕」 추가 · 문교부령 제120호 “중학교 교육과정 개정” · 문교부령 제121호 “고등학교 교육과정 개정” · 문교부령 제122호 “실업고 교육과정 개정” ※2차 교육과정의 특징은 생활(경험)중 심 교육과정이다. · 자구성·생산성·유용성(향토학교 등) 강조 · 전체 구조는 세 영역(교과·반공도덕· 특활)
1961. 2.27	문편 제590호 “국정교과서 정가 사정 기 준” 번각 발행사에 통고	1963. 2.27	문교부, 문학과1021-65(72-6537) 제2차 중 등학교 검정 실시 공고 ※1교과목당 7종(합격)으로 제한했다. ※국민학교는 모두 국정으로 함 ※중학교: 9교과 13과목 28종 고등학교: 13교과 38과목 45종 실업고: 농업·공업·상업·수산·가정 · 교과용 도서 검정 실시 결과 처리 내 역(중학교) 1. 1964.10 출원 접수:82개사 324종(742 권) 2. 1965.6.6 1차 발표(7종):43사 91종 203 권(7종 제한으로 떨어진 교과서 업자, 문교부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하다. 후 에 자진 취하) 3. 1966.6. 2차(추가)발표:200권
1961. 3	문교부, 제2차 교육과정(1963.2) 개정기초 작업차 산하 500기관에 의뢰, 교과서 분석 작업 실시하다.		
1961. 5.16	군사 혁명		
1961. 8. 1	대한문교서적(주)가 국정교과서(주)개칭		
1961. 8.16	문교부, 교육과정 심의 위원과 지방 교사 대표와 합동으로 국민교 교육과정·교과 서 개편 방향 심의하다(~8.31)		
1961. 9. 1	법률 제708호 “교육에 관한 임시 특례법”		
1961.10.21	각령 제223호 문교부 편수국 없애고 학부 국(교육지도과, 기술교육과, 편수과, 교육 과정과)으로 개편하다.		
1961.12. 7	사범학교 10개교 2년제 교육대학으로 승격		
1961.12.18	각령 제301호 “교과용 도서 검인정 규정” 개정		
1961.12.22	학사 자격 국가고사 시행(전국)		
1961.12	문교부, 한글반 지도용 교재 80만부 배부 (1962.4까지 70만명 교육받음)		
1961.12.30	법률 제904호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에 관한 법률” 제정		
1962. 1. 9	문교부, 교육대학 교육과정 제정 전문위원 위촉		
1962. 1.13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6) 발표		
1962. 3.24	문교부, 중·고·실업 교과서 편찬 심의 위원회 설치하고 그 기능 강화하다.		
1962. 5	한국교과서(주) 개칭 및 한국실업교과서 (주)설립(대표이사 이대익) ※실고 교과서:90종		

연 월 일	교과서 관계 사항	연 월 일	교과서 관계 사항
1963. 4. 2	학사고시제 및 대학입학 자격 국가고시제 폐지	1964. 1. 8	문교부령 제131호 “중학교 교육과정 부분개정”
1963. 5.30	우리나라 최초로 교과서 전문지 「교과서회지」(제1집) 발행. 비매품 (사)한국 검인정 교과서 발행인 협회 ※제1집이 중간호가 되다.	1964. 3. 1	문교부, 교육대학 협의회 (교육과정)에서 교육과정 시안(1차 개정) 작성토록 행정조치하다.
1963. 5	문교부 국사 내용(단군·기자·위만조선·삼국통일 연대·거란 등) 통일하여 교과서에 사용케 하다.	1964. 3. 5	문교부, 「국어」 교과서를 검정할 것이라 표명
1963. 6.26	법률 제136호 “사립학교법” 제정·공포	1964. 6	교과서 편찬 심의회 건의에 따라 국민학교 4학년 이상 「국어」에 한자 600자를 혼용하기로 하였다. ※중학교:1,000자, 고교:1,300자
1963. 7. 5	문교부, “학교문법 통일” 국·검정교과서에 사용	1964. 6.10	문교부, 「편수자료」 제5집 발행
1963. 7.25	문교부, 「편수자료」 제4집(사회과 인명·지명) 발행	1964. 6.24	대통령령 제1853호 “교육 교재 인정 규정” 공포 ※교육교재:교육영화, 슬라이드, 음반, 패도, 표본, 지도, 지구의 등
1963. 7.29	제2차 교육과정(63.2.15)에 대한 운영 대비, 전국 초·중고 교사 대표 강습하다 (~7.31까지).	1964. 7. 3	대한교련 국민학교 방학책 재발행하다 (5.16이후 국정으로 발행되었다).
1963. 9.19	법률 제1403호 “산업교육 진흥법” 제정	1964.10.10	문교부, 중·고 검정 교과서 개편으로 교육과정 적용을 1966년으로 연기함(중학교 검정교과서 발행을 둘러싼 개편 시기에 대해 문교부와 교과서 업자측과 견해차가 있었다)
1963.12.16	각령 제1737호 문교부 학무국 대신 편수국(편수과, 발행과) 복원되다.		
1963.12.17	제3공화국 탄생		
1963.12	· 문교부, 해외 교포용 「국어」교과서(상·중·하) 발행 · 해외 교포 교육 강화책 「한국의 발전」 발행 · 1963년도 교과서 발행 실적	1965. 4.15	사단법인 중앙교육연구소 등록
	종 별	회사명	발행
	국민학교 (국정)	국정교과서	국민교:64종
			도덕:12종
			글씨본:3종
		고려서적	보건:3종
			중고반공:2종
			초등(여름방학):6종
			초등(겨울방학):6종
	중고 (국정)	동아서적	국어:5종
			대한교과서
		한국교과서	도덕:6종 실업:126종
	중등 (검인정)	한국교과서	중학교:507종 고등교:426종
	자료: 「교과서회지」 제1집(1963.5.30)		
		1965. 6.22	한일협정 조인
		1965.10. 6	문교부, 교과서에 오자 있다 해서 세 편수관 해임
		1965.10.20	문교부, 고 강재구 소령의 이야기를 국민학교 6학년 「바른생활」 교과서에 넣기로 하다.
		1965.12. 2	중등교과서(주) 설립 ※초대 대표 이사 이대의, 과목별 1:1조건, 1969.6 한국검인정 교과서(주)로 개칭됨.
		1966. 5. 5	문교부, 국정교과서에 준거하는 참고서(66년 1학기분)를 허가하였다.
		1966. 6.14	문교부, 1967학년도부터 교과서를 국민교 1·2·3학년까지 무상 공급하기로 하고, 4·5·6학년은 국빈자 10%에 한해 무상 공급하기로 결정·발표하다.

연 월 일	교과서 관계 사항	연 월 일	교과서 관계 사항
1966. 7.15	문교부령 제173호 “인문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부활되다. 이것은 1968.3. 1 시행	1968. 7.15	문교부(권오병), 1969학년도부터 “중학 무시험 진학제도 실시한다”고 발표
1966. 8.31	문교부,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실시 공고	1968.10.14	“대학 입학 예비고사 제도” 공포(69학년도 시행)
1966. 9. 5	문교부, 교과서의 원활한 생산·공급 위해 국정 교과서(주) 설립키로 결정(예산 2억원 계정)	1968.10.26	박정희 대통령, 교과서에서 “한자 삭제” 지시
1966.10. 4	문교부령 제175호 “실업계고교 교육과정령” 제정(농·공·수·상·가정 통합)	1968.11.30	대통령령 제3651호 “장기 종합 교육계획 심의회 규정” 제정(계획안 1972~1986 작성) 및 1969.2월부터 동심회의가 발족되면서 장기종합교육 계획안(1972~1986)의 작성이 추진되었다.
1967. 1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71)	1968.12. 5	“국민교육헌장” 선포 ※「국민교육헌장」 독본 250만부 발간(각급학교 및 기관에 배포), 「헌장그림책」 130만부 발간
1967. 3.15	대한인쇄공업협동조합연합회, 월남 교과서 인쇄 수출(68,000 달러) 발표	1968.12.24	국무총리 훈령 제68호 한자 일부 혼용 금지
1967. 4.15	문교부, 각급 학교별로 제정한 교육과정을 문교부령 제181호 “교육과정령”으로 통합하여 1968.8.1부터 시행하기로 발표하다.	1968.12.28	문교부, 한글 전용 반대했다고 충남대학교 유정기 교수 파면하다.
1967. 4.17	대통령령 제3018호 “교과용도서지작검·인정령” 제정(교과용도서검인정규정과 국정 교과용도서 편찬심의회 규정을 통합)	1969. 1	문교부, 국민전과·수련장의 허가제 발행이 여러 가지 폐단이 있다고 판단, 중지하다.
1967. 6.10	문교부, 고등학교 검정 출원 집계, 총 986책	1969. 1	국정 교과서(초·중·고 「국어」, 「사회과」 등) 대폭 수정 작업 실시하다.(국민교육헌장, 가정의례준칙 반영 등)
1967. 8.31	한국실업교과서(주) 해산	1969. 1.30	“한글전용” 반대 성명(이희승 등 140명)
1967. 9. 4	문교부, 고등교과서 검정 합격 발표[13 교과 45종(418종 498책)]	1969. 2.15	문교부, 1970학년용 중·고교과서에서 한자 삭제 지시(국·검정 포함 330책 해당)
1967.12.29	한국고등교과서(주) 발족(대표 주인용)	1969. 2.19	· 문교부령 제207호 “유치원 교육과정” 제정(건강·사회·자연·언어) · 문교부령 제207호 “인문계 고교 및 실업고등 전문 학교 교육과정” 개정(교련과 신설) · 문교부령 제181호 “교육대학 교육과정” 제2차 개정(94학점)
1967~1970	문교부, 과학·수학의 새 교육과정 도입차 연구사업 실시(UNICEF)	1969. 4	대학 입시 제도: 혼합형(예비고사와 대학별 본고사 병행, ~1980)
1968. 1.12	문교부, 인정도서(지리 역사부도) 발표, 역사:9종, 지리:13종	1969. 4.11	문공부, KBS TV교육방송 실시 발표
1968. 1.25	문교부령 제187호 “실업 고등전문학교 교육과정” 제정 (중견 산업 기술인 육성)	1969. 5	중등교과서(주)가 한국검인정교과서(주)로 개칭
1968. 2.	문교부 허가(국민학교 수련장 32종, 전과 37종, 국정 교과서 이용하는 부교재는 허가제임)		
1968. 6.14	문교부 무허가 전과·수련장에 대해 저작권 위반 및 임의출판으로 수사 의뢰		
1968. 7.25	새로 발족한 문화공보부 개칭식. 교과서를 제외한 출판행정이 문교부에서 문공부로 이관.		

연 월 일	교과서 관계 사항	연 월 일	교과서 관계 사항				
1969. 5. 7	문교부, 1970학년도부터 공급될 초·중·고 교과서 8월말까지 한글판(한자삭제)으로 제작 지시		인문계		5	46	51
			실업계	보 통	17	7	24
농 업	25	8		33			
공 업	113	7		120			
상 업	12	11		23			
수 산	21	-		21			
가 사	9	2		11			
1969. 7.19	문교부, '교육과 정령'(부령 제231호) 제정·공포		합 계		*220	110	*330
			*국민학교 88책 불포함				
1969. 9. 4	문교부령 제251호 각급 학교(교육대학 포함) 교육과정 부분 개정 1. 초·중학교 한자(한문) 삭제 2. 인문계 고교에 한해 「한문」을 「국어Ⅱ」에 포함시켜 교수케 하다. 3. 「기초공학」 「기술」 과목 신설 4. 「반공도덕생활」 시간 증배 5. 미술과 표준색 12색에서 10색 채택	1970. 6.30	문교부, 「편수자료」 제6집 발간(지학과 자료)				
		1970. 7.10	문교부 고속도로 개통에 따라 중·고교 「지리부도」 및 관련 교과서에 경제적·사회적 의의를 반영키로 하다.				
1969.11.18	대입 예비고사 실시	1970. 8.3	대통령령 제5252호 “교과용 도서 저작 검인 정령” 개정 공포				
1969.11.25	대통령령 제4306호 “교육 교재 인정 규정” 공포	1970. 8.19	문교부, 1971 학년도 “대학 입학 예비고사”(6개과목) 실시 발표				
1969.12. 4	· 대통령령 제4388호 “교육과정 심의회 규정” 공포 · 대통령령 제4389호 “국어 심의회 규정” 공포	1970.11	“새마을운동” 전개 (“새마을 교육” 착수) ⇒교육과정 운영(실시)				
1969.12.11	문교부령 제254호 “국민학교 및 고등 국민 학교 교육과정” 제정·공포	1970.12	· 문교부, 검인정 교과서 공급 인수 227개 집계 · 문교부, “해외 (미국·홍콩·태국·스웨덴·영국·브라질)토요학교” 개설하여 교과서 배포·교육실시 ※해외 교포용 교재:국민학교용 6책				
1969.12	문교부, 1969.9 인문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에스파냐 과목 신설)으로 인한 검정 실시하다(6책 접수, 3책 합격) ※1970. 3월부터 사용 조치하다.						
1970. 2.23	대한교육문화협회에서 「국어」 교과목의 “독서교육 강화책” 건의	1971. 1.28	문교부, 제3차 교육과정 개편 작업(2년간의 작업)으로 시안 발표(국민학교, 실업고) 하다.				
1970. 3. 1	문교부령 제 호 “교육대학 교육과정 부분 개정(일반교양과정 34학점, 교직과정 60학점)	1971. 2.19	문교부령 제274호 인문계 고등학교 「방공 및 국민윤리」 삭제하고, 「국민윤리」 독립 교과 설정				
1970. 3	문교부, 검정 교과서에 “국민교육헌장” 전문(393자) 게재하기로 정하다.	1971. 2.19	문교부령 제274호 교육대학 교육과정 개정(일반교양과정 34학점에서 35학점으로 하고 “민주주의론”을 “국민윤리”로 대체하고, 교직과정 60학점을 59학점으로, “반공 도덕 생활 교육”을 “도덕과 교육”으로 하였다.				
1970. 3. 1	국정교과서 및 검인정 교과서 발행 실태 (단위 :책)						
	학교별	국정교과서	검인정교과서	합계			
	국민교	88	-	88			
	중학교	18	29	47			

연 월 일	교과서 관계 사항	연 월 일	교과서 관계 사항
1971. 2. 23	대학 「교련」 필수로 한 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하다(교련 반대 테모 유발).	1972. 4. 1	문교부, 「우리나라 주요지명일람표 및 대한민국 지도」 발행
1971. 3. 2	교육법시행령(제5541호)을 개정하여 교육대학 과목 중 “철학”을 “국민윤리”로 대체하고 교육실습 기간을 4주로 하여 1971학년도부터 시행하도록 하다.	1972. 5.11	문교부, 국사 교육 강화책으로 국사 교육 강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중·고 「국사」 교과를 독립교과로 신설기로 하다(~7.5)
1971. 3. 9	한국교육학회 주최, “국민학교 교육과정(시안)” 심포지엄 열다	1972. 5. 8	문교부령 제300호 “중학교 교육과정 중 개정령”(「한문」 교과 신설하다. 중학교 모두 10개 교과)
1971. 3.20	문교부, 국정교과서 개편에 따라 교과서 집필자 217명 임명하고, 교과서 개편 작업 착수하다	1972. 6. 7	문교부, 중·고등 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시안) 1781자를 선정·발표하다.
1971. 7.15	문교부, “교육정책 심의회 규정” 공포	1972. 7. 4	“남북 공동 성명” 발표
1971. 7.24	세계저작권협약(UCC), 파리에서 개정	1972. 7. 5	· 박정희 대통령 일본어를 제2외국어로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제에 포함되게 시달 · 문교부, 1973학년도부터 「국사」를 대학에서도 교양 과목으로 신설하고, 또 중·고교에서는 「국사」를 독립교과로 신설한다고 발표
1971. 7.27	· 문교부령 제285호(별책) “실업계 고등학교 실업과 교과용 도서 검정 기준” 공포 · “교과용 도서 저작·검인정령 시행 세칙” 제1차 개정(부령 제285호)	1972. 8.15	“목표지향 교수효율화 계획 학습지도안” 2학기용 발행 (중앙교육연구소)
1971. 8.12	문교부,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앞으로의 통일에 대비하여 반공 교과서의 개편과 북한 동포에 대한 증오심 일변도의 교육 방침을 시정할 것을 밝히다	1972. 8.16	문교부, 중·고교 「한문」 교과서에 한해 병기 사용토록 조치하다(한문교육 강화책).
1971. 8.24	· 문교부령 제286호 “실업 중학교 교육과정(3년제)” 제정·공고 · 문교부령 제286호 “기술학교 및 고등 기술학교 교육과정” 제정·공고	1972. 8.	「한문」 교과서 20종 단일본으로 개편(저자인세, 출판사 배당1:1)
1971.12.21	문교부, 국민학교 교육과정 실험 학교 30개교 지정하고, 운영 보조금 지급기로 함 ※실험기간:1972~1973 ※실험학교에 실험용 교과서 배포	1972. 8.30	한국교육개발원 발족(원장 이영덕) ※원장, 연구 부원장, 운영 부원장 및 3국, 1센터, 1송신소, 17과(실)로 운영하다. ※설립과 운영은 한국교육개발원 육성법과 동법 시행령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1972. 1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76)	1972. 9	문교부, 1973학년도 대학 입학 예비고사의 시험 과목에 「국사」를 추가한다고 발표
1972. 2.30	문교부, 기발행한 「편수자료」 4·5·6집을 합본해서 단일본으로 발행	1972.10.17	10월 유신
1972. 3. 1	· “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 제정·공포 · “목표 지향 교수 효율화 계획 학습지도안” 1학기용 발행(중앙교육연구소)	1972.11. 1	문교부, 국민 학교에 “자유 학습의 날: 제정 (매주 1회 실시)
1972. 3.24	대구 개최, 전국 교육자 대회에서 새마을 교육을 실시할 것을 결의하다(교육과정 향토화)	1972.11.26	대한검정실업교과서(주) 설립(개청), 초대 대표이사 이대의
		1972.12	문교부, 국민학교 교과서개발(실험용 교과서) 연구

VI. 제3차 교육 과정기(1973~1981)의
교과용 도서 편찬

연 월 일	교과서 관계 사항	연 월 일	교과서 관계 사항
		1973.10. 6	제4차 중등 전경(전세계 유류 파동)
1973. 2. 1	문교부, 실업계 고교 교과용도서(80종)검정 번호부여(1974.1 발행)	1973.10.31	문교부 편찬 발행, 『수출 산업 교사용 지도서』 4종류(농산물, 공산물, 수산물, 수공업물)
1973. 2.14	· 문교부령 제310호 “국민 학교 교육과정” 개정 · 기본개념(문형), 발견과 탐구(집합·관찰), 자율학습, “반공 도덕 생활”→“도덕” · 문교부령 제310호 “실업계 고교 교육과정” 개정 · “일본어” 설정 및 “전자 계산” 교육과정 제정(전문 교과 80%이상으로 편성)	1973.12.14	문교부, 추첨제 고교 평준화(서울·부산) 첫 실시
1973. 3. 1	문교부, 국민학교(1·2·3)교과서 현장 검증·실험 및 수정본을 공급(첫시도)	1973.12	· KEDI, 교수·학습을 위한 국민학교 소규모 시범용 수업 지침서 및 배움책 발간(~1980) · KEDI, 교수·학습 자료 「자연, 실과, 기술, 가정, 과학 등」 수업 지침서, 기능 실습 교재 발간(~1988)
1973. 4.20	· 문교부(1차), 중고교 검인정 교과서를 대폭 정비하여 74학년도부터 사용한다고 발표 · 문교부(2차;8.3) 「국사」 교과서를 국정화 및 「영어」 등을 단일화 한다고 발표 · 「영어」 (중1·2·3)→3종 단일화, 「사회」 (중1·2·3)→3종 단일화, 「영어」 (고교6종)→단일화	1974. 1. 4	대통령령 제7008호: 방송통신고교 설치 기준령
1973. 5	한국중등교과서인쇄 주식회사 설립(개정) · 국정인 「국사」 교과서의 번각 발행을 받으려면 시설이 필요하므로 설립하다.	1974. 1.31	· 문교부령 제334호 “특수학교(정신박약 학교 초등부) 교육과정” 제정 · 학년:초·중·고, 영역:생활·교과·특활 · 문교부령 제334호 “교육대학 교육과정” 개정 · 학점 기준: 교양(9교과)과 교직(14교과)비율1:2
1973. 6. 5	방통고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준비 협의회 개최	1974. 2.10	문교부, 공업중학교 「제도」 교과서 발행
1973. 6.28	문교부, 고등학교 “무시험진학” 발표	1974. 2.20	문교부 발행, 우리나라 최초로 방송 고교 교과서 「국어」 외 19종 발간 120종(1, 2, 3년)
1973. 7	문교부, 수산 전문학교 전국 통일 교재 편찬지도 및 보조금 지급(중기 계획 64종 발간)	1974. 2.22	문교부, 새 교과서는 투철한 주체사관과 민족사관 확립 위주로 개편 방향지시하다.
1973. 8.31	문교부령 제325호 “중학교 교육 과정” 개정 · 학문, 중심, 이론, 조직:교과 활동, 실업 가정과:기술(남), 가정(여)	1974. 3. 1	문교부, '73년에 이어 두 번째로 국민학교(4, 5, 6년)교과서 현장 검증 실험 및 수정본 공급
1973. 9. 3	방송통신대학교 첫 교육 과정(안) 제정	1974. 6.24	문교부, 중학교 「수학」, 「과학」, 「부도」, 「체육」 교과서를 편찬 보급
1973. 9.22	실업고등전문학교 개편, 현행 5년제에서 2년제로 개편	1974. 9. 1	문교부, 해외국민용(일본어판) 「국사」교과서를 편찬 보급
		1974.11.20	문교부, 「대한민국 주요 지명일람표」 발행

연 월 일		교과서 관계 사항				연 월 일	교과서 관계 사항
1974.12.31		문교부령 제350호 “인문계고교 교육과정” 개정 · “산업 일반” · “기초 공학” 교과목 없애고 “기술”과 “일본어” 교과 신설하다. · 자유 선택 과목(0~6단위):신설과목 · 인문 · 자연 · 직업 과정으로 구분				1976. 2.26	문교부 훈령 제286호 “국민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생활 기록부 취급 요령”
						1976. 3. 3	학습참고서자율협회 발족
						1976. 4.17	사단법인 학습자료협회 발족
		단일화 전후의 검정 교과서 현황				1976. 5. 5	문교부, 참고서사용 규제, 학교장 추천시 허용 방침
						1976. 7.10	경북교위, 인구 교육 실시(국민학교)한다고 발표
학 교		교과서 명	단일화전	단일화후	비단일본	1976. 8.24	문교부, 중학 교과서 전면 국정화 검토
중학교		한문,사회,영어,과학,수학,체육,부도(7)	98종 215책	7종 16책	(6종) 184종	1976.10.16	문교부, 중 · 고교 「국사」 교과서에 한자 병기 발표
고	인문계	한문,정치,경제,영어 I · II,영작,일본어(6)	78종 135책	6종 10책	(10종) 376종	1976.12. 6	문교부 편수국, “교과서 상세화 및 구조 쇄신 연구” 발표
	실업계	한문(선택1)		1종 1책	285종	1976.12. 8	전국 경제인연합회 주최 “산업 사회와 교육 개혁의 과제” 발표회 가지다.
합 계		14교과목	176종 350책	14종 27책	845종	1977. 2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 1972년에서 1974년까지의 단일화 · 검정화 조치 · 중학교 단일본 교과서(7종 16책)의 저자는 중학교 0 0 0 교과서 편찬위원회이고, 발행사는 한국중등 교과서(주)이다. · 고등학교 단일본 교과서(7종11책)의 저자는 고등학교 0 0 0 교과서 편찬위원회 이고, 발행사는 고등 교과서 주식회사이다. · 이 당시의 교과서 공급인 수는 243명이다.						1977. 2.28	· 문교부령 제404호 “중학교 및 인문계 고교 교육과정” 개정 · 산업체에 중학교 설치 운영의 길을 열다. · 전문 교과목의 필수와 선택의 비율은 3:7 이다. · 문교부령 제404호 “실업계 전문학교 교육 과정” 개정 · 수업연한:2~3년제, “국사”→교양 필수됨 · 문교부령 제404호 “특수 학교(맹) 교육 과정” 개정 · 신설:생활훈련 영역, 시간 배당 기준: 연간 · 주간으로 고정 · 대통령령 제8462호 “산업체 근로 청소년의 교육을 위한 특별 학급의 설치 기준령” 제정
						1975. 3	
1975. 9		문교부(외무부, 문공부) 및 한국정신문화연구원, KEDI에서 외국 교과서의 “그릇된 한국관시정 사업” 전개				1977. 3.15	검인정 교과서 “너무 비싸다”는 여론제기
1975.12.11		문교부, 학습 참고서 정비 방안 확정				1977. 3.18	문교부 검인정 교과서 사건
1976. 2.23		· 문교부령 제379호 “실업계 고교 교육과정” 개정 · “기술(남)”, “가정(여)”, “한문” 교과목 신설하다. · 3년제로서 일반 교양 필수 교과목과 “체육” 교과목의 비율은 학년 공히 6:4 이다				1977. 3.24	국세청, 검인정 교과서 사건 업자 117주주(4개 법인체)에게 소득세 · 법인세 · 영업세등 각종 탈루액 127억원을 추징한다고 발표

연 월 일	교과서 관계 사항							연 월 일	교과서 관계 사항
1977. 4. 5	문교부, 중·고 교과서 모두 국정으로, 검인정 13종 대상(예체능계 제외)							1977. 8. 6	문교부, “교과서 중간 공급인 폐지” 발표
1977. 4.17	문교부, 교과서 78학년도부터 검정교과서는 국정화한다고 발표 및 교과서 업자소유 지형을 모두 인수하기로 하다.							1977. 8.10	문교부, 검인정 사건 후, 1979학년도에 사용할 1종교과서 238책을 27개 연구 기관에 편찬 위촉
1977. 4.18	한국검인정회사의 생산·공급 업무가 문교부 지시로 국정교과서 주식회사로 인계되다.							1977. 8.22	대통령령 제8660호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정(“교과용 도서 저작·검인정령” 폐지)
1977. 4	·출협에서 검인정 교과서 사건 선처(관용)토록 관계 요로에 건의서 제출하다 ·단일본 발행 저자 일동, 국제펜클럽 한국본부, 대한인쇄문화협회 등에서 건의							1977. 8	문교부, KEDI를 초·중등 학교 1종 교과용 도서 개발 기관으로 지정하다(문교부는 지원·확인·감독만 한다).
1977. 4.30	출판문화회관에서 “검인정 교과서 사건과 출판계”좌담회 개최하다. ·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과서 개선책 강구 등							1977. 9. 1	한국검인정교과서 발행인협회 문교부에 건의하다(77.7.29 검정 교과서 공고건). ·편찬기간이 짧다. 지도서 동시 제출은 불가능하다. 합격 중수 철폐·공급인 부활 등
1977. 5.31	문교부, 국민 학교 교과서 2학기부터 전국에 무상지급(서울, 부산 제외)							1977. 9.13	문교부에서 위촉받은 KEDI는 한국의 교과서 사상 처음으로 중등학교 교과서와 교사용지도서를 동시에 편찬하기로 정하다
1977. 7. 9	문교부, “교과서 제도 개선책”발표 ·제1종(연구 개발형)과 제2종(자유경쟁형)으로 분류 1979학년도부터 사용한다. ·공급체계(국정교과서 회사가 업무대행) ·합격중수는 5종류 이내							1977. 9.21	한국출판문화협회 제7차 이사회에서 “교과서 1종화(국정화) 정책 반대 결의문”채택하여 요로에 전달하다.
1977. 7.29	·중학교, 실고 교과서 모두 국정화한다. ·문교부 1979학년도부터 1종으로 개편 실업계 검인정 교과서 현황(1977학년도)							1977.11.17	문교부, “교육 과정 및 교과서 연구 체제 강화 방안” 발표
	계열	농	공	상	수	가사	합계	1977.12.31	법률 제3053호 “특수 교육 진흥법” 제정
	중수	23	26	22	7	5	83	1977.12	문교부, 「편수자료」 (제7집) 발간 ·20,000여개로 된 “외래어 표기 용례”
	*이 83종이 1979학년도부터 대한교과서에서 1종으로 번각 발행 *문교부, 고등학교 검정교과서 검정 공고 *대상:「문법」의 22과목(지도서 동시 제출) 출원일:1978.3말, 합격중수:5종류이내							1978. 2. 1	중학교 교과서 분책 발간(국정) ·「민주생활」, 「승공통일의 길」 (1·2·3년용) 분책
1977. 8. 1	검인정교과서 사건 건, 검인정회사에서 소송 절차로 감사원에 심사 청구하다							1978. 3.14	대통령령 제8889호 편수국 폐지 ·장학실에 통합→담당관제(교육, 인문, 사회, 과학, 교과서) 신설
1977. 8. 4	·문교부, 1978년도에 교과서값 10% 인하 발표 ·문교부, 1종 교과서 편찬 기획 제시 ·교과서 발행 새 국면:기본지침·체제·편찬·업무추진 등 구체안 제시							1978. 3.23	검인정 사건 “부과금 취소의 소” 한국검정실업회사 취하하다.
								1978. 5.20	문교부(교과서1022~294), 1979학년도부터 적용되는 중등학교 “교과용도서 표지 방법” 제정하다. ·분류번호, 앞표지, 속표지상, 판권상 등

연 월 일	교과서 관계 사항	연 월 일	교과서 관계 사항
1978. 5.26	문교부, 교과서 검정 합격 (1차) 공고 · 23과목 94책(신청건수 23과목 332책), 교과서와 지도서 동시 종합 평점, 1967 년 이후 12년만에 검정 실시 등	1979. 4. 7	· 문교부령(교육과정령)에 의하여 교육과 정이 제정 및 개정되었으나 '79.3.1 이 후는 문교부 고시(告示)로 바뀌다. · 문교부령 제442호 “교육과정령” 폐지됨 · 각급학교 교육과정을 다시 고시하다 · 국민학교 · 중·고등학교 · 전문학교 · 교육 대학 · 기술학교 등 16개 각급 학교 교 육 과정
1978. 6. 7	문교부, 교과서 제도 개혁 방안 확정 · 교육 과정 · 교과서의 연구개발 업무와 기능을 구체화하다.		한국2종교과서 발행조합, 전국 각 지역에 교과서 직매소 설치해 줄 것을 문교부에 건의
1978. 6.14	문교부 교과서(1020~303) 2종 교과서 도 서 편찬 방법 지시(2차 심사본 편찬 내역)		KEDI, 여름 · 겨울 방학책 「탐구생활」 (1~6학년용) 발행
1978. 7. 6	문교부, 대통령에 보고문서(교과서 제도 개혁 방안:연구 개발형 교과용 도서의 개 발 절차 등)		
1978. 7.31	문교부 교과서(1020~351), 1979학년도 사용 교과용 도서(1·2종)에 국민 교육 현장 수록 조치하다.	중 · 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신 · 개편 실태(1979.9)	
1978. 8	문교부, 1979학년도 사용할 2종 교과용 도서(검정 합격본) 채택(선정 · 주문)을 위한 시 · 군 단위로 전시회 개최	학 교	교과서 교과용지도서 총계
1978. 9. 1	한국2종교과서 발행조합 창립(39개 출 판사)	일반교과 실업계 계	38 2 2 38 41 6 117 32 48 22 7 5 13 15 272 318 605 56 88 1 145 750
1978. 9. 6	문교부(국어 심의회 표기분과위원회), 외 래어 장음표기를 하지 않기로 정하다.	인문계 실고 (보통) 농업 공업 상업 수, 해운 가사 계	4 11 37 173 10 39 15 289 533 20 88 1 108 641
1978.10. 5	“자연보호” 현장 선포	합 계	20 88 1 108 641
1978.11. 7	검인정 사건, 부과금 취소의 소, 감사원 심사청구 기각됨(중 · 고등 교과서회사)		
1979. 1. 9	검인정 사건, “검인정 회사(4개)가 강박 에 의한 과세 처분의 취소의 소” 행정 소송 제기하다.		
1979. 1.10	문교부, 교육과정 연구개발 전문 기관으 로 KEDI 지정		
1979. 3.11	유치원 교육과정 개정(문교부령 제424호)	1979.12.12	문교부, 각급학교 교과서에 ‘유신’ 내용 삭제 지시
1979. 3. 1	· 전문대학으로 개편 후, 산업 현장과 직 결되는 교육 과정 운영 추진(모형 개 발~1994) · 중 · 고등학교 1·2종 교과서 편찬되었을 때, 1종 교과서 번각 발행한 회사는 6군 데(대한교과서, 고려서적, 군사서적, 동아 교과서, 동아서적, 삼화서적)	1979.12.1	1979학년도부터 고본재활용 폐지 및 교과 서 전면 무상(100%) 배부
		1980. 1. 1	KEDI, 문교부 위탁 교과용 도서 「우리들 은 1학년」 외 143책 개발 착수(~1987)

연 월 일	교과서 관계 사항	연 월 일	교과서 관계 사항
1980. 2.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교부, 「우리들은 1학년」과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 통합 교과서 및 지도서 실험본 발간 · 문교부, 「특별활동」 1·2·3학년용 지도서(실험본)발행 · 한국행동과학연구소, 「유아용 그림책」 10책 발행(유아용 및 유치원 교사용 지도서 편찬) 	1981. 4. 3	문교부, 각급 학교에 “해양 교육” 강화 지시
		1981. 4.12	미국, 왕복 우주선 “콜럼비아호” 발사
		1981. 5.31	KEDI, 실업계 고교 “교육 과정 개선”(교과편제 등) 연구 발표
		1981. 8.28	제1차 교과서 개선을 위한 세미나(∼8.29) ※주최: 한국2종교과서 발행조합·대한문화출판협회 ※교과서 개선에 관한 전반적인 주제 하에 심도 있게 논의하다. ※교과서 연구 상설 기관 설치 등 건의하다.
1980. 2.27	대통령령 제9788호, 문교부 직제상 편수국 복원(편수과, 발행과, 교육과정담당관, 인문교육담당관, 사회교육담당관, 과학교육담당관)	1981.10.13	문교부, 국민학교 영어 교육 공식화하다. ※1982학년도부터 특활 시간에 실시
1980. 3.15	2종 교과서협회, 제1회 교과서 개선연구좌담회(∼5.10) · 교과서 내용 및 제도 개선책(서울 외 4지역)	1981.11. 2	대통령령 제10535호, 문교부 직제 개정. ※장학실과 편수국 통합하여 장학편수실로 하다(실장, 편수총괄관, 교육과정담당관, 인문과학편수관, 자연과학편수관, 사회과학편수관).
1980. 6.16	TV 과외 첫 방영	1981.11.24	문교부, 1982학년도 대입학력고사 첫 전국 실시
1980. 7.30	7.30 교육개혁 조치	1981.12. 8	문교부로부터 (사)한국2종교과서협회가 인가될 때까지 발행 조합을 위·수탁으로 개편하고 과목별(22개) 협동 생산 체제로 운영
1980. 9. 1	정부, KBS TV “가정교과”(국, 영, 수 방영)	1981.12.17	한국2종교과서 발행조합에서 초·중·고 교과서 모두를 검인정제로 해줄 것을 당국에 건의하다.
1980. 9.12	문교부, “제4차 교육 과정 개정에 관한 연구” 과제 KEDI에 위촉	1981.12.31	· 한국2종교과서 발행조합, 「교과서 개선 연구」 종합보고서 발간 · 법률 제3492호 “계량법” 제정
1980.12.19	문교부 대입 예비고사제를 학력고사로 개편		
1980.12.30	KEDI(홍웅선), 교육과정 및 교과용 도서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Ⅲ) 발행		
198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문계 고교 국정 교과서 및 지도서 「국민윤리」 외 35책 편찬(∼1987:대한 교과서) · 중학교 국정 교과서 및 지도서 「도덕」 외 62책 편찬(∼1987; 국정교과서(주)·대한교과서(주)) 		
1981. 3.11	교육대학 교육과정 개정위원회(교대교수 및 관계전문가 11명)에서 교육과정 준칙을 각 교육대학에 시달하고, 1981.3.1 교육법 및 동 시행령 등 관계법령을 개정, 4년제 교육대학으로서의 법적 기능을 제도화 하였으며, 동 교육과정 중 교육 기본과목과 교양 교육과목의 확대, 초등 교육의 전문화를 위한 심화과정의 운영 등 일부를 개정하여 1983학년도부터 적용하도록 함.		
1981. 3. 3	제5공화국 출범(수출 200억 달러 달성)		